

#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0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September, 7<sup>th</sup>(Mon) - 9<sup>th</sup>(Wed), 2020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Past, Present and the Future

**PROGRAM BOOK**

[www.kgfp.kr](http://www.kgfp.kr)

#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0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September, 7<sup>th</sup>(Mon) - 9<sup>th</sup>(Wed), 2020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Past, Present and the Future

**PROGRAM BOOK**

[www.kgfp.kr](http://www.kgfp.kr)

# Contents

모시는 글 INVITATION	006
프로그램 PROGRAM	008

## DAY1

### Opening Ceremony

개회식, 축하, 한반도평화 친선대사 위촉식	029
Opening Ceremony, Congratulatory Remarks, Appointment Ceremony for Goodwill Ambassador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Special Message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037
The Role of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Session 1

1-1	갈등해결의 방법론전 고찰: 종전선언, 평화협정	043
	Methodological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End-of-war Declaration and Peace Treaty	
1-2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장애물과 극복방안	063
	Institution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bstacles and Overcoming Measures	

### Session 2

2-1	한반도 평화 비전과 갈등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093
	Paradigm Shift for Peace and Dispute Res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	
2-2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시민사회의 대응	113
	Actions of Global Civil Society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 Special Session

제재완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연계	137
Linking Sanctions Relief to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Session 3

3-1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방안	157
	Cooperation of the Civic Sect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2	정전체제로부터 새로운 평화체제로	179
	From Armistice to a Sustaining Peace System	

## DAY2

### Keynote Speech

<b>WFP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및 국제협력</b>	203
WFP'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to Address the Needs of the Vulnerabl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 Session 4

<b>4-1 지속가능발전목표(SDG)관점에서 본 보건복지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b>	211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from SDGs Perspective	
<b>4-2 남북 재난협력 방향과 과제</b>	243
Direction and Tasks of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b>4-3 지속가능 대북정책의 조건</b>	261
Conditions for Sustainable Policy toward North Korea	

### Session 5

<b>5-1 대북제재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b>	303
UN Sanctions and the Humanitarian Crisis in the DPRK	
<b>5-2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추진방안 모색</b>	331
A Discuss of Humanitarian Support and Regional Development with North Korea through Social Solidarity Economy	
<b>5-3 한반도의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를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b>	373
Inclusive Partnerships for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on the Korean Peninsula	
<b>5-4 인권을 통한 평화의 기반 다지기</b>	407
Laying the Foundation for Peace through Human Rights	

### Session 6

<b>6-1 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 성과 평가와 전망</b>	427
Kim Jong Un's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and Prospects for 2021	
<b>6-2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개혁 동향</b>	449
North Korean Education Reform Trends in the Kim Jong-un Era	
<b>6-3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고용·여성</b>	477
North Korea's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Kim Jong Un Era: Population·Employment·Women	
<b>6-4 최근 북한변화에 따른 경제, 개발 협력 방안</b>	523
Recent Changes in Econom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 Session 7

<b>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진단, 북한 미래 예측 자유토론</b>	555
North Korea's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Culture Diagnosis (Round Table: Free discussion)	

## DAY3

### Special Message

- 유네스코와 한반도 평화** 575  
UNESCO an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Special Lecture

-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다** 579  
Speak of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 Session 8

- 8-1 신안보(emerging security)와 한반도 평화** 585  
Emerging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8-2 한반도 해양수산 평화경제-동·서해안 벨트와 공동특구 활용방안** 623  
Peace Economy from the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East·West Coa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
- 8-3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 방안** 643  
Inter-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Realization of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 Session 9

- 9-1 한반도 농업의 미래와 북한 농업의 발전 경로 모색** 685  
Future of Korean Peninsula Agriculture and Development Path of  
North Korean Agriculture
- 9-2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과 대북 개발협력 과제 - SDG 3, 5번을 기반으로** 717  
Implementing SDGs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Based on SDG Three and Five
- 9-3 숲속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 749  
Direction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for United Forest in Korea
- 9-4 남북철도협력과 동북아 평화 정착** 791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and Peace Settlement in Northeast Asia

### Session 10

- 10-1 통일공공외교의 평가와 과제** 843  
Assessment and Tasks of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 10-2 변화하는 한반도 국제관계** 867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on Korean Peninsula
- 10-3 해외 북한연구의 현황과 과제** 893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North Korea Research in Overseas
- 10-4 북한관광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923  
How to Resume the Tour to North Korea?

# 모시는 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는 올해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담론을 모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반영하고자,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해 온 1.5트랙 다자 국제회의입니다.

올해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6.25 전쟁 발발 70년' 및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전·현직 정부 관계자, 국내외 평화 활동가들이 모여, 70년간 이어온 한반도 분단체제의 근원과 배경,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한 해법에 관한 지혜를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1일차에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 2일차에는 북한체제의 변화상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지막인 3일차에는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경제 비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 INVITATION



**In-young LEE**

Minister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The Unification Minist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host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KGFP) from September 7 to 9, 2020. KGFP is a 1.5-track multilateral international forum that has brought toge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2010 to pool ideas on and insights into peace and co-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This year marks the 70<sup>th</sup>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and the 20<sup>th</sup> anniversary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year's KGFP will invite world-renowned academics, former and incumbent government officials, and peace activists from home and abroad to discuss the roots and background of the last 70 years of division and how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theme of "Peace &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Past, Present & the Future."

On Day 1, participants will discuss a paradigm shif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On Day 2, they will assess in detail the transition in North Korea and discuss the rol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play in response to the current humanitarian crisis. On Day 3, they will deal with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vision for peace and its economy.

We cordially ask you to registe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e in KGFP 2020 to make this year's event even more significant. Your creative ideas and rich perspectives will contribute greatly to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co-prosperity of humanity.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 프로그램

## DAY 1 | 9월 7일 (월)

		개회식	
09:10~09:40	개회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소하일 이나야톨라 유네스코 미래연구국장	
	한반도평화 친선대사 위촉식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리사 클라크 국제평화국 회장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장	
		김동진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아일랜드 연구재단 마리 스클로도브스카-퀴리 펠로우	
윤성욱 충북대학교 교수			
메리 조이스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국장			
10:00~10:10	특별 메시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연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10:30~12:00	Session 1-1	갈등해결의 방법론적 고찰: 종전선언, 평화협정 통일부	
	좌장	문정인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 사무총장	
	패널	김한정 국회의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미국	
		옌쉐통 칭화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중국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대학교 크록 연구소 명예교수, 미국	
	Session 1-2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장애물과 극복방안 북한연구학회	
	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자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과 기회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자	상호 권한부여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김동진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아일랜드 연구재단 마리 스클로도브스카-퀴리 펠로우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 독일		
		김연호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미국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4:00~15:30	Session 2-1	한반도 평화 비전과 갈등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통일부	
	좌장	하영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패널	댄 스미스 SIPRI 소장, 스웨덴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ISDP 소장, 스웨덴	
		빌레 브루머 CMI 프로그램 팀장, 핀란드	
			알린 웨어 핵감축 국제의원 네트워크 글로벌 코디네이터, 체코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프로그램

## I DAY 1 | 9월 7일 (월)

14:00~15:30	Session 2-2	<b>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시민사회의 대응</b> 평화공공외교협의회
	좌장	이기호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장, 사회혁신대학원 교수
	발표자	<b>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과 평화협정 캠페인</b>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협력국장, 목사
	토론자	<b>분단체제와 재일교포 시민사회운동의 변화와 과제</b> 김경목 와세다대학교 교수, 일본
		김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담당
		임다빈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장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선임간사
댄 가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교육전문위원		
15:30~16:00	휴식	
16:00~17:00	특별세션	<b>제재완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연계</b>
	강연자	토마스 비어스테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교수, 스위스
	사회자	김지영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16:00~17:30	Session 3-1	<b>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방안</b> 통일부/피스모모
	좌장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패널	글린 포드 Track2Asia 대표, 영국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 DMZ 대표, 미국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Session 3-2	<b>정전체제로부터 새로운 평화체제로</b>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좌장	이연호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발표자	<b>정전에서 평화체제로 왜 못 가는가?</b>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b>역사를 통해 본 한중관계</b> 필영달 산동대학교 부교수, 중국		
토론자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프로그램

## I DAY 2 | 9월 8일 (화)

09:30~10:00	Keynote Speech	WFP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및 국제협력
	기조연설자	데이빗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10:10~12:10	Session 4-1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좌장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
	발표자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북한에 주는 사회경제적 의의: SDG 1(빈곤종식)을 중심으로 이지선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소 연구교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남북한 보건복지 분야 교류협력 과제 송철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토론자	노법래 세명대학교 교수
		모춘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Session 4-2	남북 재난협력 방향과 과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좌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남북 재난협력 방향과 과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토론자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멜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Session 4-3	지속가능 대북정책의 조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좌장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자	북한 경제와 한반도 평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북핵 문제 및 북한의 안보딜레마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대북 전략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교류의 문화적 조건 - 제 3의 장소에서 나타난 탈북민 동화(assimilation)와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지정학 신혜란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3:30~15:30	Session 5-1	대북제재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좌장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발표자	북한 인도주의 위기의 실태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유엔, 미국 대북제재 현황과 인도적 지원에 미친 영향 조이 윤 선양하나 공동 창립자
	토론자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소 부연구위원
	데이비드 울프 크로웰 앤 모링 로펌 변호사, 미국	

# 프로그램

## I DAY 2 | 9월 8일 (화)

13:30~15:30	Session 5-2	<b>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추진방안 모색</b>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좌장	방인성 하나누리 대표
	발표자	<b>북한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의 새로운 전략: 사회연대경제와 SDGs의 결합</b>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b>사회주의체제의 개혁과 협동조합: 러시아·벨라루시·동독·쿠바 사례와 북한</b>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경제대학원 원장
		<b>북한 협동조합 역사 및 현황, 그리고 가능성</b> 이찬우 테이코대학교 준교수, 일본
	토론자	최현아 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강도욱 맘보싸와싸와 대표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Session 5-3	<b>한반도의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를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b>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좌장	김성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
	발표자	<b>남북 민간외교: 사회문화 분야 민간교류를 중심으로</b> 아이한 카디르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b>개발, 평화 넥서스와 북한의 국제화</b> 문경연 전북대학교 부교수
	<b>남북 접경지역 협력과 DMZ의 평화적 이용</b> 송영훈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Session 5-4	<b>인권을 통한 평화의 기반 다지기</b>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좌장	마도카 사지 유엔인권사무소(서울) 인권관	
발표자	<b>한반도 인권과 평화 프로세스 관련 탈북민 인식 연구 결과</b> 이메시 포카렐 유엔인권사무소(서울) 부소장	
	<b>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인권</b> 도경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b>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하여</b> 오세혁 시민사회활동가	
15:30~16:00	휴식	
16:00~18:00	Session 6-1	<b>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 성과 평가와 전망</b>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좌장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발표자	<b>정면돌파전의 경제분야 평가와 전망</b>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b>정면돌파전의 외교군사적 평가와 전망</b>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자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프로그램

## | DAY 2 | 9월 8일 (화)

16:00~18:00	Session 6-2	<b>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개혁 동향</b> 한국교육개발원
	좌장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발표자	<b>지식경제시대 북한의 고등교육 개혁</b>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김정은시대 북한초중등교육 개혁 동향</b>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
	토론자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수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공동연구원, 독일
	Session 6-3	<b>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고용·여성</b>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좌장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발표자	<b>북한의 인구변천과 사회경제적 변화</b>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b>북한의 고용 구조: 변화추이와 시사점</b>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b>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과 가족</b> 이희영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자	잉그리트 미테 기센대학교 교수, 독일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수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Session 6-4	<b>최근 북한변화에 따른 경제, 개발 협력 방안</b> 북한연구학회
	좌장	마이클 세스 제임스 매디슨대학교 교수, 미국
	발표자	<b>북한과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b> 케빈 그레이 서섹스대학교 교수, 영국
		<b>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건 부문</b> 박 기 하버드대학교 교수, 미국
		<b>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의 지속불가능성의 역설: 책무성과 제재대상 취약국가의 맥락에서 본 북한 사례</b> 임소진 센트럴랴카셔대학교 교수, 영국
	토론자	루디거 프랭크 비엔나대학교 교수, 오스트리아
		오웬 밀러 소아스, 런던대학교 교수, 영국
		김동진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아일랜드 연구재단 마리 스클로도브스카-퀴리 펠로우
		후안 블릭-파리 EU 개발협력청 북한팀 담당
		니키 올스포드 센트럴랴카셔대학교 교수, 영국
18:30~20:00	Session 7	<b>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진단, 북한 미래 예측 자유토론</b> 북한연구학회
	좌장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패널	표도르 테르티스키 국민대학교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일본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시앤둥 중국정법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I DAY 3 | 9월 9일 (수)

09:30~10:00	특별메시지	유네스코와 한반도 평화
	연사	페르민 에두아르 마토코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10:10~11:00	특별강의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다
	강연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
10:10~12:10	Session 8-1	신안보(emerging security)와 한반도 평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좌장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자	신안보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안보와 한반도 평화: 기회와 도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미 삼각협력의 가능성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김태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아담 마운트 미국 과학자 연맹 선임연구위원, 안보 태세 프로젝트 국장
	Session 8-2	한반도 해양수산 평화경제: 동·서해안 벨트와 공동특구 활용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
	발표자	한반도 해양수산 평화경제: 동·서해안 벨트와 공동특구 활용방안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김영관 팬스타그룹 대표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캐나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장
	Session 8-3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 방안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좌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발표자	현재 북한의 농업상황과 미래 남북농업개발협력 방안 팀 자카너크 컨설턴트  한반도 평화경제와 남·북·중 3각 농업협력 방안 최 문 연변대학교 교수, 중국  북한의 농업개발구 개발협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자	백정민 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토마스 비에지보프스키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위원

# 프로그램

## | DAY 3 | 9월 9일 (수)

13:30~15:30	Session 9-1	<b>한반도 농업의 미래와 북한 농업의 발전 경로 모색</b>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좌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표자	<b>북한 농업의 발전경로와 정책적 과제</b>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b>베트남과 북한의 농업개혁과 시사점</b> 부이 랑 투안 베트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교학부총장	
	Session 9-2	<b>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과 대북 개발협력 과제 - SDG 3, 5번을 기반으로</b>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좌장	김성배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
		발표자	<b>젠더, 건강, 웰빙과 북한 개발</b> 권진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
	토론자	<b>지속가능 발전목표의 북한사회 적용 및 실현 가능성</b> 김지은 대성한방병원 부원장	
		<b>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북한 내 여성의 건강권</b> 이메시 포카렐 유엔인권사무소(서울) 부소장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패트리샤 게디 성균관대학교 교수	
	Session 9-3	<b>숲속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b> 국립산림과학원	
	좌장	손요환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자	<b>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연계한 북한 산림복원 협력방향</b> 김명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과장	
토론자	<b>민간단체 남북 산림협력 추진현황과 과제</b>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b>국제기구를 활용한 남북산림협력 활성화 방안</b> 강호상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권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명관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장		
Session 9-4	<b>남북철도협력과 동북아 평화 정착</b> 통일부		
좌장	김세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발표자	<b>남북철도, 평화를 열다</b>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토론자	<b>남북철도협력, 과연 퍼주기인가</b>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장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북방연구센터장	
15:30~15:40	특별강의	<b>미래를 보는 눈</b>	
	연사	소하일 이나야틀라 유네스코 미래연구국장	
15:30~16:00		휴식	

# 프로그램

## I DAY 3 | 9월 9일 (수)

16:00~18:00	Session 10-1	<b>통일공공외교의 평가와 과제</b> 통일연구원평화연구실
	좌장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발표자	<b>한반도 평화공공외교의 추진방향과 과제: 맞춤형 콘텐츠와 네트워크 구축</b>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b>통일외교의 평가 및 과제: 대미외교를 중심으로</b>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토론자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최은봉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Session 10-2	<b>변화하는 한반도 국제관계</b> 북한연구학회
	좌장	하네스 모슬러 뒤스브룩 에센대학교 교수, 독일
	발표자	<b>북한 내 역학관계 변화에 따른 안보 문제</b> 버지니 그레즐직 아스톤대학교 교수, 영국
		<b>북한의 신흥 핵보유국 정체성: 담론적 구성 및 수행적 행위</b> 에릭 발바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독일
	토론자	에드 그리피스 센트럴랑가셔대학교 교수, 영국 장희경 뒤스브룩 에센대학교 교수, 독일 론니 옛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사라 손 셰필드대학교 교수, 영국 마르코 밀라니 볼로냐대학교 교수, 이탈리아 니콜라스 레비 폴란드사회과학원 교수, 폴란드
	Session 10-3	<b>해외 북한연구의 현황과 과제</b> 북한연구학회
	좌장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제니 타운 스티븐 센터 연구원 존 닐슨-와이트 캠브리지대학교 교수, 영국
		<b>일본의 대북정책: 네 가지 동기와 세 가지 요인</b>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학교 교수, 일본
	토론자	정지용 푸단대학교 교수, 중국 아르툼 루킨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러시아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Session 10-4	<b>북한관광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b>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좌장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발표자	<b>북한의 관광정책과 인프라 현황</b> 심상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b>북한 개별관광 추진방향 및 과제</b>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민경석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 본부장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제임스 반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PROGRAM

## I DAY 1 | September, 7<sup>th</sup> (Mon)

		Opening Ceremony	
09:10~09:40	Opening Remarks	In-young LEE	Minister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Congratulatory Remarks	Byeong-seug PARK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Sye-kyun CHUNG	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Sohail INAYATULLAH	UNESCO Chair in Futures Studies
		Brad SHERMAN	The U.S. Congressman
	Appointment Ceremony for Goodwill Ambassador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isa PELLETTI CLARK	Co-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
		Francis Daehoon LEE	Research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Jujin CHUNG	Director, Center for Peace & Conflict Resolution
		Dong-jin KIM	IRC Marie Curie Fellow,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Sung-wook YOON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eri JOYCE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10:00~10:10	Special Message	<b>The Role of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b>	
	Speaker	António GUTERRE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10:30~12:00	Session 1-1	<b>Methodological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End-of-war Declaration and Peace Treaty</b>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Moderator	Chung-in MOON	Executive Director,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APLN)
	Panelists	Han-jung K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Jong Seok LEE	Senior Research Fellow, Sejong Insitute
		Frank JANNUZI	President and CEO, Mansfield Foundation, USA
		Xuetong YAN	Dean, Tsinghua University, China
		George LOPEZ	Professor Emeritus, Kroc Institute, University of Notre Dame, USA
	Session 1-2	<b>Institution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bstacles and Overcoming Measures</b>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Moderator	Kab Woo KOO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enters	<b>Obstacles to and Opportuniti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b>	
Mason RICHEY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scussants	<b>Reciprocal Empowerment and a Sustainabl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b>		
	Dong-jin KIM	IRC Marie Curie Fellow,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Eun-Jeung LEE	Director of the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Yonho KIM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of Practic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USA	
	Jihwan HWANG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14:00~15:30	Session 2-1	<b>Paradigm Shift for Peace and Dispute Res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b>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Moderator	Young-Sun HA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nelists	Dan SMITH	Director,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Sweden
		Niklas SWANSTRÖM	Director,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ISDP), Sweden
		Ville BRUMMER	Programme Director, Crisis Management Initiative(CMI) – Martti Ahtisaari Centre, Finland
		Alyn WARE	Global Coordinator,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PNND), Czech Republic
	Bo-hyuk SUH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 PROGRAM

## I DAY 1 | September, 7<sup>th</sup> (Mon)

14:00~15:30	Session 2-2	<b>Actions of Global Civil Society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b> Council for Peace and Public Diplomacy (CPPD)
	Moderator	Kiho YI Professor & Director,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at Hanshin University
	Presenters	<b>NCKK Campaign for a Korea Peace Treaty</b> Seung-min SHIN Director, Ecumenical Relations,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b>Divided Nations, Koreans in Japan and Social Movements</b> Kyungmook KIM Professor, Waseda University, Japan
	Discussants	Chanho KIM International Manager, Korea Democracy Foundation
		Dabin YIM Representative,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Mee Jee SHIN Senior Coordinator, PSPD
Dan GUDGEON Peace Education Project Manager, Korean Sharing Movement		
15:30~16:00	Break	
16:00~17:00	Special Session	<b>Linking Sanctions Relief to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b>
	Lecturer	Thomas J. BIERSTEKER Director of Policy Research,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Geneva, Switzerland
	Moderator	Jiyoung KIM Professor,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16:00~17:30	Session 3-1	<b>Cooperation of the Civic Sect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b>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Peace Education Facilitator
	Moderator	Francis Daehoon LEE Research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Panelists	James Glyn FORD Founder & Director, Track2Asia, UK
		Jakob HALLGREN Ambassador, Embassy of Sweden in Seoul
		Christine AHN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USA
		Youngmi CHO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Sung Kyung KIM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Young MOON Representative, PEACEMOMO
	Session 3-2	<b>From Armistice to a Sustaining Peace System</b>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Moderator	Yeonho LEE Head of Office of External Affairs and Development, Yonsei University
	Presenters	<b>Why Can't We Go From the Armistice Regime to the Peace Regime?</b> Tae Gyun PAR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b>Korea-China Relations Through History</b> Yingda BI Associate Professor, Shandong University, China
	Discussants	Jaewoo CHOO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Monica HAHN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 PROGRAM

## I DAY 2 | September, 8<sup>th</sup> (Tue)

09:30~10:00	Keynote Speech	<b>WFP'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to Address the Needs of the Vulnerabl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b>
	Keynote Speaker	David BEASLEY 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10:10~12:10	Session 4-1	<b>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from SDGs Perspective</b>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oderator	Hong Won CHUNG Director, Department of Future Strategies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resenters	<b>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North Korea: Focusing on the 'No Poverty' Goal(SDG 1)</b> Jisun YI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Kyung Hee University
		<b>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b> Cheol Jong SONG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iscussants	Beop-rae ROH Assistant Professor, Semyung University
		Chunheung MO Research Professor, Hanyang Peace Institute
		Kichae MIN Assistant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Eun Mee JE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Session 4-2	<b>Direction and Tasks of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b>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Moderator	Soo-Am KIM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Presenter	<b>Direction and Tasks on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b> Kyu-Chang LEE Director,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Discussants
	Nak-keun JEONG Direct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search Center(IKECR)	
	Bernhard SELIGER Resident Representativ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Ho Hong KIM Chief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Session 4-3	<b>Conditions for Sustainable Policy toward North Korea</b>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Moderator	Kyung Hoon LEE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Presenters	<b>North Korean Econom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b> Byung-Yeon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b>South Korea and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and North Korea's Security Dilemma</b> Chaesung CH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b>Cultural Conditions on Civil Society Exchange for inter-Korean Social Integration: North Korean Defectors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 Geopolitics in a Third Place</b> HaeRan SHI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s	Cheol Hee PAR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eongHun HA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PROGRAM

## I DAY 2 | September, 8<sup>th</sup> (Tue)

13:30~15:30	Session 5-1	<b>UN Sanctions and the Humanitarian Crisis in the DPRK</b>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Moderator	Youngsik KANG Chairman,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Presenters	<b>Current State of Humanitarian Crisis in the DPRK</b> Jusung LEE Secretary General,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KNCCCK)
		<b>UN, US Sanctions on the DPRK and Its Implication on the Humanitarian Assistance</b> Joy YOON Co-founder/Director of Educational Therapy, Ignis Community
	Discussants	Kyu Chang LEE Director,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Division,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Hyoung-Joon LIM Director, WFP Global Office in Korea, UN World Food Programme
		Min-gyu LEE 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David WOLFF Partner Attorney, Crowell & Moring LLP, USA
	Session 5-2	<b>A Discuss of Humanitarian Support and Regional Development with North Korea through Social Solidarity Economy</b> Hananuri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Moderator	Insung PANG President, HANANURI
	Presenters	<b>New Strategies for NK'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ombining SDGs with SSE</b> Sungchan CHO Research Director, Hananuri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b>Reform of Socialist Economy and Co-operatives: A case of Russia, Belarus, East Germany and Cuba</b> Changjin KIM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b>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of North Korea's Cooperatives, and Possibilities</b> Chanwoo LEE Associate Professor, Teikyo University, Japan
	Discussants	Hyun-Ah CHOI Senior Researcher,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Douk KANG Executive Director, MAMBOSAWASAWA
Hae Kyung CHOI Secretary General, OKEDONGMU CHILDREN IN KOREA		
Session 5-3	<b>Inclusive Partnerships for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on the Korean Peninsula</b>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Moderator	Sung Chull KIM Humanities Korea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Presenters	<b>Inter-Korean People-to-People Diplomacy: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cross the 38th Parallel</b> Kadir Jun AYHAN Visiting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Development-Peace Nexus and North Korea's Internationalization</b> Kyungyon MOON Associate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b>Inter-Korean border area cooperation and peaceful uses of DMZ</b> Young Hoon SONG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s	Gyubin CHOI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Jung-hyun CHO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w School	
	Taekyoon KI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GRAM

## I DAY 2 | September, 8<sup>th</sup> (Tue)

13:30~15:30	Session 5-4	<b>Laying the Foundation for Peace through Human Rights</b>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Moderator	Madoka SAJI Human Rights Office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Presenters	<b>Findings of the OHCHR Research on the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Escapees on Human Rights and Peace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b> Imesh POKHAREL Officer in Charg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b>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b> Kyung-ok DO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b>Towards Sustainable Peace Process</b> Se-hyek OH Civil Society Actor
15:30~16:00	Break	
16:00~18:00	Session 6-1	<b>Kim Jong Un's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and Prospects for 2021</b>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Moderator	Kwan-Sei LEE Direct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Presenters	<b>Kim Jong Un's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Achievements and Prospects in the Economic Sector</b> Eul-Chul LIM Associate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b>Kim Jong Un's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Achievements and Prospects on the Diplomatic and Military Fronts</b> Dong-Yub KIM Associate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Discussants	Jung-Chul LE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Young-Hoon LEE Research Fellow, SKRI
Session 6-2	<b>North Korean Education Reform Trends in the Kim Jong-un Era</b>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Moderator	Byung-Young PARK Director-Genera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resenters	<b>North Korea's Higher Education Reform in the Era of Knowledge Economy</b> Jeong-ah CHO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b>Trend of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Reform in North Korea in Kim Jong Un Era</b> Jisoo KIM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b>Discussions</b>	
Discussants	Gu-Sup KANG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i-Hye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ojye KANG Affiliated Fellow,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Session 6-3	<b>North Korea's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Kim Jong Un Era: Population·Employment·Women</b> North Korea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Moderator	Philo KIM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Presenters	<b>Demographic Transition and Socio-economic Changes of North Korea</b> Jea Hwan H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b>Employment Structure of North Korea: Trend and Its Implication</b> Ji Young CHOI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b>Kim Jong Un Era Women's Experiences and Restructuring of the Family</b> Hee Young YI Professor, Daegu University	
Discussants	Ingrid MIETHE Professor,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Germany	
	Kyoochul KIM Associate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Soojung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KIET)	

# PROGRAM

## I DAY 2 | September, 8<sup>th</sup> (Tue)

16:00~18:00	Session 6-4	<b>Recent Changes in Econom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b>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Moderator	Michael SETH Professor, James Madison University, USA
	Presenters	<b>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n North Korea and China</b> Kevin GRAY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Sussex, UK
		<b>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ealth Sector</b> Kee B. PARK Lecturer, Harvard Medical School, USA
		<b>The Paradox of Unsustainability in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The North Korean Case in the Context of Accountability and Sanctioned Fragile States</b> Sojin LIM Associate Professor, Co-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Discussants	Rüdiger FRANK Professor,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Owen MILLER Assistant Professor, SOAS, University of London, UK
		Dong-Jin KIM IRC Marie Curie Fellow,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Juan BLICK-PARIS Desk Officer DPRK, DG DEVCO, European Commission
Niki ALSFORD Professor,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18:30~20:00	Session 7	<b>North Korea's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Culture Diagnosis (Round Table: Free Discussion)</b>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Moderator	Sun Song PARK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Panelists	Fyodor TERTITSKIY Senior Researcher, Kookmin University
		Junya NISHINO Professor, Keio University, Japan
		Gyubin CHOI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Xiandong HAN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PROGRAM

## I DAY 3 | September, 9<sup>th</sup> (Wed)

09:30~10:00	Special Message	<b>UNESCO an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b>
	Speaker	Firmin Edouard MATOKO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Priority Africa and External Relations of UNESCO
10:10~11:00	Special Lecture	<b>Speak of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b>
	Lecturer	Thomas FREY Executive Director, DaVinci Institute
10:10~12:10	Session 8-1	<b>Emerging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b> Unification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Moderator	Kyung Hoon LEE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Presenters	<b>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mp; East Asia in the Age of Emerging Security</b> Han-Bum CHO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b>Emerging Security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b> Du Hyeogn CHA Principal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b>Potential Tripartite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S in COVID-19 Prevention</b> E.J.R. CHO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Discussants	Tae-Kyung KIM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dam MOUNT Senior Fellow, Director of the Defense Posture Project,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FAS), USA
	Session 8-2	<b>Peace Economy from the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East-West Coa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b> Korea Maritime Institute
	Moderator	Jong-Deog KIM Vice President of Research, Korea Maritime Institute
	Presenter	<b>Peace Economy in the Coastal Areas of the Korea Peninsula: East-We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b> In Joo YOON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Discussants	Young Kwan KIM General Representative, PanStar Group
		Kyung-Ae PARK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Sangjun LEE Senior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SungWoo LEE Director General, General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Session 8-3	<b>Inter-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Realization of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b>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Rural Research Institute	
Moderator	Bernhard SELIGER Resident Representativ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Presenters	<b>Opportunitie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DPRK</b> Tim ZACHERNUK Consultant	
	<b>Peace Econom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3-way Agricultural Cooperation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b> Wen CUI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China	
	<b>Development Cooperation and Economic Impact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Districts in DPRK</b> Kwan Ho KIM Ph.D/Senior Researche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Rural Research Institute	
Discussants	Jung Min BACK Director, Korea Peninsula Agro-Fishery Co-work(KOPA)	
	Hae Jung LEE Manager of Center for Unification and Economics, Hyundai Research Institute	
	Tomasz WIERZBOWSKI Research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PROGRAM

## I DAY 3 | September, 9<sup>th</sup> (Wed)

	<b>Session 9-1</b>	<b>Future of Korean Peninsula Agriculture and Development Path of North Korean Agriculture</b>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Moderator	Hong Sang KIM Presiden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resenters	<b>Development Path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Policy Implications</b> Yongho CHOI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b>Agricultural Reforms in Vietnam and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ome Implications</b> Tuan BUI Director General, Institute of Economics, Vietnam
	Discussants	Young-Hoon KIM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Moon-Soo YANG Professor &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Jangho CHOI Head of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young-Joon LIM Director, WFP Global Office in Korea, UN World Food Programme
	<b>Session 9-2</b>	<b>Implementing SDGs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Based on SDG Three and Five</b>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Moderator	Sung Bae KIM Director,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Presenters	<b>Gender, Health, Well-being, and Development in North Korea</b> Jinah KWON Lecture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b>Application of and Practical Possibil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DPRK</b> Ji Eun KIM Deputy Director, Daeseong Oriental Medicine Hospital
		<b>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Women's Right to Health in the DPRK</b> Imesh POKHAREL Officer in Charg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Discussants	Sin Gon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atricia GOEDD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b>Session 9-3</b>	<b>Direction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for United Forest in Korea</b>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Moderator	Yowhan S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Presenters	<b>Inter-Korean Cooperation Strategies for Forest Restoration</b> Myungkil KIM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b>The Role of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in Private Sector</b> Sang Young HONG Secretary General, Korean Sharing Movement
		<b>Revitalization Strategies for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b> Ho Sang KANG Collaboration Professor, Institutes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s	Yul KWON Deputy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Myeong-gwan KIM Director, Korea Forest Service
		Jang Min CHU Chief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13:30~15:30

# PROGRAM

## I DAY 3 | September, 9<sup>th</sup> (Wed)

13:30~15:30	Session 9-4	<b>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and Peace Settlement in Northeast Asia</b>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Moderator	Se Ho KIM Senior Advisor, BAE, KIM & LEE LLC.
	Presenters	<b>Inter-Korean Railway that Opens the Era of Peace</b> Hee-Seun NA Presiden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b>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Is This a Handout to North Korea?</b> Jae-Hoon LEE Senior Research Fellow,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Discussants	Jongwon SEO Research Fellow,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Yong-Seok PARK Director, Department of Economic and Financial Research,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CERIK)		
Jung Joon PARK Head of Northern Railroad Research Center,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5:30~15:40	Special Message	<b>The Vision for the Future</b>
	Speaker	Sohail INAYATULLAH Inaugural UNESCO Chair in Futures Studies
15:30~16:00	Break	
16:00~18:00	Session 10-1	<b>Assessment and Tasks of Unification Public Diplomacy</b> Peac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Moderator	Kitae LEE Director, Peac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Presenters	<b>Directions and Tasks Ahead in Korean Peace Public Diplomacy: Promoting Tailored-contents and Establishing Networks</b> Jong-Chul PARK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b>The Assessment and Tasks of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Focused on Diplomacy in the United States</b> Hyun-Wook KIM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KNDA)
	Discussants	John DELUR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SIS
		Dong Ryul LEE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Eunbong CHOI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Session 10-2	<b>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on Korean Peninsula</b>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Moderator	Hannes MOSLER Professor,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Presenters	<b>Security dimensions in light of changing dynamics of North Korea</b> Virginie GRZELCZYK Head of 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ston University, UK
<b>North Korea's Emerging Nuclear State Identity Discursive Construction &amp; Performative Enactment</b> Eric J. BALLBACH Post-Doctoral Researche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Discussants	Ed GRIFFITH Deputy Head of School,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Hee Kyoung CHANG Lecturer,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Lonnie EDGE Assistan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arah SON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Sheffield, UK	
	Marco MILANI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Bologna, Italy	
Nicolas LEVI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Mediterranean and Oriental Cultures, Poland		



# PROGRAM

## I DAY 3 | September, 9<sup>th</sup> (Wed)

	<b>Session 10-3</b>	<b>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North Korea Research in Overseas</b>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Moderator	Hyeong Jung PARK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Presenters	Jenny TOWN Fellow, Stimson Center
		John NILSSON-WRIGHT Senior Lecturer, University of Cambridge & Chatham House, UK
	Discussants	<b>Japan's policy on North Korea: Four motives and Three factors</b> Shunji HIRAIWA Professor, Nanzan University, Japan
		Ji Yong ZHENG Professor, Fudan University, China
		Artyom LUKIN Deputy Director for Research at the School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Russia
		Sukhoon H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16:00~18:00	<b>Session 10-4</b>	<b>How to Resume the Tour to North Korea?</b>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Moderator	Youngsik KANG Chairman,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Presenters	<b>The Tourism Policy and Infrastructure Status of the DPRK</b> Sang Jin SHIM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b>Strategies and Challenges of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b> Yongseok SHIN Senior Researcher,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Discussants	Gyeongsuk MIN Executive Vice President for National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Youngdong LEE Execution Committee Chairperson,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ae Jung LEE Manager of Center for Unification and Economics, Hyundai Research Institute
		James BANFILL Visiting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0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September, 7<sup>th</sup>(Mon) - 9<sup>th</sup>(Wed), 2020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Past, Present and the Future

**PROGRAM BOOK**

**DAY1**



# Opening Ceremony

## 개회식, 축사, 한반도평화 친선대사 위촉식

## Opening Ceremony, Congratulatory Remarks, Appointment Ceremony for Goodwill Ambassador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개회사</b> Opening Remarks	<b>이인영</b> 통일부 장관 <b>In-young LEE</b> Minister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b>축사</b> Congratulatory Remarks	<b>박병석</b> 국회의장 <b>Byeong-seug PARK</b>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b>정세균</b> 국무총리 <b>Sye-kyun CHUNG</b> 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b>소하일 이나야툴라</b> 유네스코 미래연구국장 <b>Sohail INAYATULLAH</b> Inaugural UNESCO Chair in Futures Studies <b>브래드 셔먼</b> 미국 연방 하원의원 <b>Brad SHERMAN</b> The U.S. Congressman
<b>한반도평화 친선대사 위촉식</b> Appointment Ceremony for Goodwill Ambassador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리사 클라크</b> 국제평화국 회장 <b>Lisa Pelletti CLARK</b> Co-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 <b>이대훈</b> 국제평화국 회장 <b>Francis Daehoon LEE</b> Research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b>정주진</b> 평화갈등연구소장 <b>Jujin CHUNG</b> Director, Center for Peace & Conflict Resolution <b>김동진</b>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아일랜드 연구재단 마리 스클로도브스카-퀴리 펠로우 <b>Dong-jin KIM</b> IRC Marie Curie Fellow,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b>윤성욱</b> 충북대학교 교수 <b>Sung-wook YOON</b>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b>메리 조이스</b>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국장 <b>Meri JOYCE</b>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박병석 국회의장

Byeong-seug PARK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안녕하세요. 국회의장입니다. 2020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으로 우리는 평화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남북정상이 세 차례 마주했고, 북미정상은 70년 적대관계를 뒤로하고 두 차례 만났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함께하는 역사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평화의 봄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뒤뚱거리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입니다. 평화로가는 길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우리앞에 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서둘러서도 멈춰서도 안됩니다. 뚝뚝뚝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민족 8천만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소명의식을 굳건히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만할 길 가야할 길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갑시다.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우리국민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지원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가 처해있는 우리가 처해있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짚어보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보람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장관님의 리더십을 필두로 국민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정세균 국무총리

Sye-kyun CHUNG 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2020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시는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주실 데이빗 비즐리 WFP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였던 우리는 가느다란 철책선으로 나뉜 채 돌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긴장과 갈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가야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20년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맞잡았던 손을 기억합니다.

2년전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보듬었던 따뜻한 품을 기억합니다. 남과 북은 하나였고, 하나여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와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남과 북은 서로와 서로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땀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로 방역, 재난 등 삶의 문제부터 시작해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을 다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남북 공동의 비전을 세우고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이 그 길을 향한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깊이 있고 실천적인 방안이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소하일 이나야툴라 유네스코 미래연구국장

Sohail INAYATULLAH Inaugural UNESCO Chair in Futures Studies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중요하고,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역사가자 프레드 폴락은 '미래의 이미지가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먼저 미래를 상상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지 토의하고,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중요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상상하고, 나아가 아시아연합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일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롭고, 결단력있고, 풍성한 번영할 한반도를 상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to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What you are doing is important and it will make difference. The historian Fred Polak argues that the image of the future leads.

First we imagine the future than we engage in a discussion about how to create the future and than we work out the details. So what you are doing is crucial. The imagin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unified, even going further, an Asian Confederation. So continue your amazing work, and thank you so much for imagining peaceful, purposeful and prosperous peninsula.

Thank you so much and I wish you hearty congratulations.

#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Brad SHERMAN** The U.S. Congressman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최고의 도시 셔먼 오크스의 브래드셔먼 의원입니다. 저는 24년 동안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종진의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전 의장을 역임한 저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현재 기술적으로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저와 저의 동료의원들은 국방예산법의 연간보고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가 계속해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하고, 이는 가장 당연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은 끝났습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과 LA에 있는 제 친구인 최강철 대표와 함께 일하며 동료의원들과 미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2개의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1번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이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헤어진 가족들이 재회하기 위해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노력합시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입니다.

Hello, I'm congressman Brad Sherman from California's best name city Sherman Oaks. For 24 years, I have served in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Congress in Washington D.C.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this year's gathering of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As a senior member of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chair emeritus of Asia Subcommittee, I know the importance of the US-Korea relationship. Although an armistice was signed in 1953, we are technically remain in state of war with North Korea. This does not serve anyone's interest. In July 2019 my colleagues and I secured an amendment to the annual national report for defense appropriation's bill. Putting congress on record in support of diplomac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We all want peace, and that begins with acknowledging the obvious.

The Korean War is over. Working with KAPAC and my friend KC Choi here in Los Angeles, I joined my colleagues and introduced two pieces of legislation to call on the administration to work on to hold reunification between Korean American Families and their relatives in North Korea. While there were 21 family reunions between South Korean families and North Koreans, that's far too few. None of that involved Korean American Families. We have more work to do to realize the dream of Korean reunification of reuniting divided families and lasting peace. let us continue to work.

I'm congressman Brad Sherman.





# Special Message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The Role of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 연사  
Speaker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Antonio GUTERRES**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Special Message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VIDEO MESSAG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THE 2020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New York, 7 September 2020**

I am honoured to send my greetings to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and pleased that for the first time, the United Nations joins its voice in support of your important discussions o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8,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wed that dialogue is possible and that diplomacy is the only pathway to sustainable peace and denuclearization.

It is important for the parties to continue what they star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ager to see progress.

At the United Nations, the Panmunjom Declaration was circulated as an official documen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Korean wrestling was listed as joi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se were important steps. But more is needed. I ur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ume talks with the other parties.

You have our solidarity as the Korean Peninsula faces the pandemic, floods and typhoons. It is crucial that the two Koreas address these and other challenges together.

I encourage you, through this important Forum, to imagine a future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Nations fully supports your efforts.

Thank you.

# 특별 메시지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이고, 처음으로 유엔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공론의 장에 지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대화가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시작된 것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과정의 진전을 보고 싶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유엔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의 공식문서로 회람되었습니다. 한국의 씨름은 남북 공동의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북한이 다른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가 직면한 전염병, 홍수 그리고 태풍에 맞서, 국제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이러한 문제와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와 번영을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엔은 여러분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Session 1-1

## 갈등해결의 방법론적 고찰: 종전선언, 평화협정 Methodological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End-of-war Declaration and Peace Treaty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좌장  
Moderator

문정인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 사무총장  
Chung-in MOON Executive Director,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APLN)

패널  
Panelists

김한정 국회의원  
Han-jung K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Jong Seok LEE Senior Research Fellow, Sejong Insitute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미국  
Frank JANNUZI President and CEO, Mansfield Foundation, USA

옌쉐퉁 칭화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중국  
Xuetong YAN Dean, Tsinghua University, China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대학교 크록 연구소 명예교수, 미국  
George LOPEZ Professor Emeritus, Kroc Institute, University of Notre Dame, USA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1-1)

## 갈등해결의 방법론적 고찰: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쟁이 초법적 현상이었던 시대에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이 권장되어 주선, 중개, 중재재판 등의 국가 실행이 이루어졌으며, 1차 세계 대전 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단순히 그렇게 하려는 노력의 목표로부터 국제법상의 의무로 전화하였다.(유엔헌장 제2조 3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그것에 적합한 분쟁 해결제도를 수반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반도의 참여한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은 당위적인 것이나 제도화하는 문제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의견과 부각되는 논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 Methodological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End-of-war Declaration and Peace Treaty

Even when a war was regarded as an extrajudicial phenomenon, peacefu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was recommended to avert war and countries thus involved themselves in arrangements, mediations, and arbitrations. Since World War I, peaceful resolution has gone beyond a simple goal to become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s stipulated in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UN Charter. This obligation is backed by an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scheme. Against this backdrop,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orny disputes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proper way to pursue peace, but opinions vary on how to turn this principle into an actual regime. We want to discuss such opinions and relevant issues.

# 좌장 Moderator



**문정인**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 사무총장

**Chung-in MOON** Executive Director,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APLN)

문정인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다. 그는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UC 샌디에고 글로벌정책전략대학원 크라우스 석좌연구원, 영문 정책 계간지 Global Asia 편집인을 겸임 중이다. 문정인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아위원회(장관급)과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냈다. 연구 업적으로 60여권의 편저서 및 각종 논문집과 학술지에 3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그는 아태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 공동의장, 아시아연구기금 이사장, 태평양세기연구소(PCI) 및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이기도 하다. 또한 동아시아재단 이사 및 세계경제포럼(WEF) 한국 글로벌어젠다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 Public Policy Scholar Award, 북경대학교 Lixian Scholar Award, UCSD Pacific Fellowship Award 등을 수상하였다.

Chung-in Moon is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He is also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Krause distinguished fellow at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editor-in-chief of Global Asia, a quarterly journal in English. He was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 and served as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of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a cabinet-level post. He has published over 60 books and 300 articles in edited volumes and scholarly journals.

He is currently co-convener of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on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PLN), Chairman of Asia Research Fund, a board member of the Pacific Century Institute and the Korea Peace Forum. He was also chairman of the Global Agenda Council on the Future of Korea of the World Economic Forum as well as a board member of the East Asia Foundation. He was a recipient of Public Policy Award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the Lixian Scholarship (Beijing University), and Pacific Leadership Fellowship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 패널 Panelist



김한정 국회의원

Han-jung K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김한정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뉴저지 럿거스대학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코넬대학교 동아시아 센터 초청연구원으로서 북미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The Honorable Hanjung Kim is a South Korean congressman who was elected for two consecutive times. During President Kim Dae-jung administration, Congressman Kim served as the Chief Secretary to the President and accompanied President Kim during the historic first inter-Korean summit held in 2000.

After majoring international economics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his undergraduate study, Congressman Kim completed PhD program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Rutgers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man Kim was a visiting scholar of a East Asia Program in Cornell University.

Congressman Kim is a joint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Peninsula Peace Forum,' a research group insid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erved as the chairman of Special Committee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 ■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 현황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종전선언에 대한 최초 논의는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되어 왔다. 그동안 남·북·미·중은 이미 한반도 종전선언에 동의 또는 합의하였으나 아직 실행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간, 한-미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국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 연방하원에서는 작년 7월,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고, 현재는 42명의 연방의원(2020.6월 기준)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에 서명하여 발의된 상태이다.

### ■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왜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에 앞서, 1953년에 체결한 정전협정의 법적성격과 종전선언의 당사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정전협정이란 "전쟁을 수행 중인 교전 쌍방 군사령관들 간에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 체결하는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다. 정전협정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적으로 조약의 지위를 가지며, 상호 전투 등 적대행위나 무장 행동의 일시적·잠정적 중지 등에 관해 합의하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다.

#### < 정전협정(1953.7.27.) 주요 내용 >

- 목 적 : 분쟁의 평화적 해결 시까지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장활동 중지 보장
- (제1조) 전쟁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
- (제2조) 정화(停火) 및 정전(停戰)의 구체적 조치
  - △쌍방 적대행위 중지 △72시간 내 비무장지대로부터 모든 군사력·장비 철수
  - △10일 내 상대측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군사력·장비 철수
  - △국외로부터 추가 군사인원·장비 투입 중지 △전사자 유해 발굴 등
  - 군사정전위원회 및 공동감시소조 /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중립국시찰소조 구성·운영
- (제3조) :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 (제4조) : 쌍방 관계정부들에 건의
  - 정전협정 발효 후 3개월 내 한국문제 해결 위한 한 급 높은 정치회담 소집
- (제5조) : 부 칙
  - 정전협정 수정·증보시 쌍방 합의 필요
  - 정전협정은 1953.7.27 22:00부터 발효, 쌍방 합의를 통해 교체될 때까지 효력 지속



### 종전 선언의 당사자

현재로서, 종전 선언의 당사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지만, '실질적 당사자 간 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남과 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관련국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 당사자 관련 남북간 합의 및 6자회담 합의문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종전 선언의 당사자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판문점선언」 3조 3항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 「919 공동성명」 4항: "직접 관련 당사자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 \* 「10·4 선언」 4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 정전협정은 '유엔군측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공산군측 사령관들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서명·체결
  - 유엔군측: 미합중국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 공산군측: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평터화이(彭德懷)
-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반대운동' 및 '정전회담 한국군 대표(최덕신 장군) 철수' 등으로 한국은 정전협정에 서명자로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 미군이 대표 서명한 유엔군의 일원이자, 한국전쟁의 핵심 교전 당사자, 정전협정의 이행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음.
- 기본적으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같을 필요는 없으며,
  -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상의 수정조항 또는 여타 조항에 근거해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당사자'간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것임
  - \* 역사적으로도 양 협정의 당사자가 다른 사례 다수(1,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이집트·이스라엘전 등)

### ■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종전 선언의 필요성)

올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에선 지난 6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한편, 미국은 이미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직전인 2019.2.26. 美 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결의안(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을 발의(H.Res.152)하였는데,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오히려 그러한 노력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한마디로 '적대관계'이다. 양국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이후 비핵화 과정에서 상호 신뢰 기반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제4차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과정과 함께,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합의하면서,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평화체제가 논의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선결조건이며, 북미가 상호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나의 긴 여정으로 본다면, 한반도에서 비로소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은 전체 여정의 '입구'에 해당되고, '평화협정'은 최종 '출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째 되는 해로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 해서 종전 선언을 미뤄선 안 되며, 이런 때일수록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종전 선언이 된다면, 이후 평화협정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체제 위기감을 덜게 되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이루어내고 남북교류 협력을 좀 더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 종전 선언에 대한 일각의 문제제기 관련

일각에서는 현재 북한과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종전 선언은 전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을수록 하루 빨리 종전 선언을 마무리해서 더 이상 군사행동이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이는 곧 북한을 '핵보유 국가' 및 '보통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며, 종전 선언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말 그대로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일 뿐, 북한을 '핵보유국가'나 '보통국가'로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느끼는 체제 위기감을 완화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전의 정전협정과, 7.4 공동성명,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간 합의서 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종전 선언과 주한미군을 연관 짓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1953년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보면, 주한미군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에 반해,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남·북·미·중 4개국의 조속한 종전 선언 실행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환경 조성 △종전 선언을 통해 북의 완전한 비핵화 추동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

### ■ 맺음말

종전선언은 북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경제에도 우선 분단 리스크를 줄여 대외신인도와 외국인 투자도 제고시키고, 외평채 이자부담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변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 평화는 미룰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소명이다.

□

# 패널 Panelist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Jong Seok LEE** Senior Research Fellow, Sejong Insitute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3년에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논문: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제를 중심으로)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하였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2003-2005), 통일부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2006)을 역임하였고 2008년-2009년에 미국 스탠포드대학 방문학자, 2017년에 중국 북경대학 초빙교수를 지냈습니다.

Ph.D. Political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Former Deputy Secretary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Standing Chairma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1. 종전선언의 유용성과 평화협정과 관계

### □ 종전선언의 유용성

- 일반적으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안에 종전선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서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형식을 지닌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님
- 그러나 전쟁의 종식이 아닌 잠정적인 종단을 의미하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6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에서는 평화협정에 앞선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음
  - 남북 및 북미 간 적대적 대치로 상징되는 정전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남북 대치선인 휴전선 일대가 세계 최고의 군사력 밀집지대로 변모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의 긴장과 국지적 충돌을 거듭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불안정한 평화가 지속되어 왔음.
-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현재의 군사적 긴장 상태와 적대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계

- 그런데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은 평화를 진전시키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봄.
  - 남북 간에는 2018년에 맺은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사실상 종전선언의 성격을 지니며, 미국과 북한 간 이루어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그 내용에 상당한 정도로 상호 적대성의 해소를 담고 있음
  - 따라서 종전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주체들이 기존에 정상 간 합의한 '종전을 지향하는 내용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라고 봄.

## 2. 기존 국제분쟁 해결 사례의 한반도 적용 문제

### □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국제분쟁 해결 사례와 교훈

#### ○ 사례

- ▲ 파리협정(1973)
  - 월남 공산화로 귀결
-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1979)
  - 중동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함
- ▲ 남북예멘 통일(1990)
  - 통일 이후 내전으로 점철

#### ○ '분쟁해결 사례들'의 궁극적인 실패가 주는 교훈

- 역내 갈등 주체 간의 주체적 의지나 적대적 불신의 해소 없이 전략적 이해 관철에 급급한 역외 강대국의 주선이나 주도 아래 이루어진 합의(베트남, 중동)의 취약성.
- 역내 갈등 주체 간에 분쟁해소와 평화 증진이 그들에게 주는 이익에 대한 인식공유가 없는 합의는 '모래위의 성'처럼 취약하다는 점.

## □ 북핵문제 해결 방식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국제적 사례와 적용 가능성

## ○ 사례

- ▲ 리비아 대량살상무기 포기(리비아 모델, 2003)
  -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미국의 '리비아 체제 인정' 교환
  - 2011년 미군이 주도하는 NATO의 폭격으로 카다피 정부군 몰락, 카다피 사망
- ▲ 우크라이나 모델(1994)
  - 5대 핵보유국의(안보리 상임이사국) 안전보장 약속. 경제지원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내전, 크림자치공화국 러시아 편입.
-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1990-1991)
  - 자발적 핵 폐기

## ○ 위 모델들의 북핵 문제에 적용 가능성

- 리비아나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를 통해 얻고자 했던 체제안전보장 획득 실패. 강대국의 결과적인 기만
-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사례는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의지 자극
- '자발적 핵 포기'의 길은 간 남아공의 안보상황과 북한 상황은 전혀 다름
- 북한은 세계 최강 미국의 '미국의 (핵)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서 핵무기 개발을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혀옴.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받는 위협 구조가 어떤 형태로든 해소되지 않는 한 핵 보유 포기하지 않을 것임.

## □ 결론

- 한반도에 적용할만한 기존의 국제분쟁 해결 사례들은 부분적으로 방법적 측면에서 한반도 갈등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유용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판단함
- 대신에, 기존 이 사례들의 '궁극적 실패'는 우리가 피해야 하는 협상 방식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협상자세 등을 반면교사로서 알려주고 있다고 봄
- 한반도 갈등상황의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 주체 간에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에 대한 열망을 공유해야 하며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평화의 내용과 평화증진의 경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이러한 상황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만들어 낼 미래의 남북공동번영의 비전을 공유하고 최소한 남북군대의 상호교류가 가능할 정도의 협력안보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갈등 주체인 남북 간, 북미 간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주의에 기초한 협상이 필요함.
- 북핵 문제의 경우, 북미 간 상호위협 인식이 비대칭적이며 상호 적대성과 불신은 양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화되어 있음. 따라서 북미 양자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북미 양자협상과 더불어, 6자회담을 복원하여 책임있는 관계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협상도 병행함으로써, 북미 간 이견 해소를 촉진하고 합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과도한 미국위협인식을 완화시키고, 미국의 일방적인 북핵 해법(북한의 선택포기 주장)에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등의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 제고가 필요함

# 패널 Panelist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미국

**Frank JANNUZI** President and CEO, Mansfield Foundation, USA

프랭크 자누지는 2014년 4월 모린 앤 마이크 맨스필드 재단의 최고경영자로 임명 되었다. 이전에는 미국국제사면 위원회 사무차장직을 역임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양심수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였다.

자누지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미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정책국장을 담당하며 조셉 바이든 위원장과 존 케리 위원장에게 미국-동아시아 관계에 관련된 안보, 정치, 경제, 인권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외관계위원회에서 근무하며 Hitachi 외교담당 평의회 of 선임연구위원직을 수행하였으며 게이오대학교에서 객원 강사, 국제정책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경력 초반에는 미 국무부 정보연구국에서 9년간 애널리스트로 근무하였다.

Frank Jannuzi joined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as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in April 2014. He previously served as Deputy Executive Director (Advocacy, Policy and Research) at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re he shaped and promoted legislation and policies to advance universal human rights, protec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t risk, and free prisoners of conscience.

From 1997-2012 Mr. Jannuzi was Policy Direct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for th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here he advised Committee Chairmen Joseph Biden and John Kerry on a range of security, political, economic, and human rights issues pertaining to U.S. relations with East Asia. During his tenure with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he also was a Hitachi Fellow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rom 2006-2007, serving as a visiting lecturer at Keio University and a visiting scholar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in Tokyo. Early in his career, he served for nine years as an analyst in the U.S. 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 Peace Mechanisms for the Korean Peninsula: Thoughts on Structure and Key Attributes

Talking Points for Frank Jannuzi

Sixty-seven years since the signing of an Armistice Agreement to end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still have no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Peace is best understood as a process, not an event. As a recent examination by USIP of alternative peace mechanisms for Korea concluded, “a peace regime thus represents a comprehensive framework of declarations, agreements, norms, rules, processes, and institutions aimed at building and sustaining peace.”<sup>1</sup>

Peace could come in many ways – by formal treaty ratified by the relevant parties, by peace declarations (unilateral, bilateral, or multilateral), or even through reciprocal, practical, incremental step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normalize economic ties, and agree certai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pledges of non-hostility. These three options – from most formal to least formal – all can guid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ward the same goal: an enduring peace mechanism finally to bring the Korean War to a close.

Last year, as President Trump prepared to meet with Chairman Kim in Hanoi, there was a flurry of discussion about the prospects for a “peace decla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The mood was almost giddy, especially in light of the fact that 18 months earlier, the U.S. and the DPRK seemed more likely to exchange missile strikes than peace overtures. Although in the end the two sides failed in Vietnam to reach agreement on a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the frantic scurrying about by diplomats on both sides was a stark reminder that things can indeed change quickly in international affairs – sometimes for the worse, but sometimes for the better.

Let me say at this juncture that I am not an attorney, and volumes have already been written on the legal intricacies associated with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rocedures established therein to formally end hostilities on the Peninsula. Suffice to say that while the lawyers will eventually have their day, practical questions will, for the foreseeable future, outweigh any legal niceties. Perhaps the greatest impact of the final *form* of any peace mechanism will be *which parties are included*, and which excluded, or marginalized, in any negotiations. The core ingredients of the peace – *an end to hostilities, mutual security assurances, diplomatic recognition, and steps to lift sanctions and normalize economic ties,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links* – are likely to be comparable no matter what the letterhead says. These are complex undertakings, and any peace regime worthy of the name will therefore not be accomplished swiftly. If making peace was easy, it would have been accomplished by now.

It is worthwhile to examine the three pathways available to end the Korean War and assess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Note: They are not necessarily mutually exclusive. A peace treaty will likely require prior progress on practical steps toward peace, and perhaps even mutual peace declarations.] Moving from least formal to most formal, let’s first take a quick look at the Article II of the October, 1994 Agreed Framework – the article dealing with peace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It includes the following brief provisions:

- 1)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both sides will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restriction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 2) Each side will open a liaison office in the other’s capital following resolution of consular and other technical issues through expert level discussions.
- 3) As progress is made on issues of concern to each side, the U.S. and the DPRK will upgrade bilateral relations to the Ambassadorial level.

Of course other provisions of the AF dealt with the nuclear issue (the core security concern for the United States), and sanctions relief. But as one can see, the remaining core elements – normalization of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 are included here without any reference to treaties, ratification procedures, or formal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is particular utilitarian approach to ending the Korean War is that the agreement is between just two parties – the U.S. and the DPRK – and does not directly address peace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or between China and the ROK.

<sup>1</sup> [https://www.usip.org/sites/default/files/2020-02/pw\\_157-a\\_peace\\_regime\\_for\\_the\\_korean\\_peninsula-pw\\_0.pdf](https://www.usip.org/sites/default/files/2020-02/pw_157-a_peace_regime_for_the_korean_peninsula-pw_0.pdf)

The advantages of a functionalist, incremental approach to making peace include:

- 1) Simplicity – fewer parties should, in theory, streamline negotiations;
- 2) Each step forward generates goodwill and creates momentum to solve other problems;
- 3) Prizes practical steps toward peace – an emphasis on substance over form;
- 4) Suspendable and reversible – either party can suspend cooperation or reverse course if not satisfied; and
- 5) Politically viable – no nasty Senate ratification battles. Just an executive agreement and a handshake.

The potential disadvantages include:

- 1) Technically leaves the war still unresolved;
- 2) Lacks binding provisions – little recourse if one or both parties abandons the agreement;
- 3) Purely bilateral – leaves other critical stakeholders (most importantly the ROK, but also China, Japan, Russia, the UN) sidelined, with diminished leverage to accomplish their individual objectives associated with building a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 4) Lacks specificity and accountability – What about borders? Status of forces? Abductees and missing persons? Reparations? Reconstruction?

One step up in formality from the peace mechanisms found in the Agreed Framework would be a peace declaration. Peace declarations could be agreed by any or all of the parties, together or in sequence, and could be accompanied by practical steps or adopted as stand-alone political statements of intent. Depending on the spadework done before adopting such declarations, they could provide all the benefits of an incremental, functional approach to ending the war with one critical advantage – the political symbolism associated with declaring the war to be at an end. But even the most robust peace declaration – one far more detailed than any declaration pondered in advance of Hanoi – would likely leave many of the weaknesses enumerated above intact, even if the parties could plausibly claim to have “ended” the Korean War through their joint declaration. And viewed from a U.S. perspective, a peace declaration would add one new potential weakness: it would create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to withdraw its forces from the peninsula even in the absence of concrete DPRK steps toward nuclear disarmament and conventional force reductions. This was precisely what John Bolton feared in the run-up to Hanoi, and also why Prime Minister Abe gave a giant sigh of relief when the summit ended abruptly without agreement.

The most formal way to the end the war – by treaty – is also the most difficult to accomplish. A peace treaty, by virtue of its legally binding status and its inclusion of at least the four core parties to the conflict (the United States, China, ROK, and DPRK), would not only end the Korean War but also potentially set the stage for genuine political rapproch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It could even set in motion steps toward unification. In contrast with less formal peace mechanisms, a peace treaty (as understood under Article 2 (1) of the Vienna Convention, is binding on the parties and is generally judged to be more sustainable than mere executive agreements.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U.S. context, in which a treaty entered into by the executive branch must secure ratification by two-thirds of the Senate to enter into force. While this creates a very significant hurdle that any U.S. President would have to overcome, it does have the advantage of signaling to the DPRK that the U.S. commitment to peace is bipartisan and deep. For the United States, the major disadvantage of attempting to negotiate a peace treaty with the DPRK is the precisely the requirement to secure ratification by 2/3 of the Senate. This is a high bar. Of more than 5,000 international agreements sign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the late 1970s, more than 95 percent (including the Agreed Framework) took the form of executive agreements rather than treaties.

Let me end where I began. Peace is a process, not a single event or an endpoint. As we have learned from the U.S. withdrawal from the INF Treaty, nations always retain the right to reverse course, even when their commitments are made formally, ratified, and held for decades. The strength of any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judged more on its *attributes* than its *title*. The most crucial attributes include the following:

**Comprehensiveness** – no peace regime will address every issue, but a sustainable peace mechanism will set in motion parallel processes to accomplish denuclearization and diplomatic/economic normalization.

**Reciprocity** – for peace to endure, all parties must benefit.

**Conflict resolution** – a robust peace mechanism will provide solutions to manage the inevitable disputes along the path toward genuine peace and rapprochement.

**Pragmatism** – real concrete improvements in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economic growth, family unifications, communication,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will generate momentum and improve the resiliency of any peace regime.

**Multilateralism** – a durable peace must ultimately satisfy the core interests of all key stakeholders, even if their concerns are addressed sequentially over time.



## 패널 Panelist



**옌쉐퉁** 칭화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중국  
**Xuetong YAN** Dean, Tsinghua University, China

옌쉐퉁 박사는 칭화대학교의 저명한 교수이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회원이다. 칭화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과 세계평화포럼 사무총장으로도 재직 중이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8년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가 선정한 세계 100대 지식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4년부터 Elsevier가 선정한 가장 많이 인용된 중국 연구자 명단에 포함된 유일한 정치학자다. 그가 저술한 책 중 일부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페르시아어 또는 알바니아어로 번역되었다.

Dr. YAN Xuetong is a distinguished professor of Tsinghua University and a member of Russia Academy of Science. He is serving as the Dea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singhua University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World Peace Forum. He obtained Ph.D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 1992 and was named as one of world's Top 100 public intellectuals by the American journal Foreign Policy in 2008. He has been the only political scientist listed in Most Cited Chinese Researchers by Elsevier since 2014. Some of his books have been translated in to English, Japanese, Korean, Farsi or Albanian.

## 패널 Panelist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대학교 크록 연구소 명예교수, 미국

**George LOPEZ** Professor Emeritus, Kroc Institute, University of Notre Dame, USA

조지 로페즈는 국제 평화 연구를 위한 크록 연구소 창립 회원이며 현재 평화학 명예교수이다. 그는 경제 제재와 평화 구축 그리고 평화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이끄는 전문가이며 크록 연구소에서 33년간 근무하며 공공·민간분야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1997년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임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002년 Doomsday Clock을 주재하는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뉴욕 카네기 윤리국제문제협의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지내며 미국 전역의 911테러 이후 의회의 공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북 제재 감시를 위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George A. Lopez is the Rev. Theodore M. Hesburgh, C.S.C., Professor Emeritus of Peace Studies at the Kro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where he was a founding faculty member. He is a leading expert on economic sanctions, peacebuilding, and various peace-related issues. During 33 years of affiliation with the Kroc Institute, Lopez has engaged in a diverse set of policy and public roles. He served as interim executive director of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in 1997 and chaired its Board of Directors (1998-2003) presiding over changing the hands of the Doomsday Clock in 2002. As a senior research associate at the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in New York City in 2001-02 he assisted with the Council's post-9/11 public programming throughout the U.S. In 2010-11, Lopez served on the U.N. Panel of Experts to the Security Council for monitoring sanctions on North Korea.

## Improving the prospects for a peninsula peace with greater security

George A. Lopez

My sincere thanks to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for inviting me to offer these reflections at this prestigious panel today. Other speakers have highlighted the various dimensions of this intractable dispute between the DPRK and ROK which have prevented a permanent end of war declaration or a full peace treaty. As a scholar of peace research and peace building, and who in practice has dealt with United Nations attempts to control nuclea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let me offer my observations on what might improve peace prospects on the peninsula.

I want to argue today that the escalating tensions and missed opportunities over the past five years must be addressed more creatively, more consistently, and especially with a full scale process plan of achieving some form of peace declaration, and even denuclearization, in the future.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nuclear capability of the DPRK since 2015 in both weapons systems and in their delivery via medium and long range missiles means that Kim Jong un, despite his partial diplomatic isolation and the bite of punishing sanctions, is in a stronger position to resist peace negotiations with Seoul or Washington than ever before. Whether it be his bargaining with ROK over multiple issues unique to the North-South agenda or with the US, regarding mutual denuclearization, Kim can be unmovable. Complicated this is that Washington now sees such denuclearization as a prerequisite for arriving at new security arrangements. However, DPRK will not yield on its nuclear weapon systems before a new security arrangement and major other concessions occur. Clearly we need a new, proactive smart diplomacy aimed to break this stark deadlock by developing a very new approach to DPRK.

The cornerstone in this new approach - as strong allies must have - will be greater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in all matters related to DPRK and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Secondly, the same must occur, and be led by the US, among those regional actors who in the past were engaged in the six party talks. I am viewing these not through a lens of the past or with any naivete about how difficult it will be to make progress on peace and security with North Korea. But I am certain that to increase the prospect for this to happen in the short term will require a redefined vision and more interactive role of the United States toward ROK first and foremost, followed promptly - and with high energy - toward each of the critical actors in the region. In addition to rebuilding its cooperation with nearby parties, the United States must shift its approach to engaging with DPRK in a number of critical ways.

The first order of business is to declare that the time for the US-DPRK leader to leader summit diplomacy to solve our collective search for a peace declaration and also denuclearization has ended. Rather, each state should set up lower level working groups that begin tackling the difficult issues that require consistent, shared work that begins to reach some agreement from which national leaders can build further. Such continuing work can also increase the space for DPRK and ROK similar level working groups, especially regarding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with a modern peace treaty.

Similarly, the US must recognize the failure of maximum pressure sanctions to produce denuclearization or improve DPRK behavior. To ensure that such a major policy shift has bargaining utility in dealing with the North will demand a whole new process framework in which such changes or concessions and can stimulate more movement towards peace. I believe the basic contours of such a new process exists if we polish off and adapt a bit the framework which laid the groundwork for the early nuclear arms control treaties between United States and the then Soviet Union some six decades ago. This inventive communication and action-reaction process is called the Graduated and Reciprocated initiatives and Tension Reduction [GRIT]. The GRIT framework invites rival parties, however serious their disagreements,

---

to acknowledge their shared interest in war avoidance and an openness to negotiated settlement of their disputes. And it establishes how early, unilateral 'concessions' can provide incentives to a stubborn foe to undertake even the slightest reciprocal concession.

But here is the key: to move beyond the intense distrust and hostility among foes, GRIT requires one of the parties to assume unilateral leadership in the process of de-escalation. The time for such US leadership has come. As the lead nation in a GRIT strategy, the US would announce forcefully and without ambiguity or qualifiers, its commitment to end the nuclear standoff with DPRK without war. The US would then demonstrate the seriousness of that declaration by calling the concerned nations of the region - China, Russia, South Korea and Japan - to a summit meeting designed to outline a multifaceted peace strategy to entice the North Koreans to discuss such proposals. That would be followed quickly by an invitation to Kim Jong Un to respond to this new initiative in kind, and to provide a sign of its own interest in defusing tensions.

Recognizing the problem involved when long-term enemies try to halt hostilities, GRIT posits that if Pyongyang does not reciprocate to these first positive moves, the US and its allies should propose a third - and if needed - a fourth move/ concession toward reconciliation. These actions could come from any of the Northeast Asia nations involved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renewed engagement with neighbors that incentivize North Korean cooperation. These exchanges would provide momentum to well-conceive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at lead to major, results-focused negotiations. Somewhere in these first rounds of quid pro quo actions solidifying an end or war declaration or a full-fledged peace agreement ending the Korean War would occur. Such an accomplishment would make more acceptable for discussion of proposals like sanctions suspension, or a freeze on testing and military exercises by all sides. These accomplishments, in turn, may make it more possible to design some denuclearization measures step, by step, by step.

Making such smart, unanticipated unilateral concessions to create new possibilities was employed by Anwar Sadat in his unprecedented trip to Jerusalem in 1977. That began a cautious, step-by-step process of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Egypt and Israel that culminated in the Camp David Accords. And John Kennedy proposed ending US atmospheric testing as a first step in a full reset by the US of our perilous nuclear rivalry with the Soviets. It became the foundation of stable relations between the superpowers henceforth. I am certain the a new ROK-US partnership can move this creative diplomatic paradigm for peace forward.





# Session 1-2

##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장애물과 극복방안

## Institution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bstacles and Overcoming Measures

주관기관  
Organized By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좌장  
Moderator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Kab Woo KOO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발표자  
Presenters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Mason RICHEY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김동진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아일랜드 연구재단 마리 스클로도브스카-퀴리 펠로우  
Dong-Jin KIM IRC Marie Curie Fellow,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토론자  
Discussants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 독일  
Eun-Jeung LEE Director of the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김연호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미국  
Yonho KIM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of Practic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USA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Jihwan HWANG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1-2)

##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장애물과 극복방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진전되었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의 결렬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난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영구적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세미나는 한반도평화를 제도화 하기 위해 현재 제도적 장애요인(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의 한계 등)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도적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한다.

## Institution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bstacles and Overcoming Measures

Since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ter-Korean relations have progressed, and lunched for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between US and DPRK. However, after the breakup of the North American summit in Hanoi,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 trouble. Therefore, it is time to discuss the institutionalization pla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eminar would try to analyze the current institutional obstacles (national security law, limits of exchange cooperation law, etc.) and external factors to institutionaliz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eminar conducts discussion about new laws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o settle dow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recast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 좌장 Moderator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Kab Woo KOO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일본 토야마 대학 외래교수, 릿교 대학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북한외교, 남북한 문학이다. 지은 책으로는,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2007),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2008),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2011, 공저), 분단된 마음의 지도(2017, 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2012),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화"(2013), "북한 '핵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년-1964년"(2014),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2015), "북한 소설가 한설야(韓雪野)의 '평화'의 마음(1), 1949년"(2015),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한반도 평화체제"(2016), "The Discursive Origins of Anti-Americanism in the Two Koreas"(2017),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2017),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2018), "평창 임시 평화체제에서 판문점 선언으로"(2018), "두 '평양시간'(2019) 등이 있다.

KOO Kab-Woo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yama and a visiting researcher at Rikkyo University in Japa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nd Korean literature. His publications include Critical Peace Studies and Korean Peninsula(2007), A Critique of International Relations(2008), "Towards a Working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2011), "Civil Society and Unification Movements in South Korea"(2011), "Reproduction of Post-Colonial Divided States: A Comparative Analysis on Social Partition between Two Koreas and Ireland-Northern Ireland(2012), "A Prototype of Nuclear Discourse in North Korea, 1947-1964"(2014), "The Discursive Origins of Anti-Americanism in the Two Koreas"(2017), and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Pyeongchang Provisional Peace Regime"(2018) etc.

# 발표자 Presenter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Mason RICHEY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메이슨 리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정치학 부교수이자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선임 기고자이다. 리치 박사는 동서문제 연구소(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포스코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포츠담 대학교에서 독일고등교육진흥원(DAAD)의 지원을 받는 학자로 근무하기도 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외교안보정책과 동북아 지정학이다. 최근 Pacific Review, Asian Security, Global Governance, Foreign Policy Analysis 등에 학술 기고문이 게재되었고, 38North, War on the Rocks, Le Monde, the Sueddeutsche Zeitung, Forbes 등에 간략한 분석 기사와 의견이 실렸다.

Mason Richey is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South Korea), and Senior Contributor at the Asia Society. Dr. Richey has also held positions as a POSCO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East–West Center (Honolulu, HI) and a DAAD Scholar at the University of Potsdam. His research focuses on the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U.S. and Europea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s applied to the Asia–Pacific. Recent scholarly articles have appeared (inter alia) in Pacific Review, Asian Security, Global Governance, and Foreign Policy Analysis. Shorter analyses and opinion pieces have been published in 38North, War on the Rocks, Le Monde, the Sueddeutsche Zeitung, and Forbes, among other venues.

# Obstacles to and Opportuniti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September 7, 2020

Mason Richey—GSIA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Outline

- A general key to peace
  - Signaling costly trust (Fearon 1995, 1997; Wendt 1999; Powell 2006; Bueno de Mesquita 2010; Lawrence 2020)
- Three challenges
  -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and the US
  - International context
  - North Korean leadership interests and behavior
- Opportunities
  - Open diplomatic pathways
  - Post-Moon government continuity
  - X factor

## I. A Key to Peace

- Within the war contex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evant states (SK, NK, US, China) have both divergent state interests (and leadership interests), and also trust problems
  - Underlying issues: NK nuclear program, mutually perceived threats and hostility (NK rhetoric, US-led sanctions, etc.), NK not a status quo state
- This state of affairs makes reaching peace—from the status quo—unrealized/unrealizable, because...

## I. A Key to Peace

- ... Peace is a *reliable* change of structural relations (away from hostility and belligerence) by concerned states
- Divergent interests mean states don't naturally gravitate toward cooperation
  - Trust problems mean state leaderships have great difficulty convincing counterparts that diplomatic and political promises are credible commitments

## I. A Key to Peace



## I. A Key to Peace

- Consequently, proposed declarations of end of Korean War and intentional statements of peace fail to convince leaderships in Seoul, Pyongyang, and Washington.
  - They are reversible, especially due to change of government in Washington or Seoul (e.g., discontinuation of Sunshine Policy)
  - Violation of spirit of agreement is too easy

## I. A Key to Peace

- Bottom line: Declarations of end of Korean War and intentional statements of peace don't fundamentally alter structural relationship of hostility and threats because they mostly haven't (until now) contained costly signals that parties are willing to enact steps that tie their hands in the future (through significant sunk costs to initial agreements and pathways locking in obligations to future cooperation)

## I. A Key to Peace

- Worse still: Approaches to peace relying on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don't necessarily imply costly signals of future behavior, but do implicate tricky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C (which in turn affects the US-SK CFC) and SK's international legal standing to sign such a declaration ending the armistice (to which SK is not a signatory)
  - This is a distraction from the larger issue of changing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reats and hostility
  - These approaches also tend to frame the peace declaration (and process behind it) in a carrot-stick modality, which supports the logic of measures with reversible costs\*

## I. A Key to Peace

- Key component of political/diplomatic cooperative movement toward peace: Costly signals that tie hands (in the future) and thus commit parties to behavioral pathways that change structural relational threats and hostility
- In practice, this means all parties front-loading irreversible costs/sacrifices while accepting reversible benefits (and/or long-term benefit streams that are back-loaded)
  - Lawrence (2020) uses AF as example of this in a techno-diplomatic context

## I. A Key to Peace

- This is obviously a heavy lift! Sequencing of steps becomes really critical and tricky, and distrust among parties makes even getting to this stage very difficult
  - Indeed a peace process with asymmetrical time dimension (front-loaded costs and reversible/back-loaded benefits) is especially difficult in Korean Peninsula context because of distrust, which is why most efforts use a carrot-stick approach that has symmetrically reversible costs and benefits in which small, low-cost cooperation acts build trust toward higher-order, riskier cooperation
  - But this inducement/coercion approach has failed on both peace and denuclearization



## II. Three Challenges

- Negotiations toward peace (which necessarily includes denuclearization\* because of the inevitable role of the US in such negotiations) require an upfront heavy reliance on trust in credible commitments by counterparties. Pessimism is warranted. This is very, very hard, and very, very unlikely.
- Three challenges...

## II. Three Challenges: (a) Domestic Politics

- Broad, bipartisan domestic buy-in (in US and SK) is necessary basis for routinization and (assuming success) later institutionalization of any peace process/plan/agreement
  - Without bipartisan domestic buy-in, counterparties (NK and China) are unlikely to believe that any peace process/plan/agreement is sustainable/survivable (anchorable in domestic law) after a change of government
- This is very hard. US and SK are highly polarized (US general population less so about NK than SK, but in US domestic politics heavily affect US president's foreign policy agenda)

## II. Three Challenges: (a) Domestic Politics

- In this context, US and SK both need top leadership with ability to unite in a bipartisan way on a major foreign policy issue (NK), so that if government changes to opposition there will be policy continuity
  - NK will demand this for any costly signals/sacrifices it makes; otherwise they will not make these costly signals/sacrifices
  - US had this bipartisan foreign policy outlook most frequently during Cold War, but it has declined dramatically since Clinton presidency
  - SK has not never seen a progressive → conservative or conservative → progressive government change in which NK-related policy demonstrated continuity

*... From where will this bipartisanship and leadership emerge?*

## II. Three Challenges: (b) International Context

- Leaderships of SK, NK, and US all need to be *simultaneously* interested in peace an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competently staffed and with available bandwidth, willing to give working level and top negotiators some autonomy, and not overly distracted/hindered by other issues/crises or political cycles

## II. Three Challenges: (b) International Context

- US and SK leaderships need to have temporally and substantively convergent interests in working on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S	
		US Rep. Pres.	US Dem. Pres.
		= Unlikely	= Possible
SK	SK Cons. Pres.	SK Cons. Pres.	SK Cons. Pres.
	US Rep. Pres.		US Dem. Pres.
		= Possible	= Likely
		SK Prog. Pres.	SK Prog. Pres.

## II. Three Challenges: (b) International Context

- On a strategic level, US and China need to be sufficiently amenable related to coordinate/cooperate on a sub-issue of their rivalry (e.g., the Korean Peninsula)\*
  - Sanctions enforcement by China critical to incentivizing NK to negotiate
  - NK perception that US-China are politically deconflicted critical to US-SK negotiating from position of leverage vis-à-vis Pyongyang

## II. Three Challenges: (c) North Korea

- North Korea is the biggest impediment to Korean Peninsula peace and reconciliation
  - Belligerent revisionist state
  - Illegal nuclear weapon state (incl. violation of UNSCRs)
  - Serial violator of human rights
  - Leadership behavior at odds with national interest
  - Disastrously governed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 II. Three Challenges: (c) North Korea

- ... Therefore changes within North Korea, especially within its political leadership, are necessary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reconciliation:
- The Kim regime will need to be risk acceptant with respect to the logic of costly signaling (both believing the costly signals of US/SK, and making costly signals itself)
- Pressure (economic) on North Korea will need to be a mix of effective, targeted sanctions and natural, observable (for North Koreans) economic dispar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 Too much sanctions pressure will reinforce NK hostility

## II. Three Challenges: (c) North Korea

- North Korean leadership will need internal reform
  - This doesn't mean regime change (necessarily), but at least a long-term incentivization to (and behavior supporting) alignment of leadership interest with national interest

## III. Opportunities

- Trump/Kim summits have opened up the acceptability of negotiated solutions. This has path dependence for future (even under Democratic president).
- SK progressives may (likely will?) win another presidential mandate, rendering more possible continuity on NK peace/denuclearization policy. This could blunt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Moon's inability to build bipartisan support for his NK initiatives.
- X-Factor: Luck will have to be in play also. All of the above factors (domestic, international, and North Korean) will have to be in favorable conditions simultaneously.

# 발표자 Presenter



**김동진**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아일랜드 연구재단 마리 스클로도브스카-퀴리 펠로우  
**Dong-Jin KIM** IRC Marie Curie Fellow,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김동진 박사는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아일랜드 연구재단 마리 스클로도브스카-퀴리 펠로우이며 한반도 평화구축, 화해,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및 아일랜드와 한반도 등 분쟁 경험 국가들의 평화 프로세스 비교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의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축과 시민사회>(Palgrave Macmillan, 2019), <북아일랜드 시민사회와 비폭력 정치행동>(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Ireland, Routledge, 2020, Iain Atack과 공저),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북아일랜드와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여성>(Asia Europe Journal, 2019), <평화 프로세스의 교훈 공유: 북아일랜드와 한국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비교 사례 연구>(Social Sciences, 2018), <한반도 시민사회의 평화구축 역할> (International Peacekeeping, 2017) 및 <적에 대한 원조: 한반도 발전과 평화구축 연계>(Pacific Review, 2016)가 있다.

Dr Dong Jin Kim is Irish Research Council and Marie Skłodowska-Curie Fellow at Trinity College Dublin. His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area of peacebuilding, reconciliatio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mparative studies of peace processes in conflict-affected countries such as Korea and Ireland. He is author of *The Korean Peace Process and Civil Society: Towards Strategic Peacebuilding* (Palgrave Macmillan, 2019) and co-editor of a forthcoming book, *Reconciling Divided States: Peace Processes in Ireland and Korea* (Routledge, 2021). His recent articles and book chapters include 'Peacebuilding and Korean Civil Society'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2020, in print); 'Civil Society and Non-Violent Political Action in Northern Irel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Ireland, Routledge, 2020, co-authored with Iain Atack); 'Beyond identity lines: women building peace in Northern Ireland and the Korean peninsula' (Asia Europe Journal, 2019); 'Sharing Lessons between Peace Processes: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Northern Ireland and Korean Peace Processes' (Social Sciences, 2018); 'Building Relationships Across the Boundaries: The Peacebuilding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Peacekeeping, 2017); and 'Aid to the Enemy: Linking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Pacific Review, 2016).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7 September 2020*

## Reciprocal Empowerment and a Sustainabl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Dong Jin Kim  
IRC and Marie Curie Cofund Fellow  
Irish School of Ecumenics  
Trinity College Dublin



IRISH RESEARCH COUNCIL  
An Chomhairle um Thalghde in Éirinn



CAROLINE  
Collaborative Research Network  
for a Sustainable and Connected Europe



Marie Skłodowska-Curie Actions COFUND Grant Agreement no. 713279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 Peace Process

- tentative rapprochement between parties in a protracted conflict
- practice of building peace through staged negotiations:
  - pre-negotiation
  - management of the process
  - peace accord
  - post-accord reconstruction

Kim (2019)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 Peacebuilding

“Post-Conflict peace-building is an action to identify and support structures which will tend to strengthen and solidify peace in order to avoid a relapse into conflict ...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are required to halt conflicts and preserve peace once it is attained. If successful, they strengthen the opportunity for post-conflict peace-building, which can prevent the recurrence of violence among nations and peoples”. Boutros Boutros-Gali (1992)

“signed papers do not make a difference, and the agreements collapse unless the processes of genuine engagement are created”  
Lederach (2005)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 Criticism of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rchitecture

- External interventions, conducted by Western states
- Universalist and top-down institutional prescriptions
- Too much focus on liberal state-building
- \* Local Turn; Emancipatory Peace; Everyday Peace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 Sharing Lessons

“Each conflict is unique in terms of root causes, history, culture and social development, but some parallels can be found in the challenges of peace processes, such as issues of preventing violence, disarmament, dealing with past atrocities, human rights, building a new political structure, and reconciliation”

“the aim of comparative research on contemporary peace processes is not to produce a panacea for every peace process, but to identify parallels and differences in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each peace process, which can serve as useful lessons for each situation”

Kim (2018)

## Reciprocal Empowe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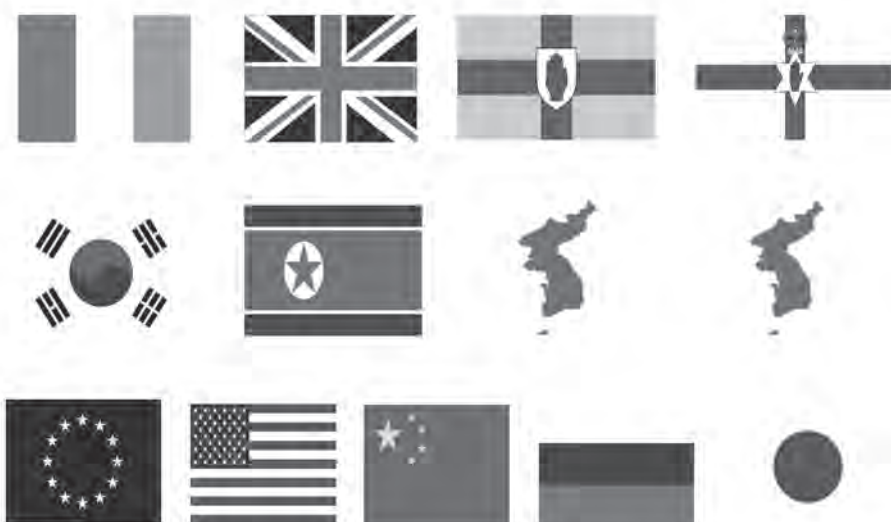
- a discursive style of interaction grounded in reciprocity
-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t actions
- early empowerment attributes of capacity building and knowledge sharing
- solidarity predicated on an egalitarian environment that fosters “mutual respect, mutual attention, mutual empathy, mutual engagement, and mutual responsiveness”.

Darlington and Mulvaney (2003)

## Why Ireland?

- History of Conflict: Koreans - the East's Irish? (Colonization, Division, and War)
- Peace Agreement
- Ongoing process (peace or unification?)
- Peacebuilding research and practice

## Incompatible Goals?



## Peace Process

- The Sunningdale Communique (1973)
- The Anglo-Irish Agreement (1985)
- Ceasefire and the Framework Document(1994-5)
- The Good Friday/Belfast Agreement (1998)
- The St Andrews Agreement (2006)
- The Stormont House Agreement (2014)

## Peace Process

- 7.4 Joint Communique (1972)
- The Basic Agreement (1991) and Agreed Framework (1994)
-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2000)
-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2005)
- The October 4 Joint Declaration (2007)
- The Panmunjum Declaration (2018)
-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 Peace Process

It is for the people of Ireland alone,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s respectively and without external impediment, to exercise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consent, freely and concurrently given, North and South, to bring about a United Ireland, accepting that this right must be achieved and exercised with and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The Good Friday/Belfast Agreement (1998)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 Peace Process

The South and North have agreed to resolve the question of reunification on their own initiative and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who are the masters of the country. Acknowledging that there are common elements in the South's proposal for a confederation and the North's proposal for a federation of lower stage as the formulae for achieving reunification, the South and the North agreed to promote reunification in that directio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2000)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 Peace Process

“It is the firm will of the Irish Nation, in harmony and friendship, to unite all the people who share the territory of the island of Ireland, in all the diversity of their identities and traditions, recognising that a united Ireland shall be brought about only by peaceful means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eople, democratically expressed, in both jurisdictions in the island”  
Article 3 Constitution of Ireland (1998)

“Recognizing that their relationship, not being a relationship as between states, is a special one constituted temporarily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Basic Agreement (1991)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 What Can We Learn Together? (Despite our dissimilarities)

- Sovereignty Issues
- Political Leadership and Institutions
- Geopolitical Condition
- Sociocultural and Economic Aspects
- The Peacebuilding Role of Civil Society

Ki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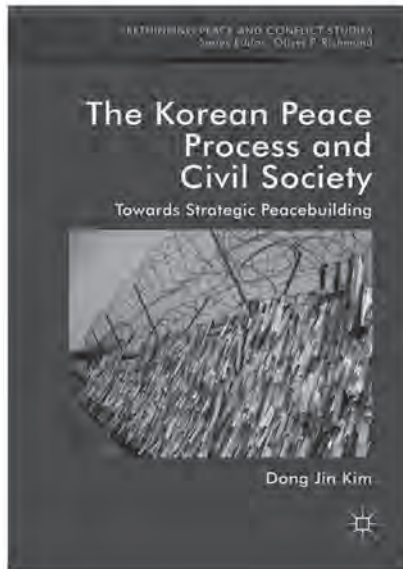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 Questions for a Sustainable Korean Peace Process?

- Would opening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 possible, while maintaining the division, and how?
- Would North and South Korea need to recognise each other's sovereignty before and after a potential peace treaty, and how?
- Would North and South Korea be able to sustain peacebuilding projects, and 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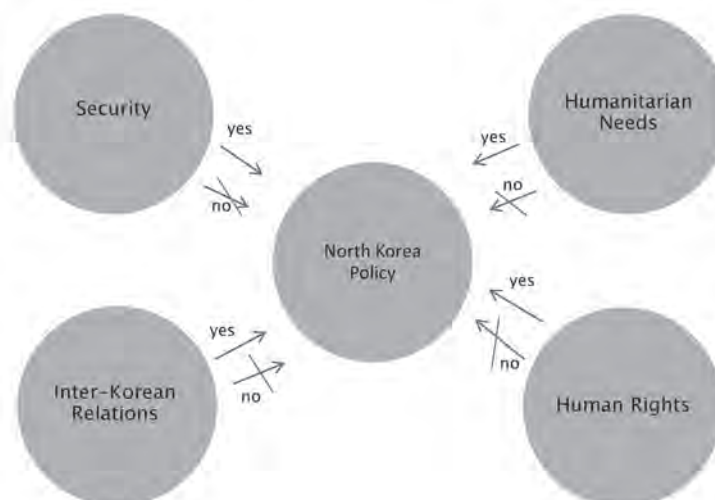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 Strategic Peacebuilding



“a sustainable peacebuilding strategy requires genuine spaces of accessible public engagement and coordination of multiple activities and multiple roles, at multiple levels,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the government-level negotiations, and liberal state-building.” (Kim 2019)

## South-South Confl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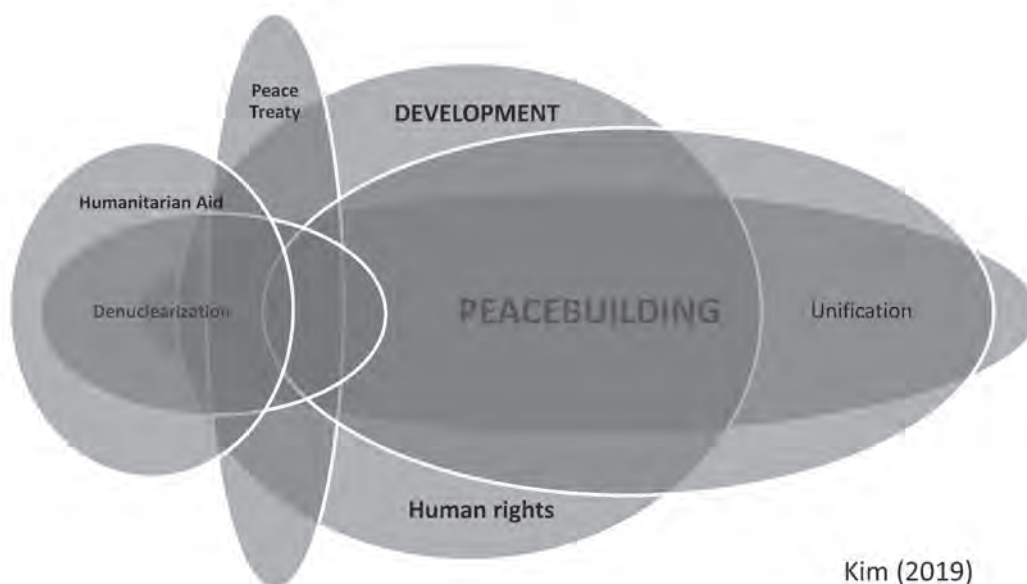


## Levels of Response and Objectives; An Example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 An Example of Strategic Overlaps





# 토론자 Discussant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 독일

**Eun-Jeung LEE** Director of the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이은정 교수는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겸 동아시아대학원 원장으로, 정치사상사와 정치이론, 체제변동과 정치 문화에 관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베를린-브란덴부르크학술원 (구프러시아 왕립학술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었고, 2013년에는 유럽아카데미 (아카데미미아 오이로페아) 정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알렉산더폰훔볼트재단 (1994-1996), 독일연방 공화국 작센안할트주 (1997-1999), 저팬화운데이션 (2001-2002)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펠로우십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통일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Prof. Eun-Jeung Lee, a University Professor with a research focus intercultural history of political ideas, is the Director of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the Freie Universität Berlin;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in Berlin. She is a Member of Academy of Art and Science Berlin-Brandenburg (former Royal Prussian Academy) as well as Academia Europea. Lee has served as a Member of German-Korean Advisory Council for Foreign and Unification Policy (2014-2017). She was Fellow of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at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Halle (1994-1995); Fellow of State Sachsen-Anhalt Germany (1997-1999); Fellow of Japan Foundation at the Aoyama Gakuin University Tokyo (2001-2002).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stowed 2019 Prof. Lee with the Order of Civil Merit (Moran Medal) for her Work in the Field of Peace and Unification.

# 토론자 Discussant



**김연호**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미국

**Yonho KIM**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of Practic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USA

김연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GWIK)의 부소장 겸 연구 교수로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그의 연구 분야다. 저서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이동통신과 민간 교통 서비스>(2019), <북한의 휴대전화: 북한은 이동통신 혁명에 뛰어들었나>(2014)가 있다. 그의 연구는 Wall Street Journal, The Atlantic, 연합뉴스, Libération 등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었다. GUIKS에 오기기 전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미국의 소리 방송의 한국 서비스 담당 선임 기자, 아틀란틱 협의회 (Atlantic Council)의 전환기 한국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Assistant Director로 일하는 등 한반도와 관련하여 워싱턴 정계와 폭넓게 교류했다. 서울대에서 국제관계학 학사 학위를,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Yonho Kim is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of Practice and Associate Director of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e specializes in North Korea's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Kim is the author of North Korea's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Private Transportation Services in the Kim Jong-un Era (2019) and Cell Phones in North Korea: Has North Korea Entered the Telecommunications Revolution? (2014). His research findings were covered by various media outlets, including Wall Street Journal, The Atlantic, Yonhap News, and Libération. Prior to joining GWIKS, he extensively interacted with the Washington policy circle on the Korean peninsula as Senior Researcher of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enior Reporter for Voice of America's Korean Service, and Assistant Director of the Atlantic Council's Program on Korea in Transition. He holds a B.A. and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from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 토론자 Discussant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Jihwan HWANG**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황지환 교수는 현재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 및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정치학과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및 외교부 평가위원, 통일부 및 육군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에서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논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2019), "Will Trump and Kim Make History?"(2018), "월츠(Kenneth N. Waltz)의 핵확산 안정론과 북한 핵 문제"(2018), "북한은 핵실험이후 더 공격적인가?: 현상타파 대외전략과 현상유지 대외정책의 결합"(2018) 등이 있다.

Dr. Jihwan HWANG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Seoul, Korea. He was year-long visiting scholar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in 2017 and also taught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has served as several advisory positions in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Presidential Commission for Unification Prepa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Unification. His publications include "The Paradox of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The Two Koreas after U.S. Unipolarity,"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American Military Policy in Korea," etc. He is a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Session 2-1

## 한반도 평화 비전과 갈등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Paradigm Shift for Peace and Dispute Res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좌장  
Moderator

하영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Young-Sun HA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패널  
Panelists

댄 스미스 SIPRI 소장, 스웨덴  
Dan SMITH Director,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Sweden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ISDP 소장, 스웨덴  
Niklas SWANTRÖM Director,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ISDP), Sweden

빌레 브루머 CMI 프로그램 팀장, 핀란드  
Ville BRUMMER Programme Director,  
Crisis Management Initiative(CMI) – Martti Ahtisaari Centre, Finland

알린 웨어 핵감축 국제의원 네트워크 글로벌 코디네이터, 체코  
Alyn WARE Global Coordinator,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PNND), Czech Republic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Bo-hyuk SUH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2-1)

## 한반도 평화 비전과 갈등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탈 냉전기 '세계화' 또는 '범 지구화'로 인해 인류가 더욱 평화스러운 국제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비록 지난 70여 년간 세계적 차원의 전쟁은 억제되었으나, 국제사회는 국지전, 내전,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무력 충돌을 빈번히 목도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팬데믹 등 새로운 국면의 비평화화 상태가 부각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평화는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 평등, 정의, 환경보호, 번영과 같은 사회의 제반 가치를 통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상태"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인류의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역내 환경과 여건이 상이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 간에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한반도는 전쟁상태에서의 休를 유지하고 남북 간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협력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남북은 아직도 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고, 동북아는 영토분쟁이 첨예하게 얽혀 있으며 나아가 안보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이 부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세션은 세계 평화,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 비전의 연결과 갈등해결을 위한 평화학적 시각에서의 패러다임을 토론한다.

## Paradigm Shift for Peace and Dispute Res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questionable that globalization or internationalization has actually led to a more peaceful environment for humanity in the post-Cold War era. Although further wars on a global scale have been averted over the last 70 ye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requently witnessed different forms of armed conflicts such as local wars, civil wars, and terrorist acts, and new forms of non-peace have emerged, including a worldwide pandemic. Today, peace goes beyond its narrow sense to be defined as a "state where a certain quality of life is guaranteed through social values such as freedom, equality, justic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rosperity." Responding to the threats to the peace of humanity requires not only cooperation at the global level but also effort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However, different regions are faced with distinct environments and conditions in their journeys toward peace. In Northeast Asia,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have been intensifying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The two Koreas in particular may have been at a ceasefire since 1953, bu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m still exists, making the Korean Peninsula one of the regions that need cooperation for peace most urgently. Although military confrontation contin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mired in territorial disputes, no efficient approach has been taken to ensure peace and the stability of the security order in the region. By taking these circumstances into account, this session discusses paradigms that are needed to resolve disputes and align the vision for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ology.

# 좌장 Moderator



하영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Young-Sun HA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하영선 이사장은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2015),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2012), 《복합세계정치론》(2012), 《북한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등이 있다.

Young-Sun Ha i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at the East Asia Institute(EAI) and Professor Emeritu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Ha served as a member of senior advisory group for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preparation committee and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Advisory Group. He received his B.A. and M.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olds a Ph.D. i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He was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80-2012), He was a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at Princeton University, and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is recent books and edited volumes include: World Politics of Love: War and Peace (2019), A New Perspective on the Diplomatic History of Korea: Tradition and Modernity (2019), U.S.-China Competition in the Architecture of a Regional Order in the Asia-Pacific (2017) , Korean Peninsula among Big Powers 1972 vs 2014 (2015 ),Young-Sun Ha on International Politics: A Collection of Columns from 1991 to 2011 (2012), Complex World Politics (2012),The Future of North Korea 2032: The Strategy of Coevolution for the Advancement (2010).



# 패널 Panelist



댄 스미스 SIPRI 소장, 스웨덴

Dan SMITH Director,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Sweden

댄 스미스 소장은 2015년부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안보와의 관계, 핵전략, 군축, 세계정치, 분쟁 유발요인 등 오랜 기간 분쟁 및 평화 이슈들에 관한 광범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댄 스미스는 4년간 유엔평화구축기금 자문그룹에서 일했으며, 두 차례 의장을 역임하였다(2010-2011). 그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평화구축 노력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2017년 중반까지 맨체스터 대학 부설 인도주의 분쟁 대응 연구소(HCRI)의 강사로 평화와 분쟁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www.dansmithsblog.com](http://www.dansmithsblog.com)에서 정치지형, 전쟁과 평화, 중동지역 관련 분석과 국제정치 관련 블로그를 연재하고 있다.

Dan Smith (UK) is the Director of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ince 2015. He has a long record of research and publication on a wide range of conflict and peace issue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insecurity to nuclear strategy and arms control, as well as global politics and conflict drivers.

Smith served four years in the UN Peacebuilding Fund Advisory group, two of which (2010-2011) were as Chair. He has an intimate knowledge of how peacebuilding works (or doesn't) in a wide variety of countries and regions. He was part-time Professor of Peace and Conflict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attached to the Humanitarian and Conflict Response Institute from January 2014 to mid-2017. He is the author of successive editions of atlases of politics, war and peace, and the Middle East and blogs on international politics at [www.dansmithsblog.com](http://www.dansmithsblog.com).

---

## A security framework in Northeast Asia

Dan Smith

Director,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 1 Security challenges and dilemma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 highly visible:

- Continuing incid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a context where no peace settlement has yet been reached;
-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responses to it;
- Military force build-up on more than one side;
- Uncertainties and disputes about territory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 Still unsettled dispute between Japan and Russia over Kuril Islands;
- Further afield, continuing dispute and incidents in the South China Sea.

§ 2 These challenges are particularly difficult to resolve because of the toxic nature of current geopolitical relations. While the first two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cluded some major steps forward for peace and arms reduction, the third decade of the post-Cold War era has seen multiple negative developments. These make it harder to see a way clear to peaceful settlement of issues in troubled regions as the Gulf, South Asia and Northeast Asia.

§ 2 There are grounds for considerable uncertainty about the best way to approach conflict resolution in the face of these issues:

- whether to start with specific issues or go immediately to the general problem, whether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or the broader region;
- whether to focus on resolving disputes or on finding common ground between as many actors as possible;
- whether to seek small steps to begin with and build to bigger things or to start at the highest level of ambition, on the grounds that nothing is gained by avoiding the big problems.

§ 3 Similar issues had to be addressed in the European context in the 1970s. The approach taken after a considerable amount of diplomatic work was simultaneously to undertake talks on mutual reductions of conventional forces (i.e., non-nuclear) and to establish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To what extent does this approach offer something in the Northeast Asian context?

§ 4 When looking back to that period and considering its relevance for contemporary security politics, analysts often make two errors. They forget the force reduction talks and they misinterpret the CSCE.

§ 5 The force reduction talks are easy to forget for they never produced agreement. In fact, the NATO and Warsaw Pact powers never agreed on a conveniently short title for the talks, which NATO always referred to as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talks, a title that the USSR rejected. However, the very fact that the issue of the conventional force balance was recognised and addressed - even if ineffectively - underlined the notion that the military problem was risky and needed to be managed.

- § 6 The second error is to read back from the end of the Cold War and depict the CSCE as a measure designed to end the confrontation of East and West. It was not. It was intended to manage what was expected to be a continuing confrontation. A decade before glasnost and perestroika in the USSR, no end to confrontation was foreseen. What was hoped for was a safer form of confrontation. That is where we are now in Northeast Asia.
- § 7 In the end, one may wish for an ambitious structure of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ut there is a case for something less ambitious, a framework of contact and exchange that could be a step towards managing disputes, rivalry and confrontation at a lower level of risk both for the region and the world. This could take the form of a continuing conference among the major security actors - the five regional states plus the USA. Like the CSCE, it could discuss confidence measures such as advance warning of manoeuvres and secure hotlines. Whether it moved from there to something more far-reaching would become clear in time. It would be valuable even if it did not pave the way for more far-reaching measures - and invaluable if it were to do so.

## 패널 Panelist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ISDP 소장, 스웨덴

**Niklas SWANSTRÖM** Director,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ISDP), Sweden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박사는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소장이자 공동설립자이다. 스완스트롬 박사는 폴 니체 고등국제학대학 외국정책연구소(SAIS)의 연구원이기도 하다. 박사의 전문분야는 분쟁 예방, 분쟁 관리 및 지역 협력, 중국 외교정책과 동북아시아 안보, 일대일로 정책,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과 동 위협이 지역/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협상이며,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Dr. Niklas Swanström is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and one of its co-founders. He is a Fellow at the Foreign Policy Institute of th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His main areas of expertise are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Chinese foreign polic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its effect on regional and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negotiations. His focus is mainly on Northeast Asia, Central Asia and Southeast Asia.

## Dispute Resolution in the New Era: The strong do as they want and the weak what they must?

Niklas Swanström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 Discussion points for Session 3

It has never been more apparent than it is today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is still in the hands of a select few strong nations, and that the dependency weaker states have on the actions and interest of these more powerful states has not declined.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has also raised the need to look at how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n be constructed by other means than Great Power involvement. It is beyond doubt that the working practice of Great Power involvement and positive engagement is useful and constructive when in place; however, it is also evident that individual conflicts can easily be hijacked to increase bilateral tensions and when, as today, China and the U.S. have entered a conflict phase it is difficult to act cooperatively. This is where multilateral solutions are needed to come into play. Mult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has neither a prominent past or a future, but it is the only alternative to a strategy where China and the U.S. can cooperate.

The growing tension and power struggle between China and the U.S. have put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in an awkward position. There is very little common ground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neither would like the other to dominate any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question, therefore, remains how can peace be built despite this?

The argument should not be made that China and the U.S. are on an indefinite collision course, but that their relations will continue to be unstable, and this will make any regional attempts for peace more difficult. The unstabl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 has also reinforced the deadlock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aided North Korea's ability to maneuver skillfully between the political agendas of China and the U.S. As long as there is a global order in flux there will be tensions that complicate "the smaller" questions. There is no short-term solution to the current flux in the international order which calls for multilateral solutions. Calling for a resolution of the conflict with these tools are to overstretch it, and the importance of such initiatives will be to hold dialogue open and create alternative avenues of engagement.

It needs to be understood that there is very little interest within North Korea to engage in any process that does not entirely guarantee their demands on lifting sanctions and consolidating their position as a nuclear power. The current geopolitical climate has very much reinforced their position. The only time North Korea was willing to cooperate and discuss (not necessarily conduct) on compromises was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re in agreement and had a robust and unified policy against North Korea. This is not to sa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or could, pressure North Korea into a compromise, as China would not accept too much pressure on Pyongyang, but without a common position there are very few reasons for North Korea to engage in dialogue.

---

What could then trigger North Korea to engage in a long-term peace dialogue on the Korean Peninsula, disregarding the Great Power situation and the changing world order? Human Security could be one of these important catalyst points – particularly when one considers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natural disasters, and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all of these issues are in desperate need of more attention. However, by focusing on and developing these areas, there is also the inevitable concern from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society at large will change and demand greater transparency and openness. It could be more relevant to focus on security areas that do not touch traditional security or security related to ideological institutions. COVID-19 and disaster management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could be areas in which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find inroads into promoting dialogue with North Korea. Would this be enough to build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hardly be sufficient, but it could create a platform for dialogue. That being said, it could also strength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of North Korea, which could be deemed counter intuitive to the overarching goal of reducing the threat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urrently pose. In the areas of Human Securit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South Korea can carve out a space for dialogue, as it would not directly clash with the interest of the Great Powers or international sanctions. It would also not be in the interest of South Korea to lift sanctions and accommodate North Korean interest, as long as denuclearization and engagement expectations are not met.

It is essential to realize that these "soft" issues could only function as the initial steps to open for dialogue. For a resolution of the conflict, China, and particularly the U.S., would need to offer security guarantees for the Pyongyang regime. Nuclear weapons should not be used as bargaining chips, as they are sometimes characterized as, but as security providers, and as long as there are security threats, North Korea will maintain its nuclear ability and, potentially, beyond that. For the leadership in Pyongyang, economic development is not the main priority; it is security for the North Korean regime. North Korea would prefer to reduce "hostile" troops, strategic weapons, military exercises and so on, but that very unilateral reduction of capacity would also diminish the North Korean interest in any reduction of its nuclear program. South Korea has to carefully balance between accommodating North Korean demands and decreasing their willingness to further negotiation whilst increasing long-term security on the Peninsula.

It would be premature to assume tha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resolved in the short-term, and it certainly cannot be done without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U.S. and China. In the short to medium-term it will be a question of effective management by multilateral coalitions of the willing, possibly initiated and even lead by South Korea. Such initiatives might even be more dealing with the management of expectations. Therefore, it will be imperative to create cross-Peninsula cooperation in areas of less sensitivity that could bridge more fragile issues over time in cooperation with like-minded nations. Great Power relations will continue to be a part of the Peninsula equation, as it is in the interest of North Korea to involve them to maximize its leverage, but alternative channels are necessary when these channels are closed down. Multilateral coalitions of the willing could function as these providers, often lead by South Korea, but again we should manage our expectations what these could accomplish. These attempts could at best be seen as reinforcing and strengthening the overarching negoti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major parties in the conflict.

# 패널 Panelist



**빌레 브루머** CMI 프로그램 팀장, 핀란드

**Ville BRUMMER** Programme Director,  
Crisis Management Initiative(CMI) – Martti Ahtisaari Centre, Finland

빌레 브루머 박사는 2013년부터 CMI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역별 CMI 프로그램의 설계와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CMI에 입사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개발 부서를 이끌었다. 브루머 박사는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아시아 지역의 분쟁 예방/해결 프로세스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다수의 국제 팀을 맡아 자문했으며 분쟁 분석, 프로세스 설계 및 퍼실리테이션, 분쟁 그룹에 대한 신속 관여, 국제기구를 위한 자문/지원 서비스 등 조정 프로세스와 관련된 여러 업무에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CMI에 입사 전에는 학계와 민간 컨설팅업체에서 근무했다. 각종 학술지와 서적에 다수의 글이 게재되었고, 여러 대학에서 협상과 의사결정에 관해 강의했다. 빌 브루머 박사는 헬싱키 소재 알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Dr. Ville Brummer has been Programme Director at CMI since 2013, and has the overall responsibility for leading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MI's programmatic work in different regions. Brummer joined CMI in 2008, and led our Research & Development unit during 2010 -2013. Dr. Brummer has extensive experience in several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processes in Africa, the Middle East and Eastern Europe and Asia He has led and advised various international teams and has in-depth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on different tasks related to mediation processes, including conflict analysis, process design and facilitation, early engagement with conflict groups, and advisory and support services for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and NGOs. Prior to joining CMI, Dr. Brummer worked in academia and in private consultancies. He has published widely in various journals and books, and has lectured on negotiation and decision-making in several universities. He has a doctoral degree from Aalto University in Helsinki.

---

## New global power balance and opportunities in Korean peninsula

**Dr. Ville Brummer**

Programme Director, Crisis Management Initiative

---

The current sentiment among the leading foreign policy analyst and media seem to suggest that the world again is yielding towards polaris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wo great powers. The emerging narrative of a new Cold War, this tim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taking a foothold. Although recognizing that allegories can be deceptive and too simplifying, many see these two great powers competing now on almost every possible level, which again is leading to stronger divide of the world into fault lines. Th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 product and the last remnant of the Cold War, is exceptionally susceptible for the negative effects of the new great power struggle, as the US and China are also stakeholders in the original conflict.

Too quick acceptance of the idea of a new bipolar world order, however, leaves a whole array of actors, issues, interests, and developments in the global politics unaccounted for. As a countering act, there seem to be increasing natural resistance among the countries who are asked to make either/or choices between the two competing superpowers. This is visible among the countries who are keen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system of global governance, as well as among those who are currently building their strategies more around the national tendencies. In both cases, a simple divide and forced alliances do not serve their own interests nor provide tools for addressing the issues they face. The pandemic has perhaps made this more evident than ever before, as it has at the same time strengthened the trend of nations seeking greater self-reliance as well as led some actors for demanding more effective multilateral responses. In the context of peace-making effort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us important to analyse, what kinds of opportunities these types of "third way" strategies could provide for the process both in terms of individual choices of different countries as well as in the context of broader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In general, acknowledgement of the idea that the conflict resolution cannot depend solely on the great powers has been one of the building blocks of the peace-making efforts in the Korean peninsula for a long time. Especially, this has been illustrated in the process of seeking models for wider security architecture and regional structures in the East Asia. However, it is important to analyse, what kinds of opportunities the new global power-balance, and related attempts for both, building stronger self-reliance and strengthening multilateral structures could provide. Instead of traditional exclusive, definite and rigid structures, more intertwined networks for cooperation could be built. In practise, this would mea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different spheres of interests like trade, security and culture, by various actors from states organs to NGOs, on several different levels. Cooperation and networks should not be geographically limited either. This type of diversified set of options, again, w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countries to test different models of cooperation and seek politically feasible ways of cooperating also with those actors, who earlier have been portrayed as enemies. In other words, rather than trying to agree on rigid structure from the beginning, new global structures would provide several options for building a process aiming to strengthen regional cooperation.

This kind of multilateral and multifaceted approach would also help in addressing questions related to the human security. Narrowing dow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a matter between two countries, DPRK and the USA has led to the situation, where dialogue has been dominated by the dichotomy of sanctions versus denuclearisation, leaving a wide array of topics unaddressed. And at the worst, inability to solve the questions related to denuclearization and sanctions, have hindered the attempts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human security, which would provide an excellent base for finding mutually beneficial elements of cooperation and seeds for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here is thus



a need to create spaces, where various actors could analytically discuss the potential of human security issues in solving the conflict on the peninsula. Same kind of analytical space should be given for the contemplation of different regional cooperation structures and models.

Korean peninsula and related peace-making efforts include major strategic interests and fundamental principal issues. However, it also includes strong symbolic elements, both at the international arena as well as internal politics of concerned countries. In the past, failures of moving forward have been often influenced by inability to balance between the two spheres, strategic weight and symbolism. In the past, for example, US administration have been rather effective in building approaches for addressing the strategic questions at the analytical level and through the discrete channels of communication but have not found effective ways of managing the symbolic elements at the public sphere. During the last four years, on the contrary,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taken exceptional steps in addressing the symbolic elements of the process in form of public summits but have found it difficult to fully address the strategic questions at the appropriate level. Hopefully, lessons learned from both approaches can be brought into the future strategies to design a multi-layered approach, wher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rust-building, strategic thinking and public diplomacy can be found.

## 패널 Panelist



**알린 웨어** 핵감축 국제의원 네트워크 글로벌 코디네이터, 체코

**Alyn WARE** Global Coordinator,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PNND), Czech Republic

알린 웨어는 평화, 분쟁해결, 국제법, 군축,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교육가이자 정책개발 전문가이다.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의원 네트워크의 글로벌 코디네이터, 핵무기에 반대하는 국제변호사 협회의 컨설턴트, 세계미래위원회의 평화/군축 프로그램 디렉터, 바젤평화사무소의 디렉터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Abolition 2000, 평화와 군축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원하는 UNFOLD ZERO 플랫폼, 핵무기 예산, 핵무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 자원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활용되도록 촉구하는 'Move the Nuclear Weapons Money' 캠페인 등 다수의 국제적인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공동 설립하였다. 알린 웨어는 UN 국제평화의 해 상(UN International Year for Peace Award), 바른 생활 상(Right Livelihood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여러 차례 지명되었다.

Alyn Ware is an educator and policy development professional focusing on peace, conflict resolution, international law, disarma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e serves as the Global Coordinator of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Consultant for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Peace and Disarmament Program Director for the World Future Council and Director of the Basel Peace Office. He has co-founded a number international projects and initiatives including the Abolition 2000 global network to eliminate nuclear weapons, UNFOLD ZERO platform to advance United Nations initiatives for peace and disarmament, and the Move the Nuclear Weapons Money campaign which works on reducing nuclear weapons budgets and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nd re-directing these to impact invest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lyn is a recipient of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UN International Year for Peace Award and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has been nominated a number of times for the Nobel Peace Prize.

## Looking beyond the nuclear weapons wall: Achieving peace and security without nuclear deterrence

Presentation by Alyn Ware

The security of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ppears to be inter-twined with nuclear deterrence: The only nuclear weapons ever to be used in wartime were used against Japan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During the Cold War, North-East Asia became a region of super-power rivalry between the nuclear armed powers - USSR, USA and China. And, despit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reliance on nuclear weapons for security continues, either directly by the nuclear weapons possessors China, North Korea, Russia and the USA, or indirectly through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relationships with Japan and South Korea.

These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policies provide a very unstable form of security. They stimulate animosity and mistrust between countries. They require a willingness and operational readiness to use nuclear weapons in order to make nuclear deterrence credible. And in times of high tension, such policies and practices could lead to a catastrophic nuclear exchange through miscalculation, accident or by infiltration of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s by a malicious third party.

The risks of failure are known - but no one State is ready to unilaterally give up nuclear weapons, as this would put them at a disadvantage to the others, and could lead to aggression against them. The nuclear stand-off is like the classic prisoners' dilemma from games theory, where the competing players choose to compete, resulting in a lose-lose outcome because a unilateral choice to cooperate would lead to losing and the other player winning.

This is why none of the six key players in the region -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or the USA have joined the ne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negotiated in 2017 by the United Nations (and nor will they be likely to join it). To do so would require unilaterally giving up nuclear deterrence with no security guarantees in return.

So is the region doomed to perpetuating this nuclear standoff until it inevitably turns into a nuclear war? Pessimists would say yes. Optimists would say no. Pragmatists would say, not if we adopt a different paradigm to build better and more sustainable security.

What is that paradigm? It is not new. It is not hard to fathom. It is the paradigm of focusing on how to achieve win-win for security, i.e. security for all,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security for one-self or ones own country.

As a peace educator I have played the prisoner's dilemma game many times with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using money as the symbol for security. Most times the students fall into the us-versus-them paradigm. They try to beat the other players and everyone starts losing money. But they eventually work out that to win, they have to break out of their ego-centric approach and forge cooperation with the other players. Often they have to establish 'laws' and mechanisms to ensure implementation of such cooperation.

How does this play out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By focusing on diplomacy, conflict resolution, cooperation and the use of international law, rather than the threat or use of force, to achieve security.

Much of this is laid out in the UN Charter. Article 2 prohibits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quires Member States to resolve their international conflicts through peaceful means. Articles 33-36 of the UN Charter outline a range of approaches that should be taken by states in order to implement these obligations, including through e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resort to regional agencies or arrangements, or other peaceful means. The UN provides assistance to states to use these approaches. And the UN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order to provide a way to resolve conflicts through judicial means if diplomacy fails.

These methods are very successful and have assisted many states to resolve serious conflicts with each other. Examples of these include the Nuclear Tests Case (1974), Nicaragua v US (1981), UN mediation on the French bombing of the

---

Greenpeace boat in New Zealand (1986), Chad v Libya (1994) and Costa Rica v Nicaragua (2009).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 a number of additional common security mechanisms have been established at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cluding a number of courts/tribunals, treaty bodies and regional political bodies. These include, for example, the Law of the Sea Tribunal, which was recently used by Philippines to address a dispute with China over disputed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in the area of nuclear weapons, most of the Southern Hemisphere and some of the Northern Hemisphere is now covered by nuclear-weapon-free zone treaties, where the territorial states have given up the option of nuclear weapons and have gained security guarantees from the nuclear armed States in return.

So when we turn our focus back to North East Asia, we can suggest, with credibility, that a common security framework could be applied to help build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nuclear weapons in this region. This framework has worked in other regions and could also work in North East Asia.

What would this imply?

Firstly, on the nuclear weapons issue, it would need all of the states concerned to phase out their reliance on nuclear weapons in the region, rather than expecting one or other state to do so unilaterally. The other regional NWFZ treaties provide a model of how this could be done. In order to adapt to the unique circumstances of North East Asia, a 3+3 Model for a NWFZ has been proposed, and has found cross-party support from parliamentarians in both Japan and South Korea, as well as interest from diplomats from all six countries.

Secondly, with regard to the other security issues, the framework implies a negotiated,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not one based on threats, provocative actions and ultimatums. I look forward to the other presentations and the dialogue on what are, or could be, the specific measures to fulfil such an approach.

# 패널 Panelist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Bo-hyuk SUH**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서보혁은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이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북정책에 관해 오랜 기간 여러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자문을 해오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공편, 근간), 『한국인의 평화사상 1, 2』(공편), 『한국 평화학의 탐구』,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평화운동: 이론·역사·영역』(공편), 『세계평화사상사』(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공저) 등이 있다.

Mr. Bo-hyuk Suh is a Research Fellow of the Peace Research Division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Dr. Suh was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expert adviser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Dr. Suh majors in political science, especially in the peace and human rights issue in the context of protracted conflict. He has been advising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n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His recent writings include Peace Studies from Korean Perspectives (Korean, 2019), Korean Peace Thoughts (Coedited, Korean, 2018),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2016), Division Violence (Coedited, Korean, 2016), Asia-Pacific between Conflict and Reconciliation (Co-authorship, 2016), and Peaceful Transition of Conflicts and Korean Peninsula (Coedited, Korean, forthcoming).

## 한반도 평화 비전과 갈등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서보혁 (통일연구원)

Bo-hyuk Suh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 질문1.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국민안전 자원 확보를 위한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자원 및 식량 주권의식도 비등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강대국의 지도력 한계로 다자협력이 난관에 처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기존의 안보, 경제문제에서 격화되고 있고 가치·이념으로 변지는 양상이다. 다만 그런 현상을 상쇄하는 현상으로서,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의 분쟁 중지 호소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응답과 각국의 코로나 대응으로 패권 경쟁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련있는 국가들의 국내정치적 여건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no deal) 이후 대화 중단에 이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우선, 국경 봉쇄 등으로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난망하다. 미중관계가 기존 경쟁 영역들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서도 갈등을 보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중관계 변수는 긍정적이지 않다. 반면에 반전평화 및 국제협력 여론, 그리고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로 남북협력의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다. 현재는 미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관련국들이 상황을 관망하며 협상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한국 대통령으로 최초 언급하였다. 문 대통령은 위 연설에서 인간안보를 네 번 언급했는데, 각각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의 중심 화두, ② 군사안보를 초월한 확장된 안보 개념, ③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④ 새로운 남북협력 과제로서 인간안보를 제시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코로나 대응에서 생긴 자신감, 새로운 시각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제75돌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인간안보 협력을 제기하면서 남북 인간안보 협력을 "평화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로 정의했다.

남북 인간안보 협력은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북핵문제가 공전 상태에 있는 조건에서 다음 몇 가지 방안으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판문점·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식량, 보건, 산림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를 여는 일이다. 둘째, 한국정부가 WFP/FAO, UNICEF 등을 통해 진행하는 대북 지원 및 협력을 꾸준하게, 그리고 확대해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셋째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남북 물물교역과 제3국 및 국제기구를 통한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일이다. 넷째는 지식공유사업을 벌여 제재를 피하며 남북협력을 높여나가는 일이다. 특히, 남북이 직면한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영농기술 및 품종 개발, 남북 강원도의 농업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DMZ 내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 농민들이 공동농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을 통해 긴장완화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사실상의 통일 체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질문3.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수립 관련 이슈는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부터 경계 획정과 평화지대 설치, 안전보장과 비핵화, 군비통제, 평화관리기구, 역대 다자안보협력, 남북통일 등 여러 가지이다. 이들 이슈들에 대한 북한, 중국, 미국 등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은 수렴되지 않고 차이가 크다.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에서 4자로 수렴되는 현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슈에 걸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협정 당사자 문제도 완전한 입장 통일은 아니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평화체제 수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슈별로 양국의 차이는 있지만 분단체제 유지를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현상타파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차이점들 가운데서도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북한과 중국은 유사한 입장들이 적지 않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선후관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유엔사령부 문제에 관해 북한과 중국은 상당히 공통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에게 도전으로 다가갈 수

있고, 한국으로서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상이한 입장들 앞에서 한국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국제협력의 조화라는 기초 하에 입장 차이를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당면 과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병행 추진할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통일 환경의 조성,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기회의 장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국의 위상 증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질 수 있고,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서 (한일·한중 간 영토분쟁 이슈와 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위협 요소들도 부상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이 협력에 나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구심력을 형성하고 남북협력이 주변국들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질문 4.

장래 한반도 질서의 시나리오는 분단폭력, 분단평화, 통일폭력, 통일평화 등 네 가지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경우는 통일평화인데, 어느 경우이든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 대전제는 한반도 통일이 분단보다 세계평화와 역내 안정과 번영에 훨씬 더 유익함을 설득하는 일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논의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와 다자회담을 병행하는 것이 적합한데, 다자회담은 4자회담(남북미중)이 알맞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역내 지지를 바탕으로 전개해나갈 방안으로는 첫째, 한반도 평화만이 아니라 통일문제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조화시키는 일이 제일 과제이다. 둘째, 그럼에도 독일분단과 달리, 한반도 분단이 전범국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냉전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공유하는 일은 한반도 통일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한반도 통일이 특정 체제로의 급격한 통합이 아니라 역내 안정을 기하며 남북 간 점진적이고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수렴해가는 길을 밟아가야 할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결과로서의 통일을 우선하고, 전자가 후자를 잘 준비하는 방식이 남북과 국제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통일의 길이다.





# Session 2-2

##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시민사회의 대응

### Actions of Global Civil Society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평화공공외교협의회  
Council for Peace and Public Diplomacy(CPPD)

- 좌장**  
Moderator
- 이기호**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장, 사회혁신대학원 교수  
**Kiho YI** Professor & Director,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at Hanshin University
- 발표자**  
Presenters
-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협력국장, 목사  
**Seung-min SHIN** Director, Ecumenical Relations,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김경묵** 와세다대학교 교수, 일본  
**Kyungmook KIM** Professor, Waseda University, Japan
- 토론자**  
Discussants
- 김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담당  
**Chanho KIM** International manager, Korea Democracy Foundation
- 임다빈**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장  
**Dabin YIM** Representative,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선임간사  
**Mee Jee SHIN** Senior Coordinator, PSPD
- 댄 가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교육전문위원  
**Dan GUDGEON** Peace Education Project Manager, Korean Sharing Movement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2-2)

##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시민사회의 대응

평화공공외교협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시민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세션을 준비하였다. 글로벌 시민사회 대응은 보편적 틀 내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이전과 이후를 함께 생각하는 동북아 평화체제 또는 아시아/글로벌 평화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공감대 기반조성을 위한 연대활동에 대해 토론하며 국가 중심의 안보 외교가 아닌 시민사회가 평화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과 전환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75년의 분단체제를 통해 재일교포 세대는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 청년은 어떻게 분단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통해 아시아 젊은 세대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한다.

## Actions of Global Civil Society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Council for Peace and Public Diplomacy(CPPD) is organizing a conference session titled 'Actions of global civil society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The actions of global civil society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is not only to realize the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ut also to reflect the divided system in Northeast Asia further in Asia since WWII and to imagine possible peace regime in this area overcoming such divisions and hostilities. To strengthen these efforts for peace with solidarity of citizens beyond borders, this session focuses the diverse global/regional efforts done and in process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with critical views on the state dominated security diplomacies. This session expects that such discussions could cultivate the basic common ground and solidarity among people in Asia beyond Korean peninsula. Also through the session CPPD would like to explore practical alternatives how young and old generations as well as people in different space including Korean diaspora could cooperate to build new regional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vercoming the division structures deeply embedded in Asia more than 75 years building common futures with imaginations for peace initiated by civil society.

## 좌장 Moderator



**이기호**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장, 사회혁신대학원 교수

**Kiho Yi** Professor & Director,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at Hanshin University

이기호는 현재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센터장으로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해왔으며 지역일꾼과 청년세대들에게 아시아평화를 주제로 현장학습을 이끌어왔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하였고 와세다대학 방문학자로 아시아 시민사회를 주제로 연구활동을 하였다. 크리스찬아카데미 연구위원, (사)평화포럼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원장으로 도시혁신과 사회혁신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으며 로컬을 중심으로 아시아 평화를 구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Yi Kiho is a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Social Innovation Business and the executive director of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in Hanshin University, South Korea. He has been leading the Asia Peace program at the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with training young generation for Asia and Peace studies and collaborations on research and educational programs with various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beyond borders. Previously, Yi worked as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 Peace Forum from 2003 to 2006, focusing on peace and cooperation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n cooperation. He also served as an advisory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the Northeast Asia Initiative during the period of Roh Moo-hyun government. From 1999 to 2002, Yi was a visiting scholar at Waseda University in Japan, looking at the local/transnational civil movement and its links to peace in East Asia.

# 발표자 Presenter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협력국장, 목사

**Seung-min SHIN** Director, Ecumenical Relations,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신승민은 개신교목사이며 1998-2005년까지 세계기독교학생총연맹 아시아태평양(WSCF-AP) 총무를 역임했으며, 2005-2012년까지 한국기독교장로회 (PROK)에서 국제관계를 담당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의 화해통일국과 국제국을 담당하면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포함한 전 세계교회가 선교의 중심 의제로 채택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친 한반도평화조약 세계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2020년 7월에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종단과 함께 "민의 한반도 평화조약"을 발표하는 국제협의회를 주선하였다.

Shin Seung-min is a Protestant pastor and served as general secretary of the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Asia-Pacific Region (WSCF-AP) from 1998 to 2005, and was in charge of Ecumenical Relations at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PROK) from 2005 to 2012. From 2015 until now, he has been in charge of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Desk and Ecumenical Relations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cooperating with church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His main role is to relate the Korean Church with the global ecumenical community for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2016 to 2019, he led the NCCK's global campaign for a Korea Peace Treaty, and on July 23 he organized an International Convocation to declare a People's Korea Peace Agreement which was supported by more than 100 denomination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world.

# **NCCCK Campaign for a Korea Peace Treaty**

**2015-2020**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Korea Peace Treaty (KPT) Campaign Background**

- **2013 WCC Busan Assembly stated**, “Embark upon a universal campaign for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bringing an end to the state of war”
- Submission of an appeal to President Park on July 2015
- NCCCK approved a draft of a KPT on April 2016

## KPT Campaign Objectives

- 1) To raise awareness for the urgent need of a peace treaty & a sustainable peace system among the people in Korea and the world
- 2) To deepen solidarity with global ecumenical partners
- 3) To persuade the concerned states of a KPT among politicians

## 2015 KPT Campaign

Submission of the KPT petition (signed by 12,900) to President Park on July, 2015



# 2016 KPT Campaign in the USA

July 18-28, 2016 /LA, Chicago, Indianapolis, Washington DC  
In Los Angeles

Meet with Dr. John Cobb



Street Campaign



# 2016 KPT Campaign in the USA

NCCCUSA & NCCCK - Washington Appeal

- 1) Dialogue rather than sanctions
- 2) Ending arms race and denuclearization
- 3) Promoting civil exchange
- 4) Armistice to peace treaty

Meet with AP Comm. of House of Representatives



Robert King, NK HR Ambassador





## 2017 KPT Campaign in Europe

### United Kingdom

Meet with Lord Leslie Griffiths at the House of Lords in London



## 2017 KPT Campaign in Europe

### Scotland

Reconciliation Worship with the Korean War Veterans



# 2017 KPT Campaign in Europe

## Germany

Joint Worship of KCF & VCCK at Leipzig/WCRC General Assembly



# 2018 KPT Campaign in NE Asia

## Japan

Meet with NCC Japan in Tokyo



# 2018 KPT Campaign in NE Asia

## Japan

Meet with Parliament Members in Tokyo



# 2018 KPT Campaign in NE Asia

## Korea

Meet with Parliament Member / Lee In Young (Chairperson of the Leading Party)



# 2019 KPT Campaign in Russia, Turkey and Greece

## Russia

Meeting with Parliament Members



# 2019 KPT Campaign in Russia, Turkey and Greece

## Constantinople

Meet with Metropolitan Genadios of Sassima, WCC Vice-Moderator



## 2019 KPT Campaign in Russia, Turkey and Greece

### Constantinople

Meeting with Ecumenical Patriarch, H.A.H Bartholomew



## 2019 KPT Campaign in Russia, Turkey and Greece

### Greece

Metropolitan Nikolaos



## 2020 KPT Campaign at the DMZ

### Declaration of People's Peace Treaty

- To end the Korean War and realize a Korea peace treaty
- To heal the wounds of the war and open a new era of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 To reflect on the five years peace treaty campaign of the NCKK and articulate on a new vision for a peaceful Korea together with ecumenical partners and civil society
- To appeal for the urgent need of a Korea peace treaty by declaring "A People's Korea Peace Treaty"

### Declaration of People's Peace Treaty

- When: July 15 (Arrival)-20(Departure)
- Venue: Seoul, DMZ and Kosung (East Coast)
- Participant: Total 200-250 (Overseas 70-80) including Ecumenical Partn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oliticians
- Organized by the NCKK, Civil Peace Forum-Korea, CoNGO, EFK

## Declaration of People's Peace Treaty

### Agenda

- July 15 – Peace Consultation on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 Korea peace treaty and envisioning the roadmap for peace
- July 16, Morning: Why “People’s Peace Treaty”
- Afternoon: Peace Chain and People’s Peace Treaty Declaration at DMZ
- July 17-18: Review on the last 5 Years’ PT Campaign/Visioning Peace & Reconciliation in Korea and NE Asia

# 발표자 Presenter



김경묵 와세다대학교 교수, 일본

Kyungmook KIM Professor, Waseda University, Japan

김경묵은 현재 와세다대학 문학학술원에서 평화연구 및 글로벌아시아연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학연구소, 국제화해학 연구소, 아시아연구소(소장) 등 학내 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여, 도쿄대학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교대학전임교원(2005-2015년)을 거쳐, 2016년부터 와세다대학에 재직중이다. 일본국제보ランティア센터이사, 옥스팜재팬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시민운동과 NGO, 평화연구를 주된 실천과 연구의 테마로 활동하고 있다.

Dr. KIM Kyungmook is Professor in Peace Studies/Global Asian Studies at Waseda University, Japan. He graduated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A), and received his MA and PhD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After the professorship at Chukyo University (2005-2015), he is affiliated at Waseda University since 2016. His practical and academic topics are focused on civil society and NGOs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Studies. He had served as a board member of 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and Oxfam Japan.



## 분단체제와 재일교포 시민사회운동의 변화와 과제



### The Korean Peninsula, Overseas Koreans and Social Movements

김경묵 와세다대학  
교수(문학학술원)

KIM Kyungmook, Professor  
Wased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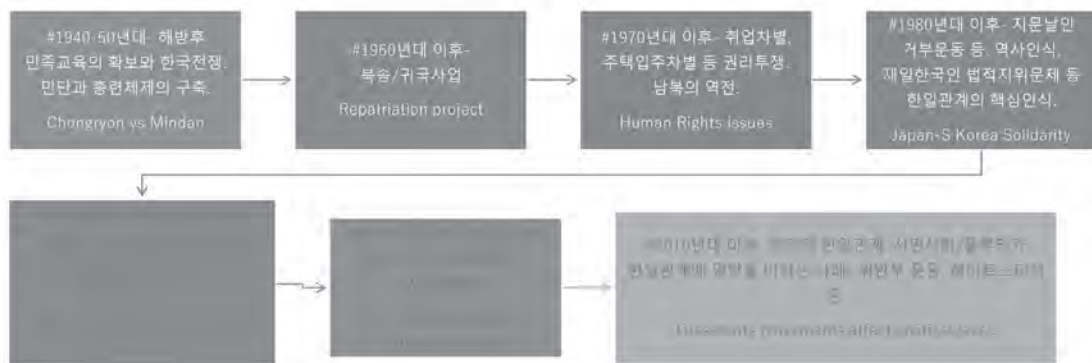
#### 1) 문제의 소재 Agenda

#### 분단체제, 재일교포, 시민사회운동이란?

On the divided nations, Korean diasporas and Social Movements

- #한반도 분단체제와 일본
- #일본사회 속의 재일교포
- #재일교포(해외한인)사회의 분단체제
- #재일교포(해외한인)사회의 시민사회운동
  
- 문제의식1: 재일교포(해외한인)사회는 더 이상 한국사회와 대립될 수도 하부조직일 수도 없다!? = 민단/총련구조의 인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 Point 1: The complexing and transforming structure of Korean diasporas.
- 문제의식2: 재일교포(해외한인) 시민사회운동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사회의 인식부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접경지대로서의 실험과 시도가 필요.
- Point 2: How can the GOs support and collaborate with diasporic communities?

## 2) 역사적 사건에서 바라보는 재일교포사회 Transforming zainichi Korean community.



3) 남북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북일관계를  
시민사회운동의  
시각에서 본다면-  
시간적 틀거리는  
1990년대이후를  
중심으로  
Framing in the post-  
1990s

- #내외적 구조적 틀거리의 변화
- #한국의 민주화
- #냉전체제의 붕괴
- #글로벌리제이션
- #포스트쇼와 시대=헤이세이 시대
- # 남북관계의 변화- 포스트김일성시대의 대북인도지원
- #주기화되었던 남북관계의 개선과 악화 The cycle of ups and downs
- ## 정치나 국가가 시민/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도 시민/사회 및 여론이 정치나 국가/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 구조적 변화에 착안점을 뒤야 한다.= The age of Non-Governmental Politics

4)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재일교포사회의  
 변화  
 Structural change  
 of zainichi  
 community

- # 1990년대 초 집단/총련이라는 양대구조의 탈피와 탈본국화/일본화현상의 가속
- # 민족적 정체성 = <언어x문화+역사관>이라는 방정식의 붕괴 Beyond nationalism.
- # 코리아엔지오센터 등 기존의 민족단체를 탈피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등장과 성장 → 본국지향성을 벗어나, 글로벌코리아의 지향성을 모색. Seeking global Korea-ness.
- # 한일가교역할, 남북통일의 가교역할론에서 막친현상-2000년대 초 한류현상과 월드컵공동개최 등 한일문화교류와 인적교류 확대 및 납치문제로 인한 북일관계/여론의 악화 → from bridge to zainichi passing=가교자로서 재일교포의 불필요론.

5) 재일교포사회의 존재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평화/공공외교의 역할

The Role of Public Diplomacy by Korean diasporas.

- 문제의식1: 재일교포사회는 더 이상 한국사회와 대립되 스텍 취보조지의 스텍 어디? - 바다/초려그곳이 이상승려는 선택하는 어디? → 코리아엔지오센터와 같은 시민사회적 어둠/단체에 대한 지원의 충분인가? 집단지원정책과 한국정부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Policies beyond pros or cons.
- 문제의식2: 재일교포 시민사회운동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사회의 인식부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새할음-접경지대(contact zone)글서어 친화과 시몬가 피요 → 태극기와 인공기의 태일구조에서 새로운 문화상징과 역할(making new cultural symbols)에 대한 지원, 예)
- #재일어=우리본말 사전의 발가의 필요성. 한국어/서울식 표준어와 문화어/평양식 표준어를 벗어나 탈중심화/국가화의 모색. (Making of a localized/Japanized Korean)
- #재일외국인과의 관계를 주선하는 역할론을 인식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이민사회의 선구자적인 지혜/경험제공자-선오쿠보와 쓰루하시의 현실은 그러한가?
- #츠루하시 으애노 드이 오드커매/재일코리아어타오가 시오크버이 느커매/아시아타오이 여하과 과제 의보사회에서이 생조은 넘어 외국인 공동체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Beyond bridging partner to regional/transnational mediator.

6)  
 평화/공공외교의  
 수행자로서의  
 대학(인),  
 시민/시민사회

The implementing  
 role of research,  
 education and  
 citizens.

- #대학/대학인의 역할의 변화= 연구, 고등교육, 사회공헌의 전통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으나, 그 표상/표출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사태에서 확인됨. → 평화교육과 애드보커시를 통한 시민액티비스트의 기반확장 Enhancing the power of Peace Education and Advocacy
- 단기적인 국익을 넘어선, 중장기적인 공공외교의 확대.
- # 대학/대학인의 공공성의 인식- 공공외교적인 접근.
- 교육기관-아시아연구와 한국학/일본학/중국학/기타의 경쟁구도 From area studies to regional studies.
- 국제개발협력의 장외투쟁-누구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인가?
- Development for whom?
- 국제여론- 국제방송에서 내셔널리즘과 국익강조문제- 국뽕정책의 탈피.
- Beyond propagandic public opinions/message
- 평화산업의 성장?-평화관광/공정관광/평화경제에 대한 기대. 현재의 DMZ에서 보이는 놀이공원, 투어컨텐츠의 과제 등등. Making Peace Industries.
- 기억의 전환을 둘러싼 과제- 미술관, 박물관, 문화산업 등에서 일어나는 집합기억의 충돌 Transitional memories.



**김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담당

**Chanho KIM** International Manager, Korea Democracy Foundation

김찬호는(전남대학교대학원 사회학석사) 1999년부터 2013년까지 5.18기념재단에서 국제연대 담당자로 일했으며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김찬호는 5.18기념사업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특히 아시아 시민사회 활동가와 연구자 네트워크를 조성하는데 노력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 연구기획팀장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김찬호는 노르웨이 Nordmøre Folkehøgskule(1997~1998)를 졸업했으며, 전남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에서 '5.18세계화'를 주제로 석사학위(2018)를 받았다

Kim Chanho (MA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has been worked as a director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t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from 1999 to 2000 and served as Secretary General. He made an effort to promote the May 18 Commemoration Project internationally and, in particular, to develop a network of activists and researchers in Asian civil society. Kim worked as the head of the research planning team at Gwangju Trauma Center which is the first rehabilitation center founded by city government for the victims of state violence in South-Korea, and from 2019, he has started working as an international manager at Korea Democracy Foundation. Kim Chanho graduated from Nordmøre Folkehøgskule (1997~1998, Norway)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2018) from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where his research was focused on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nd Globalization'.

# 토론자 Discussant



**임다빈**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장

**Dabin YIM** Representative,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임다빈(Dabin Yim)은 현재 평화공공외교협의회 주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단장으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2019년 평화나비 서울연합지부에서 단원으로서 활동하고, 2018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와 외교학과에서 공부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 여성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습니다.

Dabin is currently working as a leader of '2020 Peace and Public Diplomacy Corps'. By the work during 2018-2019 at a Seoul branch of 'Peacenabi' and study of 'Education of Social Studies and 'Diplomatic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has constantly studied about peace, democracy, and the right of woman.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선임간사

**Mee Jee SHIN** Senior Coordinator, PSPD

신미지(북한대학원 석사)는 월드비전 북한사업부 아태지역본부(2003-2006년)과 아시아교육연구원(2006년-2008년)을 거쳐 2009년부터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는 평화국제팀 선임간사로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 이슈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의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으며,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전 세계에 촉구하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Shin Meejee (MA from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as been working at PSPD since 2009 after working for the Asia-Pacific Headquarters of the North Korean Division at World Vision (2003-2006) and Asia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06-2008). Currently, she is in charge of planning and conducting 'Asia Pod' the only Asian issue podcast produced by PSPD in South-Korea, as senior coordinator from International Solidarity, which is belong to the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PSPD. She is also leading the 'Korea Peace Appeal' which is the campaign to urge the world to end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agreement.

# 토론자 Discussant



**댄 가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교육전문위원

**Dan GUDGEON** Peace Education Project Manager, Korean Sharing Movement

댄가즌은 '평화축구코리아'의 공동 설립자이자 현 사업국장이다. '평화축구코리아'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내 스포츠를 통한 '시민참여 평화교육 사업'이다. 댄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정책팀/국제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영국인 댄은 2009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북한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이전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평화안보 전공으로 석사를 하였고,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에서 평화학을 전공했다. 댄가즌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인도적 협력의 연계성과 평화 교육을 위한 스포츠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Dan Gudgeon is co-founder and Project Director of Football4Peace Korea operated within the Korean Sharing Movement (KSM) where he is also work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ithin the Policy Team. Football4Peace Korea uses sport as an access point to engage young Koreans in participatory peace education.

British born Dan has lived and worked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9. He is currently a PhD candidate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Seoul. He obtained his MA (Peace & Security) from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He also studied Peace Studies (BA) at Bradford University in the UK. He is interested in the peacebuilding humanitarian engagement nexu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sport in peace education.





# Special Session

## 제재완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연계

## Linking Sanctions Relief to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강연자  
Lecturer

토마스 비어스테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교수, 스위스  
Thomas J. BIERSTEKER Director of Policy Research,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Geneva, Switzerland

사회자  
Moderator

김지영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Jiyoung KIM Professor,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강연자 Lecturer



**토마스 비어스테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교수, 스위스

**Thomas J. BIERSTEKER** Director of Policy Research,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Geneva, Switzerland

토마스 비어스테커는 국제안보 및 분쟁 연구의 Curt Gasteyer 교수이자 제네바 국제연구대학원 정책연구소장이다. 예일대학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브라운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브라운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12여년간 왓슨국제문제연구소장을 겸임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3권의 저술,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국가주권>(1996),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사적 권위의 출현>(2002), <표적 제재: 유엔 행동의 영향과 효과(2016)>를 포함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기구 및 유엔 체제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10권의 책을 집필/편집했다. 제네바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자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유엔 표적 제재의 설계와 분석을 위한 대화형 도구, UNSanctionsApp의 주요 개발자이며, 최근에는 뉴욕 유엔본부 Sanctions Branch 책임자와 공동으로 유엔 실무자를 위한 1주간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시카고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THOMAS J. BIERSTEKER is the Curt Gastey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nflict Studies and Director for Policy Research at 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Geneva. He previously taught at Yal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Brown University, where he directed the 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for more than twelve years. Author/editor of ten books, including three w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1996), The Emergence of Private Authority in Global Governance (2002) and Targeted Sanctions: The Impacts and Effectiveness of UN Action (2016), he publishes on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n institutional mechanisms of governance in the UN system. He also teaches courses on multilater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t only in Geneva, but elsewhere globally. He is the principal developer of UNSanctionsApp, an interactive tool for the design of UN targeted sanctions and his recent activities include work with the UN and Member States on the design and analysis of UN targeted sanctions, including a one week training course for UN practitioners he co-teaches with the Head of the Sanctions Branch at the UN in New York. He received his Ph.D. and M.S. from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his B.A.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 LINKING SANCTIONS RELIEF TO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omas Biersteker,  
The Graduate Institute, Geneva

September 2020

## Outlin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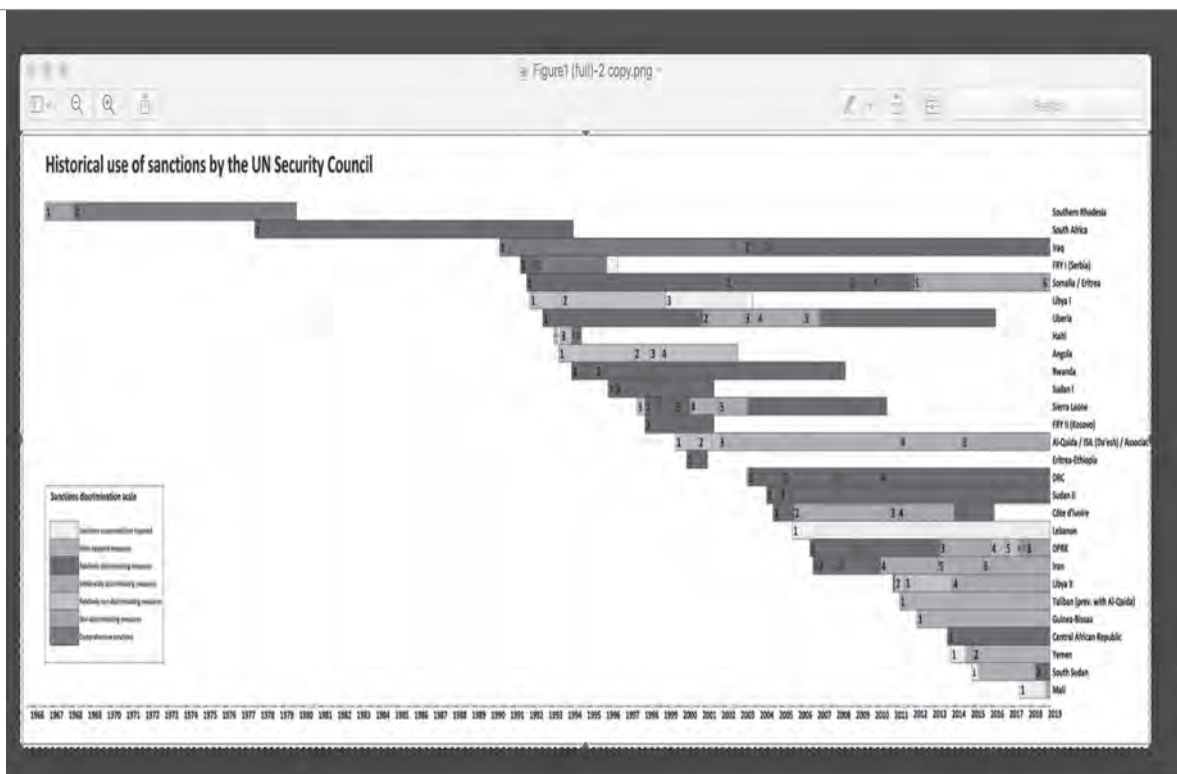
- International sanctions
-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DPRK
  - ▣ Exceptional nature
  - ▣ US “maximum pressure” approach
- Unintended consequences
- Research findings on sanctions and mediation
- Types of sanctions relief
- Linking sanctions relief to denuclearization
- Prospects for the future

## International sanctions

- Nobody likes sanctions
- Interference with trade
- Negative humanitarian consequences
- Due process violations
- Ineffectiveness: “they don’t work...”
- Yet, increasingly used by states, reg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Best option, given alternatives

## Exceptional nature of DPRK sanctions

- Most extensive UN sanctions regime today
- Approximating comprehensive sanctions measures
- 3 Non-discriminating measures – finance, petroleum products, transportation
- Sanctions discrimination scale: 5 out of 6
  - 14 of 15 between 1 & 3; Average 2.3; DPRK at level 5
- Accompanied by EU and US autonomous measures



DPRK sanc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 Phases of UN sanctions on DPRK

- ❑ WMD related, 2006-2012
- ❑ Finance & transportation, 2013-2015
- ❑ Broad sectoral measures, 2016
  - ❑ Petroleum imports
  - ❑ Coal exports
- ❑ All of the above, 2017 to the present, plus
  - ❑ Fishing rights
  - ❑ Remittances from foreign workers

## Scope of the current measures

- Individual sanctions
  - ▣ 80 individuals
  - ▣ 75 corporate entities
  - ▣ 66 vessels (with more recommended by PoE)
- Non-economic sanctions
  - ▣ Diplomatic, arms, luxury goods, nuclear materials
- Sectoral sanctions
  - ▣ Fishing, labor, textiles, coal
- Non-discriminating sanctions
  - ▣ Finance, oil imports, transportation

## Why UN sanctions are important

- Very different from Iran sanctions regime, where US sanctions predominated
- UN sanctions implemented by Russia and China – though not in last two years
- US not applying extra-territorial pressure over DPRK on financial institutions outside its jurisdiction
- US “maximum pressure” may have reached its limits, given erosion of consensus at the UN

---

## US “maximum pressure” approach

---

- ❑ US as co- “penholder” with China
- ❑ US additional measures (unilateral sanctions) beyond UN sanctions
- ❑ US claims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 ❑ Application of secondary sanctions, heavy fines
- ❑ Reliance on US dollar and access to US correspondent banking system
- ❑ De-risking by banks
- ❑ DPRK cut off from formal int’l. banking system

## Unintended humanitarian effects

---

- ❑ Sanctions alone not fully responsible, but...
- ❑ Sanctions exacerbate other policy practices
  - ❑ Highly controlled, command economy
  - ❑ Inefficiencies
- ❑ Food crisis
- ❑ COVID-19 pandemic
- ❑ Challenges even for UN agencies operating in DPRK
  - ❑ Access to formal banking channels



## The Potential of UN Sanctions

- A paradox?
- Sanctions typically considered punishments
- Negotiation and diplomacy as policy alternatives
- Sanctions exist between words and war
- But sanctions are never used in isolation
  - ▣ Always in combination with other policy instruments
  - ▣ Most often with negotiations or mediation

## Sanctions and Mediation

- Sanctions & Mediation (SMP) Project
- Implications for DPRK/US/Republic of Korea negotiations
- Mediators distance themselves from sanctions
  - ▣ Maintain impartiality
  - ▣ Avoid association with coercive instruments
- Sanctions can complicate (Yemen in 2015)
- Sanctions can also complement...

# UN SANCTIONS AND MEDIATION

— Establishing Evidence to Inform Practice —



Professor Thomas Biersteker  
The Graduate Institute, Geneva

Dr Rebecca Brubaker  
United Nations University

Dr David Lanz  
swisspeace

## Sanctions relief as instrument

- ❑ Sanctions suspension or promise of exemptions can break deadlocks
  - ❑ Libya in the 1990s (suspension for release of suspects)
  - ❑ Former Yugoslavia (Milosevic agreement to go to Dayton)
  - ❑ Afghanistan (Hekmatyar and the Taliban)
  - ❑ Iran with the JCPOA
- ❑ Sanctions not only an impediment, but a potential tool for conflict resolution
- ❑ UN sanctions are targeted, use them!

## Sanctions and bargaining

- Sanctions are not an end in themselves
- More effective as bargaining instrument than tool of pressure
- Sanctions suspensions more effective than initial imposition
- Suspension carries a powerful symbolic value
- Employ a calibrated “tit for tat” strategy
  - Calibrated sanctions relief for
  - Tangible denuclearization measures

## Types of sanctions relief

- Voluntary relaxation of implementation of recommended measures
- Add exemptions to existing measures
- Adjust caps
- Introduce caps to sectoral prohibitions
- Suspend existing measures (term, open-ended)
- Selective delistings
- Lifting of sanctions

---

## Possibilities for sanctions relief

---

- Many different types of relief (just outlined)
- Many different types of sanctions (previous slides)
- Provide many ways to link sanctions relief to denuclear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 Contrast to most UN sanctions regimes
  - ▣ Fewer sanctions measures in place
  - ▣ Less room for linking to negotiations/mediation

## Potential stages of negotiation (ICG Report 2018)

---

- Create a conducive environment
- Launch formal negotiations
- Produce an interim agreement
- Negotiate a second agreement, with IAEA inspections, CTBT signing
- Produce a comprehensive, final agreement
- Implement the agreement

## Create a conducive environment

- Unilateral gestures on both sides
  - DPRK re-declare its moratorium on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ing
  - US to declare end of maximum pressure approach
- Facilitate emergency COVID-19 relief
- Create a safe banking channel for humanitarian actors
- Invite DPRK to observe regional development bank meetings

## Launch formal negotiations

- Limit the application of US secondary sanctions to violation of the ban o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omponents
- Scale back coal export restrictions
- Increase cap on petroleum imports (make a virtue out of necessity)
- Introduce some term-limited suspensions of sectoral measures
- Offer some financial relaxation
- Offer public declaration of no new sanctions (US, EU)

---

## Reach agreement to consolidate a freeze on DPRK testing & sign CTBT

---

- Ease military contact restrictions
- Selective delistings (outside nuclear domain)
- Raising of caps
- Introduce some time-limited suspensions
- Suspend sport & cultural restrictions
- Suspend restrictions on DPRK receipt of IFI assistance (for one year, possibly longer)
- Introduce multi-y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s

## Reach agreement on IAEA inspections and CTBT ratification

---

- More suspensions
- Open-ended suspensions to cover all commodity restrictions
- Selective termination of some sanctions
  - ▣ Ban on sports and cultural exchanges
- Additional delistings
- Remove DPRK from US sponsors of terrorism list

## Reach/Sign comprehensive agreement

- ❑ Complete delisting of non-nuclear designations
- ❑ Convert term-based suspensions to open-ended suspensions
- ❑ Terminate diplomatic and some sectoral sanctions
- ❑ Provide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conversion
- ❑ Addi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pport
- ❑ Exp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 Full implementation

- ❑ Termination of non-nuclear sanctions
- ❑ Schedule date for termination of nuclear sanctions
- ❑ Termination of unilateral sanctions
- ❑ Sign formal peace treaty
- ❑ Establish full diplomatic relations
- ❑ Reunification?

---

## Conclusions

---

- Coordinated and carefully calibrated tit-for-tat approach needs to be developed
- Constant adjustments would be needed
- Will require substantial moves on both sides (with assistance from ROK)
- Maximum pressure has reached its limits
- Challenge: when to offer sanctions relief, how extensive it should be, and its timing

## Political feasibility

---

- Current moment may not be propitious
- Political uncertainty in the US: Trump versus Biden
- Uncertainties about DPRK willingness to resume talks
- If we do not think through in advance, however, we will not be prepared if, and when, conditions change...



##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For more information

- Contact: [thomas.biersteker@graduateinstitute.ch](mailto:thomas.biersteker@graduateinstitute.ch)
- Visit: [unsanctionsapp.com](http://unsanctionsapp.com)

# 사회자 Moderator



김지영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Jiyoung KIM Professor,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Ministry of Unification

김지영 교수(Prof. Jiyoung Kim)는 2016년부터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인하대학교에서 중국어 중국학과 학사를 취득하고, 영국 워릭(Warwick)대에서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글로벌 통일교육과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환경 관련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및 강의 분야는 국제분쟁의 역사적 사례, 유럽통합과 정체성,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이다.

Prof. Jiyoung Kim has been in charge of research and lectures at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ince 2016. He earned a bachelor's degree in Chinese Studies from Inha University, and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s and a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from Warwick University in England. He is conducting lectures and research on global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major areas of research and lectures include historical cases of international disputes, European integration and identity, and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Session 3-1

##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방안

### Cooperation of the Civic Sect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부/피스모모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PEACEMOMO

좌장  
Moderator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Francis Daehoon LEE Research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패널  
Panelists

글린 포드 Track2Asia 대표, 영국  
James Glyn FORD Founder & Director, Track2Asia, UK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Jakob HALLGREN Ambassador, Embassy of Sweden in Seoul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 DMZ 대표, 미국  
Christine AHN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USA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Youngmi CHO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Sung Kyung KIM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A-Young MOON Representative, PEACEMOMO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3-1)

##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방안

한반도-동북아에서 과거의 갈등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평화적 관계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평화구축이라고 할 때, 평화구축의 노력은 갈등의 근본 원인과 추동 요인에 대한 대응, 갈등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구축과 개인 및 집단의 역량 강화, 사회적 지역적 통합성의 증진과 당사자 집단 간의 신뢰와 새로운 관계의 정당성 증진이 필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향성 아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민간부문이 갈등예방, 평화역량 강화, 우호적 여론 형성, 신뢰관계의 형성, 평화구축의 정당성 증진, 시민평화외교 등의 분야에서 추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Cooperation of the Civic Sect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stablishment of peace means moving to peaceful and sustainable relations in order to not revert to past disput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is will require addressing the root causes and drivers of disputes; creating the system of managing disputes and offering services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individuals and groups; and reinforcing social and regional integration, trust among stakeholders, and the legitimacy of new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approaches, we will explore what contributions the private sector can make to help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such areas as preventing disputes, strengthening peace capabilities, strengthening public opinion, building trust, making the case for peace, and engaging the general public in diplomacy for peace.

# 좌장 Moderator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Francis Daehoon LEE** Research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현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연구교수와 (사)피스모모의 평화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참여연대 창립위원, 초대 사무국장, 협동처장과 산하 평화군축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아시아지역대안교류협회 ARENA의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유엔 인권소위원회 법률자문위원과 유엔 여성안보평화기구 아태지역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일본국제대학대학원(일본)과 리츠메이칸대학에서 평화학 초빙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사)피스모모와 다수의 교육청, 유네스코, 느티나무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에서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분야 교육자 연수 및 자문을 오랫동안 하고 교재 편찬을 도왔다. 코이카-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 마을리더십 및 대학협력 프로젝트를 5년간 책임자로서 수행했다. 저서에는 [세계의 화두], [빈곤의 세계화](역),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 [탈분단 평화교육](공저) 등이 있다. 현재 아시아평화대학설립추진단과 함께 국제적 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Francis D. Lee has been visiting professor for peace studies, at Ritsumeikan University, and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He served as legal advisor to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UN Human Rights Sub-Commission in 2005, and worked with the Center for Peace Museum, Korea. He has coordinated CENA (civil society education network in Asia), a collaborating network of universities committed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tudies in Asia. Francis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facilitating UNESCO and APCEIU teachers training workshops since 2006. Since 2012, he joined PeaceMOMO to provide for school teachers and peace activists in Korea peace education training. He worked as the project manager of SKHU-Ull joint programme for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He has written chapters and books on peace studies, peace education, critique to security discourses, peacebuilding, democracy and peace, and civic diplomacy for peacebuilding. Currently, he serves in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ies and Agencies of reunification, education, human rights,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gender and family affairs of ROK government. He takes part in the Promotion Team for Asia Peace University.



## 패널 Panelist



글린 포드 Track2Asia 대표, 영국

James Glyn FORD Founder & Director, Track2Asia, UK

글린 포드는 2009년 6월 선거까지 25년간 유럽의회 의원으로 재직했다. 그 중 4년은 사회주의그룹의 부대표를 역임했고 국제무역 위원회와 외교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 관련 문제에 관심을 많았다. 유럽의회 의원 시절, 글린 포드는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한국과의 과학협력협정 이행을 담당했으며, EU-일본 및 EU-한국 무역협정의 그림자 대변인 역할을 했다. 유럽의회 의원 재임기간 내내 일본관계 대표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2004년 한반도관계 대표단 설립부터 2009년까지 동 대표단의 위원이었다. 유럽위원회는 그를 인도네시아 선거(2004)와 아체 선거(2006-7)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석 선거감독관으로 임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태민주지도자회의(1994)의 설립 멤버와 동북아경제포럼(NEAEF)의 유럽 위원이기도 했다. 유럽의회를 떠난 후에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공공 활동, 특히 무역정책을 다루는 컨설팅 회사 Polint를 설립했다. 또한,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 진전에 주력하는 Belgium NGO Track2Asia를 설립하기도 했다. 베이징, 서울, 도쿄, 워싱턴, 뉴욕을 빈번히 방문했고 1997년 첫 방문 이래 평양을 거의 50차례 방문했다. 우리말로도 번역된 <토킹 투 노스 코리아>, (2018)의 저자이다.

Glyn Ford was a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 for over 25 years until the June 2009 Elections. During his time in the European Parliament (EP) he was for four years as Deputy-Leader of the Socialist Group. In the EP he served on both the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Affairs Committe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East Asia. During his time as an MEP, Mr Ford was responsible for following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ASE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cientif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he was shadow spokesman on the EU-Japan and EU-ROK trade agreements. He was also a member of the Delegation with the Japanese Diet throughout his period as MEP and the Delegation with the Korean Peninsula from its inception in 2004 to 2009. He was appointed by the European Council as the EU's Chief Election Observer for the Indonesian Elections (2004) and the Aceh Elections (2006-7).

He was a founding member of Kim Dae-jung's Forum of Democratic Leaders in the Asia-Pacific (1994) and European Board Member of North East Asian Economic Forum (NEAEF). After leaving the Parliament, he established Polint, a Consulting company specialised in EU Public Affairs, in particular Trade Policy, with a focus on East Asia. He also established the Belgium NGO Track2Asia, the focus of whose work is promoting political dialogue with North Korea. He frequently visits Beijing, Seoul, Tokyo, Washington and New York to promote this work and has travelled to Pyongyang just short of 50 times since his first visit in 1997. He is author of Talking to North Korea (2018) which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

## Private Public Partnerships in Resolving the Crisis on the Peninsula

**James Glyn Ford**

Founder & Director, Track2Asia

---

In the last seventy years the closest we have been to resolving the crisis on the Peninsula was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Agreed Framework in 1994. The fundamentals of the deal was that Pyongyang would freeze the operation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during a process where the United States would arrange for the construction of two Light-Water Reactors (LWR) in the North, known as the KEDO Project, and when the first of these reactors finally came on stream the North would allow the fuel rods from its Graphite Moderated Reactor to be exported and the site to be disabled, dismantled and sealed. In the meantime Washington would supply the North with 500,000 tonnes of Heavy Fuel Oil per annum to compensate for Yongbyon's reactor being offline.

The estimated cost of the LWRs was \$4.5B and it was agre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over 2/3 of the cost, Japan would contribute \$1B and that \$500M gap would be covered principally by the EU, plus a raft of other countries. Site preparation continued through until 2002 - although no nuclear components were ever delivered - until the Programme was cancelled by President Bush in 2003.

It seems inevitable that Pyongyang will expect if its to give up its unilateral security guarantee of its own nuclear deterrent that apart from some multilateral agreement by the UN Security Council PLUS it will expect alongside the lifting of UN sanctions som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an Infrastructure Fund. While the North made it clear, as we can see in the Singapore Summit Declaration, that it intends to continue with a civil nuclear power programme there has been no repetition of the request a quarter of a century ago for imported LWR technology. The view is they will build and fuel these using indigenous resources and technology.

Allowing for inflation and the fact the North will be surrendering actual nuclear weapons rather than their prospect the bill is likely to be between \$15-20B. The expectation is that no future US President will be willing or able to provide any significant contribution. Consequently the financial heavy lifting will again be born by the ROK to the extent of two thirds to three quarters of the final cost.

This money will need to be spent quickly and efficiently on a series of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managed principally by ROK companies. Until the bulk of these projects are up and running there will be no final closure to any settlement. The prospectus will need to be both agreed by Pyongyang and Seoul. They must be designed to benefit the citizens of the North, improving their prospects and wellbeing, and enable to North to begin the long road to integration in the global economy. There will be a large variety of projects across the infrastructure spectrum, though inevitably many will be in the energy sector the major choke-point hampering economic growth.

Detailed proposals and plans will need to be in place in anticipation of any settlement!

## 패널 Panelist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Jakob HALLGREN** Ambassador, Embassy of Sweden in Seoul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2018년 부임한 외교관으로서, 2012-2018년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부소장을 역임했다. 스웨덴 외교부 인도주의과 및 분쟁정책과를 이끌었으며, 사라예보, 제네바의 유럽연합 스웨덴대표부, 포크 베르나도트 아카데미 및 스웨덴총사령부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전문 분야는 분쟁, 조정, 평화구축, 안보체계 개혁, 군축, 인도주의 업무, 재난위험 감축 등에 이른다.

Jakob Hallgren has been the Swedish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18. Before this, he served as Deputy Director of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from 2012 to 2018. Ambassador Hallgren previously worked at the Swed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s Head of its Humanitarian Division and as Head of its Division for Conflict Issues. He has undertaken assignments at the Swedish Embassy in Sarajevo, the Swedish Permanent Mission in Geneva, for the Folke Bernadotte Academy and the Swedish Armed Forces. He has worked in the fields of mediation, peacebuilding, security systems reform, disarmament, humanitarian operations and disaster risk reduction.

---

The case for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s strong as it is difficult and challenging. History has proven that the alternative to peace is a road to catastrophe that no one is willing to re-consider. However, the same history shows that the path from a cold armistice to a warm peace is equally long and intrinsically fraught with difficulties.

The case for a Status Quo is easy to make but surely not sustainable. The duty to constantly find new ways to act towards peace, and ultimately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a task for all who wish to promote truly peaceful outcomes on the Peninsula. One obvious way to do this is to promote and to achieve higher level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mutual understanding which in turn could act as a powerful discouragement to any drastic and devastating courses of action.

In his remarks Ambassador Hallgren will touch upon questions related to the need for tireless and creative efforts to build trust and identify channels of commun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ose within the economic realm where private sector actors might add value. With the variety of economic models and systems in the regions he will argue that there are challenges but also ample opportunities in this area.

Ambassador Hallgren will also discuss how private sector actors in the region and from outside the region could add value by the transfer of knowledge, training and other types of exchanges beyond the formal exchange between officials. Mindful of the limits posed by the sanctions regimes, the role of potential of such private actors will be explored.

## 패널 Panelist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 DMZ 대표, 미국

**Christine AHN**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USA

크리스틴 안은 한국 전쟁의 종식, 이산가족 상봉 및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서의 여성 리더십을 위한 글로벌 시민단체 "위민크로스 DMZ"의 사무총장이다. 2015년 15개국 여성 평화 운동가들을 이끌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보로 비무장지대를 건넜으며 남북 양측에서 10,000명의 한국 여성들도 동참했다. 당시 평양과 서울에서 평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이 여성에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2019년 여성단체들과 연합하여 결성한 글로벌 평화 운동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의 코디네이터이기도 한다. 코리아 평화 네트워크, 코리아 정책연구소, Global Campaign to Save Jeju Island를 공동 설립했다. 남북한에 대한 평화 및 인도주의 원조 대표단을 조직했으며, 미국 의회, 유엔, 캐나다 의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포스트, 포춘 매거진, 타임, 뉴스위크 등에 여러 글을 기고했고, 알자지라, BBC, CNN, Democracy Now!, NBC Today Show, NPR, MSNBC, 미국의 소리, Samantha Bee Show에 출연하기도 했다.

Christine Ahn is Executive Director of Women Cross DMZ, a global movement of women mobilizing to end the Korean War, reunite families, and ensure women's leadership in peace building. In 2015, she led 30 international women peacemakers from 15 countries across the DMZ from North to South Korea. They walked with 10,000 Korean women on both sides of the DMZ and held women's peace symposia in Pyongyang and Seoul where they discussed the impact of the unresolved war on women's lives.

Ahn is coordinator of the global campaign,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which was launched in 2019 with a coalition of women's organizations. She is the co-founder of the Korea Peace Network, Korea Policy Institute, and Global Campaign to Save Jeju Island. Christine has organized peace and humanitarian aid delegations to North and South Korea, and has addressed the Congress, United Nations, Canadian Parlia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istine's writings have appeared in The New York Times, CNN, The Washington Post, Fortune Magazine, TIME, and Newsweek. She has appeared on Al Jazeera, BBC, CNN, Democracy Now!, NBC Today Show, NPR, MSNBC, Voice of America, and the Samantha Bee Show.

---

# Co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Women Peacebuilders: Key to Advanc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Christine Ahn

---

### Summary of Key Talking Points:

1. Why we need a peace agreement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 a. to eliminate threat of renewed conflict that could instantly kill 300k lives, but with nuclear weapons, up to 25 million people impacted
  - b.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improved human rights. Contrary to the dominant paradigm, "Maximum pressure" or its predecessor Strategic Patience, have failed to achieve its desired goals; instead peace must be the first step towards realizing these goals.
  - c. Stalled progress between the US and DPRK is impeding inter-Korean progress, in part driven by 70 years of mistrus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but powerful interests which profit from continued tensions and conflict.
  
2. Hopeful prospects underway in the United States that point to possibility for ending the Korean War with a peace agreement.
  - a. Growing bipartisan consensus for peace. 67 percent of American voters support negotiating a peace agreement with North Korea according to a poll released by Data for Progress and YouGov in October 2019. Amazingly, support is highest among Republicans (at 76%), followed by Independents/Others at 64% and Democrats at 63%.
  - b. Bipartisan roundtable supporting peace agreement with North Korea.
  - c. Calls for reduction in Pentagon Budget
  - d. Congressional elections and new, younger, diverse voices calling for a new US foreign policy away from endless wars.
  
3. The role of civil society, especially women's peace organizations, to help advanc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se study: Women Cross DMZ/Korea Peace Now! campaign.
  - a. Education - in the US, the Korean War is known as the "Forgotten War" - most Americans don't realize that the war never officially ended or the significant role that it played in inaugurating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Important for the US public to understand the history, including the context of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and how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can advance the security of 80 million Koreans and of the American people.
  - b. Advocacy - Engaging policymaker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o Members of Congress, to promote peacebuilding between the US and DPRK. Working with Rep. Ro Khanna to introduce House Resolution 152 calling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with a peace agreement, a legislative tool to educate policymakers, media and the American public.
  - c. Organizing - Building a grassroots base of multi-generational Korean Americans, peace activists, veterans, students, housewives, etc. to collectively press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This has led to now 47 co-sponsors

- of H.Res-152, which is a significant marker of how citizen mobilization is changing the debate on North Korea and a new US policy.
- d. Women's leadership key to achieve lasting peace: research shows that when women are involved in peace processes, an agreement is more likely and more durable. International law mandates women's inclusion in all levels of peace processes. New research from Georgetown University shows that women's groups were involved in 71% of informal peace processes between 1991-2017 and helped to legitimate the formal peace process among the public.
4. Recommenda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especially women's peacebuilding groups, and across nations and regionally.
    - a. Of the 98 peace agreements that were negotiated between 2000 and 2016, both women's participation in civil society and in official peace processes ensured that the peace agreement was signed but also included gender provisions. The key is the nexus between women official negotiators and women's peace movements.
    - b. Since 2000, the UN Security Council has issued ten groundbreaking resolutions articulating the connection between women's rights, gender equality, and peace and security. As members of the UN, North Korea, South Korea, US, China and any other countries involved in facilit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a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uphold these norms.
    - c. Today, 84 countries have adopted National Action Pla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President Moon appointed South Korea's first Ambassador of Gender Equality whose mandate includes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A new US administration presents opportunity for a feminist foreign policy and implementation of the 2017 Women Peace and Security Act.
    - d. Despite the widespread recognition of the critical role women play in peace processes, very few women have been involved in the official negotiations. As we call for women to represent at least 30 percent of negotiators in the official Korea peace process, we must also press for a channel between them and women's peace organizations.

## 패널 Panelist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Youngmi CHO**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조영미는 새롭게 설립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의 집행위원장이자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의 한국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대학교 연구교수이며 사회문제와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제협력과 시민공공외교,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타 국내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관계구축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자문위원이며, 외교부 공공외교지원네트워크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Youngmi Cho is an Executive Director of the newly formed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and the Korea National Organizer of the 'Korea Peace Now! –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global campaign. She i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same time she teaches Social Problems,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in the School of social welfare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Republic of Korea. She has been researched and published academic papers such as civic public diplomacy, women'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cultural sustainability and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ons etc.

Youngmi is an expert in building relationships and partnerships with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other organizations. She is an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 한반도 평화구축과 평화프로세스의 필요성

- 힘의 논리로 가득찬 전 세계의 갈등과 분쟁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불평등과 배제, 인도주의의 실종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COVID-19의 상황 또한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전염병의 감염과 사망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며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통제와 순응 속에서 불평등과 인간안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분쟁 속에서 끊임없이 평화 구축의 노력을 거듭해 왔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 시민들의 일상에서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음. 더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평화구축을 위한 교량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
- 기존의 평화유지 중심의 개입을 우리가 1세대의 평화운동이라고 한다면 2세대 평화운동은 분쟁에 개입하는 전통적인 평화유지(peace keeping)에서 벗어나 중재와 협상을 통한 서로 간의 화해와 협력을 진행하는 평화를 조성하고(peace making), 회복하며(restoring), 나아가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재건과 발전을 통한 평화와 사회의 포괄적 변화와 적절한 환경을 구축하는(peace building) 단계로까지 확장, 발전되는 것임. 이는 폭력적 갈등의 해소와 더불어 평화과정 전반을 포함해야 함.
- 평화가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과정이며 모두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평화 구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전쟁과 무력분쟁, 내전과 폭력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성별화된 방식,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갈등 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보장해야 할 것임.
- 또한 인권과 존엄,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다양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그리고 평화의 제도화를 통한 민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댄 스미스(2004)는 평화의제를 안보(security), 정치(political framework), 경제사회(socio-economic foundations), 그리고 화해와 정의(reconciliation and justice)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에서 평화구축 역량의 제도화에 기여 해야 한다고 제안함.<sup>1)</sup> 평화구축에서의 민간협력 측면에서도 이러한 네 개의 축을 중심으로 안보, 군사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 환경, 경제 사회환경의 개선, 내적 치유와 통합 등에 대한 각각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사회는 분단체제 하에서의 분열과 이념갈등, 반목과 혐오, 배제와 적대, 차별, 경쟁과 약탈 등이 대를 거듭하면서 내면화되어 왔고 우리의 정책 또한 분단체제를 기정사실화 한 채 상상력 있는 탈분단을 재개념화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이 분단 트라우마로 표현되기도 함. 이러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가는 정책의 주도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국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집중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갈등이나 분쟁지역에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안전 지원, 정치적 절차 지원,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 핵심 정부 기능의 회복,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함.
-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 그리고 갈등의 구조화된 환경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 젠더평등, 생태, 평화체제, 탈분단, 탈군사주의, 평화의 지속가능성의 담론들을 우리의 일상의 담론으로까지 끌고 들어와야 하며 국내외 민간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우리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평화구축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분단체제가 가져다준 우리의 삶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를 둘러싼 체제가 어떠한 갈등과 불평등, 폭력, 트라우마로 나타나고 있는가? 일상에서 평화를 맞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민간협력, 국제협력, 다자간에 협력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에 대한 해답일 수 있음. 즉, 우리의 인식적 측면의 변화와 분단구조의 변화, 안보의 미명 하에 자행되는 군비경쟁을 멈추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호혜가 존중 되는 협력적 체계, 국내외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함.

1) Dan Smith(2004), Towards a Strategic Framework for Peace building: Getting their Act Together.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pp. 27-28.

- 즉, 평화구축은 폭력적 상황이나 갈등 그리고 구조들을 새롭게 진단하면서 평화로운 구조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로서의 의미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인식 변화의 재설정, 현재의 사회구조적 환경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실천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수 있음.

## 민간협력의 다양한 실천방안

-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갈등의 구조화된 환경에 대한 관리와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문화다양성 관점, 즉 민족, 종교, 계급, 세대, 성불평등을 포함한 폭력적 갈등 상황에 대한 공동체 회복과 구성원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 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희망적 노력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지속화 되어야 할 것임.

### 1) 탈정치화된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 기존의 합의 이행과 정치와 분리된 민간협력의 지속화 방안 마련: 성과위주의 협력에서 벗어난 실재성, 지속성
-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교류협력의 토대 마련: 체제 안전에 대한 국내외 환경의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협력, 치유와 화해를 위한 이산가족 재회 문제의 제도화, 인적 교류 협력, 기술협력의 제도화
- 남북교류협력법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법률로서 개정

### 2) 군비통제와 군비 축소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존중 및 남북 중심의 주도성 확보

- 분단된 한반도에서 치르는 비용, 즉 분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분단 비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틀 제시 및 지속적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력
- 국방부는 2021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에 100조,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영에 200조 등 300조가 넘는 규모의 국방중기 계획(2021-2025) 수립을 발표함(국방부 보도자료 2020. 8. 10).
- 단계적 군축, 군사적 투명성, 적대적 관계의 개선,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시민안전과 환경을 위한 적극적 평화의 실현

### 3)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확대와 평화협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 풀뿌리에서부터 국제 시민들까지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대중적인 합의와 지지, 참여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의 모색
-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https://koreapeacenow.org/>)
- 휴전에서 평화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https://endthekoreanwar.net/>)
- 평화협정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뿐만 아니라 그 논의과정에서의 의제 개발, 이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역량 개발

### 4) 한국의 공공외교 체계의 안정화와 네트워크 확대

- 시민공공외교는 시민주도형 공공외교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인 시민외교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적인 공공외교임(김태균, 박숙현, 이대훈, 장대업, 조영미, 한재광, 2019)
- 따라서 다수준, 다차원, 다중트랙의 소통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수립해 가야 함. 이를 위해서 공동안보를 위한 외교적인 목표 파악, 전달할 명확한 메시지 개발, 접근 전략, 현지 토대의 기반 하에 진행되는 네트워크 확대, 언론 매체의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 윤한봉 모델, 아시아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동북아여성평화회의,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Korea Peace Now! WCDMZ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의 워싱턴 시민공공외교 사례
- "로 칸나(Khanna Ro)의원의 HR-152 한반도 종전 결의안(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

**5) 평화문화를 형성하는 일상에서의 노력과 삶의 양식 변화**

- 분단과 군사주의, 안보주의, 가부장제, 남성성, 위계문화 등을 해결하는 시민리더십 역량을 위한 평화교육의 확대
- 동북아시아,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다양한 관계의 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확대와 지구화 시대의 초국가정체성 발현
- 생명존중, 폭력의 종식,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인권과 자유권의 존중과 보장을 위한 적극적 실천자로서의 역할 확대
- 각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자유와 정의, 시민권, 인권, 민주주의와 관용, 연대와 협력,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 대화와 이해의 원리가 준수되는 교육과 일상의 실천
- 미디어의 역할 제고

## 패널 Panelist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Sung Kyung KIM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김성경은 영국 에섹스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부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남북한마음통합센터의 부센터장에 재직중입니다. 연구재단 등재지인 『현대북한연구』의 편집인이며,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의 소장을 맡고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사회학과와 아시아연구소 등에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했으며, 성공회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도 강의했다. 현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 번영분과의 위원이며, 통일부 등의 정부기관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구 영역은 감정사회학, 문화지리학, 북한주민의 이동, 북한사회문화, 사회통합 등이며, 다수의 국내외 저널에 연구 결과물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2020, 창비)을 출간하고, 남북한 통합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Dr. Kim, Sung Kyung received her Ph.D. in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Essex in UK. She has worked as Associat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ince 2014, and currently work as a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North-South Korea Mind Integration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he is an editor-in-chief in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which is a Korean Citation Index Journal (KCI) issued by Korean Research Foundation. She previously served as a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 senior visiting fellow in Asia Research Institute(ARI)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 She is a member of Peace and Prosperity Division i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Planning and a board member in Ministry of Unification, ROK. Her research interests are North Korean mobility; Sociology of emotion and affect; cultural geography and etc. Recent publications are in the field of Asian mobility, North Korean defectors, migration studies, and cultural industry.

##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방안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 1.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요성과 가능한 경로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임팩트는 무엇인가?

2020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기도한 해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전쟁의 의미 혹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당장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국경은 폐쇄되었고, 자국민 우선주의는 강화되었으며, 국가의 힘은 점차 커져만 간다. 과연 '국가의 귀환'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방역에서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국가를 경유하게 되고, 시민들은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극단의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국가 권력의 통제에 순응하며, 파편화되고 있다. 물론 혹자는 이러한 현상이 팬데믹으로 더욱 증폭된 것일 뿐 2008년 이후의 하나의 트렌드로 굳건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재 맥락에서 사람들이 감지하는 '평화'에 '한반도'라는 층위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자문하게 된다. 혹여나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평화'를 '바이러스'로 부터의 안전이나 강력한 국가 통치를 통한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수준에서 일상에서의 평화는 점점 더 희구하게 되면서도, 분단이나 정전체제와 같은 폭력의 근원에 대한 감각은 무뎠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관심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북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존에 대한 필요성은 확연하게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는 남북 모두에게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과제임에 분명하다. 굳이 정전체제의 종식이나 비핵화 등을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장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 갈등이 너무나도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이다. 여전히 작동하는 이념갈등이나 패거리 문화, 소통보다는 배제와 차별에 익숙한 습성까지 분단이 내재화된 일상은 한반도의 모든 이의 삶을 옥죄고 있다. 남북 관계의 진전과 상호 인정,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분단체제가 생산하는 사회 갈등과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 19와 미중 신냉전의 등장과 같은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은 그리 평탄하지 않아 보인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여러 공학적 계산이나 설계 또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남북의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평화 논의는 그 어떤 해결책으로도 귀결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관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대화, 종전선언 등의 굵직한 사안에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조금씩 안착 되는 과정은 결국 분단체제가 탈분단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구조라는 독특한 체제 내에서 허용되었던 많은 부분이 탈분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해석되고 변화될 것이다. 군비경쟁(징병제)이나 이념 갈등, 성별화된 사회구조, 개인의 제약된 자유 등이 급격하게 해체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 복지, 민주주의, 공존 등의 가치가 조금 더 확장되고 맥락화 될 수도 있다.

### 2. 민간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다양한 실천은 어떤 한 것인가?

한국 사회의 국내적 시도와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천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국내적 실천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전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방식의 통일교육이 그다지 커다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교육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통일'과 '평화'를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해볼 직하다. 결국 타자에 대한 이해나 폭력에 대한 반대 등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도적 측면의 실천 또한 필요하다. 분단 구조의 문제점 등을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입법이나 제도적 변화까지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남북 민간의 교류는 그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북 교류의 방안이 도출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남북 관계의 추이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민간 교류는 항상 정치적 상황에 계속 종속되어왔다. 물론 북한의 '민간'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민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 측도 점차 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소위 말해 '민간' 영역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각자의 영역을 넓혀가는 유연성을 담지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민간 교류는 다양한 접촉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평화 구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 만들기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소통의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온 남북 민간교류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민간 단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남북 간의 양자적 관계는 쉽사리 경색될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구축한 교류의 틀은 정치적 상황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ODA와 같은 접근 또한 남한에 북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민간 단체와의 협력은 일종의 우회로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상하고 있고, 그렇다면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만들어내는 일에도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주로 국가 중심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면, 민간 영역에서도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공존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대한 시민의 개입을 글로벌 수준에서 기획할 수 있는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민간 교류의 영역을 더욱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일회성 행사와 같은 것보다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과 아젠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주지하듯 북한은 민간 교류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는데, 그만큼 교류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간 교류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체제가 덜 불안해하는 영역과 방식을 찾아내어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류가 계속될 수만 있다면 점차 남북 주민의 접촉면이 확장될 것이고, 한번 제도화된 교류를 갑작스레 멈추기란 남북 모두 쉽지 않을 것이다.

### 3. 민간부문의 다양한 평화구축 실천을 지원,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정부-민간 그리고 국제적 협력은 무엇인가?

정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민간교류를 위해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는 민간 기업의 과다 경쟁을 조율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민간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민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측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되,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원칙을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의 평화구축 노력과 연동되면서도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영역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 만을 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민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여,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코로나 19 팬데믹은 글로벌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의 국제질서와 통용되던 문법이 해체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언어와 전략 도출 없이 구체제의 붕괴는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혼동의 시기에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고, 협력의 방향이 평화와 공존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려는 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결국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고, 주변의 도움과 지지 없이 평화 정착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가 인류문명이 맞닥뜨린 여러 문제와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국제연대 활동을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패널 Panelist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A-Young MOON Representative, PEACEMOMO

문아영은 2012년 피스모모를 창립하고 대표로 활동중이다. 피스모모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를 중심가치에 두고 평화와 배움, 평화와 일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서로를 환대하는 경험, 낯선 존재를 선불리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망설임과 머뭇거림 속에서 평화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고자 한다. [www.peacemomo.org](http://www.peacemomo.org)

Moon A-young has been the representative of PEACEMOMO she founded in 2012. PEACEMOMO is a platform that connects peace with learning and peace with daily lives by putting the value that 'everyone learns from everyone' at the center. It tries to find clues for peace from the experience of treating each other with hospitality, and from hesitation and pause with the intention not to define any strange beings easily as 'enemies.' [www.peacemomo.org](http://www.peacemomo.org)

## 논점: 코로나19시대 안보에 대한 재정의 및 “인간안보”에 기반한 대북/대외/대내 정책 필요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9.19 군사합의에 기반한 한반도 군비경쟁 완화 및 군비축소 실행에 대한 실질적 정책 실행을 통해 대북관계 및 국제관계에서의 한국정부의 평화지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 보호책임(R2P)과 같은 개념이 무력 개입을 통한 분쟁종식(conflict termination)의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인간안보 개념의 평화적 실천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체제보장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따라서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처럼 국제규범의 이행과 평화 지향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러한 신뢰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한반도 주도성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정부주도의 외교만이 아닌 1) "시민사회 평화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2)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민평화외교 사례들을 발굴, 지원, 확산하고 3) 외교를 정부 주무부처에 한정짓지 않고 외교영역의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4) 시민사회와 정부 범부처간 평화외교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고, 5) 한반도평화친선대사와 같은 시도가 형식으로 남지 않도록 민간친선대사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 등 실효성있는 정책운영이 매우 중요함.
- 6) 기존 군사·안보·외교·평화 분야 의사결정과정에 청년, 여성, 소수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유엔 결의안 1325와 2250를 정책적으로 실행.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행위자로 제한하는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7) 기존 위원회와 신설될 위원회, 즉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무기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 등 한미동맹에 대한 전면적이고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해야 함. 8)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공론장을 시민사회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단일한 공론장이 아니라 다채로운 공론장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평화관련 국내 담론 주류화), 9) 통일부는 지원협력 사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민사회의 자율성 촉진함으로써 다양성 확보, 10) 남남갈등 해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시민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또한 11) 통일부 안의 청년세대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공무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개방성 확보가 시급함.
- 북한은 SDGs 관련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석하고 국내 경제개발계획과 SDGs를 연동함으로써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는 의지를 실행에 옮기기 어려움. SDGs가 전 지구적인 합의이자 목표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임. 대북제재에 있어 북미관계의 영향 바깥에 놓이는 과감한 시도들이 필요함. 따라서 12) SDGs를 매개로 공공외교 활동을 해오고 있는 시민사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SDGs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주요한 트랙이 될 수 있도록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SDGs 공공외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안전"담론으로, 인간안보에서 "생태안보"로 확장된 개념을 사용하여 그린뉴딜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포괄하는 넓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13) "한반도 그린 뉴딜"을 국내 에너지 정책, 대북 협력 사업, 국제사회 SDGs 이행 등이 통합된 정책의 핵심 축 삼아 대내, 대북, 대외 정책의 일관성 및 실질적 추진체계를 정비 및 운영해야 함.
-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상황에서 배제되는 존재들 - 장애인, 노숙인, 비국민(난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이 드러남. 14) 재난 상황에서 분리될 수 없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상황들을 정책적으로 예방하고 국적을 막론한 모든 인간의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함. 15) 인간안보라는 정책 지향이 대외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내정책과의 일관성 속에서 이행되어야 함.







# Session 3-2

## 정전체제로부터 새로운 평화체제로 From Armistice to a Sustaining Peace System

주관기관  
Organized B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좌장  
Moderator

**이연호**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장  
**Yeonho LEE** Head of Office of External Affairs and Development, Yonsei University

발표자  
Presenters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Tae Gyun PAR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필영달** 산둥대학교 부교수, 중국  
**Yingda BI** Associate Professor, Shandong University, China

토론자  
Discussants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Jaewoo CHOO**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Monica HAHN**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3-2)

## 정전체제로부터 새로운 평화체제로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올해 전쟁의 결과로 형성된 정전체제와 이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첫 발표는 한국의 정전체제가 세계 현대사에서 있었던 정전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체제였음을 밝히고 이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 발표는 정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전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본다. 종전선언에는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던 국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능성을 살펴본다.

## From Armistice to a Sustaining Peace System

The goal of this session is to examine how to overcome the Armistice system and to create a new peace system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presentation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ose in modern world history. The second is to consider the neighboring countries' positions that involved in the Armistice and are interested in Korea. In particular, the main purpose of the second presentation is to interpret China's and Japan's stances with regard to the peace treaty of the Korean Peninsula.

# 좌장 Moderator



**이연호**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장

**Yeonho LEE** Head of Office of External Affairs and Development, Yonsei University

이연호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현재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 처장을 역임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구 관심분야 및 강의분야는 정치경제발전론, 한국 정치경제론, 국제개발협력론이다. The State, Society and Big Business in South Korea, 『발전론』, 『불평등발전과 민주주의:한국정치경제론』의 저자이며 The Pacific Review, Asian Survey,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Professor Yeonho Lee, Head of Office of External Affairs and Development at Yonsei University, holds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teaching and research, having held various academic posts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and at Yonsei University. After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from Yonsei University, he received M.Phil and Ph.D. in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He also has produced prolific books and researches in the field of political economy and EU studies, such as EU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Unequal Development and Democracy, The Theories of Development and so on.

# 발표자 Presenter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Tae Gyun PAR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박태균은 2000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재직한 이후 한국현대사 연구와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동 대학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원장, 2020년 9월1일부터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7-1999년 하버드 대학 옌칭 연구소의 방문연구원 겸 특별학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07년과 2017년에는 하버드 대학 동아시아학과에서 대학원과 학부 과목을 강의하였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한국의 대외관계사와 냉전사이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Tae Gyun Park has been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evote himself to research on diverse issues in modern Korean history and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He got BA, MA, and Ph.D at th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as working for Harvard-Yenching Institute as a Visiting Fellow and Special Student in academic year 1997-1999. He taught at GSAS, Harvard University, in 2007 and 2017 on modern Korean history and US-Korean relationship. Main research field is history of ROK's foreign relation and history of the Cold War, and published several books on diverse issues in Modern Korea including the Korean War, the Vietnam War, and so on.

# 정전에서 평화체제로 왜 못 가는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 기존의 논의

- 정전인가? 휴전인가? (정의)
- 정전협정 자체의 문제 (유엔군 사령관, 중국 지원군 사령관, 처벌조항 등)
- 정전협정에서 빠진 부분들 (NLL을 포함한 바다 위의 군사분계선)
- 정전협정에서 무효가 된 부분들 (13조 d항,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 일방이 무효 선언을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인가?
- DMZ 지역의 축소, 경계지역의 문제



## 새로운 문제제기

- 왜 종전을 선언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맺었는가?
- 당시 상황에서 '정전' 은 적절한 선택지였는가?
- 미국이 '정전' 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중립화' 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유엔군 사령부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가? 유엔군 사령부는 한미 연합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가?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정화, 적대중지, 휴전, 정전

- 정화 (truce) an informal halt in fighting. Typically arranged locally to evacuate casualties. Brief and temporary, do not signal any willingness to settle the larger conflict.
- 적대중지 (cessation of hostilities) broader and formal than a truce. Not cease fire agreement. Just declare suspension. Usually multi-lateral.
- 휴전 (cease-fire) typically a negotiated agreement and take other steps to calm down, like pulling back heavy weapons or marking out a green line, or DMZ to separate.
- 정전 (armistice) formal agreement to cease all military operations in a conflict permanently. It ends the war, but it does not establish peace.
- <https://www.nytimes.com/2016/02/23/world/middleeast/truce-cease-fire-and-armistice-the-legal-nuances.html>

## 무엇이 맞은 것인가?

- 한국에서의 정전협정은 평화, 적대정지, 휴전, 정전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음.
- 지역적 차원이며, 적대행위 정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새로운 무기 반입 금지와 DMZ가 설정되어 있으며, 평화협정으로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20세기 역사 속에서 정전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 정전협정 사례

- 러시아와 독일(1917.12.15)
- 연합국과 오스만 제국(1918.10)
- 독일과 연합군(1918.11.11)
- 프랑스와 독일(1940)
- 연합국과 이탈리아(1943)
- 인도와 파키스탄(1948)
-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1949)
- 프랑스와 베트남(1954)
- 프랑스와 알제리(1962)
- 미국과 이라크(1991)
- 인도 파키스탄(2003)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2005)

## 정전협정의 복잡성

- 1945년 이전과 1945년 이후 정전협정에서 차이가 나타남.
- 1945년 이전은 일방의 승리로 끝난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체결. 이를 통해 평화협정을 준비할 때까지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것. (독일은 무조건 항복, 1945년 독일과 일본이 항복도 정전협정에 준하는 성격)
- 1945년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주변국 또는 팔레스타인 사이의 정전협정은 일방의 승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맺어짐.
- 1945년 이후에도 프랑스와 베트남, 프랑스와 알제리, 미국과 이라크의 경우에는 일방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 정전협정이 맺어진 경우라 할 수 있음.

## 프랑스와 베트남(1954), 미국과 베트남(1973)

-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의 정전협정은 사실상 한국의 정전협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병력 및 모기도입 금지, 전쟁포로 교환, 합동위원회와 국제위원회-캐나다, 인도, 폴란드)
- 문제는 이후 프랑스가 미국으로 바뀌면서 정전협정이 무효화되었다는 점.
-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협정은 평화협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정전협정과 유사.

## 한국 정전협정의 성격

- 일반적으로 정전협정 내용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음.
- 포로교환, 민간인 귀환: 1907년 만국평화회의 육전규칙(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20조 포로송환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after the conclusion of peace)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정전협정에는 포로교환 조항이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협정.
- 한국의 정전협정은 준 평화조약에 해당?
- 사실상의 전쟁 종료?

## 왜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는가?

- 미국의 입장: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정전만 하더라도 북이 곧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북한 정부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 남한과 북한의 입장: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현상유지를 의미. 이는 곧 통일정책의 포기. 한반도 상황이 통일을 염두해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전 대신에 종전 또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 중국과 북한의 입장: 어떤 형태의 조약이 되든간에 빠른 시간 내에 전쟁 상황을 중단 또는 종결하는 것이 필요.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가능한가?

- 가능하다.
  1. 남과 북이 통일을 절대적 과제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2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
  2. 미국이 중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한 상황. (1972년, 1979년 수교)
  3. 유엔 북한대표부가 뉴욕에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이 이미 실행.
- 불가능하다.
  1. 유엔군사령부가 그대로 존치.
  2. 미국이 중국을 참여시킬 의지가 없다.
  3. 북한의 비핵화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조건이 되어 있음.

## 현재의 변수

-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의견.
- 미중 간의 갈등
-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 한미 간의 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주둔비 협의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

## 실마리를 위한 조건

- 세계 경제상황의 악화
- 코로나 19로 인한 비전통적 안보를 통한 새로운 협력 관계 마련이 가능.
-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 남한의 상대적인 방역 및 경제회복 성공
- 미국이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전략.

## 몇 가지 가능한 옵션

- 남북 간의 불가침 조약을 우선 선언 => 이후 주변국들이 불가침 조약을 승인하기 위한 컨벤션을 조성.
- 중국이 종전선언에는 참여하되 평화협정에는 참여를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방안
-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표부 개설 및 상무대표의 상호 파견
-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목표로.

# 발표자 Presenter



**필영달** 산둥대학교 부교수, 중국

**Yingda Bi** Associate Professor, Shandong University, China

필영달은 2011년 중국 산둥대학교 동북아대학에서 재직한 이후 한반도 국제정치 연구와 한중관계, 남북관계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동 대학에서 2018년부터 부학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학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4년10월부터 2017년9월까지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전략연구원에서 포스트닥터 연구 과정을 마쳤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한반도 국제정치, 한중관계, 한미동맹이며 "한반도 평화와 다자안보협력 구상"을 비롯한 다양한 저서와 학술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Bi Ying-da, who has been teaching in School of Northeast Asia Studies, Shandong University since 2011, is mainly engaged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eaching courses related to Sino-South Korean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He has been vice President of Northeast Asia Since 2018. 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from Department of History in Jilin University, a master's degree from Th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doctorate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From October 2014 to September 2017, he did postdoctoral research in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From September 2020 to August 2021, he will do visiting research under the theme of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Korea-U.S. Alliance in Th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s include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Korea-US alliance. He has written many books and academic papers, including The Conception of Peace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역사를 통해 본 한중관계

산동대학교 동북아대학  
필영달  
2020.09.08

- 역사의 경험 교훈과 오늘의 동북아 정세
- 한중관계의 도전
- 한중관계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건언



## 1. 역사의 경험 교훈과 오늘의 동북아 정세

### □ 한국전쟁 발발 전의 정세

- 미국과 소련간 냉전의 동아시아로 확장
- 냉전 대립의 상황에서의 국지 열전
  - 한반도 분열 → 전쟁
  - 중국: 안보위협 인식 심각, 자국의 입장 무시당했음 → 참전
- 냉전구조,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고착
  - 압력이 있는 곳에 탄력이 꼭 있는 법이다.
  - 강대국 냉전대립 구도에 휩싸인 약·소국들이 불안정, 분열, 전쟁 등을 피하기 어렵다.
  - 일방적 사고와 행동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게 마련이다.

## 1. 역사의 경험 교훈과 오늘의 동북아 정세

### □ 한중 수교-냉전구도 타파

- 국제 환경
  - 미소 냉전 종결, 국가 자율성 증대
  -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 부각 및 확장
- 한중 양국의 고려
  - 중국: 실용주의 외교노선;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국제 제재와 봉쇄 타파; 통일의 목적;
  - 한국: 북방정책 목표 달성 노력; 해외시장 진출; 통일 주도권 경쟁
  -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차이 초월 필요
  - 실용주의 노선 채택, 공동이익 창출
  - 서로의 입장 존중

## 1. 역사의 경험 교훈과 오늘의 동북아 정세

### □ 오늘날의 동아시아지역 정세

- 미국의 아태전략→인태전략
- 중미 경쟁 구도 고착화→신냉전으로 비화
  - 정치, 경제, 안보, 기술, 인적 교류 등 대립 양상
- 강대국 경쟁으로 지역 불안정 내지 충돌 가능성 증대
- 지역 국가간의 관계 복잡화
- 지역 국가들의 선택 딜레마 봉착

## 2. 한중관계의 도전

### □ 전략차원

- '동맹우선'의 인식
- 인태전략 가입
- 신냉전구도

### □ 안보차원

- 한국: 북핵위협 인식→ '동맹우선' 인식을 강화시킴→ 동맹안보 강화
- 중국: 한미동맹의 강화를 중국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 인식

## 2. 한중관계의 도전

### □ 경제·기술차원

- 對중국 의뢰 축소
- 서로 보충 관계 → 경쟁 관계

### □ 가치관 차원

- 한국: 민주주의 가치 강조의 여론 점증
- 중국: 체제우월성 강조의 여론 대두

## 3. 한중관계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건언

### □ 기본 상황 인식

- 평화와 발전 여전히 이 시대의 주제
- 한중,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 수호에 공동 목표
- 한중, 발전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에 공동 목표
- 이러한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협력 필수
- 냉전과 한중 수교의 역사 경험과 교훈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

### 3.한중관계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건언

#### □ 전략소통 강화 필요

- 신냉전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 인식 강화
- 한국: '동맹우선'의 인식 전환 및 중국견제 지향의 행동 회피
- 중국: 전략의도의 투명성 향상 필요

### 3.한중관계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건언

#### □ 안보 차원

- 실적을 내면서 전략적 신뢰 점차 구축
- 위기상황의 공동관리
- 한반도 평화 구축에 협력 강화
- 잠재적 위협의 현실화 방지 노력

### 3. 한중관계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건언

#### □ 경제·기술협력 심화 필요

##### ➤ 한국:

- '인태전략' 가입 상황에서 중국 견제행동 회피, 입장 미리 표명
-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과의 경제, 기술협력 추진

##### ➤ 중국:

- '일대일로'에 한국 동참의 공개요구 불필요, 실제 협력 더 중요

#### □ 가치와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야 한다

- 세계화, 다극화, 다원화의 상황에서 다 같이 동일한 가치관과 제도를 가질 수 없다. 서로 존중과 이해의 바탕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할 필요

# 토론자 Discussant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Jaewoo CHOO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주재우는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이다. 그는 미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관심있는 주요 연구는 중국 외교 정책, 다자안보협력,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이다. 최근에 출간된 그의 저서는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 6.25 한국전쟁에서 사드 갈등까지" (서울: 경인문화사, 2017),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서울: 종이와 나무, 2018) 등이 있다.

Jaewoo Choo is Professor of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at Kyung Hee University. He is a graduate of Wesleyan University (BA in Government) and Peking University (MA &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interests are Chinese foreign policy,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US-China relations,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US-China relations for Koreans: From Korean War to THAAD Conflicts (Seoul: Kyung-In Publishing House, 2017), US and China'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Reading from the Facts (Seoul: Paper & Tree, 2018).

# 토론자 Discussant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Monica HAHN**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한모니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입니다. 연구분야는 한국전쟁과 접경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남북 분단과 통일, 평화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수복지구, 신해방지구 연구에 이어, 최근에는 비무장지대(DMZ)의 역사와 비평화 실태를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4.19와 남북관계>>(공저),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공저), <<분단의 역사인식과 사유를 넘어>>(공저) 등이 있습니다.

Hahn Monica is Humanities Korea professor at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main academic research areas include division and unification of Korea, the Korean War and North/South Korea border region. She is author of the Korean War and Reclaimed Area, A Study on Occupation Policie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its Legacy after the war(Coauthor), 'The Korean Question' in Asia-'the German Question' in Europe: Search for the Way of Reunification(Coauthor), A History of Korea(Coauthor), and so forth.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0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September, 7<sup>th</sup>(Mon) - 9<sup>th</sup>(Wed), 2020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Past, Present and the Future

PROGRAM BOOK

DAY2



# Keynote Speech

## WFP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및 국제협력

## WFP'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to Address the Needs of the Vulnerabl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기조연설자  
Keynote Speaker

데이빗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David BEASLEY 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기조연설자 Keynote Speaker



**데이빗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David BEASLEY** 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은 2017년 4월부터 세계 최대 인도적 기구인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1살에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1995-1999) 출신인 비즐리 사무총장은 40여 년간 정치, 종교 및 인종적 경계를 넘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의 경제 개발, 교육, 종교 간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에는 Center for Global Strategies를 공동설립하고 2011년에는 Peace Research Endowment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클렘슨 대학을 졸업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강의하였습니다. 또한, 존 F. 케네디 재단으로부터 용기 있는 인물상(The John F. Kennedy Profile in Courage Award)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As Executiv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 David Beasley continues his life's work bridging political, religious and ethnic boundaries to champion 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At WFP, Mr. Beasley is putting to use four decades of leadership and communications skills to mobilise more financial support and public awareness for the global fight against hunger. Before coming to WFP in April 2017, Mr. Beasley spent a decade working with high-profile leaders and on-the-ground programme managers in more than 100 countries, directing projects designed to foster peace, reconciliation and economic progress. As Governor of the U.S. state of South Carolina from 1995 to 1999, Mr. Beasley guided the state during years of economic transformation, helping to reshape the state's economy into a healthy, diverse and robust market. The work led to one of the lowest unemployment rates in the country, with a dramatic increase in private sector capital investment. Mr. Beasley was the first Governor in South Carolina to make a public push for the removal of the Confederate battle flag from the state capitol dome, a move that earned him the John F. Kennedy Profile in Courage Award. Mr. Beasley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from Clemson University and a Doctor of Jurisprudence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and taught at the Harvard University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e was first elected to public office at the age of 21 as a member of the South Carolina House of Representatives.

---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be a part of this extremely important conversation today. I'm just sorry that I could not be with you in person, but the circumstances are as they are. The World Food Programme, we are the world's largest humanitarian agency fighting global hunger. Last year, we reached nearly 100 million people in over 8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th food assistance. And this year, we're looking to scale up to 140 million people.

At the World Food Programme, we have a long history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with the peoples of the Korean Peninsula. For many years, we have work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every child--no matter where she or he lives--has a healthy and nutritious diet to provide for their food, their family.

The World Food Programme, we've been present in DPRK since 1995. And in partnership with the authorities,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o reduce hunger and malnutrition in the past 25 years. For example, analysis by UNICEF found that chronic malnutrition among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has fallen significantly since 2012, from 28% to 19%. Nevertheless, today, chronic hunger is a fact of life for millions of people in DPRK, caused by a diet short on essential protein and micronutrients.

The program WFP runs in the country are designed to address these specific needs. We provide specialized nutritious foods for pregnant and nursing women and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distributed through a network of over 1000 kindergartens, schools, orphanages, and hospitals.

These foods are produced by 11 factories across the country set up back in the 1990s when WFP first experimented with local food production and are still going strong today. The WFP program is run in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of DPRK, which provides most of the food eaten by the women and children enrolled in our programs.

WFP's specialized foods provide essential vitamin, protein, and energy supplements to these children at the most critical time of their lives. This nutritional support has been particularly important since children returned to school in June, after they were closed due to COVID-19. Many DPRK citizens are also at risk from hunger caused by extreme weather such as droughts, floods, and tropical cyclones. These can cause rates of hunger and malnutrition to spike and provoke humanitarian crisis. We saw this most recently in 2017 and 2018, when drought left 10 million people acutely hungry and in need of urgent food assistance.

The World Food Programme and the wider humanitarian community in DPRK, we stand ready to respond to these sudden emergencies whenever they occur. But any successful effort to improve food security in DPRK is critical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also underpin the global community's engagement with the DPRK government.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WFP had unparalleled access to the country and more access to its citizens than any other international agency, NGO, or diplomatic mission.

As COVID-19 restrictions have led to the withdrawal of staff from most of the diplomatic missions in Pyongyang, UN staff--even at reduced levels--are among the only internationals left in the country today. Their continued presence is critical not only for the delivery of essential assistance, but also for the continued engagement with the DPRK government. In the longer term, post-COVID, we face another significant obstacle to effective humanitarian assistance in DPRK. And that is a shortage of funds. Earlier this decade WFP had five offices outside Pyongyang with international staff and direct access to 115 counties where we provided food assistance.

Today, its funding has fallen. We've been forced to have our operational areas and close all of our offices outside of Pyongyang. Immediately before the COVID outbreak, our operations covered 60 counties and nine provinces. I am grateful to the World Food Programme donors, to you, and many people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nd private citizens who have continued to fund our operations in DPRK, recognizing that neutrality and impartiality are fundamental principles which underpin our work. And I pay tribute to the strong sup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its people which has consistently backed up WFP in recent years.

I look forward to strengthening our partnership even further under the leadership of Minister Lee. In just one generation,

your nation went from aid recipient to aid donor. Today, the Republic of Korea is WFP's largest government supporter around the world. It is truly inspirational and an inspirational journey which proves that with commitment and hard work, zero hunger is achievable.

You are a tremendous example of everything that we share and strive for at WFP. I hope your nation's story inspires the wider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nd the expansion of the humanitarian programs which are still desperately needed in the Korean Peninsula, programs which provide vaccinations and preventable illnesses, fortified foods to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and resilient defenses against floods and droughts. The profoun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has made this task even more urgent, but I am confid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he key which can unlock a brighter future for the children of DPRK. This is our chance to create the better world we all want to see. If we work together in partnership, we can achieve our shared ambition. Thank you.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대화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세계 기아에 맞서 싸우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기관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전 세계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의 1억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1억 4천만 명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에서 우리는 한반도 사람들과 오랜 파트너십과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여 모든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영양 있는 식단과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995년부터 북한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북한의 당국과 협력하여 지난 25년 동안 기아와 영양실조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세프의 분석에 따르면 5세 미만 어린이의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2012년 이후 28%에서 1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필수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으로 인해 만성적인 기아는 북한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 현실입니다.

WFP가 북한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1,000개 이상의 유치원, 학교, 고아원,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임신부, 수유부 및 12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영양강화 식품을 제공합니다.

이 식품은 WFP가 처음으로 현지 식품생산을 실험한 1990년대에 설립된 전국의 11개 공장에서 생산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FP 프로그램은 북한 정부와 협력 하에 운영되며, 대부분의 식량은,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 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제공됩니다.

WFP의 영양강화 식품은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필수 비타민, 단백질, 에너지 보충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영양 지원은 어린이들이 COVID-19로 인해 문을 닫았다가 6월에 학교로 돌아온 이후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북한 시민들은 또한 가뭄, 홍수, 열대성 저기압과 같은 극심한 날씨로 인한 기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아와 영양실조의 비율이 급증하고 인도주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최근에 2017년과 2018년에 가뭄으로 인해 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긴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과 북한에 있는 인도주의 공동체는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노력은 국제사회의 협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 협력은 또한 국제사회의 북한 정부에 대한 관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COVID-19 전염병 이전에 WFP는 다른 어떤 국제기관, NGO 또는 외교 사절보다 북한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OVID-19 방역조치로 인해 평양에 있던 외교 공관 직원들이 철수함에 따라 유엔 직원은 오늘날 북한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외국인들 중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상주는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와의 지속적인 관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COVID 이후 우리는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장애물에 직면 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 부족입니다. 최근 10년간 WFP는 평양 외부에 5개의 사무소를 두고 외국인 직원을 두고 있으며 식량을 공급한 115개 지역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리구역을 확보하고 평양 외의 모든 사무실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COVID 발발 직전에 우리의 사업은 60개 카운티와 9개 주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는 세계 식량 프로그램의 기부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사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해 온 많은 사람들과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우리 사업을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임을 인식하고 있는 민간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WFP를 꾸준히 지원해온 대한민국 정부, 국민들의 강력한 지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의 지도 아래 우리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 한 세대 만에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자에서 기증자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식량계획의 가장 큰 후원국입니다.

그것은 헌신과 노력으로 굶주림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영감을 주는 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WFP에서 공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모범입니다. 저는 여러분 나라의 이야기가 한반도에서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인도주의 프로그램, 예방 접종 및 예방 가능한 질병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어린 아이들과 어머니에게 영양강화 식품, 그리고 홍수와 가뭄에 대한 탄력적인 방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확장을 위해 더 넓은 국제 사회에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COVID-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이 과제가 더욱 시급해졌지만 저는 국제사회 협력만이 북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고 싶어 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공동의 야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ession 4-1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from SDGs Perspective

주관기관  
Organized By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좌장  
Moderator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  
**Hong Won CHUNG** Director, Department of Future Strategies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표자  
Presenters **이지선**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연구교수  
**Jisun Yi**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Kyung Hee University  
**송철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Cheol Jong SONG**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토론자  
Discussants **노법래** 세명대학교 교수  
**Beop-rae ROH** Assistant Professor, Semyung University  
**모춘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Chunheung MO** Research Professor, Hanyang Peace Institute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Kichae MIN** Assistant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Eun Mee JE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4-1)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2016년에 북한은 유엔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에 합의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SDGs 관점에서의 개발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엔의 SDGs에 조응하는 전략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세부목표와 지표, 그리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류협력은 효과성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SDGs 관점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from SDGs Perspective

North Korea and the UN have agreed in 2016 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An outcome of North Korea's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line with SDGs, the Framework is pertinent to inter-Korean cooperation. Furthermore, inter-Korean cooperation, as it requires mid- to long-term commitments, needs strategic plans in keeping with the UN's SDGs. For cooperation to be sustainable as well as effective, it should be proceeded with objective data-detailed targets and indicators. Thus, this session is aimed at examining inter-Korean cooperation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from the perspective of SDGs.

# 좌장 Moderator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

**Hong Won CHUNG** Director, Department of Future Strategies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정홍원(Chung, Hong won)은 2010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여 왔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분석 및 지역복지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Chung is Research Fellow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since 2010, and served as a Professor of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 ministerial aide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 is a Ph. D.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Yonsei University, and in charge of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and regional welfare.

# 발표자 Presenter



**이지선**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연구교수

**Jisun Yi**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Kyung Hee University

이지선(Jisun Yi, Ph.D.)은 2018년 영국 King's College London에서 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경희대학교 임용 이전에는 세계은행(2016~2017)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였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the Empirical Studies of Conflict Project(ESOC)에서 Guest Researcher(2016~2017)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점연구분야는 해외원조, 아프리카, 무력분쟁 & 평화, 취약국, 지속가능발전, 대북지원입니다.

Jisun Yi was trained at King's College London and earned a PhD degree in Development Studies in 2018. She is currently a Research Professor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t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Before joining Kyung Hee Univ., she worked as consultant (2016~2017) at the Fragility, Conflict & Violence (FCV) Team, the World Bank Group. Jisun also participated in research projects at the Empirical Studies of Conflict Project, Princeton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are rested on foreign aid, Africa, armed conflict, sustainable development, state fragility, an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etc.

#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북한에 주는 사회경제적 의의

## SDG 1(빈곤 종식)을 중심으로

김지선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소

이 발표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과제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의 일부로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차례

- 연구 배경
- 연구 질문 & 접근법
- 분석 내용
- 맺음말



## 연구 배경

- ◆ 새천년개발목표(MDG, 2000~2015)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2016~2030):  
글로벌 발전 목표의 구체화 그리고 확장
- ◆ 빈곤 담론의 변천과 오늘날: 빈곤 개념의 다각화
- ◆ SDG의 “내재화” 내지 “실천” 과정 상 SDG 세부목표들과 국가 사례 간의 간극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
- ◆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빈곤, 그 연결선상에서 기초연구 실시  
*“북한의 복지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Forthcoming)”*

Sep 8, 2020

KGFP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션

2

## 연구 질문 & 접근법

국제발전목표가 북한에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의의”

- ❖ SDG의 개도국 내재화 과정 상 북한의 특수성에 주목
- ❖ 북한의 SDG 1에서 말하는 ‘빈곤’에 대한 개념 수용 및 데이터 상호응도
- ❖ 북한 주민, SDG 세부 목표에 대비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는 발생 가능(또는 예측)한지 논의 코자

Sep 8, 2020

KGFP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션

3

## 연구 질문 & 접근법(2)

### 개발 목표와 데이터 간의 간극에 대한 이해와 고민 그리고 해결점

- ◆ 개도국에 따라 데이터 상황이 매우 다르나 대부분 “정부의 통계 역량의 부족” 문제로 접근 (블루머스톡, 2016)
- ◆ 특히, SDG 1, 발전 목표 중 최상위 그리고 포괄적 목표이나, 데이터 부족이 첨예하게 나타남.
- ◆ 빈곤 개념과 목표의 다각화와 지표의 다양화 (이지선, 2019) <-> 개도국 내 빈곤 캡처 수준은 여전히 낮음.

## 분석 구성 & 내용

1. SDG 1(빈곤 종식)의 세부 목표(target)와 세부 지표(indicator) 구성 및 연계성
2. SDG 1 대비 북한 (데이터) 현황
  -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가?
  - 다양한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해 구현
3. SDG 1 세부목표별 사회경제적 의의 (국제, 지역적 그리고 북한)
  - 국제 빈곤선 및 국내 빈곤선 중심의 빈곤퇴치
  -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전반적 보호 & 빈곤퇴치를 위한 자원 및 정책수단 확보

SDG 1.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을 지구상에서 종식시킴. 다시 말해, 모든 세계 인구가 하루 일인당 1.25달러 이상 획득하거나 소비하도록 함.
	1.2 2030년까지 납세, 여성, 아동을 아우르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국가별 경제에 따른 모든 영역의 빈곤 수준을 50%로 축소함.
	1.3 2030년까지 국내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과 조치들을 구현함.
	1.4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립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모든 형태의 재산 및 부동산, 상속 받은 재산, 천연자원, 적절한 신기술, 금융채원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장함.
	1.5 2030년까지 취약한 상황에 직면한 빈곤층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타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 및 재앙 등으로 인한 빈곤층의 위험과 취약성을 축소함.
	1.A 모든 범주의 빈곤 종식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구현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식량과 애용가능한 수단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재원확보 및 활용함.
	1.B 빈곤 종식을 지지 그리고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에서 빈민국의 성장, 양성평등에 기반한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건전한 정책 프레임에 수립함.

## SDG 1: 세부 목표

세부지표	
1.1.1	국제빈곤선(하루 1.25달러) 이하의 인구비율(성별, 나이, 고층어부 그리고 도시/농촌지역에 따른 구분 포함)
1.1.2	국내빈곤선 이하의 인구비율(성별, 나이에 따른 구분 포함)
1.2.2	국내빈곤기준들에 모두 충족한 남녀, 그리고 모든 연령의 아동인구 비율
1.3.1	사회보호제도 혜택을 받는 인구비율(성별, distinguishing children, 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임신부, 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및 빈곤, 취약계층 별로 구분 포함)
1.4.1	사회기초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속한 인구 비율
1.4.2	도시 보유/보호 권리를 보장 받는 성인 인구 비율: (a) 법적으로 인정받은 문서로 보장 받거나 (b) 도시 보유권리를 보장받음을 인식하는 인구(성별과 도시소유권 유형에 따른 구분 포함)
1.5.1	자연재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실종 그리고 사망한 인구 수 (십만 명 당)
1.5.2	국제 GDP 대비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5.3	재난위험저감을 위한 선단이 프레임워크의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재난위험저감전략을 적용 및 이행하고 있는 지역정부의 비율
1.a.1	국내적으로 생산된 자원 중 정부에 의해 빈곤 감소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율
1.a.2	교육, 보건 및 사회보호 등의 기초 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출 비율
1.a.3	빈곤감소프로그램에 투자된 중여의 부채 발생시키지 않는 국내유입재원의 합계(GDP 비율)
1.b.1	불규칙적으로 여성, 빈곤/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책터들을 위해 정부가 자금지출하는 비율

(출처: Global Indicator Framework After 2019 Refinement, 해당 보고서는 50<sup>th</sup> session of UN Statistical Commission(2019년 3월에 개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었고 업데이트 된 내용을 기반으로 치자가 번역함<sup>3)</sup>)

## SDG 1: 세부 지표

## SDG 1: 세부 목표와 세부 지표

- ❖ 2030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 ❖ 금전적/경제적 기준(국제 빈곤선)의 빈곤 개념뿐만 아니라 역량/권리 중심의 빈곤개념들도 포함함.

### "세부 목표-세부 지표" 연계성 차원

- ❖ SDG가 전반적으로 가지는 설정 상의 문제점: 세부 목표들은 다소 야심차고 구체적으로 설정된 반면, 이를 반영할 지표 의 설정에 있어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성 보임.
- ❖ 세부 지표 선정 과정 상 기술적 요인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 개입 (푸쿠아파 & 맥널, 2019)
- ❖ SDG의 세부 목표와 세부 지표 간의 호응성, 국가 및 지역마다 매우 상이

Sep 8, 2020

KGFP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션

8

## SDG 1 대비 북한의 현황

- ❖ 국제 빈곤선(세부 지표 1.1.1: 하루 일인당 1.90달러의 소비 또는 소득 수준 이하를 보이는 인구 비율) 대비 공식 데이터 부재
- ❖ 실제, SDG 상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않는 분야임.
- ❖ 인공위성을 통해 획득된 인구 활동 데이터(2007년 기준) 활용 했을 때, 총 인구의 65.1% 빈곤 인구로 추정 (엘비지 외, 2009)
- ❖ World Data Lab에 따르면 북한의 최빈곤 인구는 총 인구의 67%(2천5백만 명 중 천7백만 명) 추정 (비교: 모잠비크(57%), 예멘(58%), 콩고민주공화국(76%), 에리트리아(77%) )

Sep 8, 2020

KGFP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션

9

## SDG 1 대비 북한의 기대 달성률

<표 3> World Poverty Clock 가 예측한 북한의 SDG 1.1 기대달성률

최빈곤 인구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인구 수 (백만 명)	17.0	15.5	14.9	14.2	13.5	12.8	12.0
인구 비율 (백분율)	67	61	58	55	52	49	46
도시지역 인구 수 (백만 명)	10.6	9.6	9.3	8.8	8.5	8.4	7.8
비도시지역 인구 수 (백만 명)	6.3	5.8	5.6	5.3	4.9	4.7	4.2

(출처: World Data Lab의 World Poverty Clock(검색일: 2020.05.10.))

##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표 4>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2014~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서양자, KPW 실역)	1,717.7*	1,751.3*	3,806.0*	-	-
GDP (미화 실역분)	17.4*	16.3*	16.8*	-	-
GDP 성장률 (%)	1.0*	-1.1*	3.9*	-3.5*	-1
수출 (미화 백만불)	4,365	4,150	2,980	1,850	-
수입 (미화 백만불)	-5,585	-4,820	-3,860	-3,930	-
무역수지 (미화 백만불)	-1,220	-670	-870	-2,080	-

\*출처: 2019년 5월 FAO와 WFP가 공동으로 발행한 보고서(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 SDG 1의 사회경제적 의의: 국제/지역적 수준

- ◆ 다소 무리한 목표치와 타임라인을 설정; 빈곤 감소라는 사회경제적 현상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라벨리온, 2020)
- ◆ 빈곤 감소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 가장 빈곤 현상이 극심하고 집중된 아프리카 맥락과 현황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 (랭지 & 크레이슨, 2017; 모이어 & 헤든, 2020)
- ◆ 빈곤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 전략 및 개입 주체에 대한 언급을 여전히 누락 (승급타, 2018)

## SDG 1의 사회경제적 의의: 개별 국가 수준(북한)

- ◆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SDG의 주요지표들과 관련해 북한의 데이터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임.
- ◆ SDG의 세부 지표들 중 약 20~40%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유엔의 공식적인 SDG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포함을 시키지 못함. (박지연 외, 2016 ; 삭스 외, 2016)
-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절대적 개념의 빈곤에 대한 실제적인 수용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SDG 1의 사회경제적 의의: 북한

### 다중지표군집조사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Report)

- ◆ 북한 정부(2009, 2012, 2017)의 통계자료수집과 분석은 빈곤의 일부 개념인 기아와 보건 초점
- ◆ 부분적으로 SDG1과 매칭 가능한 MICS 데이터는 1.4.1[기초 서비스 접근성]에 해당되는 식수 제공 서비스(왕복 30분 내 접근 가능한 식수원이 보유한 인구비율) 그리고 개인당 향상된 위생시설을 보유 및 접근성(93.2%, 81.5%)(MICS, 2017, p.7-13) .
- ◆ \*재산지표(wealth index), 대체적으로 활용 가능: 재산 지표 상 하위 20%가 총 인구의 약 19%(남성의 경우, 18.8%; 여성, 19.9%) 차지
- ◆ 하위 20% 재산인구집단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량강도; 이들 인구 집단은 평양에서 가장 적게 거주

\*별도 지표는 주거환경시설(예를 들어, 우천건축자재), 가정용물(예를 들어, 식수)도비판적(식수) 접근성, 열차/버스 및 토지/가정 소유 그리고 전기, 통신, 물, 위생, 방한시설등의 집,   
Sep 8, 2020 KGF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션

## 맺음말: 개발협력의 한계와 기회로서의 “데이터 문제”

- ❖ 세부 목표와 세부 지표 간의 호응성 => 국제개발협력 부문, 만드는 입장 (SDG setters & Donor community)과 수용하는 입장 (Partner community) 차이

### 북한 사례

- ❖ MDG시대를 거쳐 북한은 국내 빈곤 문제가 이전보다 악화되고 국제사회 지원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SDG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보임.
- ❖ SDG에 대한 북한 정부의 인식과 참여 의지가 최근 들어 가시적

## 맺음말: 개발협력의 한계와 기회로서의 “데이터 문제”(2)

- ❖ 북한의 빈곤 실태를 가늠할 데이터가 최근까지도 비교적 부재; 활용 가능한 데이터도 식량, 영양상태, 그리고 식수 접근성으로 제한
- ❖ 빈곤 관련 데이터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첨예; 그러나 SDG 1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개도국 내 데이터 부족문제는 여전히 반빈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중대한 개발 난제
- ❖ 단순히 데이터 발굴, 생성 및 통계 역량 부족으로 설명이 충분치 않음;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유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발전 목표 설정과 제안에 있어 “유연한 전략 및 접근” 필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박지연·문경연·조동호. (2016). UN지속가능개발목표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 행지표 고찰. *담론* 201, 19(4) 123-147.
- Blumenstock, J. (2016). Fighting poverty with data. *Science* 353, 6301.
- Doidge, M. and Kelly, S. (2018). SDG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 everywhere. *Jean Monne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twork Policy Brief Series*.
- Elvidge, C.D., Sutton, P., Ghosh, T., Tuttle, B., Baugh, K., Bhaduri, B., and Bright, E., (2009). A global poverty map derived from satellite data. *Computers & Geoscience* 35.
- Ravallion, M. (2020). SDG 1: The Last Three Percent.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orking Paper 527* (March).
- Sachs, J., et al. (2016). *SDG Index and Dashboards: A Global Report*.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Sengupta, M. (2018). Transformational change or tenuous wish list?: A critique of SDG 1. *Social Alternatives* 37(1).
- Yi, Jisun. (2019). Making sense of extreme poverty: An essay on of the 1.90-dollar international poverty line, *Oughtopia* 34(3).

# 발표자 Presenter




**송철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Cheol Jong SONG**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송철종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두 가지 큰 주제에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 생산성, 실질환율에 대한 관심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적 이슈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연관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Dr. Song is currently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Korea. He achieved MA and Ph.D in Economics from Korea University. He has two main research topics based on his economic interest of economic growth. He has a massive interest in economic growth, productivity and exchange rate. In addition, he is looking at Korean Unification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s a regional topic he has looked at the economic relationship in the northeast Asia.

2020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남북한 보건복지 분야 교류협력 과제

2020.09.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철중

※ 이 발표자료는 조성은 외(2019)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목차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배경
-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
- 유엔전략계획의 합의 배경
- 유엔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 유엔전략계획과 북한의 변화/의의
-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에서의 주요과제
- 보건복지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 과제와 남북 교류협력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 배경

###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과와 한계

	새천년개발목표(MDGs)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문제가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의제로 자리 잡도록 중요도를 제고함</li> <li>○ 소득뿐 아니라 영양, 교육, 보건, 식수위생, 성평등 등 빈곤의 다양한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 중심의 국제 개발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의 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점 역할을 수행함(이창민, 오유석, 2017, p. 168).</li> <li>○ 인류 역사상 가장 단시간 내 빈곤 감소가 이루어짐(UN, 2013)</li> </ul>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빈층과 가장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충분히 초점을 두지 않음</li> <li>○ 분쟁과 폭력이 발전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에 대해 다루지 않음</li> <li>○ 법의 지배, 표현의 자유, 개방성 및 책무성을 지닌 정부를 보장하는 좋은 거버넌스의 제도가 발전에 갖는 중요성도, 일자리를 제공할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도 포함하지 않음</li> <li>○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들을 통합하지 못함</li> <li>○ 소비와 생산의 지속가능한 패턴을 증진할 필요성을 다루지 못함</li> <li>○ 환경과 발전의 문제가 함께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함(UN, 2013, Executive Summary)</li> </ul>

### 나. 포스트 2015 글로벌 발전 방향 논의

유엔 사무총장은 '포스트 2015 고위급 패널'을 구성하여 MDGs가 종료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발전 목표에 대한 자문 제고를 요청함  
 → "모든 사회가 관여하고 함께하는 보편적 의제로서 실천되고 달성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SDGs를 채택함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추진 배경

제70회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2015. 9.25 ~ 2015. 9.27)에서 채택된 『세계변혁: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새롭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UN, 2015)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
구성	[포괄성]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대한 이슈를 포괄 8개 목표 + 21개 세부 목표	17개 목표 + 169개 세부 목표
범주	[변혁성]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발전 경제발전과 사회/인간개발	환경의 지속성, 평화, 정의, 제도 등 추가
대상	[보편성]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 강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발전	선진국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 포함 (일자리, 지속가능 도시/소비 및 생산, 기후)
재원	[다층성] 정부 및 공공/민간재원 활용 정부의 ODA 중심 개발 원조	민간협력 파트너십, 기업 참여 확대
참여주체 거버넌스	[포용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DAC(개발협력위원회) 선진국 위주 남북협력	DAC선진국 + 인도, 브라질, 아랍국가 포함 남남협력 포괄
평가	[책임성] 보고의 의무 추가 실천 과정 자발적 보고	이행 과정, 성과 의무 보고

출처: 박지연,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 세미나 발표자료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주요 내용 (SDG 17개 목표)

번호	SDG	지속가능발전목표
1	빈곤종식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해결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건강과 복지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에게 물과 위생설비의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모두에게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
8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10	불평등 해소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보장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대응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해양생태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생태계	육상 생태계 보호복원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수단 강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자료: 환경부, (2018)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p.42 (<http://ncsd.go.kr/api/unsdgs3?EA%B5%AD%EB%AC%B8%EB%B3%88>)에서 2019. 4. 1. 인용

5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주요 내용 (SDGs와 인권의 연계)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권과 인간의 존엄, 법의 지배, 정의,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지향함(UN, 2015, p. 4)
- 모두 명시적으로 인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두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함(UN, 2015, p. 1)

개별목표	권리
SDG 1 (빈곤 종식)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SDG 2 (기아 종식)	식량권
SDG 3 (건강 보호와 증진)	건강권
SDG 4 (양질의 교육 보장)	교육권
SDG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 강화)	직접적으로 성평등 및 여성의 인권
SDG 6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 보장)	물에 대한 권리
SDG 8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노동권,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삼권
SDG 10 (불평등 완화)	차별 금지와 평등
SDG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정의에 대한 접근,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책임성 있는 제도 구축)	차별 금지와 평등, 기본적 자유, 정보접근권, 사법접근권

출처: Golay, 2016; 이성훈, 2017

6

## 유엔전략계획의 합의 배경

2016년 9월 1일  
유엔 북한팀과 북한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가  
“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 ”이 핵심인  
유엔과 북한간의 협력을 위한  
『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에 합의

- \* 북한에서 유엔의 활동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서  
북한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 위한  
북한 정부의 활동 지원



이미지 출처: UN

7

## 유엔전략계획의 합의 배경

- 단기/인도적인 필요 충족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개발역량 강화(근본적 개선책) 또한 포괄/종합적으로 고려함  
(UN/DPRK, 2016, p. 8)
- 북한만의 특수성에 맞는 SDGs를 적용하고 인권 중심 접근법을 채택함  
(UN/DPRK, 2016, pp. 8-9)
- 북한은 체제 유지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  
개선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며(모춘홍, 최진우, 2018, p. 159),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김수경, 2019, p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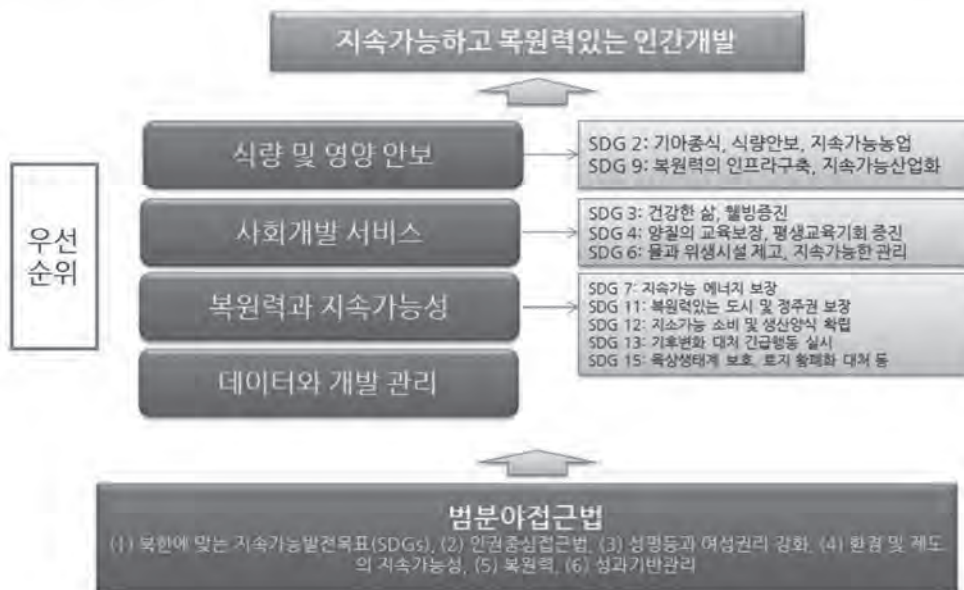
## 유엔전략계획의 주요내용 (북한에서 유엔의 역할)

### 지역과 국제사회를 연결: 북한에서 유엔의 다양한 역할

1. 관계 형성과 국가 역량 구축	지식 전달 / 정책 대화
2. 합동 상황 분석과 정책 대화	
3. 국제적 가치와 표준 장려	
4. 국제적, 지역적 공리 증진	자원 전달 / 사업 실행
5. 국가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6. 즉각적인 인도적 필요에 대한 대응	

자료: UN/DPRK (2016). Country Team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무리민주사회주의운동 역,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p. 12.

## 유엔전략계획의 주요내용 (사업 내용 흐름도)



자료: 김태균, (2017). 유엔북한 전략계획 2017-2021: 합의 및 전망, 신청부의 대북지원 정책방향 모색 및 대북지원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p. 42.

## 유엔전략계획의 주요내용 (우선순위 및 성과 목표)

우선 순위	세부 내용
1 식량 및 영양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원예, 어업, 축산 부문에서 식량 생산, 생산성, 가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li> <li>모든 가계가 언제나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삶의 질을 제고함</li> <li>가임기 여성, 5세 미만 아동, 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함</li> </ul>
2 사회개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주민들, 특히 취약한 인구집단과 외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일차의료 개선 및 일관되고 공평하며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함</li> <li>전염비전염성 질환,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들이 겪는 모성-유아 질환에 대해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li> <li>보건 분야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함</li> <li>가정, 교육기관, 의료시설, 특히 가장 취약한 가구와 집단들에 대해 적절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물-위생시설을 보급함</li> <li>유치원, 소학교, 중등학교, 3차 교육기관, 그리고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 부문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형평성을 제고함</li> </ul>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지역공동체, 특히 여성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및 대응력을 제고함</li> <li>지역공동체,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원에 대해 접근함</li> <li>환경 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 위험 관리 부문에서 정부 기관들의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업을 수행함</li> </ul>
4 데이터와 개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기획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인도-개발 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가용성을 제고함</li> <li>국제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역량을 강화함</li> <li>국제 조약, 협약, 기타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 체계를 강화함</li> </ul>

자료: UN/DPRK. (2016). Country Team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p. 26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유엔전략계획의 주요내용 (SDGs 목표가 적용된 전략 우선순위)

우선 순위	세부 내용
1 식량 및 영양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DG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함</li> </ul> </li> <li>-SDG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원력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도모하며, 혁신을 장려함</li> </ul> </li> </ul>
2 사회개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DG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함</li> </ul> </li> <li>-SDG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함</li> </ul> </li> <li>-SDG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함</li> </ul> </li> </ul>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DG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를 위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li> </ul> </li> <li>-SDG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를 조성함</li> </ul> </li> <li>-SDG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함</li> </ul> </li> <li>-SDG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실시함</li> </ul> </li> <li>-SDG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함</li> </ul> </li> </ul>

자료: UN/DPRK. (2016). Country Team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pp. 15-20.



## 유엔전략계획과 북한의 변화

-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 지원의 성격이 강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개발협력정책을 연계하여 작성된  
북한과 유엔 간 협력 로드맵 개념임
- 북한이 유엔 주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남북한의 교류협력도 북한의 이러한 공식적인  
대외 요청에 발맞출 필요가 있음

13

## 유엔전략계획의 의의

- 주요 사업기획 원칙으로서 SDGs와 인권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함
  - 인권 중심 접근법의 관점에서 전략계획의 핵심은 인간중심이라는 원칙과 인간개발의 촉진임
  - SDGs 16(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과 조응함
  - 평화구축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개발과 평화'와 '개발과 인권'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함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조건으로서  
평화와 인권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냄
- 국제규범으로써 평화와 인권이 남북교류협력에도 활용이 가능함

14

##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에서의 주요과제

### ●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의 의의

1. 북한 정부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수용적이며,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합의한 약속이므로 북한 정부도 이를 달성해야 할 의무를 가짐
2. 단기적인 인도적 상황 개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촉진, 인권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장단기 사회발전과 인권증진을 위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음
3. 유엔전략계획은 북한과 유엔의 협력 틀이자 원칙으로, 남북한 교류협력도 이러한 방향과 조응할 필요가 있음
4. 남북한 교류협력의 내용과 방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SDG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교류협력의 원칙이므로 남북한 교류협력 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가짐

## 보건복지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 과제와 남북 교류협력

### 전략적 우선순위 1 – 식량과 영양(SDG 2. 3. 6. 9)

#### <영유아 우선의 교류·협력 방안>

분야	북한 영유아 실태	교류·협력 방안
건강·영양	모유 수유 -모유 수유 비율 99.6%	-모유 수유를 못 하는 산모를 위한 분유 지원 * 분유는 끓는 물이 필요하므로 전기, 난방시설 설치
	발육 상태 -만성영양부족 19.1%	-취약지역, 저소득 가정에 의약품 지원
임산·출산	-모성 사망률도 개선됨(파산 중 면역 84.1%) -병원 출산 시, 아물, 옷, 음식, 빨간 등을 가지고 가야 함.	-모성 사망률 0%를 위해 취약지역, 저소득 가정에 의약품 지원 -산원에 물품 지원
위생	영유아 배설물 처리 -땅에 묻거나 투척하는 등 비위생적 방법	-화장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 * 쓰레기 소각시설이 미비하므로 일회용 기저귀 지원은 지양
	식수 -농촌 식수 오염 가구 45.2% -우물을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먹는 비율 83.2%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자료: 북한 실태는 UNICEF, (2018). 2017 DPR Korea MICS, 원안은 저자 작성.

#### <세계 영양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과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임산부 및 아기 엄마	-출산 전 미량 영양소 보충 ★ -영양 카운슬링(식이 교육 및 모유 수유 장려) ★ -임산부를 위한 균형적인 에너지·단백질 보충 -말라리아 빈발 지역에서 임산부 말라리아 예방 처치 ★
영유아	-비타민 A 보충 ★ -질병 예방을 위한 아연 보충 -보충적 식품의 공적 공급 -심한 급성 영양부족 치료 ★ -보충적 식이 교육 -모유 수유 장려 ★
가임기 여성 및 일반 주민	-15-19세 여학생을 위한 철분 및 엽산 보충 ★ -비임산부 여성을 위한 철분 및 엽산 보충 -주식 영양 강화(밀과 옥수수) ★ -주식 영양 강화(쌀)

주: ★는 우선적 추진 과제.  
자료: Meera Shekar, Jakub Kakietek, Julia Dayton Eberwein, and Dylan Walters. (2017). *An Investment Framework for Nutrition: Reaching the Global Targets for Stunting, Anemia, Breastfeeding, and Wasting* (Washington, D.C.: World Bank), pp. 147-149의 Table 7.4 and 7.5을 정리한 송재환, 김석진, 정문미, (2018). 북한 인생 실태 및 협력 방안, p. 167, (표 V-1).

## 보건복지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 과제와 남북 교류협력

### 전략적 우선순위 2 – 사회서비스(SDG 3, 4, 6)

<WHO 보건의로 부문 대북 지원 전략(2014~2019) 방향 개요>

우선 순위	전략	주요 해결 전략
1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비감염성질환 감시 및 비감염성질환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전략계획 이행 지원 ·부문 간 조차와 MPOWER measure package 시행을 통한 담배 통제에 관한 국가 당국 지원
2	취약성을 낮추고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성 및 아동 건강 개선	·임산부 건강 증진, 산과적 치료 및 신생아 관리 개선, 사망률 감소 및 MDGs 4 및 5 달성을 위한 노력 지원 ·입차 진료 및 병원 수준에서 아동기 질병의 통합 관리(IMCI)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지원 ·국가 재정산 건강 전략의 이행 및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 ·건강, 영양 및 위생 분야의 건강 클러스터 협력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WHO 유연 전략적 틀(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및 국가 건강 전략에 건강을 위한 모든 위험 비상사태와 재난 위험 관리 통합 ·지역적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건강을 위한 모든 위험 비상사태 및 재난 위험 관리 상황을 문서화하는 WHO 조사 도구 적용 지원
3	감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통합 질병 감시 강화 역할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지원 ·통역 소아마비, B형 간염 및 5가 백신에 대한 높은 예방접종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고(cMYP, 예방접종에 관한 10년간의 포괄적 계획에서 밝혀진 새로운 우선순위 백신 도입 지원 ·결핵의 발견과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말라리아와 이환율을 줄이고 재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추가 지원 ·성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적 노력 지원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전략계획 이행 지원 ·국제 문외와 관련된 공중보건 사건 합치 및 대응에서 국가의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정(IHR 2005) 이행 지원
4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북한의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한 종합 중기 전략계획에서 보건 분야의 파트너를 위한 정책과 전략적 방향 제시 ·국가 표준을 업데이트하고 표준 운영 절차(SOP)를 개정하는 데 국가규제기관(NRA)과 국가통제시험실(NCL) 강화 ·포괄적이고 통합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HIMS 강화 ·건강, 특히 중간 관리 및 1차 의료 공급자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 ·1차 의료에서 의료서비스의 품질 표준 업데이트 ·근거 기반 정책, 계획 및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양의학 및 전통 의학 연구 구축
5	지속가능한 국가 건강 개발을 위한 WHO 지원	·WHO가 촉진한 지역 및 국제 협력을 통한 건강 증진 파트너십 개선(강화) ·건강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 개선(강화) <small>·참고: WHO (2016),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2019, pp. 36-45, 조성은 외 (2018),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95-196에서 재인용.</small>

17

## 보건복지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 과제와 남북 교류협력

### 전략적 우선순위 3 – 복원력과 지속가능성(SDG 7, 11, 13)

#### ●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 사회발전 과정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하고, 주민들이 사회 발전의 결과를 형평성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6, pp. 15-16)
- 인권을 존중, 보호, 증진해야 할 협력 대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UN, 2003)
- 공여국이 협력 대상국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지 않고, 협력 대상국 자체가 인권을 증진하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UN, 2016, p. 8)

⇒ 지역공동체 단위의 개발을 통해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

18

---



감사합니다

# 토론자 Discussant



**노법래** 세명대학교 교수

**Beop-rae ROH** Assistant Professor, Semyung University

노법래는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복지국가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함께 불평등, 지역비교, 자살 문제 등을 주제로 학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공간 정보를 사회정책에 응용하는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생산된 대규모 언론 기사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북한의 사회정책 이슈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Roh Beop-ra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myung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comparative study of the welfare state. In addition to social security, we are conduct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inequality, regional comparison, mortality, and suicide. In particular, he is conducting various studies on applying big data and spatial information to social policies. He has recently researched North Korean social policy issues by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o large-scale media articles produced in North Korea.

# 토론자 Discussant



**모춘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Chunheung MO** Research Professor, Hanyang Peace Institute

모춘흥은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남북관계, 탈북민 사회통합, 분단체제 등이다. 현재 탈북민 사회통합, 분단체제, 통일사회복지 등의 주제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Mo Chunheung is currently a research professor at the Hayang Peace Institute. He was appointed Institute of Peace-Sharing at the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Seoul. He obtained his Ph.D and M.A at the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His research interests are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defectors, division system etc. His recent publications are in the fields of North Korean defectors, division system, unification social welfare.

# 토론자 Discussant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Kichae MIN** Assistant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민기채(Kichae Min) 교수는 2014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발전요인, 발전단계, 그리고 체제성격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연금제도 및 통일연금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통일사회보장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통일복지론, 복지국가론 등을 강의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통일 사회복지, 북한 사회복지, 탈사회주의 복지국가, 연금 분야입니다.

Professor Kichae Min received a Ph.D.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4, with the title of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the Welfare State in Post-Socialist Countries: Focusing on Development Factors, Development Stages, and System Characteristics. He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pension systems and unified pensions in the National Pension Institute since 2015, and has been conducting various unification social security studies. He teaches unification welfare, welfare state theor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e main research areas are unification social welfare, North Korean social welfare, post-socialist welfare state, and pension.

# 토론자 Discussant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Eun Mee JE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정은미(Jeong, Eun Mee)는 2018년부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하면서 장기간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시장을 매개로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행위 및 사회관계의 변화, 사회적 분화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동에 주목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정책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통일 및 대북 정책의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Jeong Eun Mee has been working in the KINU(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ince 2018. She served as a senior researcher at the IPUS(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07 to 2016 and focused on comprehensive analysis of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based on long-term survey data. She earned her bachelor's degree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her master's degree and doctoral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has long interested in social behavior,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differentiation derived from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Recently, she has closely observed by pay attention to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She served as a member of standing committee in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 member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in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 member of policy committee in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Session 4-2

## 남북 재난협력 방향과 과제

### Direction and Tasks of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좌장  
Moderator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oo-Am KIM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발표자  
Presenter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Kyu-Chang LEE Director,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토론자  
Discussants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Sin Gon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  
Nak-keun JEONG Direct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search Center(IKECR)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Bernhard SELIGER Resident Representativ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Ho Hong KIM Chief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4-2)

## 남북 재난협력 방향과 과제

한반도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사회재난과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난의 특수한 형태로서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적인 요소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복합적인 요소로 재난의 빈도 및 규모가 상승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은 남북한 상호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난협력이 필요하다. 본 세션에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재난협력 방향과 이에 따르는 과제를 살펴본다.

## Direction and Tasks of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witnessing the outbreak of social disasters such a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natural disasters including typhoon, flood, drought, and earthquake.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a volcanic eruption at Mt. Baekdu has consistently been raised, which can be categorized as a peculiar form of natural disaster. Climate change affecting natural events such as flood and drought and environmental issues has morphed into a combined natural and social disaster. The frequency and scale of disasters have increased due to complex factors involved.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is necessary given that disasters occurring at the border region will significantly impact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direction and tasks concerning disast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cused on the DMZ area.

# 좌장 Moderator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oo-Am KIM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 영역은 북한인권, 대북지원, 통일·대북 정책이다.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북한연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2015),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2016), 『사회문화 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2018) 등이 있다.

Dr. Kim, Soo-Am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main areas of research include North Korean human rights, humanitarian aid toward North Korea, and Unification·North Korea Policy. He served as a member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r. Kim is currently a member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Ministry of Unification,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NUAC)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His main books include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a Systemic and Perceptive Point of View (2015, Co-author), Measures to Strengthen Domestic Capacities to Prepare for Unification (2016, Co-author) and Measures to Vitalize Social Culture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Human Contact (2018, Co-author).

# 발표자 Presenter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Kyu-Chang LEE** Director,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이규창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역임하였고 2007년 통일연구원에 입사하여 현재 인도협력연구실 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주요 분야는 북한법과 통일관계법, 남북법제, 북한인권, 탈북자, 인도협력입니다. 현재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법무부 남북법령특별분과연구위원회,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Dr. Lee, Kyu-Chang had a B.A. in Law from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He obtained a M.A. and a Ph.D. in International Law fro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After receiving his Ph.D., he served as a member of Supreme Court Research Council on Special Legal Systems. In 2007, he joined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nd is currently serving as the Director of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His main areas of research include North Korean law, unification relations law, inter-Korean legislative system,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Dr. Lee has actively participated as a current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for Inter-Korean Legal System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orth Korea Legislation Research Committee of Ministry of Justice, Advisory Committee to Promote a Unified Legal System of Ministry of Unification, and Unification Judicial Study Commis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

## Direction and Tasks on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Lee, Kyu-Chang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 I. Introduction: Necessity of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A disaster (or crisis) is often categorized into a natural disaster, social disaster, and a combination of the two – comprehensive disaster. The spread of a pandemic during the times of COVID-19 is an example of a social disaster. The Wuhan-bound COVID-19 that first appeared on December 2019 has been inflicting massive damage to human lives on a global scale. North Korea has been mobilizing national-level efforts to fighting the virus by transitioning from epidemic prevention-hygiene system to a national emergency prevention system starting on January 28, 2020 and inspected its epidemic prevention projects by holding the 7<sup>th</sup> Central Party Committee's 14<sup>th</sup> Extended Meeting of the Politburo on July 2. Across the Korean Peninsula, disaster-induced damages are increasing as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floods, droughts, and earthquakes happen frequently in addition to social disasters such as the spread of a pandemic.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IFRC)'s World Disasters Report 2016, 1,333 North Koreans died from natural disasters that occurred from 2006 to 2015, and 23,407,149 North Koreans sustained damage. In addition,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have also been growing.

In order to jointly respond to the growing disasters, the two Koreas facing each other behi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ught to cooperate on the issue of disasters. Afterall, disasters affect the development of a life community. Aside from COVID-19,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ARS, African Swine Fever, and Avian Influenza are threatening not only the economies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but also the human security – life and health among others – of the citizens of the two countries. Forest fires have been occurring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in some cases, malaria outbreak in North Korea has crossed the border, inflicting damage to the troops and ordinary people of South Korea. Unauthorized discharges from joint rivers not only disrupt the peace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flict damages to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South Korean people. Fortunately, perceptions on joint disaster responses have been changing. During the Berlin Declaration on July 6, 2017 and the keynote speech at the Oslo Forum on June 12, 2019, President Moon Jae-in asserted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on joint ac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forest insect pests and diseases, and forest fires beginning at the border regions. In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the two Koreas agr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forestry cooperation, and prevention and medical cooperation. On June 27, 2014, North Korea also legislated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Disaster Prevention, Relief and Recovery followed by an unprecedented discussion on responding to natural disasters at the 5<sup>th</sup> Party Meeting of the 7<sup>th</sup>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showing their heightened awareness of disasters.

Meanwhile, through the speech given under the name of First Vice Directo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PK Kim Yo-jong on June 4, 2020, North Korea problematized South Korea's alleged viol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919 Military Agreement to ban all hostile activities including the floating of propaganda leaflets.<sup>1</sup> In addition to the past shut-down of the Mount Kungang tourism, they also wa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completely withdrawing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closing the Joint Liaison Office, and terminating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up>2</sup> On June 16, North Korea demolished the Gaesong Inter-Korean Liaison Office, once considered the hallmark of th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same day, the General Staff of the Korean People's Army militarily fortified the region agreed upon by the two Koreas to leave demilitarized and publicly announced its plans to strengthen military guard.<sup>3</sup> On June 23, when Kim Jong-un hosted the Preliminary Meeting for the 5<sup>th</sup> Meeting of the 7<sup>th</sup> Central Military Committee of the WPK, he postponed the anti-South Korea military action plans.<sup>4</sup> Various inter-Korean cooperative enterprises such as joint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estry cooperation, tourism cooperation are also facing stagnant progress. While inter-Korean relations will continue to face ebbs and flows, it will eventually follow the path toward peace and unification. The two Koreas should continue to hold talks to restor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y should implement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919 Military Agreement to further develop the relations. Disaster cooperation, which is of a humanitarian character, can be a great cooperative measure to bring the two Koreas to the discussion table. In this ligh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ultifaceted analysis of and response plans on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 II. The Case of and Implications from East and West Germany's Disaster Cooperation

### 1. Joint Disaster Response Agreement

Prior to unification, East and West Germany's disaster cooperation mainly revolved around the border region. On September 20, 1973, they conclude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G; West Germany) and the Government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East Germany) on the Principles of Responding to Disasters in the East-West German Border-Area ("Disaster Agreement").<sup>5</sup> The Disaster Agreement defined the following as causes of disasters: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such as flooding of joint rivers, closure of sewages,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on humans or animals, and explosions and demolitions. Blights and forest diseases are also included in the list. The Disaster Agreement also emphasized environmental problems as a type of disaster requiring joint action. It defined the following as disaster cases: 1) disasters that occur at the border region and affect the other party's region such as oil pollution or toxic substances polluting rivers or sewages, 2) air pollution directly influencing human, animals, and vegetations in other party's regions, and 3) threats of radi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car accidents are included as a type of disaster.<sup>6</sup> Such type of disaster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two Koreas implement an agreement on disasters.

When the aforementioned disasters occurred, both the FRG and GDR were technically responsible for preventing the disasters from crossing the borders.<sup>7</sup> However, when doing so was impossible, the two parties could cooperate on taking a joint action.<sup>8</sup> The information on disasters had to be provided to a permanent representative (Ständige Vertretung) and,<sup>9</sup> if not feasible, the information had to be provided at a specific place in the border region verbally or through the phone.<sup>10</sup>

2 Ibid.

3 Ibid., June 16, 2020.

4 Ibid., June 24, 2020.

5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RD und der Regierung der DDR über Grundsätze zur Schadensbekämpfung an der Grenze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vom 20. September 1973.

6 Disaster Agreement, Article 2.

7 Ibid., Article 4 Clause 1.

8 Ibid., Article 4 Clause 3.

9 Ibid., Article 3 Clause 1.

10 Ibid., Article 3 Clause 1.

---

Until a permanent representatives team had been established, the Border representatives (Grenzkommision) performed the duties.<sup>11</sup> On December 31, 1972, East and West Germany agreed to exchange permanent representatives by concluding the Basic Agreement,<sup>12</sup> and the Protocol between FRG and GDR on Establishing Permanent Representatives was concluded on March 14, 1974.

## 2. Disaster Response by Field

The Disaster Agreement acted as the foundation for inter-German disaster cooperation. Since the founding of the Agreement, the two Germanies extended disaster cooperation to specific issue areas such as waterways, health and infectious diseases, and the environment, among others.<sup>13</sup>

First, when concluding the Disaster Agreement, the two Germanies also concluded the Waterways Agreement. The official title of the Waterways Agreement concluded on September 20, 1973 is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G and the Government of the GDR on the Principles of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Waterway along the Border and Associated Water Facilities."<sup>14</sup> They agreed that one party cannot unilaterally alter the waterways or boundaries as a consequence of the measures taken on the boundary channel, and that any changes will come about after prior consultation. In implementing the measures, they agreed not to damage the boundary signs and that any measure taken must be within the limits of guaranteeing the water supply and sewage capacities. They also agreed to notify ahead about any planned measures and to consult on any measure that applies to the counterpart's territory.<sup>15</sup> The contents of the Waterways Agreement seem to have adopted the principles following the international common-law tradition on the non-navigational use of joint (international) rivers. Also, the Waterways Agreement prescribes that any measures taken on boundary waterways must not damage the counterpart's usage of waterways or hinder their use, and any violation must be compensated for.<sup>16</sup> In taking measures on the counterpart's territory, the two parties must consult each other and, in case equipments needed for executing such measures reside in the counterpart's territory, the rules of the host government or rules agreed upon by both parties should be applied.<sup>17</sup> Principles on maintenance of equipments and construction have been agreed upon through a separate Affiliate Agreement. The official title of the Affiliate Agreement concluded on September 20, 1973 is the "Affiliat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G and the Government of the GDR on the Principles of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Waterway along the Border and Associated Water Facilities."<sup>18</sup>

Second, for cooperation on healthcare, the two Germanies conclude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G and the Government of the GDR in the Field of Health Care ("Healthcare Agreement) on April 25, 1974.<sup>19</sup> Composed of nine articles, the Healthcare Agreement regulat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reports on diseases designated for obligated reporting as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Disaster Agreement on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infectious diseases.<sup>20</sup> The

---

11 Ibid., Article 4, Clause 3

12 Basic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rticle 8.

13 Hun-min Park, *A Study on Legislation for Disaster Response Cooperation in Divided Nation* (Sejong: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6), p. 46. (in Korean)

14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r Regierung der Demokratischen Republik Deutschland über Grundsätze zur Instandhaltung und zum Ausbau der Grenzgewässer sowie der dazugehörigen wasserwirtschaftlichen Anlagen vom 20. September 1973

15 Waterways Agreement, Article 1 Clause 1-6.

16 Ibid., Article 1 Clause 8.

17 Ibid., Article 2 Clause 2-3.

18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r Regierung der Demokratischen Republik Deutschland über Grundsätze zur Instandhaltung und zum Ausbau der Grenzgewässer sowie der dazugehörigen wasserwirtschaftlichen Anlagen vom 20. September 1973.

19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vom 25. April 1974.

20 Healthcare Agreement, Article 2.

Healthcare Agreement also deals with medically and financially supporting diseases and other health issues inflicted during travel on counterpart's territory (Article 3 and 4), carry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on medical supplies or equivalent materials, compound medicine, disposable supplies, and medical technologies (Article 5), cooperat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against the misuses of narcotics, stimulants and habit-forming drugs (Article 6), and others. Also, in 1979, the two governments concluded an agreement on Veterinary affairs, setting the grounds for direct cooperation on preventing and exterminating seminal animal diseases, establishing professional and bureaucratic protocols for guaranteeing hygienic standards on processed animal foods, and mutually exchanging related experiences and professional information.<sup>21</sup> While the Disaster Agreement also had articles on animal diseases, the contents were rather vague. In this light, the agreement on Veterinary affairs can be understood as a clarification.<sup>22</sup>

Third, in Article 7 of the Basic Agreement, the two Germanies agreed to conclude an agreement on promoting and develop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Hence, on September 9, 1987, they conclude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G and the Government of the GDR to Develop Comprehensive Relationship on Environment Protection ("Basic Agreement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Basic Agreement on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ed 1) actions and technologies on measuring and reducing air pollutants, 2) investigations and preventions of forest damages, 3) waste reduction, utilization, and pollution-free treatment, 4) experiences and act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5) designation of the protection of and technologies, experiences, and actions on water resources as topics of cooperation. Furthermore, it demanded to carry out 6) exchanges among professionals and institutional specialists of academ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as well as research outcomes.<sup>23</sup> It also stipulated that the two Germanies must each develop a 3-year cooperation pla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detailed protocols on implementing the Basic Agreement on Environmental Protection.<sup>24, 25</sup>

### 3. Implications

The case of East and West German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two Koreas. First, the two Germanies' disaster cooperation revolved mainly around the border region. Likewise, in order to relieve military tension and promote peace and resume inter-Korean talks,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two Koreas should also begin their disaster cooperation at the border DMZ region. Second, the two Germanies' Disaster Agreement included as necessary fields of cooperation not only floods and infectious diseases but also fires, bligh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 two Koreas should likewise seek to cooperate on fires, blights and environmental and forestry problems at the border region and the DMZ. Third, the two Germanies additionally concluded the agreements on waterways, healthcare, and environment at the time of conclusion or afterwards, responding to other specific types of disasters. The two Koreas should also conclude a comprehensive agreement first and then affiliated agreements that regulate specific types of disasters accordingly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r afterwards.

21 Kum-soon Lee, *Improving Inter-Korean Cooperation on Disaster Management* (Seoul: KINU, 2001), p. 52. (in Korean)

22 Hun-min Park, *A Study on Legislation for Disaster Response Cooperation in Divided Nation* (Sejong: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6), p. 48. (in Korean)

23 Basic Agreement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rticle 2.

24 Ibid., Article 4.

25 Ibid., Article 2.

---

### III. Directions and Tasks for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 1. General Direction: Prioritizing Joint Action on Disasters at the Border Regions and Gradually Expanding Outward

##### *President Moon Jae-in's Keynote Speech at the Oslo Forum (June 12, 2019)*

"South and North [Korea] are not only sharing a border but they are also a life community bound to live together [...]. Forest fires, blights, and infectious diseases on domestic animals occur even in the regions with prohibited access. [...] We must solve the problems at the border region first. [...] East and West Germany have quickly and jointly replied to instances of fire, flooding, landslide, blight, and water pollution through their "Border Committee [...].

We need to set priorities on disaster cooperation. North Korea faces various types of disasters. Geographically, many of its regions are prone to disasters. Disaster cooperation should be approached in a way that protects the lives of South and North Korean citizens, contributes to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is in the interest of South Korea and the South Korean people. Hence, the two Koreas should prioritize cooperating on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not only holds a humanitarian character but is also needed to protect South Koreans.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also promote a peaceful use of joint rivers through measures such as preventing unauthorized discharges and fires in the region. Next, they should gradually expand cooperation to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floods and droughts in other regions of North Korea and fostering afforestation. Then, the two Koreas should eventually include social disasters such as demolitions of facilities and buildings into their mid-to-long-term disaster cooperation plan.

#### 2. Cooperation on Preventing and Stopp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e two Koreas already have a precedent on prevention cooperation for preventing and stopp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ids for infectious diseases and prevention on forest insect pests and diseases have halted since 2010 due to the stagnant inter-Korean relations. Likewise, flood recoveries that occurred in the 2000s have halted after 2010. The inter-Korean healthcare cooperation is also facing difficulties even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In 201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itiated Since May 2019, the ROK government tried to seek North Korea's coordination on numerous occasions to share the information of African Swine Flu outbreak and prevent its spread, but to no avail. On the other hand, inter-Korean cooperation on infectious diseases by the private sector has continued all throughout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Eugene Bell Foundation went to North Korea in May 2017, visiting 12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centers and registering over 400 new patients. The Foundation received permission to visit North Korea twice (April 23 – May 14, September 2 – September 24) in 2019 and again in 2020 to diagnose and cure patients with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To recapitulate, North Korea can be understood to selectively accep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operation regarding infectious diseases according to their national interest or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is light, two possibilities coexist; North Korea may reject South Korea's offer in preventing and stopp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but also may accept it under certain domestic political circumstances.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cooperate on healthcare and prevention measures at the private level while keep suggesting healthcare and prevention cooperation at the governmental level and thus inducing North Korea's reaction to actively prevent the further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Meanwhile, a diagnosis of the coronavirus confirmed cases by North Korean authority that has a weak healthcare system requires the necessary equipment, such as thermographic cameras and testing kits for COVID-19, and the personal protective gears such as hand sanitizers for limiting the spread of COVID-19.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serves the function of evaluating and granting sanction exemptions for preventing and stopp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North Korea on a case-by-case basis. Active effort should be taken to induce international consensus on providing a standing exemption (or even a comprehensive exemption), not just case-by-case exemption, for sanctions on North Korea.

### 3. Cooperation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Disasters at the Border Region

To prevent disasters at the border region, unauthorized discharges by North Korea should be prohibited at the joint rivers. This requires measures for North Korea – the upper stream country – to notify South Korea in advance– the lower stream country – when opening its dams at the Imjin River or Bukhan River. This is also a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common law tradition. However, North Korea may not likely adhere to the request if South Korea makes a unilateral demand that the North comply with or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common law tradition. In order to prevent unauthorized discharge at, and promote a peaceful use of, the joint rivers, South Korea should suggest a plan that can benefit the upper stream country. Such a plan may include providing electricity to North Korea. An example of peaceful usage of joint rivers is North Korea and China's use of the Amrok River. On May 5, 1964, the two countries concluded The Agreement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Cooperate on Joint Usage and Maintenance of the Border River in Pyongyang and, based on the agree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Joint Committee on the Border River. As in the case of North Korea and China, the two Koreas should also conclude an agreement on the peaceful usage of joint rivers and, based on the agreement, establish and operate a joint committee on the issue.

In case of forest fire at the DMZ, the two Koreas need to act jointly to stop the spread of forest fire. Normally, putting off forest fire require water bomber helicopters and manpower. However, landmine-filled DMZ limits the use of manpower and the armistice status the use of water bomber helicopters.<sup>26</sup> Preventing forest fires-induced disasters at the DMZ requires inter-Korean cooperation. Dispatching manpower in the DMZ can cause landmine explosions, and mine-removal requires time. Hence, the two Koreas should promote a plan that primarily utilizes equipment rather than manpower.

### 4.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and Afforestation CDM Cooperation against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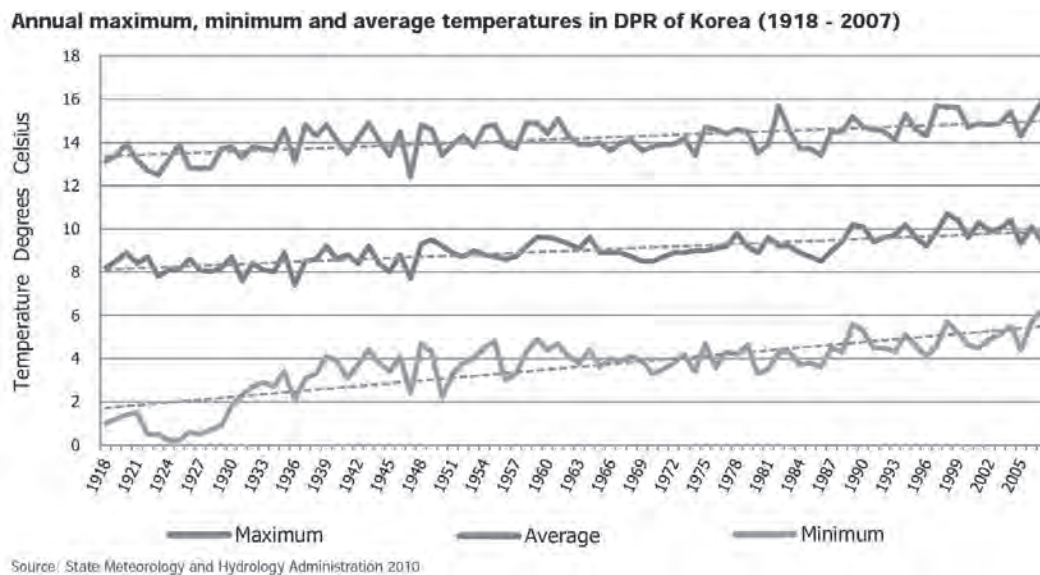
Due to climate change, weather abnormalities unfold around the world. In North Korea, the average annual temperature has increased by 0.45° C per decade, which is 1.3 times greater than that of South Korea, which recorded a 0.35° C increase per decade. As global warming inflicted by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continue, the average annual increase in temperature is predicted to be greater in North Korea compared to South Korea.<sup>27</sup> Also, compared to South Korea, North Korea is predicted to face much mor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sup>28</sup> In North Korea, climate change is affecting its agricultural productivity by diminishing the quality of its natural resources.

26 Hun-min Park, *A Study on Legislation for Disaster Response Cooperation in Divided Nation* (Sejong: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6), p. 28. (in Korean)

27 Su-jeong Myeong et al., *A Study on Constructing a Cooperative System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Counteract Climat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III* (Sejong: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3), pp. 17-18. (in Korean)

28 Jong Seon Kim and Min Woo Ryu, "Analysis of Weather Forecast and Relevant Technologies to Deal with Natural Disaster in North Korea," *North Korean Studies Review*, vol. 13, no. 2 (2009), p. 98. (in Korean)

〈Trend on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1918-2007)〉



Source: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Outlook (2012), p. 76.

The fact that climate change encompasses elements of both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warrants attention. In North Korea, artificial featur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coal and deforestation affect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n return, affects natural elements and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floods and drought, producing a combined pattern of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lso, such comprehensiv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intensify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disasters.

Another major factor that affects climate change and the subsequent disasters in North Korea is forest degradation. Forest degradation in North Korea began since the 1970s and has been accelerating due to forest disaster including forest insect pests and diseases and forest fire as well as soil runoffs from degraded forests and repeated flood damages.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natural recovery is unlikely and, if left untreated, degradation will worsen. Forest degradation in North Korea not only affects climate change but also intensifies food shortages by damaging agricultural land through soil runoffs and exacerbates water shortages and resident environment deteriorations.

In order for the two Koreas to act jointly against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they need forestry cooperation. Afforestation activities, tree nursery construction, prevention of insect pests and diseases, and other joint forestry cooperation activities have unfolded since the mid-1990s, and the two Koreas should resume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building on these previous experiences. Forestry cooperation should operate in parallel with adjacent sectors like agriculture and soil environment to promote the recovery of the North Korean ecosystem. In the North Korean soil environment, the two parties need to build economic forests, plant nectar-producing tree species, and foster forestry that heals the forests. Through the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the two Koreas also need to prepare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bligations stated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le South Korea is not obligated under the Kyoto Protocol, it is likely to become a mandatory reduction target country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If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dopts revisions and applie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n the future, South Korea's forestation support for North Korea can be acknowledged as reduction in greenhouse gas. South Korea should help North Korea meet the prerequisites for, and prepare necessary tools for CDM projects and facilitate bringing in the required supplies for afforestation CDM.

#### 5. Institutionalizing Joint Action against Disasters and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Joint Committee

The two Koreas have intermittently cooperated on forest insect pests and diseases, prevention of floods, and healthcare support. However, in order to develop a structured and comprehensive joint action, the two Koreas need to follow the example of the two Germanies and institutionalize joint action against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The two Germanies concluded the Disaster Agreement and, based on the agreement, concluded the subsequent agreements in specific fields. The two Koreas can similarly anticipate concluding an "Inter-Korean Agreement on Joint Action against Disasters" and extending into subsequent agreements in specific fields simultaneously or afterwards. Considering that joint ac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s the most urgent task, they should also think about concluding an "Inter-Korean Agreement on Healthcare" and subsequently concluding agreements in specific fields such as the agreement on the peaceful usage of joint rivers or extinguishing fire in the DMZ. A comprehensive agreement on joint action against disasters can also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border region on issues such as disasters requir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hat could be called the "Joint Committee on Inter-Korean Border Region." The Committee can be established in two ways. First, a committee can be established to oversee infectious diseases and healthcare, the peaceful usage of joint rivers, DMZ forest fire, and the environment (including forestry and the prevention of insect pests and diseases) while establishing subcommittees on healthcare, the peaceful usage of joint rivers, DMZ forest fire, and forest environments. Second, joint committees on healthcare, the peaceful uses of joint rivers, DMZ forest fire, and forest environment can be established without an overarching committee (without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However, in order to promote a comprehensive and efficient cooperation in the border region, the former method is a more valid option.

An important factor in institutionalizing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is strengthening capacities for disaster cooperation. Hence, the two Koreas should jointly research and exchange information on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ation. For instance, a potential volcanic eruption at the Paektu Mountain is continuously brought up as a possibility in the special form of natural disaster, but predicting the time and scale of damage is difficult. In preparation and prevention, professionals in the two Koreas and abroad should commit to joint research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volcanic eruption at the Paektu Mountain. Furthermore, objective information and statistics as basic data are required to respond efficiently to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flood, drought, typhoon, climate change and other problems caused by global warming, infectious diseases and others.

# 토론자 Discussant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Sin Gon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김신곤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이자, 고려대학교대학원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 주임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 학술이사이자 서울국제내분비학술대회 학술위원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무료검진을 진행하면서 탈북민 코호트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질병부담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 중재 모델 개발 연구]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는 Lancet, BMJ 같은 저명한 국제저널에 출간되었으며, 현재 네이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in Gon Kim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of the Korea University Medicine and also Head of Department of Healthcare and Medicine for Unified Korea at the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He graduated with his medical degree in 1993 and also received his PhD degree in 2005 from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e served as the Director, Committee of Scientific Affairs in the Korean Endocrine Society and the Chair, Scientific Program Committee of the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ICEM, 2017–2018). Currently he is the President, Association of Healthcare for Korean Unification. He is a principal investigator of a unique immigrant study named NORth Korea Refugees iN South Korea (NORNS) Study. His work has been published widely in noted International journals including Lancet, BMJ. He is Editorial Board Member of Scientific Reports.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

**Nak-keun JEONG** Direct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search Center (IKECR)

정낙근(Jeong, Nak-keun)은 2017년부터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약 30년간 대북 관련 연구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17년까지는 (재)여의도연구원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정책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정치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투자에 관련된 정책 연구와 투자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는 올해 7월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한 방역장비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진단장비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으며, 8월에는 해당 장비를 북한에 지원하였습니다.

Dr. Jeong is Director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search Center(IKECR) since 2017. He served as policy chief of the Youido Institute(YDI) from 2009 to 2016 and has been in charge of policie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since 2004. He won a Ph.D.(International Politics) in 1992 from the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HUFS) in Seoul Korea. After obtaining a doctorate, he has been studied and implemented the inter-Korean policies and projects for about 30 years. IKECR is conducting research and consulting on economic cooperation and invest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 particular, IKECR received approval from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in July to exempt thermal imaging cameras for COVID-19 diagnosis and the African Swine Fever(ASF) diagnostic equipment from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n August provided the equipments to North Korea.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Bernhard SELIGER** Resident Representativ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NGO), 교육 기관, 공공 기관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산림, 생물 다양성, 유기농업, 친환경 개발 메커니즘 관련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이행 중이며 이를 위해 북한에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는 '북한 논평'(North Korean Review)의 편집위원이며 웹사이트 <[www.asianintegration.org](http://www.asianintegration.org)>의 창립 편집자이다. 10년 동안 남북 국경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에 대해 연구했고, 2015년 2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UNESCAP)에 비무장지대(DMZ) 전문가로서 참여했다. 2006년에는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울 명예 시민권을 수여 받았다. 2012년에는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 이행 공로를 인정받아 '한스자이델 재단'의 파트너인 강원도의 명예 강원도민으로 임명되었다.

Dr. Bernhard Seliger is currently representative of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based in Seoul, consulting NGOs, academic and public institutions in questions of unification. He frequently travels to North Korea, where he implements capacity-building projects, among others in forestry, biodiversity, organic agricult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He serves as associate of North Korean Review as well as founding editor of the website <[www.asianintegration.org](http://www.asianintegration.org)>. For 10 years, he has also work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in the inner-Korean border area and in February 2015 participated as an expert on the DMZ for UNESCAP. In 2006, he was conferred with honorary citizenship of Seoul by then mayor Lee Myung-Bak, who was later president of South Korea. In 2012 he became an honorary citizen of Gangwon province, partner province of Hanns Seidel Foundation, for implementing proj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border area.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Ho Hong KIM** Chief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김호홍 박사는 1991년 부터 23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근무하였으며, 북한정보 분석 및 대북전략 수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남북 경제협력 대화 남측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2014년 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연구기획실장, 신안보연구실장을 역임하면서 감염병과 기후변화, 환경 등 신안보 업무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 분석 및 남북 협력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Dr. Ho Hong Kim served f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since 1991. For 23 years of his service, he has extensive experience in analysis of North Korea intelligence and counter strategies against North Korea. He also worked as the Head of the ROK Delegation for Inter-Korean Economic Talks. Joining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in 2014, Dr. Kim took over as Head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Research Service and the Vice President of Department of Emerging Security Issues, respectively. Dr. Kim is leading the team and the strategic line of research in current trend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with regard to emerging security issues including infectious diseas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security.



# Session 4-3

## 지속가능 대북정책의 조건

## Conditions for Sustainable Policy toward North Korea

주관기관  
Organized B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좌장  
Moderator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Kyung Hoon LEE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발표자  
Presenters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Byung-Yeon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Chaesung CH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신혜란 서울대학교 교수  
HaeRan SHI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자  
Discussants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Cheol Hee PAR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JeongHun HA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4-3)

## 지속가능 대북정책의 조건

한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전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남한이나 주변 강대국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북한 관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 영역들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남한 사회 내부에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안보 문제에 관한 북한의 딜레마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대북 신뢰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본 세션은 그러한 폭넓은 이해와 합의가 가능한 범위와 조건을 발견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기획되었다.

## Conditions for Sustainable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order to promote sustain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onsistent policies on the part of South Korea and related countries as well as North Korea. This session intends to find the conditions for broader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sensus within South Korea which will warrant the feasibility and stability of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t also aims to address the need for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consistent strategy to help reduce North Korea's security dilemma.

# 좌장 Moderator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Kyung Hoon LEE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임경훈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비교정치, 러시아정치, 북한정치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정치, 비교민주화 이행,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북한의 정치 및 경제 변화 등이며, 2018년 3월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취임 후 연구원의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서울대학교의 북한연구 및 평화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yung Hoon Leem, i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nd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Leem now leads the Peace and Humanities Research Group, and is in charge of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Project support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nt. Director Leem pursues to strengthen IPUS's role as a hub of transdisciplinary peace research and to expand its global horizon in addressing the unique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 발표자 Presenter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Byung-Yeon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체제이행과 응용계량경제학이며 주로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이 대상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학술지에 4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으며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 2017)를 비롯하여 북한 경제 관련 다수의 저서와 북챕터, 책을 저술했다. 영국경제사학회 T. S. Ashton Prize,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대한민국 학술원상, 니어재단 학술연구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로 선정됐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경제분과 간사), 통일부·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중앙일보 중앙시평의 고정필진이다.

Byung-Yeon Kim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His research interests lie in the fields of transition economics and applied econometrics, in particular with reference to North Korea as well as former socialist countries. He received his B.A. and M.A. from SNU and D.Phil.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He has published a number of articles in international journals, and written numerous book chapters, books, and journal article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including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ambridge Univ. Press, 2017). He has received several prestigious academic awards such as Excellence in Academic Achievements granted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SNU Award for Distinguished Researcher, T. S. Ashton Prize (British Economic History Society), and Chungram Award (Korean Economic Association). He has served as a member of various government committees including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Korean Summit,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and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for the Ministries of Unification and Foreign Affairs. He is a regular columnist for JoongAngilbo mostly on North Korean issues.

# 북한 경제와 한반도 평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 북한 경제와 한반도 평화의 관계

- 평화는 경제활동을 촉진하는가?
  - 분명히 그렇다
- 경제는 평화를 촉진하는가?
  - 그런 경향이 있다
- 항구적 평화는 북한 비핵화와 개혁·개방(체제이행)에 달려 있음
- 이 발표에서는 북한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에 대해 다룸

##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 북한 주민은 어떻게 생활할까

- 공식 직장보다 비공식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음
- 공식 월급의 중위값은 3000원(40센트)에 그치는 반면 4인 가족이 생활하려면 월 50달러 정도가 필요. 이 대부분을 직간접적인 시장활동을 통해 조달
- 비공식 부문에서의 시간 당 임금은 공식부문의 80배에 달함
- 소련 말기 가계총소득 중 비공식소득의 비중이 20% 정도였던 반면 북한은 70%를 상회함

## 북한 시장화의 정도

- 시장활동 참여율은 공식 직장 노동 참여율보다 높음
  - 공식직장 노동참여율은 50% 내외, 시장활동(경작과 가축 사육 포함) 참여율은 70% 이상(Kim, 2017; Kim and Song, 2008)
- 가계소득의 70% 이상이 시장활동에서 얻은 수입임

## 북한 시장화의 정도

- 1997-2008년 동안 북한 가계의 식량과 소비재 획득 경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Kim, 2017).

	공식 경로(배급, 국영 상점)	자가 생산	시장 구매	계
식량	24.4	15.9	59.7	100.0
소비재	13.0	19.6	67.4	100.0

## 시장의 발전

- 식량과 소비재를 거래하던 시장은 투입요소시장,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등으로 확장되었음(김영희, 2016).
  - 기업간 거래(원부자재시장)
  - 개인 고용
  - 개인 대부(고리대금업)
  - 중개인

## 시장활동의 종류와 추이

	1997-2001	2002-2006	2007-2011	2012-2015
농작물경작	15.2	25.2	25.9	21.5
소매장사	35.9	33.9	38.5	35.5
음식장사	35.8	17.4	12.6	3.2
되거리 장사	26.1	33.0	25.9	23.7
편의봉사	6.5	3.5	5.9	4.3
운수	0.0	0.0	2.2	3.2
수공업 등 공업	2.2	2.6	1.5	4.3
샅별이	6.5	4.3	3.0	5.4
거간	4.3	7.8	3.7	6.5
밀수	3.3	7.0	14.8	17.2
돈 장사(환전)	4.3	2.6	1.5	3.2
기타	1.1	3.5	2.2	1.1

출처: 김병연(2018)

##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 일인의 절대적 독재 국가에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낮음
- 반면 실제적인 시장화와 높은 무역의존도는 권력자의 개혁·개방 선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
- 다음의 요인은 시장과 권력의 타협 가능성을 시사함
  -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 관료의 뇌물 수수
  - 시장의 공식 경제 잠식
  - 강고한 통제 메커니즘의 부식 가능성

## 북한 체제이행의 가능성

- 자발적 체제이행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시장과 타협하는 형식의 체제이행은 상대적으로 높음
- 제도 변화 정도로서는 중국의 1978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시장화(marketization) 정도와 대외무역의존도는 사회주의의 어떤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됨

	소련(1954-1991)	북한(1996-2009)
가계 소득 중 비공식(시장) 소득의 비중	16%	7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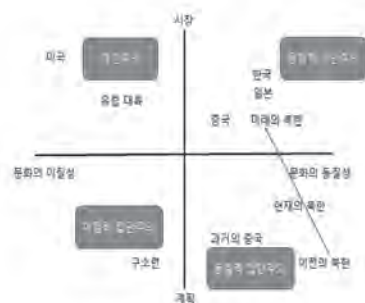
## 시장화와 개인주의

- 시장화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익명 사회집단의 형성을 촉진
  - 자신의 경제적 필요를 가족(부족) 공동체 대신 시장에서 충족할 수 있음에 따라 집단주의적 의식이 희박해짐.
  - 시장은 고객, 공급자, 정보 제공자 등 신원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끼리의 접촉을 빈번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 집단의 익명성이 증가함.
- 북한 주민의 가치관 역시 시장화로 인해 개인주의화 되는 과정.
  - 문화의 이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구의 전형적인 개인주의와 달리 동질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동질적 개인주의화 될 가능성이 높음.
  - 즉, 동질적 집단주의에서 동질적 개인주의로의 변화.
  - 동질적 집단주의가 '주체사상형 인간'이라면 동질적 개인주의는 '경제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음.

11

## 시장화와 가치관의 변화

북한의 시장화와 가치관 변화



자료: Triandis(1995, 60쪽)을 기초로 저자 수정

북한의 주체사상형 인간과 경제적 인간의 비교

	주체사상형 인간	경제적 인간
삶의 목표	공동체·지도자에게 충성	자신이나 가족의 물질적 후생 극대화
경제 행동	지시하는 대로 행동	이익을 위해 행동
경제 활동의 공간	공식 직장(국유 기업 혹은 국가 기관 등)	시장(공식 시장, 비공식 장마당 등)
정치적 태도	무조건 복종	조건적 복종 타협

주. 이 표는 두 유형의 비교를 위해 단순화한 것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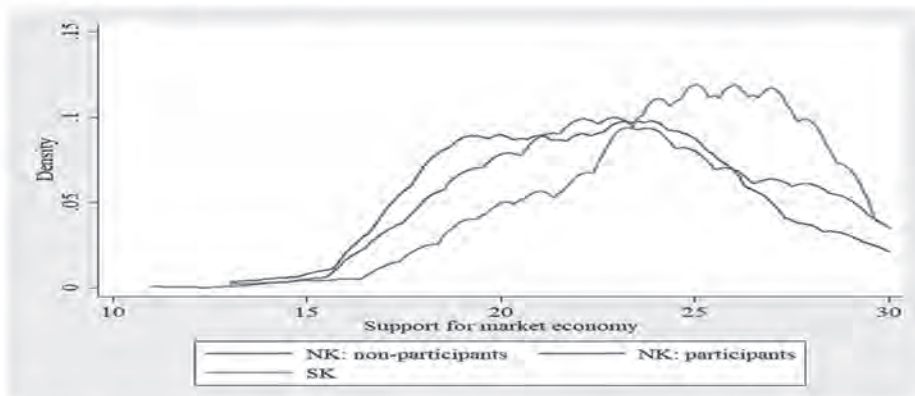
## 북한 시장화와 자본주의 지지도

- 김병연·김다울(2018)에 따르면 비공식 경제활동을 경험한 북한 이탈 주민은 그렇지 않은 주민에 비해 사적 소유권, 경쟁, 성과급 등 자본주의적 제도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음.
  - 탈북민 설문조사 7-9를 사용하여 시장경제활동은 자본주의 지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힘.
  - 북한에서 비공식경제활동을 하면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남한 출신 주민의 평균적인 자본주의 지지도에 36% 가까워지게 만드는 효과를 가짐.
  - 또한 장사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집단보다 개인이나 가족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13

## 북한 시장화와 자본주의 지지도

- 자본주의적 가치의 내재화



자료: 김병연·김다울(2018)

14



# 북한 시장화와 개인 소유 의식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of the fraction of money given: subsample analysis continued (NK).

Dependent variable = the share of money giv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All	Years in SK		Age at arrival		Second job experience in NK		Workers' Party	
		< 7	≥ 7	< 34	≥ 34	No	Yes	Non-member	Member
Earned	0.052 (0.060)	0.023 (0.057)	0.084 (0.061)	0.143 (0.057)	-0.042 (0.048)	0.076 (0.057)	0.018 (0.067)	0.054 (0.073)	0.038 (0.045)
Pooled	0.154 (0.041)	0.130 (0.029)	0.183 (0.052)	0.164 (0.049)	0.140 (0.044)	0.211 (0.048)	0.076 (0.032)	0.140 (0.040)	0.187 (0.057)
log(Relative price)	-0.105 (0.007)	-0.111 (0.015)	-0.099 (0.008)	-0.099 (0.015)	-0.111 (0.009)	-0.092 (0.007)	-0.116 (0.017)	-0.104 (0.008)	-0.108 (0.014)
Constant	0.311 (0.035)	0.346 (0.029)	0.273 (0.038)	0.282 (0.021)	0.340 (0.044)	0.287 (0.042)	0.343 (0.022)	0.300 (0.036)	0.367 (0.039)
Test for equality (p- and q-values)		0.0063 (0.132)		0.027 (0.490)		0.0015 (0.035)**		0.361 (1.000)	
Observations	1,065	515	550	505	560	610	455	870	195
R-squared	0.151	0.136	0.178	0.163	0.184	0.200	0.118	0.138	0.218

Notes: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experimental session, are reported in parentheses. The omitted dummy variable is 'Unearned.' The table gives the p-value for testing the equality of the coefficients of Earned, Pooled and log(Relative price) between each pair of subsamples. The q-value is given in the parentheses, controlling the family-wise error rate with 24 individual p-values. \*, \*\*, and \*\*\* represent rejection of the null hypothesis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while controlling the family-wise error rate.

자료: Choi et al, (2020), 124

- 재북 시 시장활동에 참여했던 탈북민은 그렇지 않은 탈북민에 비해 번 소득과 공동 소득에 있어 타인에게 주는 비중이 유의하게 낮음

## 시장의 효과: 타인에 대한 신뢰 증가

Table 3 Market activities and trust – ordered probit estimation results

	(1)	(2)	(3)	(4)
(Reference: No informal market experience)				
Selling in markets	0.273** (0.125)	0.253** (0.126)	0.278** (0.126)	0.246* (0.127)
Cultivating in private plots	-0.147 (0.198)	-0.117 (0.200)	-0.093 (0.200)	-0.102 (0.200)
Stock farming	0.145 (0.280)	0.221 (0.289)	0.154 (0.290)	0.159 (0.290)
Smuggling and repair	0.274 (0.207)	0.206 (0.214)	0.354* (0.210)	0.266 (0.214)
Home production and other	-0.012 (0.313)	-0.063 (0.315)	0.063 (0.315)	0.003 (0.316)
Secondary education or lower in North Korea	0.054 (0.113)	0.076 (0.115)	0.060 (0.115)	0.076 (0.115)
Real household income in North Korea (log)	-0.014 (0.021)	-0.021 (0.021)	-0.017 (0.021)	-0.023 (0.021)
Workers' party membership	0.106 (0.179)	0.137 (0.180)	0.159 (0.181)	0.164 (0.181)
Served in military	0.173 (0.164)	0.122 (0.165)	0.153 (0.166)	0.124 (0.166)
(Reference: Secondary or lower South Korean education)				
College or above and defected before 20		-0.075 (0.283)	-0.170 (0.279)	-0.077 (0.283)
College or above and defected after 20		0.106 (0.150)	0.060 (0.151)	0.083 (0.151)
Real household income in South Korea (log)		-0.041 (0.040)	-0.070* (0.040)	-0.058 (0.040)
Years lived in South Korea		-0.039** (0.017)		-0.035** (0.017)
Risk preference			0.715*** (0.195)	0.688*** (0.195)

- 북한에서 장사 경험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27% 가량 증가시킴
- 반면 다른 종류의 비공식경제활동은 거의 유의하지 않음
- 남한 거주 기간이 증가할 수록 신뢰 수준은 감소
- 위험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도 높음
- 타인에 대한 신뢰 증가는 주민 사이의 여론 형성 가능성 시사
- 이는 북한 프로그래머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출처: Kim and Kim (2019)

## 시장의 효과: 소득과 인적 자본

Age	-0.018 (-0.968)	-0.021 (-1.105)
Age squared	0.000 (0.397)	0.000 (0.542)
Male	-0.058 (-0.745)	-0.084 (-1.052)
Married	0.428*** (5.410)	0.416*** (5.156)
Hamkyung Province	-0.069 (-0.979)	-0.058 (-0.821)
Secondary education in NK	-0.082 (-1.044)	-0.079 (-0.983)
Served in military	-0.052 (-0.485)	-0.031 (-0.288)
Workers' Party membership	0.185* (1.799)	0.203* (1.960)
Informal: Home production, farming, repair	0.185* (1.826)	0.182* (1.790)
Informal: Selling	0.068 (0.815)	0.065 (0.759)
Informal: Smuggling and other	0.222** (1.981)	0.227** (1.995)
Duration of informal activities (years)	-0.003 (-0.246)	-0.003 (-0.286)
Real total income (log)	0.001 (0.084)	-0.000 (-0.015)
Share of informal income		0.000 (0.682)
Years lived in South Korea	0.039*** (3.747)	0.041*** (3.758)

종속변수: 남한에서의 가구 소득

인적 자본의 대리변수로서 비공식경제 활동과 노동당원

비공식생산과 밀수는 남한 소득과 양의 상관 관계: 이 활동은 남한 소득을 18-23% 증가시킴

그 크기는 남한 정착 4-5년과 유사

출처: Kim and Kim (2016)

## 시장의 한계

- 제도의 불비로 시장이 제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시장경제 활동이 서비스업(유통업)에서 일어나고 있음
  -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에서 비공식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도화(개혁·개방)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경험과 외국 자본 투자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함
- 그러나 북한 정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개혁·개방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시장에 의해 떠밀린 체제이행?

- 독재자가 사적 소유권을 침탈할 경우, 시장 참여자의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독재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임. 또한 독재자가 관료에게 계속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이들의 사보타지(sabotage)가 발생할 수 있음. 즉 민심 이반과 동시에 관료 이반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장화가 진전될 수록 독재자의 수입 중 시장으로부터의 조세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 사적 소유권 침해의 기회비용이 증가함.
-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독재의 기회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발표자 Presenter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Chaesung CH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재성(Chaesung Chun)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아시아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낸 바 있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자문위원 및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동아시아 안보론, 한국외교정책 등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현실주의』(서울: 한길사, 2012), 편저로는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서울: 늘품플러스, 2015),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서울: 서울대출판부, 2019);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국가들의 국제정치』(서울: 한울출판사, 2020) 등이 있다.

Chaesung Chun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security relations in East Asia. He is director of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of East Asian Institute. He is a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Ministry of Re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Defense.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Keio University in Tokyo from 2010–2011. He received his MA degree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degree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ajor books and articles include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2011), Is Politics Moral: Reinhold Niebuhr's Transcendental Realism (2012),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2019), and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2020).

# 북핵 문제 및 북한의 안보딜레마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대북 전략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 국제정치적 배경의 변화

### 주권게임의 일환으로서 북핵 문제

- 통일 근대 국가 이행의 실패와 남북 간 주권게임
- 북한 문제의 변화에 따른 북핵 문제의 지속
- 북한의 경제 사정, 리더십, 정치 정당성 변화
- 남북 간 세력균형의 변화

### 국제정치의 변화

- 냉전의 종식
- 미국 단극체제의 전성기
- 9.11테러와 핵테러의 우려 증가
- “악의 축” 북한
- 미중 패권 경쟁의 강화

## 북미 관계와 북핵 문제: 트럼프 정부와 북핵 문제의 진전

-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의 병행에 대한 인식 강화
- 북미 간 새로운 관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승인의 필요성 인식
-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증가
-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전망 확보
- 한국의 협력 촉진 및 대안 제시 역할 진일보

## 트럼프 정부와 북핵 문제의 난관

- 비핵화 개념에 대한 북미 간의 여전한 의견 차
- 북한의 군축 회담 주장 vs.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주장
-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평가 문제
- 북한의 완전한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 협상 미완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불신
-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 한국의 이해 증진 노력 한계
- 미중 간 격화되는 전략 경쟁과 북중 접근의 문제

## 미국의 동아시아/ 한반도 전략과 북핵 문제

- 트럼프 정부 하 미국의 대중 총체적 견제 정책 강화: 중국에 대한 미국의 hypercompetition과 신냉전적 대결 구도
- 2013년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및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력 과정 무력화
- 한반도가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전장으로 변화
- 미국은 2020년대 말을 목표로 대중 군사견제의 협력망 구축 노력
- 한미동맹의 점차적 변화 가능성
-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중국에게 더욱 중요해지는 국제정치 상황, 북중 동맹 강화 추세
-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대중 전략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면서 국제정치변수 중요성 증가

##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7.10)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

- 북한은 전면적이고 중장기적인 대미 전략 수립: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현 정부의 여러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을 상대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미 대선 이후에 대한 고려도 병행: 대선 이후를 고려한 향후 2개월
- 경제제재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며,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개시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대북 적대시가 체질화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강조
-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논의, 이것은 비단 군사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포함하는 내용임.

##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7.10)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

- 미국의 소위 “대북 적대시 철회”에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상황으로 정의.
- 한국의 대미 외교를 통한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전략이 필요
- 한미 양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이 중요한 관건: 경제제재 해제, 군사훈련 중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좀 더 광범위한 계획이 필요
- 북핵은 미국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미국의 불가역적 중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전체적인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

## 대북 체제보장의 다각적 내용

- 1) 북한을 국가로서 승인하고 주권적 지위를 승인하는 보장
  - 2) 북한에 대한 무력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 3) 현재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보존을 외부에서 도와주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보장
  - 4) 북한의 주권성과 체제의 성격 모두 변화하더라도 김정은 혹은 김정은 일가의 생명을 안전하게 해주는 보장
- 즉, 국가적 차원, 안보적 차원, 체제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다차원적 보장
  - 북미 간 정치적 신뢰도가 낮을 수록 체제안전보장 요구는 강화되는 현상



## 북한의 대미 안전보장 요구 내용

- 북한이 미국에게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1, 2(국가적, 안보적 차원)에 해당하는 국가적, 안보적 차원의 보장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물리적 담보”를 항상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여 왔고 이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을 요구함. 물리적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비물리적, 정치적 의사에 대한 불신 때문.
- 물질적 청중비용에 대한 요구로 보아야 함.
- 이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요구로서 미국의 선제 핵, 통상공격의 능력과 의지를 제거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안전담보라는 생각을 보여줌.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을 실현하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의지 확인.
- 그러나 동시에 북한과의 양자 평화협정체결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북미 수교를 주장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요구도 함께 제시해 왔음.

## 미국의 대응 패턴

-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를 단순한 핵확산방지라는 비확산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대북 안전보장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증가
- 북핵 문제를 북한의 지위와 안전에 관한 정치적 문제로 인식할 때 대북 협상에 포괄적으로 임하면서 비핵화에서도 일정한 진전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대체로 미국은 동북아 지정학 전반에서 현상유지 전략
-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면서 무릅써야 할 다양한 리스크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 손익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
- 예를 들어 비핵화 이후 평화 한반도의 대중 경사 가능성 등을 고려
- 현재의 북핵 문제가 미국의 본토 안보 및 동맹국 안보에 치명적 해가 되지 않는 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
- 이러한 고려로 비핵화 및 평화체제 문제에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 비핵화 이후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북핵 문제 속 현상유지 선호

##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의 어려움

- 북미 협상의 역사에서 보여진 소극적 안전보장과 불가침,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모두는 설사 실현되더라도 언제나 변화될 수 있음.
- 북한의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을 들어 불가침, 평화협정의 유지가능성에 대해 의심
- 이는 비단 미국의 전략 때문이 아니라 무정부상태라는 국제정치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로 북한의 요구는 실현 불가능함.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의 세계적, 지역 차원의 지정학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절대적 우호 관계가 고정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의 어려움

- 트럼프 정부 하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합의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루어졌다 해도 양자 합의는 다음 행정부 하에서 파기될 수 있음.
- 북한은 상원, 혹은 상하원이 승인하는 조약 차원의 불가침, 평화조약을 원하지만 미국 내 전례가 없으므로 미국은 의회의 결의안 정도를 최대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 역시 지정학 상황 변화에 따라 파기될 수 있음.
- 특히 북미 간 안전보장이 이루어졌더라도 리비아의 사례처럼, 비핵화, 평화 북한 내에서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북한 내에서 학살과 같은 인권문제가 생기면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

##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의 어려움

- 미국이 국가적, 군사적 차원의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하더라도 북한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 따라 체제안전보장, 개인안전보장과 내용이 상충 가능.
- 북한의 독재와 경제불안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군사적 안전이 보장되더라도 북한의 생존, 번영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움.
- 북한 내 인권 문제로 인한 북미 간의 정치적 불화 가능성, 북미 관계 정상화 이후 북한의 개방으로 인한 북한 내 정치 불안 가능성, 북한의 경제발전 및 정치 변화, 혹은 경제발전 둔화 등 새로운 경제문제로 북한 내 불안 가능성 등
- 북한이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파(implosion)으로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내부 불안에 대해 외부의 공작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확립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변수

## Charles Kupchan의 안정적 평화 전략

Phase	Activity	Attribute Assessed	Resulting Affect
I	Unilateral Accommodation	Intent	Hope
II	Reciprocal Restraint	Motivation	Confidence
III	Societal Integration	Character	Trust
IV	Narrative Generation	Identity	Solidarity

Charles A. Kupchan.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2010), 36쪽.

## 대북 안전보장의 가능한 방법들

- 북미 간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적 협력 관계 설정.
- P5 이외 핵무기 국가들 중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은 모두 미국과 지정학적 타협/협력국.
- 북미 간에 핵심적, 사활적 이익의 공감대가 마련됨으로써 형식적인 평화협정이나 수교를 넘는 상호의존이 발생하도록 전략적 상호 관여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
- 경제적 상호의존, 지전략적 상호의존, 외교적 상호의존 등
- 경제적 상호의존에서 북한의 미국 원조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

## 대북 안전보장의 가능한 방법들

- 지전략적 차원에서 다음의 논자들에 의해 북한을 미국의 안보파트너로 삼는 방안
- 사우디 아라비아나 파키스탄처럼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안보파트너로 북한을 삼아 인간안보 및 남북 미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안
- 중국에 대한 북미 간의 협력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문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게 어느 정도 큰가의 문제임.
- 미중 갈등에서 북한이 미국 편향의 정책을 취할 경우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고, 미중 관계의 악화 역시 예상가능
- 미국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임.
- 이러한 전략이 한국에게도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

## 대북 안전보장의 가능한 방법들

- 미국이 북한을 포용하고 전략적으로 관여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경우
- 특히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해결하여 3세계 지역 문제 해결의 성과를 거두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탈냉전기 30년 동안 미국의 3세계 전략의 지속적인 실패와 연관
- 이는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평판에 큰 성과가 될 수 있음.

## 다자적 대북 안전보장의 필요성

- 동북아 국가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포괄적 안전보장을 함으로써 북미 양자 보장의 문제를 해결
- 과거 중러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2019. 4.)에서 다자적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논의가 제시됨.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안전보장만 제공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를 통해 북한 내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많은 집단들이 거주하게 될 경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다자적 경제지원 기구를 마련하여 공동 투자하게 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국가적, 군사적 안전보장 뿐 아니라 체제안전보장도 동시에 일정 부분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한국의 정책 과제

-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의 다층적 성격에 대한 논리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
- 대북 안전보장의 장기적, 단계적 접근법 재고. 양자적 보장 뿐 아니라 다자적 보장, 미국, 일본 등 북한과 양자적 관계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
- 비핵화로 모든 안전보장은 불가능. 비핵화 과정이 정치적 안전보장의 한 단계와 과정이 되도록 점진적 노력
- 비핵화가 정책적 승패가 아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신뢰구축의 한 단계의 성취가 되도록 노력
- 특히 북미 간, 미중 간 신뢰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비핵화 이후에도 북한의 체제에 대한 다양한 위협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 북한 스스로도 체제안전보장이 비핵화의 대가로 전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한국의 정책 과제

-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대북 다자 안전보장의 틀 마련
-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뿐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 구도도 함께 벌어지고 있으므로 북한의 전략적 비전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한국은 미국이 제시하는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이 제시하는 일대일로 전략 사이에서 소위 신한반도체제를 제안한 바 있음.
- 그 핵심은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겠으나, 북한이 인태전략과 일대일로전략, 그리고 신한반도체제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의 문제임.
- 북한이 단순한 생존전략을 넘어 아시아에서 정상국가로 서기 위해 한국 스스로 어떠한 외교전략을 추구할지, 그 속에서 북한이 한국과 어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남북협력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 타진. 이를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 중견국 외교의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
- 그러한 비전이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때 지속가능한 안전보장과 비핵화가 가능할 것임.

감사합니다!!!

# 발표자 Presenter



신혜란 서울대학교 교수

HaeRan SHI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신혜란은 2005년부터 영국 런던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과 (Bartlett School of Planning)에서 조교수직을 역임하고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로 옮겨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인문지리학 중에서도 정치지리, 이주민 연구 분야에서 연구, 강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미국의 탈북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는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2016, 이매진), <The Cultural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in South Korea: Art, Memory and Urban Boosterism in Gwangju> (2019, Routledge)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여성이주민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HaeRan Shin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Geograph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She focuses on the areas of political geography and migrant studies. She has worked on the issues of transnational migra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the dynamics of mobilities, and their networks and ethnic enclaves. She has also examined the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cases, including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and smart cities. For her research on urban politics and migrant studies, she has u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s, focus groups, and discourse analyses. She received her Ph.D. in Planning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he taught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before teaching in South Korea since September 2013.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20  
지속가능 대북정책의 조건

##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교류의 문화적 조건

- 제 3의 장소에서 나타난 탈북민 동화(assimilation)와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지정학

신혜란 (HaeRan Shin)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인구이동과 조우

- 남북한 인구이동: 교류가 좀 더 허용되거나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
  - 한국으로 오는 북한인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가는 한국인들 증가
  - 사업, 행사, 일상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조우 늘어날 것임
- 남북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 존재
-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고찰 필요
  - 이주민 연구에서 함의를 가져올 수 있음

## 탈북민을 통한 북한 이해

-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북한인들의 언어, 문화, 인식 이해
- 한계
  - 한국을 정착지로만 인식
  - 한국 인구 대비 탈북민은 극소수 (5000:3)
- 교류가 강화된 한반도에서 한국인, 북한인이 교류하는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이점
- 인구비율이 좀 더 현실적
  - London 한인타운 15-30: 1 (한국인 10,000-15,000명, 북한인 700-1,000명)
  - Los Angeles 한인타운 1,000: 1 (한국인 50,000명, 북한인 50명)

## 런던 한인타운 뉴몰든

한인타운 내 일상에서 교류 증가  
한국인 고용주, 북한인 피고용주  
한인 단체, 탈북민 단체들의 교류  
(. 2. 23)

WORLD • FINANCE • PROPERTY

Why is New Malden home to more North Koreans than any other place in Europe?

A look at the south west London suburb's thriving Korean community



Visitors Park in Seoul, seven years after escaping the murderous regime in North Korea. Photo: Shutterstock/Steve

By Charlie Parrish

Property

WORLD  
See the London Suburb Home to One of the  
World's Biggest North Korean Refugee  
Communities



## 동화와 초국적주의

- 동화 이론 (assimilation theory):
  - 192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지배적인 이주연구 이론
  - 이주민의 동화 정도가 그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 초국적주의 (transnationalism)
  - 동화의 강력한 대안으로 등장
  - 동화되지도 않고 동화할 필요도 없다
- 많은 국가들은 아직 동화정책을 추구
  - 대체 개념으로 '사회통합'

## 비판과 제안

- 현실에서는 동화와 초국적주의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힌 모습
- 대북 정책과 인식은 강력한 동화주의에 기반
- 이주민 및 이동성 연구
  - 권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비판 지정학 (critical geopolitics) 연구
  - 이주: 국가권력의 재영토화
  - 일상과 담론 속에서 형성되는 국가 영토성과 세계화 시대의 국가영토를 벗어난 영토성에 대한 주목

## 동화-초국적주의 지정학

- ‘동화-초국적주의 지정학’: 이주민들의 동화와 초국적주의의 역동성 속에 재협상되는 국가 영토성에 대한 정치학적 해석
  - 동화, 초국적주의는 국가의 영토성이 해당 국가 출신 이주민들의 일상에서 발현되어 나타나는 생산물
  - 사회적 존재인 이주민들의 몸을 둘러싸고 둘 이상의 국가 경계가 끊임없이 재협상
- 국가는 이동을 통해 통치하고, 이주민은 일상에서 그 통치 논리를 내면화하며, 다시 그들의 이동을 통해 국가는 탈영토화, 재영토화 과정을 겪음

## 연구 방법

- 2005 - 2007 뉴몰든 거주
- 2011 뉴몰든 현장연구 시작
- 2014 북한교회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 2017 참여관찰, 주요 단체 관계자들 심층인터뷰
  - 탈북민 자녀 한글학교인 ‘한겨레학교’
  - 한인 단체, 탈북민 단체 행사: 영국 탈북민 협회, (탈북민) 아리랑 무용단, 런던 한국인 협회, 영국 평통, 한국 노인회, 지역축제
- 2019 엘에이 한인타운 현장조사

## 한국 체류시 경험

- 국가에 의해 고무, 강제, 관리된 동화
  - “한국사회는 (탈북자에게) 한국사람도 하기 힘든 걸 하라고 다그치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영국사회는 계속 돈을 주면서 끈질기게 기다려 주니까 진정으로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하나원 기독교 전향 압력
    - “그렇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한국이 북한과 다른 것이 무엇이나”
- 이 인식은 뉴몰든에서 동화와 초국적주의에 동시에 기반으로 작용했음

## 뉴몰든 노동시장에서 동화

- 고용주인 한국인의 방식에 적응
  - 서빙, 요리, 청소, 아이 돌봄, 공사, 이삿짐, 집수리
  - “여기 우리[북한인] 다 떠나면 한국 가게 다 문 닫을 거예요. 조선족 있던 자리에 북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2017. 9. 21 면접, 탈북 여성, 식당, 40대)

## 단체들의 파트너쉽과 협력

- 동화
  - 한국 단체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단체를 만들고 한국 단체가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 영토의 해체와 약화 과정
  - 동시에 탈북민 고유의 단체를 만들고 한국 단체 활동에 다수의 참여자가 되는 일종의 영토 확장으로서 재영토화 과정
  
- 한국인과 탈북민 단체들의 파트너쉽과 협력
  - 런던 한인회(이하 한인회) 광복절 행사, 대한 노인회 영국지회(이하 노인회) 바자회, 한복 패션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 지역협의회(이하 평통) 행사, 런던 한인 합창단의 공연 등에 다수의 탈북민들이 참가
  - 노인회는 활동이 가장 활발한 편이었는데, 한국인과 북한인 여성들의 협력이 무척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



## 공동행사의 필요와 갈등

- 탈북민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한국인들의 목소리
- 대한 노인회 영국 지회가 한국 본회에 요청하면서 영국 국적,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
  - 어떤 행사건 한국인이 하는 행사에 북한인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한국인이 하는 행사에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2017. 10. 1. 한국 여성, 60대)
- 한인회는 48명 임원 중에 두 임원(부회장과 자문의원)을 탈북민으로 임명
- 평통 임원은 44명인데 탈북민 한 명을 포함하도록 시도

## 탈북민의 초국적주의 속 북한 재영토화

- 2014년부터 가시화
- 초국적주의는 통합과 더불어 뉴몰든 로컬리티 구성
- 일상 속 북한 영토가 축소되다가(동화) 한국인과의 관계 속 차이 인식하면서 재확장, 재영토화
  - '변화한 북한' - 본래의 출신국에서 수정된 상상 속 공동체
  - 북한과의 끈 유지: 송금, 전화

## 탈북민 고유의 조직, 단체

- 한국인 이주민 단체를 선례로 삼아 일종의 동화 효과
- 탈북민들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출신국의 존재를 드러내는 효과
- 탈북민 협회는 대표성을 가지고 한인회, 다른 나라 탈북민들과 교류
- 무용단과 같은 문화 예술 단체는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
- 북한 교회는 한국 목사의 지도를 받았지만 탈북민들이 종교 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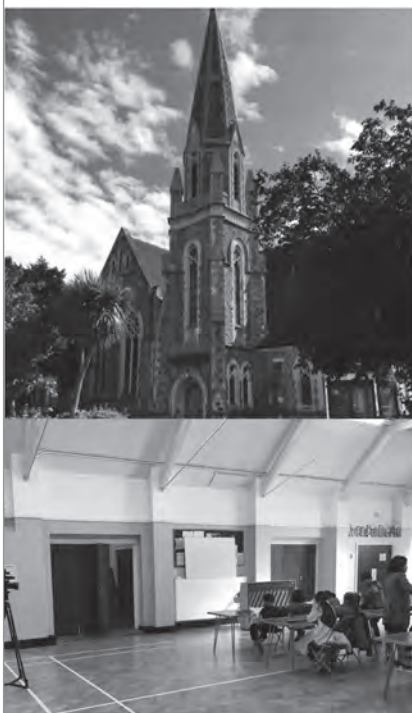
## 한국은 '형님'인가?

- “형님네가 모범을 보여야..” (한인회 갈등을 두고 탈북자협회 간부가 한 말)
- “큰 집, 작은 집..” (평통 간부의 말)
- “좀 잘 산다고 형님이에요? 이제는 도저히 못들겠어요” (탈북민들은 위계적 표현이라고 불편함 표시)



## 런던 한겨레 학교

- 탈북민 2세를 위한 한글학교: 토요일, 오후 1시30분-5시
- 영국 내 한국-북한 정체성을 둘 다 유지하려는 초국적주의
  - “우리 것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17. 11. 11. 탈북민 남성, 40대)
  - “이렇게 흩어져서 동화되다가는 북한사람은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2017. 11. 18. 탈북민 남성, 40대)
- 북한인들 고유의 것: 새로운 버전의 북한
  - 북한이 세계 안전의 위협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은 출신국가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 인공기에 대한 대화



우 리 는 친 구 (2017년 10월 14일)

두꺼비와 개구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길을 지나고, 숲길을 지나고, 시냇가를 지나 두꺼비 집으로 갔습니다.  
 “어, 내 단추가 어디 갔지?”  
 두꺼비 옷의 단추가 없어졌습니다.  
 “밖에 나가 찾아보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개구리가 시냇가에서 단추를 발견했습니다.  
 “야, 단추 찾았다!”  
 “아니야, 그건 내 단추가 아니야.  
 내 단추는 노란색이야.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야, 단추 찾았다!”  
 개구리가 숲속에서 노란단추를 찾았습니다.



## 탈북민 학교를 둘러싼 기대와 갈등

- 미래지향적 기대
  - 탈북민들의 미래, 북한의 미래, 한국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기대
  - 변화한 북한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도 했고, 영국사회의 일원이자 탈북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을 뜻하기도
- 동화에 걸림돌이라는 비판
  - 한국인들과 동화에 적극적인 탈북민들은 북한 한글학교가 한국 한글학교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국 한글학교 사람들은 영국 내 한국 커뮤니티의 통합을 위해 탈북민들은 한국인에게 흡수되어야 한다는 주장

## 학술적 함의

- 정체성을 국가 영토의 문제로 보면 개인의 삶이 권력, 특히 지정학적 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남
- 통일 후 이주와 정착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함
  - 동화와 초국적주의의 복잡한 얽힘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
- 강력한 동화주의 정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 세심하고 참을성 있는 접근
  - 사회통합에 대한 긴 호흡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Cheol Hee PAR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역임.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대표 발기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석사.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박사 (현대일본정치 전공).

저서에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지는 법> (문예춘추, 2000), <자민당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 (서울대출판문화원, 2011), 공저로는 <아베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대출판문화원, 2018),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한일관계 50년: 비교사적 관점> (대한민국역사발물관, 2016),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동아시아재단, 2014), <동아시아의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대출판문화원, 2014) 등 일본정치, 한일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저서 및 논문 다수.

Cheol Hee Park is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nd director of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II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He is a former dean of the GSIS and a former director of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IJS) at SNU.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an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in the year 2017.

His Research interests are Japanese politics, Korea-jap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He wrote many articles on Korean-Japan relations in English, Japanese, and Korean. He contributed articles in such edited volumes as East Asia's Haunted Past, National Identities and Bilateral Relations, U.S. Leadership, History and Bilater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Japan's Foreign Relations in Asia. He is currently is a columnist at Tokyo Shimbun, Joongang Ilbo and Munhwa Ilbo. He got BA and M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btained Ph.D. degree at Columbia University.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University of Tokyo, Keio University and Kobe University.

# 토론자 Discussant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JeongHun HA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한정훈 교수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다. 그는 한국정치, 의회정치, 정당정치와 비교정치를 전공하고 있다. 박사학위는 미국 뉴욕주에 소재한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받았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송실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주제는 선거와 의회 제도의 디자인, 정당 대표성, 의원행태 및 유럽의회 정치이다. 해외학술지로는 European Union Politic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등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등 국내 주요 학술지에 다수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

JeongHun Han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teaches Korean Politics, Legislative and Party Politics, and Comparative Politics. He received a Ph.D at University of Rochester, USA. He was a professor at Soongsil University (2011~2015). His research interests lie on those projects of designing electoral and legislative institutions, assessing party representation and MP's legislative behavior, and the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Many publications have appeared in various journals including European Union Politic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etc.





# Session 5-1

## 대북제재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

## UN Sanctions and the Humanitarian Crisis in the DPRK

주관기관  
Organized By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 좌장**  
Moderator
-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Youngsik KANG** Chairman,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 발표자**  
Presenters
-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Jusung LEE** Secretary General,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KNCCCK)
- 조이윤** 선양하나 공동 창립자  
**Joy YOON** Co-founder/Director of Educational Therapy, Ignis Community
- 토론자**  
Discussants
-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Kyu Chang LEE** Director,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Division,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  
**Hyoung-Joon LIM** Director, WFP Global Office in Korea, UN World Food Programme
-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Min-gyu LEE** 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 데이비드 울프** 크로웰 앤 모링 로펌 변호사, 미국  
**David WOLFF** Partner Attorney, Crowell & Moring LLP, USA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5-1)

## 대북제재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

2020년 UN의 '잠정적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적 필요 인구는 약 1,0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가 여전히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생존과 직결된 영양·보건의료·농업·식수위생 분야에 속한 다수의 물품이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으로의 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기준 1718위원회의 인도주의 사업 관련 제재면제 사례는 전체 41건이며(공개 건)이나, 조달, 송금 등 대북제재가 유발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재 강화에 따라 심화되어 가는 북한의 인도주의 실태와 제재면제 승인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해외 연사를 초청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UN Sanctions and the Humanitarian Crisis in the DPRK

According to the report, PROVISIONAL NEEDS AND PRIORITIES, published by UN in 2020, the number of people in need is around 10.4 million, with 40 perc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still facing a humanitarian crisis. However, many of the humanitarian items in the fields of nutrition, health, agriculture and WASH, which are directly linked to survival, have not been exported to the DPRK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on the DPRK. Although the 1718 committee approved exemption of 41 cases since the statement of the IAN No.7 in 2018, sanctions on the DPRK have still disrupted procurements and bank transfers, making it difficult to carry out humanitarian projects. In ord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and sanctions in the DPRK, we would like to invite experts and foreign speakers.

# 좌장 Moderator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Youngsik KANG** Chairman,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강영식 회장은 2019년 9월 24일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때 부터 함께하여 2008년부터 11년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년 7월 이임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13년까지 56개 대북지원 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운영위원장을,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150여회 북한(개성, 금강산 제외)을 방문한 그는 2017년 11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다.

Kang Young-sik was appointed as Chairman of the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n September 24, 2019. He served as Secretary-General for 11 years from 2008 in Korea Sharing Movement(KSM). He had been working for KSM since its founding in 1996. Kang also has served as Chairman of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 coalition of 56 North Korean support organizations from 2016 to 2017. He visited North Korea(except for Gaesong and Geumgang mountain) more than 150 times from 1998 to present. In recognition of his achievem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warded him an order of civil merit: Dongbaek Medal on November, 2017.

# 발표자 Presenter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Jusung LEE** Secretary General,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KNCKK)

이주성은 1994년 월드비전에 입사하였고 2003년부터 월드비전 대북사업 실무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지난 18여 년 간 북한 내에서 긴급구호, 농업개발협력, 지식공유사업을 전개한 경험을 갖춘 현장 활동가입니다. 또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북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옹호활동, 정책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법인이 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ang Young-sik was appointed as Chairman of the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n September 24, 2019. He served as Secretary-General for 11 years from 2008 in Korea Sharing Movement(KSM). He had been working for KSM since its founding in 1996. Kang also has served as Chairman of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 coalition of 56 North Korean support organizations from 2016 to 2017. He visited North Korea(except for Gaesong and Geumgang mountain) more than 150 times from 1998 to present. In recognition of his achievem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warded him an order of civil merit: Dongbaek Medal on November, 2017.

# 북한 인도주의 위기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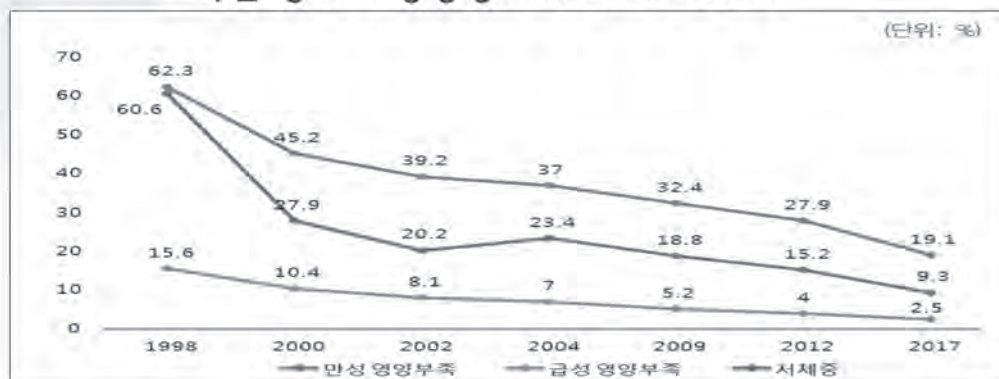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 주 성

## 목차

- ◆ 북한의 인도적 환경의 실태
- ◆ 북한의 경제환경 요인
- ◆ 북한의 식량수급 요인
- ◆ 결론

## 북한의 인도적 환경 실태(영유아 중심)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 주요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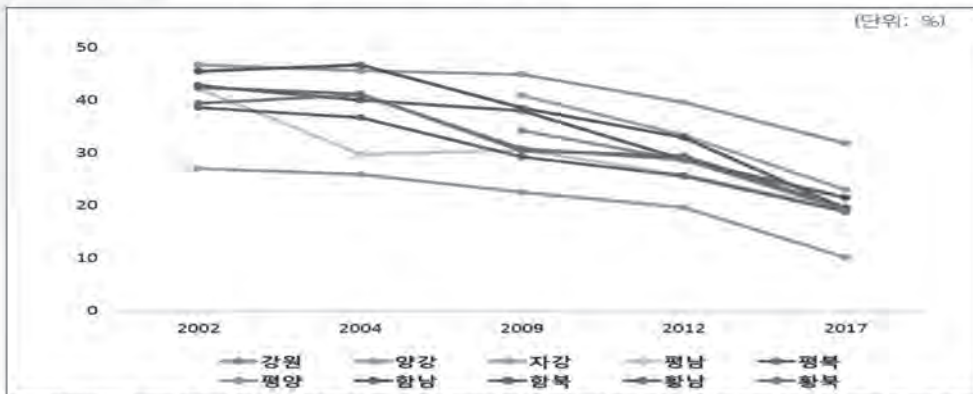


출처 : 홍제환(2018), "영유아 영양 상태로 본 북한 민생 실태", KINU 연구총서 18-1

- ◆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실시한 민생 조사 결과는 만성 영양부족, 급성 영양부족, 저체중 지표 모두 매우 빠르게 개선

- ◆ 영양부족 비율은 1998년 62.3%, 2000년 45.2%로 크게 하락, 2017년에는 19.1%로까지 크게 낮아짐
- ◆ 저체중 비율은 1998년 60.6%에서 2017년 9.3%로 급감
- ◆ 급성 영양부족 비율도 같은 기간 15.6%에서 2.5%로 줄어듦
- ◆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중상소득 국가 영유아의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은 6.4%, 고소득 국가의 비율은 2.5%로 북한은 이에 비하면 크게 높은 상황
- ◆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북한 내 인도적 지원 특히 취약지역 내 어린이와 장애인에 대한 관찰 필요

## 북한 지역별 영유아 만성영양부족 비율 추이



출처 : 홍제환(2018), "영유아 영양 상태로 본 북한 민생 실태", KINU 연구총서 18-1

- ◆ 북한 전 지역에서 만성 영양부족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 15년 사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6%까지 하락

- ◆ WHO 기준으로 2017년도에 평양, 평남, 평북, 함남, 황남, 황북은 만성 영양부족 비율이 '낮음' 단계에, 함북, 강원, 자강은 '높음' 단계에 속하게 되었고, 양강도만 '매우 높음' 단계에 해당
- ◆ 2010년대 들어와서는 양강도와 평양을 제외한 지역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이 평준화되고 있음 (2009년과 2012년, 2017년 조사에서 양강도와 평양을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자강도의 만성 영양부족 비율이 가장 높고, 황해남도의 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양자 간 격차는 11.7%에서 7.7%, 4.2%로 줄어들고 있음)
- ◆ 평양과 그 외 지역 간 격차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17년 조사에서는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지역편차는
- ◆ 향후 지역 양극화로 인한 영양부족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력 방안 구상 필요

## 북한 영유아 영양개선 요인과 과제

- ◆ 영유아 영양 상태는 식량 확보, 가계 소득, 모자 관리, 보건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정부역량, 소득 수준, 기후·지리 적 환경, 교육 수준 등에 영향을 받음
- ◆ 식량 사정은 2000년 대 초반까지 국제사회의 원조(총 공급량의 20~25%)에 기인해 곡물 공급량 증가로 영유아 영양개선에 영향, 그러나 2000대 말에는 식량사정이 어려워졌거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영양 상태 개선 추이가 계속 됨
  - 고난의 행군 이후 개별 생존 전략 구상
  - 텃밭 등 개인 경작 농지 수확물 통계 수치 추산에 어려움
  - 시장화를 통한 식량 접근성 완화

- ◆ 소득증대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계를 근거로 소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영 유아의 영양개선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는 미비함
  - 비공식경제부문의 자료 취합 및 추산에 어려움
  - 2017 북한 가구별 소유 자산 조사결과(MICS 조사)에서 텔레비전 98.2%, 휴대전화 69.0%, 전기밥솥 62.6%, 냉장고 30.3%의 가구에서 보유,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으나 지난 20년 사이 북한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가능성 시사
- ◆ 사회적 요인으로는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극복하고 과거 영 유아 영양 상태로의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은 여타 저개발국과는 달리 사회발전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임
  -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회복
  -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 낮은 수준의 합계 출생률
  - 북한 1세 아동의 예방 접종률 1990년대 초반 이미 100%에 육박, 어려움을 겪던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하락한 뒤 다시 V자를 그리며 빠른 속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

- ▶ 그러나, 북한의 기아 수준은 전 세계 117개 국가 중에서 26번째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컨선월드와이드, 2019)
- ▶ 영양결핍과 영양실조의 이유로 영양지원이 약 1,040만 명에 달하여 다음 세대의 발달 장애와 생존 위기 직면 (DPRK Needs and Priorities, 2020)
- ▶ 현재 약 840만 명의 주민이 안전한 식수 이용 못함
- ▶ 양질의 필수 보건 서비스 접근성, 깨끗한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 등 다른 부문에서도 지속적이고도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

## 북한의 경제환경 요인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 2015~2020년

(단위:백만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2	2020.3	2020.4
수입	2,483.9 (-12.6)	2,634.4 (6.1)	1,650.7 (-37.3)	194.6 (-88.2)	208.5 (7.2)	10.7 (-71.17)	0.6 (-96.2)	2.2 (-90.09)
수출	2,946.5 (-16.4)	3,192.0 (8.3)	3,328.0 (4.3)	2,217.1 (-33.4)	2,588.7 (16.8)	197.2 (-23.26)	18.0 (-90.9)	21.8 (-90.0)

자료 : 이석(2020)

- ◆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강력한 대북제재의 영향, 2016년 연간 최대 58억달러 수준의 북중무역, 2019년에는 28억달러로 위축
- ◆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GDP는 2016년 3.9%의 성장률을 기록 후 2017년에는 -3.5%, 2018년에는 -4.1%로 급락 (한국은행 추정)
- ◆ 2020년 1월~2월 북중무역은 작년 동월대비 수입 71%, 수출 23% 급감하였고 3월, 4월에도 수입, 수출이 90% 이상 급락한 상황



- ◆ 북한 당국은 코로나로 예방을 위한 국경폐쇄와 교역 재개를 위한 국경개방 사이에 딜레마 상황에 직면, 하지만 북한 주변국들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만간 국경을 다시 여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북한 당국이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목적으로 전국에 올해 말까지 수입 제한을 골자로 한 당(黨) 중앙위원회·내각 공동결정서를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출처 : 데일리 NK (2020.4.22)

- ◆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는 북한 내 시장,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장마당 경제를 위축시켜서 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타격을 입히는 상황

중국산 맛내기(조미료)는 평소보다 4배 오른 4만 원(북한 돈)에 팔리고 있고, 중국산 쌀, 밀가루 등 곡물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소식통은 “보름 전에 4400원 하던 중국산 쌀(1kg)은 1100원 오른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출처 : 데일리 NK (2020.4.29)

## 북한의 식량수급 요인

### 1. 북한의 식량생산

북한의 연도별 식량작물 생산량(2020~2019)

시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북한 생산량 (천톤)	4,134	4,253	4,311	4,537	4,484	4,005	4,306	4,108	-	-	4,676	4,806	4,802	4,512	4,823	4,701	4,558	4,640
증감률 (%)	4.8	2.9	1.4	5.2	-1.2	-10.7	7.5	-4.6	-	-	-	2.8	-0.1	-6.0	6.9	-2.5	-3.0	1.8

출처 :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Main.do?menuId=M\\_01\\_02](http://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Main.do?menuId=M_01_02)),  
검색일 : 2020. 8. 9)

- ◆ 2019년 북한식량작물 생산량이 464만톤으로 전년 대비 9만톤 증산
- ◆ 2000년 초반에 비해 우상향하는 식량증산의 성과는 있어 보이나 최근 몇 년 사이 식량 증산효과는 미비해 보임
- ◆ 자급자족의 자력갱생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 달성은 단기간 내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 대북제재가 곡물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보임

## 2. 북한의 대중국 식량 수입

2017년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이 전년 대비 220% 상승한 이래, 2018년에는 23만 9천 톤으로, 2019년에는 2013년 이후 상업적 도입량으로 가장 큰 규모인 33만 7천 톤을 수입함

2020년 1분기 식량의 수입감소 현상 뚜렷 (중국세관사이트)

2020년 1분기 1,370만 달러, 2019년 17,918만 달러, 2018년 26,939만 달러

###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 실적

단위 : 수입액(천달러), 수입량(톤)

품목(HS코드(1))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합계	24,015	47,601	28,948	52,575	65,304	169,031	90,860	239,074	154,083	337,178
보리	0	0	0	0	0	0	1,003	1,979	1,221	0
옥수수	3,017	9,891	1,010	3,125	11,258	50,878	1,137	4,344	16,234	13,623
쌀	10,772	17,138	24,845	41,879	21,361	36,408	24,656	43,539	73,468	144,783
잡곡	78	120	0	0	0	0	-	-	-	292
밀가루	5,645	14,437	2,536	6,958	32,623	81,654	63,047	187,802	62,490	177,178
두류	4,503	6,015	557	614	62	91	1,016	1,409	670	C

출처 :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Main.do?menuId=M\\_01\\_02](http://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Main.do?menuId=M_01_02), 검색일 : 2020. 8. 9)

북한농업동향 제 21권 4호 참조

## 3. 북한의 비료 수급 상황

- ◆ 북한의 최근 비료 공급량은 2011~2016년 기간에 비해 감소  
(2018년의 비료 공급량은 63만 톤으로서 2016년에 비해 약 25% 감소)
- ◆ 북한의 비료 공급은 질소 비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산과 칼륨 비료는 많이 부족해 불균형 양상  
(2018년 전국의 인산과 칼륨 비료 공급량은 각각 4,174톤과 2,915톤 이전 5년 평균 공급량에서 각각 70%, 50% 낮아진 규모)
- ◆ 농장에서는 비료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물 부산물, 짚, 거름 등을 혼합하여 자체적으로 비료를 제조해 사용
- ◆ 2020년 1분기, 코로나 사태로 대중국 비료 수입 크게 감소  
(2020년 120만달러, 2019년 388만달러, 2018년 748만달러, 2017년 1,696만달러)

## 4. 2020년도 북한의 식량생산 및 수급 문제

- ◆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원조 물량은 2013 년 이후 크게 감소해 최근에는 연간 2만여 톤에 불과한 저조한 상태를 유지 (한국의 쌀 지원 제안 거부, 코로나로 접근성 난제로 국제사회 지원 저조 예상)
- ◆ 2020년도 1분기 비료수급(대중국 수입)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여 적시에 적량 시비 한계 있어 보임
- ◆ 2020년 여름 역대급 장마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의 피해로 수확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2020년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식량생산 및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결론

- ◆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민간의 협력과 함께 자력갱생을 통한 인도적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고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북한의 기아 수준은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심각한 수준 (국민의 절반이 영양실조 상태)
- ◆ 북한의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폐쇄의 여파로 어려움에 가중될 개연성 높음
- ◆ 북한의 식량생산은 국가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비료수급 부족, 외부로부터의 식량수급 감소, 이상기후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부족한 식량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국면을 모면하고자 하는 자구책과 시장화를 통한 식량 및 소비재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경제, 식량 수급, 코로나 사태, 이상 기후 등으로 인도적 환경 악화 예상됨

#### ◆ 참고자료

이석,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뷰인가", KDI북한경제리뷰, 2020년 5월호

홍제환, "영유아 영양 상태로 본 북한 민생 실태", KINU 연구총서 18-1, 2018년

북한농업동향(제21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DPRK Needs and Priorities, 2020

통계청, 북한통계포탈([http://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Main.do?menuId=M\\_01\\_02](http://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Main.do?menuId=M_01_02))

데일리NK ([www.dailynk.com](http://www.dailynk.com)) 기사 검색

**감사합니다.**

# 발표자 Presenter



**조이 윤** 선양하나 공동 창립자

**Joy YOON** Co-founder/Director of Educational Therapy, Ignis Community

조이 윤은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특화된 비영리 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선양하나)' 공동 창립자이다. 10년 이상 북한에 거주하며 활동해왔으며, *Discovering Joy: Ten Years in North Korea*의 저자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남편과 함께 인도적 지원, 사회적 기업, 보건의료 및 교육 관련 활동을 해왔으며, 교육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양 척추 재활 센터에서 뇌성마비, 자폐 등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담당해왔다.

Joy Yoon is the co-founder of Ignis Community(Sunyanghana),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specializes in treat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e is one of the few Americans who has actually spent over ten years living and working in the DPRK and is the author of the book, *Discovering Joy: Ten Years in North Korea*. She and her husband's work inside the nation has included humanitarian outreach, social enterprises, and medical treatment and education, which has been featured in *TIME*, *Mission Frontiers*, and the *Wall Street Journal*. Joy specializes in Educational Therapy and is the Director for Special Education at the Pyongyang Spine Rehabilitation Center in North Korea where she works with children who have cerebral palsy,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 ***UN, US Sanctions on the DPRK & Its Implication on Humanitarian Assistance***

Joy Yoon



[www.igniscommunity.org](http://www.igniscommunity.org)



# IGNIS Community



U.S.A., China, South Korea, Philippines, Mongolia, Singap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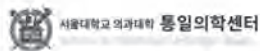




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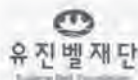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부



German Gov

만나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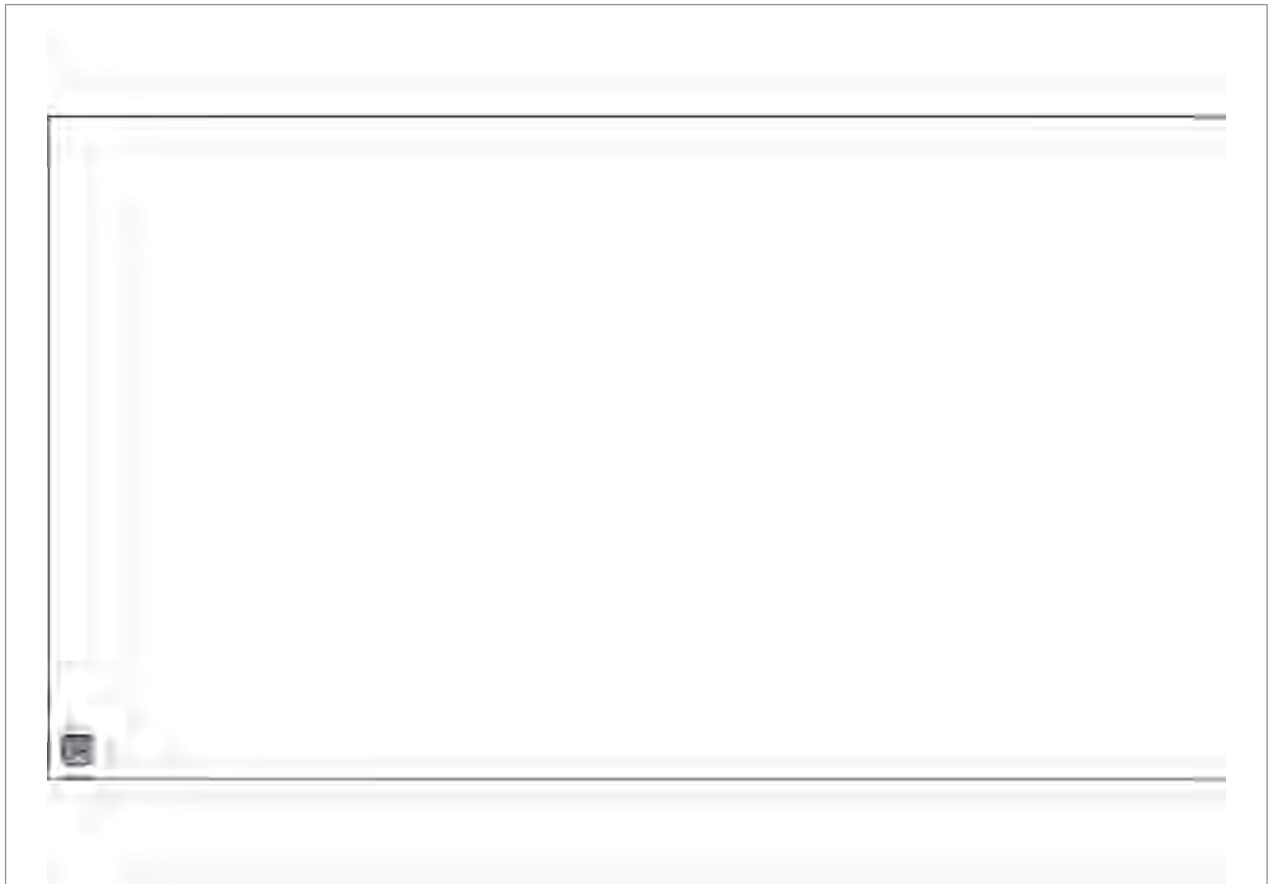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OCTOBER 2019





## Current Challenges

- U.S.A. Executive Orders (Obama & Trump)
- North Korea Sanctions Policy Enhancement Act (NKSPEA), 2016
- CAATSA, August 2017
- September 1, 2017- 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to DPRK (U.S.A.)
- Special Validation Passport Requirement (U.S.A.)
- BIS Commerce License (U.S.A.)
- OFAC Treasury License (U.S.A.)
- UN Sanctions Committee Exemption
- Banking Restrictions
- COVID-19 (Border Closing, Shipment Delays)

---

# Thank you

[www.joyellenyoon.com](http://www.joyellenyoon.com)

[www.igniscommunity.org](http://www.igniscommunity.org)

# 토론자 Discussant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Kyu Chang LEE** Director,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Division,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이규창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역임하였고 2007년 통일연구원에 입사하여 현재 인도협력연구실 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주요 분야는 북한법과 통일관계법, 남북법제, 북한인권, 탈북자, 인도협력입니다. 현재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법무부 남북법령특별분과연구위원회,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Dr. Lee, Kyu-Chang had a B.A. in Law from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He obtained a M.A. and a Ph.D. in International Law fro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After receiving his Ph.D., he served as a member of Supreme Court Research Council on Special Legal Systems. In 2007, he joined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nd is currently serving as the Director of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His main areas of research include North Korean law, unification relations law, inter-Korean legislative system,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Dr. Lee has actively participated as a current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for Inter-Korean Legal System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orth Korea Legislation Research Committee of Ministry of Justice, Advisory Committee to Promote a Unified Legal System of Ministry of Unification, and Unification Judicial Study Commis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 토론자 Discussant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

**Hyoung-Joon LIM** Director, WFP Global Office in Korea, UN World Food Programme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UNWFP) 한국사무소장은 외교부 JPO로 2002년 UN WFP에 입사하여 온두라스 영·유아 영양사업 담당관, 기니비사우 부대표, 라오스 긴급구호 및 복구 총 담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UN WFP 로마 본부에서 아시아 지역 파트너십 총괄 공여관으로 주요 아시아 공여국과 협력을 주도하였고, 2011년말 UN WFP 한국사무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정부와 민간과의 각종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제개발협동 박사과정 교수로 초빙되어 강의하는 등 학교와 기관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소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행정학 석사(MPA)를 취득하였습니다.

Hyoung-Joon Lim has been the Director of UN WFP Korea Office since 2011. He joined UN WFP in 2002 as JPO and served in Honduras, Guinea Bissau, and Lao PDR, managing emergency operations and development projects. After his missions, he moved to UN WFP HQ in Rome, Italy to serve as a donor relations officer for the Asia region until he was reassigned to ROK. In his 20s, Hyoung-Joon backpacked over 80 countries and was engaged in several publications including "I swallowed Earth" (1999), "Global Young Korean" (2008), and "Let's smile together" (2012). In 2015,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teach "International Development Practice." Hyoung-Joon received a B.A in language and diplomatic science, M.A in political science from H.U.F.S and MPA from Harvard University.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Min-gyu LEE** 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이민규(Min-gyu Lee)는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 마카오대학교 사회과학원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역임하였습니다. 2018년 서울연구원에 입사하기 전에 재단법인 여시재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정세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민규박사의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정책, 미중 관계, 도시외교, 그리고 남북관계입니다. 이민규박사는 또한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겸임연구원, 그리고 중국의 차하얼학회 연구원 등의 활발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in-gyu Lee is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Seoul Institute, South Korea. A graduate of Kookmin University and Peking University (M.A., Ph.D.). He was a postdoctoral fellow in the Faculty of Soci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Macau (2014-15). Prior to joining the Seoul Institute in 2018, Dr. Lee was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Future Consensus Institute(2015-2017). His research foci include China's foreign policy, Sino-American relations, City diplomacy, and Inter-Korean Relations. Dr. Lee also serves as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consensus Institute, Han shin Eurasia Institute in Korea, and the Charhar Institute in China.

# 토론자 Discussant



**데이비드 울프** Crowell & Moring LLP, 미국

**David WOLFF** Partner Attorney, Crowell & Moring LLP, USA

데이비드 울프는 Crowell & Moring LLP 파트너이자 변호사이며,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이다. 미국 경제 제재 및 수출 통제 등을 다루며, 현장 교육 및 정부 대응 등을 통해 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민형사상 절차 집행 시 국제무역 관계자들을 대변하며, 미국 규제가 역외 미치는 영향과 제3국 내국법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충돌을 다룬다. 워싱턴과 런던에서 활동하며 미국, 영국, EU 제재 준수 및 집행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David (Dj) Wolff is a partner and attorney at law in the firm's Washington, D.C. and London offices and a director with C&M International, the firm's trade policy affiliate. At Crowell & Moring, he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group where his practice focuses on compliance with U.S. economic sanctions, export controls and antiboycott regimes, including by providing day-to-day compliance guidance, developing compliance programs including through on-site compliance trainings, responding to government inquiries, conducting internal investigations, representing them during civil and criminal enforcement proceedings, and, in collaboration with colleagues, managing the potential conflict of laws which can arise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extraterritorial impacts of U.S. regulations and third country "blocking" laws or data privacy regulations. Dj splits his time between Washington and London, working regularly with European clients and colleagues to provide coordinated guidance on U.S., U.K., and EU sanctions compliance and enforcement. Dj was named a Law360 Rising Star in International Trade in 2020, by the The National Law Journal's "DC Rising Stars" in 2019, and named one of the "40 under 40" in Investigations internationally by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in 2017.

## Session 5-2

###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추진방안 모색

### A Discuss of Humanitarian Support and Regional Development with North Korea through Social Solidarity Economy

주관기관  
Organized By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Hananuri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좌장  
Moderator

방인성 하나누리 대표  
Insung PANG President, HANANURI

발표자  
Presenters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Sungchan CHO Research Director, Hananuri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경제대학원 원장  
Changjin KIM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이찬우 테이쿄대학교 준교수, 일본  
Chanwoo LEE Associate Professor, Teikyo University, Japan

토론자  
Discussants

최현아 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Hyun-Ah CHOI Senior Researcher,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강도욱 맘보사와사와 대표  
Douk KANG Executive Director, MAMBOSAWASAWA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Hae Kyung CHOI Secretary General, OKEDONGMU CHILDREN IN KOREA



# Session 1-1



##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추진방안 모색

남북경협에서 대자본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대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남북경협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자립과 자치를 추구하면서, 남한 시민사회의 경험과 역량이 결합될 수 있도록 인도지원과 지역개발협력 부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중요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사회연대경제 패러다임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구소련, 중국 및 북한의 혼합경제 시기(1940-60년대)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며(김창진, 2008). 지금도 여전히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일정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이종석, 2011; 이찬우, 2018). 사회연대경제 패러다임은 대북 제재 시기에도 인도지원과 결합하여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며, 북한의 최근 인도지원사업 거절에 대한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시기에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지역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가교가 될 것이다.

## A Discuss of Humanitarian Support and Regional Development with North Korea through Social Solidarity Economy

The role of large capital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clear, but too dependent on large capital can distort the structur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pursuit of North Koreans' self-reliance, a new approach is required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new approach should be combined with the experiences and capabilities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Cooperatives, one of the method of Social Solidarity Economy(SS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ra of the mixed economies in North Korea, and players still occupy a certain status (Lee Jong-seok, 2011; Lee Chan-woo, 2018). In this sense, the paradigm of SSE can be combined with humanitarian assistance to achieve a breakthrough even during the time of sanctions on North Korea. We can also respond to North Korea's recent policy change on the refusal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t will also serve as a bridge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out provoking North Korea's ideology during the future peace regime.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좌장 Moderator



방인성 하나누리 대표

Insung PANG President, HANANURI

방인성은 2007년부터 사단법인 하나누리 대표로 근무하면서 30여 차례 이상 북한의 개성, 금강산 및 라선특별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북측과 나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나누리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목도리, 남북을 잇다' 프로젝트와 '자립마을 프로젝트'가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06~2007)과 (사)평화통일 연대 운영위원(2009~현재), (사)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사(2020~현재) 등 다양한 통일운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6년에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Since 2007, Bang In-sung has been working as the President of Hananuri and has visited Kaesong, Mount Kumgang and Rason Special City in North Korea more than 30 times to carry out various cooperation projects. As a result, he has formed the trust relationship with the North Korea. The representative projects of Hananuri include the "Mokdori,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project" and the "Independent Village Project." He is continuing various unification activities, including a standing committee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006-2007), an operating member of the Solidarity for Peaceful Reunification (2009-present), and director of the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2020-present). In 2006, he was awarded the Presidential Commendation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s.

# 발표자 Presenter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Sungchan CHO** Research Director, Hananuri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조성찬은 중국인민대학교 토지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큰 틀에서 공공토지임대제, 중국과 북한의 토지정책, 북한 지역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공저, 2011), 「상생도시」(2015),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2019) 등이 있다. 2017년 제2회 김기원 학술상을 수상했다.

Sungchan Cho received doctorate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at the People's University of China and is currently working as the Research Director of the "Hananuri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He is researching public land leasing system, land policy of China and North Korea, and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under the big framework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Major studies include China's experience in land reform(2011), Win-Win City(2015), and Public Land Leasing Theory for Land Reform in North Korea(2019). I won the second Kim Ki-won Academic Award in 2017.



## 북한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의 새로운 전략

- 사회연대경제와 SDGs의 결합 -

<2020 한반도 국제평화포럼>(9.8.)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 순서

- ▶ 1. 기존 대북 인도지원 및 경험방식의 한계
- ▶ 2.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대안적인 접근전략
- ▶ 3.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1
- ▶ 4.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2
- ▶ 5. 결 론

## 1. 기존 대북 인도지원 및 경험방식의 한계

- ▶ 인도지원의 한계
  - 남측 : 퍼주기 논란 / 북측 : 자존심을 건드림
  - 북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립을 지원하지 못함
  - 최근 인도지원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며 소극적인 입장
- ▶ 경제협력의 한계
  - 국제 및 국내 정치변수의 종속변수 → 사업중단 리스크 큼
  - 대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남북경협 구조 왜곡(2019 평양 정상회담, 4대기업)
  - 지역정부, 시민사회, NGO의 적극적인 참여 배제
- ▶ 새로운 방향 : 사회연대경제 접목
  -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며,
  - 북한 주민의 자립과 자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 남한 지역정부, 시민사회 및 국제차원의 협력이 가능해야
  - 남북은 물론 동북아 차원의 평화와 연대의 철학에 부합해야

## 2.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대안적인 접근전략

### 1) 사회연대경제(SSE)로의 변화 흐름

- ▶ 200년 역사를 가진 프랑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배제, 환경, 인권, 지속가능발전 전략에서 한계 노출 ⇒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특징(장테, 2019).
  - 첫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주도, 자본 비우선.
  - 둘째, 자연인은 '이중 지위'. 회원이면서 동시에 임금노동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 셋째, 소유권은 분할 불가 원칙, 구성원 전체에게 속함.
  - 넷째, 창출된 이익은 '공평하게' 나눔.
- ▶ 유엔 산하기관들로 구성된 UNTFSSSE,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 탐색중.
- ▶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기구(UNHCR), UN 산하 포용적 사회개발 분과(DISD) 등이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의 가능성 탐색에 적극 참여
- ▶ '사회연대경제 글로벌 시범 그룹의 공동선언문'(2016) : "사회연대경제는 SDGs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실행 방안"
- ▶ 한국의 코이카(KOICA), 사회연대경제를 접목 국제개발협력 추진중.

## 2.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대안적인 접근전략

### 2) 북한 개발협력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

- ▶ 사회연대경제는 사상적으로 뒤르켐의 '불평등 없는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론'과 연결.
- ▶ 사회연대경제는 조직과 영토를 초월하는 포괄성을 가짐.
  - '유엔기구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E), 쿠바 사회연대경제의 포괄성.
  - 타 국가와의 연대가능성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이어주는 다리.
- ▶ 사회연대경제와 커먼즈(communs) 경제는 소유권 개념에서 큰 공통점을 가짐.
  - 토지와 화폐는 중요한 커먼즈. 북한의 토지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헌법).
  - 북한 헌법이 말하는 사회협동단체가 바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해당함.
- ▶ UN의 지원으로 SDGs와 사회연대경제의 연결성이 높아짐.
  - 4가지 목적에서 SDGs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이 확대됨.
- ▶ 쿠바 사례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에 시사점
  - 쿠바는 여러 가지로 북한과 유사.
  - 쿠바는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삼음.
  - 반면, 북한은 헌법에서 사회협동단체를 과도기적인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대안적인 접근전략

### 3) 접근법 유형

- ▶ 접근법 1 : SDGs와 상관없이 사회연대경제(SSE)를 통해 남과 북을 직접 연결.
  - 발표 2(김창진) 및 발표 3(이찬우)의 접근법
  - (사)하나누리의 라선시 자립마을프로젝트 사례 : 인도지원에 적용
  - 책,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맑은나루, 2020)
  - 과제 : 대북제재 해소, 북미 및 남북간 긴장관계 해소
- ▶ 접근법 2 : 국제기구를 통해 SDGs와 사회연대경제 결합
  - SDGs를 통해 남과 북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음. 남과 북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SSE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북한은 현재 '식량 및 영양 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라는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참여중(최현아, 2019).
- ▶ 접근법 2의 과제
  - 과제1 : SDGs를 통해 남과 북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
  - 과제2 : 북, SDGs와 SSE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 2.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대안적인 접근전략

### 4) 접근법 유형의 도식화



## 2.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대안적인 접근전략

### 5) 사회연대경제의 두 축 : 토지+금융

- ▶ 칼 폴라니 : 토지, 노동, 화폐의 상품화 반대 (COMMONS)
- ▶ 자본주의 경제체제 : 토지+금융 매트릭스(조성찬, 2015)
- ▶ 토지 : 건강한 공공토지임대제 확대 필요(조성찬, 2019)
- ▶ 금융 : 사기업 중심의 신용화폐 시스템 한계 극복 필요
- ▶ 토지+자본+노동 = 기업. 주식회사 vs. 협동조합
- ▶ 존 스튜어트 밀 :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의 이상향
- ▶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에 적용 가능한 바람직한 기업 형태로 확인됨. (영국, 미국, 이탈리아 볼로냐)

### 3.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1

#### 1) 하나누리 사례

##### □ 단체 소개

- ▶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비영리 사단법인
- ▶ 2007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대북지원 진행.
- ▶ 2009년부터 함경북도 라선특구에서 농촌마을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음. 실질적인 자립이 목적
- ▶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서 상호간 신뢰 형성.
- ▶ 일방 지원-일방 수혜 방식이 아닌 호혜 관계 추구.
- ▶ 사업과 연구의 결합 :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설립(2019)

### 3.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1

#### 1) 하나누리 사례

##### □ 적용 배경

- ▶ 자력갱생이 북측의 핵심 전략
- ▶ 북한 내 시장 확산
- ▶ 최근 무상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
- ▶ 현재 인도지원 사업만 가능 ⇒ 지속적인 지원으로 신뢰관계 형성 ⇒ 현지 수요 파악 및 점진적인 사회연대경제 적용 ⇒ 향후 도시협력 활성화 시기 대비 ⇒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도시협력
- ▶ 핵심 : 자연스럽게 지역의 필요를 읽어내어 사업화로 연결.  
[인도지원+사회연대경제] ⇒ [사회연대경제+지역발전]
- ▶ 북측의 자존감과 이데올로기 자극하지 않기 위함

### 3.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1

#### 1) 하나누리 사례

##### □ '경제적 자립'의 정의

- 기본 정의 : 외부 지원 없이 한 마을이 스스로 식량, 육아, 주거, 교육, 의료, 에너지 등 기본 필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

##### □ Y마을 자립 지원 목표(10년)

- 1단계 자립(2017-2019년) : 농업생산을 통한 성인 및 아이들 식량 해결
- 2단계 자립(2020-2022년) : 농산물 판매 및 가공 후 판매를 통한 수익 확충으로 기본적인 경제적 자립 도달
- 3단계 자립(2023-2026년) : 고등교육, 고급 의료 등 높은 수준의 자립 기초 형성

11

### 3.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1

#### 1) 하나누리 사례

##### □ 자립마을 프로젝트

- ▶ 단순한 지원전략에서 투자전략으로 선회(2017) : 마을금고가 핵심 역할
- ▶ 스웨덴의 야크은행(무이자저축/무이자대출) 모델 적용
- ▶ 수익배분 원칙에서 투자금 100% 환수(5년 또는 10년) 원칙으로 전환
- ▶ '사업 자금' 및 '농민 생활자금' 대출에 사용
- ▶ 투자 상환액을 Y마을금고에 재출자, 자금 축적 지원 ==> 라선 노동인민금고?



### 3.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1

#### 1) 하나누리 사례

- 사회연대금융(SSF)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으로 발전
  - ▶ 북한, 토지의 배타적 사용 및 지대 납부 변화 강화. 관건은 금융.
  - ▶ UN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996-2008: 농촌), 마라나타 트러스트(2004~현재 중단: 도시) 등이 대북제재 이전에 금융지원.
  - ▶ 해외,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연대금융이 역할 감당 (몬드라곤의 노동인민금고, 네덜란드 라보뱅크 등)
  - ▶ 상상 : 사회연대도시 라선, 라선 노동인민금고 ...
    - 북한의 '협동농장 신용부' 등 기존 금융기관과 협력

19

### 4.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2

#### 1) SSE와 SDGs 연결고리 : UN 산하 포용적 사회개발 분과(DISD)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pecifically the Social Inclusion section. The header includes the UN logo and the text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ocial Inclusion'. A search bar is located on the right. Below the header i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for Home, About Us, COVID-19, and various thematic areas like Ageing, Cooperatives, Disability, Employment, Family, Indigenous, Inequality, Poverty, Social Inclusion, Sport, and Youth.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two columns. The left column is titled 'Issues' and features two sub-sections: 'AGEING' with a photograph of an elderly man and woman, and 'CIVIL SOCIETY' with a photograph of a group of people. Each sub-section has a brief text description and a 'Learn more' link. The right column features 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ogo and a list of 'MORE ISSUES' including Accessible Tourism for All, Inequality, Intergenerational Relations, Disaster Risk Reduction, Financing Inclus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Neglect, Abuse and Violence of Older Women, and Social Protecti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s highlighted in a box at the bottom of this list.

14

## 4.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2

### 2) SSE와 SDGs 연결고리 : 한국 코이카(KOICA)



#### 사업 연혁

- 1995 ○ 국내 CSO 협력
- 2002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긴급구호 사업
- 2005 ○ CSO협의체(GCAP, K&FID) 지원
- 2010 ○ 기업협력 대학생 인턴제고 프로그램 개편
- 2012 ○ 현지 CSO 협력 개발협력연대 (DAK) 출범 대학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편
- 2014 ○ 아카데미/기업/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개편
- 2015 ○ 시민사회 주제별협력프로그램 공모
- 2018 ○ 사회적연대경제프로그램 공모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공모

## 4.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2

### 3) 한국과 북한의 SDGs 참여 현황

#### 남한



#### 북한

- ▶ '식량 및 영양 안보'
- ▶ '사회개발 서비스'
- ▶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 ▶ '데이터와 개발 관리'





## 4.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2

### 4) 강화해야 할 연결고리

- ▶ 1. 북한 개발협력에서 SSE의 필요성에 대한 남측의 공감대 부족
  - ▶ 2. 실행 주체 : 외교부? 환경부? 통일부?
  - ▶ 3. SDGs를 통한 남과 북의 긴밀한 연결고리(과제 1)
  - ▶ 4. 북, SDGs와 SSE의 구체적인 연결(과제 2)
- ▶ 정리 :
- 연결고리 3을 강화하면서 북의 SSE도 강화하면 연결고리 4가 자연스럽게 형성됨.
  - 접근법2 ⇒ 접근법 1로 발전
  - 국제기구와의 인도지원 사업이 첫걸음으로 중요



17

## 4.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2

### 5) SDGs를 통한 남과 북의 긴밀한 연결 가능성(과제 1)

- ▶ 북한의 SDGs 사업 참여 및 문재인 정부의 관심 표명(삼정KPMG, 2018)
  - 2015년 유엔이 'Post-2015 개발'을 주제로 17개 목표로 구성된 SDGs 채택.
  - 북한, 자국에서 활동하는 14개 UN 기구와 함께 'UN 북한 전략계획 2017-2021' 공동합의문 발표(2016.9). 4대 우선 목표 명시.
  - 문재인 정부도 북에 관심 : '100대 국정과제'(2017.7)
    - UNICEF, WFP의 북한 모자보건사업 등에 800만 달러 인도지원 발표(92번)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90번) 및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98번)
    - 한계 : 사업규모 너무 큼. 국제기구와의 연결성 부족. SSE 참여 어려움.
- ▶ 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의 대북 SDGs 연계 사업
  - 평양과 관계하면서 교육 등 다양한 사업 전개했음.
  - 라선에서 협동농장 지원사업 진행했음.
  - 라선에서 SDGs관련 환경보호 사업(철새 및 습지 보호) 추진중.

18

## 4. SSE를 통한 접근전략의 구체화 : 접근법2

### 6) 북한 SSE 강화의 가능성(과제 2)

- ▶ 사업 경험 : 하나누리, 국제농업개발기금, 마라나타 트러스트 등
- ▶ 과거 경험
  -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이전하기 전인 1960년대 초까지 다양한 협동조합 추진. 혼합경제 시기(김창진, 2018)
  - 지금도 협동조합이 일정 위상 차지(이찬우, 2019).
- ▶ 현재 변화
  - 농촌의 대규모 협동농장을 작업반 단위로 해체중(조성찬, 2019)
  -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33조)를 국가경제 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
  - 농촌과 도시에서 '사회협동단체 공간 확대' 해석 가능

14

## 5. 결론

- ▶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나가길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 ▶ 기존 인도지원 및 경제협력 사업방식의 한계 극복 필요
- ▶ 남한은 국제기구 및 SDGs를 통해 북한과 협력 강화 필요(과제 1)
- ▶ 북한은 협동조합 경험 풍부, 현재도 잠재력과 가능성 보유. 사회연대 경제 전략의 접목 가능성 있음(과제 2)
- ▶ 대북제제, 북의 4대 목적에 SSE를 어떻게 접목할지 연구 필요(과제 2)
- ▶ 남측 주체: [통일부/외교부/환경부]+지자체+NGO+협동조합등+시민

### <참고 자료>

- 공저,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맑은나루, 2020.
-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두앤북, 2018.
- 조성찬, "북한 개발협력을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선택한 이유", [동북아 리포트 제6호], 2020.8.11.
- 제6회 라선포럼, "Agriculture, Environment, Development-Cooperation with Rason Special City (2010-2020)", 젤리거 박사(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 대표), 2020.8.20.

15

# 발표자 Presenter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원장  
**Changjin KIM**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겸 사회적경제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와 협동조합의 상호 관계, 협동조합과 지역사회공동체의 연계성, 공공정책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주제에 관해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분야 저술로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운동』(2008), 『퀘벡모델: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사회경제·공공정책』(2015),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II』(편집/공저, 2019),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공저, 2015), 『협동조합의 딜레마』(공역, 2015), 『쿠바 춤추는 사회주의』(공저, 2017) 등이 있다.

Currently, Professor of division of Social Sciences, Dean of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Major research theme: Relations between State Power and Cooperatives; Inter-relations between Cooperative and Community; Public Policy and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ublications: Socialism and Cooperative Movement(2008), Quebec Model: Cooperative, Social Economy and Public Policy in Canada(2015), 100 years of Korean Cooperative Movement vol.II(2019), Humanities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2015), Cooperative Dilemma(translation, 2015), Cuba: Dancing Socialism(2017)

#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과 협동조합

: 러시아·벨라루시·동독·쿠바 사례와 북한

국제평화포럼 2020-09-08

김창진 ·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장

## 목 차

1. 인식과 정책 : 맥락의 비대칭
2. 소련과 러시아의 개혁과 협동조합
3. 벨라루스 : 사유화없이 영농기업 중심 발전
4. 독일 통일과 동독의 농업생산협동조합 체계
5. 쿠바의 경제개혁과 협동조합
6. 북한에 주는 시사점

# 1. 인식과 정책: 맥락의 비대칭

1.1 국가사회주의체제의 협동조합인식과 사회연대경제

1.2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 농업문제 인식

1.3 양쪽 편향을 넘어서는 대안 인식의 필요성

# 2. 소련과 러시아의 개혁과 협동조합



2.1 국가사회주의권의 토지개혁-농업협동화-집산화 및 협동조합 체계 모델

2.2 1920년대 신경제정책(NEP): 소련 최초의 경제개혁과 협동조합

2.3 1980년대 페레스트로이카: 소련 말기 개혁·개방과 협동조합

2.4 1990년대 이후 현대 러시아의 농업협동조합과 소비조합



## 2.5 벨고로드(БЕЛГОРОД): 러시아적 협동조합 발전의 길?

- 대규모 영농기업 지원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지방정부의 성공 사례로 평가됨
- 농협의 경제적 수익성·효율성 측면보다  
사회적 기능 중시한 접근법 적중
- 교훈



### 3. 벨라루스: 사유화없이 영농기업 중심 발전



#### 3.1 북한과 유비

3.2 대규모 사유화 조치 취하지 않음

3.3 농업부문 개혁과 생산협동조합

3.4 벨라루시 농업의 영농 규모 비중

대농장 79% / 자영농장 2% / 개인부업 농장 19%  
소형 영농기업(자영농장)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  
낮은 비중

3.5 교훈



## 4. 독일 통일과 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 체계의 변형·부활



4.1 북한과 유비

4.2 통독 당시 서독인들의 무지와 편견

4.3 대형 농업생산조합(LPG)의 우월성 입증과 그 이면

4.4 농업개혁의 경로의존성이 드러남

4.5 농촌공동체성의 상실이라는 대가



#### 4.6 다목적 사업 조직화 : 자본주의 시장경제 조건에서 LPG의 생존 전략

- 예나 근방 **Etzdorf** 농업협동조합



### 5. 쿠바의 경제개혁과 협동조합



## 5.1 북한과 유비

## 5.2 쿠바의 경제개혁='갱신'과 협동조합

## 5.3 쿠바 협동조합체계의 특징

## 5.3 농촌과 도시의 협동조합 사례

## 5.4 교훈



### 자주적 소형 농업협동조합(2017년)

#### \* 라파엘 형제의 농산물 직판장



라파엘 형제가 운영하는 농산물 직판장. 쿠바에 이렇게 신선하고 깔끔한 매장이 있을 줄 미처 예상 못했다. 사진 김성보

#### • 루카의 농장

- 조합원 5명
- 토지 면적 3헥타르
- 아바나 시내 파스타 식당



쿠바의 사람과 땅을 사랑해 아예 정착해버린 이탈리아인 루카. 그의 농장은 흔적의 지혜를 한눈에 보여준다. 사진 김성보

\* 코인시덴시아(Coincidencia) 농장

- 노동과 예술, 인간과 자연 조화
- 대형 협동조합에서  
10년 단위로 토지 임대
- 구성원은 18가족
- 경작물  
망고, 바나나, 옥수수, 커피 등
- 농업+세라믹 아트의 결합  
=도자기 축제



노동과 예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낸 마탄사스주의 코인시덴시아 농장 사진 최윤오



▪ 도시의 새로운 제조업 협동조합

: 스테인드글라스 복원 협동조합

- 청년 노동자 3명의 협동조합
- '아바나 역사협회'와 협력, 색유리 가공·제작하여 역사·문화유적 보수에 납품



## 6. 북한의 개혁에 주는 시사점(1)

### 1. '협동적 소유=과도적, 불완전 소유 형태' 인식 변화되어야

“협동적 소유=소생산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소유로부터 전 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 (북한 헌법)

→ 사회경제적 다원주의, '협동적 소유'의 독자적 의미 진지한 인식 필요

→ “자본주의제도 도입이 만사형통”이라는 역편향도 경계해야



## 6. 북한의 개혁에 주는 시사점(2)

### 2. 기존 협동조합의 혁신과 자율성 강화 방안 강구

→ 국영경제의 보완·잔여 범주로는 의미있는 역할 기대 난망

조합원 창발성, 지역사회 자치와 결합하는 혁신 추구 필요성

토지 투기 제어, 지역사회공동체 보존 역할 유지 방안 강구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분야 남북-국제교류 활성화 통해 정책 시행착오 줄여야

(남북공동 세미나, 남북공동 실태조사, 남북공동 국제연수)



# 발표자 Presenter



**이찬우** 테이쿄대학교 준교수, 일본

**Chanwoo LEE** Associate Professor, Teikyo University, Japan

이찬우는 1980년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하여 1986년에 동대학 국사학과를 졸업, 대우경제연구소 동북아시아팀 연구위원,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함. 1999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중퇴하고 6월에 일본 니가타시에 있는 ERINA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옮겨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였음.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도쿄의 테이쿄대학 현대비즈니스학과 준교수를 하고 있으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 ERINA 공동연구원, 동아시아무역연구회 객원연구원, 중국천진외국어대학 객원교수를 겸임하고 있음. 주요한 연구분야는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치/경제/개발협력 조사 및 동북아시아협력체계 모델연구임.

Chanwoo Lee,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eikyo University in Tokyo. In 1998 and 1999 before going to Japan, he was a memb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f south Korea, which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advise the President on the formul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policy. After coming to Japan, he has experienced careers at ERINA as a visiting researcher in Niigata. He is also working as a Specially Appointed Fellow at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in Tokyo. He is an author of articles and research papers on Korea Peninsula issue includ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region, for example, "Northeast Asia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Changing Economic Map in the Northeast Asia, Bunshindo, Tokyo(2017).

# 북한 협동조합

역사 및 현황, 그리고 가능성

2020년 9월 8일

테이쿄대학 이찬우

##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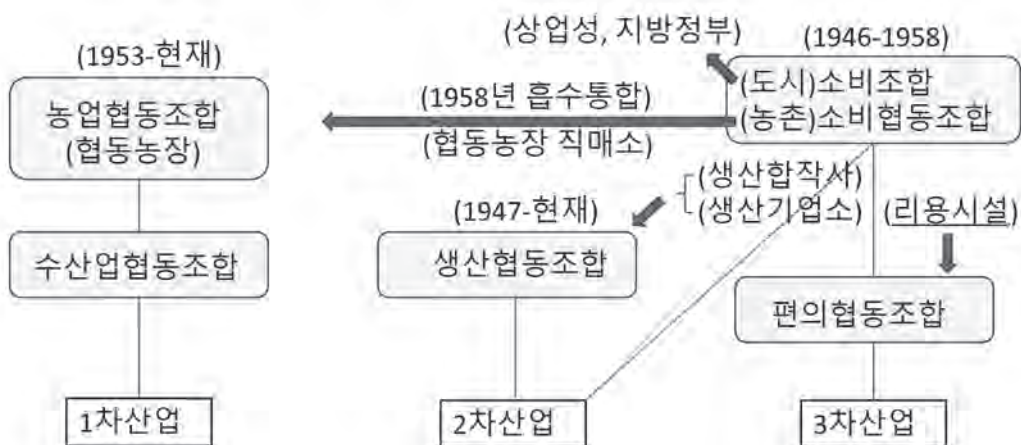
- 협동적 소유로서 사회적 경제부문인 협동조합이 북한주민들에게 낯선 조직이 아니라 과거부터 합법적으로 있어왔고 스스로 출자하여 언제라도 만들 수 있다.
- 사회주의계획경제와 시장이 이제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소유 - 협동적 소유 - 전인민적 소유가 공존하는 북한의 소유 구조에서, 협동적 소유에 따른 협동조합이 시장 속에 또 따로 존재하며 북한경제를 구성
- 북한은 주민의 자치경제활동 조직인 협동조합에 대해 일찌기부터 당의 지도와 국가의 방조를 중시하였다.

## 북한의 협동조합

- 북한의 협동조합 (밑줄 부분이 현재까지 존속)
  - ① 도시부문 : 소비조합,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 ② 농촌부문 : 농촌소비(협동)조합, 농촌협동조합(협동농장)
  - ③ 어촌부문 : 수산협동조합

⇒ 도시부문 소비조합은 국영상업으로 통합, 농촌소비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직매소로 통합 (1950년대 후반)
- 농촌소비조합과 농촌신용협동조합 등이 농업협동조합(협동농장)에 흡수되어 협동농장이 농촌에서의 생산, 분배, 소비의 전 경제활동을 책임짐

## 북한의 협동조합 역사



## 소비조합(남측의 생활협동조합에 해당)

- 소비품생산과 상품유통 및 농업생산 부문에서 협동경리라는 이름으로 생산수단과 자금을 통합하여 협동적 소유로 운영
- 소비조합 : 소비상품 공급, 생산합작이용 생활필수품 생산, 서비스 현금 또는 신용에 의한 비료 배급과 판매, 곡물의 조달, 보관, 공급, 사회급양과 자체가공사업 등

이상의 사업을 1946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주적으로 진행  
1947년11월에 전국에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12월 5일에 지도기관인 '북조선소비조합 중앙위원회'를 조직 (위원장 조흥희)

1948년에는 소비조합원이 520만명으로 북한인구의 절반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발전

## 생산협동조합에 대한 북한의 해석

“수령님께서 협동경리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새로운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협동조합은 소상품생산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형태로서만 아니라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까지 포함한 개인상공업일반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되게 되었다. 이것은 협동조합에 관한 맑스 - 레닌주의이론의 창조적발전이며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가장 곧바른 길을 따라 성과적으로 사회주의에 이끌어가는 가장 우월한 형태의 발견으로 된다.” (로동신문 1973년 2월4일)



## 북조선 소비조합 결성 1946년 5월20-21일

- 장소 : 평양시 서문여자중학교 강당
- 목적 : 도시와 농촌의 상품유통을 원활히 함
- 조직 : 219개 조합에 1,069,479명의 조합원
- **위원장 장시우** : “조선의 소비조합운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절대 보장할 정권이 없었다는 것과 일제의 야만적탄압으로 말미암아 발전할 수 없었다. 8·15 후 북조선에 인민정권이 수립되자 비로소 협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것은 조직상 통일성을 가지지 못했고 그 사업의 중점을 소비면보다는 생산면에 두었기때문에 소비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바르게 규정질수 없었다”

(정로 1946년 5월23일)

..\..\北朝鮮\協同組合\rodongsinmun19460523.PDF

## 소비조합

- <조선소비조합 제10차 중앙확대위원회>에서 내각 부수상 박헌영 연설(로동신문 1952.2.2)

“1951년 상반기 소비조합은 총상품 유통액의 5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협동조합은 생산과 상품 유통분야에 있어 인민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는 대중적 조직”

- 소비조합과 생산협동조합 관계

“소비조합은 생산협동조합들에 대하여 농촌 부산물 원료들을 수매 공급하기로 하고 생산협동조합들은 해당한 생산제품을 소비 조합에 판매하기로 하는 등 계약을 체결” (로동신문 1952년 11월 16일)

## 소비조합의 변화

- 1953년 4월부터 도시와 노동자500명이상 공업지대는 국영상점이 식량과 상품을 배급하는 것으로 전환
- 농촌과 500명이하 공업지대에서 소비조합이 식량과 상품공급을 담당하는 것으로 됨으로써 소비조합은 농촌중심으로 변화됨
- 1958년에 개인상공업 폐지



-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협동경리를 국영경리로 전환시켜감  
  도시는 주로 국영경리가, 농촌은 주로 협동경리가 담당

## 조선소비협동조합 중앙연맹 국제협동조합들과 교류

- 국제협동조합연맹 아세아회의에 북한과 중국을 초청하지 않은데 대해 참가를 주장

“조선 소비 협동 조합 대표들을 참가시키지 않는 반면에 남조선 협동 단체만 일방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사실과 중화 인민 공화국과 같은 나라의 협동 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지 않는 사실들은 국제 협동 조합 연맹의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차별적 조치이다. 조선 소비 협동 조합 중앙 연맹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소비 협동 조합 운동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중적 단체이며 국내의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놓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협동 단체들 간의 친선적 관계의 공고화와 국제 협동 조합 운동 특히 아세아 협동 조합 운동 발전에 항상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 소비 협동 조합 중앙 연맹은 국제 협동 조합 연맹 집행 위원회가 동 회의 소집의 목적에 순응하여 회의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는 아세아의 모든 국가 협동 단체들에게 그들의 사회 정치 제도와는 관계 없이 참가할 권리를 줄 것이며 조선 소비 협동 조합 대표들을 반드시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동신문 1957년 3월25일)

## 소비협동조합이 소멸 (1958년)

- 1958년10월11일, 내각결정 125호  
 “농업 협동 조합들을 리 단위로 1 개의 농업 협동 조합으로 통합”  
 “조합원 총회 혹은 대표 회의에서 관리 위원회와 검사 위원회를 선거하고 군 인민 위원회의 비준을 받음”  
 “농촌 소비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을 해당 지역의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에 1958년 11월 20일까지 각각 이관” (로동신문 1958년10월15일)
- 1958년 10월18일, 내각결정 128호  
 “농촌 소비협동 조합 상업망과 소비협동조합이 수행하던 수매사업이 각 도 인민위원회에 이관되게 되었으며 소비협동조합 중앙연맹이 경영하던 양성소,휴양소,야영소 및 기타 상업 기관은 상업성에 12월 20일 전에 이관”(로동신문 1958년10월26일)
- 농촌 소비협동조합 소멸  
 “농업 협동조합들은 농업 생산과 함께 상품 유통 및 신용 사업을 직접 경영하게 되었다. 농업 협동조합의 통합과 함께 농촌 소비협동조합 상점과 신용협동조합 사업은 농업 협동조합에 이관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농업 협동 조합들은 생산으로부터 분배,교환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활동을 유일적 계획에 의하여 정확히 조직 진행”(로동신문 1959년 1월 27일)
- 소비협동조합 중앙연맹은 1990년대초까지 사회주의권과의 교류 활동을 계속

## 생산협동조합 : 1947년이후

- 협동조합 조직사업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북한당국의 정책
    - ✓ 부문별 지역별 협동조합, 농민협동조합
  - 1947년 8월 조선생산협동조합 발족
    - ✓ 식료품, 직물, 편직, 고무제품, 목공, 농기구, 기계, 공예품 등 (지방원료원천에 입각)
    - ✓ 영예군인생산협동조합, 후방가족생산협동조합
    - 28개 생산협동조합 (사원 281명)
- ↓
- 1952년 20명이상 511개, 2만8백명 사원 (로동신문 1952.5.2)
  - 조선생산협동조합 제1차 중앙대회 (1952년 4월10일-12일)
    - ✓ 각도, 시, 군 연맹 구성
    - ✓ 중앙연맹위원회 구성

## 평양의 생산협동조합

- 조선생산협동조합 평양시 평남도연맹 열성조합원 및 지도일군회의(1953년 4월25일-27일)  
“조합 기준 규약을 엄수하며 조합원 총회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조합 운영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광범한 민주주의적 협의 제도를 확립하며 모든 조합들이 조합원들의 참다운 조합이 되어야 할 것”  
(로동신문1953.5.6)
- 평양고무제품생산협동조합 조합원총회(1953.6.6)  
“전시 생산 과제를 일층 빛나게 초과 완수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전제 고아 원호 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축적금 중에서 2 백만원을 전제고아 양육비로 헌납할 것을 결정”(로동신문 1953.6.6)
- 평양공예제품생산협동조합 설립  
“공예 제품 생산 협동 조합은 20 여 명의 수공업자들로 조직되었는데 그들은 종래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생산도구들을 현물로 출자하였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현물들과 자금으로써 공예 제품 생산 협동 조합에서는 완구류를 비롯하여 조각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과 자재들을 갖추고 이미 생산을 개시했다.”(로동신문 1953.10.3)

## 전국지방산업 및 생산협동조합 열성자대회 (1959년)

- 협동 경리의 제 1 형태 : 영세한 수공업자들을 초보적으로 망라한 생산 협동반
  - 제 2 형태는 수공업자들과 중소상공업자들의 생산수단 및 자금을 통합하여 공동경리를 운영하되 로동에 의한 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사적 소유로 남아 있는 출자 몫에 대하여서도 분배를 실시하는 반사회주의적 경리
  - 제 3 형태는 생산 수단과 자금이 전적으로 조합의 공동 소유로 되어 오직 로동에 의하여서만 분배를 실시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경리
- “오늘 우리 나라의 생산협동 조합 중 제 1 형태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제 2 형태는 38%, 제 3 형태는 6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 1970년대이후 생산협동조합

- 국영공장 등으로 전환

- 사례 : 평양유색금속생산협동조합 ➡ 평양유색금속공장  
 원산철제일용품생산협동조합 ➡ 원산철제일용품공장  
 원산구두생산협동조합 ➡ 원산구두공장  
 강계어린이식료품생산협동조합 ➡ 강계식료공장

- 생산협동조합체계 유지

- 사례 : 대동강피복생산협동조합 (로동신문 1990년 10월3일)  
 동대원운동구생산협동조합(로동신문 1977년 2월22일)  
 평양수지일용품생산협동조합(로동신문 1991년 3월19일)

## 1980년대 이후의 평양의 생산협동조합

- 1984년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 개시이후 경공업제품 생산과 생산협동조합이 결합 (평양시 경공업제품 전시장에서 제기)
- 8.3인민소비품생산단위 :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조합, 가내작업반, 부업반 (기업소의 “8.3 인민소비품작업반”, “8.3 노동자”)
- 생산원료 : 폐기물, 폐설물, 부산물을 원료로 생활소비품 생산
- 판매 : 직매점
- 평양의 생산협동조합 주류 : 구역별 가내생산협동조합
- 지도체계 : 각 도, 시 인민위원회 지방공업관리국 - 직매점, 가내작업반관리소, 가내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의 한 측면이 사회주의경제시스템안에 흡수된 형태로 볼 수 있어

## 생산협동조합



신의주시 초물생산협동조합  
2009년11월, 김정일 현지지도



제3차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에  
출품된 초물제품들  
(조선신보 2012.1.4)



사진 ; 로동신문  
2014년 12월5일

## 생산협동조합



사리원시 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  
1958년8월 설립  
1971년5월, 김일성 현지지도  
2011년1월, 김정일 현지지도

사진 ; 로동신문 2015년 4월12일



사진 ; 로동신문 2013년 11월12일

## 편의협동조합

“순천시가내편의협동조합에 가면 영예군인들로부터 《우리 아바이》로 불리우고있는 자전거수리공인 박상원동무가 있다. 박상원동무는 영예군인들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자전거수리작업장에 《봉사의견기록부》를 만들어놓고 10만 2천여점의 부속품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영예군인들의 삼륜차와 자전거들을 수리해주어 그들이 자기의 힘과 재능을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고있다.”

(로동신문 2006년 10월 7일)

## 북한의 협동조합 경험과 가능성

-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국영경리로 개편되어 감 (협동경리는 주로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에 존재)
- 1980년대중반이후 인민소비품 생산에 대한 비국영경리 부문이 [8.3 인민소비품]으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협동적 경리부문이 이어짐
- 2000년대 시장지향형 생산이 활성화하면서 개인경리도 사실상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 가내생산협동조합 활동이 재활성화
- 현재 협동적 생산시스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증가
- 사영기업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 토론자 Discussant



**최현아** 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Hyun-Ah CHOI** Senior Researcher,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최현아 박사는 현재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남북 환경협력을 위해 NGO, 학계 및 공공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2015년부터 DMZ 및 접경지역 주변 생태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국제 산림협력, 습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남북환경협력 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Dr. Hyun-Ah Choi is currently working at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based in Seoul, consulting NGOs, academic and public institutions in questions of unification and Inter-Korean environment cooperation as a senior researcher. She work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in the inner-Korean border area and from 2015 has participated in field survey(s) near the DMZ and border area as an expert.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Korean cooperation, such as forest, wetland and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 토론자 Discussant



강도욱 맘보사와사와 대표

Douk KANG Executive Director, MAMBOSAWASAWA

강도욱은 월드비전에서 2008년부터 10년간 에스와티니왕국, 아이티, 가나 등에서 다양한 정부-민간 차원의 인도적지원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6년 이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이태석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사회적기업 공부로 석사를 취득하였고 2019년 소셜 벤처 맘보사와사와를 설립 후 국제개발협력 및 사회적 가치 영역의 책무성 강화와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현지 사업 발굴, 평가 및 교육 등을 진행하며 국제개발과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활발하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Douk Kang completed various large-scale humanitaria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Kingdom of Eswatini, Haiti, Ghana and etc for 10 years when he worked in Worldvison. For his contribution to helping the vulnerable people and achievements, he became the winner of an award,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founded to remember the late Catholic priest Lee tae-seok in 2016. Since then he had 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gree, specialized in social Entrepreneurship from KAIST, and established the social venture 'Mambosawasawa'. Currently, he is actively contributing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value sector by conducting various project development/monitoring/evaluation of projects, researches and trainings to promote the quality and accountability.

# 토론자 Discussant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Hae Kyung CHOI** Secretary General, OKEDONGMU CHILDREN IN KOREA

최혜경은 어린이어깨동무에서 1998년부터 오랜 시간 근무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2018~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위원(2007~현재), 남북정상회담 자문단(2018~현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2008년에 제6회 NGO 부분 미래를 이끌어 갈 여성 지도자 상(여성신문)을 수상했다.

CHOI HAE-KYUNG had worked for a long time in the OKEDONGMU CHILDREN IN KOREA since 1998 and has served as secretary-general in the same organization since 2013. In addition, she is active in various committees. Representatively, she has been working as the director of the operation committee of the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2018~ present), a standing committee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007~ present), and an advisory group for the inter-Korean summit (2018~ present). She majored in education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earned a master's degree from the graduate school. In recognition of her various activities, she won the sixth NGO Women's Leadership Award (Women's Newspaper) in 2008.





# Session 5-3

## 한반도의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를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Inclusive Partnerships for the Humanitarian- Development-Peace Nexus o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좌장  
Moderator

김성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  
Sung Chull KIM Humanities Korea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발표자  
Presenters

아이한 카디르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Kadir Jun AYHAN Visiting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문경연 전북대학교 부교수  
Kyungyon MOON Associate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송영훈 강원대학교 교수  
Young Hoon SONG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토론자  
Discussants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Gyubin CHOI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ung-hyun CHO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w School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Taekyoon KI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5-3)

## 한반도의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를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한반도와 그 주변국가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개발협력이 동시에 한반도에 교차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인도주의-개발-평화(Humanitarian-Development-Peace: HDP) 연계 중심의 글로벌 규범과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특수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평화프로세스의 담론과 실천적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이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프레임 안에서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SDGs 이행전략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본 세션은 한반도의 HDP 연계와 SDGs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하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책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계획한다.

## Inclusive Partnerships for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peace for nuclear crisi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or prosperity remain as one of the central concern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The recent ups and downs of peaceful negotiations among Pyongyang, Washington and Seoul are likely to hamper the humanitarian aid agencies' efforts to prepare development partnerships with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sanctions towards North Korea. Meanwhile, connecting peace with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has been mainstreamed as a first co-priority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Bank under the boundari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is panel will provide both timely and important insights on how to best address this challenge by exploring the problems and hurdles to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the potential solutions to address these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HDP) nexus, and the role that aid donors and North Korea as a common recipient country can perform to strengthen such nexus. Particularly, the panel will demonstrate various scenarios on the inclusiveness of the peace-development partnership for the Korean peninsula by introducing the perspectives of both bilateral/multilateral donors and international/local NGOs.

# 좌장 Moderator



**김성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

**Sung Chull KIM** Humanities Korea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김성철(Sung Chull Kim)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교수 및 연구기획실장. 캘리포니아대학교-얼바인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 통일연구원(1992-2003)에서는 학술적 연구의 정책적 적용에 관여하였으며,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교수(2003-2012)로 재직하는 동안 핵, 국가폭력, 지역협력 등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서울대(2012-현재)에서는 핵비확산, 원자력, 동맹관계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중국-주변국 비대칭 정치경제에 관한 저서 출판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저서로 Partnership within Hierarchy: The Evolving East Asian Security Triangl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7 단저),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Entering the New Era of Deterren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7, Michael Cohen과 공편) 등이 있으며, 현재는 아시아 최초의 평화연구저널이자 SCOPUS 등재지인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의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Sung Chull Kim is Humanities Korea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efore holding this position, he served as a senior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2-2003) and Professor at the Hiroshima Peace Institute-Hiroshima City University (2003-2012). Kim has headed a number of projects on nuclear proliferation, state violence, and regional cooperation/conflict, and now prepares a book on political econom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s. Kim's recently published books are: Partnership within Hierarchy: The Evolving East Asian Security Triangle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2017, single authored) and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Entering the New Era of Deterrence (Georgetown Univ. Press, 2017, coedited with Michael Cohen). Kim is currently editor of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a SCOPUS-indexed peace studies journal.



# 발표자 Presenter



**아이한 카디르**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Kadir Jun AYHAN** Visiting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아이한 카디르 (한준)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초빙교수이며, *Quality & Quantity* 학술지와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학술지의 부편집장을 맡고 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외교, 국제정치에 있어서 권력, 한국 대외정책 및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 교육의 능동 학습 방법을 포함한다. 그는 오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Auckland)에서 경제학 및 국제무역 학사 (2008),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2010) 및 동 학교 국제학 박사 (2016)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최근 논문은 "Transferring Knowledge to Narrative Worlds: Applying Power Taxonomy to Science Fiction Films"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Rethinking Korea's Middle-Power Diplomacy as a Nation Branding Project" (*Korea Observer*) 그리고 "The Boundaries of Public Diplomacy and Non-state Actors: A Taxonomy of Perspectives"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등이 있다.

Kadir Jun Ayhan is a visiting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public diplomacy, power in world politics, Korean foreign policy and active learning pedagog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yhan serves as Associate Editor for *Quality & Quantity* and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journals. He regularly consults for governmental public diplomacy projects in Korea. Ayhan holds a Ph.D. (2016) and M.I.S. (2010)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a Bachelor of Commerce (2008) from The University of Auckland. He has published articles in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Korea Observer* and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among others.



# Inter-Korean People-to-People Diplomacy: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cross the 38th Parallel


Kadir Jun Ayh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yhan@hufs.ac.kr](mailto:ayhan@hufs.ac.kr))

Siyeon J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Research Objectives

- Mapping South Korean government's theory of change regarding inter-Korean people-to-people exchanges?
  - Archival research
  - Semi-structured face-to-face interviews with MoU bureaucrats
- Exploring the dynamics and outcomes of inter-Korean people-to-people exchanges from the perspectives of South Korean participants.
  - Semi-structured face-to-face interviews with South Korean participants

<h1>Contents</h1>	 Background on inter-Korean people-to-people exchanges
	 Analytical framework
	 Methodology
	 Theory of Change
	 Dynamics and outcomes of people-to-people ex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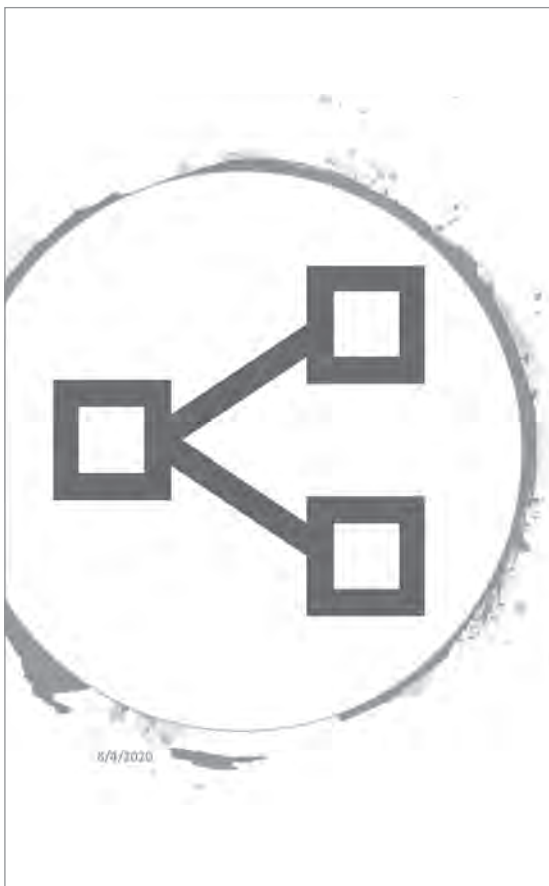
## Background

- Division in 1945
- Separate governments in 1948
- National Security Law
- Korean War (1950-1953)
- 1950s to 1970s: North Korea > South Korea
- 1980s~: South Korea > North Korea
- 7-7 Declaration in 1988
  - Normalization with socialist countries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 Progressive governments: 1998-2008, 2017~



## Social Interactions

- “Actors who enter into a social interaction rarely emerge the same” (Johnston, 2011)
- Communication-based social interactions → new forms of beliefs, strengthen established beliefs or change their beliefs about other actors.
- Social interactions → new attitudes, strengthen established attitudes or change attitudes of actors towards one another.
- Interpersonal, direct and experiential communication → more long-lasting on the cognition and affection and more ripple effects in megaphoning individual experiences.



## Relational Dynamics of exchanges

- Building and managing relationships.
- Civilians often have “equal status or ability to participate” → more effective contact (Allport)
- Relative absence of power asymmetry in inter-Korean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 Theory of Change: Problem Framing

Alienation and  
antagonism  
over decades

Status-quo  
unsustainable  
and instable

## Theory of Change: Intervention Framing

Expanding points  
of contact  
between the two  
societies

Less costs and less  
risks

Fill a vacuum

8/4/2020

9

## Theory of Change: Intervention Methods

Reciprocity and  
mutuality

Non-political,  
non-contentious  
exchanges

Grassroots level

8/4/2020

10

## Theory of Change: Intended Outcomes

Mutual understanding

Positive externalities:  
reducing tensions  
etc.

Unification: sense  
of belonging in the  
same community

8/4/2020 11

## Dynamics and outcomes of people-to-people exchanges

-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articipants
  - South: free, flexible, bottom-up
  - North: controlled, red-tape, top-down
- North Korea's reluctance to have many exchanges

8/4/2020

12

## Dynamics and outcomes of people-to-people exchanges

- Prejudices and tensions → monitoring one another
- Iterative, direct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 trust
  - Intimacy, familiarity, friendship “tearing down walls”
  - “Meeting, and meeting very often, is the most important”
- Moderation of extreme views via exchanges
- Empathy towards North Korea
- “Scary power of freedom”

8/4/2020

13

## INFORMAL EXCHANGES

- Opening up over drinks
- Sincere and intimate dialogue
- “Same human-beings”
- “Same as us”
- Similar anxieties
- Realization of commonalities and building of affection
- Language, culture, physiognomy etc. similarities → “eliciting positive feelings such as emotional sympathy”
  - “same blood,” “same race and same family” and “compatriots”

8/4/2020

14



**TRIBAL PSYCHOLOGY**

- No direct contact and communication: North Koreans as another tribe
- Direct contact and communication: North Koreans as part of the same tribe
- Sustainability of this psychological state?

8/4/2020 15

**TWO-WAY**

- Perception changes not unidirectional, but mutual.
  - “exchanges cannot be unidirectional, [change] is a matter of degree” rather than direction.

8/4/2020 16

- “People-to-people exchanges are not political or ideological.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nteract more freely.”
- Non-ideological collaborative projects key to overcoming suspicions
  - Realization of shared goals and benefits of cooperation
- Deliberate avoidance of contentious issues

## Non-political Nature

## Obstacles against Exchanges



COMMUNICATION  
BARRIERS



LEGAL BARRIERS



SANCTIONS



POLITICAL  
ATMOSPHERE

## Gendered exchanges?

For feedback:

[ayhan@hufs.ac.kr](mailto:ayhan@hufs.ac.kr)

Thank you.



# 발표자 Presenter



문경연 전북대학교 부교수

Kyungyon MOON Associate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문경연 박사는 2006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평화분쟁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영국 크랜필드대학에서 "대북식량지원과 NGO"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2012년)를 받았다. 이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2010~2013),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임연구원(2012),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2013.1~2014.4),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북한개발 및 국제협력 과목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중앙대, 한동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숙명여대, 카톨릭대학교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과목을 강의해 왔다. 활동으로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2014~201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원(2014~2015), 국제개발협력학회 사무국장(2012~2013), 세계지역학회 사무국장(2012)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7월,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 청년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Dr. Kyungyon Moon is the Associate Professor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since 2016. He served as the Research Fellow at the Research Institute for North Korea Development 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May 2014 to February 2016, the Research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from March 2013 to April 2014, and Professional Researcher at the Institute for Poverty Allevi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IPAID) at Yonsei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is the Chai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efore he also served as Administration Secretary at the Committe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t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AIS) in 2013, Vice-Secretary of the KAIDEC from January 2013 to April 2014 and the Member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the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개발, 평화 넥서스와 북한의 국제화<sup>1</sup>

문경연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 1. 들어가며

북한 외무성과 유엔북한팀은 2016년 기존의 '유엔전략계획 2011-2015'<sup>2</sup>를 대체하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sup>3</sup>에 서명하였다. 동 문서는 2015년, 국제사회가 지구촌 발전 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북한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된 북한과 국제사회 간 협력로드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이 제시한 4대 우선순위 분야가 이전의 전략계획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전 버전을 업데이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의 원칙과 접근법, 국제규범과 협약의 준수 노력,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기존의 문서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대북 관여정책을 실시한지 1995년 이래로 23년이 흐른 지금, 인도지원을 중심으로 했던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이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정상국가화 논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여러 행위 주체들이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의 재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SDGs 16은 평화와 개발 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협력이 어떻게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지(Peace and Development Nexus)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에서 SDGs에 기반한 개발협력 사업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축을 공고화 혹은 가속화 하는데 필요한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북한의 국제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지원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문서 서명의 한 주체인 UNESCO가 소관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 고유사업 분야에 대한 북한 개발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북한의 국제화 의지: 유엔전략계획

북한 외무성과 13개 유엔기구로 구성된 유엔북한팀<sup>3</sup>은 2016년 기존의 '유엔전략계획 2011-2015(이하 '유엔전략계획 2011-2015')'을<sup>4</sup> 대체하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이하 '유엔전략계획 2017-2021')'<sup>5</sup>을 채택하였다. 동 문서의 서명 주체는 북한 외무성 산하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유엔북한팀의 유엔상주조정관이며 '유엔전략계획 운영위원회(UNSF Steering Committee)'의 주도로 입안된 것으로 '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안보(Food & Nutrition Security)', '우선순위 2: 사회개발 서비스(Social Development Service)', '우선순위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 Sustainability)', '우선순위 4: 데이터와 개발관리(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 등 4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북한 당국과 유엔북한팀 간 상호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데 대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본 연구는 UNESCO 한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임을 밝힘.

2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공식 영문명은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임.

3 유엔북한팀은 평양 상주 유엔기구(FAO, UNDP, UNFPA, UNICEF, WFP, WHO)와 비상주기구인 UNEP, UN ESCAP, UNESCO, UNIDO, UNISDR, UN OCHA, UNOPS 등 13개 기구로 이루어져 있음.

4 유엔전략계획 2011-2015는 '유엔전략계획 2007-2010'을 대체함.

5 '유엔전략계획 2011-2015'의 영문명칭은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임.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특징은 첫째, 4대 우선순위 이행에 있어서는 비단 서명의 주체인 13개 유엔기구 뿐만 아니라 동 전략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참여한 국제사회 개별국가 뿐만 아니라 비정부단체(NGOs)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계획의 이행 주체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sup>6</sup> 대북지원이 시작된 1995년 이래로 북한에 지원은 유엔차원에서는 북한 FAO, UNDP, UNFPA, UNICEF, WFP, WHO 등 상주기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전략계획 2011-2015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동 전략의 이행에 있어 비상주기구인 UNESCO를 포함 UNEP, UN ESCAP, UNIDO, UNISDR, UN OCHA, UNOPS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략계획의 서명 주체는 아니나 협의 과정에서 개별정부 기관 및 NGOs와의 협의를 거침으로써 이행에 있어서 이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sup>7</sup>

둘째, 기존 유엔전략계획('유엔전략계획 2007-2010,' '유엔전략계획 2011-2015')과 '유엔전략 2017-2021'의 가장 큰 차이는 '유엔전략 2017-2021'은 북한 정부와 유엔기구간 협력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 원칙(Programming Principles)'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포함된 7가지 원칙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라고는 하나 과거 북한이 정권 유지의 위협요소로 간주하여 강하게 거부하였던 요소들을 대거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7 원칙 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반영, 환경 및 제도적 지속가능성은 북한이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 하는데 있어 크게 체제 거부감이 없는 이슈일 수 있다. 하지만 인권중심접근법(HRBA),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 성과기반관리(RBM)는 북한이 이 두 접근법을 아무리 협소하게 해석<sup>8</sup> 및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두 원칙의 핵심은 인간개발과 인간안보를 포함하는 인권적 개념으로 북한이 그 동안 부정하여 왔던 인권 요소를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소위 헬싱키의정서<sup>9</sup> 효과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인권중심접근법(HRBA)에 대한 세부 설명에서 "전략 우선순위 4는 북한 정부가 다양한 인권 관례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하며, 전략계획의 핵심은 인간중심이라는 원칙과 인간개발의 촉진이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 정의롭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구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힘으로써 인권이슈에 대한 북한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아울러, 전략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 향상 역시 국가의 역량강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이론적 철학이 굿거버넌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스티디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임하는 북한이 이러한 원칙들을 전략계획에 포함하였다는 것은 북한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북한 사업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과 이를 이행할 '유엔 젠더전담 태스크포스(UN Gender Focal Points Task Force)'의 구성과 투명성을 중요 원칙으로 하는 성과기반관리(RBM) 접근법을 사업의 계획과 실행의 모든 과정에 도입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개발협력 사업 수행에 있어 과거와 다른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북한 내 사업 현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여러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면 북한의 내부 거버넌스 메커니즘상의 변화는 물론 대북 사업환경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개발협력 사업이 그 자체의 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사업 원칙(접근법)

1.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적용
2. 인권중심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채택
3.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지원
4. 환경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추구
5. 제도의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추구
6. 성과기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 RBM) 적용
7. 복원력(Resilience) 강화

6 유엔북한팀 (2016),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번역본], p. 10.

7 유엔북한팀 (2016), p. 10.

8 북한 내 개발협력 사업의 이행주체 및 수혜자 국한한다거나 정치시민적 권리를 배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국한 하는 등.

9 헬싱키프로세스는 유럽의 정치군사적 안보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이 1995년 헬싱키의정서(Helsinki Accord)를 채택하였는데, 이 의정서 상에 정치군사 대립 완화 이슈와 함께 인권 규정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이후 민간단체들의 동유럽 및 러시아의 인권운동 확산의 제도적 근거가 됨으로써 이들 공산국가들의 인권 및 안보대립 완화에 기여하였고, 결과적으로 냉전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평화구축의 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10 "Additionally, Strategic Priority #4 provides for UN support to the Government in implementing its commitments under a variety of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processes. Indeed, the overall theme of the Strategic Framework is that it is people-centred and designed to advance human development. This aligns well with the SDG 16 'Promote just,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출처: UNCT (2016),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 (Pyongyang: UN Country Team), p. 14.

출처: 유엔북한팀 (2016),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번역본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셋째,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이전 버전인 '유엔전략계획 2011-2015'는 4대 우선순위는 사회개발, 지식 및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영양, 기후변화 및 환경으로 사업의 범주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명칭과 내용에 있어 '유엔전략계획 2017-2021 계획'은 SDGs의 목표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의 환경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전략계획 2011-2015'가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표와 검증수단, 재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엔전략 2017-2021'은 우선순위 내 해당 사업의 방향성과 이행방안,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 등 거시적인 방향성과 추진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기 보다는 인도지원과 개발지원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sup>11</sup> 이러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서 유엔 기구와 국제사회가 가진 기술과 지식, 경험 공유 등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통한 북한 당국의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sup>12</sup>

끝으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규범과 기술표준, 관행, 국제협력의 준수를 위한 협력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북한이 서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원조추진 주체들이 가장 꺼려했던 사안으로 실제로 국제 NGOs들에 대한 북한의 폐쇄적 관행과 정책으로 때문에 1990년대 후반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던 단체들이 북한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유엔전략계획 2017-2021' 문서의 첫 섹션인 '공동의 헌신을 위한 선언'에 "북한 정부와 주민들은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원칙과 목표, 대상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협약과 조약을 존중하면서..."를 명시하며 국제협약을 존중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sup>13</sup> 'IV. 전략적 핵심 사안' 파트에서는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에 있어 논의의 핵심은 사업 전반에서 북한이 국제적 규범과 기술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sup>14</sup> "(사업 원칙으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유엔의 여러 환경 조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의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전략 우선순위 4에서 제시된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국제협약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북한의 역량강화에 이바지 한다"<sup>15</sup>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등 과거 폐쇄적 이미지의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 가치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학습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 매우 다른 북한의 정책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sup>16</sup> 무엇보다도 유엔전략계획은 우선순위 4번 항목의 국제기술 표준의 학습 및 준수 노력과 관련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 관련 협약의 준수와 보고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확인 할 수 있다.

" 유엔은 북한 정부가 - 특히 인권 분야에서 - 국제 규범 및 표준을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협약과 메커니즘의 이행, 정기 보고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국제 협약과 메커니즘에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장애인권리협약(CRPD)등이 있다. 북한은 위 협약들의 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유엔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나온 제안들을 수용하고 있다. 유엔북한팀은 유엔상주조정관의 감독 하에 북한 정부가 정례인권검토 및 중기 보고서 등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sup>17</sup>

11 유엔북한팀 (2016), p. 12.

12 유엔북한팀 (2016), p. 11.

13 유엔북한팀 (2016), p. 4.

14 유엔북한팀 (2016), p. 11.

15 유엔북한팀 (2016), p.14.

16 이 외에도 'IV. 관리(Management)' 파트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유엔기구들은 모든 해당 부처, 단체, 정부기관, 수혜자들과의 접촉을 보장받을 것이다"(p. 22), "(타당성 검증 및 확인과 관련하여)...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assistance)는 실행 원칙에 따라,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서 수혜자 등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것이다"(p. 25)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유엔북한팀(2016).

17 유엔북한팀 (2016), p.21.

이러한 우선순위와 접근원칙,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식에 대한 진전된 태도를 바탕으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4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의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동 연구가 집중하고 있는 UNESCO의 전문성과 고유사업에 기반한 개발협력 사업의 평화구축과의 연계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본 연구의 '5장. 한반도 평화와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UNESCO의 역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표 1> '유엔전략계획 2017-2021' 4대 우선순위 및 세부목표

우선순위	세부내용
1. 식량 및 영양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원예, 어업, 축산 부문에서 식량 생산, 생산성, 가공의 지속가능성 제고</li> <li>• 모든 가계가 언제나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삶의 질을 제고</li> <li>• 가임기 여성, 5세 미만 아동, 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li> </ul>
2. 사회개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과 외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일차의료의 개선 및 일관되고 공평하며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li> <li>• 전염·비전염성 질환,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들이 겪는 모성·유아 질환에 대한 개선된 의료 서비스 제공</li> <li>• 보건 분야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역량 강화</li> <li>• 가정, 교육기관, 의료시설, 특히 가장 취약한 가구와 집단들에 대한 적절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물·위생시설 보급</li> <li>• 유치원, 소학교, 중등학교, 3차 교육기관, 그리고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 부문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형평성 제고</li> </ul>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특히 여성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및 대응력 제고</li> <li>• 지역 공동체,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원에의 접근</li> <li>• 환경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부문에서 정부 기관들의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업 수행</li> </ul>
4. 데이터와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획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인도·개발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가용성 제고</li> <li>• 국제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li> <li>• 국제 조약, 협약, 기타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 체계 강화</li> </ul>

출처: 유엔북한팀 (2016),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번역본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3. 사례연구: UNESCO를 통한 북한의 국제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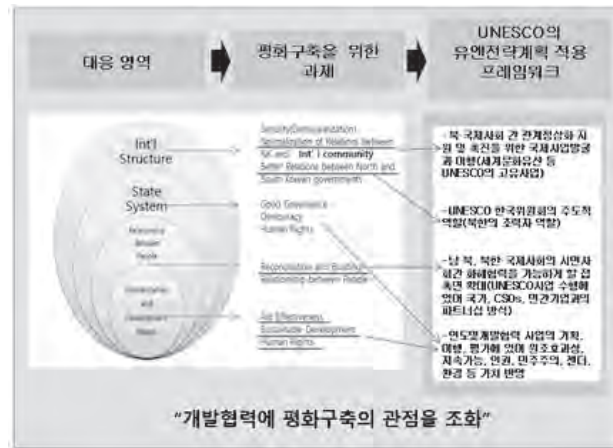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한 요소로서 유엔전략계획 서명의 한 주체인 UNESCO가 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이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이라는 소관기관의 사명에 입각하여 북한의 유엔전략계획을 이행을 통한 북한의 국제화 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3.1 준수되어야 할 원칙과 목표

앞서 북한과 같이 국제규범, 협약, 원칙, 가치 등에 대한 내재화 수준이 낮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이들 국가의 거버넌스, 인권,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총체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과거 사업들이 긴급한 인도적 상황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이러한 사업들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업 수행과정에서 접촉면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이 일정정도 평화구축에 이바지하는 부수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개발협력 사업의 부수적 결과로서가 아닌 사업의 한 목적으로서 평화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UNESCO의 개발협력 사업이 1차적 성과(output)를 충족시키면서 이 사업들이 2차적 결과(outcome)와 중장기 영향력(impact)이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성과(output)-결과(outcome)-영향력(impact)' 단계에 평화구축 요소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프레임 될 필요가 있다.



〈그림 2〉 UNESCO의 유엔전략계획 프레임워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평화구축을 위한 영역별 목표를 바탕으로 UNESCO의 전문성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기반하여 UNESCO의 사업 기획시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원칙과 가치의 반영이 필요하다. 일례로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사업의 기획, 이행, 평가에 있어 SDGs 목표, 인권, 민주주의, 젠더, 환경, 거버넌스 등의 요소 및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들이 사업에 반영되고 이행될 때 남북한 및 북한과 국제사회 시민사회와 주민 간 신뢰와 화해의 관계 형성이 가능하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방식에 있어서 방안은 UNESCO가 대북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단체, 기업, 타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국제 차원에서는 남북한 정부 차원의 향상된 관계 증진을 위해서 UNESCO 한국위원회의 소재지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기반하여 남북한 관계 발전의 촉진자 역할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북한 간 관계 정상화의 촉진자 역할로서 UNESCO는 UNESCO와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고유 사업(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 등)을 바탕으로 북한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이 체제전환 및 정상국가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UNESCO는 북한이 굿거버넌스로 역량 강화, 여러 행위자들과의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평화구축의 핵심인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가능한 사업을 지향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 3.2 UNESCO 대북사업 추진 방향

개발협력 사업이 평화구축을 공고화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원칙과 목표 그리고 접근법을 반영하여 UNESCO 한국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4대 우선순위와 세부목표에 접목하면 〈표 2〉과 같다.

〈표 2〉 UNESCO의 '유엔전략계획 2017-2021'과 이행방안

사업분야	UNESCO 한국위원회	유엔전략계획 우선순위 및 세부목표	유엔전략계획과 UNESCO 사업 간 연계
교육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2. 사회개발 서비스: - 유치원, 소학교, 중등학교, 3차 교육기관, 그리고 기술 및 직업 교육 · 훈련 부문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형평성 제고	북한 지방 행정구역 내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 2030 이행 실천과 평생학습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및 이를 위한 남한 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교사학생참여 세계시민교육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를 주제로 하는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프로젝트를 북한으로 확대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유네스코 남·북·일 교사대화 프로그램으로 확대
과학	인간과 생물권사업(MAB),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 프로그램 (IGGP)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 환경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부문에서 정부 기관들의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업 수행	북한 내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지정 지원 사업 및 이를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 사업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을 통한 북한과 동북아 국가 간 협력 확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와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2. 사회개발 서비스: - 가정, 교육기관, 의료시설, 특히 가장 취약한 가구와 집단들에 대한 적절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물 · 위생시설 보급	IOC 및 IHP 등에 대한 북한의 참여 및 동 분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역량강화
인문 사회 과학	생명윤리, 과학기술윤리	4. 데이터와 개발관리: - 국제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 - 국제 조약, 협약, 기타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 체계 강화 <sup>18</sup>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활동에 대한 북한의 역량강화
	스포츠		유네스코의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및 국제스포츠반도평협약 관련 주요 활동에 대한 북한의 역량강화
	사회변동관리 (MOST) <sup>19</sup>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 재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특히 여성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및 대응력 제고	북한의 체재전환 및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제들에 대한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간 협업 지원

18 유엔전략계획은 여러 분야에 걸친 국제적 표준, 규범, 협약 등에 대한 북한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술표준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러한 국제 기술표준은 대개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정부 간 논의에서 확립되는데,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ESCO, 유엔의 여러 기금과 프로그램(UNICEF, UNFPA, UNDP)은 물론,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같은 모든 전문 기관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다루진다. 국제표준의 적용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전략 우선순위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한 개발에 있어 여러 분야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북한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데, 국가 수입 통제, 항공 안전 절차, 기상정보의 공유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유엔의 지원에는 기술협력,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의해 논의되고 비준된 여러 조약과 협약에 나와 있는 국제규범 및 표준의 시행을 위한 북한 관료·기관에 대한 훈련 · 교육 같은 역량 강화가 포함될 수 있다." 출처: 유엔북한팀(2016), p. 21.

19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MOST)는 세계화, 국제 이주, 도시 난개발 등으로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주민 인권 보호,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등 새로운 부각되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반도의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를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Inclusive Partnerships for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on the Korean Peninsula

문화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 개도국 역량강화사업 등)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 환경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부문에서 정부 기관들의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업 수행	북한의 세계유산(자연, 문화, 무형문화, 기록유산) 등재 지원 및 세계유산(해상, 육상)과 문화자원 연계 지속가능한 관광사업(Cultural Tourism) 개발 등을 위한 북한의 역량강화 <sup>20</sup>
국제 협력	유네스코본부, 지역사무소, 국가위원회 협력 (아시아태평양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4. 데이터와 개발관리: - 국제 조약, 협약, 기타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 체계 강화	북한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북한 특별사무소 설치 혹은 유네스코 북한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력 교환 프로그램 실시
개발협력	교사역량강화 및 교재보급 사업	2. 사회개발 서비스: - 유치원, 소학교, 중등학교, 3차 교육기관, 그리고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 부문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형평성 제고	북한의 교사 역량강화 사업 및 교재보급 사업

출처: 저자 작성

## 4. 맺음말

1995년 시작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업은 비록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남북 긴장관계 완화와 반세기에 걸친 적대적 대립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 또한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의 해결과 진전 없는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뿐만 아니라 개발지원 사업은 어렵다는 것이 작금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글은 북핵 동결의 보상으로써 개발협력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보다는 북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즉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 및 개발협력 사업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써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 즉 사회경제발전 분야에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전략 로드맵이 유엔전략계획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여기서 우리의 과제는 작금의 평화를 가속화 및 공고화하며, 과거의 비평화 상태로 회귀하지 않는 불가역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국제기구가 채택한 유엔전략계획은 SDGs 목표의 북한 적용 방안에 대한 문서이며, 북한은 이 전략문서를 채택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과감한 정책 개혁을 통한 정상국가화 로드맵을 이미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정상국가화 로드맵은 남한에 있어 통일이 다소 멀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최소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노력은 한반도 평화 조성의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유엔전략계획 상의 목표 이행은 북한 정상국가화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즉, 필자는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의 이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정립한 원칙과 가치들(이미 유엔전략계획에 포함된 가치들)이 북한에 내재화 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편입될 때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이제껏 '은둔의 왕국'이었다. 이러한 이미지와 정책을 벗어 던지고 바깥세상으로 나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은둔의 왕국이었던 북한은 아직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 어떤 언어를 써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잘 모르는 이제 걸음마를 댄 아기와 같다. 북한이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교감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0 남한은 12개의 세계유산을 등재한 반면 북한은 2개(고구려고분군/2004년, 개성 역사지구/2013년)에 불과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잠정목록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북한은 2000년 평양역사유적지구, 구장군 일대 동굴, 칠보산, 금강산 및 일대 역사유적, 묘향산 및 일대 역사유적 등 5개를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북한은 1989년 백두산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시켰으나,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는 등재시키지 못한 반면 중국은 단독으로 'Vertical Vegetation Landscape and Volcanic Landscape in Changbai Mountain'라는 이름으로 백두산을 잠정목록에 등재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유네스코와 유산 웹사이트(<http://heritage.unesco.or.kr/> 검색일: 2018.6.15.)

---

## 참고 문헌

- 김성한·문경연 (2014),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국제관계연구』, 19(1),
- 김치관 (2007),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공동행사에 관한 연구: 행사의 경과와 주최 조직의 변화 발전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엔북한팀 (2016),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평양: 유엔북한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번역본).
- 이주철 (2007),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 변화 추이-1995년 이후를 중심으로," 『국제고려학회논문지』, 10호.
- Dong Jin Kim (2015), "Aid to the enemy: linking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acific Review*, Mar 2015.
- DPRK Central Breau of Statistics & UNICEF, WFP, WH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s," conducted in 1998, 2000, 2002, 2004, 2009, 2012.
- DPRK Central Breau of Statistics (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yongyang: Central Breau of Statistics, DPRK.
- DPRK Central Breau of Statistics (1995), "Tabulation of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 Pyongyang: Central Breau of Statistics, DPRK.
- Dugan, Maire (1996), "A nested theory of conflict," *A Leadership Journal: Women in Leadership-Sharing the Vision*, 1 (1)
- UNCT (2010),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 Pyongyang: UN Country Team.
- UNCT (2016),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 Pyongyang: UN Country Team.
-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검색일: 2018. 5. 20, available a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 발표자 Presenter



송영훈 강원대학교 교수

Young Hoon SONG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송영훈 교수는 현재 강원대학교 기획처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부터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 분야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으로서 통일부의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을 운영하였다. 강원대학교에 부임하기 전에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HK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학부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주제는 국제분쟁과 난민,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학, 남북관계 등을 포함한다.

Young Hoon Song is Dean of the Office of Planning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ince June 2020 and teach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internal relations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ince 2015. Before he was joining the department, he was a research fellow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between July 2014 and February 2015 and a HK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etween September 2011 and July 2014. He received a Bachelor and a MA in Educ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in the USA in 2011.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nflict and refugee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eace studies, and inter-Korean relations.

## 남북 접경지역 협력과 DMZ의 평화적 이용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중에서(2020.05.10.)-

### 1. 문제제기

남북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렸던 2018년과 달리 냉랭한 남북관계가 지속되었던 2019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남북의 '협력'은 없고 대담 없는 정책과 구상만 제시되고 있었다. 남북관계가 주춤하는 사이 총선이 다가왔고,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총선 이후 강릉-제진구간 동해북부선철도 건설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5.24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제기되면서 남북협력의 재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여전히 남북관계의 개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남북협력이 북미관계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남북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미국의 대선까지 약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은 '구상'을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실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전환 요구된다.

정책실험의 장으로서 접경지역과 DMZ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정책적, 학술적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담당자들은 이 넓은 공간의 다양한 속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형성되었다. 그 결과 접경지역과 DMZ와 관련된 많은 정책적 구상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는 쉽게 대상화되었다.

접경지역 관련 정책은 이 지역의 자연지도, 행정지도, 인문지도의 불일치에 따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어려움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강원도인 경우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사람들의 주요 생활권이 다르고, 공룡선거구의 탄생으로 인해 지역 민심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그리고 접경지역은 군사안보의 이유로 정확한 국토정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기반 실현 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제한이 있다.

법률적 정의를 벗어나 '접경'의 의미를 확대하면 동해안과 서해안의 철책도 주민들의 생활반경을 제한하는 경계로 인식될 수 있다.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동진과 심곡항을 잇는 바다부채길과 같이 철책에 따른 자연 접근의 제한을 없앴을 때 지역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한 편에서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DMZ에 대한 인식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DMZ 전체를 단일한 속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전제하는 정책담당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의 그뤼네스반트를 모델로 DMZ의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DMZ는 지금까지 군사안보의 이유로 파괴가 진행되어 온 공간이며, 분단 고착화 이후 새롭게 형성된 생태환경을 보전해야하는 공간이며, 남북협력을 위해 개발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며, 과거의 모습을 복원해야하는 공간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DMZ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 지역을 파괴, 보전, 개발, 복원의 측면에서 필요한 공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DMZ에 대한 자연, 인문, 생태 등의 공간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나가는 사업이 점차 중요해 질 것이다.

## 2. 남북 접경지역 협력의 쟁점과 과제

현재 남북 접경지역 간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접경지역 협력을 위한 준비를 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은 파트너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일방의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에 의해 대립과 갈등의 상징적 지역으로 이해되어 온 남북의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협력사업을 구상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북한은 접경지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남북한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한 북중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뤄졌지만, 남한과 접하고 있는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북한도 남북 접경지역에 군사배치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협상을 통해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남북 접경협력을 위해서 군사시설의 재배치가 가능할 것인가 혹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건설시 북한은 스스로 군부대를 재배치했었다. 앞으로 남북 접경지역 협력을 위해서 남과 북이 어느 정도까지 군사지역을 개방할 것인가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와 전개 방식 등이 매우 전략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접경지역 협력의 주체와 재정의 부담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이후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이 대북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지만, 직접사업이 불가능해져 대부분 도로 정비 또는 통일관 건설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 또는 건축과 관련된 사업들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계획단계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남북 접경지역 협력은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지역에 지원하거나 대북사업을 하고 있다는 상징성만을 갖는 사업들은 협력이 본격화될수록 사라져야 할 것이다. 즉 협력사업을 통해 남측의 접경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접경지역 협력을 과거의 복원이라는 관점보다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분단으로 인해 잊혀져가는 접경지역의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지금 이 지역의 저발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에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남북 접경지역 협력은 지역주민들의 인간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결정된 남북 협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협력의 각 주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남북 접경지역 협력을 위한 사업과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북한 접경지역 특정 군에 대한 패키지형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강원도 고성군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환경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 마을의 종합개발을 위해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과 같은 시설작업은 물론 주택개선,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 특산물 재배 기술환경 구축 협력도 이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둘째, 남북 접경지역의 협력으로 상호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력발전을 위한 협력이다. 공유하천 관리의 중요성은 반복해서 논의가 이뤄져왔는데, 그것은 홍수와 기타 재해예방의 차원에서 많이 이뤄졌지만, 전력생산과 관련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임남댐의 물을 북한강으로 방류하면서 북한에서도 전력을 생산하지만 남한에서도 그 물을 활용하여 발전량을 증가시켜 편익을 본 것에 상응하는 만큼 북한에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남북한 전력량 증가에 의한 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용수공급량 증대, 하천기능 복원 및 수질개선 등의 비계량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접경지역의 보건, 방역 협력은 남북한 모두에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기에는 어렵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서 방역 관련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중심으로 K-방역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접경지역 재난관리 예측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재난의 위험은 국경과 대륙을 넘어선다. 각종 재난은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남북협력은 절실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재난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은 남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따라서 북강원도의 재난 징후의 감시, 분석, 예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위성영상, 항공 사진, 드론 영상 등 이미지 기반의 상황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재해지도와 위성 영상 이미지는 재해상황 대응 이후 수습 및 복구에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4월 고성-강릉산불 시에도 공간정보를 활용했다. 향후 재난관리에서 공간정보기술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접경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내 규제해소가 진행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행정구역 면적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산지 관련 규제(79.0%)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군사(62.8%), 환경(13.5%), 농지(8.6%), 교육·문화(5.8%), 지역개발규제(1.3%)의 순으로 나타난다. 용도지역·지구의 유형별 면적은 4,315.0km<sup>2</sup>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이 가장 넓고, 그 다음이 보전산지(3,875.3km<sup>2</sup>), 준보전산지(612.4km<sup>2</sup>), 농업진흥구역(584.7km<sup>2</sup>)의 순이다. 이들 4개의 용도지역·지구는 접경지역 전체 용도지역·지구 지정 면적의 78.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 토지이용규제 사항에 해당된다.

산지와 농지 및 군사 중심의 토지이용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이유는 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대표적 생태지역이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접경지역규제해소 연구, 2015)에 따르면, 강원도 내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전반적인 인지정도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규제에 대해서만 지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규제에 따른 토지이용제한이 접경지역 지역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군사규제에 따른 토지이용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이 요구되며, 이외에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산지규제, 농지규제, 환경규제 등에 대한 지역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 향후, 접경지역내 LX의 역할이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피해민원 처리과정의 진단과 함께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토지이용규제해소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예, 남북강원도 접경지역내 규제프리존의 도입)를 통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실현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 3.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쟁점과 과제

DMZ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군사적 이유로 기존의 파괴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 전쟁 이후 새롭게 형성된 생태환경을 보존해야하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DMZ와 DMZ를 통한 남북협력을 위해 도로, 철도,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한 공간도 있다. 넷째, 과거 유적과 역사를 복원해야하는 공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향후 이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칭 'DMZ관리공단'과 같은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남쪽·북쪽 각 2km에 해당하는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창설하고, 이 기구에 의해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단형식의 기구를 설치하면 좀 더 포괄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 DMZ 관리공단화의 필요성

- 책임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관리조직으로서 공단의 역할이 중요
- 공단은 책임경영체제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고 지원서비스 수준의 고도화 실현
-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공익성 저하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영을 원칙으로 하는 공단이 필요
- 발생하는 이익을 시설개량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환원하고 지역상황 및 지역정책에 맞는 사업운영이 요구됨

#### ■ DMZ관리공단의 법적 근거

- DMZ관리공단의 설립근거 규정인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공단은 DMZ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홍보 및 남북강원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자연생태계 등 보전가치 증진사업, 토지매수·관리, 정보화 등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종합적인 국토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현행 이 법 제10조<sup>2)</sup>, 제11조<sup>3)</sup>의 조문을 통합하고, 내용을 확대·개정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관리공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각 지자체별 개별 단위사업중심으로 운영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와는 괴리되어 있는 실정임.

둘째, 접경지역과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뢰제거이다. 접경지역 주민들 중 대인지뢰의 피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대인지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높이고 있다.

지뢰를 제거의 과정 자체를 국내외적으로 공유하면서 DMZ의 평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뢰를 제거한 자리에 민간 기부자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기 운동을 함으로써 과거 파괴의 공간이었던 DMZ를 생태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DMZ의 특정 공간을 거대한 '지뢰박물관'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인지뢰피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DMZ 개발의 과정에서 냉전과 분단의 현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분단의 기억을 재현할 것인가는 접경지역 박물관의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박물관의 재현은 서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물관

#### 2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그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예사들만이 아니라 역사, 정치, 사회, 인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박물관을 조성하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의 컨셉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달라질 수 있다.

넷째,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에 추모의 공간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쟁은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이었다. 그리고 전쟁 당시에 아군과 적군이 있었지만,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참전국 전사자에 대한 추모의 공간마련과 더불어 북한군과 중국군의 희생을 위로하는 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공간을 국제적 화해의 공간으로 상징성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화살머리고지를 포함하여 DMZ 평화의 길 관광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것이 완성된 형태로 민간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되는 과정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한 번 방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도 남북관계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할 유인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 맺음말

접경지역의 협력과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 각각이다. 이 발제도 아이디어 구상의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 것에 불과하다. 더 다양한 집단지성이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접경지역과 DMZ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군사안보의 이유로 남과 북은 접경지역의 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어쩌면 진지하게 공간정보가 수집이 된 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이다. 공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방안을 논하는 것은 상상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다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정상이 과감하게 DMZ 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조사 진행을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군사적인 이유로, 국내외적 정치적인 이유로 매우 지난한 일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많은 것들은 희망적 사고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섬나라처럼 지낼 수 없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조금씩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열어줘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유효하지만 선도적으로 협력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을 것이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은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남북협력을 주도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 환경 변화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 토론자 Discussant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Gyubin CHOI**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국제개발학 석사학위를, 영국 리즈 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남북관계,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문제, 경제적국가통치술, 관여정책,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 문제 등이다.

Gyubin Choi is a senior researche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from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in 2008 and my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University of Leeds in 2014.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agenda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He is also interested in economic statecraft, an engagement approach,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broade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 토론자 Discussant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ung-hyun CHO**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w School

조정현 교수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과 인권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곳에 오기 전 통일연구원 및 국립외교원에서 국제관계, 북한인권, 국제법 및 국제기구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에서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보호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로 국제인권난민법, 한반도 관련 법정정책 이슈에 대해 활발히 활동하며 연구 중이다. 현재 통일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자문의견을 주고 있다.

Jung-hyun Cho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Law School since 2015. Formerly, he worked at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NDA) and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Professor Cho received his Ph.D. in law from the University of Edinburgh in the UK. His main research areas includ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refugee issues, and other various legal and policy issu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Professor Cho is advising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토론자 Discussant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Taekyoon KI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태균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동시에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학회 학술지인 '국제개발협력연구'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의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인권학회, 한국사회학회, 국제개발협력학회 등의 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비상임이사, UNESCO와 UNDP 서울정책센터 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학술부문에서는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풀브라이트연구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 협력연구원, 독일 괴테대학교 AFRASO 공동연구원, 독일 튀빙겐대학교 Global South 프로젝트 참여연구원, 세계정치학회 RC18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해 왔다. 시민사회부문에서는 경실련 국제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전문위원과 KCOC 정책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주제는 국제개발학, 평화학,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정치사회학으로 International Sociology, Journal of Democracy,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등 주요 국제저널에 저작을 출판하여 왔으며, 최근 <대항적 공존>과 <한국비판국제개발론>의 대표저서를 출판하였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미국 존스홉킨스 고등국제관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프랑스 파리4대학(소르본)에서 교환교수를 역임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Taekyoon Kim is Vice Dean and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currently the editor-in-chief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view and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and also the former board member of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Korea Association of Human Rights Studies,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public sector, he served as former policy advisor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sultant for UNESCO and UNDP Seoul Policy Center, prior to his current position of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n the academic field, he has been participating in varieties of academic institutes such as UNRISD, Goethe University's AFRASO, Tuebingen University's Global South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RC18 of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etc.; and in the civic sector, he has various positions such as the former chairperson of international affairs for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nd policy advisor for the People's Initiatives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and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His main academic research areas include international development, peace studies,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and he published many articles to academic peer-reviewed journals such as International Sociology, Journal of Democracy,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and so forth. He received D.Phil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and Ph.D. from th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nd served 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Paris IV (Sorbonne), and assistant professor at Waseda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 Session 5-4

## 인권을 통한 평화의 기반 다지기

## Laying the Foundation for Peace through Human Rights

주관기관  
Organized By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좌장  
Moderator **마도카 사지** 유엔인권사무소(서울) 인권관  
**Madoka SAJI** Human Rights Office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발표자  
Presenters **이메시 포카렐** 유엔인권사무소(서울) 부소장  
**Imesh POKHAREL** Officer in Charg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yung-ok DO**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오세혁** 시민사회활동가  
**Se-hyek OH** Civil Society Actor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5-4)

## 인권을 통한 평화의 기반 다지기

본 세션은 포용성있게 인권을 바탕으로 평화 프로세스에 접근하여, 평화 구축과 분쟁 방지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두발언자는 그간의 면담 및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바라보는 포용성있는 인권을 바탕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탈북민 시각, 핵심 인권 요소, 포용성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본 세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참여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화 시 논의 될만한 인권 분야에 대해 토론한다. 인권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며 해당국 국민에게 좀 더 의미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사한 맥락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 Laying the Foundation for Peace through Human Rights

The proposed session will present views on how to support efforts to build peace and prevent conflict by applying a more inclusive and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the peace process. The main speaker will present OHCHR's findings, based on interviews and other research, of the main elements of such an approach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views of escapees from the DPRK; critical human rights elements; and inclusiveness. The session will also discuss how some areas of human rights can be included in dialogue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rough us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that the country has engaged with. It may draw on examples from other relevant contexts in order to show how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elements can make the peace process more meaningful for the population, and more sustainable.

# 좌장 Moderator



**마도카 사지** 유엔인권사무소(서울) 인권관

**Madoka SAJI** Human Rights Office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마도카 사지는 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으로 근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을 살피고 옹호 활동을 펼치며 관련 보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업무를 지원한다. 서울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본부와 아프가니스탄 유엔 미션에서 근무했다. 또한 뉴욕 주유엔 일본대표부에서 연구원 및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Madoka Saji serves as Human Rights Officer of OHCHR Seoul. She monitors, reports and advocate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DPRK and supports the work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Prior to taking up this position, Ms. Saji worked in OHCHR Geneva and in the UN mission in Afghanistan. She also served as a researcher/adviser at the Permanent Mission of Japa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 발표자 Presenter



**이메시 포카렐** 유엔인권사무소(서울) 부소장

**Imesh POKHAREL** Officer in Charg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이메시 포카렐은 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총괄 담당자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2006년 합류하여, 태국,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제네바, 네팔 등지에서 아시아 역내 긴급상황 조정관, 태국 프로그램 팀 총괄, 인권관으로 활동했다. 국제노동기구 미얀마 사무소와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책임규명, 인도적 활동 및 평화 유지와 관련하여 경험을 쌓았고, 사법 및 경영 분야 학위를 취득했다.

Imesh Pokharel is Officer-in-Charge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ield-based structure in Seoul. He has worked with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ince 2006 as a Regional Emergency Coordinator for Asia, Team Coordinator for Thailand Program and as a human rights officer in Thailand, Myanmar, Afghanistan, Malaysia, Geneva and Nepal. He has also worked with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n Myanmar and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Nepal.

He has experience in Rule of Law, Democratic Governance, Accountability, humanitarian action and Peacebuilding. He holds a degree in Law and Management.

# Findings of the OHCHR Research on the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Escapees on Human Rights and Peace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A discussion paper by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Korean Global Peace Forum, Seoul, 8 September 2020*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Objectives of the paper

- Provide a platform to the escapees to express their views on human rights issues relevant to the ongoing peace process.
- Initiate a public discourse on the need for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people from the DPRK in the peace process.
- Recommend key human rights reforms and highlight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ocate for such reform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Methodology

- Individual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undertaken in 2019.
- Profile of individual interviewees: Housewives, persons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teachers, nurses, farmers and students.
- Profile of interviewees participating in focus groups discussions: Those working i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with escapee commun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 Limited sample siz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What do escapees think about:

- Peace and Denuclearization
- Reunification
- Justice and Accountability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What are the human rights issues escapees think need to be addressed to establish sustainable peace?**

- Promoting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 Ensuring economic and social rights.
- Protecting fundamental freedoms and rule of law.
- Detention and prison reforms.
- Human rights-centred inter-Korean and denuclearization talk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What could be the benchmarks to initiate human rights reforms in the DPRK?**

- What should DPRK, ROK, US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to ensure an inclusive and human rights-centred peace proces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Thank You

Link to the Discussion Pap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발표자 Presenter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yung-ok DO**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도경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도 일하고 있으며,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최근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인권, 제재이다.

DO, KYUNG-OK is a Research Fellow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he received her Ph.D. in law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she is an adjunct professor a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he is also a member of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Committee on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Abduction Victims and Ministry of Unifica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 Her recent research focuses on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human rights and sanctions.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2020. 9. 8.  
Kyung-ok Do (KINU)

### 현재의 한반도 상황

#### ■ 2020년 한반도

- 남북이 분단된 지 75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70년이 되는 해
- 법적으로는 전쟁상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technically still at war")

#### ■ 평화체제 관련 논의 경과

- 남북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관련 당사자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전개
-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선후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 1997-1999년, 4자회담
  -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 2018년, 판문점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답보상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특수성

###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

- 1) 국제법상의 전쟁이나 국내법상의 내란 중 어느 하나로 규정짓기 어려우며, 여러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음
- 2) 법적으로는 전사이지만, 사실적으로는 평사라는 이중성을 가진
- 3) 남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4)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연동됨.

\*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설명

### ■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 고조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 평화와 인권의 관계

-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 출범한 UN은 평화와 인권을 핵심 가치로 설정
- “UN 헌장 전문: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
- 평화와 인권은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의존적인 관계

###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에 대한 기존의 접근

- 평화와 인권의 두 가지 가치의 연계와 조화에 대한 인식 부족, 병행 노력 미흡
- 한반도 평화가 선결문제라고 보거나 북한인권 증진이 선결문제라고 보는 양자택일적 시각

## 인권에 기반한 평화 프로세스

### ■ UN 인권 메커니즘

- 북한인권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 한반도 문제의 관련국들에 대하여 평화 프로세스와 인권의 통합적 접근을 권고

### ▶ 평화와 인권의 병행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인간의 생명과 인권 보호임을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

### ■ 인권에 기반한 평화 프로세스의 '실현' 문제

-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 실현은 북한 주민의 인권, 나아가 한반도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나, 전쟁 또는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고 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의 병행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며, 전략적이고 유연한 사고 필요

## 비핵 평화 협상과 인권 의제

### ■ 국내외 기관 및 단체, 비핵 평화 협상 시 북한인권 의제화 필요성 제기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은 북한과의 비핵 평화 협상을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간주
- 토마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020년 3월 보고서에서 인권 의제를 비핵 평화 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2019년 10월 미국 방문 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언급

###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진적, 협력적 접근

- 북한인권 개선은 인류보편의 절실한 과제이며,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권 의제화는 필요
- 다만, 비정상적인 정전상태가 7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당사자들 상호 간에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존재하므로 선행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핵화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점진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

## 관계 개선을 통한 인권 협력의 공간 확보

-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통한 북한의 인권개선 역량 강화**
  - 북한이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환경 조성 필요
  - 통상적인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이 실현되기 어렵다면, 공동의 관심사나 개별 주제를 논의하는 국제적, 지역적 포럼을 구성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간접적인 대화 및 협력의 장을 마련
- **인권대화**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초기에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전쟁과 분단으로 파생된 인권 문제를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관계 발전과 신뢰 구축 정도에 따라 인권 논의의 범위 및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 북한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특정보호대상’) 인권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
- **기술협력**
  - 북한이 제3차 UPR에서 수용한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접근
  - 인권에 대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거부감을 보일 경우 UNDP와 같이 법치, 사법정의, 거버넌스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협력 고려

##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

- **한반도 문제의 관련국들은 비핵 평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 **한반도에서 평화와 인권의 병행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이 남남갈등의 소재, 정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
- **인권정책은 국제정치의 맥락 속에서 추구되는 것임을 고려**
  - “인권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제한적 합리성’ 혹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특정한 맥락 속에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 인권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치적 권력관계를 고려함에 있어 인권규범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강력하게 추구할 것인지는 결국 맥락을 고려한 복합적 판단에 달린 문제이다.” (\* 조효제,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 다문화사회연구 제9권 2호 2016, p. 26.)
-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을 북한 내부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
  - 특히 인권이 체제위협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사안임을 북한 당국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여러 행위자 간의 역할 분담, 상호 소통 및 협력 강화**

# 발표자 Presenter



오세혁 시민사회활동가  
Se-hyek OH Civil Society Actor

오세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으로, 1999년 해당국을 이탈하여 2002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다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를 면담하여 경험을 쌓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원 근무를 시작으로, 데일리NK 기자로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활동했다. 이후 여러 국가 출신의 동료들과 함께 창립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구원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이탈자 425명과 면담을 진행했고, 구글 위성 사진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대규모 처형 장소 및 매장 장소를 표시하는 일도 수행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 석사 학위(2011)를 취득했고, 이후 영국 외무성 장학금(Chevening Scholarship) 수혜자로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국제화 및 개발 석사 학위(2012)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학위(2009)를 취득했다. 미 국무부 국제지도자프로그램(IVLP)에 2010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참여하여 "분쟁 지역 내 재정착" 주제를 다뤘다.

Mr. Sehyek Oh was born in North Korea, defected in 1999 and came to South Korea in 2002. Oh has over six years of experience in interviewing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as a research team officer at th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2012~2013) and later as a news reporter at the DailyNK (2013~2014). Oh served as Lead Researcher at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2014 ~ 2018). Oh has interviewed 425 North Korean defectors as part of Mapping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TJWG, which was co-founded by Mr. Oh and other international friends, locates mass grave sites and mass killing sites in North Korea by Google Satellite imagery. He holds two Master's degrees: first in Sociology from Korea University (2011), and later in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from the University of Sheffield with a Chevening scholarship from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of the UK (2012). He received his B.A. in Chinese Language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9). Mr. Oh has participated in IVLP on the topic of "Resettlements in Conflict Areas" from August 2010 to September 2010.

---

# TOWARDS SUSTAINABLE PEACE PROCESS

## ROLES:

- ✓ PRESSURING
- ✓ MONITORING
- ✓ VICTIM'S VOICE CHANNEL
- ✓ GUIDING TO BE NORMALIZED

## FOUR CHALLENGES & SOLUTIONS

## ROLES OF CSOS, NORTH KOREAN DEFECTORS, ESCAPEES AND VICTIM GROUPS

- **Pressuring:** CSOs, groups of NKDs, victims and the survivors can push the governments not forget about human rights issues in the negotiations.
- **Monitoring:** CSOs, groups of NKDs, victims and the survivors can monitor whether the governments do their best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policy implementations.
- **Victims' Voice Channel:** CSOs, groups of NKDs, victims and the survivors serve to deliver voices of people suffering inside and outside of North Korea via their human networks.
- **Guiding to be Normalized:** CSOs, groups of NKDs, victims and the survivors can guide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diverse multilateral mechanisms that might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North Korea so it can proceed towards more human rights friendly reform of the institution.



- Challenge 1: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re too much politicized. The survivors from North Korea hesitant to speak about in public and are afraid of being sorted out politically, as a result, the victims' voice are unheard.
- Solutions: Policy makers, opinion leaders and members of the society should put more efforts to listen to NKD survivors, more education contents about NK people should be made public.



- Challenge 2: Passive polices on human rights result in blocking diverse channels, discouraging civic activities to address recommendations and findings of the COI report.
- Solutions: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should explore diverse channels that can engage North Korea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encourage them to work with international CSOs. The policy makers will need a thought-transition that the denuclearization is also a matter of human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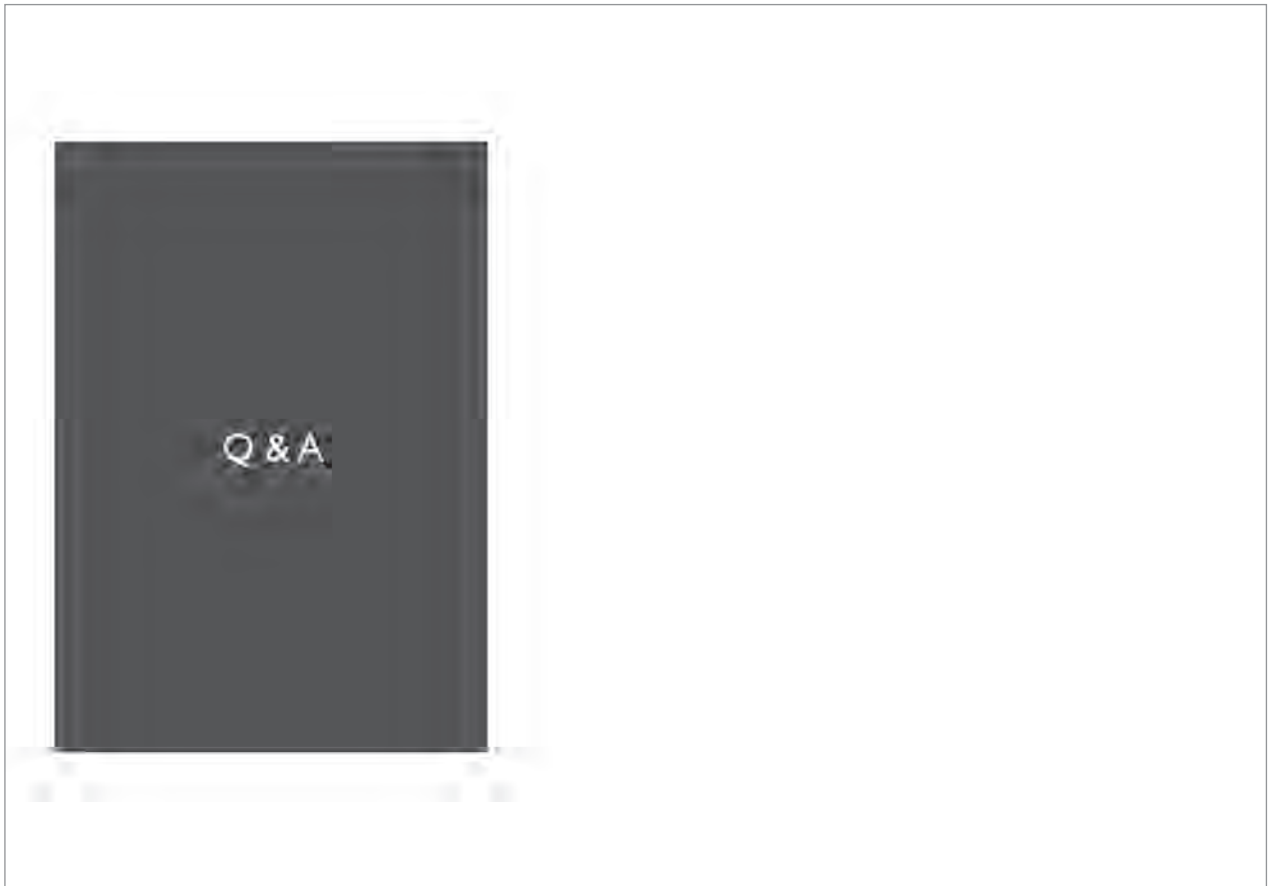
## CHALLENGES & SOLUTIONS

- Challenge 3: CSOs, groups of NKDs, escapees, the survivors will need capacity building to understand international diplomacy languages and the scope of the acceptable manoeuvres.
- Sol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program capacity buildings for civic groups of NKDs, escapees, the survivors. The core group meeting with the UN Seoul Office can be a good example.

## CHALLENGES & SOLUTIONS

- Challenge 4: The people who left North Korea became a target of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The civic activities for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human rights are being blamed socially and politically. Instead of pointing out methods of the activities, their activities per se are being deterred.
- Solutions: Type and contents of public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ns and the society should be diversified. NKD groups should put more efforts to expand common ground with broader public of South Korea.







# Session 6-1

## 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 성과 평가와 전망 Kim Jong Un's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and Prospects for 2021

주관기관  
Organized By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좌장**  
Moderator
  - 발표자**  
Presenters
  - 토론자**  
Discussants
-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Kwan-Sei LEE** Direct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ul-Chul LIM** Associate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Dong-Yub KIM** Associate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이정철** 송실대학교 교수  
**Jung-Chul LE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Young-Hoon LEE** Research Fellow, SKRI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6-1)

## 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 성과 평가와 전망

북한의 변화를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핵심 주제는 지난해 연말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정면돌파전략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올 10월 10일 당 창건 75돌을 맞이해 정면돌파전략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공개적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당 창건 75돌 직전에 열리는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세션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정면돌파전략의 그간 진행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2021년 정책변화를 전망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세션의 목적이다.

## Kim Jong Un's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and Prospects for 2021

The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which was adopted at the 5th Plenary Session of the 7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t the end of last year, is the central theme through which we can analyze the changes that are happening in North Korea and forecast the future. North Korea has made public declarations that its "strategy of making a frontal breakthrough" will produce visible results to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on October 10th of this year. At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0, to be held just befor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WPK, we will evaluate the progress and results of Kim Jong Un's "frontal break through" strategy and forecast how North Korea's strategy will change in 2021 while also proposing the strategic respons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The purpose of this session is to propose strategic alternatives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inter-Korean cooperation.

# 좌장 Moderator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Kwan-Sei LEE** Direct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으로서 각종 연구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통일부 대변인, 정보분석국장,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장 및 17대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다. 18차, 19차, 20차 남북장관급 회담 대표를 역임했으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수석대표 및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단장을 맡았다.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수석대표, 대한적십자 총재 특별보좌역(남북교류담당),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현지도도를 통해 본 김정일의 리더십』,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공저),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등이 있다.

Kwan-Sei LEE is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nd Chair Professor of the Graduated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He previously studied at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s a visiting Scholar. He had served for key posts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cluding the 17th ROK Vice Minister of Unification, Head of the Office of Inter-Korean Dialogue, Director General for Unification Policy, Head of the Intelligence and Analysis Bureau, and Ministry of Unification spokesperson. He also served as a representative in the 18th, 19th, and 20th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and was the head of the advance team for the Inter-Korean Summit. He is a member of various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s such as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Foundation.

# 발표자 Presenter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ul-Chul LIM** Associate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겸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 센터장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민간자문단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위원회 간사, 국가과학기술기술연구회 남북과학기술협력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KOTRA에서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을 담당했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수학하며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웅과 돈주』, 『한반도 경제통일을 디자인하라』, 『김정은 리더십연구』 등이 있다. 경남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Eul-Chul LIM is an Associate Professor and the Director of the ICNK Center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nd also serves as a member of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for the President for South-North Summit,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the Blue House, ROK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other ministries. Prior to joining IFES, Prof. LIM worked as a specialist in the Department of North Korea in the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He also has studied at the Georgetown University of Washington D.C. as a visiting researcher. He received his B.A. in Trade from Yeungnam University, M.A. in Area Studies from Korea University and finally a Ph.D. in Politics and Diplomacy at Kyungnam University.

[KGFP 발제문]

# 정면돌파전의 경제분야 평가와 전망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순서

-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 의제, 논의, 결정내용
- 경제분야 정면돌파 전략 : 구성요소와 추진실태
- 평가와 전망





## 전원회의 논의 내용

- 혁명적 노선 제시
- 국력, 국방력, 경제건설분야 성과 평가
- 현정세 인식과 평가
- 자력강화 관점에서의 바로잡아야 할 국가관리·경제사업 문제점 제시
- 시대적 과제와 투쟁방향 제시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정면돌파전략
- 정치외교, 군사적 측면에서의 정면돌파전략
- 근로단체사업 강화/전사회적 도덕기강 확립
- 당 영도력과 당 간부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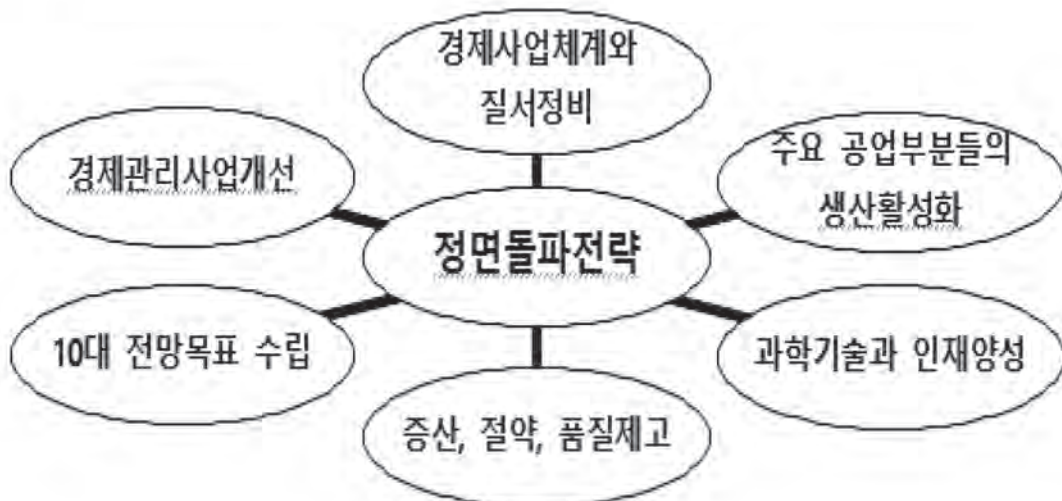
## 전원회의 채택 결정서 내용

- ❖ (1) 나라의 경제도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
- ❖ (2)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광(상징)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
- ❖ (3)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 체계 구축
- ❖ (4)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
- ❖ (5)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도덕기강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
- ❖ (6)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력 강화
- ❖ (7) 일군들(간부들)이 정면돌파전에서 당과 혁명,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분투할 것
- ❖ (8)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이 결정서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조치

## 북한의 정세인식과 대응 방향

- 북미대결은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규정
  - => 자력갱생으로 대북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 목적
- 정면돌파전 투쟁구호를 제시하면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 이라고 명확히 규정
  - =>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발동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
- '정면돌파'와 '장기전'에 방점
  - =>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 현재의 위기를 내부 역량 강화와 경제관리시스템 개선, 내부 자원 총동원 체제와 위기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

## 경제분야 정면돌파전략 구성요소



## 경제분야 정면돌파 전략 추진실태 점검

정면돌파 분야	추진 실태
10대 전망목표 설정	불투명.
주요 공업부문 생산활성화	농업, 화학, 금속공업 집중, 그러나 중간재 수입감소로 생산차질 예상
경제관리사업개선	진행중, 그러나 가시적 진전 미확인
경제사업체계와 질서정비	진행중.
과학기술과 인재양성	진행중, 상대적 진전 분야
증산, 절약, 품질제고	가장 진전 분야
보건사업 개선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진전
자연재해 대응 위기관리체계 구축	미확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규모 건설과 관광객 유치	정책우선순위 조정으로 차질

## 평가 및 전망

- 경제분야 정면돌파전략은 북미관계 교착, 남북관계 단절 상황에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
  - 정면돌파전은 자강력 강화를 통해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길이고, 강화된 국방력과 높아진 전략적 지위에 걸맞는 강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길로 인식
  - 경제, 사회, 정치, 외교, 군사적 모든 측면에서 정면돌파하는 방향으로 용감하게 전진하면서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
- **2012년 이후 일관성 있게 제재를 정면돌파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 추진해왔고, 실제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 지난 수년 간 고강도의 제재 아래에서 성취한 대규모 건설, 비약적인 과학기술(특히 국방과학기술) 발전, 국산화 실적 등을 통해 정면돌파 성공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확보
  -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전례 없는 장애물에 직면하면서 정면돌파전략의 목표 수행 차질 및 정책우선 순위 조정

## 평가 및 전망

- 장기화 국면을 내부 역량 강화와 경제관리시스템 개선, 내부 자원 총동원 체제와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표출
  - 과학기술 분야 인적 역량 강화와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국산화 상품의 질 제고, 기업의 효율성 개선(로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기업) 측면 등에서 진전 예상
  -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점진적 발전 가능성이 있고, 내부 경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일정 수준의 비효율성 제거, 생산성 향상 효과 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
  - 당분간 자연재해,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보다 집중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외부적 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립경제 건설을 지향
  -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국내의 자원과 기술에 기초하여 자체로 생산보장, 첨단산업기술이 이러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주력

# 발표자 Presenter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Dong-Yub KIM** Associate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군사안보학)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과 동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 연구분야는 북한군사, 북핵문제, 지역안보, 군사협상, 평화체제 등이다. 20년간 해군장교로 복무하고 중령으로 제대하였으며, 국방부에서 북한전문가로 남북군사회담에도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

Dong-Yub KIM has received Ph.D. in North Korean Studies (Military & Security) a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and a Central Committee Member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NUAC), an advisor i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Ministry of Unification (MOU)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His academic interests are North Korean military,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east Asian security, military negotiation and peace regime. He had a successful twenty-year career in the ROK Navy before retiring as a commander. Previously, he had served as a North Korea specialist at the MND taking part in several military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정면돌파전의 외교군사적 평가와 전망



김 동 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북한의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

2008년 8월 김정일의 외병과 2009년 G2 등장 이후 변화  
김정일의 로드맵을 바탕으로金正은 세습 이후 정교화  
⇒ 당국가체제 정상화 - 제7차당대회 (2016. 5)



1인당 국민소득 146만원  
핸드폰 5백여만대 이상  
장마당(시장) 500여개

토크빌의  
역설

인민대중  
제일주의

##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변화는 진행형

### 군사중심 노선의 전환

- 선군정치 ⇒ 당국가체제 복원 (2019.4.11. 헌법 개정 '선군' 삭제)
- 군사우선주의 ⇒ 경제우선주의

\* 2018년 4월 20일 국가전략으로 기존의 '병진노선' 대신 '경제발전 총력집중' 새로운 전략노선 채택

### 경제정책의 전환

- 시장억제 폐쇄경제 ⇒ 개방경제 시장보편화
- 사상동원의 생산 ⇒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경쟁

### 외교안보 노선의 전환

- 핵개발 ⇒ 핵무력 완성
- 공세력에 기초한 안보 ⇒ 자위력에 기반한 안보

##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생존곡선



\* 북한이 원하고 필요한 것은 경제지원협력? 안보적 우려 해소?

## 북한의 국가전략노선 전환과 탈군사주의화

### ■ 주요군사훈련장과 군 시설의 철거, 인민경제 시설 건설

#### • 갈마반도(명사십리)의 변화 : 원산갈마해안 대규모관광지구



#### • 군용비행장(함북 경성 중평리)에 대단위 채소 온실농장 건설



## 북한군의 경제적 역할 증대

### • 인민군대의 경제현장 대규모 투입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 건설

삼지연군 건설

### • 군수공장에서 민수용품 생산



“군수공업부문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 (2019년 김정은 신년사)

“스키장에 설치할 수평 승강기와 끌림식 삭도를 비롯한 설비제작을 모두 주요 군수공장들에 맡겨보았는데 나무랄 데 없이 잘 만들었다”고 치하(2019.8.31,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현지 지도)



# 하노이 트라우마, 그리고 2020년 정면돌파전



북한은 2018년부터 이어온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잘못된 길이었다고 평가하고 미국을 통한 지름길이 아닌 새로운 길인 '정면돌파전'을 선택

## 정면돌파전 : 제재압박하 자력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기 국가생존전략



정면돌파전은 가변적이라기보다 재제 지속 하 미국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전에 대비한 큰 그림과 함께 2020년 단기적인 돌파구 제시

## 정면돌파전과 외교·군사적 공세

**경제중심의 정면돌파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 현 북미상태를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과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인적 물적 힘을 토대로 장기전을 준비하고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임을 재확인
- ☞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엄혹한 2020년을 보내야하는 원인을 미국에게 돌리고 '정면돌파전' 선택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조건부 핵무기보유국 전략'을 표출

## 정면돌파전과 공세적 외교

**경제중심의 정면돌파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 틀을 탈피해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 연대를 통한 공세적 외교로 돌파구를 모색
  - \*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1차 대의원회의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길'에 대해 대내적으로 자력갱생과 군사력 증강, 대외적으로 국제평화애호세력과의 연대를 시사
- ☞ 북한의 정면돌파전과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만나 북미대화가 아닌 과거 6자 회담과도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다자협상틀 제시 등 한반도 비핵평화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제공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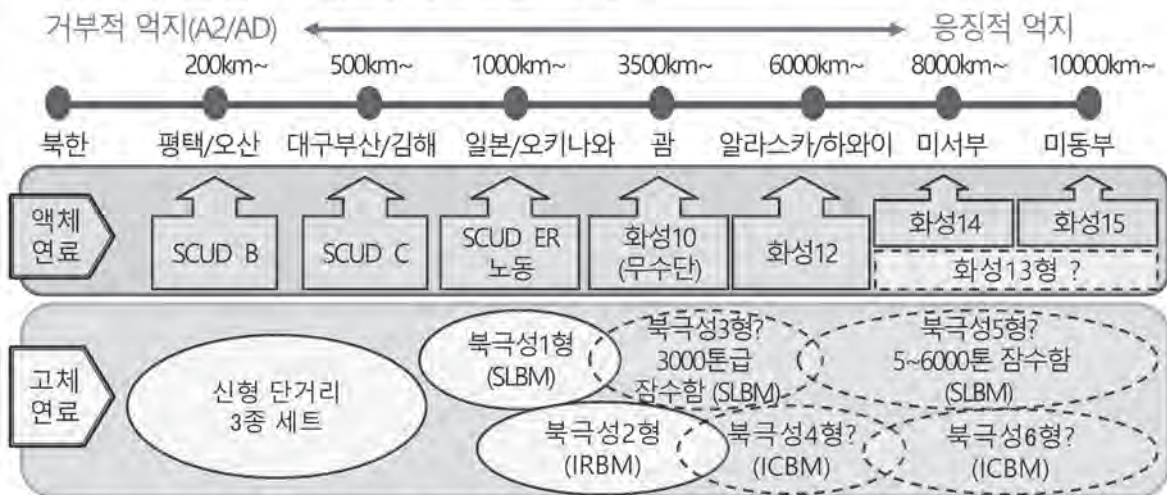
## 정면돌파전과 군사적 자위력 강화 \* 북한판 국방개혁(전갈의 꼬리)



**북극성 3형과 신형잠수함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방사포(~600km)**

- ☞ 경제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을 안심시키고 군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자위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핵무력 강화와 함께 일정 수준의 선택적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
- ☞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 SLBM과 결합한 신형 잠수함 공개 및 실제 해상 발사, 김정은 위원장의 신형 엔진시험 참관 및 10월 당 창건 75주년 군사퍼레이드에 신형 ICBM(고체) 공개 등 ICBM의 실제 시험 발사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군사행동으로 긴장 고조 가능

## 핵무력 질량적 강화와 운영전략



- ☞ 영변(핵물질 증산)과 동창리(미사일 엔진시험 개발)가 살아있는 한 재할성화를 통해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지속
- ☞ 북한이 명시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화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핵보유국 전략'을 취하고 있어 향후 비핵화협상보다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

## 정면돌파전의 외교군사적 의미와 대응

**북한의 정면돌파전이 장기적으로 새판짜기라면 미 대선 이후에도 북미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북미관계와 연계하지 않는 남북관계를 고민할 필요**

- ▶ 북한의 문제 제기나 행동에 보다 담대하면서 우회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하고 우회적 Tit for Tat
- ▶ 미국이나 제재 때문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탓하기 전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의 진정성과 선제적 일방적 조치
- ▶ 한미 간의 갈등 요소와 남남 갈등을 사회적 동의와 선제적 논의를 통해 제한된 손상(Limited Damage)으로 유도하여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 있는 갈등 및 위기관리 전략 마련



이정철 송실대학교 교수

Jung-Chul LE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200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과 경제안보팀 팀장을 거쳤으며 2006년 9월부터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2014년에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시거센터에서 1년간 방문학자 연수를 마쳤고 현재 송실대학교 교수이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북미대립』(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북한 핵과 사드, 등가성의 재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지와 신호비용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23권 3호(2017); "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정책 프레임," 『한국정치연구』 25집 1호(2016); "Making Sense of North Korea: How to Respond to Pyongyang's Charm Offensive," Foreign Affairs (January 21, 2015) 등이 있다.

Jung-Chul Lee is a Professor in the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oongsil University. He was a former Chief of Economic Security Team in th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2-2006) and served as a visiting scholar at the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i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for a year in 2014. He currently serves as an advisor for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He holds a Bachelor of Laws degree (1991)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M.A. (1997)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complet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2. He has written books and articles on North Korea, including "Sanctions for Nuclear Inhibition: Comparing Sanction Conditions between Iran and North Korea" (Asian Perspective, 2019), "Making Sense of North Korea: How to Respond to Pyongyang's Charm Offensive," (Foreign Affairs, 2015) and DPRK-US Confrontation (in Korean, 2012).

# 토론자 Discussant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Young-Hoon LEE** Research Fellow, SKRI

이영훈 박사는 한국 SK 그룹의 싱크탱크인 SK Research Institute for SUPEX Management의 Research Fellow이며, 이전에는 한국은행과 통일연구원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했고, 청와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그는 주로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협력 관련 글을 써왔다. 최근 발표한 연구로는 "평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 의 모색"(2019),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및 IT기반의 남북경협"(2018), 『북한의 서비스업』(2017, 공저), 『북핵, 오늘과 내일』(2016, 공저), "북한의 화폐금융 현황 및 최근의 금융조치 평가: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 중심으로"(2015) 등이 있다.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 The Faculty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post-doctoral fellow를 지냈다.

Young-Hoon LEE is a research fellow at SK Research Institute for SUPEX Management, a think tank for SK Group in South Korea. Prior to joining SK Research Institute, he was a North Korean Economist at the Bank of Korea and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He also served as advisor to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the South Korea's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Advisory on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He has written many books and papers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is recent research publications include "Explor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and Innovation (2019)", "Outlook for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and IT-bas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2018)", North Korean Service Industry (2017, co-authored), North Korea Nuclear, Today and Tomorrow (2016, co-authored), "North Korea's Monetary Finance Status and Recent Assessment on its Financial Measures: Focusing on Inflation, Dollarization, and Private Financing (2015)."

Dr. Lee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from Korea University and was a post-doctoral fellow at the Faculty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Cambridge.







# Session 6-2

##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개혁 동향

## North Korean Education Reform Trends in the Kim Jong-un Era

주관기관  
Organized By

한국교육개발원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좌장  
Moderator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Byung-Young PARK Director-Genera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발표자  
Presenters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eong-ah CHO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  
Jisoo KIM Research Fellow,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토론자  
Discussants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수  
Gu-Sup KANG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Ji-Hye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공동연구원  
Hoje KANG Affiliated Fellow,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6-2)

##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개혁 동향

북한교육의 변화 동향은 남북한 교육교류의 협력방향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지향하는 미래세대의 인재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화포럼의 취지와도 잘 부합된다. 김정은 정권에서의 북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개혁은 이전 시기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사회의 이후 변화 방향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보는 본 세션을 통해 국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북한교육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North Korean Education Reform Trends in the Kim Jong-un Era

Understanding the changing trends of North Korean education not only helps to decide the direc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fits the purpose of this forum in that it can identify the future generation of talented people aimed at the Kim Jong-un regime. The reform of North Korean education in the Kim Jong-un regime i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eriod, and this will be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future change of North Korean society. This session, which studies the trends of North Korean education reform in the Kim Jong-un era, will g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apidly changing North Korean education.

# 좌장 Moderator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Byung-Young PARK** Director-Genera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박병영(Park, Byung-Young)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사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4년 동안 재직하면서 북한, 통일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입사하여 조사분석연구실, 대입제도연구실, 연구기획실,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평생융합교육연구실 등을 거치면서 교육 관련 통계조사,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연구, 대입제도 연구, 평생교육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Byung-Young Park earned a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Yonsei University, and then a Ph.D. in sociology from Yonsei Graduate School. He conducted research on North Korea and Korean reunification at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for four years. After joining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n 2007, he conducted research on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college admission system, lifelong education. Currently, he is the director-general of the Future Educ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발표자 Presenter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eong-ah CHO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조정아는 2005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교육과 북한 사회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3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산업화 시기 노동자 양성에 관한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북한 교육, 북한 청소년, 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현재는 북한 고등교육 개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ince 2005, Cho, Jeong-ah has been working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2003, she earned a Ph.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research on education and the reproduction of labor forces in North Korea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She has conducted research on North Korean education, North Korean youth and gender politics in North Korea. She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reform of higher education in North Korea.

---

# North Korea's Higher Education Reform in the Era of Knowledge Econom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issues presentation materials



**Jeong-ah Cho**  
(Korea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

## Table of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issues presentation materials

- 01** Major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in Kim Jong Un era

---

- 02** Higher education system reform

---

- 03** University status and curriculum reform

---

- 04** Expansion of distance education and education informat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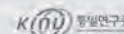
---

- 05** Higher education reform achievements and tasks ahead

---




## 01 Major changes in education policy in Kim Jong Un era



### ❖ ‘Knowledge Economy Era’ and North Korea’s vision of ‘Making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 Current period is prescribed as ‘Information Industry Era’ and ‘Knowledge Economy Era’: Emphasizing the need to foster high-quality human resources to lead the knowledge economy
- Goal of “Educational Revolution in the New Century” is “to make our country a socialist educational powerhouse in the 21<sup>st</sup> century by nurturing young students as reliable workers who will lead the construction of a powerful country and realizing ‘North Korea’s Vision of Making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Kim Jong Un, Sep. 5, 2014, 13<sup>th</sup> National Conference of Teachers)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by carrying out a thorough cultural revolution to make all people to be builders of socialism equipped with a profound knowledge of nature and society and a high level of culture and technology, thus making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2019. Apr. revised Socialist Constitution Article 40)

## 01 Major changes in education policy in Kim Jong Un era



### ❖ Directivity of education reform

- Education system and curriculum reform according to “global educational development trend”
  - “In the independent standpoint that stand firmly on our own feet while looking out onto the world”, develop education “in our way” by adopting global education development experiences
  - Promotion of higher education restructuring and system reform
  - Try to improve quality of education to world class
- Expansion of teacher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qualifications
-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reinforcement and education informatization promotion reflecting changes toward informatization era
  - “Let’s make a leap forward with science and guarantee the future with education.”
  - “While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driving force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an important symbol of national prowess, the mother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education”
- Emphasis on competition and exchange with foreign countries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inforcement
  - Instruction to receive many foreign students to university and send graduate students abroad to study (Sep. 27, 2016, letter on 70<sup>th</sup> anniversary of Kim Il-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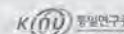
### ❖ Major instructions related to education reform

- △ Complete maintenance of education system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on system, △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 innovation △ Education conditions and environment innovation (Sep. 2014, 13<sup>th</sup> National Conference of Teachers)
- △ Promotion of follow-up tasks after element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reform (in higher education, planning the manpower demand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types of university, re-organizing the curriculum and departments based on such demands, establishing cutting-edge science-related departments) △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eachers, △ Establishing the long-term educational strategy △ Expanding facilities and promoting investment in the educational budget (Sep. 3, 2019, 14<sup>th</sup> National Conference of Teachers)
- △ Higher education reform such as university reorganization and curriculum reform △ Improvement of education contents and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science research – education – production △ Education environment enhancement △ Reduction of education gaps among regions △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eachers (Dec. 2019, 5<sup>th</sup> Plenary Meeting of 7<sup>th</sup>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 ❖ University restructuring

- 4-6 years university (Kim Il-sung university,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etc.) / college and teachers university / vocational technology university / factory colleges
- College oriented structure
  - Expansion of universities through college integration (More than 10 universities, integrate colleges in similar sectors or regions)
  - Converted some universities to colleges (end of 2019)
- Classified academic type universities and practical type universities and fostered universities to global academic oriented universities ('research oriented university', 'top class university')
- 2-3 years colleges are integrated into university or converted to vocational technology university (2016)
- Departments integration and adjustment, new installation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departments: In 2019, new installation of 85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s including information security department, nano material engineering department and robot department in 37 universities
- Expansion of graduate school and establishment of continuous university-graduate school system
- Distance education expansion



**03** University status and curriculum reform**❖ How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 North Korea government does not announce official statistics related to universitie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precise status.
- Status is estimated by collecting university names and history exposed on media such as Rodong Sinmun, Kyoyuk Sinmun.

**❖ No. of universities by type/region/major**

- About 260 (Excluding special sector universities such as politics and military school, and the number is temporary estimate since study is ongoing)
- By each type: Universities (Kim Il-sung University,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Goryo Seonggyungwan)/ Colleges in each sector (113) / Factory colleges (91) / Vocational technology universities (48)
- By each major:  
Industrial · Mineral (132) / Agricultural & fishery (40) / Medical (19) / Natural Science(3) / Education (34) / Social Science & Economics(12) / Art and sports (15) / Comprehensive (1)
- By each region: Pyeongyang (49) / Pyengnam (33) / Pyeongbuk (22) / Hwangnam (13) / Hwangbuk (17) / Hamnam (35) / Hambuk (24) / Gangwon (17) / Yanggang (8) / Jagang (10) / Nampo (12) / Gaeseong (8) / Naseon (3)

**03** University status and curriculum reform**❖ Recent university curriculum reform direction**

- Specialization of curriculum by university types: Classifi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to institutions for training academic talents(research-type) and one for practical talents and adjusted curriculu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 Integration and reorganization of departments and installation of advanced departments centered on research type universities
- Expansion of graduate school and establishment of continuous university-graduate school system
- Curriculum and educational materials developed by major universities are transferred and applied to other institutions
- Bring issues on the field to curriculum and expand proportion of experiment and practice in curriculum

### ❖ Curriculum and education method enhancement

- Credit system introduction
-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inforcement: Emphasis on learning 2 or more foreign languages, introduction of foreign language listening and conversation test in university admission
- Education method and exam method enhancement
- Computer-based education and distance education expansion
- Graduate school education reform
- International education standard research and application: UNE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etc.

### ❖ Distance education development process

- After liberation: Introduction of correspondence education system using mail
- 1970's: Started distance education building on broadcasting with expansion of radio and TV
- 2000's: Introduction of distance education using computer network based e-learning

### ❖ Expansion of distance education

- 2007: Establishment of remote education center at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implementation of distance education for workers
- 2011: Re-education of university faculty through distance education from Kim Hyung Jik Teachers' University
- 2015: 110 graduates from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distance university (field technicians from 20 companies), 40 departments, 8,000 students and distance education at 1,700 organizations and companies
- 2016: Nationwide 50 universities remote education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 2020: Converted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to distance education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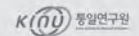
04 Expansion of remote education and education informatization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s distance education system screen

KNU 통일연구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04 Expansion of remote education and education informatization



Tablet access distance education system screen



KNU 통일연구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 Education informatization

- ‘Education modernization’ in 2000’s:
  - Promotion of making electronic media teaching material and computer-based education
- Kim Jong Un era’s ‘education informatization’:
  - Education support program R&D
  - Establishment of multimedia material production center
  - Wide adoption of distance education
  - Informat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 Expansion of education using multimedia

- Utilization of multimedia in class
- Expanding ‘multi-functional’ classrooms: computer, computer network, virtual computer environment and LCD TV, etc.

## 05 Higher education reform achievements and tasks ahead



### ❖ Expected outcome

-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creased number of college graduates)
- Enhancing the efficiency of higher education through integration and restructure of schools
- Improvement and informatiz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 Reenforcement of factory college(an education system combining work and study)

### ❖ Tasks ahead

- National fund support required for education reform
- Reducing educational gap among regions, sectors and schools
- Moving away from politics and ideology-oriented education and making curriculum more flexible
- Enhancing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 through expans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 Improving a link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industry by enhancing the autonomy of individual's work choices
- Mak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efficient by reforming military service system

# 발표자 Presenter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

Jisoo KIM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김지수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중학교 교사로 10여년 재직하였으며,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북한 교원에 대한 연구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서 북한 교육관료제 연구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3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입사하여, 북한교육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년부터는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과 학교통일교육 지원 사업의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연구와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Jisoo Kim served as a middle school teacher for over 10 years,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at,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sociology of education from SNU as a study of North Korean teachers, and then he received a Ph.D. for his research on North Korean education bureaucracy. Since joining the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in 2013, he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North Korean education and education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Since 2017, he has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of KEDI, and is in charge of the education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youth and the support for unification education. Recently, he conducted research on North Korea'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Kim Jong-eun era and as a research director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North Korean background youth education.

## Trend of Elementary · Secondary Education Reform in North Korea in Kim Jong Un Er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Jisoo Kim

### Process of Change of Social Characteristics in North Korea

	Kim Il-sung regime		Kim Jong-il regime	Kim Jong Un regime
	1945-1958	1959-1994	1995-2011	2012-2019
Economy system	Co-existence of planned economy and market economy	Full scale implementation of planned economy Insufficient market function (Farmers' market every 10th day)	Weakened planned economy Market expanded (Permanent market) Government's containment on market	Co-existence of planned economy and market economy Market function acknowledged by law
Industrial sector	Nationalization of major industry, acknowledgement of privately owned companies	Emergence of industrial sectors into planned economy	7.1 Economy Measures Self-supporting system of companies	5.30 Speech Acknowledgement of autonomic management of company and private investment
Agricultural sector	Land reform (Land owned by individuals)	National farms, cooperative farms (Land owned by government and society)	Downsizing of groups in group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of groups of 7-8)	Vegetable garden responsibility system (Family unit land management)
Educational sector	High educational fervor 4 years compulsory education 7 years compulsory education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Code of each level schools	Decreased educational fervor 9 years compulsory education 11 years compulsory education Child care and Education Act Theses on Socialist Education	Shrinking of school education Education Act Primary Education Act Higher Education Act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12 years compulsory education Teacher Act Educational Doctrine Execution Act Vocational Technology Education Act

Jisoo Kim, et al. (2019). Analysi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North Korea in Kim Jong-un Er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15.

## Change of education system and compulsory education system of North Korea

School system age	1946 Reform	1953 Reform	1959 Reform	1966 Reform	1973 Reform	2012 Reform
17			Advanced technology school	High school	Advanced technology school	
16	Upper secondary school					Upper secondary school
15						Upper secondary technology school
14		Upper secondary school	Technology school			
13	Lower secondary school				Middle School	
12	Lower level technology school					Advanced middle school (Middle school)
11		Lower secondary school	Middle school	9 years Compulsory education From 1967		Lower secondary school
10						
9			7 years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from 1988		11 years Compulsory education 1972-1975	12 years Compulsory education from 2014
8	People's school	Compulsory elementary school education from 1956	People's school	People's school	People's school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7						
6						
5					High level class	High level class
4					Kindergarten	Kindergarten
					Low level class	Low level class

Jisoo Kim, et. al. (2019), Analysi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North Korea in Kim Jon-Un Er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15.

## Change of educational goal: Making All People Well 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 ► Change of educational goal in Kim Jong Un regime

- ▶ National goal: Construction of strong socialist country (Realization of strong country of education, and of human resource)
  - ▶ "Let's leap with science and secure future with education" (Rodong Sinmun, Sep. 1, 2019)
- ▶ Education goal: Making whole society intelligent → Making All People Well 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2015 Educational Act Article 8 Revision)
- ▶ Emphasizing global trend of educational reform and global standard
  - ▶ "Reform education to match global education trend and educational demand" (Rodong Sinmun, May 29, 2020)
- ▶ Educational system reform and reorganization of laws to improve quality of education
  - ▶ School system reform and full scale revision of curriculum(Emphasis on research activities)
  - ▶ Enactment of Teacher Act, Educational Doctrine Execution Act, distance Education Act and Vocational Technology Education Act



## Elementary · secondary education system reform

- ▶ **School system reform**
  - ▶ From 4-6 school system to 5-3-3 school system
- ▶ Curriculum revision
  - ▶ Full scale curriculum revision according to school system reform and publication of new textbooks
- ▶ Educational facility enhancement
  - ▶ Making education science- and information-oriented: Full scale introduction of multi-functional classes nationwide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Dec. 19, 2017)
  - ▶ Multi-media education, virtual education, network utilizing education and education resource (DB) sharing (Rodong Sinmun, Dec. 18, 2019)
- ▶ Education method enhancement
  - ▶ Emphasis on research-based learning and activities, and emphasis of STEM integrated education (Arirang Meari, Oct. 29, 2019)

## Elementary · secondary education courses revision

- ▶ **Emphasis o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 ▶ Science
    - ▶ New installation of natural science subject(integrated subject)
      - ▶ Change of textbook contents from knowledge system oriented to theme oriented
      - ▶ Emphasis on research activities such as experiment and discussion
  - ▶ Information and technology curriculum
    - ▶ Changed computer subject to information and technology subject (from 4<sup>th</sup> grade in elementary school)
    - ▶ Cultiv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and algorithmic thinking ability
- ▶ **Expansion of proportion of communication related subject**
  - ▶ Increased English curriculum hours(unit)
    - ▶ Emphasis on global trend, and of foreign language curriculums to English (from 4<sup>th</sup> grade in elementary school)
    - ▶ Introduction of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in College entrance exam
  - ▶ Increa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hours(unit)

## Change of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

### ▶ Change of ideological indoctrination

- ▶ "Make people deeply perceive that leader is not apart from people but is leader devoted for happiness of people while sharing life and death, joy and sorrow with people. **If greatness is magnified by making revolutionary activities and appearance of the leader mysterious, it will conceal the truth.** When people are charmed to the leader humanly and as colleague, absolute faithfulness will come out."

(2<sup>nd</sup> Supreme People's Assembly, Mar. 9, 2019)

## Educational condition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enhancement

### ▶ Modernization and informatization of education

- ▶ Educational environment enhancement to make "All People Well 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 ▶ Nationwide expansion through construction of exemplary school

### ▶ Making education facility multi-functional

- ▶ Informatization and modernization of overall school facilities including classrooms, labs and gymnasiums
- ▶ Promotion of making all nationwide classes multi-functional
  - ▶ Class that can utilize network and multimedia
  - ▶ Furnishing of computers, large screens, network, IP camera and multi-functional object scanners
  - ▶ Reducing gaps of education facility between regions

### ▶ Utilization of remote network

- ▶ Utilization of national network (national intranet)
- ▶ Access to hall of science and technology DB, and utiliz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 ▶ Teaching and learning management utilizing school's internal network

### Teacher policy enhancement

- ▶ **Emphasis on role and expertise of teacher**
  - ▶ Traditionally, North Korea emphasized expertise with ideology of teacher with priority
  - ▶ In Kim Jong Un era, priority is given to expertise of teacher (Teacher Act Article 2)
- ▶ **Teacher expertise improvement policy**
  - ▶ Emphasis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 reflecting global trend
  - ▶ Reinforcement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 ▶ Reinforcement of in-service education centered on existing teacher re-education centers
    - ▶ Emphasis on in-service teacher education utilizing remote education (utilizing college of remote education of major universities such as Kim Hyung Jik Teacher’s University)
    - ▶ Emphasis on each school’s teacher activities to improve expertise: Exemplary class, experience class, integrated teachers review meeting, teaching method research and discussion meeting, teaching experience presentation meeting
- ▶ **Teacher Education policy enhancement**
  - ▶ Encouragement of outstanding students (graduate of 1<sup>st</sup> middle school) to advance to teacher education program(Education Newspaper, Jun. 14, 2018)
  - ▶ Curriculum revision and enhancing instruction method of college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 North Korea people’s computer usage experience

Age	Men		Women	
	Computer usage experience	Computer usage experience (last 3 months)	Computer usage experience	Computer usage experience (last 3 months)
15-19	76.8	70.7	72.6	63.9
15-17	79.0	74.0	75.6	68.4
18-19	72.4	63.9	68.1	56.9
20-24	60.6	52.3	59.2	46.6
25-29	60.0	52.4	47.3	34.9
30-34	52.0	44.5	39.4	30.5
35-39	44.3	37.7	31.7	23.4
40-44	38.9	33.6	26.5	20.2
45-49	36.2	29.4	19.1	13.6

UNCEF. DPR Korea MICS, 2017: 32-33

# 토론자 Discussant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수

Gu-Sup KANG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강구섭(Kang, Gu-Sup)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사를 취득한 후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교육학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성균관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0~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재직하며 탈북청소년교육, 통일교육 관련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였고 평생교육,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통일 대비 교육분야의 준비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Byung-Young Park earned a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Yonsei University, and then a Ph.D. in sociology from Yonsei Graduate School. He conducted research on North Korea and Korean reunification at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for four years. After joining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n 2007, he conducted research on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college admission system, lifelong education. Currently, he is the director-general of the Future Educ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Discussion on 'Reform of Higher Education in North Korea in Knowledge Economy Era'

Gusup K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This presentation offers various implications on which approach is required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secto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better understanding of trend of reform of higher education section in North Korea which is promoting active change according to global trend of knowledge based society. It has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being able to find out not only the challenges but also the future vision that North Korea's higher education face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changes.
- North Korea is pursuing reform of higher education sector in many areas such as curriculum, education environment and teachers' capacity building, etc. while emphasizing knowledge economy and informatization, etc. as policy direction in higher education sector for 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We can see that they are pursuing changes very dynamically through the facts that they once pursued change from college oriented to university format and now pursuing converting to college again and fostering of various format universities such as academic type and practical type, etc. It is decided that various contact and exchanges are required to find out what outcomes are brought practically by such tries.
- It seems that, recently, the cases of scholars in basic science area in North Korea writing thesis on relevant overseas academic journals are consistently increasing. Considering that they are promoting the reform with limited resource, it is decided that we need to study the trend of academy and research of North Korea through thorough review of the areas where North Korean scholars are having active interests in.
- As suggested in the presentation, North Korea is actively promoting exchanges with foreign countries, and actually, 12 students of North Korea's Kim Il-sung University visited Free University of Berlin in Germany and accumulated experiences. Overseas training and studies in overseas universities by students and scholars of North Korea have been consistent in the past, and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experience of exchange through close relationship with institutions that are decided to have active exchange and cooperations with North Korea, and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for us to also study various ways to participate in such exchanges. Also, currently, it is stopped due to various sanctions, but there are some groups and organizations having vigorous exchanges with North Korea's higher education sector, and it is decided as useful to find out the trend of research areas of North Korea. (Example: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erman political parties' foundations, etc.)
- North Korea itself is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exchange with outside, but due to the conditions where North Korea is in, it is decided that it will not be easy to actively carry out wide range of exchanges. It is decided a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ways that North Korea can participate with informal cooperation by South Korea through interface with overseas academic group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 
- We know that the presenter had many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the study with the situations of restricted access to North Korea rela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changed greatly from the past, it is strongly questioned if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maintain the past policy of strictly restricting access to information on North Korea. It is questionable that it is really required to restrict access of general public to North Korea related information for safety of nation and society, and it seems that active reconsideration is required for current policy of controlling even the access to information on North Korea, especially for the purpose of study by researchers. Because there is fundamental limit to derive substantial research result that can contribute to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without sufficient access to information on North Korea. It seems that we need to move toward to the direction of opening information if only selectiv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ifficulty of accessing web sites such as university homepage, etc.

# 토론자 Discussant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Ji-Hye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김지혜는 2017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북한교육과 탈북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관련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연구기획팀장으로 국내 탈북청소년들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연수 및 교육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학 및 국문학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교육과정 및 국제교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국내외 교육과정개혁과 세계시민성에 대한 연구 관심을 토대로 북한 초중등 교육과정 변화와 국내 탈북청소년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Ji-Hye Kim has been part of Office of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in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ince 2017 as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In the office she has researched education of North Korea, Unificatio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 As a manager of Research and Planning team at the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 she also executed various educ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 including teacher training programs. She earned a BA in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and Literacy and MA in Education at the Ewha Woman's University. She also earned Ph.D in Curriculum Studies and International Education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Based on her research interest in curriculum reform and global citizenship, she is conducting various research on North Korea's curriculum changes and North Korean migrant youth.

---

## Discussion on "Trend of Refor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North Korea in Kim Jong Un Era" presentation

Ji Hye Ki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Interest on the changes of education in a society not only helps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but also enables the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society. This is more so in the perspective that education, especially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has the value and image of future and ideal citizen presented by the society. Therefore, I think that the presentation by Doctor Jisoo Kim that analyzed the trend of North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each detail sectors was a big help for understanding present North Korean society and predicting the future of its education. Moreover, even though it is much better compared to the past, until now, in the perspective that access to data on school education of North Korea is very much limited for general education researchers, this presentation can be said to have big implications not only North Korea researchers but also education researchers with interest in future edu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ince Kim Jong Un regime, various changes that North Korea education went through show clear differences from previous Kim Jung-il regime. Because the changes in each area of society started with advent of a new leader are also the governing strategy to provide justification of the regime and to prepare base of power. Corresponding presentation comprehensively analyzed education in Kim Jong Un era starting from understanding of the flow of economic, industrial and agricultural changes in the previous era up to each area of education, that are from school system to educational goal, curriculum and the followed education facility, teaching method and teacher education policy. I think the result of such analysis on each area will be much helpful for the purpose of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changes of education in North Korea. However, at the same time, there is a limit to study the contents covering overal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reform in Kim Jong Un era in the limited time, so I would like to add understanding of the presentation through a few additional questions.

First, I would like to request additional explanation on the background that the goal claimed by Kim Jong Un regime in education reform, 'Making All People Well 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became the big upfront characteristic distinguishing from the previous education reform. While 'Making Whole Society Intelligent' presented and emphasized in Kim Il-sung regime had focus on quantitative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for the entire citizens, 'Making All People Well 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emphasized in Kim Jong Un era became the base for many educational reforms (new installation of Upper level technical middle schools, conversion to technical colleges, etc.) focused toon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I think the changes of educational goals of the two different eras made under the common goal of 'constructing a strong socialist country' had different socio-political context required for each regime. North Korean society would have various ways to qualitatively improve labor power through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Please explain in which context the emphasis on science and technology appeared especially in Kim Jong Un regime.

Second, I request additional explanation on the actual influence of the announced educational reform on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in North Korea. In the presentation, mostly, documents such as Rodong Sinmun and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were presented as reference and analyzed data. In the relevant study carried out in 2019, in addition to the document analysis, you also ha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interview with North Korean teacher defectors and students who went to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Kim Jong Un regime, and it seems that the contents were not included in the presentation. Especially, please explain that whether education reform with direct influence on the students such as enhancement of educational facility such as 'Making all



classrooms nationwide multi-functional' and enhancement of education method such as 'Research-based education' was actually practiced over literal announcement, how the mandato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reparations were made, and which realistic difficulties teachers had to practice the announced reform and how they overcame. Especially, if there is additional explanation on how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with big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influenced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al reform, it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practical impact of the reform.

Third, with regard to teacher policy, I hope you explain the effect the effort of Kim Jong Un regime made on qualitative improvement of teacher and quantitative expansion based on relevant data, if you have them. As you mentioned in the previous presentation, social and economic change of North Korea changed the expectations by North Korea citizens on not only teacher but also various occupations. There were big and small changes in terms of social status and respect on teacher in North Korean society and ideological role teachers had in local community. Such change would have influence on the result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 tried on teacher fostering by Kim Jong Un regime. Therefore, I am also curious of the level of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al reform that tried to change curriculum and instruction methods by school of educations and to induce high-achieving students to become teachers.

Fourth,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form of Kim Jong Un regime is continued interest in 'global trend' and making it contents and context of reform. Then, first, I am curious what is the 'global' that North Korea considered standard. For example, recent international education reforms are based on core future competency presented by OECD's education policy committee, or comparison of standardized achievement level such a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or 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Then, I would like to know if 'global' Kim Jong Un regime thinks to look and follow is also as such, or if there is another reference point of its own to find out 'global trend' or standard nation. At the same time, action of studying and emphasizing 'global trend' automatically causes mirror effect on North Korean society which looks at its status in the world (whether leading the trend or not following the trend). Then, I would be grateful if you additionally explain how such analytical voice on North Korea's education and society is shown in your data analysis.

Lastly, I would like to hear about the direction of the chang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North Korea you predicted through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at can be expected through such change. Until recently, in Korea,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re also competitively presenting various ways for culture and education exchanges, and various domestic researchers are developing several common curriculum or educational activities that can be used by both South and North Korea. Please share you opinion on how such efforts in Korea for South and North Korea education exchanges can be realized or what will be favorable direction to prepare for cooperation of two Koreas based on the insight you earned through this study on educational direction of future Kim Jong Un regime.

Most of all, I thank you for providing opportunity to learn in detail about the recent change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education through this presentation. At the same time, I hope such researches and interest on North Korea education will become fruitful groun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South and North Korea education made by each system and culture for long period of time since the division.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공동연구원

**Hojye KANG** Affiliated Fellow,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물리학을 전공하여 과학에 대해 이해가 깊으며, 북한 과학기술정책사를 전공한 첫번째 박사이다. 북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학술적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대중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남북 협력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수학-과학 교육, 과학기술을 통한 교류협력,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또 다른 비핵화 방법 모색, 북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남북 스타트업 추진 등을 연구하고 있다.

He majored in physics and has a deep understanding of science. He is the first Ph.D majored in the history of science-technology and policies in North Korea.

He has been conducting academic researches on North Korean science-technology and policies. In addition, he is making great efforts to form a consensus on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public lectures and writings.

His main themes are how to exchange and cooperate with North Korea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He has researched for education of mathematics and science-technology, seeking alternative solution of denuclearization through peaceful use of science-technology. Promoting inter-Korean Startups using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is another research theme.





## Session 6-3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고용·여성 North Korea's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Kim Jong Un Era: Population·Employment·Women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North Korea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좌장  
Moderator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Philo KIM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발표자  
Presenters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Jea Hwan H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Ji Young CHOI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이희영 대구대학교 교수  
Hee Young YI Professor, Daegu University

토론자  
Discussants

잉그리트 미테 기센대학교 교수, 독일  
Ingrid MIETHE Professor,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Germany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Kyoochul KIM Associate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김수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Soojung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KIET)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6-3)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고용·여성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구, 고용, 여성의 차원에서 조명하며 기존의 핵문제 및 시장화 이슈 중심의 북한 인식 이외에 다양한 측면의 변화상을 조명한다. 북한 변화상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구구조와 고용구조를 통해 살펴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여성과 가족의 경험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의 변화를 인구와 고용이란 측면에서 실증적인 거시적 추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주민 일상생활을 섬세한 미시적 관찰을 통해 살펴보는 기획이다.

## North Korea's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Kim Jong Un Era: Population·Employment·Women

This session sheds light on socio-economic changes occurred in the Kim Jong Un era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employment, and women. It examines patterns of changes taking place in various areas of North Korea aside from an issue-specific way of perceiving the North such as nuclear issues and marketization. North Korea's changes are analyzed in two dimensions: demographic structure and employment structure viewed from the macroscopic perspective; and experiences of women and family from the microscopic perspective. The session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grasp North Korea's changes through the structural lens of macroscopic patterns in population and employment and via the meticulous lens of microscopic observation in people's daily life.

# 좌장 Moderator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Philo KIM**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1991.1.18.)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을 거쳐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및 북한연구소장, 중국연변 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 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KBS 자문위원 및 북한연구학회 제22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민화협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Two Koreas in Development, 『개성공단』(공저), 『분단폭력』(공저),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다시 통일을 꿈꾸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공저) 등이 있다.

Philo Kim is associate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He received his Ph.D in Sociology from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ew Jersey, USA. Professor Kim had formerly served as a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North Korean Studies Division at a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 KINU, and also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He is currently serving or served as advisory committee members in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Broadcasting System,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tc. His main research areas include North Korea, Unification issues and Peace Studies. He is the author of Reading North Korea by Chosun Korea (2016), Dreaming Unification Again(2017), Kim Jong Un Succession System (2011), North Korean Diaspora (2011), and Flexible and Complex Unification theory (2010).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Jea Hwan H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영역은 북한경제, 남북경협, 경제발전론, 한국경제사이며, 주요 저서로는 『북한 여성, 아동 인권 실태』 (2016),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2016),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2016),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2017),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2018) 등이 있다.

Dr. Jea-Hwan Hong is a Research Fellow of North Korean Studies Division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He received his Ph.D.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nducted his postdoctoral research at Korea University. Dr. Hong's main research areas cover the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Korean Economic History. His publications include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2016), "Current Status of Operation and Governance of North Korean Corporations" (2016),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ung-un Regime" (2017), and "Livelihoods in North Korea and Cooperation Plan" (2018).

---

# Demographic Transition and Socio-economic Changes of North Korea

Hong, Jea Hwa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Table of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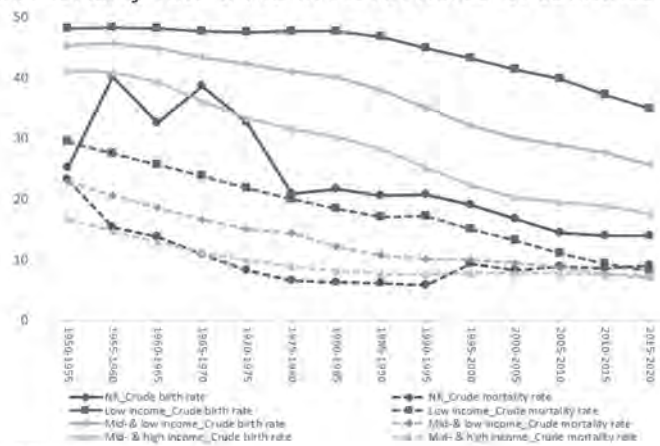
### Issue Raised

**Analysis on North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Socio-economic Factors**

**Demographic Dividend and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 Issue Raised

Premature birth/mortality rate trend in North Korea & countries by income leve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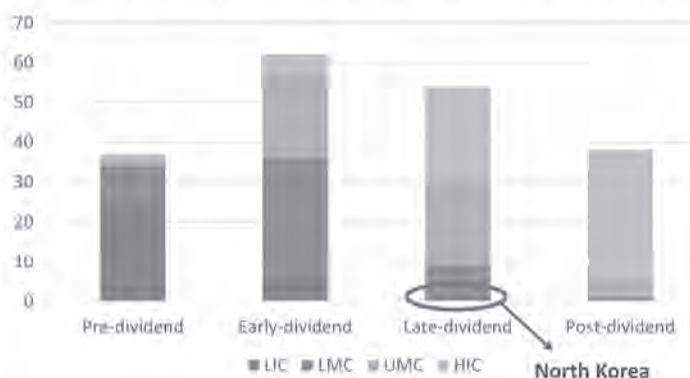


Source: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North Korea, although categorized as low-income group, shows demographic transition trends similar to that of mid-/high-income group countries.
  - Fertility started to change from 1960s.

## Issue Raised

Relation between income level & demographic transition type



Source: Ahmed et al. 2016

-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transition stage shows correlation.
- Among low income countries, North Korea is the only one categorized as a late-dividend type.
- Why does North Korea show this income-population puzzle?
- Why have North Korea failed to make the most of the dividend generated in its demographic transition process?

## Analysis on North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Socio-economic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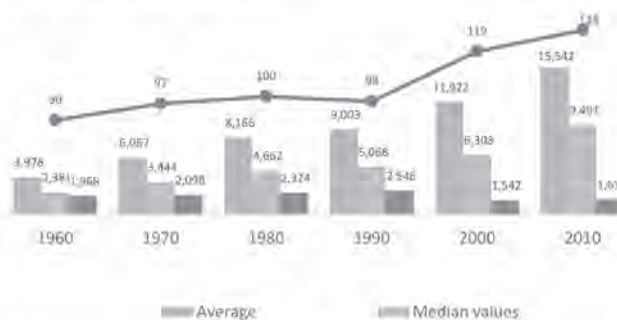
### General Discussion on Demographic Transition factors

- Mortality rate: Adverse factors
  - Improvement in health/medical care quality
  - Development (increase in income level and expanded education opportunity, government service, and market opportunity)
- Fertility rate: Adverse factors
  - Decrease in death rate
  - Increase in income level
  - Enhanced education level (woman)
  - Family planning (?)

## Analysis on North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Socio-economic Factors

### Analysis on the income-population puzzle in North Korea

- Income level
  - In the past, North Korea was not categorized as low-income country group.
  - It is the result of the trend where income gap against the world has widened while demographic transition has continued since 1970s.



Source: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Note: NK data separately calculated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NK's per-Capita income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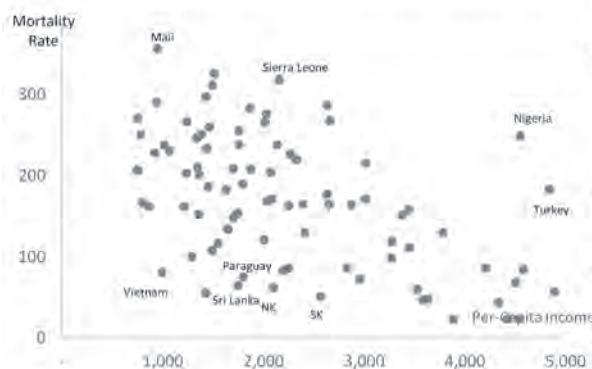
## Analysis on North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Socio-economic Factors

### Analysis on the income-population puzzle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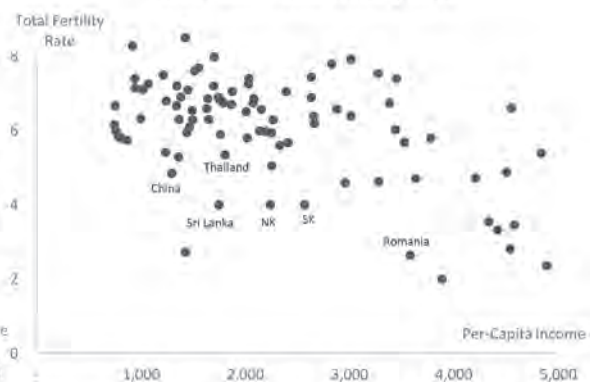
- Income level

- Lingering question – Death/birth rate was lower than income level in 1970.

1970 – Relation between income level (per-Capita GDP) and mortality rate (age:0~5)



1970 – Relation between per-Capita income level and total fertility rate



Source: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for mortality/total fertility rate/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for income level

## Analysis on North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Socio-economic Factors

### Analysis on the income-population puzzle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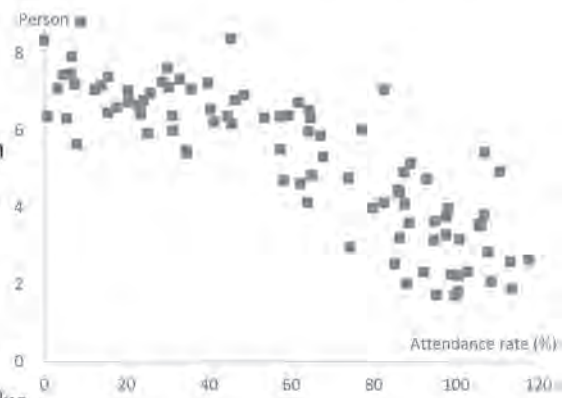
- Socialist system

- Free education, free medical care provided by the socialist system in the past

- Free education

- 1956: Free primary education
  - 1958: Free secondary education
  - School attendance rate was high even before adopting mandatory education
- 65% (1946) → 98% (1949)  
 → 82% (1953)

Relation between women's primary school attendance rate and total fertility rate in 1960s



Source: Women's primary school attendance rate - Lockheed et al.(1991) / Total fertility rate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Analysis on North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Socio-economic Factors

### Analysis on the income-population puzzle in North Korea

- Socialist system
  - Early adop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 Old-age pension since 1946
    - Completed free medical care system in 1960
  - Free medical care system (1960s-1970s)
    - Health/medical care whose quality would likely be higher than that of living standard

Development of health care system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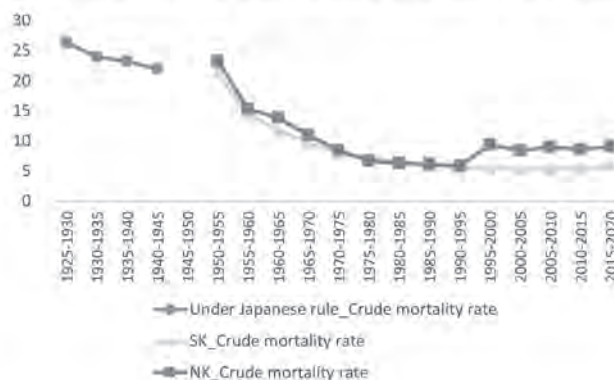
Source: Shin Hee-young et al. (2017)

## Analysis on North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Socio-economic Factors

### Analysis on the income-population puzzle in North Korea

- Historical background: Early adoption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 Both Koreas experienced fast demographic transition compared to the income level.
  - Possibly, early adoption of medical technology led to low early mortality rate.
  - Other low-/mid-&low-income countries mostly experienced changes in the mortality rate from 1930s~1940.

Long-term trends of early mortality rate in two Ko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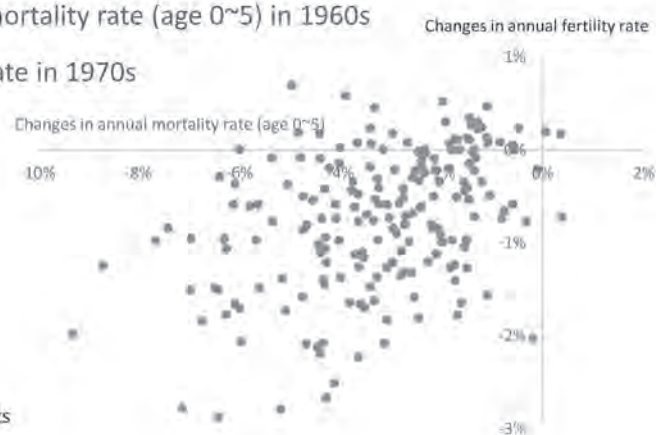
Source: Kim Nak Nyeon et al (2018) (~1945)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50~)

## Analysis on North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Socio-economic Factors

### Analysis on the income-population puzzle in North Korea

- Historical background: Early adoption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 Possibly, early transitions in mortality rate contributed to early transitions in fertility rate.

Relation between the transition in mortality rate (age 0~5) in 1960s and the transitions in total fertility rate in 1970s



Source: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Analysis on North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Socio-economic Factors

### Analysis on the income-population puzzle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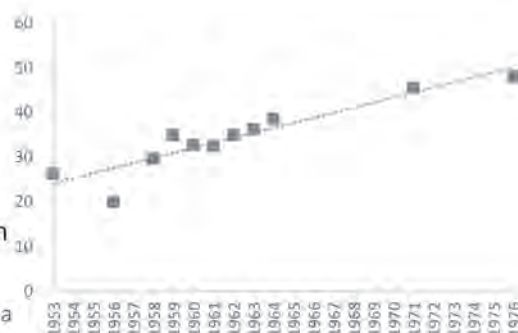
- Comprehensive Discussion
  - In summary,
    - Mortality rate started to change from an early stage due to the early adoption and impact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 North Korean economy was not that bad until 1960s.
    - Quality education & health care service compared to the income level (Characteristics of socialist regime)
    - ➡ As a result, changes in fertility rate started from 1960s.
  - Previous research viewed that changes in fertility rate in North Korea started in 1970s mainly due to policy changes from childbirth promotion to birthrate control and increase in women's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to resolve the food shortage issue.

## Analysis on North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its Socio-economic Factors

### Analysis on the income-population puzzle in North Korea

- Comprehensive Discussion (Argument against previous research)
  - Has the policy change to birth control (distribution of contraception tools) been a real factor causing the decrease in fertility rate in North Korea?
    - Distribution of contraception tools & its impact on birth rate is still debatable.
  - It is not typical to see a stagnant state of development as a factor to decrease fertility rate.
  - Also, there was no radical increase in women's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Women's ratio in worker & office clerk in North Korea



Source: Park Young-ja (2004)

## Demographic Dividend and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 General discussion on the impact of population on economic growth

- Relation between demographic increase and economic growth
  - It is well-known that demographic increase does not have a strong impact on economic growth. (Headey and Hodge 2009)
  - Since mid-1990s, focus has been on how a demographic structure affect economic growth.
    - In the analysis process on the factors contributing the high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nations
  - Introduction of demographic dividend concept
    - 1st demographic dividend: Increase in working age population at early stage of demographic transition
    - 2nd demographic dividend: Increase in elderly workers and prolonged post-retirement period → increase in national income



## Demographic Dividend and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 General discussion on the impact of population on economic growth

- Empirical research on demographic dividend effect
  - Bloom and Williamson(2008): Demographic dividend accounts for 1/3 of the economic miracle in East Asia
  - Choudhry and Elhorst(2010): Gap between the total population and working age popul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increase in per-Capita income.
  - Ahmed et al.(2016): Demographic dividend is expected to explain 11~15% of growth in sub-Saharan Africa by 2030.
- Political environment matters to maximize demographic dividend effect.
  - The period with demographic dividend can be viewed as a window of opportunity.
  - Bloom, Canning and Sevilla(2003): Emphasis on flexibility in labor market, macro policy to promote investment, and trust building on domestic financial market.

## Demographic Dividend and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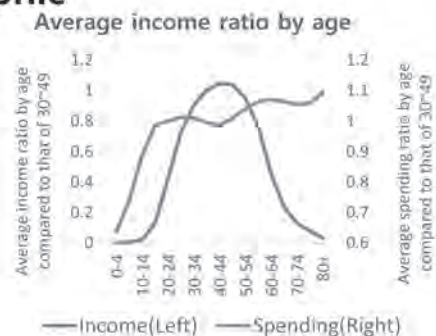
### Estimation on the size of demographic dividend in North Korea

- How to estimate
  - Approach using Support Ratio(SR)

$$SR(t) = \frac{L(t)}{N(t)} = \frac{\sum_x \phi(x) \times P(x, t)}{\sum_x \gamma(x) \times P(x, t)}$$

- The effective number of producers(L) divided by the effective number of consumers(N)
- Effective number of producers/consumers: The adjusted number of total population by reflecting age-based production & consumption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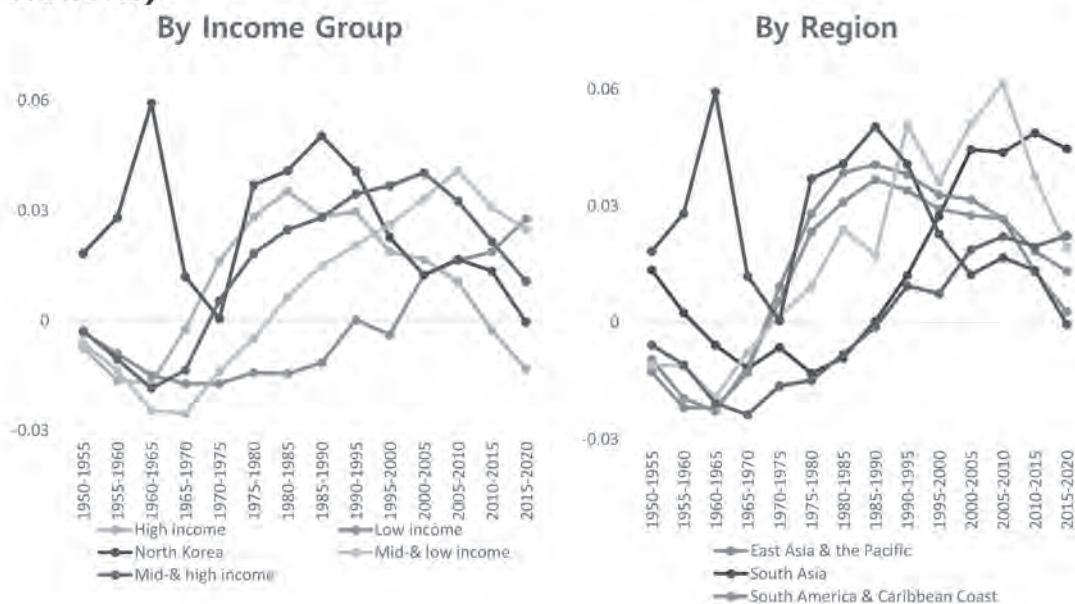
- $qr[SR(t)] = qr[L(t)] - qr[N(t)]$



Source: NTA

## Demographic Dividend and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 Size of demographic dividend (North Korea vs Overseas nations)



## Demographic Dividend and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 Size of demographic dividend (North Korea vs Overseas nations)

- Demographic dividend of North Korea
  - Demographic dividend hit its peak from 1975 to 1995.
  - It was larger in size when comparing international trend.
  - However, North Korea failed to achieve an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at period.
    - Ranked 18<sup>th</sup> among 147 countries.
    - Income growth rate was lower than average compared to countries in East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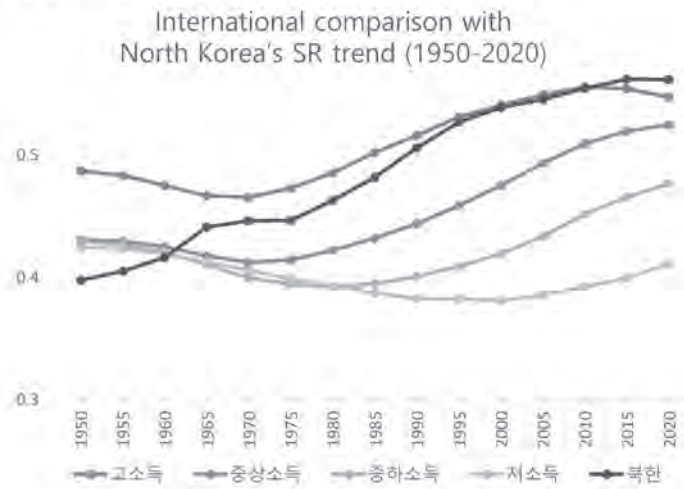
Relation between size of demog and per-Capita income growth

Source: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Maddison H

## Demographic Dividend and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 Size of demographic dividend (North Korea vs Overseas nations)

- Current demographic dividend of North Korea is favorable to economic growth.
- Reasons behind North Korea's failure in utilizing demographic dividend
  - To be reviewed



Thank you!

# 발표자 Presenter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Ji Young CHOI**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 영역은 북한의 산업구조, 인구, 비공식 경제 등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는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2016),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2017), 『북한경제 대외개방과 무역의 이익 수량적 추정』(2019) 등이 있다.

Dr. Choi, Ji Young is a Research Fellow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She received her Ph.D. in economics at Korea University. Her main research interest is the North Korean economy focusing on industrial structure, demographic trend, and dual structure of formal and informal sector. Dr. Choi served as an Economist a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Bank of Korea. Her recent publications are as follows. An Analysis of Demographic Structural Change in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2016), Estimation of Formal and Informal Sectors in Social Accounting Matrix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2017),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North Korea's Openness and Gains from Trade (2019).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0

## Employment Structure of North Korea : Trend and its Implication

---

2020.9.7

Research Fellow, KINU

CHOI, Ji Young

---

---

### Research Motivation

- Low Income and Population Aging of North Korea
- Possibility of Economic Catch- up?
- Need to examine the Labor condition of North Korea
  - Population Census in 1993 and 2008, Population Survey 2014
  - Age Structure of Population
- Research Implications
  -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during Transition
  - Labor Demand of the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

## Plan of Presentation

- **Overview of Labor and Employment in North Korea**
  - Labor Supply Condition
  -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of Employment
  - The Industrial Composition of Employment
-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
  -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between Two Koreas
  - Implication for Resuming and Expanding the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Comparison**
  - Demographic Effect and Labor Utilization Effect
  - Implication for North Korean Econom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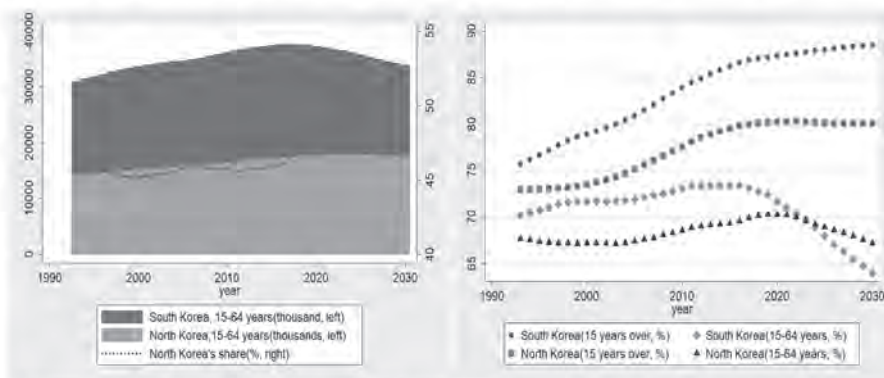
## Plan of Presentation

- **Overview of Labor and Employment in North Korea**
  - Labor Supply Condition
  -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of Employment
  - The Industrial Composition of Employment
-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
  -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between Two Koreas
  - Implication for Resuming and Expanding the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 International Comparison**
  - Demographic Effect and Labor Utilization Effect
  - Implication for North Korean Economy

## Labor Supply Condition

### Population Age Structure: Share of Working- Age(15~64 years) Population

- The number of WA population in the South and the North starts to decline after a peak in 2016 and 2022, respectively.
- The share of the North in total WA popu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Source: Statistics Korea(<http://kostat.go.kr>)

## Labor Supply Condition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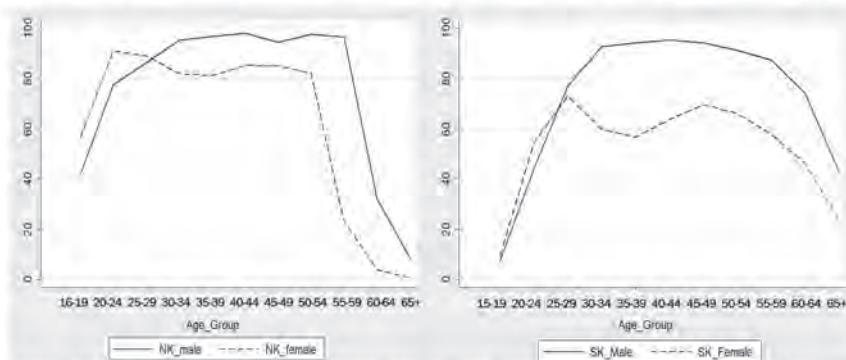
- In 2014,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the North is 69.3% that is much higher than the South(62.9%)
- In general, the socialist countries had a higher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ies than the capitalist countries(Cho, 1995)



Source: Statistics Korea(<http://kostat.go.kr>),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995, 200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6)

## Labor Supply Condition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by Age and Gender(Choi, 2017)
  -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the North falls in the 30 to 39 years age group
  - However, the gap by gender in the North is not greater than in the South Korea.
  - In South Korea, women's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y by age is shown to be typical 'M - shape', which reveals the career interruption due to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Note: North Korea announces it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for the population aged 16 and over.  
 Source: Statistics Korea(<http://kostat.go.kr>),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6)

## Employment Structure

-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of Employment in North Korea
  - Included in the 1993 and 2008 population census data
  - The Share of Agricultural Workers in 2008(29.8%) is higher than that of Farmers in 1993(23.5%)
    - This can be explained as follows 1) Difference in Classification Criteria 2) Labor Shift from industry to agriculture sector during the mid- 1990s famine 3) higher natural growth of population in the rural region

Occupation	1993		Occupation	2008		Annual Growth rate during 1993~2008 (%)
	thousand	%		thousand	%	
Manual Workers	6,944	63.1	Non- Agricultural Workers	6,910	56.7	0.0
Farmers	2,589	23.5	Agricultural Workers	3,625	29.8	2.1
Clerical Workers	1,472	13.4	Clerical Workers	1,643	13.5	0.7
Total	11,005	100.0	Total	12,177	100.0	0.6

Sourc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995, 2009)



## Employment Structure

- The Industrial Composition of Employment in North Korea
  - Included in the 1993/2008 population census and the 2014 social, population and health survey,
  - The difference between 1993 and 2008 can be partially explained by economic crisis
    - Labor transition from secondary industry to primary industry due to low operating ratio in manufacturing sector
  - The difference between 2008 and 2014 is more difficult to explain - probable causes can be:
    - 1) Different research methodology; or 2) Continued decline in manufacturing sector since mid- 1990s

	1993		2008		2014	
	%	thousand persons	%	thousand persons	%	persons
Primary Industry	30.7	3,382	36.0	4,387	41.8	11,481
Secondary Industry	43.9	4,833	37.5	4,570	26.9	7,388
(Manufacture)	(37.4)	(4,118)	(29.6)	(3,601)		
(Construction)	(4.2)	(464)	(3.0)	(368)		
(Land and City)	(2.3)	(251)	(4.9)	(601)		
Tertiary Industry	25.4	2,789	26.5	3,228	31.3	8,597
Total	100.0	11,005	100.0	12,185	100.0	27,466

Sourc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995, 200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2016)

## Plan of Presentation

- Overview of Labor and Employment in North Korea
  - Labor Supply Condition
  -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of Employment
  - The Industrial Composition of Employment
-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
  -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between Two Koreas
  - Implication for Resuming and Expanding the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Comparison
  - Demographic Effect and Labor Utilization Effect
  - Implication for North Korean Economy

##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

- **Labor Productivity as a Single Factor Productivity**
  - Defined as output per labor input, assuming the human properties such as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and skills are all homogeneous
  - In general, use labor as input while value - added as output
-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
  - Labor input: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2014 survey and the 2008 census (Statistics Bureau of DPRK, UNFP)
    - Applying FTE(Full Time Equivalent) of South Korea for the year of 1975
  - Output: the GDP estimate by industry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 Nominal GDP estimates nominated South Korean won

##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

- Converting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2014 survey by applying the 'full- time equivalent(FTE)' of South Korea for the year of 1975

	Ratio of FTE based on South Korea (1975)	North Korea (2014)	
		Number of Workers in the 2014 Population Survey (thousand)	Number of Workers Applied FTE conversion (thousand)
Agriculture, Forest & Fisher	0.85	5,345	4,546
Mining		584	566
Light Industry	0.97	994	964
Heavy Industry		1,386	1,344
Electricity, Gas & Water	0.87	176	145
Construction		299	259
Government Services	0.82	2,855	2,479
Other Services		1,148	944
<b>Total</b>	<b>0.87</b>	<b>12,787</b>	<b>11,247</b>

Source: Author's Calculation usi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2016), Bank of Korea(<https://ecos.bok.or.kr/>)

##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

- Labor(input) and value-added(output) for inter-Korea labor productivity comparison
  - In general, value added in constant PPP is used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In this research, however, nominal GDP is used for proper inter-Korean comparison based on 2014 data.
  - Huge gap in the employment & industry structure between two Koreas → How does it affect labor productivity?

	GDP estimates (Output) (Billion South Korean Won)		The number of workers (Input) (Thousand Person)	
	North Korea	South Korea	North Korea	South Korea
Agriculture, Forest & Fishery	7,416	32,144	4,546	1,417
Mining	4,455	2,089	566	14
Industry	7,241	422,654	2,308	3,776
Electricity, Gas & Water	1,443	35,747	145	190
Construction	2,773	72,339	259	1,576
Service	10,622	869,692	3,423	16,595
Total	33,949	1,434,664	11,247	23,568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nk of Korea(<https://ecos.bok.or.kr/>)

##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

- Value Added per worker in the North is 3,019 thousand won, only 5% of the South
  - Individual industry - based comparison: North Korea has maintained quite strong construction sector (23% to that of South Korea) while manufacturing industry showed just 2.8% to that of South Korea.
  - The gap of labor productivity by industry → Not reliable
  - Labor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relatively higher (without reflecting labor input based on soldiers/labor mobilization)
  - Labor productivity of industry: relatively lower (some manufacturing workers engaging in non-official economic activities due to low operating rate in factories → possibly neglected in official statistics)

	Value Added per worker		
	North Korea (thousand won, A)	South Korea (thousand won, B)	A/B (%)
Agriculture, Forest & Fishery	1,631	22,688	7.2
Mining	7,872	149,178	5.3
Industry	3,137	111,932	2.8
Electricity, Gas & Water	9,954	188,142	5.3
Construction	10,708	45,900	23.3
Service	3,108	52,407	5.9
Total	3,019	60,872	5.0

---

## Plan of Presentation

- Overview of Labor and Employment in North Korea
  - Labor Supply Condition
  -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of Employment
  - The Industrial Composition of Employment
-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
  -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between Two Koreas
  - Implication for Resuming and Expanding the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Comparison
  - Demographic Effect and Labor Utilization Effect
  - Implication for North Korean Economy
  - Implication for the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

##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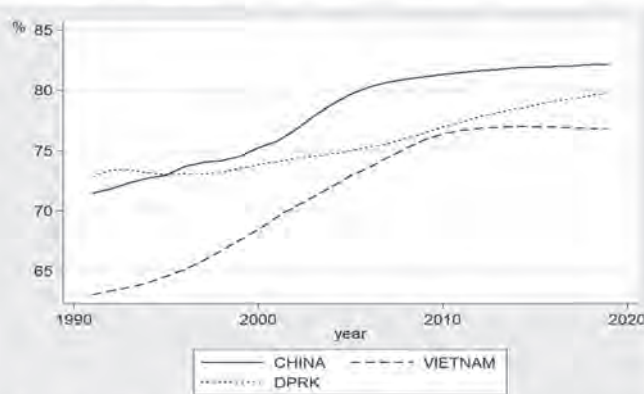
-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OECD, 2003)
  - Growth of GDP pc= Demographic effect +Effect of labor utilization +Effect of labor productivity

$$\frac{GDP}{POP} = \frac{WAPOP}{POP} \times \frac{EMP}{WAPOP} \times \frac{GDP}{EMP}$$

- Representative Transition Economy in Asia, China and Vietnam (Choi, 2016)
  - What is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 Decomposition of economic growth

## Demographic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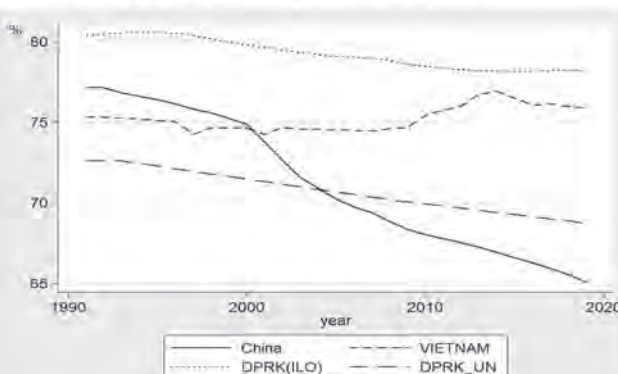
- Working Age Population(15+ Population, %)
  - Demographic Effect: Vietnam > China > DPRK
  - Demographic Transition and Economic Miracle in Emerging Asia(Bloom and Williamson, 1998)



Source: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 Labor Utilization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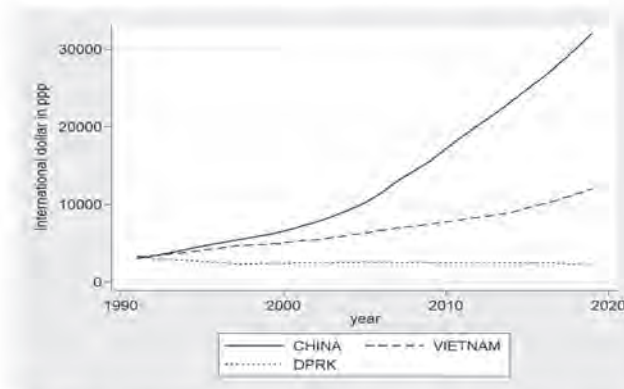
- Employment/Working Age Population(15+) (%)
  - Labor Utilization Effect? Vietnam > DPRK > China
- DPRK(UN) is more reliable than DPRK(ILO)
  - Extrapolating the time series during 1991~2019 using the results of the population census(1993, 2008) and the population survey(2014) for DPRK.



Source: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from ILO),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995, 200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6)

## Labor Productivity Effect?

- Output per Worker (GDP per Worker)
  - Labor Productivity Effect? China > Vietnam > DPRK



Note: Output per worker (GDP constant 2011 international \$ in PPP), ILO modelled estimates, NOV.2019  
Source: ILO

##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 Growth rate of GDP pc and its components in North Korea, China and Vietnam (1992~2019)
  - Based on Choi (2016), extending the period to the year of 2019
  - Despite its positive demographic effect, North Korea showed a negative annual GDP per capita growth (-1.28%) between 1992 and 2019 due to decreases in labor participation and productivity

		China	Vietnam	North Korea
GDP per capita (GDP/POP)	[A]	8.43	5.38	-1.28
Labor Productivity (GDP/EMP)		8.54	4.67	-1.41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y (EMP/WAPOP)	[B]	-0.59	0.02	-0.18
Working-Age Population Ratio (WAPOP/POP)	[C]	0.48	0.68	0.31
Labor Utilization Effect	[B/A]	-6.97	0.45	14.33
Demographic Effect	[C/A]	5.74	12.69	-24.49

Source: Author's Calculation based on UN/World Bank/ILO

## Implication for North Korean Economy

- Ever weakening demographic effect
- Necessary to improve labor utilization and productivity for its economic growth
- In order to enhance labor utilization effect:
  - Why did North Korea experience a decline in economic participation rate from 1993 to 2014?;
  - Restructuring of inefficient formal sector;
  - Active labor shift among industries by enhancing productivity in agricultural industry; and
  - Arms reduction to secure more human resource.
- In order to enhance labor productivity effect:
  - Emphasis on "Knowledge- based economy" with Kim Jong Un coming to power;
  - Increased investment in education and R&D (Spending less in national defense and more in education); and
  - Opening its door to the world → influx of foreign capital & technology leading to spillover effect.

## Implication for the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 South Korea's labor productivity is about 20 times higher than that of North Korea
  - Labor intensive industry has its advantage i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Low labor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sector
  - Possible that due to low operating rate in manufacturing sector, labor productivity has not been properly reflected
  - Necessary to invest more in manufacturing sector for further growth of North Korean economy
  - Reasonable to consider not only the design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but also another economic cooperation approach for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

## Reference

- Bloom, David E., and Jeffrey G. Williamson.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3 (1998): 419-455.
- Cho, Dong-ho. "Analysis on Demand and Supply of Labor in North Korea", *Policy Report*, 94-33,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5).
- Choi, Ji-young. Labor Demand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Presentation of SSEM (Society for the Study of Emerging Market) Euro Conference 2019 held in University of Milano – Bicocca, Milan, Italy* (2019)
- Choi, Ji-young. The Recent Demographic Trend Based on DPRK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20.1 (2017): 7-45.
- Choi, Ji-young. "An Analysis of Demographic Structural Change in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20.2 (2016). 1-30.
- OECD,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2003.



# 발표자 Presenter



**이희영** 대구대학교 교수

Hee Young Yi Professor, Daegu University

이희영은 2007년부터 대구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질적연구방법론을 토대로 분단, 이주, 젠더/소수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TUB에서 사회학과 교육학 석사 학위와 Kassel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장 및 비판사회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인권과 젠더 정책, 그리고 21세기 탈성장론을 필두로 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Since 2007, Hee Young Yi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Daegu University.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he is doing research on division, migration, and gender/minority. She holds a master's degree in sociology and pedagogy from TUB, Germany, and a doctorate in sociology from Kassel University. Currently acting as the director of the Brave Women's Research Institute and the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Hee Young Yi is interested in human rights, gender policy, and new social values led by the theory of de-growth in the 21st century.

# Kim Jong Un Era Women's Experiences and Restructuring of the Family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Yi, Hee Young

September 8, 2020.

## 1. Feminist Perspectiv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gender relations  
in research on North Korean women**

**Analysis on discourse in Rodong Sinmun, Chosun  
Nyeoseong (Korean Woman), Chosun literature**

Reconstructing the oral history of North Korean women

→ Heated competition between gender politics and women's  
experiences

## 2. State's Naming and Recognizing of Women

### The Laws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in 2010

A recognition of women's property rights and inheritance rights

A ban on domestic violence

A male guardianship, a ban on divorce and official encouragement of childbirth

The enactment of Mother's Day in 2012 (November 16)

→ Strengthening of motherhood and legitimatization of child-rearing, providing for the family and social mobilization

## 3. Market as a Platform for Change

### Black market, general market, and commercial trade venues

Capitalistic trade and competition

Formation of material-centered value and 'individual' perspective

Culture from the outside world 'explodes'

→ Women being at the forefront of markets for two decades since the economic crisis

## 4. Family as 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Role of Women

Weakening of the rationing system of the socialist state

Survival strategy of family unit

- Experiences of 'individual family' as being the unit of survival
- The July 2002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leading to an institutionalization of the general market in 2003
- General market, consumer goods market through state-owned stores, and trade of foreign imported goods

### 1) Market Activities in Various Forms and Levels

Men's Workplace vs. Women's Labor for Livelihood

Women's market activities, except for those women from high-ranking class and military families

Providing for the family & preparing for marriage after graduating from middle school

Laboring to 'provide for the family' after being registered as a 'dependent' of husband

Women's reproductive labor & labor for livelihood

## 'Bus Business' of Upper Class Women

Upper class in the past: husband being a high-ranking official & manger of restaurant or store

Case 14 (Pyongyang, housewife) Her sister-in-law participated in a transport business with massive capital in a newly expanding market

## Ordinary Women's Market Activities

Self-sufficient food vendor,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engaged in intermediary distribution of small-scale capital-invested medicinal herbs and minerals

Case 6 (1981, provincial area, second-grade student at vocational training school)

Father, a doctor, mother, a college English teacher  
Engaged in second-handed apparel business, based on her sewing technique, and trade in cosmetics, food, and medicine

Got married in 2007, social guarantee for husband

## Women Selling Medicine in the Market

“When it comes to medicine, there are a variety of medicines, roughly 300, including over-the-counter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 **Patients were treated at our home sometimes with the injection of IV (Intravenous) medications and then cupping therapy and moxibustion (···)** My father was a doctor, and he taught me everything. So I did it. I did it for about 10 years, trading in medicine.”

(Case 6 oral transcript, 2019/ 1)

## *Jangmadang* without Men

**Trading is an unofficial activity, male adults are banned from participating in the market**

“Men are not usually engaged in trade. In North Korea. In rare occasions, men came from the inland, from the Southern part of North Korea, they are called honorary soldiers (wounded veterans), men with crutches, they sit down and sell seafood products, dried seaweed, sand lance, and something like that. Other than that, men do not do trading. In North Korea, only women do that.”

(Case 6 oral transcript, 2019/37)

## Single Woman Trader of the New Generation

Born in the mid-1990s, South Pyongan Province, the oldest daughter from a working-class household

Father failed in trading. Started trading at the age of 18 after graduating from middle school in 2010.

Made a huge fortune by selling bowls, vinyl tents, clothes, broken pieces of iron bowls, steel bars. Hired two men in their 20-30s as security guard and money collector.

“Better to have a husband as an officer instead of studying in college and becoming an officer myself. “

“Better to nurture a boyfriend to become an officer instead of being married to an officer. “

“Once you get married, there should be a person doing the housework or making food. “

“Thought about making mother-in-law behave well before getting married.” (case 12)

## 2) ‘Helping a Husband Succeed’– Survival Strategy of the Family

*Market economy activities excluded from state protection*

*Damage sustained from the process of various illegal activities (bribery, fraud, threat, violence, etc.)*

*Moving up the ladder into officialdom for a husband (law enforcement institutions, etc.)*

*Being able to access major information and intervene in interests*

*Acting as a ‘wind-shield’ to women’s market activities  
(Protection)*

### 3) Change of a Sense of Identity

"As women are more socially active, we tend to have **a bigger voice**. It's better than in the past. It was different in my mother's generation when women were blindly obedient. Now women are the ones who have **a final say**."

(Case 8 oral transcript, 2019/12)

### 4) Fierce Competition over Leadership and Changes in Relations

**Women with material foundation through market activities**

**Power that enables the possibility of planning a different life – autonomy**

**Separation, divorce, common-law marriage being observed**

A demand toward men for a division of housework (case 12)

'Marriage market' that favors women with a lot of money and trading acumen

⇔ Identity that still introduces herself as 'being unemployed' & 'being a dependent' (*buyang*)



## 5) Contradiction and Disparity in Gender Politics

**Common practice of socially recognizing women (2010, the Laws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2012, Mother's Day),**

**Promotion of the new image of a married couple**

- ⇔ Focus on fertility, effectively restricting divorce
- ⇔ Praising 'revolutionary good-wives/wise-mothers,' thus emphasizing social maternity and commitment
- ⇔ The persistence of a culture that takes for granted domestic violence toward women

## 5. Weakening of the Grand Socialist Family and Restructuring of the Family

**Woman as an individual vs. woman as a member of the family**

Research participants in their 20-30s: lived in North Korea in their 10-20s

**The older generations:**

- Arranged marriage with a consideration for class background (*todae*) and social status, Preferred party worker or law enforcement worker
- 'Swallow with swallow, magpie with magpie' – marriage of the same status
- Woman prepares "5 closets and 6 appliances" for marriage and man prepares house

## 1) Changing Marriage Trends

### Upper Class in Pyongyang and Other Big Cities

Used marriage-specialized restaurant or facilities ⇔ Contribution of relatives

Both men and women's families take up proper share of marriage cost

The top 20-30% class: arranged marriage through family connections

A majority of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generally marry out of love

The year 2000 (College-educated women who served in the military can secure the position of officer): increasing age eligibility for marriage

## 2) Commoner's (Lower and Middle Class) Practical Marriage and Conflicts

### Exchange of economic & political power

**Woman's money and ability of maintaining a livelihood**

**Man who either has money or has a job that could potentially generate money in the future**

(Military officer, security officer, Ministry of State Security officer, etc., man with 'uniform' & doctor who anticipates earning extra money)

Man with a bright potential: military-college-dispatch path to high-ranking position

### 3) Relaxation of Marriage Institution

#### Young Women Evading Marriage

“When you look at women of our age, they are not inclined to have a job. They just go out into society and make a living through trade, and do not even think about getting married. It is because living is hard as it is. When women get married, (...) my friends got married, have children, they preened themselves when they were single. But they lost too much weight after marriage. Their mothers said, ‘Hey, if you are going to live that hard after marriage, then you’d better off not to get married, live alone, and do trading, making a living on your own.’ Women now do not really think about getting married, most of them.” (Case 5 oral transcript, 2019)

### 4) Weakening of Control of the State Patriarchy

#### Not enough state recognition of marriage (weakening of rationing system)

Divorce is difficult in reality → An increase of pre-marital co-habitation for a certain period

A phenomenon of deferring marriage registration until child-birth

State rationing system through male head of the household

→ Formation of hierarchy within the family

→ Weakening of mechanism of justifying gendered roles

## 5) An Increase of Intermarriages

**Organizing of workplace based on *Songbun* (sociopolitical background)-party member system & inter-familial or political marriage**

**Policy of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economic ability and social phenomenon of favoring such an ability**

An increase of intermarriage between families who defected or returned to North Korea

Economic power + social status set by the relatives abroad

Increased instances of women from hostile lower class (bad *songbun*) with economic power earned through market activities getting married to men with good *todae* (class background)

## 6. Political Implications: Gender-based Dual Labor System

1. Gender-based dual labor structure of **men=official labor, women=unofficial labor**
2. Foundation of new dual labor structure with **family being the economic community and women** underpinning the structure
3. **A chasm in institutions** amidst an emphasis on maternity discourse and family-reformation (deferring and evading marriage, divorce, etc.)
4. **'Individualized' women** with expectation for material gains, happiness, and a future

**Thank You**



잉그리트 미테 기센대학교 교수, 독일

Ingrid MIETHE Professor,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Germany

잉그리트 미테 박사는 독일 기센 대학교의 일반 교육학과 교수로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회학 및 문화학부 학과장을 역임해 왔다. 1999년 자유 베를린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주요 연구 분야는 교육의 역사 및 역사와 사회 불평등 간의 연관 관계이다.

기센 대학교 재직 전 미테 박사는 그라이프스발트 대학교 교육학 연구소에서 연구원(1999-2002)으로 재직하였고, 신교 다름슈타트 응용과학 대학교의 일반교육학과 교수(2002-2010)를 역임했다.

미테 박사의 공저서로는 "교육 아이디어의 세계화. 동독, 베트남, 쿠바 그리고 모잠비크의 노동자 학부. 베를린 / 보스톤 : 드 그라이터 (2002) (Globalization of an Educational Idea. Workers' Faculties in Eastern Germany, Vietnam, Cuba and Mozambique (2020) Berlin/ Boston: de Gryter)"가 있다

Ingrid Miethe is a Professor of General Education at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Germany. Dr. Miethe is currently the Dean of the Faculty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since 2017. She received her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at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1999). Her main areas of interests are history of education and connections between education and social inequality.

Before joining the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she was a Research Assistant at the Institute for Education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Greifswald (1999 - 2002) and Professor of General Pedagogy at Protestan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Darmstadt (2002 -2010).

She is the co-author of Globalization of an Educational Idea. Workers' Faculties in Eastern Germany, Vietnam, Cuba and Mozambique (2020) Berlin/ Boston: de Gryter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Kyoochul KIM** Associate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김규철은 2016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북방경제실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북한의 거시 경제, 북한의 무역 및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후생이며, 북한의 경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수행한 연구들은 "북한은 경제적 정상국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2019)",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2018)", "북한의 석유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8)", "북한 경제의 구조적 단절에 관한 연구: 분야별 데이터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2017)",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 새로운 데이터를 통한 접근 (2017)", "북·중 무연탄 무역 연구: 무연탄가격을 중심으로 (2017)"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Kyoochul Kim is an Associate Fellow a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He joined KDI in 2016. His research interests are North Korean economy, and major research topics include the North Korea's macro-economy, North Korea's trade and the welfare and income of North Korean people. His recent research publications are "How far is North Korea from an economic normal state? (2019)", "Measure the quality of North Korea's trade (2018)", "Analysis of North Korea's oil trade and policy implication (2018)", "Welfare of North Korean estimated by Satellite night-time light (2017)", "Structural break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7)", "North Korea's anthracite export: focusing on the price (2017)". He obtained his BA and MA degree in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degree in Economics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토론자 Discussant



**김수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Soojung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KIET)

2017년 2월 발전경제학 전공으로 고려대 경제학과 일반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학위논문명: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 환경, 생활만족도, 경제체제전환국의 발전성과를 중심으로)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고려대 BK21플러스 한국경제사업단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경제발전론 등의 교과목을 강의하고 경제적 측면의 체제전환(economic transition)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북한 경제 및 산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주제는 북한의 세부 산업별 현황 분석, 남북한 산업협력방안 연구,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녹색 및 에너지 전환입니다.

Soojung Kim is Associate Research Fellow of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and is conducting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industry. In 2017, she is granted a Ph. D. in Economics from the Korea University, majoring in Development Economics (Dissertation title: Three Essay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ing on the Environment, Life Satisf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Economic-transition Countries). Research topics of interest are inter-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and North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 energy transition.







# Session 6-4

## 최근 북한변화에 따른 경제, 개발 협력방안 Recent Changes in Econom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주관기관  
Organized By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좌장  
Moderator

마이클 세스 제임스 매디슨대학교 교수, 미국  
Michael SETH Professor, James Madison University, USA

발표자  
Presenters

케빈 그레이 서섹스대학교 교수, 영국  
Kevin GRAY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Sussex, UK

박 기 하버드대학교 교수, 미국  
Kee B. PARK Lecturer, Harvard Medical School, USA

임소진 센트럴랑카셔대학교 교수, 영국  
Sojin LIM Associate Professor, Co-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토론자  
Discussants

루디거 프랭크 비엔나대학교 교수, 오스트리아  
Rüdiger FRANK Professor,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오웬 밀러 소아스, 런던대학교 교수, 영국  
Owen MILLER Assistant Professor, SOAS, University of London, UK

김동진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아일랜드 연구재단 마리 스클로도브스카-퀴리 펠로우  
Dong-Jin KIM IRC Marie Curie Fellow,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후안 블릭-파리 EU 개발협력청 북한팀 담당  
Juan BLICK-PARIS Desk Officer DPRK, DG DEVCO, European Commission

크리스토퍼 그린 레이던대학교 교수, 네덜란드  
Christopher GREEN Professor, Leiden University, Netherlands

니키 올스포드 센트럴랑카셔대학교 교수, 영국  
Niki ALSFORD Professor,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6-4)

## 최근 북한변화에 따른 경제, 개발 협력 방안

현재 북한은 과거와 달리 북한 내부의 시장화, 사유화 등이 부분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북한사회와 체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본 세미나는 최근 북한변화에 따른 경제,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Recent Changes in Econom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s internal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are partially progressing, and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re also taking place.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basic research situation to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system. This seminar is intend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make up new plans for economic and development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좌장 Moderator



**마이클 세스** 제임스 매디슨대학교 교수, 미국

**Michael SETH** Professor, James Madison University, USA

마이클 세스는 제임스 매디슨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세계 역사와 아시아 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경제개발, 북한의 정치/사회적 발전 및 한국 역사를 전세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에 연구적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교육열: 한국의 사회, 정치 및 학구열>(2002), <북한: 역사>(2018), <한국 역사 요약> (3판, 2020), <한국: 요약 소개>(2020) 등을 저술했고 <라우틀리지 현대 한국사 핸드북>(2016)을 편집했다.

Michael J Seth is a professor of History at James Madison University where he teaches world and Asian histor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both education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evolution of North Korea, as well as placing Korean history in a global context. He is the author of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Learning in South Korea (2002); North Korea: A History (2018), A Concise History of Korea (Third Edition, 2020), Korea: A Very Short Introduction (2020), and is the editor of the Routledge Handbook of Modern Korean History (2016).

# 발표자 Presenter



**케빈 그레이** 서섹스대학교 교수, 영국

**Kevin GRAY**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Sussex, UK

케빈 그레이는 서섹스 대학 글로벌학부의 국제관계 교수다. 북한의 정치경제, 더 넓게는 동아시아 개발이 그의 전문 분야다. 이종운과 공저한 <개발의 지정학>(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간 예정)을 비롯해 <한국 노동자와 신자유주의 세계화>(Routledge, 2008), <동아시아의 노동과 발전: 사회적 요소와 수동적 혁명>(Routledge, 2015)을 저술하였고, <신흥 강국들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Routledge, 2018)와 <글로벌 위기 시대의 피플 파워: 반란, 저항, 해방>(Routledge, 2013)을 Barry Gills와, <신흥 강국들과 남남협력>(Routledge, 2018)을 Craig Murphy와 공동 편집했다.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ew Left Review, Pacific Review, New Political Economy, Third World Quarterly 등 다수의 저널에서 그의 기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Kevin Gray is a Profess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School of Global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His research expertise relates to the political economy of North Korea and East Asian development more broadly. He is author (with Jong-Woon Lee) of North Korea and the Geopolitics of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as well as Korean Workers and Neoliberal Globalisation (Routledge, 2008), Labour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Social Forces and Passive Revolution (Routledge, 2015). He is also editor of (with Barry Gills) Rising Powers and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Routledge, 2018); (with Barry Gills) People Power in an Era of Global Crisis: Rebellion, Resistance, and Liberation (Routledge, 2013); (with Craig Murphy) Rising Powers and South-South Cooperation (Routledge, 2018). His work has also appeared i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New Left Review, Pacific Review, New Political Economy, and Third World Quarterly.

---

#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n North Korea and China.

Kevin Gray  
University of Sussex

## SOE management in North Korea

- Taean Work System and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 7.1 Reforms and the 'Earned Income' system.
- Kim Jong Un and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System (SERMS)
  - December 2011, announcement of Our Style Economic Management System
  - September 2012, launch of reforms on a pilot basis.
  - May 2014, announcement of the SERMS (the May 30<sup>th</sup> speech)
  - 2014-2015, reform of Enterprise Law, Finance Law, Trade Law, Accounting Law, People's Economy Law, Commercial Banking Law.
  - April 2019 revision of constitution to replace Taean Work System with SERMS.



## Key Features of the SERMS

- 1) Reduction in scope of Central Index, establishment of the Enterprise Index.
- 2) Increased flexibility in meeting targets.
- 3) Shift from Earned Income tax on net income (minus costs of production, except wages) towards a 'state payment' tax on gross income.
- 4) Right to set prices for goods produced under Enterprise Index, and trading in cash permitted.
- 5) Increased financial management rights, including right to use citizens' 'idle funds.'

## China's SOE reforms in the 1980s

- 1) Introduction of the dual track price system.
- 2) greater decision making rights, e.g. purchasing of inputs, what to produce, quantity etc.
- 3) retention of share of profits
- 4) labour market reforms
- 5) no privatisation, but emergence of new sector of *getihu*.
- 6) emergence of Town and Village Enterprises.

## The China-North Korea comparison

- Decentralisation of decision making rights. Hybrid property rights. Expanded role of market to strengthen state sector.
- But:
  - Post-hoc character of North Korean reform.
  - Recognition of private capital in NK, no mention of property rights.
  - Lack of labour reform.
  - Sectoral limitations of NK reform (strategic vs. non-strategic, centre vs. local).
  - Exclusion of the 'privileged' economy (i.e. Party/military controlled enterprises) from SERMS.
  - Problem of quasi-taxes (revolutionary funds/loyalty funds) and their impact on incentives.

## Policy Versus Economic Structure

- China's "success" in SOE reforms?
- Sachs and Woo's emphasis on structure rather than the 'right policies'.
-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China & North Korea.
- Sectoral interests and reform policies.
- Parallel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s northeastern rustbelt.

# 발표자 Presenter



**박 기** 하버드대학교 교수, 미국

**Kee B. PARK** Lecturer, Harvard Medical School, USA

박기 교수는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프로그램의 디렉터이며 하버드 의과대학 북한정책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있다. 2007년 이후 2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2019년 11월에 북한을 다녀왔다. 하버드 의대 교수진으로서 그의 학문적 관심사는 북한의 공중보건과 국제기구의 역할, 인도주의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제 안보, 보건, 인권과 보건 외교의 관계 등이다. 전미북한위원회와 재미교포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네바 소재 세계보건기구에서 외과 전문 자문을 맡고 있다. 러트거스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공중보건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Dr. Park is the Director of North Korea Program at the 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Lead for the Korea Policy Project at Harvard Medical School. Since 2007, he has made 20 visits to DPRK, most recently in November, 2019.

He is a member of the faculty at Harvard Medical School where his academic interests include DPRK public health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actors influencing humanitarian ai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tional security, health, and human rights and health diplomacy.

He is a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and the Council of Korean Americans. He also serves as an Expert Adviser for Surgical Care 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Geneva.

He received his MD from Rutgers Medical School MPH from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He is a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Neurological Surgery.

---

#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ealth Sector

Kee B. Park, MD, MPH  
Director, Korea Health Policy Project  
kee\_park@mail.harvard.edu  
Twitter: @kee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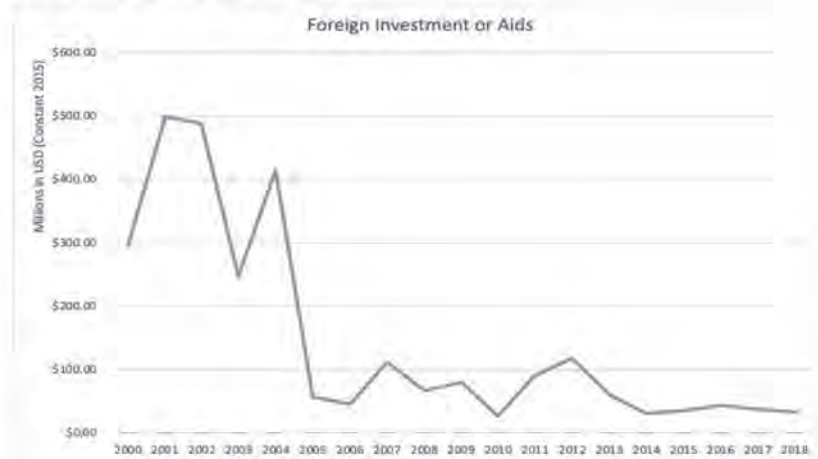
## Key Messages

- Health has always been and continues to be a priority for the DPRK.
- International Sanctions have deadly impact on the vulnerable population of the DPRK
- DPRK accepts international health assistance but is not dependent on it
- Measures to prevent COVID-19 outbreak may have wider impact on health than the disease itself
- Health assistance can lead to diplomatic opportunities





## DPRK accepts international health assistance but is not dependent on it



Source: United Nations Financial Tracking Service (2000-2018)



## Measures to prevent COVID-19 outbreak may have wider impact on health than the disease itself

### COVID-19 Outbreak

- Active suppression and mitigation.
- “Best Case Scenario” – 7,350 deaths
- “Worst Case Scenario” – 158,000 deaths

### Sustained isolation mode

- Border restrictions
- Degradation of health system
  - 93,000 excess deaths/yr possible
- Constriction of external assistance

Source: Imperial-College-COVID19-Global-unmitigated-mitigated-suppression-scenarios



Early Estimates of the Indirect Effects of the Coronavirus Pandemic on Maternal and Child Mortality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Lancet

## Health as a Bridge to Peace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s essential for global health security
- DPRK will sustain heavy economic and social damages
- Finding practical and innovative ways to support the DPRK's response to the pandemic is urgently needed
- International support will be high-value and may open diplomatic paths to sustainable peace.



# 발표자 Presenter



**임소진** 센트럴랑카셔대학교 교수, 영국

**Sojin LIM** Associate Professor, Internationa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임소진 박사는 센트럴 란카셔 대학교에서 부교수, 북한학 석사 과정과 아시아태평양학 석사 과정의 담당 교수, 국제한국학연구소(IKSU) 공동 소장을 맡고 있다. 라우틀리지 출판사의 한국 연구 시리즈 공동 편집자이며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의 연구원이기도 하다. 센트럴 란카셔 대학교 재직 전에는 원조기구들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맨체스터 대학교 개발정책경영연구소(IDPM)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북한, 남한 및 태평양 군도를 사례로 하는 개발학, 지역학, 공공정책학 및 정치경제학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북한과 한반도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BBC 등 매체와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임소진 박사는 현재 라우틀리지 현대 한국 핸드북의 공동 편집자로 작업하고 있다.

Dr Sojin Lim is a Senior Lecturer (Associate Professor), Course Leader for both MA North Korean Studies and MA Asia Pacific Studies, and Co-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KSU) at th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She works as co-Editor of the 'Routledge Research on Korea' series and is also Research Fellow at the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Prior to joining UCLan, she worked for aid agencies as senior research fellow with hands-on field experiences. She obtained both BA and MA degre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outh Korea, and PhD degree from the Institute for Development Policy and Management (IDPM)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UK. Her research interests lie at development studies, area studies, public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with case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Pacific islands. She frequently discusses changes in North Korea and in the Korea Peninsula in media interviews, such as BBC. Currently, Lim is co-editing Routledge Handbook of Contemporary South Korea.



2020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KGFP)

7-9 September 2020 / Session 6-4

**The Paradox of Unsustainability  
in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North Korean Case  
in the Context of Accountability  
and Sanctioned Fragile States**

Dr Sojin Lim, PhD  
Senior Lecturer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Theoretical Account**

## Underlying approach to the research

- Sanctions in North Korea do not work.
- Sanctions in North Korea do more harms, especially for people.
- We need a new way when approaching North Korea in non-traditional security context.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destruction of North  
Korean agriculture: We need  
to rethink UN sanctions”

**North Korea earned millions in illicit funds last year, UN experts say**

Latest report from UN's Panel of Experts finds Pyongyang continues to find ways to circumvent crushing sanctions

**10.4 million North Koreans in “urgent”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UN**

New UN report issues warning on lack of nutrition, healthcare, clean water in DP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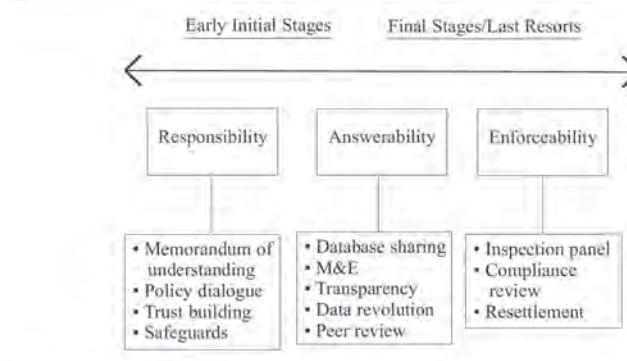


## What is SDGs?

- Successor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 - 2015)
- **“Leave no one behind”**
- Paradox of unsustainability of the SDGs:  
it has left people in North Korea behind, especially due to the 2017 sanctions that has been extended to civilians  
– compared to previous ‘smart sanctions’ on commodities,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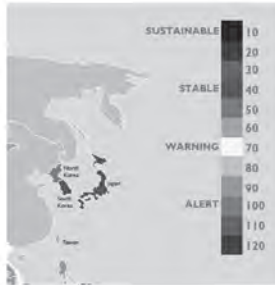


## What is Accountability in Development Studies Discipline?



Note: M&E, monitoring and evaluation.

Source: Kim, Taekyoon and Sojin Lim. 2017.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A Conceptual Analysi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the Context of South-South Cooperation." *Global Governance* 23 (2): 193-203.



## What is Fragile States?

### COHESION

#### INDICATORS



- C1: Security Apparatus
- C2: Factionalized Elites
- C3: Group Grievance

### ECONOMIC

#### INDICATORS



- E1: Economic Decline
- E2: Uneven Economic Development
- E3: Human Flight and Brain Drain

### POLITICAL

####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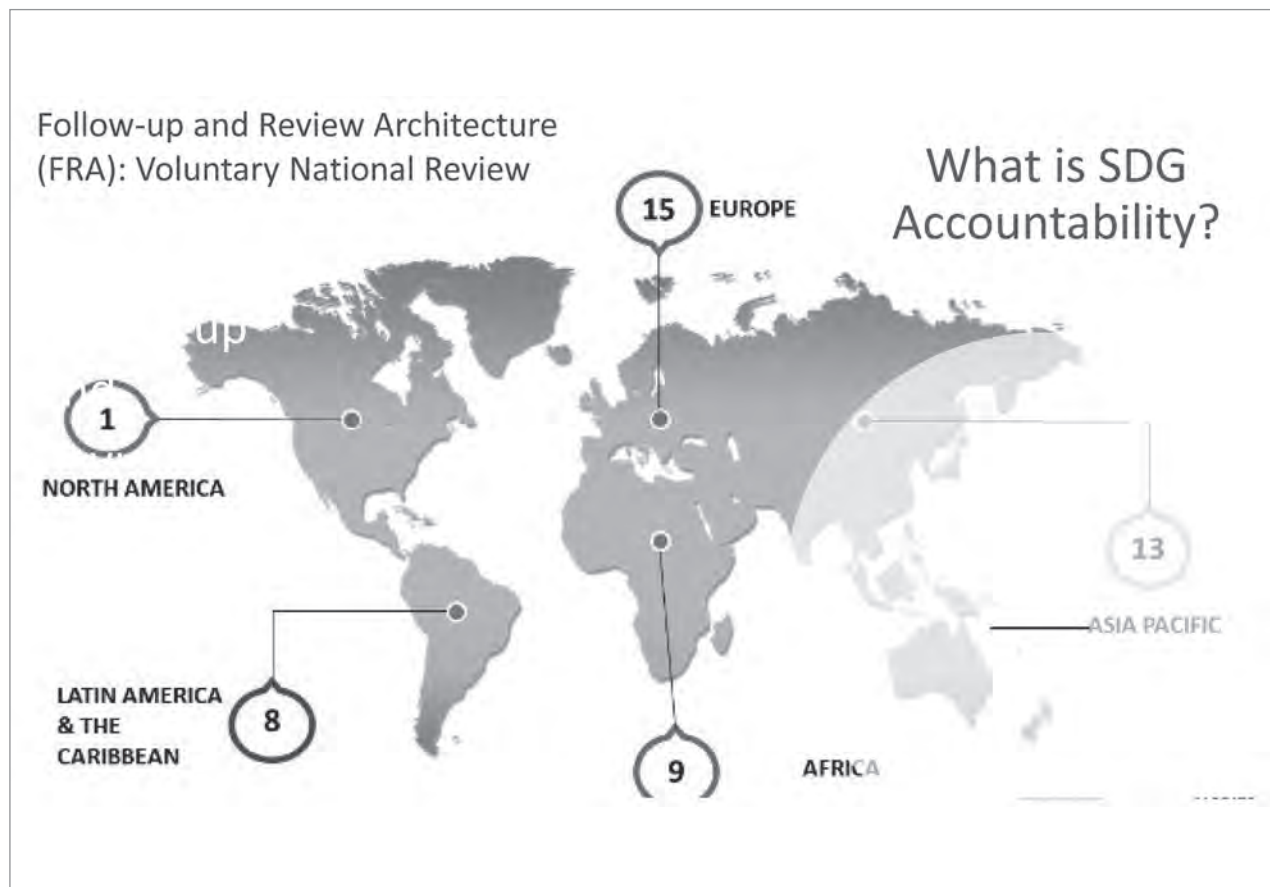
- P1: State Legitimacy
- P2: Public Services
- P3: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 SOCIAL

#### AND CROSS-CUTTING INDICATORS



- S1: Demographic Pressures
- S2: Refugees and IDPs
- X1: External Intervention



## What Theory Tells Us: Analytical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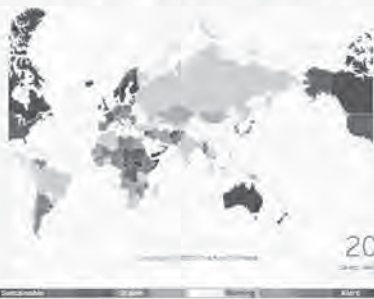
- Constructive Accountability vs Punitive Accountability
- Incentive mechanism vs Sanctions
- Different approach to fragile states
- Tailored approach to fragile states
- Transitional approach to fragile states

## Case of North Korea

11

## Is North Korea a fragile state?

Fragility in the World 2020



- Various fragile indices

## Is North Korea a fragile 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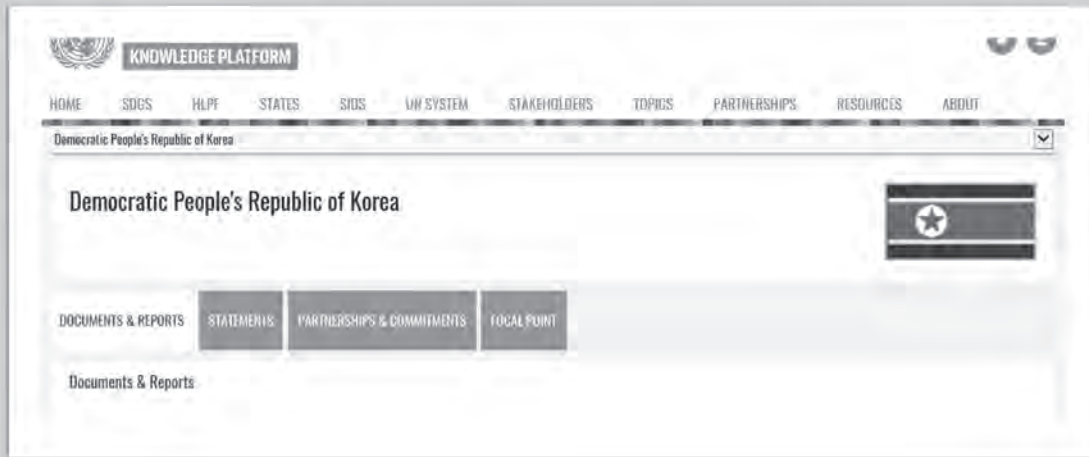
- Its resilience level in the case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environmentally vulnerable and political fragile situations



## Is North Korea a fragile state?

- Its status as a country under sanctions, including food security and health (i.e., COVID-19 effect) for 'people'
  - sanctions' original intention vs. their current 'real' impact on 'people'

# North Korea & SDGs Accountability





<b>UNSF Four Strategic Priorities</b>	<b>Relevant SDGs</b>
Food and Nutrition Security	SDG 2: Zero hunger SDG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Social Development Services	SDG 3: Good health and well-being SDG 4: Quality education SDG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SDG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SDG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SDG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DG 13: Climate action SDG 15: Life on land
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	SDG goal is not specified in the UNSF

Source: Author's own compilation based on DPRK and UN Office of the Resident Coordinator 2018

## Conclusion

- From traditional security framework to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 Accept the reality: nuclear state
- Think people first: human rights
- Gradual change in economy and society: more access to information



- Can we still apply SDG discourse to North Korea even though it is under sanctions?  
Yes, in the context of fragile states by addressing non-traditional security sectors
- In what context and how this could be done in interweaving SDG accountability and state fragility?  
By using transitional constructive accountability mechanism



- Responsibility: engagement via SDG framework
  - Snapback process
  - Leg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accountability - culture of accountability
- Answerability: transitional accountability  
via Follow-up Review Architecture voluntary national review  
& non-traditional security sectoral approach
  - Third party inspection: shadow report
  - Incentive mechanism: financial support & capacity building
- Enforceability: constructive
  - Review current sanctions regime



루디거 프랭크 비엔나대학교 교수, 오스트리아

Rüdiger FRANK Professor,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루디거 프랭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동아시아 경제 및 사회 과목 교수이며 동아시아학과장이다. 사회주의 동독에서 출생하고 성장했고 5년간 소비에트연방에 거주했다. 21세에 독일 통일을 직접 경험했으며, 1991/1992년 평양 김일성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어학연수로 보냈다. 한국학, 국제정치학 및 경제학 학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과 경험에 기초해, 1950년대 북한 경제사, 1990년대 가뭄 이후 사상과 경제 개혁의 연관성, 통일의 정치 경제 등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저술했다. 2011년 이래로 세계경제포럼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2년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꼽은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5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의 트위터 주소는 @GTDRP.

Rüdiger Frank is Professor of East Asian Economy and Society and Head of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He was born and raised in socialist East Germany and lived for five years in the Soviet Union, experienced German Unification first hand as a 21-year-old, and spent one semester as a language student at Kim-Il-Sung University in Pyongyang in 1991/1992. He holds university degrees in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conomics. On the basis of these skills and experiences, he has written extensively on various topics related to North Korea, including its economic history during the 1950s, the connections between ideology and economic reform after the 1990s famine, tourism and trad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unification.

He has been working with the World Economic Forum since 2011 and was named one of the 50 most influential German economists by th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in 2012. He tweets as @GTDRP.

# 토론자 Discussant



오웬 밀러 소아스, 런던대학교 교수, 영국

Owen MILLER Assistant Professor, SOAS, University of London, UK

오웬 밀러 박사는 SOAS에서 학부 과정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였으며 이후 한국에 살면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였다. 2001년 SOAS로 복학한 후 19세기 서울의 상인 조합에 대한 연구로 한국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SOAS에서 한국학 강사(조교수)로 강의하기 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로빈슨 칼리지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현재의 연구 관심사는 19세기와 20세기 한국 사회경제사, 한국의 민족주의 및 마르크스주의 역사기술, 및 북한 경제사이다.

Dr Owen Miller initially studied East Asian history at SOAS as an undergraduate and subsequently lived in South Korea, where he studied Korean language at Yonsei University. He returned to SOAS in 2001 to study for an MA and then a PhD in Korean history, focusing on merchant guilds in late nineteenth century Seoul. Prior to joining SOAS as a lecturer (Assistant Professor) in Korean Studies, Owen worked as a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at Robinson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19th and 20th century Korea; Korean nationalist and Marxist historiographies; and the economic history of North Korea.

# 토론자 Discussant



**김동진**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아일랜드 연구재단 마리 스클로도브스카-퀴리 펠로우  
**Dong-Jin KIM** IRC Marie Curie Fellow,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김동진 박사는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아일랜드 연구재단 마리 스클로도브스카-퀴리 펠로우이며 한반도 평화구축, 화해,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및 아일랜드와 한반도 등 분쟁 경험 국가들의 평화 프로세스 비교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의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축과 시민사회>(Palgrave Macmillan, 2019), <북아일랜드 시민사회와 비폭력 정치행동>(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Ireland, Routledge, 2020, Iain Atack과 공저),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북아일랜드와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여성>(Asia Europe Journal, 2019), <평화 프로세스의 교훈 공유: 북아일랜드와 한국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비교 사례 연구>(Social Sciences, 2018), <한반도 시민사회의 평화구축 역할> (International Peacekeeping, 2017) 및 <적에 대한 원조: 한반도 발전과 평화구축 연계>(Pacific Review, 2016)가 있다.

Dr Dong Jin Kim is Irish Research Council and Marie Skłodowska-Curie Fellow at Trinity College Dublin. His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area of peacebuilding, reconciliatio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mparative studies of peace processes in conflict-affected countries such as Korea and Ireland. He is author of *The Korean Peace Process and Civil Society: Towards Strategic Peacebuilding* (Palgrave Macmillan, 2019) and co-editor of a forthcoming book, *Reconciling Divided States: Peace Processes in Ireland and Korea* (Routledge, 2021). His recent articles and book chapters include 'Peacebuilding and Korean Civil Society'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2020, in print); 'Civil Society and Non-Violent Political Action in Northern Irel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Ireland, Routledge, 2020, co-authored with Iain Atack); 'Beyond identity lines: women building peace in Northern Ireland and the Korean peninsula' (Asia Europe Journal, 2019); 'Sharing Lessons between Peace Processes: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Northern Ireland and Korean Peace Processes' (Social Sciences, 2018); 'Building Relationships Across the Boundaries: The Peacebuilding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Peacekeeping, 2017); and 'Aid to the Enemy: Linking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Pacific Review, 2016).

# 토론자 Discussant



후안 블릭-파리 EU 개발협력청 북한팀 담당

Juan BLICK-PARIS Desk Officer DPRK, DG DEVCO, European Commission

후안 블릭은 유럽위원회의 국제협력개발총국에서 북한과의 협력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근무하기 전에는 대학 졸업 후 다양한 단기 업무를 수행하였다. 영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역사를 전공했으며 정치사상과 제국주의를 주로 공부했다.

Juan Blick works at the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t the European Commission, where he manages the cooperation portfolio with the DPRK. Prior to this, he held short-term positions after finishing university. He went to university in the UK, where he studied history, with a focus on political thought and imperialism.

# 토론자 Discussant



**니키 올스포드** 센트럴랑카셔대학교, 영국

**Niki ALSFORD** Professor,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니키 올스포드는 센트럴랑카셔대학의 교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학을 강의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책임자, 한국학 국제연구소와 타이완 지역학 북부 연구소 공동 소장 및 오스트로네시아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런던대학교 SOAS의 타이완 지역학 센터 및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의 연구원이기도 하다. SOAS에서 근대 동아시아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역사 인류학자로서 주로 민족역사 비교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중 북한의 사례로 본 발달 인류학과 태평양 기후 인류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2017년 라우틀리지 출판사에서 발행된 <타이완의 근대화: 1895년 정신과 일본으로의 타이완 이양>를 저술하였으며, Brill 출판사의 타이완 시리즈와 라우틀리지 출판사의 한국 시리즈를 편집하였다.

Niki J.P. Alford is a Professor in Asia Pacific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He is the Head of Asia Pacific Institutes; being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sia Pacific; Co-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nd the Northern Institute of Taiwan Studies; and Chair of the Centre for Austronesian Studies. He is also Research Associate at the Centre of Taiwan Studies at SOAS, University of London and Research Fellow at the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He received his PhD in Modern East Asian History from SOAS. As a historical anthropologist his research focuses on comparative ethno-histories. Chief among these is an engagement with developmental anthropology in the case of North Korea and climate anthropology across the Pacific. He is author of *Transitions to Modernity in Taiwan: The Spirit of 1895* and *the Cession of Formosa to Japan*, published by Routledge in 2017. He is book series editor for the Taiwan series at BRILL and the Korean series at Routledge.







# Session 7

## 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진단, 북한 미래 예측 자유토론 North Korea's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Culture Diagnosis (Round Table: Free discussion)

주관기관  
Organized By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좌장  
Moderator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Sun Song PARK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패널  
Panelists

표도르 테르티스키 국민대학교 교수  
Fyodor TERTITSKIY Senior Researcher, Kookmin University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일본  
Junya NISHINO Professor, Keio University, Japan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Gyubin CHOI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한시안둥 중국정법대학교 교수  
Xiandong HAN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7)

## 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진단, 북한 미래 예측 자유토론

한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역사에 대한 이해와 북한과의 협력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폭넓은 토의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 연구자들의 북한 역사에 대한 토의를 중심으로 현재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진단하고 향후 북한 사회의 미래상을 예측한다. 해외 북한연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한다.

## North Korea's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Culture Diagnosis (Round Table: Free discussion)

In order to promote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rth Korean history and discuss ways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Also,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North Korean history by overseas researchers, it diagnoses the cur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North Korea and predicts the future picture of North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This Seminar would adopt a round table format in order to conduct free discussions by North Korean researchers overseas.

# 좌장 Moderator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Sun Song PARK**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박순성은 1997년 9월부터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에 재직 중이며,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협력, 남북한 통일정책을 주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낭테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현 통일연구원)에서 4년 간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을 역임하였다.

PARK Sun Song is a professor at the Dongguk University – Seoul since September 1997. His major fields of research and teaching are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unification policies of two Koreas. He gradua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btained a Ph.D. from Paris Nanterre University in economics. He had been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from 1993 to 1997. He was also a director of the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SPD, South Korea.

## 패널 Panelist



표도르 테르티스키 국민대학교 교수

Fyodor TERTITSKIY Senior Researcher, Kookmin University

1988년 모스크바에서 출생한 표도르 테르티스키는 러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인문학 학사 학위를, 북한대학원대학교과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러시아어 외에도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다른 몇몇 언어로 독해가 가능하다. 국한 사회 정치사, 특히 김일성 시대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뉴스 통신사 NK 뉴스에서 분석관으로 1년간 근무했으며, 2019년부터 국민대학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한글로 저술한 <김일성 이전의 북한>은 한국 언론의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그의 학술 기고문에 대한 기사가 수차례 한국 언론매체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김일성에 관한 전기가 영어, 한글 및 러시아어로 동시 출간된 예정이다.

Born in Moscow in 1988, Fyodor Tertitskiy obtained his BA from Russian State University for Humanities, his MA from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and Ph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part from his native Russian, he speaks fluent English and Korean and reads in several other languages. He specialises in socio-political history of North Korea, particularly of the Kim Il-sung era. For one year, he worked at a news agency NK News as an Analyst. Since 2019, he has been employed at Kookmin University as a Senior Researcher. He is the author of the Korean-language book "North Korea before Kim Il-sung", which had been acclaimed by South Korean press. Reports on his academic discoveries have several times made front page stories in major South Korean media. Currently, he is finishing his work on the biography of Kim Il-sung, which he plans to publish in English, Korean and Russian simultaneously.

- 
- \* President Moon came to power in a very uneasy time. People tend to forget, but in 2017, a possibility of a full-scale war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seemed real due to the DPRK' s constant test of strategic weaponry and bellicose rhetoric of President Trump.
  - \* A masterful diplomat, the President managed to defuse the crisis: he made it more politically valuable for Donald Trump to pursue dialog rather than war. This is arguably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 \* Other than that, the President failed to achieve anything apart from one meeting of divided families due to an extremely low amount of engagement opportunities he had.
  - \* With the sidelining of moderate right and with the main conservative party had been overtaken by radicals in 2016, the President has to work with the opposition always being ready to accuse him of high treason, Evidence shows that he is not a traitor - he is a masterful manipulator and showman and some may even call him a demagogue, but he is loyal to democracy to the Republic of Korea. Like all of us, he makes mistakes, but ultimately he is a cautious man who does what he thinks is the best for the country.



## 패널 Panelist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일본

**Junya NISHINO** Professor, Keio University, Japan

니시노 준야(Junya Nishino)박사는 도쿄 게이오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이며, 게이오대학교 현대한국학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한국 현대 정치, 동아시아 국제관계, 한일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의 일본 학자로 근무했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시거 아시아 연구센터의 방문 학자로 활동했다.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교환 학자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2011년부터 2012년). 그 전에는 일본 외무성 정보 불 석실 한국 문제 특별 분석관(2006년부터 2007년까지) 및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 정치 특별 보좌관(2002년부터 2004년)으로 재직한 바 있다. 게이오대학교에서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Dr. NISHINO, Junya is a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Faculty of Law and Politics, Keio University in Tokyo, Japan. He also serves as Director of the Center for Contemporary Korean Studies at Keio University. His research focuses on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and Japan-Korea relations.

Dr. Nishino was a Japan Scholar at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nd a Visiting Scholar at the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2012-2013. He was also an Exchange Scholar at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in 2011-2012.

Previously he served as a Special Analyst on Korean Affairs in the Intelligence and Analysis Service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2006-2007, and was a Special Assistant on Korean Politics at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in 2002-2004.

Dr. Nishino received his B.A. and M.A. from Keio University,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in South Korea.

## 패널 Panelist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Gyubin CHOI**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국제개발학 석사학위를,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남북관계,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문제, 경제적국가통치술, 관여정책,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 문제 등이다.

Gyubin Choi is a senior researche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from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in 2008 and my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University of Leeds in 2014.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agenda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He is also interested in economic statecraft, an engagement approach,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broade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 비전통안보 위기와 북한의 미래: COVID-19국면에서의 한반도 평화공존과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전망

최규빈(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sup>1</sup>

### □ 도입

-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된 이후 남북 간에는 극도의 긴장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공존 및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게 되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9월 19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남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됨에 따라 북핵협상은 교착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모멘텀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virus disease or COVID-19)의 발발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국제협력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바이러스의 대확산이 사람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바꾸는 대전환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sup>2</sup>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장기화는 국가의 안보 개념 및 정책 자원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염은 국경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인적접촉과 물적교류의 제한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19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도 중요한 외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등 대남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남북한 간의 기 합의된 내용의 이행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주목되는 점은 사람·가축 감염병, 재해재난, 기후 변화 등 비전통적안보 분야의 남북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밝힌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북한은 대외무역 및 민생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화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전통안보의제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북한의 대외환경의 변화 및 국제협력의 전망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 □ 비전통안보와 신안보 위기

#### ○ 비전통안보 담론의 부상

- 최근 기존의 전통안보 이슈에서 보건, 건강, 환경, 에너지 등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새로운 위협이 되는 영역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에 대한 관심과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냉전 시기 전통적인 국가 안보는 주권 국가의 영토 보존, 외부 위협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현대안보의 위협 요인은 군사적 요인에서 경제적 요인, 환경 및 사회 문제로 확대되면서 안보 담론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내전, 국가 실패(state failure), 환경 파괴, HIV/AIDS 등의 비전통안보의제(non-traditional security agenda)는 개별 국가에 영향을 주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안보 위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부 갈등, 질병, 빈곤, 환경오염,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현대국가의 위기는 국제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 -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detering) - 이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웰빙의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전통안보 논의는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1) 안보 대상(the object of security)은 국가 뿐 아닌

1 발표용 원고이니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Henry Kissinger,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3, 2020).

개인(individual) 혹은 집단으로서의 인간(humans collectively)이다. 2) 안보 위협(threat to security)은 국가성(statist)과 군사적 도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안보 도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만성적인 빈곤, 질병, 억압으로 부터의 안전 및 개인 일상의 공포, 갑작스러운 재난, 상해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모든 종류의 건강위협으로 부터의 인간 및 공동체 보호를 지향하는 '건강안보(health security)',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웰빙에 지대한 위기를 가져온다는 인식에 기초한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가 '신안보(emerging security)' 영역으로 부상하였다. 생산성을 갖춘 토질,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식량 안정성과 접근성이 개인 건강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간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는 사실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 ○ 비전통안보와 국제협력

- 비전통안보의제로 인한 위기는 개별국가로 한정되기보다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파급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비전통안보의제로 발생하는 위기를 개별국가의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안보 및 환경안보의 담론의 확대는 국가 중심의 전통안보가 현대 환경 위기를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과도 연결되어 있다. 냉전 후 비전통안보의 개념과 논리의 확장에서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체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유엔개발계획(<https://www.undp.org/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HDR)에서 인간 삶의 부유함의 확대는 경제적 부유(the richness of the economy)를 넘어서는 것임을 강조하고,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가지 인간안보 영역을 제시한 바 있다.
- 환경안보에 대한 논의 역시 환경이슈에 대한 국제회의와 다자합의들이 1970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통해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설립된다. 197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와 여기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이런 노력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특히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는 경제성장과 환경, 발전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함으로써 경제성장 지향성을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축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 비전통안보의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 및 다자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기초한 주권 국가들은 공통의 이해(common interest)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소극적이거나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악영향(adverse effects)이 인류 공동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01년 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를 탈퇴하고, 2019년 파리기후협정(the Paris Agreement) 탈퇴를 공식 통보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미중 간의 책임 전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초기 대응 미비 등은 건강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한계점을 다시 한 번 노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강대국의 현실정치(realpolitik)의 위상과 비전통안보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안보 및 환경안보의 담론이 강대국의 전통안보 중시 및 안보담론 독점을 견제하고 비전통안보의제에 대한 공통의 책임분담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sup>3</sup>
- 중요한 점은 한반도에서의 비전통안보의제로 인한 위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 내에서 멧돼지나 철새 등을 통해 전파되는 가축 전염병 확산 사례 등은 신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남북한 협력 방안 및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 □ 코로나19 사태와 국제협력: 연대 필요성과 자국 우선주의 사이

## ○ 코로나19: 건강위기(health emergency)를 넘어 체제위기(system crisis)로

- 최근 코로나 사태는 바이러스의 대확산이 개별국가의 위기를 넘어 초국가적인 안보위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전통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는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요구한다.
- 첫째,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감염자 발생, 대응의 문제를 드러낸 건강 위기 일 뿐 아니라 국가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협이 단순히 해당 국가의 보건과 건강 위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정치경제적 문제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4</sup> 유엔은 코로나19가 유엔 창립 이후 직면한 가장 심각한 시험(test)임을 명시하였다.<sup>5</sup>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보건위기를 넘어 사회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위기라는 것이다.<sup>6</sup> 특히 긴급 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인구 밀집도가 높으며 기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ability)이 떨어지는 저개발국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sup>7</sup>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 타격(economic crisis)을 입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의 정권 안정에 미칠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바이러스 전염병의 경우 기존의 전통안보 개념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더러 월경(越境)성 전염병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조류를 통한 전염병, 바이러스의 확산이 국경을 넘어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둘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내부 지향적 성향을 강화시킴으로 다자협력 혹은 국제협력 보다는 자국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주의가 강화, 강대국 경쟁 심화, 글로벌 국제협조 체제의 이완, 공유된 이익에 기반 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위축을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비용 지출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긴급재정 지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이나 북반구의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남반구의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원조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국제협력 전망

## ○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영향과 이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당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신속한 조정 능력과 건설적인 대응 방식은 많은 국가들로부터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2020년 8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을 밝히고<sup>8</sup> 바이러스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적, 물적, 제도적 역량은 취약한 상태로 보여진다.<sup>9</sup> 북한은 2020년 1월 21일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또한 입국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40일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봉쇄조치를 지속하고 있다.<sup>10</sup>
- 북한의 경우 진단 및 확진자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긴급 의료 서비스의 부족, 의료 인프라의 낙후를 고려 할 때 바이러스 전염병이 북한에 미칠 피해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코로나19 대확산은 국제제재와 국경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의 민생 생활 및 인권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4 Nic Cheeseman, "The Coronavirus Could Toppl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Foreign Policy, (March 31, 2020).

5 UN, "UN Launches COVID-19 Plan that Could Defeat the Virus and Build a Better World," UN News, March 31, 2020. [https://news.un.org/en/story/2020/03/1060702].

6 UNDP, COVID-19 and Human Development: Assessing the Crisis, Envisioning the Recovery, (UNDP: New York, 2020), p. 4.

7 Robert Malley and Richard Malley, "When the Pandemic Hits the Most Vulnerable," Foreign Affairs, (March 31, 2020).

8 VOA, "WHO '북한 코로나 검사 2천7백여명 전원 '음성'...진단키트 2만5천개 추가 반입'", (2020.8.28.), [https://www.voakorea.com/coronavirus/who-pyongyang-corona].

9 북한은 2020년 4월 11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방안으로 「공동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노동신문』, 2020.4.12.

10 『NK경제』, 2020.3.9.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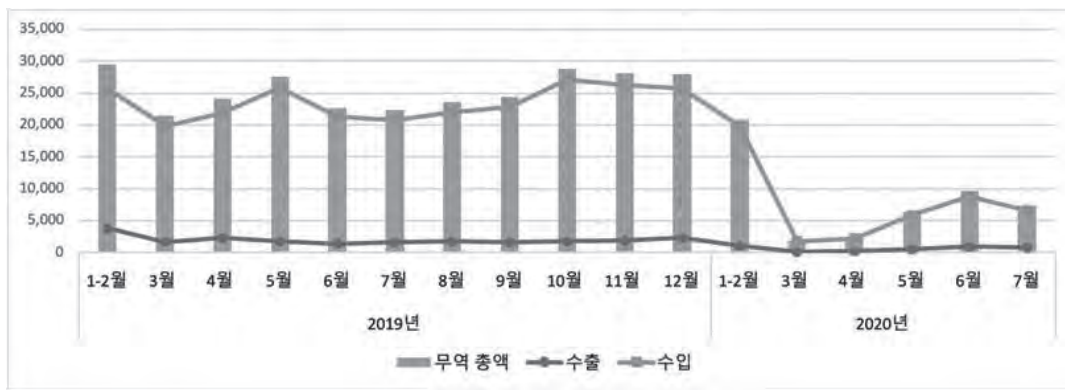
11 UN document,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43/58, 1 May 2020, p. 17.

○ 북한의 위기: 북중무역 감소로 인한 민생 경제 악화

-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내부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중 무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 할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는 양국간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되는 경제제재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북한의 경제 활동 채널은 사실상 차단되었으며 이러한 위기는 국가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sup>12</sup> 실제 북중무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2020년 1월 북중 국경 폐쇄 조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1〉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단위: 만 달러)



출처: 중국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0년 3월 들어 현저히 감소했던 북중무역이 5월과 6월 들어 반등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수입은 북한 내 경제상황 및 주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북한의 위기: 인도적 상황 악화로 인한 건강안보 위기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문제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건강권의 문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건강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2019년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합동 긴급 식량안보 평가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40%인 1,010만 주민이 식량불안정성(food insecure)을 겪고 있어 식량지급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sup>13</su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산하 5개 국제기구가 발표한 '2020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2017-2019년 북한 총인구의 영양부족 인구비율(PoU)은 47.6%로 1,22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이 비율은 조사대상국에서 아이티(4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세 미만 발육부진(stunting) 비율은 2018년 19.1%, 5세 미만 급성영양장애(wasting) 비율 4.0%로 각각 나타났다.<sup>15</sup> 이러한 결과 집계는 코로나 사태 이전 상황임으로 2020년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상태는 더욱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12 Thomas Byrne, "The Coronavirus Has Pushed North Korea's Economy to the Edge," Foreign Policy, (April 27, 2020).

13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4.22., p. 14. (한글 번역본,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2020" 기준).

14 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20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Rome: FAO, 2020).

15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UNICEF, 2019).

〈표 1〉 영양에 대한 남북한 주요 지표 비교

(단위: %)

	영양부족 (undernourishment)		급성영양장애 (wasting), 5세 미만		만성영양장애 (stunting), 5세 미만	
	2004~06	2017~19	2016	2019	2016	2019
전세계	12.5	8.8	7.7	6.9	22.9	21.3
동아시아 <sup>2</sup>	7.7	〈2.5	8.9	1.7	25.8	4.5
북한	33.9	47.6	4.0	4.0	27.9	19.1
남한	2.5	〈2.5	1.2	1.2	2.5	n.a.

출처: 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20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몽골

- 특별히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문제는 북한의 모성과 아동의 영양실조 및 사망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2017년 북한의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89명으로 2000년대 들어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의 11명에 비해 8배 높다.<sup>16</sup> 2018년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8명으로 한국의 3명에 비해서는 6배 높은 수치이다.<sup>17</sup>
- 감염성 질환 측면에서도 북한은 결핵과 말라리아에 취약하다. WHO 통계에 의하면 2018 북한의 결핵 사망률(mortality exclude HIV+TB)은 10만 명당 80명으로 사망자는 2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북한의 결핵 사망률 10만 명당 61명, 사망자 1만 5천명에 비해 악화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북한은 2018년 기준 결핵발생건수(TB incidence)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MDR/RR-TB incidence) 상위 30개 국가에 포함되었다.<sup>18</sup>
- 중요한 점은 북한의 의료체계 및 보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비단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취약계층의 영양 및 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건강권에 대한 남북한의 격차 및 특히 질병에 있어 특히 상호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 우리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래로 중단되었고,<sup>19</sup> UNICEF, WFP, WHO를 통해 이루어지던 정부 차원의 북한 모자보건사업 지원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20</sup> 북한에 대한 결핵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던 글로벌펀드(Global Fund)도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북한의 결핵 관리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국경이 통제되고 외부 반입 물자가 어려워진 만큼 북한의 식량 및 보건의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 북한의 기회?: 유엔 SDGs와 남북협력<sup>21</sup>

- 북한은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새롭게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 이행을 약속해왔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전제는 경제발전이 사회적 공정성 및 환경적 지속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북한의 참여와 이행 의지는 국제기구, 공여국, 국제 NGOs와의 다각적인 협력과 소통을 필요로 하며 국제사회의 규범 공유 및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한 수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SDGs에 대한 북한의 호응과 참여는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다변화하고 북한주민의 삶의 개선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6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UNPD,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Geneva: WHO, 2019).

17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UN IGME), Levels &amp; Trends in Child Mortality, (New York: UNICEF, 2019).

18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9 (Geneva: WHO, 2019).

19 2019년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국내산 쌀 5만 톤)을 결정하였으나 북한이 WFP과의 협상을 중단하면서 대북 식량지원은 점정 보류됨.

2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9월 북한 모자보건사업 및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WFP와 UNICEF에게 각각 450만 달러, 3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2018년으로 이월됨.

21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 pp. 93-119.

- 한국 정부에게 있어서도 SDGs는 2030년까지 중요한 의제이다. 한국 정부는 2016년 유엔에 한 차례 SDGs 이행 보고를 한 적이 있으며,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SDGs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제74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로 언급하였다. 한국은 또한 2030년 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북한의 '포스트 2015 개발의제(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관심과 SDGs 이행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남북한의 공동협력 및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와 긴밀히 연동될 수 있다. 물론 대북제재 상황의 완화나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2021년 북한이 자국의 SDGs 이행 과정을 보고하게 되는 '자발적 국제 리뷰(VNR)' 내용을 검토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과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북한은 장기화된 식량 부족 및 빈곤층과 함께 자원의 부족,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등을 극복 할 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2030년 까지 북한의 SDGs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각적인 남북, 국제 협력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소결: 요약 및 제안

-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는 핵문제 해결, 군사적 충돌 억지, 내외부 균형(balancing) 등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하지만 최근 보건, 건강, 환경, 에너지 등 비전통안보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바이러스의 대확산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나라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서 한반도의 신안보 위기에 대한 이해와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북중교역 위축 등 경제 영역에서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수용하고 긴급한 보건으로 대응 및 북한 내부 인권 증진을 위해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최근 북한 내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Tomas Ojea Quintana)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sup>22</sup>
- 한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문제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건강권의 문제만이 아닌 한반도의 인간안보 및 건강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남북한 및 국제 차원의 협력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획기적 전환과 대북제재 완화를 대비하여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새로운' 북한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수용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보편적 규범과 원칙을 통한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남북 당국과 민간 차원의 양자 교류협력을 발전시켜나감과 동시에 북한의 SDGs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고려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서보혁.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연구: 남북관계에의 적용 가능성." 『동북아연구』, 제27권 2호, (2012).
-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
- Byrne, Thomas. "The Coronavirus Has Pushed North Korea's Economy to the Edge." *Foreign Policy*, April 27, 2020.
- Cheeseman, Nic. "The Coronavirus Could Toppl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Foreign Policy*, March 31, 2020.
- FAO·IFAD·UNICEF·WFP·WHO. *2020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Rome: FAO, 2020.
- Kissinger, Henry.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3, 2020.
- Malley, Robert and Richard Malley. "When the Pandemic Hits the Most Vulnerable." *Foreign Affairs*, March 31, 2020.
- OCHA.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2 Apr 2020.
- OHCH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성명." June 9, 2020.
- UN. "UN Launches COVID-19 Plan that Could Defeat the Virus and Build a Better World," *UN News*, March 31, 2020.
- UNDP. *COVID-19 and Human Development: Assessing the Crisis, Envisioning the Recovery*, UNDP: New York: UNDP, 2020.
- UN document.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43/58. 1 May 2020.
-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UNICEF, 2019.
-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UN IGME), *Levels & Trends in Child Mortality* New York: UNICEF, 2019.
- VOA. 2020.8.28.
- WHO·UNICEF·UNFPA·World Bank Group·UNPD.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Geneva: WHO, 2019.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9* Geneva: WHO, 2019.
- 『노동신문』. 2020.4.12.
- 『NK경제』. 2020.3.9.

# 패널 Panelist



**한시앤동** 중국정법대학교 교수

**Xiandong HAN**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한시앤동 교수는 중국정법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및 한반도문제연구소(CUPL) 소장이다. 중국 인민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시앤동 교수는 《한반도 안보 구조》(중국어, 2009), 《국제 시스템의 전환: 중국과 동아시아》(중국어, 2013), 《분단국가 통일: 이론과 실천》(중국어, 2014), 《동아시아 질서 건설: 협의 및 협력》(중국어, 2014)의 저자이다.

그의 대표적인 기고문으로는 "역사에서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중국, 한국, 일본, 지역 협력"(한국어, 2012), "전환기의 동아시아 국제 시스템: 역사적 진화와 구조적 변화"(중국어, 2012), "북-미 관계 발전: 회고와 생각"(중국어, 2012), "능력 개발과 북한: 중국 체험"(한국어, 2013), "정전협정으로부터의 평화협정: 중국의 관점"(한국어, 2013),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재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영어, 2013년) 등이 있다.

Han Xian-dong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the director of Center for the Korean Peninsula Studies,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UPL). He graduated from Renmin University of China and received his PH.D. in th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He is the author of the books including the Security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 Chinese, 2009), The Transition of the International System: China and East Asia (in Chinese 2013),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Nation-States: Theory and Practice (in Chinese, 2014), The Construction of the Order of the East Asia: Consultation and Cooperation(in Chinese,2014)

His representative articles include "Can we see the future from the history?: China, South Korea, Japan and Regional Cooperation".(in Korean, 2012),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System in Transition: Historical Evolution and Structural Change" (in Chinese, 2012) and "The Development of DPRK-U.S. Relationship: Retrospect and Thoughts" (in Chinese, 2012). "Capacity Building and North Korea: The Chinese Experience" (in Korean, 2013), "Toward Peace Treaty from Armistice Agreement: Perspective of China" (in Korean, 2013) and "rethinking China-ROK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How to Substantialize it(in English,2013)" etc.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0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September, 7<sup>th</sup>(Mon) - 9<sup>th</sup>(Wed), 2020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Past, Present and the Future

PROGRAM BOOK

DAY3



# Special Message

## 유네스코와 한반도 평화

## UNESCO an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강연자  
Lecturer

페르민 에두아르 마토코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Firmin Edouard MATOKO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Priority Africa and  
External Relations of UNESCO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페르민 에두아르 마토코**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Firmin Edouard MATOKO**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Priority Africa and External Relations of UNESCO

세사레 알피에리 대학(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학위와 파리 전략·외교 연구센터의 국제관계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페르민 에두아르 마토코는 현재 유네스코 아프리카 대외협력 부문 사무총장보를 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연합(AU)과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와 함께하는 유네스코 연락사무국장 및 에티오피아 주재 유네스코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키토·바마코 유네스코 클러스터 사무소 국장과 질 높은 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부서에서 평화·인권·민주교육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더불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평화문화 국가 프로그램의 수석 프로그램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페르민 에두아르 마토코 사무총장보는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를 구사합니다.

Holder of a diploma in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University Cesare Alfieri (Florence, Italy) and a diploma in *Hautes Etudes internationales* from the Centre d'Etudes stratégiques et diplomatiques de Paris, Mr. Matoko currently is the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Priority Africa and External Relations of UNESCO

Prior, he was Director of the UNESCO Liaison Office with the African Union (AU) and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 as well as UNESCO Representative to Ethiopia. He served as Director in Quito and Bamako UNESCO Cluster Offices and as Chief of the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ection, in the Division for the Promotion of Quality education of the Education Sector as well as Senior Programme Specialist of the Culture of peace National Programmes Unit in UNESCO's Paris headquarters.

He speaks French, English, Spanish, Italian and Portuguese.



# Special Lecture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다

Speak of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강연자  
Lecturer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  
Thomas FREY Executive Director, DaVinci Institute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강연자 Lecturer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

**Thomas FREY** Executive Director, DaVinci Institute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이며 IBM에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엔지니어다. 다빈치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소장인 그는 미래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과 장차 다가올 엄청난 기회를 설명하는 능력으로 전세계에 광범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17개의 사업체를 창업하고 수 백여 업체의 성장을 도운 그가 청중들에게 소개하는 개념은 현실에 기반한 사고와 미래에 대한 명석한 예측이 결합된 내용이다. 국내외 매체에 그에 관한 수천 편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며, 청중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된 그의 강연은 매년 수 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Thomas Frey is currently Google's top-rated futurist speaker and IBM's most awardwinning engineer. As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DaVinci Institute, Thomas has built an extensive following around the world based on his ability to uncover unique insights into the future, and describe the enormous opportunities that lie ahead. Having started seventeen businesses himself and assisting on the development of hundreds more, the understanding he brings to his audiences is a rare blend of reality-based thinking coupled with a clear-headed visualization of the world to come.

Thomas has been featured in thousands of articles for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s. Each year his talks touch the live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ith his unique brand of customized presentations designed specifically around the needs of each and every audience.

---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The Future of Peace in Our Post-COVID World"

By Futurist Thomas Frey

---

**DESCRIPTION:** What is the process that people will use to rise to power in the future. And exactly what is it that will constitute power and control in the future?

We live in a transformative age, an age of change. For people all over the planet, the covid crisis has been a deeply personal experience and virtually nothing in our world will remain untouched!

It's as if the game of life was just thoroughly shaken up, and an entirely new set of rules was dumped onto the table for us to deal with.

However, during times of great chaos, comes great opportunities!

Pre-covid success stories looked vastly different than the ones we'll experience moving forward. Think of this as the end of our world as we know it and the beginning of something else.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what a peaceful planet will look like in the future.

As we enter the post-covid world, we're finding some tech moving faster, while other tech has shifted into a slower gear. In the middle of this fog of uncertainty, massive new opportunities are beginning to appear.

Suddenly the sharing economy is bad. Stadiums are bad. In-person events, airports, crowded expos, parades, professional sports, movies, and comedy clubs have all been touched by the social distancing wand of disapproval.

At the same time, certain technologies are moving exponentially faster. Electric cars, sensor technology, autonomous transportation, drones, delivery bots, CRISPR, lab-grown meats, and quantum computing are all growing exponentially.

Even in the darkest times of history, people of extraordinary character have lived among us, guiding us towards a pathway to peace. Now will be one of those times.

Buckle your seatbelts, it's going to be a fascinating ride! Join Futurist Thomas Frey as he takes the audience on a journey into the future that few are likely to forget.

---

**ABOUT:** Futurist Thomas Frey is Google's top-rated futurist speaker, Senior Futurist at the DaVinci Institute, IBM's most award-winning engineer, and the former Innovation Editor for The Futurist Magazine.

Over the past decade, Thomas Frey has built an extensive following around the world based on his ability to uncover unique insights into the future, and describe the enormous opportunities that lie ahead. Having started seventeen businesses himself and assisting on the development of hundreds more, the understanding he brings to his audiences is a rare blend of reality-based thinking coupled with a clear-headed visualization of the world to come.

Thomas has been featured in thousands of articles for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luding New York Times, Huffington Post, Times of India, USA Today, US News and World Report, Popular Science, The Futurist Magazine, Forbes, Fast Company, World Economic Forum, Times of Israel, Mashable, Bangkok Post, National Geographics,

ColoradoBiz Magazine, Rocky Mountain News, and many more. He currently writes a weekly "Future Trend Report" newsletter and a weekly column for FuturistSpeaker.com.

Predicting the future has little value without understanding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trends, subtle nuances that can be leveraged, and implications for both the people directly affected in the industry as well as others farther down the technological food chain.

Every year Thomas inspires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with his unique brand of customized presentations designed specifically around the needs of each and every audience.





# Session 8-1

## 신안보(emerging security)와 한반도 평화

## Emerging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Unification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좌장  
Moderator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Kyung Hoon LEE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발표자  
Presenters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an-Bum CHO**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Du Hyeogn CHA** Principal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E.J.R. CHO**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토론자  
Discussants **김태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Tae-Kyung KIM**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아담 마운트** 미국 과학자 연맹 선임연구위원&안보 태세 프로젝트 국장  
**Adam MOUNT** Senior Fellow, Director of the Defense Posture Project,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FAS), USA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8-1)

## 신안보(emerging security)와 한반도 평화

2000년대 초반 이후, 냉전시대 논리에 기반한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전염병, 테러리즘, 기아와 인구문제, 난민, 에너지 문제 등을 포괄하는 안보개념으로 "신안보(emerging security)"가 논의되어 왔다.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문제는 단일국가의 능력을 벗어나는 신안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공동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우쳐 주었다. 이 세션은 전통안보에서 신안보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 정세를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의 틀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하는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Emerging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early 2000s, the world has been engaged in a discussion of "emerging security" as a concept that goes beyond traditional security rooted in the Cold War logic and encompasses a wide range of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infectious diseases, terrorism, starvation, population, refugees, and energy. The COVID-19 crisis engulfing the world in 2020 is a sobering reminder of how important the international joint response is to counter the emerging security crisis that cannot be resolved solely with the capacity of an individual country alone. This session will hold a discussion on how to reset the framework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e backdrop of rapidly shift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from traditional security to emerging security.

# 좌장 Moderator



**임경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Kyung Hoon LEE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비교정치, 러시아정치, 북한정치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음.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정치, 비교민주화 이행,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북한의 정치 및 경제 변화 등이며, 2018년 3월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취임 후 연구원의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서울대학교의 북한연구 및 평화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Kyung Hoon LEEM, i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and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Leem now leads the Peace and Humanities Research Group, and is in charge of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Project support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nt. Director Leem pursues to strengthen IPUS's role as a hub of transdisciplinary peace research and to expand its global horizon in addressing the unique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an-Bum CHO**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조한범은 1994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러시아 체제전환을 주제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연구원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정부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 비교연구', '정치, 경제, 사회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북한체제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등이 있다.

Cho Han Bum received a Ph.D degree in sociology from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with his thesis work on Russian system transition in 1994. He has been studying on socialist system transition and unification issue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since 1995, and he is currently lecturing at Korea University. He is senior research fellow at KINU.

He successively served as a consultant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d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And he served as a director of center for inter-Korean cooperation studies in KINU. He has authored several publications including 'Comparative Study on China and Russia's Economic System Transition', 'Study on Unification Costs-Benefits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 'Structure of Crisis on North Korean System and Prospects of Change in Society'.

---

#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East Asia in the Age of Emerging Security**

2020.9

Cho Han Bum (KINU)

## **Table of Content**

**I . Risk Society**

**II. COVID-19 and Human Security Crisis**

**III. Human Security and Cross-border Cooperation**

**IV. East Asia Paradox & Lebenswelt Crisis**

**V. Cooperation of East Asia**

**VI. Korean Peninsula as One Life Community**

## I . Risk Society

### ■ Risk Society (U. Beck, Risikogesellschaft, 1986)

- **Human reason and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modern society
- **Paradox of development**
  - Development begets new types of modern risks far different from the pre-modern period.

## I . Risk Society

### ■ Standardization of Risk

- **All members of the modern society are exposed to common risks.**
  - "Poverty is hierarchical, but smog is democratic."(U. Beck)
- **Risk of the past**
  - Risks at an individual level, avoidable
  - Natural, physical risks
- **Risk of the modern society**
  - Risk to all members of society
  - Need a high level of knowledge for a rational judgement on risks.

---

## **I . Risk Society**

### **■ Hyper-Connected Risk Society**

- **Individuals, groups, and countries are closely connected by current risk that serves as a mediator**
- **Current risks transcend any regional or national physical borders**  
ex. Nuclear disaster, climate change, pandemic, cyber space...

## **II. COVID-19 and Human Security Crisis**

### **■ COVID-19**

- **COVID-19 has emerged as a new type of security crisis.**
  - Rapid global increase of those confirmed & death cases of COVID-19
  - Vulnerability of modern civilization exposed in the form of pandemic
- **Spread of COVID-19 consequences**
  - Going beyond health medical crisis to become a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risis
  - Threatening not only national economy but also global value chain (GVC)
  - Direc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 II. COVID-19 and Human Security Crisis

### ■ New understanding on human security concept

- **Traditional security**
  - Physical violence such as war and armed force has long been considered as the biggest threat to humanity
- **Human security concept pays attention to a new type of threat to humanity**
  - Human-centered security concept proposed by UNDP in 1994
  - Continued discussion to date in order to reach a consensus on its concept
  - Expansion of the scope of security to include human rights, social stability, democracy, freedom, environment, and health care
  - COVID-19 considered as a proof of a new type of human security crisis that challenges modern society

## III. Human Security & Cross-Border Cooperation

### ■ Importance of Cross-Border Cooperation

- **Human security risk with inherent cross-border nature**
  - Economic crisis of individual countries can affect global economy.
  - Impact from Chernobyl, Fukushima nuclear accident, climate change, microplastic, etc.
  - Environmentally destructive development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can easily affect advanced countries and the world.
- **Hyper-connected nature of modern human security risk commands cross-border cooperation.**

---

## III. Human Security & Cross-Border Cooperation

### ■ Lessons learned from COVID-19

- **“COVID-19 has democratic nature.”**
  - COVID-19 shows that physical borders that divide race or countries are meaningless.
  - COVID-19 requires cross-border cooperation and a collective effort of the world.
- **Limitation of isolation-based & closed form of COVID-19 preventive measures**
  - Necessity of an inclusive attitude and joint effort when taking 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 Importance of transparent information sharing to the public
- **K-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model**
  - Successful COVID-19 control case of South Korea with an inclusive & open attitude

## IV. East Asia Paradox & Lebenswelt Crisis

### ■ Forming of New Order in Europe

- **Integration of western Europe since the Second World War**
  - Starting from the formation of ECSC, Western Europe has expanded economic cooperation and sought political cooperation.
- **Security cooperation during the Cold War**
  - Expanded the détente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rough Helsinki Process.
- **Acceler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post-Cold War era**
  - Foundation and expansion of European Union

## IV. East Asia Paradox & Lebenswelt Crisis

### ■ Formation of a New Order in Europe

<Trust-building and integration process of Europe>



• Source: Cho Han-bum, "Understanding on the initiative of the new Korean Peninsula system" KINU INSIGHT 2019 NO.7(Seoul: KINU, 2019),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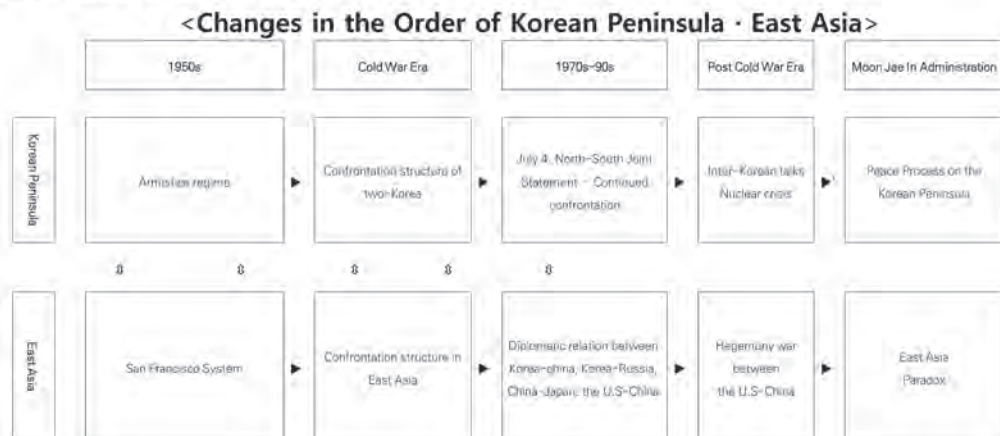
## IV. East Asia Paradox & Lebenswelt Crisis

### ■ East Asia Paradox

- **East Asian paradox**
  - Ironically, East Asia witnessed its confrontational structure ever remaining unresolved during the post Cold-War era.
- **The Second World War and continuation of post-Korean War order**
  - Continued existence of San Francisco System and Separation of two-Korea
- **Intensified the U.S.-China strategy competition**
  - Cold-War structure transformed into a new confrontation structure during the post cold war era
  - Hindering the formation of a new order in East Asia

## IV. East Asia Paradox & Lebenswelt Crisis

### ■ East Asia Paradox



• Source: Cho Han-bum, 'Understanding on the initiative of the new Korean Peninsula system' KINU INSIGHT 2019 NO.7(Seoul: KINU, 2019),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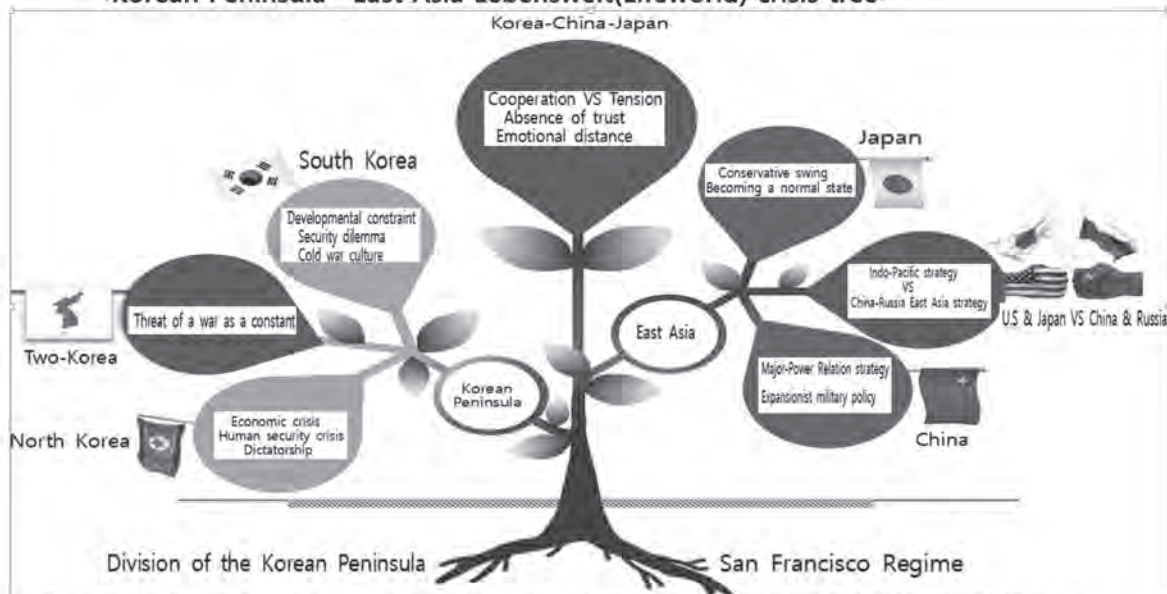
## IV. East Asia Paradox & Lebenswelt Crisis

### ■ Lebenswelt (Lifeworld) crisis in East Asia

- **Regional order of East Asia and its duality**
  - East Asia paradox – coexistence of close economic cooperation and security tension
- **Lebenswelt risks in East Asia**
  - East Asia paradox reproduced into a high expense structure between and within nations
  - Structural risk factors of regional Lebenswelt

## IV. East Asia Paradox & Lebenswelt Crisis

<Korean Peninsula · East Asia Lebenswelt(Lifeworld) crisis tree>



• Source: Cho Han-bum, 'Understanding on the initiative of the new Korean Peninsula system' KINU INSIGHT 2019 NO.7(Seoul: KINU, 2019), p. 7.

## V. Cooperation of East Asia

### ■ Necessity of resolving the duality of cooperation and conflict

- **East Asia has established a de facto one-day life zone & economic interdependence.**
  - Commonality in their inter-related history, culture, and Confucianism
  - Unresolved conflict structure among nations such as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U.S.-China rivalry, and absence of trust
  - Lose-lose mechanism that damages all three nations (Korea, China, and Japan): THADD issue, forced labor issu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etc.
- **Common risks faced by nations in East Asia**
  - Nuclear issues, fine/yellow dust, virus, etc.
  - Need to realize human security not by individual effort but by cross-border cooperation.

## V. Cooperation of East Asia

### ■ Necessity of Resolving the Duality of Cooperation and Conflict

- **Re-recognition of "East Asia community"**
  - As one of the top three economy blocks of the world, East Asian can create a win-win regional strategy.
  - From duality of rivalry and cooperation to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 **To resolve the political/economic/social high-expense structure within the regional Lebenswelt.**
- **Ultimately, to create a united political and economic community like EU.**

## V. Cooperation of East Asia

### ■ Cross-Border Cooperation through Soft Issues

- **Limitation in establishing a cooperation & trust relation in the short term**
  - With East Asia paradox remaining unresolved, it's not likely to build the trust and high level of cooperation relation among the two Korea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in a short term.
- **Intensified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 dilemma in R.O.K-U.S and U.S-Japan alliance.**
- **High-expense structure caused by diplomatic & security tension and confrontational structure**
  - Disrupt the development of regional nations and society.

## V. Cooperation of East Asia

### ■ Cross-Border Cooperation through Soft Issues

- **Using soft issues**

- Need to expand common ground based on non-political/-military soft issues among the two Korea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 **Cooperation on common issues**

- Yellow/fine dust, climate change, green détente, drugs, health & medical care, nuclear disaster management, etc.

-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 Seek to establish East Asian Human Security Organization (EAHSO)

## V. Cooperation of East Asia

### ■ Cross-border cooperation through soft issues

- **Narrowing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nations**

- Sports and art areas: Consider opening East Asia international sport events, culture/art festivals, etc.
- Olympic games to be held in relay in East Asia: Tokyo (Summer Games), Beijing (Winter games), Joint North & South Korean Olympic Games (under discussion)
- Seek to secure a common identity of East Asia

- **Expanding security cooperation in mid-/long-term**

- Seek to establish a multilateral entity & organiz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 V. Cooperation of East Asia

### ■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 Development of East Asia

-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drive to form a new order in East Asia**
- **Resolving current state of sepa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Peace Process to seek an ultimate solution to that securit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lies at the core of regional instability
  - Peace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 creating a virtuous cycle for East Asia
- **Resolving the East Asia Paradox**
  - Break up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formed centering on the division system.
  - Resolve the high-expense structure in diplomacy and security of the region and promote coprosperity.

## VI. Korean Peninsula as One Life Community

### ■ Human Security Crisis in North Korea

- **Food shortage**
  - Continued food shortage under Kim Jong-un regime
  - 47% of population in North Korea suffering from malnutrition (FAO Joint report, July 2020)
- **Crisis in health care**
  - "Criticize, with heavy heart, that even in Pyongyang, we don't have a well-prepared modern health care facility." (Kim Jong-un, Mar. 17, 2020)
  - Estimate Tuberculosis kills 20,000 in North Korea annually (WHO 2019 TB report)
  - North Korea: COVID-19 testing case: 1211, confirmed case: 0 (July 2020, WHO) cf. South Korea: COVID-19 testing case: 1,613,652, confirmed case: 14, 519 (Aug. 7, 2020, KCDC)



## VI. Korean Peninsula as One Life Community

### ■ Necessity of Health Care Cooperation between Two-Korea

#### • Connection between two-Korea

- Need to have join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malaria, ASF (African swine fever), etc.
- Joint disaster management and cooperation in border regions such as transboundary rivers

#### • Trust building between two-Korea

- Realistic cooperative measures under sanctions currently imposed
- Two-Korea relation as a driving force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 • Resolve the humanitarian crisis of North Korea and prepare for re-unification in the mid- and long-term.

## VI. Korean Peninsula as One Life Community

### ■ Ways to Form One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 • Medical support to prevent and control COVID-19 in North Korea

- Spread of COVID-19 is very likely in North Korea.
- Complete lockdown of Kaesong and transition to national emergency system (July2020)
- Consideration of medical support to control COVID-19 in North Korea at the government level.

#### + Establish a medical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

- Treatment of contagious diseases such as TB and hepatitis
- Improvement of a health care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 • Establish a constant consultation system for health care sector between two-Korea

- Establish a body tentatively called "Korea Joint Health Care Committee" and install a contact office either in Pyongyang or Kaesong

## VI. Korean Peninsula as One Life Community

### ■ Ways to Form One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itarian cooperation**
  - Starting from health care sector, need to initiate the humanitarian cooperation between two-Korea in earnest especially in areas such as separated families, food shortage issue, agriculture, ecology, and environment.
  -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Germany, establish a sustainable cooperation system focusing on humanitarian cooperation separating it from political/military issues.
  -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humanitarian support to North Korea and realize humanitarian support ► development cooperation ► economic cooperation roadmap
- **Reinforcing the cooperation in border regions**
  - Expand the scope of joint cooperation for preventing and control of malaria, ASF, AI, and pine needle gall midge.
  - Institutionalize a joint management system for transboundary river, forest, disaster, etc.
  - Expand such cooperation to a cross-border cooperation of East Asia.

## VI. Korean Peninsula as One Life Community

### ■ Ways to Form One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 **Connect with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 Host human security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ound DMZ areas to deal with biology, environment, virus, etc.
  - Consider organizations tentatively called "DMZ Cross-border Cooperation Organization," "DMZ Biology, Peace Cooperation," etc.
- **Connect one life community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 Use it as a driving force for a regional support from China, Japan, and Russia as well as the U.S.
- **Driving for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iology and peace in East Asia**
  - Expand regional cooperation under the theme of one life community (i.e. Green détente of East Asia).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Du Hyeogn CHA** Principal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팀장/북한연구실장(2005~2009),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KIDA 경력 이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2011~2014)로 공공외교에도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 박사는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Dr. Cha Du Hyeogn is a North Korea Study expert who has shown various research performances on North Korean Politics and Military, U.S.-ROK Alliance, and National Crisis Management. He received his M.A. and Ph.D. degree of Political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Dr. Cha was Director of Defense Issues Task force (2005~2006), Director of North Korea Studies (2009) at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and the Acting Secretary for Crisis Information to the ROK President Lee Myung Bak (2008). Also, careers outside of KIDA, he has many experiences in working as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2011~2014) and served as Senior Foreign Affairs Advisor to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2015~2018), Visiting Scholar of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2015~2017), and Adjunct Professor of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017~2019). He is currently the Principal Fellow of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e has written more than 100 research papers and co-authored books on diverse fields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e has advised for various governmental organizations.

---

# Emerging Security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CHA, Du Hyeogn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 I. Introduction

The 'COVID-19' pandemic that has hit the globe since the beginning of 2020 ha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aise people's awareness about the field of 'emerging security' (comprehensive security). This new epidemic that infected more than 18.9 million and killed over 700,000 worldwide (as of August 7, 2020)<sup>1</sup> suggests that potential threats (risks) of emerging security is comparable to those of traditional security in bringing disastrous consequences. In the global sweeping of 'COVID-19,' all Northeast Asian countries suffered greatly. China, beyond being the origin of the outbreak, had 80,000 confirmed cases and 4,600 deaths. South Korea and Japan ranked second and third after China for number of confirmed cases until the worsening of spread of 'COVID-19' in Europe. As of June,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ranked first and fourth in the number of positive cases. North Korea, despite its official denial of the outbreak of 'COVID-19,' announced in February that there are more than 7,000 'targets required of medical surveillance.' On July 27, North Korean media finally admitted the outbreak of COVID-19 inside its borders by reporting on the suspected COVID-19-diagnosed North Korean defector returning back from South Korea and on Kim Jong-un issuing a "special warning." Al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or are still, severely affected by the coronavirus.

As shown in the 'COVID-19' case, emerging security issues call for a globally-shared perception of threats and management plan, and the increasing interests over these issues, in theory, is likely to act favorably for th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emerging security can also turn into a new field of conflict as hinted by the blame game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spread of COVID-19. North Korea's stance to conceal its vulnerability to the outside world under the "Strong and Prosperous" slogan also raises doubts about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in emerging security. In this light, the first necessary step to be followed should be a close analysis of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emerging security may bring to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 II. 'COVID-19' and Recognition of Emerging Security

International order and security changed dramatically in the early 1990s with the opening of the post-Cold War era. Once divided into two blocks – east and west, the world has become reorganized into one, and countries have grown rapidly interdependent of each other. Regarding security, issues beyond conventional military competition and conflict began to gain attention.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security issues focused on military conflict, limited war, and full-scale war, new issues such as terrorism, drug trafficking, illegal immigration, massive refugees, international crimes, and piracy have growingly been perceived as potential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global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climate change, resource constraints (water resources, etc.), and epidemics have been highlighted. Issues like urbanization, aging society, and multicultural convergence, though not necessarily 'threats,' also emerged as issues that have to be dealt with at the national level.

Also, there has been a growing perception that security needs not be taken as necessarily a government- or state-centric concept. With the rise of the "welfare state" concept and the expanding role of state and government, states have increasingly been required to extend their roles beyond national defense which also included the role of relieving social anxiety such as market instability and disasters. The 'alleviating' function of the state became as important as the functions of physical security. This is the combination of the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and the concept of "societal security." In 1994, wit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UNDP) initiative, the need for "human security" also began to emerge. Hence, the scope of "national security" should now include issues of human alienation, economic inequality, and various discriminations.

In order to manage the various issues, the concept of security needed to expand, and its focus also had to change. Terms such as 'non-traditional security' and 'comprehensive security' began to appear since the 1990s for the same reason. The concept commonly referred to as 'new security' is a term that, though the overall purpose is the same, touches up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yber safety on top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curity. Many believed that the emergence of new security would foster cooperation among states rather than competition. Since anyone could become a victim, a state will not target another. Such belief was reinforced as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led to a rapid increase i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nterstate exchanges of information. It was expected that the enhanced inter-dependence among states would lead countries to focus on solving common tasks rather than causing bilateral/multilateral conflicts.

As issues of emerging security often cross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the traditional state, governmental functions alone cannot provide sufficient responses. Consequently, the advent of emerging security was expected to expand the role of 'non-state actors' in the field. Rather than individual states that pursue national interest,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International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expected to focus more on solving common problems. Since they are likely to behave in line with economic interests, multinational networks, or universal ethics, there has been a faith that they would overcome the limits of government in countering emerging security issues.

However, entering the 21<sup>st</sup> century, countries have frequently faced obstacles in cooperating in the field of 'comprehensive security' or 'non-traditional security.' The biggest problem was that the major countries have not regarded the issues of emerging security as common interests. It is best represented by the U.S.'s withdrawal on June 1, 2017, from the Paris Convention – a global effort to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is the result of President Trump prioritizing "the interest of American people" over managing global climate change.<sup>2</sup> While many countries sympathize, in principle, with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security issues, these issues were viewed as less urgent. Such perception expanded national disagreements on the speed at and the extent to which the issues were solved.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major countries and the subsequent mentality of mutual check that arose from the competition have also hindere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merging security.'<sup>3</sup>

These characteristics were also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 proliferation of 'COVID-19.' 'COVID-19' has thwarted much of the roseate expectations about emerging security. In the midst of the epidemic, states acted individually rather than cooperatively in problem-solving, and nationalism overpowered internationalism. Meanwhile, major states displayed a unilateral and mutually competitive attitude rather than responsible action as illustrated by the buck-passing claims and measures among major states over the spread of the virus. The debate over the 'origin of COVID 19' between the U.S. and China turned this emerging security issue into a buck-passing game rather than a common task, which fueled distrust

2 In fact, President Trump justified the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by pointing out a sharp decline in GDP and manufacturing jobs.

3 See "New field in Geopolitics: Emerging Security"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Edition) 『2020 Asan Geopolitical Outlook』 (Seoul: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9.12), pp. See 102-104.

---

between countries. The lack of a reliable international regime has made international joint response more difficult. The WHO's credibility as a reliable international regime has plummeted during the 'COVID-19' situation. In addition, with the rapid proliferation and regional spread of the infectious disease, 'fear' in each country has amplified, creating a kind of 'phobia,' which expanded and reproduced existing hatred toward heterogeneous cultures and races. While non-state actors were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solving the 'new security' problem, they also revealed their limitations. In the face of a larger-than-expected 'new security' threat, functions of non-state actors were shown to be limited.

### III. North Korea and Situation of 'COVID-19'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reported from Wuhan China on December 31, North Korea has never officially announced the internal outbreak of 'COVID 19' until its June 27 media report. However, North Korean media began emphasizing the 'prevention system' in between January and February and announced the closing of its borders with China on January 30. North Korea also notified the temporary suspens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in Gaesong. It is worth recalling that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was found in South Korea on January 20.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proximity of North Korea to China, and their active border trade, it is likely that North Korea had the outbreak of 'COVID 19' much sooner than South Korea if there was any.

North Korea maintained the stance that the epidemic did not hit North Korea as of mid-February when 'COVID-19' became a regional and an international issue and that it could be managed sufficiently even if it were to occur. The WHO also said that there were no signs of coronavirus outbreak in North Korea as of mid-February. However, considering the WHO's initial response to the coronavirus and the bias it showed toward a specific country,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WHO's remark at face value. In fact, during the time, western media including the U.S. media reported that North Korea was hiding the spread of 'COVID-19' within its borders, and a person who ignored the 'quarantine procedures' in North Korea has been executed. North Korean media also hinted at the spread of 'COVID-19.' Rodong Sinmun's March 1 editorial titled "Promotion to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and intensive development of prevention projects" reported that there are about 3,900 'medical surveillance targets' in South Pyongyang and Gangwon Province. Also, on February 24, the Central Broadcasting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gency (Chosun Joongang Bangsong) reported that there are about 3,000 medical surveillance targets in North Pyongan Province,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se reports indicate that there are about 7,000 medical surveillance targets acknowledged by the North Korean media itself. Since it is unlikely that North Korea experienced any infectious diseas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virus epidemic' that North Korea referred to was 'COVID-19.'

The problem is with the size and area of the medical targets. According to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there were 7,300 confirmed patients in South Korea at the time when North Korea admitted the existence of "subjects of medical surveillance." It could not be taken lightly that North Korea, with half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has near 7,000 'medical surveillance targets' in just three regions. The number does not include the targets in Jagang Province and Yanggang Province which are also representative Sino-Korean border regions. Moreover, South Pyongan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are located relatively south of North Korea, and South Pyongan Province corresponds to South Korea's 'metropolitan area' and Gyeonggi Province. If 3,900 people were under medical surveillance (and possibly quarantined) in the region, 'COVID-19' has likely spread throughout North Korea by March. North Korea held an expanded meeting of the Politburo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 Worker's Party(KPA) on February 29, and strongly emphasized the 'virus prevention.' This implies that 'prevention' has become a matter of practicality rather than principle.

If North Korea is indeed suffering from 'COVID-19' and still failing to adequately manage it, the impact of the pandemic can inflict damage not just on its lagging healthcare and medical sector but also on various sectors. Mainly, the damage can lead to the weakening of North Korea's strength to endure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against it and can amplify the effects of sanctions. In order to sustain its 'New Way' and 'strategic deterrence' amid the sanctions imposed against it, North Korea needs 1) internal solidarity, 2) fiscal austerity, and 3) indirect support from China and Russia. The proliferation of 'COVID-19' can intensify internal psychological anxiety and frustration again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limiting the spread of the pandemic requires unanticipated resources and manpower, which can be a burden under sanctions. Equally detrimental is the absence of indirect support from China and Russia. China and Russia's rationale against strengthened sanctions was that they inflict damage to the public economy of North Korea. Even under sanctions, China has likely been supporting North Korea through border trade, and suspension of this support will exponentially increase North Korea's burdens. North Korea already imposed temporary 'insulation' from China as a prevention measure. Prolonging of the pandemic will only inflict greater damage.

'COVID-19' both weakens North Korea's strength to endure the sanctions imposed against it and reduces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support from China in the future. In early 2020, China was one of the hardest hit countries from 'COVID-19,' and it had to bear not only social disruption but also political and economic anxiety. For a while, China will have to focus on internal restoration rather than providing foreign aid. This can be more detrimental to North Korea than a mere temporary self-closure of borders would be. Although the trade routes, railways, and airway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ill reopen once the 'COVID-19' situation settles down, China's support will likely remain the same a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r even reduce. Considering that restoration and normalization from the pandemic requires more resources than usual, the absence of China's support will be damaging to North Korea. Furthermore, since sanctions have been put in place, North Korea has mainly relied on tourism and labor dispatch as major sources of funding. Without China's active cooperation and support, both sectors will suffer. China could not increase their support for the two sectors that have been strongly affected by the pandemic unless North Korea transparently discloses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infectious disease.

#### IV. Emerging Security - Opportunity or Challenge?

##### 1. Opportunity

###### (1) Potential for change in North Korea's stances on South Korean policy and foreign policy

The 'COVID-19' variable has created an environment that made it inevitable for Pyongyang to alter its South Korean and foreign policy directions. The environment has become ripe for North Korea to hint at a compromised conclusion (accepting the conditions of the 'Stockholm working-level talks'), as long as the compromise does not resonate as a humiliating concession. Such attitudinal change from North Korea can definitely be an opportunit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bove all, chances are that the level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will be lower than initially anticipated, and ICBM launch or long-range rocket testing under the guise of a satellite launch will have been refrained. Also, the two Koreas can find a breakthrough for the stalemate they face and seek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Especially, when limited to the issue of the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there is no trigger for dissen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he U.S. has already announced in early February that they will provide support for North Korea in case they face a 'COVID-19'

---

outbreak.<sup>4</sup> In the meeting with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ang Kyeong-hwa, the WHO also expressed their readiness to support North Korea.<sup>5</sup> It is likely that North Korea wants South Korea's aid as well. On March 9, the Yomiuri Shimbun (Yomiuri Newspaper) reported that North Korea is experiencing a shortage of goods due to the closing of borders with China and that it asked South Korea to provide masks which South Korea rejected (due to its own supply and demand problem).<sup>6</sup> Of course, this has been refuted by our government as 'unfounded.' Still, inter-Korean cooperation on the prevention of 'COVID-19' is the topic that North Korea is most likely to accept.

## (2) Aspirations for New Regional/International Order and the Need for Cooperation on Emerging Securities

Amid the proliferation of 'COVID-19,' trust in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is fading, and establishing new regimes is not a viable option. Also, the absence of an agenda-setting country is likely to intensify the instability at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levels. However, this can also become an opportunity. Maintaining a stable international order requires a leading country and multiple supporting countries. If not, a responsibility- and burden-sharing group of countries need to take the place of the leading country. The world has failed to find such a country during the post-2000 emerging security debates and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the aspiration for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regional order will intensify because not many would want such an unstable structure to last. This also means that countries will more likely become reform-oriented rather than status quo-oriented. Utilizing such an opportunity can induce international support for a shift toward maintaining peace and common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ovement toward change is not limited to the political sphere. As seen from the shortages of masks and testing kits, interest in strategic materials has increased and trust in the global supply chain has deteriorated. Now, many countries will turn their eyes back to the declining bricks and mortar industry. Revitalizing and upgrading the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industry can be directly appli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can also be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change its perce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ich, for North Korea, used to be a mere provision of labor into manufacturing.

## (3) Paradoxically Strengthened Need for Cooperation on Emerging Security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a severe hit against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merging securities. With increasing emphasis put on national interest and egotism, solidarity-based emerging security can be ideal but, at the same time, can come away as unrealistic. However, the current pandemic outbreak reified the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dangers) as something beyond theoretical daydream and as something that can be materialized in the real world. Emerging security issues such as the pandemic have proved to affect not only the medical and healthcare sector but also the society and economy. The world has together learned about the seriousness of emerging security problems. Hence, for now, countries sought to individually manage the emerging security threats, which are no less a threat than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countries will feel as if potential threats from cooperation outweigh the gains from cooperation. This may turn into an 'international distancing' policy. The role of middle power countries like South Korea is important in this respect. Countries sought different pandemic prevention measures, and it is difficult to specify a case as a 'best practice' considering the variations in healthcare systems and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ies. Nonetheless, the policies exhibited by South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re meaningful in that they have continued the cooperative momentum that has lasted through South Korea's 'globalization' process. South Korea wa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have globally shared their status on the diagnosis and spread of the virus despite the damages incurred to its own people having been banned from entry into another country. Its effort to share resources for and know-hows

---

4 "U.S. says prepared to help North Korea combat threat from coronavirus," Reuters.

5 "WHO on Minister Kang Kyung-wha: Ready to Support the North for Corona Prevention," The Chosun Ilbo, March 6, 2020.

6 「感染者なし？」北で高まる住民不満、中国国境封鎖で物不足, 『読賣新聞』(2020/03/09).



on diagnosis and prevention is also in line with its globalization-driven cooperative mindset. Now, South Korea should persuade other like-minded middle power countries that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humans, and goods will be the best way to survive the post-COVID-19 world. It can also apply the same approach to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2. Challenge

### (1) North Korea's Stiff Attitude

North Korea's inflexible attitude is the biggest challenge against using the emerging security concept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out early 2020, North Korea consistently sent out messages claiming that they are not willing to change their policy lines and that the choice is in the hands of South Korea and the U.S. The armed protest (the string of short distance missile launches) in early March can also be understood in such context. In addition, North Korea clearly expressed its intent not to give up on taking the initiative on inter-Korean relations by telling South Korea to keep its hands off the nuclear/missile issue, which it argues is an issu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steps taken by Pyongyang [Launching of the multiple rocket launcher → South Korea's expression of worry → Kim Yo-jong's speech (March 3) → Kim Jong-un's letter → Relaunching of the multiple rocket launcher] basically alludes to what Kim Yo-jong said rather harshly, that "Our stance is firm."

North Korea's unilateral and complete cut off of inter-Korean talks in June also portrays its stiff attitude. It demolished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in Gaesong Industrial Complex on June 16. Four days earlier, Kim Yo-jong commented that "it seems to be time to completely part company with the South" and that "South Korea will observe the dismal scene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blowing up into pieces." North Korea's feeling of superiority and confidence against South Korea seems to be behind the unilateral cut off of relations. Since the declaration of the "completion of the national nuclear power,"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 elites seem to be sharing the self-conviction that they possess an overwhelming strategic capacity against South Korea (disregarding the South Korea-U.S. alliance). Such mentality seems to have left Pyongyang with the idea that they hold the initiativ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at they can restore the relationship whenever they want even if it has been temporarily cut off. North Korea's expression of wide-open distrust toward South Korea during the cut-off process is also a burden for future inter-Korean cooperation.

### (2) Neighboring Countries' 'Management-Centered' Approach to the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Applying the emerging security concept to the Korean Peninsula can definitely help induce a 'changing-the-status-quo' atmosphere. The problem is that the neighboring countries' attitudes portray the opposite atmosphere. According to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Chosun Joongang Tongshin), Kim Jong-un sent a letter to Xi Jinping on May 8 congratulating his successes on dealing with 'COVID-19.' While the letter is mostly interpreted as showing off the solidari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t can also be taken as an indirect expression of urging China to restore the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which has unavoidably subsided due to 'COVID-19.' While Russia has diplomatically supported China's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it is uncertain whether China will be able to offset the outflow of foreign capital if such an outflow were to happen in Hong Kong. While the tripartite relationship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has not faced a conflict, domestic issues in China and Russia fostered a situation where neither country will likely be able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each other.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has also stagnated due to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historical and economic issues. This can turn out negatively for the Korean Peninsula. Any groundbreaking solutions to the denuclearization problem are unlikely to arise. With relevant countries

---

all facing deteriorating external standing and domestic criticism due to 'COVID-19,' they are unlikely to be able to focus on the denuclearization and Korean issue. Especially with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the need for Xi Jinping to reestablish his leadership in China, and the intensified strategic competition, all parties will likely focus on managing situations rather than pushing through the U.S.-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 (3) Characteristics of Emerging Security

Various types of mutual consultation will arise on emerging security issues if an inter-Korean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proceeds. The problem is that it is logically difficult to evade a certain issue. As stated above, 'emerging security' is inevitably connected to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seeks to protect the individual's rights and interests by going beyond the government. More attention will be drawn to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ors. However, for North Korea, this will be hard to accept when considering the government and system's survival. Still, only relying on selective cooperation regarding emerging security can lead to criticisms of logical paradox and hypocrisy. How to wisely sol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that will garner attention during the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will be the point of emphasis in the future.

## V. Conclusion

Though it is less probable in the short-term for emerging security to become an important issue and a motivation for cooperation, emerging security will become a long-term trend that functions both as a task and as the motivator of cooperation. South Korea should maintain its own agenda and central stance. Inter-Korean reconcili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means' for the peace in the Peninsula rather than 'ends' in themselves. South Korea will not be able to induce positive changes from Pyongyang if it sacrifices its own goals or circumvents the basic emerging security mindset in consideration of future talks with North Korea. For instance,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show off its power through various types of provocations and reaffirm its initiative in inter-Korean relations. While emphasizing the spirit of cooperation, South Korea should send a resolute message; not doing so will end up in more repetitions of provocations. It needs to send a clear warning against North Korea's deviant behavior. Only then, South Korea can devise "its own timetable" and North Korea will accept it.

Also, South Korea needs to prepare policies to utilize the 'COVID-19' factor that North Korea is facing as a catalyst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me may ask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onnect humanitarian issues with political and diplomatic issues. However, as stated above, 'COVID-19' is affecting not only humanitarian aid programs but also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South Korea should induce North Korea to make a 'strategic choice' over mere alterations of tactics. This is why the two Koreas should discuss healthcare and medical cooperation while insisting on following the spirit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Pyongyang Joint Declaration.

Strengthening South Korea'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as an agenda-setter on international emerging security issues is necessar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uilding such a cooperative atmosphere will pressure Pyongyang and Kim Jong-un, who values his international image, into not being able to ignore it completely. South Korea should use international support to call for North Korea's participation and, in the process, naturally expand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 발표자 Presenter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E.J.R. CHO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지역통합을 통한 핵비확산과 평화체제 구상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 중. 주요 논저로 "Nation branding for survival in North Korea: The Arirang Festival and nuclear weapons tests(2017)", 『북한과 국제정치(2018)』, "국제안보 개념의 21세기적 변용(2017)", "원자력 협력은 핵확산을 부추기는가?: 미국양자원자력협정의 국제 핵 통제적 성격(2016)", "핵·미사일 체제의 '구조적 공백'과 북한의 핵·미사일 동맹 네트워크(2014)", "EURATOM: Bridging 'Rapprochement' and 'Radiance' of France in the Post-war(2013)" 외 다수.

E. J. R. Cho is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Seoul. Cho attempts to critically engage with the mainstream discuss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ublished many scholarly articles and policy papers including 'Non-Proliferation Efforts at Risk: A Study of North Korea's Network for Nuclear and Missile Cooperation'(2014), 'Nation Branding for Survival in North Korea: The Arirang Festival and Nuclear Weapons Tests' (2017), and 'Epistemological Turn in North Korean Studies: Critical Analysis of North Korean Threat Theory' (2018).

---

# Potential Tripartite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S in COVID-19 Prevention

E.J.R. Cho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

※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aper are entirely those of the author and are not to be construed as representing those of INSS.

##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Situation on COVID-19 in North Korea
  - a. Claims from North Korea
  - b. Presumed Situation
  - c. Author's Presumptions
3. Measures of Cooperation for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a. Smart Medical Ship
  - b.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s Medical and Prevention Hub
  - c. Supporting North Korea's Self-sufficient Production of Essential Medical Supplies
  - d. Supporting the Integration of Medical Information System in North Korea
  - e. Developing a Cooperative System for Comprehensive Human Security in the East Asian Region
4. Conclusion

1. Introduction

- o In the era of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Korean Peninsula is a trans-border threat that concerns both Koreas and an issue unsolvable by prevention efforts on just one side
  - As Figure 1 shows, infectious diseases periodically proliferate in countries that have even highly developed public health system like South Korea due to frequent exchange of human and goods
  - Preparing for countermeasures requires continued tracing and surveillance of, and development of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on infectious diseases abroad
  - Also, mutual enhancement of health security of both Koreas requires close cooperation of both parties that is in line with the global prevention policies



<Figure 1> Annual Trend of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in South Korea  
(Sourc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 Yearbook, 2017)

- o Hence, I suggest a policy paradigm shift for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face of a dire health security crisis – the "global pandemic" of COVID-19
  - First,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only view North Korea's management of COVID-19 as a North Korean problem or approach it as an inter-Korean relations issue but also as an emerging security and health security issue at a global scale
  - Second, from an emerging security perspective, South Korea should change its perception of North Korea from being a one-sided recipient of aids to being an inevitable partner for materializing joint health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 Third, the United States should understand that winning the war against COVID-19 which threatens the entire humanity requires not excluding any country for political reasons. In this respect, it should suspend the sanctions against medical assistance for North Korea
  - Fourth, North Korea should also perceive infectious diseases not as a domestic issue but as an international issue. To effectively prevent and treat infectious diseases, it should unify its infectious disease governance system and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and private institutions for monitoring
- o Such a human security approach will help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create opportunities for cooperating with a more forward-looking approach in response to the common threat of health security crises

- 
- Hence, it is urgent to consider policy-wise whether there is room for the current crisis to become an opportunity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or the North Korea-U.S. relations
  - This presentation predicts North Korea's situation on infectious diseases in a rational sense and, based on the prediction, aims to identify measures for cooperation among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2. Situation on COVID-19 in North Korea

### (1) Claims from North Korea

- o Officially, North Korea claims to be a COVID-19-free country
  - According to the March 13 report from *Rodong Sinmun*, 990 from North Pyongan Province and 720 from South Pyongan Province have been released from quarantine and each province has strengthened their medical surveillance and tracing of those potentially infected
  - North Korea's state-controlled propaganda media outlet on international affairs *Uriminzokkiri* (Our People Together) has emphasized that "we need to further strengthen our hygiene fronts and not be off guard just because COVID-19 has not entered our country"
- o However, it is hard to believe North Korea's claim that they have zero COVID-19 case
  - First, North Korea unlikely possesses the testing capability to scientifically confirm positive cases
  - Second, by bordering China which has the highest number of positive COVID-19 cases in the world and by being dependent on China for border trades after sanctions began, North Korea is most vulnerable to infection
  - Third, with its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failure of the North Korea-U.S. Summit at Hanoi, North Korea would probably not want to mention COVID-19 cases which would not help with propaganda

### (2) Presumed Situation

- o Despite North Korea's insistence on being a clear zone, the following reasons point to North Korea internally facing serious problems regarding COVID-19
  - △Discussions on emergency prevention measures at the Extended Politburo Meeting △Cancellations and delays of important events △Increased production of masks and cleaning products at clothing and soap-producing factories △Closing of diplomatic offices and evacuations of foreign diplomats △Strengthening of border military patrol △Worsening food situations
- o Internal political dynamics of North Korea
  - On February 29, *Rodong Sinmun* reported that an in-depth discussion of extraordinary prevention measures to prevent the "virus infection" took place at the Extended Politburo Meeting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 At the Meeting, the discussants pointed out that the quick spread and uncertain incubation period of the virus infection called for revisions and supplementations of laws regarding national emergency prevention measures and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Codes
  - Specificall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he Cabinet, alongside related bureaucracies, pointed out the need to further strengthen the national prevention capacities and supplement existing prevention measures and institutions

- o Cancellations and delays of important events
  - Despite the 'bull by the horn' approach (frontal-breakthrough) against the United States' sanctions on North Korea declared on December 2019 at the 5th Plenary Meeting of the 7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North Korea established the Central Emergency Prevention Command for the prevention of COVID-19 and closed all its land, sea, and air borders on January 23, extending prevention measures nationwide
  - North Korea banned all entries and departures and cancelled the Army Day military parade on February 8, scheduled to disclose its news strategic weapon
  - The People's Army has shut down completely all its activities for approximately 30 days and only began its daily training recently (Robert Abrams, Commander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 On March 13, the Commander of the USFK Robert Abrams said at the online briefing with the United States Ministry of Defense reporters, "we are fairly certain they do [have COVID-19 cases]"
  
- o With concerns over the prolonging of the COVID-19 pandemic, North Korea seems to be intensifying its prevention preparations by focusing all its power on manufacturing important prevention products, such as producing masks at clothing factories and disinfectants at soap factories
  - Rodong Sinmun reported that officials are managing about 8,000 people who showed pneumonia symptoms in Gangwon, South Hamgyong, and North Pyongan provinces
  - The March 14 Rodong Sinmun reported that South Pyongan Province sent food and firewood to prevention facilities and quarantine places, and guaranteed the production of about 200,000 masks while South Hwanghae Province built hygiene defense stations and disinfectant production plants
  - Also, a series of daily reports suggest that the Ministry of Chemical Industry,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Affairs, the Institute of Medicine's Medical Biology Research Center and Pyongyang Medical School,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among others, have been supplying test reagent and protective equipment, medicine, mask, and other medical supplies
  
- o On March 9,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Switzerland provisionally closed their embassies in Pyongyang, and diplomats departed to Vladivostok on special flights provided by Air Koryo
  - At 11 p.m. on January 29, foreign residents in Pyongyang were abruptly moved and quarantined to Pyongsong, South Pyongan. On March 13, 290 out of the 380 foreigners who were quarantined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have been released (Korean Central News Agency)
  - According to the Russian Embassy in Pyongyang, despite the sequential release of foreigners from quarantine, the official letter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each embassy stated that workers at the embassies and their families cannot leave Pyongyang, must wear masks when in public, and are banned from public transportation
  - Participants at diplomatic events were limited to a maximum of five, restricting the meeting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 o North Korea intensified security at the Chinese and Russian border regions and at the ports
  - With many potential COVID-19 cases allegedly breaking out at the Chinese and Russian border regions, North Korea saw smuggling in the region as the core cause of the spread of COVID-19 and strengthened its guard
  - Especially, in mid-July, some ports closed as they found COVID-19 contaminated smuggled goods. 1,500 special forces were deployed to the Chinese border regions such as Haesan to strengthen border patrol

- o North Korea announced on July 26 that the defector from South Korea might be a COVID-19 patient
  - Under a maximum national emergency system enforced, Kaeseong has completely been blockaded and, for stable livelihood of the people, the central party discusses budgeting a special fund for food and livelihood guarantee fund for the stability of people's livelihood
  - While no information exists on whether the Kaeseong-bound defector was a COVID-19 patient, North Korea seems to be taking various measures without a test-kit to confirm if the defector is indeed a positive case
  - According to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s believe that COVID-19 is soaring in South Korea and, therefore, are strongly disturbed by the news of the South Korean defector
  
- o According to Asia Press (8.1), COVID-19 cases have been reported from Pyongsong, Sariwon, and South Hwanghae, and all travel to the region or contacts with the people in the region have been banned
  - \* According to a source from North Hamgyong, local officials are not disclosing the number of positive cases because of fear and anxiety felt by the residents
  - 80% of local residents including those in Pyongyang buy daily necessities at the market, and 80-90% of daily necessities distributed in the market come from the Chinese borders
  - With steep decrease in trades with China and smuggling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market activities across North Korea have largely been reduced and shortage of goods and inflation are deteriorating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 o Hence, aside from the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umanitarian aids through NGOs and IOs, not just assistance in health and hygiene, are urgent for the survival of the North Korean people
  - \* The United Nations (UN) has set \$107million as the donation target for the 'DPRKorea Needs and Priorities,' but with only a few replies from the UNICEF (\$6.2m) and 6 other UN branches, Switzerland (\$5.22m), Russia (\$3m), Sweden (\$2.5m), Canada (\$900k), Norway (\$680k), Germany (\$390k), France (\$230k), and South Korea (\$9k), 22.3% (\$24m) of the money has been collected as of July 27
  - When aiding North Korea through private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orities should be given to supporting the 70,000 vulnerable people in improving nutritional status, feeding children and infants, improving welfare for the elderly, educating people on agricultural techniques and providing seeds and fruit tree seedlings
  - Must develop aiding strategies to make North Korea cooperate in local monitoring for the sake of their own human security

### (3) Sub-conclusion: Author's Presumptions

- o Considering the internal trend, relatively poor medical facilities and the lack of prevention supplies, and the North Korean people's nutritional imbalances, North Korea's claim of being a clear zone is not reliable
  -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prolonged isolation, consequent lack of openness, and the complete closure of borders in January due to COVID-19 might have ceased the spread of the virus
  - Still, North Korea has actively attracted tourists and the Chinese people have responded favorably, so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 has surged in the past two years. This hints at the proliferation of COVID-19 in North Korea
  
- o North Korea is predicted to be exposed to dire threats of the spread of COVID-19
  - If the speed and scope of spread goes ou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ontrol, it is predicted to be a sizable



health security threat to countries around North Korea including South Korea

- Hence, even when considering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preemp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pread of COVID-19 in North Korea is necessary
- For North Korea, too, the further acceleration of economic stagnation and the breakdown of the healthcare system is detrimental to the stability of its political system. Hence, if the time and pretext is appropriat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actively seek cooperation on healthcare

### 3. Measures of ROK-DPRK-US Tripartite Cooperation

- o Considering the prospects laid out, I propose the following cooperative measures for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to eradicate COVID-19 and achieve health security
  - △ Supply 'smart medical ships' △ Produce masks and prevention supplies at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 Support North Korea's self-sufficient production of COVID-19 related medical supplies △ Support the integration of North Korea's medical information system △ Jointly develop an East Asian Infectious Disease and Disaster Early Warning System

#### (1) Smart Medical Ship

- o A smart medical ship capable of remote monitoring and equipped with medical devices, software, and communication devices would navigate the North Korean waters, providing prevention support and remote medical servic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 o \* In celebration of its 60<sup>th</sup> year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Brazil to provide remote medical services to the residents of the Amazon basin who are medically disadvantaged, South Korea began developing smart medical ships since September 2016 and completed it on February 13, 2020. It is successfully in operation. (Electronic Times, February 14, 2020)
  - Prior consultation with North Korea on anchorage: West Sea – Nampo, Onchon, Sinuiju/ East Sea – Tongchon, Wonsan, Danchon, Myongchon, Chongjin
  - \* Utilizing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funding to DPRK, we could consider those that participated in developing the Brazil smart medical ship –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among others – participate in this project

#### (2)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s International Medical and Quarantine Hub

- o Facing a global health crisis, if prevention supplies such as masks and hand sanitizers were produced at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exported or provided as humanitarian aid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North Korea will be able to improve its standing in the international aren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ill likely improve as well
  - If masks can be provided under the label "Made in Kaeseong" to the United States where national emergency has been declared, it will help North Korea improve its national image and als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 This will foster North Korea's involvement in humanitarian issues, influence western countries'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especially help change the American people's conservative perceptions of North Korea

### **(3) Supporting North Korea's Independent Production of Essential Medical Supplies**

- o Utilizing the "global pandemic" declaration as a chance to develop generic drug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 Declaration of a "global pandemic" frees pharmaceutical products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lowing anyone to create generic drugs to combat infectious diseases
  - \* Pharmaceutical patents are generally acknowledged for 20 years, but can be cancelled for the public interest such as the national right to health
  - \*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1995), which went into effect as par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Addendum, has a compulsory execution clause (TRIPs Art 31-(b):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 The "global pandemic" declaration by the WHO frees North Korea from having to pay royalties for medical supplies
  - However, this requires North Korea to possess the ability to produce generic drugs in the first place
  - While humanitarian aid is exempted from sanctions, the supply of medical supplies and base materials and the transfer of intangible technology for producing drugs can be subject to sanctions enforced against North Korea and export control, necessitating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4) Support the integration of North Korea's medical information system**

- o To tackle the stalemate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high politics level, it can be meaningful to pursue private organization-based multilateral cooperation at the low politics level on issues like health security which poses little potential for clash of interests
  - Hence, I propose supporting North Korea's modernization of its medical information system which can help lower North Korea's guard and meet demands in terms of health security
  - According to th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s White Paper on North Korean Healthcare (June 2020), improving North Korea's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requires enhancing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capacities through integration of medical information system rather than providing humanitarian aid in the form of medical supplies as done in the past
  - Improvement in the medical information system allows for a more efficient analysis of vaccination records and other major medical data according to region or age. This allows for quick policy decisions agains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fectious diseases

### **(5) Joint Development of an Early Warning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and Natural Disasters in East Asia**

- o Infectious diseases like COVID-19 are expected to break out periodically in a global scale, so developing a regional-level infectious disease cooperative system that can supplement the global (WHO) and the national (Center for Disease Control) institutions should be pursue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under a multilateral framework

- Limiting the security threats from infectious diseases requires not only speedy and accurate information gathering but also thorough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infection spread models that increase prediction and response capabilities
- Like the EWRS (Early Warning Response System) in Europe, it is critical to develop an international health security surveillance system and initial reaction capaciti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that can establish initial response alert and response system and share and analyze infectious disease-related information with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 4. Conclusion

- o The materialization of the five measures commonly requires prior consult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 South Korea-U.S. cooperation must precede inter-Korean health security cooperation
- o With health security threats appearing as a common enemy for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U.S. relations can take this opportunity to expand the scope of inter-Korean cooperation
  - Grounded upon inter-Korean health cooperation, South Korea can propose a comprehensive cooperation package including agricultural, forestry, and separated family reunion cooperation
  - While disagreement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i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the three countries can find a common ground on overcoming COVID-19 through joint security and create a precedent on cooperation, using the precedent as a potential momentum for strengthening empathy and cooperation on the nuclear issue
  - With elections coming up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is important to keep a long-term, forward-looking attitude toward relations with North Korea

# 토론자 Discussant



김태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Tae-Kyung KIM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김태경(Tae-Kyung Kim)은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에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남북한 사회통합 및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역사적 형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북한 정치, 대외관계, 남북관계 등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로 냉전 초기 북한의 체제형성 과정에 존재했던 다양한 '평화공존'의 담론들, 군비축소 및 한반도 차원의 연합/연방 담론, 평화적 건설 및 자립을 위한 당시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남북관계의 재구성과 관련해, 자연재해, 식량안보, 보건의료 등 인간안보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내부 최근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Tae-Kyung Kim is currently a research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Studies, Seoul, South Korea, conducting researches on inter-Korean social integration and the peace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She is a Ph.D. in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her dissertation on "The Koreanization of Socialist Realism" in North Korea: The Making of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of Party in Literature." Her rec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verse discourses and practices in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the Soviet "peaceful coexistence" policies during the early Cold War, covering various themes of disarmament, confederation/fed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ful economic development in line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ddition to the researches on past alternatives, once buried but having potentials to be revisited, Tae-Kyung is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es on the post-COVID-19 inter-Korean relations, especially examining the recent changes in North Korea in terms of responding to human security issues.



**아담 마운트** 미국 과학자 연맹 선임연구위원, 안보 태세 프로젝트 국장

**Adam MOUNT** Senior Fellow, Director of the Defense Posture Project,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FAS), USA

아담 마운트 박사는 미국과학자협회(FAS)의 선임연구원이자 안보 태세 프로젝트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마운트 박사의 연구 분야는 미국 핵 전략, 전력 구조, 재래식 억제, 진보 외교 정책이다. 미국과학자협회(FAS) 이전에는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위원과 미국외교협회(CFR) 스탠튼 핵 안보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2015-16년에는 1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마이크 뮐런 제독과 샘 년 상원 의원이 의장을 맡은 미국외교협회(CFR)의 미국 대북 정책 독립 태스크 포스를 기획하기도 했다. 2018-19년에는 안드레아 버거와 함께 대북 정책 관련 미국과학자협회(FAS) 국제 연구 그룹을 기획했다. 이 그룹은 미국 및 동맹국 출신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핵 무장한 북한을 관리하는 합의 전략을 발표하였다.

마운트 박사의 글은 *Foreign Affairs*, *The Atlantic*, *Survival*, *Democracy* 등의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Axios Expert Voices*에서는 기고자로 활동 하고 있다. 그의 분석글은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Wall Street Journal*, *Politico*, AFP, AP, Reuters에 정기적으로 인용되어왔고, CNN, MSNBC, BBC, NPR, CNBC 등지에 출연해왔다. 마운트 박사는 전략 군에 관해 미국 하원 군사 분과위원회(소위원회)에서 증언해오고 있다.

마운트 박사는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연례 세미나에서 핵 전략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전에는 조지 타운 대학교에서 국제 윤리에 대한 강의를 했다. 리드 컬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조지타운 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Adam Mount, Ph.D. is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the Defense Posture Project at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where his work covers U.S. nuclear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conventional deterrence, and progressive foreign policy. Previously, he was a Senior Fellow at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a Stanton Nuclear Security Fellow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 2015-16, he directed the CFR Independent Task Force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group of seventeen experts chaired by Adm. Mike Mullen and Sen. Sam Nunn. In 2018-19 he directed, with Andrea Berger, the FAS International Study Group on North Korea Policy, a group of twelve exper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countries who presented a consensus strategy to manage a nuclear-armed North Korea.

Dr. Mount's other writing has been published by publications like *Foreign Affairs*, *The Atlantic*, *Survival*, *Democracy*, and he is a contributor to *Axios Expert Voices*. His analysis is regularly cited by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Wall Street Journal*, *Politico*, AFP, AP, and Reuters, and he has appeared on CNN, MSNBC, BBC, NPR, and CNBC. He has testified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subcommittee on strategic forces.

Dr. Mount teaches an annual graduate seminar in nuclear strategy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previously taught international ethics at Georgetown University. He holds a Ph.D. and M.A. from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at Georgetown, and a B.A. from Reed College.



## Session 8-2

### 한반도 해양수산 평화경제-동·서해안 벨트와 공동특구 활용방안

## Peace Economy from the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East·West Coa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

주관기관  
Organized B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좌장  
Moderator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  
Jong-Deog KIM Vice President of Research, Korea Maritime Institute

발표자  
Presenter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In Joo YOON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토론자  
Discussants

김영관 팬스타그룹 대표  
Young Kwan KIM General Representative, PanStar Group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Kyung-Ae PARK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angjun LEE Senior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장  
SungWoo LEE Director General, General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8-2)

## 한반도 해양수산 평화경제-동·서해안 벨트와 공동특구 활용방안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서 신경제구상 및 국토종합계획(5차)의 동해안 벨트와 서해안 벨트,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를 활용한 한반도 해양수산업 발전과 남북 및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북한산 모래와 수산물 반입,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한 항로운항 및 남포항 등 항만개발, 대북제재 예외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의 추진 필요성과 문제점 진단, 대안과 해결책 논의. 향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및 개별관광 추진에 대비한 동해관광공동특구 등을 통한 연안지역발전 및 해양수산협력과 평화경제 실현방안을 논의한다. 서해안은 중국의 일대일로, 동해안은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할 것이다.

## Peace Economy from the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 East·West Coa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

This is a round-table talk to discuss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to substantialize Peace Economy in the East and West Coa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 focusing o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and related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will review the past experiences such as import of North Korean fishery products and sea sand, development of sea routes and ports based on the Inter-Korean Agreement on Marine Transport, Rajin-Hassan Logistics Partnership Project, etc. and address the necessities, drawbacks, and alternative solutions to resume these projects. Discussants are also invited to share their opinions on the development of SEZs in the coastal areas in the light of local development, and maritime and fisheries cooperation including East Coast Joint Special Tourism Zone in the wake of forthcoming opening of Wonsan-Kalma Coastal Tourist Zone and individual tour of South Koreans.

# 좌장 Moderator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

**Jong-Deog KIM** Vice President of Research, Korea Maritime Institute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북태평양을 포함한 북극 정책 연구 프로그램 등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여러 전략 및 연구부서의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해안 및 해양 정책, 국제 해양 환경에 대한 여러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대 학사, 석사를 거쳐 니혼대에서 해양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Jong Deog Kim is the Vice President of Research in Korea Maritime Institute which is a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in Republic of Korea. He served as division directors of several divisions including strategy research division. And he was the Arctic policy research program manager including North Pacific Arctic Conference in Korea Maritime Institute. He led and participated in several national projects on coastal and ocean policy, and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relations in his research career. Kim has a Ph.D. in Oceanic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in Nihon University, a M.A. and a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표자 Presenter



**윤민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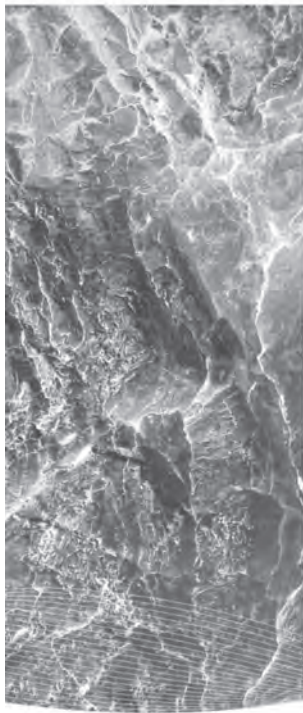
**In Joo YOON**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를 거쳐 종합정책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며 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과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평가위원,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교육훈련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산업분과 전문위원, 해양수산부 황해광역해양생태계 거버넌스분과 전문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주제는 북한 경제, 사회, 관광, 체제전환, 남북 해양수산협력 등이다.

In Joo Yoon is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General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She is an advisor of Advisory Committee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a member of Beach Evalu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and a member of Evaluation Committee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of Busan Metropolitan City.

She used to serve as a member of Expert Committee for Industry unde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a member of Governance section committee for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 project by MOF, a member of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efore joining KMI, she was a senior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Peace Affairs. She obtained her Ph.D. from the Korea University, majoring North Korea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maritime industry – especially tourism,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issues, and North Korean economy and its transition,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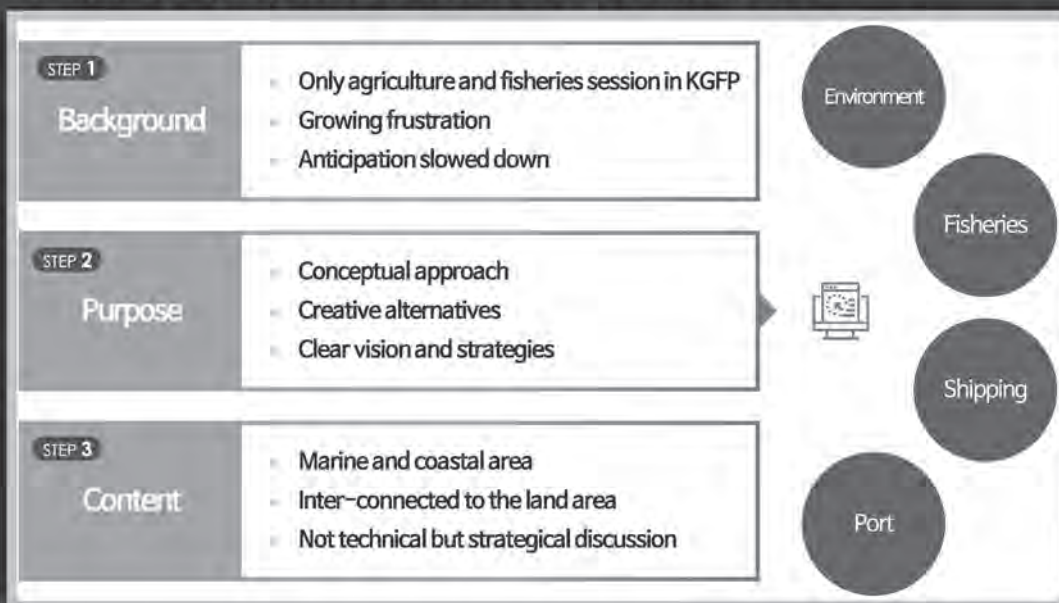
# KFGP 2020

## Peace Economy in the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East-We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

한반도 해양수산 평화경제:  
동서해안 벨트와 공동특구

YOON In Joo  
Sep. 9, 2020

### PEACE ECONOMY from the Coastal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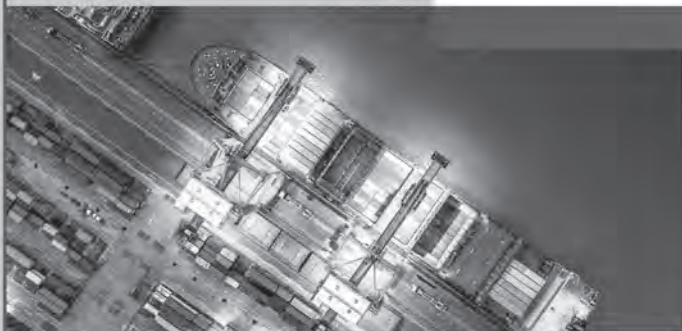
# Content

- I Peace Economy
- II Prospects in Coastal and Marine Areas
- III East·We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

CHAPTER

# I

# Peace Economy



평화경제

- 01 Official Comments
- 02 Other Ideas
- 03 Implication and Limitation
- 04 Additional Ideas



# Peace Economy

<p>STEP 1 Official comments</p>	<p>☑ Moon's Vision of Peace Economy</p> <p><b>"PEACE and the ECONOMY are synonymous."</b> - Aug. 15, 2018</p>	<p>☑ Content of Peace Economy</p>
<p>STEP 2 Other Ideas</p>	<p><b>"We aim to establish a PEACE ECONOMY in which prosperity is achieved through peace and also complete our liberation."</b> - Aug. 15, 2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ecial Unification Economic Zone</li> <li>▪ East Asian Railroad Community</li> </ul>
<p>STEP 3 Implication &amp; Limitation</p>	<p>Moon pledges to establish prosperous PEACE ECONOMY</p>	

# Peace Economy

<p>STEP 1 Official comments</p>	<p>☑ Peace Economics</p> <p>"economic science used for [a purpose that] prohibits [war] as an instrument of settling conflicts between nations and [to organize] the world in a way that warfare is punished" - Economics Nobelist Jan Tinbergen(1994)</p>	<p>☑ Korea Peace Economics</p> <p><b>"a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Y"</b> - Yeon-cheol Kim(2006)</p>
<p>STEP 2 Other ideas</p>	<p><b>Capitalist PEAC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li> </ul> <p><b>Trade Politic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na and Taiwan</li> </ul>	<p><b>Cost of war Price of PEACE</b></p> <p><b>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b> - Min Cho(2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tween the Sea Power and the Land Power</li> <li>▪ Strategic hubs and Development cooperation</li> </ul>
<p>STEP 3 Implication &amp; Limitation</p>	<p>Theoretical framework for PEACE ECONOMY</p>	

# I Peace Economy

STEP 1  
Official  
comments

STEP 2  
Other  
ideas

STEP 3  
Implication  
& Limitation

☑ Implication

- Interaction
- Tightened economic tie
- Vicious cycle in the short term

☑ Limitation

- Not proportional
  - Less trust in military issues
- Nuclear & sanction
  - International politics
- Sustainability
  - Domestic politics

PEACE ECONOMY, old but new conceptual approach

7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I Peace Economy

**Vision & Consensus**

- What comes up when hear?
- How much we can bear?

**International/  
Regional  
Environment**

- Participation of U.S. & China
- Common interest of Japan & Russia

**Theoretical &  
Experimental  
Evidence**

- More robust logical loop
- More diverse sites and pilot projects

**Additional Ideas**

8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HAPTER

# II

# Prospects in Coastal and Marine Areas



연안·해양 프로젝트

- 01 Marine Resources
- 02 Fisheries
- 03 Shipping & Logistics
- 04 Ports



## II

# Prospects in Coast and Marine Areas

## Marine Resources

AS-IS

Both are inter-connected

South

Efforts to control already caused coastal urban sprawl

North

Under-developed coastal areas facing disasters & upcoming rapid development



TO-BE

### SDGs & Sustainable growth

- Integrated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of the Peninsular
- Safe and sustainable coastal spaces
- Managing capabilities on marine resources and territories





II

## Prospects in Coast and Marine Areas

### Fisheries

**AS-IS**


**Both needs breakthroughs**

**South**

Lack of resources & manpower, cold water fish

**North**


Worn-out fishing boats, gears, & facilities



**TO-BE**

**Revamping & Potential growth**

- Establishment of co-management base and improvement of production capabilities
- One-stop system of processing-distribution-export
- Inland and cold water aquaculture



II

## Prospects in Coast and Marine Areas

### Shipping & Logistics

**AS-IS**



**Both has its own weaknesses**

**South**

Rebuilding shipping industry after 2017 crisis

**No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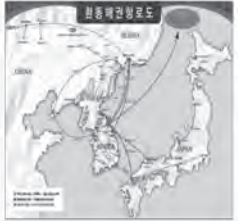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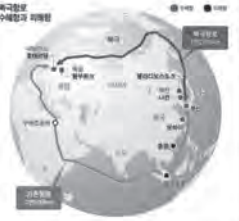
Separation of west & east coastal areas

**TO-BE**

**Interconnection & Potential growth**

- Inter-Korean route to Asian Highway and TSR
- Multimodal transport
- Advantageous position in Arctic Shipping Route

# Prospects in Coast and Marine Areas

## Ports

**AS-IS**

**Both needs each other**

**South**

Driv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North**

Drive on economic special zones

**TO-BE**

**Time-efficiency & Potential growth**

- Export driven economic growth
- Coastal industrial complex
- Strategical position in North East Asian Logistics

Strategies developed and differentiated for each specific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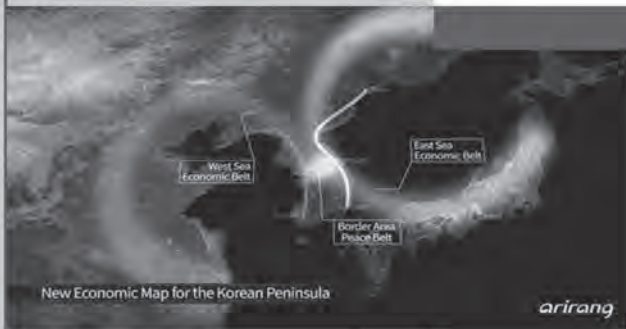
**Eastern Sphere**  
Russia Far East, Three Northern Provinces, and China

Establish a genuine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Russia by increasing economic cooperation.

CHAPTER

# III

## East·We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



동·서해안 벨트와 공동특구

- 01 Issues
- 02 East & West Economic Belts
- 03 East & West Joint Special Zones
- 04 Coastal & Marine Areas
- 05 What's Next



### III East·We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

#### Issues after 15 years since mid 2000s

- No concrete vision and shrewd strategies
- Social, economic, technical securities
- Ever strong constraints on Peace Economy

15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III East·We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

#### East & West Economic Belts

**Clear vision & Shrewd strategies** considering social, economic, technical securities, without breaking the sanctions

- Lessons learned
- Post COVID19
- Economic sanctions

**Accessibility & Marketability**  
 High in the West Sea (Risk to the North)  
 Low in the East Sea (Risk to the South)

- East Sea Economic Belt (Tourism, Natural resources, Energy)
- West Sea Economic Belt (Industries, Distribution, Transport)
- DMZ Peace Belt

16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East·We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

### East & West Joint Special Zones

Clear vision & Shrewd strategies considering social, economic, technical securities, without breaking the sanctions

Productivity, Inter-connectivity, and economic efficiency

- East Sea Tourism JSZ
- West Sea Economic JSZ



Accessibility & Marketability  
 High in the West Sea (Risk to the North)  
 Low in the East Sea (Risk to the South)

## East·West Belts and Joint Special Zones

### Coastal & Marine Areas

Clear vision & Shrewd strategies considering social, economic, technical securities, without breaking the sa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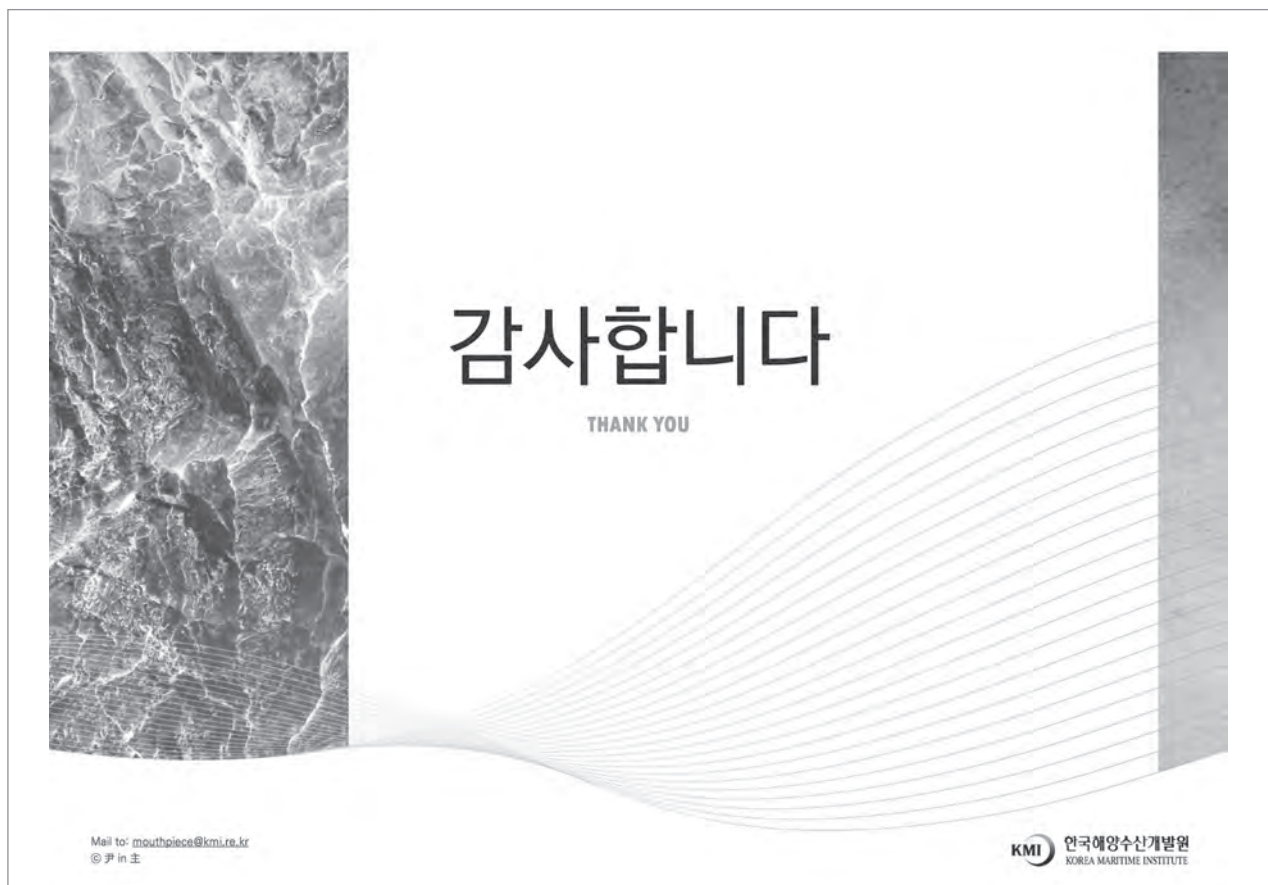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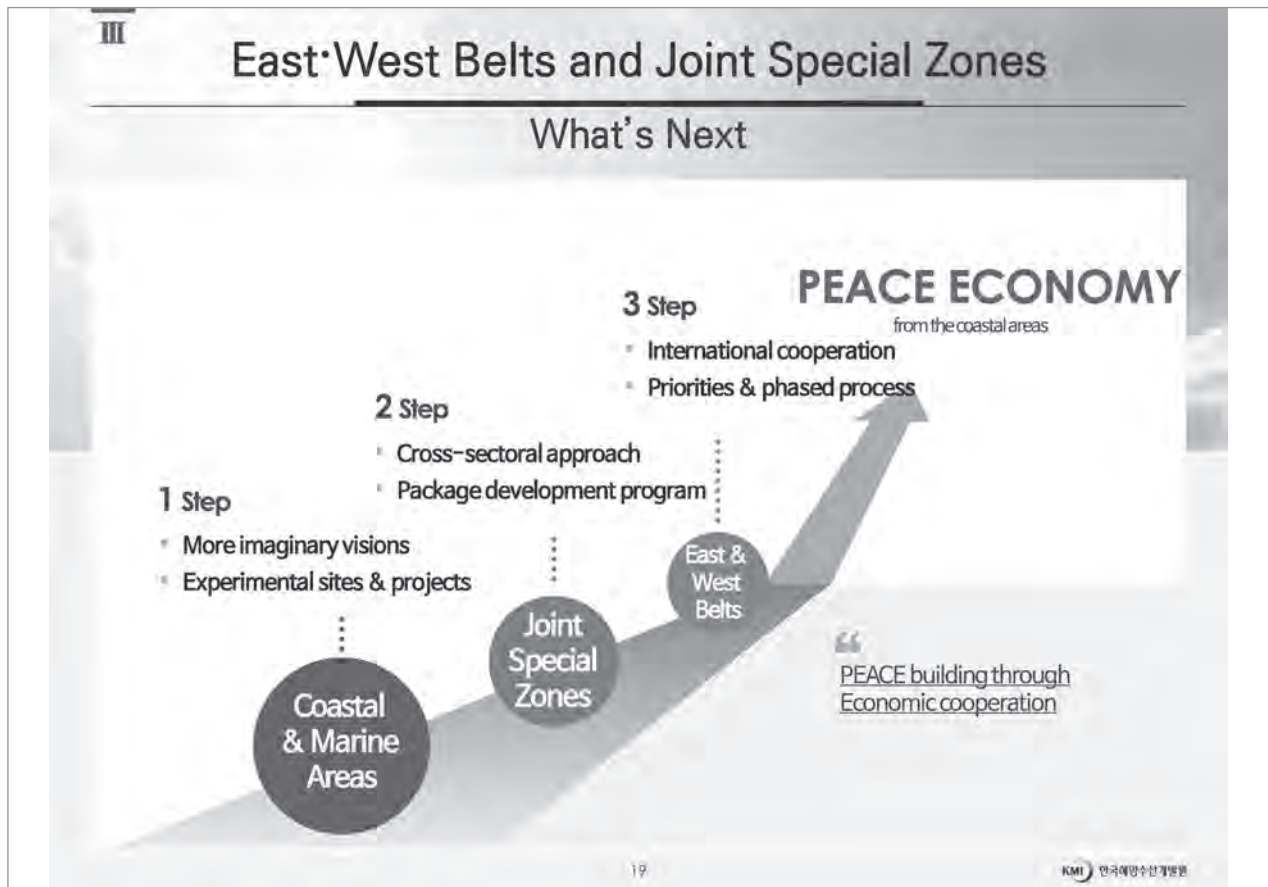
Value chain & Logistics chain transpiercing the whole sector

- SDG 14 Life below Sea
- Additional sea routes from JSZ
- Links to SEZ in ROK, DPRK, China, Russia



Accessibility & Marketability  
 High in the West Sea (Risk to the North)  
 Low in the East Sea (Risk to the South)

Productivity, Inter-connectivity, and economic efficiency



# 토론자 Discussant



김영관 팬스타그룹 대표

Young Kwan KIM General Representative, PanStar Group

현재 팬스타그룹의 대표로 북방사업과 국제특송사업(전자상거래)을 총괄하고 있으며 수소친환경에너지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북방사업은 부산~훈춘 간 항로 개설과 연변자치주의 조선족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나진·하산·훈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갈탄수소프로젝트가 주요사업이다.

Young-Kwan Kim, the general representative of the Panstar Group, oversees the Northern Project and the International Transitional Business (E-Commerce) and serves as the director of the Hydrogen Eco-energy Solution Research Institute. His major projects include the opening of a sea route between Busan and Hunchun, the cre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linked to ethnic Koreans in Yanbian Autonomous Prefecture, and the brown coal Hydrogen project in Rajin, Khasan, Hunchun regions.

## 토론자 Discussant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캐나다

**Kyung-Ae PARK**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박경애교수는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대학의 정치학교수로 동 대학의 《캐나다-북한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 소장을 맡고있고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북미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남북한의 정치, 대외관계, 여성과 사회발전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주요 편저서들로는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North Korea; North Korea in Transitio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New Challenges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Korean Security Dynamics in Transition; and China and North Korea: Politics of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등이 있다. 또한 Comparative Politics, Journal of Asian Studies, Pacific Affairs, Asian Survey, and Pacific Review 를 비롯한 여러 학술지들에 논문들을 기고하였다. 박 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수십차례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 학술대표단들의 캐나다방문을 주관하였으며 두 나라사이의 비공식 교류와 관계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10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에 《캐나다-북한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을 설립하고 매해 6명의 북한교수들을 초청하여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재정학, 산림과학, 환경과학등의 분야에서 6개월 과정의 학술교류를 10년째 진행해 오고있다. 이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은 북미지역에서 북한과의 전례없고 선구자적인 유일한 장기 학술교류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또한 평양에서 다수의 외국학자들이 참여하고 국제적인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경제특구와 지속가능한발전을 포함한 경제, 환경 관련 여러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하여 개최하였고 북한전역에 걸쳐있는 경제개발구등을 방문하며 외국학자들과 북한의 학자,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도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술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지식공유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학자들과 전문가, 관료들을 중심으로 북한학술대표단을 조직하여 해외에서 국제 워크숍들과 현장실습도 진행하였다.

Professor Kyung-Ae Park holds the Korea Foundation Chair at th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Global Affairs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She serves as the Director of the Canada-DPRK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KPP), which she founded in 2010. The KPP, a long-term knowledge sharing and academic exchange initiative with North Korea, has been hosting six North Korean professors annually since 2011 for six-month periods of study at UBC. The initiative represents an unprecedented, ground-breaking program in North America. Since the mid-1990s, she has made numerous trips to Pyongyang and hosted North Korean delegation visits to Canada, playing a key role in promoting track II exchanges and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She is a former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tudies in North America, and is the author, coauthor, and editor of many scholarly publications on issues ranging from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to gender and development. Notable publications include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North Korea; North Korea in Transitio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New Challenges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Korean Security Dynamics in Transition, and China and North Korea: Politics of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She has also authored articles in a number of journals, including Comparative Politics, Journal of Asian Studies, Pacific Affairs, Asian Survey, and Pacific Review.

# 토론자 Discussant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angjun LEE** Senior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이상준 박사는 국토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서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연구와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정책 연구로,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독일 베를린공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북한연구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Dr. LEE Sangjun is a Senior Fellow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where is served as Vice President from July 2017 to July 2019. Today he works at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Research Center under the KRIHS.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North Korea and national land development policy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He holds a Doctor of Engineering from Berlin Institute of Technology. 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 Studies and an adjunc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 Studies..



# 토론자 Discussant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장

**SungWoo LEE** Director General, General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도시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전공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개발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중국, 러시아, 동남아,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항만, 물류시설 개발관련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으며, 68개국 200여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4년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물류인프라 개선과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극동러시아 항만개발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부정책과제와 국제협력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He studied Urban Engineering and has long time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port hinterland area, free economic zone, and free trade area in South Korea. He also has many experience with developing infrastructure for logistics in China, Russia, Southeast Asia, Eastern Europe, Africa, and Latin America, having participated in more than 200 projects in 68 countries. Since his visit to North Korea in 2014, he has gained interest in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logistics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Currently he is part of various government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related to port development in the Far Eastern part of Russia.



# Session 8-3

##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 방안 Inter-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Realization of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Rural Research Institute

좌장  
Moderator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Bernhard SELIGER** Resident Representativ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발표자  
Presenters **팀 자카너크** 컨설턴트  
**Tim ZACHERNUK** Consultant  
**최 문** 연변대학교 교수, 중국  
**Wen CUI**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China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Kwan Ho KIM** Ph.D/Senior Researche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Rural Research Institute

토론자  
Discussants **백정민** 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Jung Min BACK** Director, Korea Peninsula Agro-Fishery Co-work(KOPA)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Hae Jung LEE** Manager of Center for Unification and Economics, Hyundai Research Institute  
**토마스비에지보프스키**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위원  
**Tomasz WIERZBOWSKI** Research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8-3)

##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를 두 축으로 하는 평화경제 시대를 제안하였다. 평화공동체의 시작점은 남북교류협력이며 현재 북한 농업은 농업생산기반 노후화, 농자재 부족과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등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 세션의 기획 의도는 실질적인 남북 농업개발협력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다.

## Inter-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Realization of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an era of peace economy that focuses on the peace and cooperation community. The starting point of the peace community is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Currently, North Korea's Agriculture has suffered due to dilapidated and poor Infrastructure,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 and floods. North-South agricultural cooperation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food problem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ing North Koreans. The planning intension of this session is to find creative ways for practical inter-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create an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 좌장 Moderator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Bernhard SELIGER** Resident Representativ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소장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NGO), 교육 기관, 공공 기관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산림, 생물 다양성, 유기농업, 친환경 개발 메커니즘 관련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이행 중이며 이를 위해 북한에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는 '북한 논평'(North Korean Review)의 편집위원이며 웹사이트 <[www.asianintegration.org](http://www.asianintegration.org)>의 창립 편집자이다. 10년 동안 남북 국경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에 대해 연구했고, 2015년 2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UNESCAP)에 비무장지대(DMZ) 전문가로서 참여했다. 2006년에는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울 명예 시민권을 수여 받았다. 2012년에는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 이행 공로를 인정받아 '한스자이델 재단'의 파트너인 강원도의 명예 강원도민으로 임명되었다.

Dr. Bernhard Seliger is currently representative of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based in Seoul, consulting NGOs, academic and public institutions in questions of unification. He frequently travels to North Korea, where he implements capacity-building projects, among others in forestry, biodiversity, organic agricult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He serves as associate of North Korean Review as well as founding editor of the website <[www.asianintegration.org](http://www.asianintegration.org)>. For 10 years, he has also work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in the inner-Korean border area and in February 2015 participated as an expert on the DMZ for UNESCAP. In 2006, he was conferred with honorary citizenship of Seoul by then mayor Lee Myung-Bak, who was later president of South Korea. In 2012 he became an honorary citizen of Gangwon province, partner province of Hanns Seidel Foundation, for implementing proj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border area.

# 발표자 Presenter



팀 자카너크 컨설턴트  
Tim ZACHERNUK Consultant

팀 카자너크는 지난 25년동안 저는 중국에서 다양한 농촌개발 및 빈곤완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서부지방에서 활동하였는데, 이시기에 중국의 급격한 발전과 시골지역 8억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농촌지역의 변화를 목격하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2018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농업발전을 위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 활동에는 자료검토, 정부기관 및 국제 기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국내회의, 협동조합 및 정부기관 현장방문등이 포함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2019년 4월부터 FAO/WFP 식량안보평가 임무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FAO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4개월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농촌발전을 위한 기회와 장애물의 일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포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할 기회를 준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For the past 25 years I have worked on a large variety of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projects in China, much of that work being at a local level. My work included all western Chinese provinces with the exception of Tibet. Over this time I've had the opportunity to witness and to participate first hand in China's rapid economic progress and the transformation of its rural areas as the country lifted 800 million people out of poverty.

In 2018 I was engaged by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o lead a team tasked with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DPRK. This exercise involved literature reviews, meetings in country with a wide variety of stakeholders in government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ield visits to cooperatives and government stations. Last year I spent over four months in DPRK working with FAO, including participating in the FAO/WFP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in April.

I believe my experience in China gives me a useful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some of the opportunities and obstacles for rural development in DPRK and I welcome the opportunity provided by this forum to share ideas with people who have greater knowledge of the DPRK.

Opportunitie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DPRK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Sept. 2020

Tim Zachernuk  
Consultant  
tim.zachernuk@gmail.com

### Self-introduction

Canadian, studied Chinese (BA) and economic development (MA) at UBC in Vancouver.  
Now living in China.

### Rural Development

- 25 years engaged in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work in China for various agencies in all western provinces except Tibet
- Witnessed and contributed to China's rural transformation starting in 1985

### DPRK Experience

- 2018 team leader for internal FAO agriculture sector review for DPRK
- 2019 three visits to DPRK totaling over four months in-country, including participation in FAO/WFP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1.a Understanding the agriculture sector

Never enough knowledge, but the more the better:

- Physical conditions (weather, soil, water)
-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 Different stakeholders, their objectives and their incentive systems
  -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 Opportunities, constraints
- Avoid preconceptions and biases

1.b Understanding the agriculture sector

- Understanding the supply chains for products
  - Access to inputs: seeds, machinery, fuel, agro-chemicals, investment resources
  - Distribution of products
  - Post-harvest handling, storage, transport, processing
  - Organizational responsibilities – sectoral and hierarchical
- 中央有政策，地方有对策  
“The center has measures, and locally there are counter-measures”

## Threshing machine and the threshing floor

Centralized threshing machine and threshing floor:

- Crops carried from field to threshing floor for threshing and bagging.
- Efficient processing (but dependent on mechanized transport).
- Also serves purpose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by authorities.

But without good transport:

- Increased post-harvest losses.

Solution?

- Mobile threshing machines?



### 2.a Insights on agriculture in DPRK

- Know your interlocutor
- Planning: targets, inputs and distribution
  - National, provincial, county and farm
  - Different products – different agencies
- Silos and segmentation: every sector promotes itself
- Distribution systems: PDS, requisitioning and markets
  - We don't know the size or extent of different channels, but it is clear that different mechanisms are used for distribution of different products.

### 2.b Insights on agriculture in DPRK

- Understanding cooperative management
  - Autonomy of cooperative management
  - Internal decision making on the cooperative
  - Internal distribution mechanisms
  - Cooperative managers – local or transferred
  - Cooperative technicians
- Field responsibility system
  - Extent of reform unclear, but it not comparable to China's rural reform
- Private plots

## Cultivation of sloping lands

Sloping lands fall between chairs in terms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 For farmers hillsides provide an opportunity to supplement incomes.
- Environmentally it is potentially a disaster.

Solution?

- Introduce cultivation practices which ar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which serve the interests of local people.



### 3.a Thoughts on potential interventions

- Target sub-national levels of administration: county and cooperative
- Provision of production materials in short supply: pipes, pumps, plastic, machinery, fertilizer
- Quality seed for vegetables, seedlings and saplings for orchards and forestry
- Small livestock: (poultry, pigs, goats, rabbits, bees)
- Inland fish farming (training and supplies) (seems to fall between chairs)
- Food processing using simple, low investment technology (starch noodles, drying, pickling etc.)
- Inputs and training to promote integrated production systems (crops, livestock, forestry etc.)

### 3.b Thoughts on potential interventions

- Increase production while increasing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and disaster (drought resistant crops and varieties, soil health, water harvesting etc.)
- Complementarity with government programs (eg. forestry, livestock. Not private plots or households)
- Broad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inputs (eg. seeds, cuttings, animals), horizontally and vertically
- Urban agriculture

## Providing production inputs

Greenhouses extend the production season.

Growing seedlings in greenhouses creates opportunities for double cropping by planting greenhouse seedlings in open fields.

Training in greenhouse technology and greenhouse management can be adapted to small scale greenhouses on private plots.



Final thoughts:  
Challenges in the agriculture sector

- **Development vs. humanitarian**  
Support for humanitarian but not development aid >>> money spent to import food aid but nothing to increase local production of food
- **Empowerment**  
Create opportunities for local “counter-measures”

---

# Thank you!

Tim Zachernuk

E-mail: [tim.zachernuk@gmail.com](mailto:tim.zachernuk@gmail.com)

# 발표자 Presenter



최 문 연변대학교 교수, 중국

Wen CUI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China

최문교수는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이다. 연변대학교 한반도연구협동창신센터 연구원이기도 하며, 현재 조선 및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함께 한반도경제발전 관련 공동연구과제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Cui Wen is Professor in the college of Economics and Management at Yanbian University. He is also a researcher of the Co-innovation center for Korean peninsula studies. At present, he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joint research project concerning economic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various universities at North and South Korea.



# 한반도 평화경제와 남북중 3각 농업협력방안

중국 연변대학교 최문



I

한반도 평화경제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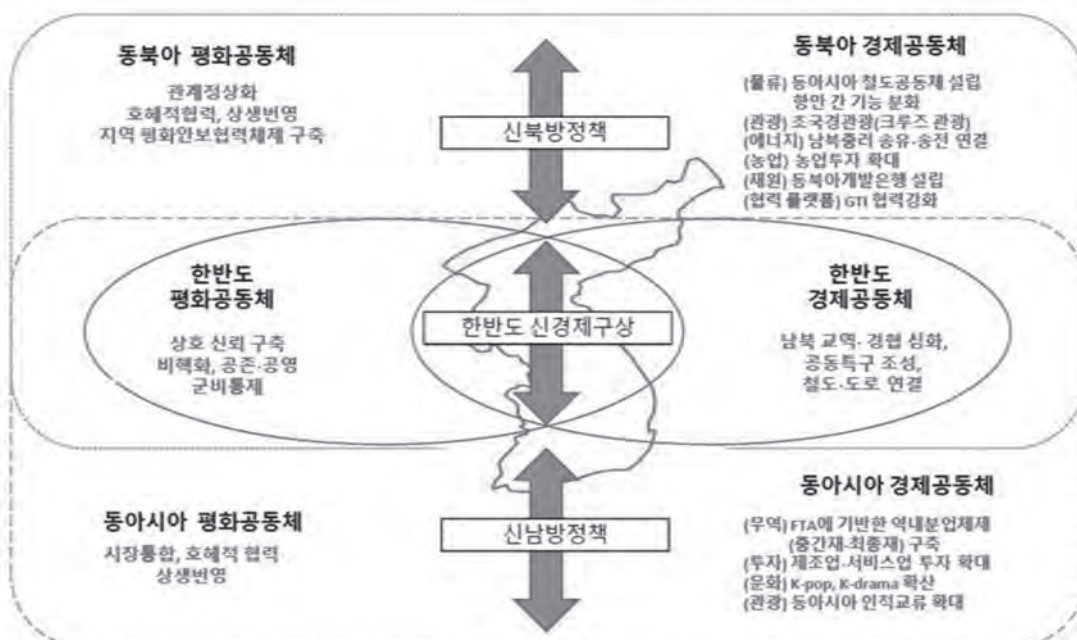
### 한반도평화경제의 취지와 목표

-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과 남북이 주도적인 평화협력질서를 구축하고,
- 한반도평화경제시대를 열어나가는것임.
  - 하나의 축: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임.
  - 다른 한 축: 안정적인 경제협력은 동북아평화구축을 더욱 공고히 할것임.
- 한반도 『평화-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할것임.

--- 여건 변화 ---



### 한반도평화경제의 비전



## 한반도평화경제의 추진원칙

### 1. 일상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한반도의 특수성(분단체제 지속),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 안보불안으로 남북교류협력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

### 2.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함

- 남북, 동북아, 동아시아 경제협력 촉진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요인을 제거,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이익을 창출하여 평화를 공고화함.

### 3. 이익공동체를 형성

- 남북은 물론 동북3성, 극동러시아와 교류협력 통해 사회·문화·경제분야 공동의 이익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익공동체'를 형성함.

### 4. 지역적인 확장

- 한반도 이익공동체 형성을, 동북아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산하도록 함.

4.

## Ⅱ 남북중 3각 농업협력의 추진방향

## 남·북·중 농업협력의 추진방향

- 남북중 농업협력은 북측의 식량공급 증가를 통해 민생을 개선하고,
-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북측 스스로의 식량자급 기반을 구축하며,
- 나아가 민생협력 및 호혜적 경험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남북중 농업개발협력은 북측의 구체적 실정에 기초해야 할 것이며,
- 북측에서 최근 실시하는 경제정책과 연계해야 할 것이며,
- 북측 농업의 자생력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6

## 북측에서 지목하는 농업발전 5대 요소

- 현재 북측 농업부문의 최대 과업은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 5대요소를 지목하고 있음. (노동신문 2019.12. 30)
- 1. 종자혁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는 것임.
  - 수확기가 높고, 비료를 적게 요구하며, 생육기일이 짧고, 피해에 잘 견디는 우량품종 육종.
- 2. ‘과학농사제일주의’로 농사를 과학화,수자화,기계화해야 함.
  -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과 영농공정 과학기술 요구에 맞게 농사의 집약화수준을 높여야 함.
- 3. ‘새땅찾기운동’으로 알곡생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계획된 논벼재배면적과 강냉이재배면적을 무조건 확보해야 함.
- 4. 저수확지에서 알곡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실리있고 효과적인 영농기술을 개발하며, 유일하고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5.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해야 함.
  -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체 힘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마음과 사업,감정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함.

7

## 최근 복측의 농업정책

- 2013년부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실행하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농장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그 수단은 바로 ‘포전담당관리책임제’임.
- ‘농장책임관리제’ 실시단위는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과 로력을 가지고,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자체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알곡현물분배와 현금분배를 실시하는 것임.
- ‘포전담당제’란 분조를 세분화해 3~5명으로 구성하여, 여기에 일정한 규모의 포전을 고착시켜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임. 영농차비부터 수확, 탈곡까지 모든 농사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농민들에게 현물·현금분배를 함.

8

## 최근 복측의 대외경제정책

- 현재 27개의 대외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설립해 대외개방을 추진.
- 농업관련 경제개발에서 이하 5개 개발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개발구	위치	면적 (Km <sup>2</sup> )	개발계획
머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머랑군	4.0	농축산기지, 채종과 육종을 포함한 농업과학연구개발기지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남도 북청군	3.0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
속천농업개발구	평안남도 속천군	3.0	우량품종 육종과 채종, 농산, 축산, 과수, 남새, 버섯 생산 및 가공, 농업기술연구개발
강령국제특색시범구	황해남도 강령읍	3.5	특색상업기술연구개발, 유기농산물 및 수산물가공
강남경제개발구	평양시 강남군	3.0	다수확 우량품종 육종과 사료생산, 첨단제품가공

9

### Ⅲ 남북중 3각 농업협력 방안

#### 1. 알곡증산과 직결된 종자와 비료의 농업협력

- 종자는 북측에서 지목한 제1대 농업발전요소이며, 농업개발구에서 우선적 추진 영역이고, 비료는 알곡증산의 불가결 요소임.
- 지난시기 한국의 식량자급에 결정적 역할을 한 요소는 1970년대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의 보급이었음. 생산성 30% 향상
- 북측에서는 비료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며, 2018년 8500만 달러, 2019년에 4300만 달러의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였음.
- 남북중이 합심하여 북측에 적합한 다수확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충족한 비료 지원이 실행될 경우, 농업생산성은 30%이상 제고될 것이며,
- 이러한 경우, 식량자급문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2. 북측 농업개발구에서의 남·북·중 시범농장의 운영

- 국제지원은 한 국가의 국제영향력과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키며, 따라서 외교와 국제관계 발전전략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제4위 대외지원국이며,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빈곤감소와 민생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 한국은 세계 11대 경제강국으로서 2019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약 25.2 억달러로 세계 '공여국클럽' 29개국 중 제15위임.
- 남북중 농업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주체가 필요함.
- 남북중 농업협력은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일 것임.

12

- 북측은 이미 어랑·북청·숙천·강령·강남 등 농업관련 경제개발 구를 설립하고, 농축산기지·복합영농단지·우량품종육종단지로 건설하고자 함.
- 경제개발구에 남북중이 협력하는 시범농장을 건설할 경우, 농자재와 농산물, 농업생산기술과 전문가 등이 교류하는 종합적 협력사업으로 북측 농업발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또한 시범농장은 지원성격의 협력사업으로의 추진이 바람직함. 지속성
- 이럴 경우, 운영소득이 단기적 수익창출보다 북측 농장과 농장원들에서 돌아가 적극성이 더욱 높을것임.
- 또한 주변 농장에 대한 파급효과도 더욱 클 것임.
- 따라서 이는 정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함.

13



중국 북대황그룹(北大荒)은 2012년 북측의 나선경제특구 560정보의 농지에 ‘고효율 농업시범구’를 설립하고, 벼 생산량을 2배이상 증가시킨 경험이 있음.

비결은 첫째, 모내기전 모를 온실에서 육성하여 종자가 전보다 건실하였음.

둘째, 토질이 나쁜 상황에 기초해 비료를 충분히 제공해 줌.

셋째, 여러 예방약부터 시작해 시기마다 질소·린·칼륨 등 원소를 공급함.

넷째, 살초제를 많이 써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풀을 약으로 잡았음.

북측 최병록사장에 의하면, 농업시범구에서의 협력을 통해 벼생산량을 1정보에 9톤이상도 생산할 수 있다는 신심을 얻게 되었음.

### 3. 주요 곡창지대에 ‘농업기술시범센터’를 설립

- 북측에서는 ‘과학농사 제일주의’ 구호하에 주요 협동농장에 ‘과학기술보급실’을 운영하고 있음.
- 이와 연계하여 중국과 한국은 북측 주요 곡창지대 협동농장에 ‘농업기술시범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베냉, 모잠비크, 수단, 라이베리아, 르완다, 라오스, 동티모르 등 17개국에 농업기술시범센터를 설립한 적이 있음.
- 중국 룡평과학농업회사(隆平高科)는 라이베리아에 농업기술시범 센터를 운영해 잡종벼 7.5톤/Km<sup>2</sup> 산량을 기록, 생산성을 대폭 높임.
- 한국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개발도상국가에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지역 20개 개발도상국가에 ‘코피아센터’를 설치하였음.

- 중국과 한국은 이미 개발도상국에서 10여년간의 해외농업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그 설치이전보다 평균 30~40% 향상시킨 경험과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
- 북측의 지형조건과 북측 농장 특성에 맞는 과학농기계와 현대 영농 기술 및 이용방법,
- 비료와 농약의 적시적지 사용 등 맞춤형 농업기술의 보급과 개발은 북측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16

#### 4. 농업생산재 현대화와 농업기반건설 확충 협력

- 북측 농업 생산성이 낮은 원인중 하나는 현대화 영농기자재 부족과 농산작업에서의 기계화 비중이 낮아 적기적작의 시기를 놓치는 것임.
- 북측이 짧은 시간 적은 원가로 중국·한국이 축적한 현대화 농기자재 생산기술을 획득하게 되면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
- 국제제재로 투자가 금지된 상태에서 제조기술이전이 필요함.
- 북측의 '새땅찾기운동' 과 연계해 농업생산기반건설 확충에 지원을 하여 유실·침수된 농지를 복구하고, 또한 자연흐름식 물길개조공사 지원도 필요함.



이동식 탈곡기

배양식분무기

모내기 기계

자연흐름식 물길건설



### 5. 농업기술인재 육성과 농업인력 교육협력

- 북측 농업의 자생력 발전과 장기적 발전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인재의 육성과 농업인력에 대한 교육협력임.
- 현재 많은 북측 인재들이 중국 농업과학원과 첨단 농업시설을 고찰하고, 중국전문가들도 평양을 방문하고 있음. 중국유학과 기술육성프로그램
- 중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측에 농업과학기술 교육기관을 설립, 혹은 동북3성에서 북측 농업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면 북측의 장기적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감사합니다!

# 발표자 Presenter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Kwan Ho KIM** Ph.D./Senior Researche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Rural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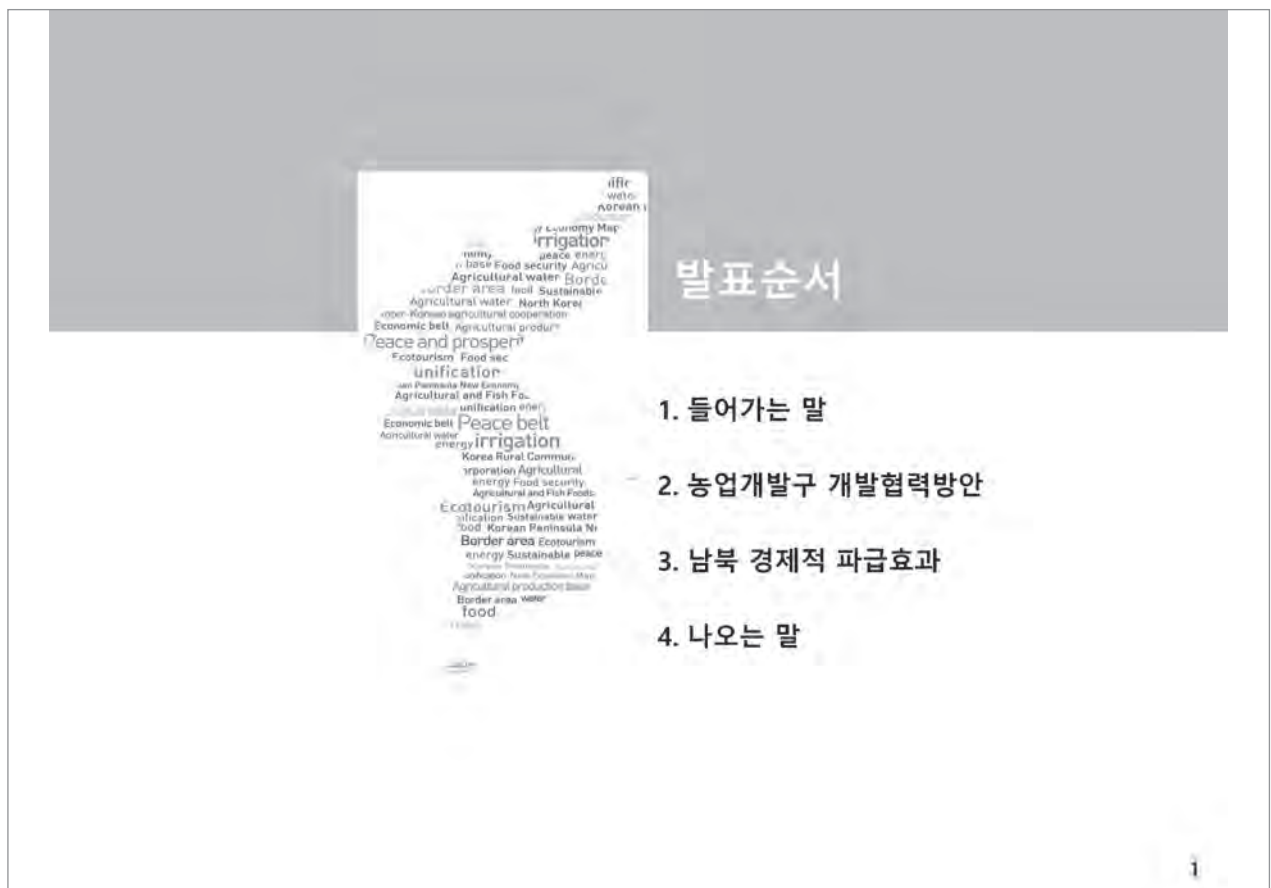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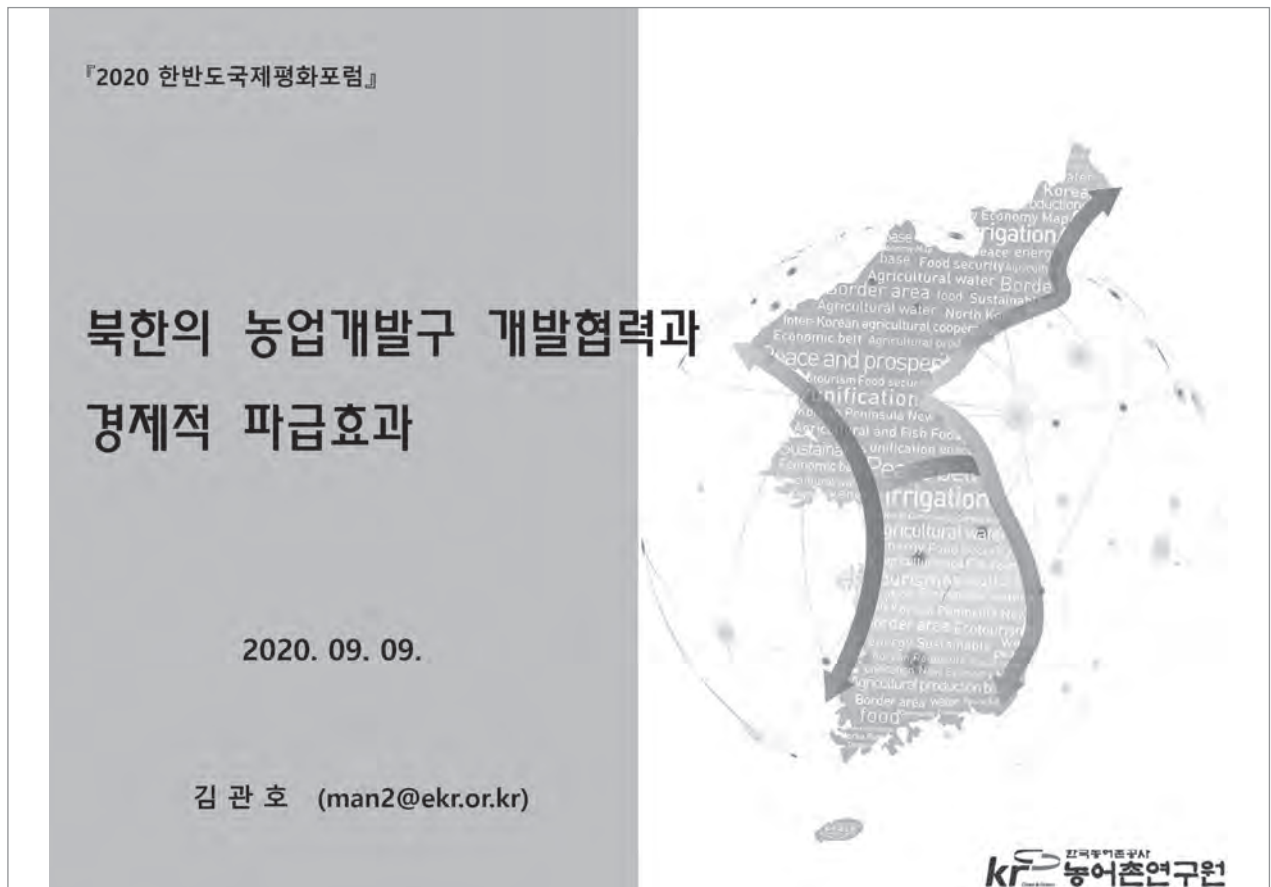
김관호 박사는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농업개발협력 등과 관련한 남북당국간 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연구를 통해 발굴하였다. 그는 접근불능지역인 북한의 인공위성사진과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농업생산기반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농업개발구) 배후지역 조성모델에 대한 남북농업개발협력방안을 다수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는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북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대학원(농업시설학 및 구조)을 졸업했다.

In addition to his fellowship, Dr. KIM Kwan-Ho also serves as an advisor o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establishing a variety of networks related to North Korea's agriculture and performing prolific activities.

He focused on research to design practical and detailed plans in preparation for implementing inter-Korean projects, such as the maintenance of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in North Korea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He also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and land use by utilizing satellite imagery and digital topographic maps of the areas that are inaccessible. He proposed a number of measures for inter-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specially on models for neighbouring area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s). Dr. KIM Kwan-Ho demonstrated his strong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particularly by conducting research on improvement of rural living environments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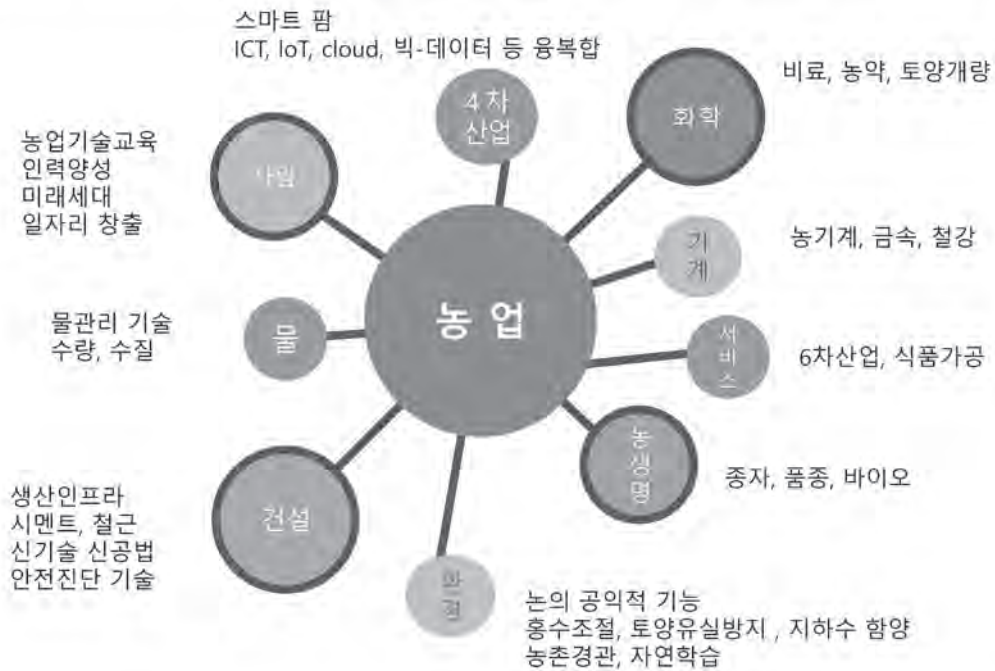
He graduated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with a major in Agricultural Equipments and Structures.



### 발표순서

1. 들어가는 말
2. 농업개발구 개발협력방안
3. 남북 경제적 파급효과
4. 나오는 말

농업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만은 아님. 타 산업과 연계성이 매우 큰 산업임



남북한 농업상생은 남북 모두에게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노동신문 사진으로 본 주요 농업 기반 추진 현황



중평남새온실농장 내부(2019.12.31)



순천린비료 공장준공(2020.05.02)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완공(2020.0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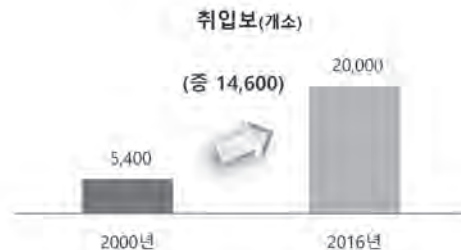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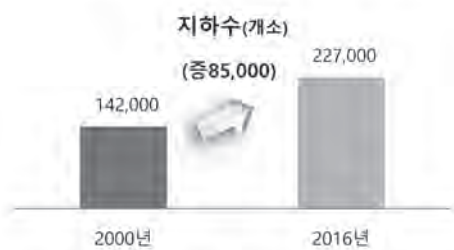


평북서해간석지 건설 박차 (2020.06.21)

사진출처 : new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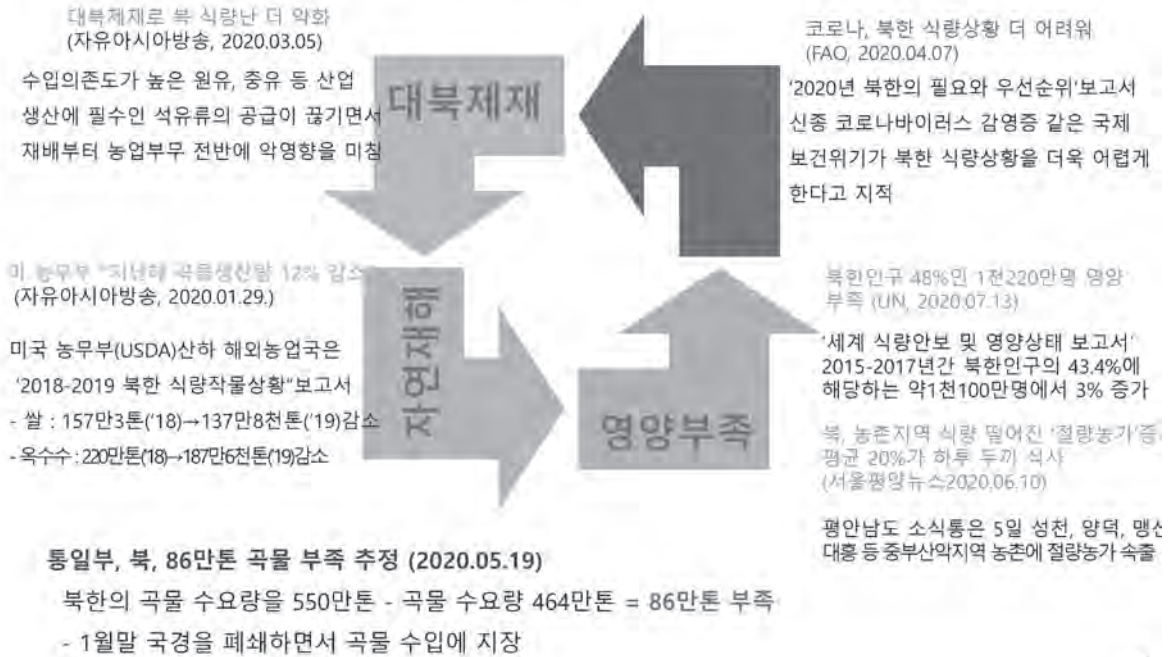
북한의 주요농업생산기반시설 추정 통계 자료

← 알수장 36,100개소는 변화가 없음



출처 1)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농업기반공사, 2000)  
2) 통일농업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농어촌공사, 2016)

## 올해 북한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식량사정



##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중 농업과 관련된 개발구



### 속천농업개발구 투자제안서

#### <기본개요>

이 대상은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 기본으로 경제발전이 집약화된 경제개발구를 건설 목적

#### <상세소개>

**개발방식:** 우리측 해당 기업과 외국투자자사이의 합영 또는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방식

**토지임대기간:** 50년까지

**하부구조조건:** 국제통신에 필요한 체신망건설 개전-태성호 자연물길로 관개용수 사용

**대상계획자료:** 개발지구에는 유기농법에 의한 논벼, 강냉이, 과수, 잠업및채종, 육종, 가공기지

- 유기농법개발을 위한 연구기지들
- 유기질비료와 유기질농약생산기지
- 축산기지와 가공기지를 갖춘 현대적인 고리형순환생산체계
- 현대농업연구개발 및 생산, 가공기지를 건설
- 개발구주변의 리회석광산, 공장, 기업소들을 이용한 가공공업을 발전
- 풍부한 약초자원을 이용한 가공기지 전개
- 시범단계에서의 개발구건설이 잘 되면 투자자의 수요에 맞게 더 확장

### 북한의 3대 농업개발구 기본 계획

구분	북청 농업개발구	어랑 농업개발구	속천 농업개발구
위치	함경남도북청군문동리부동리중산리일원	함경북도 어랑군 룡전리 일원	평안남도 속천군 운정리 일원
투자제한서 사업비	1,100 억원	700 억원	1,200 억원 (추정)
주요 대상면적	논 358 ha, 밭 567 ha	논 670 ha, 밭 473 ha	논 1,225 ha, 밭 562 ha
농가인구(추정)	3,780 명	3,800 명	7,300 명
주요 재배작목	벼, 옥수수, 콩, 밀, 사과(60%), 배 등	어랑쌀, 콩, 감자, 명태, 청어, 정어리	벼, 옥수수, 수수, 배추, 무, 시금치 등
강점 (투자제한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산물인 북청사과등 과수재배 적지</li> <li>북한에서 가장 큰과수기계생산기지</li> <li>과수에 대한 고급 기술력 활용 및 기본 인프라 구축</li> <li>북청강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어랑쌀 재배</li> <li>룡전협동농장을 거점으로 농업생산기지 구축 및 농촌 지역개발</li> <li>어랑비행장의 교통 인프라를 이용한 수출 등 교역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해안 별방지대로 농농사 및 축산업이 최적인 평야지대</li> <li>과일가공 경공업 발달 및 주민밀집도 높음</li> <li>북한 당국의 관심이 크고, 평양인근에 위치 하여 교통이 편리</li> </ul>
조성방향	과수업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 중심의 현대적 농산업 육성	현대식 농업에 목축 양어를 결합한 농축산 복합기지로 개발	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고리형 순환체계 개발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실전문생산단지</li> <li>연료림 조성사업</li> <li>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조성</li> <li>마을상수도 개량</li> <li>마을회관 리모델링</li> <li>하천정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li> <li>농업과학연구개발기지</li> <li>한계농지정비사업</li> <li>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li> <li>내수면 양식단지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재해 방지와 지역 특화조림</li> <li>재해방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li> <li>과실전문생산단지</li> <li>주택 및 마을정비</li> <li>보육 및 보건 개선사업</li> </ul>

### 농업개발구 개발협력시 남북간 회담시 고려사항

#### 01 북측에 농업개발구 관련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심 유도

남북농업개발협력의 중요성과 타 산업과의 연계성 설명  
북측에서 제시한 농업개발구의 투자제한서를 바탕으로 한 사업으로 수용가능성 기대  
농업, 산림, 축산, 생활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함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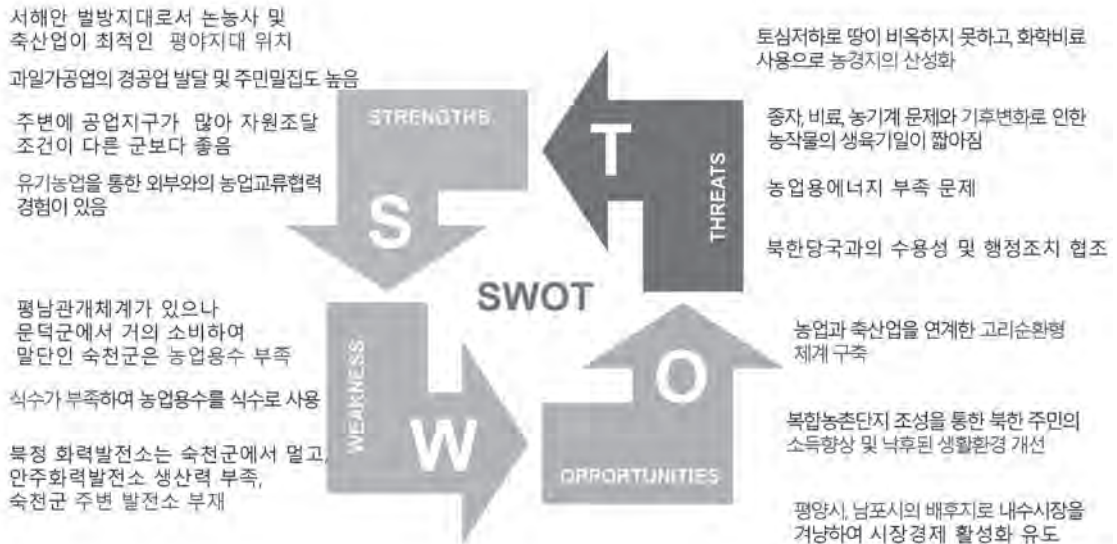
#### 02 남북이 상생하는 상호보완적 농업협력사업 강조

농업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남북이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한 농업개발협력 필요성 강조  
축분자원화, 종자산업, 농기계 산업, 특화작목 등 상호보완적 농업협력사업 발굴

#### 0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파급효과

거시적으로는 한민족의 문화적인 통합과 동북아 정세의 평화공존  
남북한 주민사이에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으로 동질성 회복

## 속천 농업개발구 SWOT 분석



10

## 속천 농업개발구 SWOT 전략



11



### 숙천 농업개발구 단계별 추진 프로그램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농업 및 생산기반	농업기계화 및 수리센터 친환경토양개량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영농자재 곡물산업육성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하수 관정개발	유기농 체계구축을 위한 고품질 쌀 유통시설 증자산업기반 구축 수리시설 개보수 과실전문생산단지 발기반정비사업 농업인력양성 교육센터	저수지 안전진단 및 개보수 대규모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용수로 구조물화 농업연구 개발기지
산림 및 축산	조림 가꾸기 - 산림재해방지 및 공익조림 - 지역특화 조림 축사시설 : 9 m <sup>2</sup> /가구당 양돈(육우)지원 및 위생방역	숲가꾸기 - 조림지, 어린나무 등 양묘장 신규조성 축산분뇨 처리시설 기능성 양잠단지	사방사업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축분 발효 퇴비생산 유제품 생산기지 기반 구축
생활환경 개선	주택 및 마을정비 - 무방류순환 수세식화장실 보육 및 보건 개선사업 - 탁아소, 유치원 등 리모델링 - 기초의약품	주택 및 마을정비 - 빨래터 주변정비, 상수도공급 시스템 개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태양광, 지열 등	음면소재지 종합정비 -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 재해대비, 상수도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 숙천농업개발구 조감도



## 농업개발구 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적 파급효과

01

### 분석방법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방법이며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투자행위가 각 산업별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

시장기능을 반영하는 비선형의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이용, 모형의 보정을 위해 산업연관분석표 등을 활용하여 파급효과를 추정

02

### 산업연관표 기본구조

외부수요의 변화가 생산, 소득, 고용 등의 관점에서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가능

총투입액(총산출액) = 중간투입액(자재등) + 부가가치투입액(노동력등)  
 총수요액 = 중간수요액 + 최종수요액 = (총공급액)

03

### 생산 및 소득유발승수

생산유발 효과는 최종수요의 증가에 따른 전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 생산파급효과를, 소득유발승수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유발되는 고용유발효과

북한 전산업의 평균생산유발승수는 2.86613, 농림어업은 1.36170, 농림어업이 본질적으로 함의하는 환경 개선 등 외부경제효과의 계량적 추정 한계로 인한 결과로서 소득유발도 과소평가

04

### 부가가치 및 간접세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효과, 간접세유발승수는 최종수요발생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활동으로 파급되는 직·간접 조세유발효과

북한 전산업의 평균부가가치유발승수는 1.18791, 농림수산업이 1.02067, 농림어업의 간접유발승수는 0.45425로 전체산업 0.39949보다 높음

14

## 농업개발구 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05

### 숙천 농업개발구의 투자 계획 시나리오

농업개발구 건설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특구 투자제안서의 투자조건과 투자액을 반영하여 분석

숙천농업개발구는 북한의 투자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른 농업개발구 투자금액과 비교 추정

- 북청 농업개발구 : 1억달러
- 어랑 농업개발구 : 7천만달러
- 숙천 농업개발구 : 1억2천만 달러

년간 4,000만달러(한화 약 473억)를 3년간 투자 가정

북한의 산업생산유발 및 소득유발승수(2010년 북한의 산업연관표 기준)

구분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간접세유발승수
농림수산업	1.3023	0.2321	1.0108	0.4239

## 농업개발구 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투자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숙천농업개발구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만 달러)

구분	투자 금액 (a)	생산 유발효과(b)	소득 유발효과(c)	부가가치 유발효과(d)	간접세 유발효과(e)	파급효과 금액( f ) (f=b+c+d+e)	투자대비 파급효과(g) (g=f/a)
1년차	4,000	5,209.2	928.4	4,043.2	1,695.6	11,876.4	2.96
2년차	4,000	5,209.2	928.4	4,043.2	1,695.6	11,876.4	2.96
3년차	4,000	5,209.2	928.4	4,043.2	1,695.6	11,876.4	2.96
계	12,000	15,627.6	2,785.2	12,129.6	5,086.8	35,629.2	2.96

## 남한의 중간재 투입, 남북의 경제적 파급효과

- 01 농업개발구 조성에 있어 남한의 농자재가 투입되면 남한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 농업( 비료, 농기계, 농약 및 종자, 농업기술 등), 농업시설 : 시멘트, 철근, 비닐 등
- 02 남북농업협력사업이 북한경제에 파급효과를 각지 위해서는 단순 자본과 기술,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는 일차원적 방식보다는 북한 중간 투입재의 비중을 늘려 북한산업 활성화
- 03 남한의 중간재 사용비율 기준 결정
  1. 북한내 현지조달이 불가능한 자재는 남한에서 조달
  2. 투자재원과 별개로 농자재를 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3. 북한 투자로 남한의 관련 산업에 생산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남한의 중간재 투입 관련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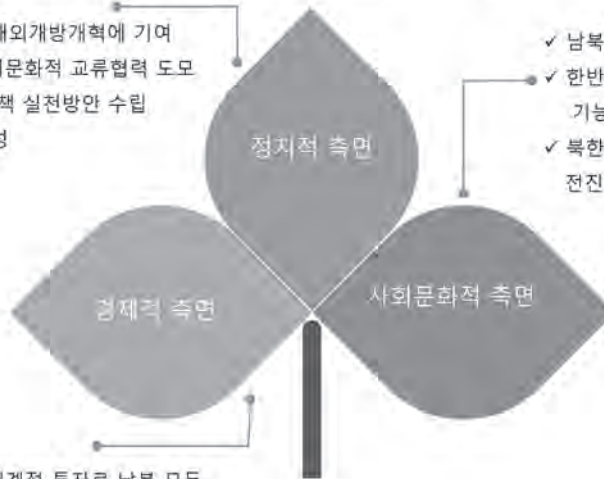
(단위: 만 달러)

남한의 중간재 투입비중(%)	북한의 생산유발 효과	북한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0	15,627.6	12,129.6
30	10,939.3	8,490.7
50	7,813.8	6,064.8
70	4,688.3	3,638.8

## 나오는 말

### 남북농업개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 ✓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개방개혁에 기여
- ✓ 남북 인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도모
- ✓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 실천방안 수립
- ✓ 남북주민의 공감대 형성



- ✓ 남북한 농업의 교류로 동질감 회복
- ✓ 한반도 농업의 허브 및 전략적 관문 기능수행
- ✓ 북한 농촌지역에 경제사회문화적 전진기지 기능

- ✓ 한반도 농업에 대한 체계적 투자로 남북 모두 국민소득 상승
- ✓ 농업개발구개발로 인근 배후도시와 연계한 도농복합형 생산기지 역할
- ✓ 협동농장 경영체계 생산증가 및 생활환경 개선

# 토론자 Discussant



**백정민** 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Jung Min BACK** Director, Korea Peninsula Agro-Fishery Co-work(KOPA)

(사)통일농수산사업단 백정민은 2004-2008년 약 5년간 북한의 금강산지역 삼일포 협동농장과 개성지역 송도리협동농장등 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의 실무책임을 맡은 북한의 농업현장에서 활동한 현장전문가입니다.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남북농업협력모델을 제시했으며 '식량생산증대' '영농기반강화' '영농기술 및 인적교류' '지역소득원개발'등의 주요사업을 북한 농업현장에서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써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현장농업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박사과정에 합격하여 보다 깊이 있는 농업기술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Jungmin Back is a field expert who acted as a manager of KOPA which covers Samilpo cooperative farm in Mount Kumgang and Songdo-li cooperatiave farm in Gaesong of North Korea agricultural field about 5 years since 2004-2008.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of North Korea, he suggested a whole new South-North Korea agricultural cooperation model centered on cooperative farm. Also, several major businesses such as 'Food Production Increase', 'Strengthening Farming Infrastructure', 'Farming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Exchanges', and 'Development of Regional Income Source' were conducted by him. In 2020, he is a director and secretary general of KOPA and still active as a field agriculture expert of North Korea. Furthermore, he will investigate agricultural technology after receiving a doctoral degree in Agricultural and Life Sciences, CAU.

현재의 남북관계는 남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 국제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외교적 방정식 속에서도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만 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나아가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를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농업협력이 교착상태인 남북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예외적인 인도적 협력, 특히 식량문제는 가장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엔의 보고서등에 따르면 북한의 5세미만 아동의 영양결핍이 심각하며 국가적으로 매년 100만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해와 홍수등 자연재해로 인해 더욱 식량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90년도 중반을 전후하여 소위 "고난의 행군"시절 1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북한의 주민들이 식량난 해소를 위하여 비료와 쌀을 차관형식으로 약 30만톤 가량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로 약 10년간 농업협력이나 식량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재의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가장 인도적 성격의 농업협력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야 하고 그런 동력을 얻기 위해서 '남북 공동 식량계획'과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농업협력' 구상을 구체화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긴급 식량지원과 더불어 최문교수님의 주장대로 북한이 자립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북한의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협력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북한의 농업부문에서 강조되어온 '종자혁명' '과학영농' '경작지확보' '생산성향상' 등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된 '녹색혁명' 시기에 중점적으로 노력했던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벼로 대표되는 다수확 벼 품종개량, 비료, 농약, 농기계화로 대표되는 과학영농, 경지정리를 통한 우량 농지 확보, 농업기술 향상에 따른 단위당 면적당 농업 생산성 향상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과거 농업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 기반'을 재건하는 협력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중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5개의 농업관련 경제 개발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량, 숙천, 복천, 강령, 강남군에 농업특구를 각각의 특색에 맞게 개발한다는 구상인데 중국, 러시아와 함께 특구개발에 시범농장조성등 3국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방식을 중.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4-2008년까지 통일농수산사업단이 북한 협동농장에서 진행한 '북한협동농장개발'과 '협동농장공동영농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4년간 금강산관광특구 배후 지역에 위치한 '삼일포 협동농장'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위치한 '송도리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농업생산 기본 조직인 협동농장의 농업기반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영농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두가지의 큰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가능성을 보았고, 향후 대규모의 남북 농업협력사업이 진행될 경우의 사업 모델을 직접 북한의 농업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보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협동농장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의 특성상 남북 당국의 간섭이 최소화한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의 협동농장의 농민,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북한의 농업을 이해하고 한국 농업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가 중국, 러시아등 북한 접경 국가들과 북한농업에 대한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Hae Jung LEE** Manager of Center for Unification and Economics,  
Hyundai Research Institute

이해정은 2018년부터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06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하여 남북경협과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 및 북한학 학사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에서 북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기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연구주제는 북한의 관광 정책 동향과 경제개발구 정책, 평화경제 등입니다.

Hae jung Lee has been the manager of the Center for Unification and Economics at Hyundai Research Institute since 2018. She joined Hyundai Research Institute in 2006 and is engaged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economy. S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law and North Korean studi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North Korean studies and doctorate from the university. Working as a member of the first term of the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Commissio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she is currently working as a policy adviso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 standing member of the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Committee. Recent major research topics include trends in North Korea's tourism policy,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ies, and peaceful economy.

○ 남북농업개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 평화경제 :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추구, 평화 축적 기반 마련 → 경제협력 지속 → 공동번영 실현 → 주변국으로 확산 → 더 큰 평화 실현, 통일과는 무관하게 남북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중국, 러시아, 일본, 아세안까지 연결되는 다자간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남북 농업 협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91년 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공통적으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강조

〈 역대 남북 주요 회담에서 다뤄진 남북 농업 협력 관련 조항 〉

구분	주요 내용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b>제15조</b>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17)	<b>제1조</b>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항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u>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u>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b>제4항</b>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u>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u>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10.4 남북공동선언 (2007.10.4)	<b>제5항</b>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u>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u>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 (2018.4.27)	<b>제1조 제6항</b>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u>적극 추진해</u>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자료 : 남북기본합의서, 역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을 토대로 필자 재구성.

-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 제4조 '전민족의 이익을 앞세우고,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보장하며,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을 밝히고 있음
-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규정

○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동서해 공동특구와 농업개발구 연계 개발

- 동서해 공동특구는 한국의 '한반도 신경계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 간 전략적 합의를 도출한 지역이며, 남북 정상간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인 만큼 신남북경협 모델로 개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임
- 서해측의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북측의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남측의 인천 광역시, 경기도를 연계한 특구 개발을 고려할 수 있으며,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도 함께 추진할 수 있음
  - 서해공동특구의 농업부문 배후기지로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는 물론, 숙천농업개발구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 방안  
Inter-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Realization of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 특히, 숙천농업개발구의 경우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UNDP 등 국제기구 및 한국·스위스 등 정부,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경험을 보유한 지역으로 농업개발협력 추진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동해측의 원산-금강산 특구를 중심으로 북측의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와 남측의 강원도를 연계한 특구 개발을 고려
  - 동해공동특구의 농업부문 배후기지로 어랑농업개발구 및 북청농업개발구를 활용하여 특산물 공급을 통한 관광지와 연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어랑농업개발구의 송이버섯과 어랑쌀, 북청농업개발구의 사과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특산물 가공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해를 활용한 수산물 가공도 가능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어랑농업개발구는 칠보산 배후 관광지로도 개발 가치가 높으며, 어랑농업 개발구 투자제안서(2013년)에서도 어랑비행장 현대화 및 칠보산 관광 활성화에 대비한 관광지 개발을 명시하고 있음
  - 어랑농업개발구 인근 청진농업대학 및 농업성 산하 연구기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최적화된 농업 기술 및 품종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북청농업개발구 역시 북청원예단과대학, 북청사과연구소(2015년 설립) 등 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들이 위치해 고급 인력 공급에 용이

## ○ 남북농업개발협력의 성공 조건

- 남북 상호주의: 남북 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접근 방식은 평화경제를 실현하고 남북농업개발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임
  - 남북협력은 표현 그대로 상대방이 있는 교류 방식이며, 이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개별 주체를 각각 인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당연히 남북농업협력과 관련한 정책 방향도 정책 상대방인 북한과 소통하며 상대의 이익과 의도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국민적 공감대 :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민족경제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남북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
  - 남북농업개발협력 추진이 어느 일방에 유리한 시혜적 방식의 지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에 공동 이익을 실현하고 남북한 주민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형성 되어야 남북농업개발협력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민간과 지자체, NGO 등 다양한 개별 추진 주체들의 역할 확대 :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과 지자체 등 개별 추진체들이 남북 협력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평화경제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sup>1</sup>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임
  - 2006년 한민족복지재단의 숙천지역 '트랙터지원 및 농업기술지원' 등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적극적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통해 새로운 남북농업개발협력 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문재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개성과 금강산에서의 남북경협을 평화경제의 사례로 제시함. 청와대, "21대 국회 개원연설(2020.7.16.)"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886>) (검색일 : 2020.8.12.)

# 토론자 Discussant



**토마스비에지보프스키**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위원

**Tomasz WIERZBOWSKI** Research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토마스 비에지보프스키는 유럽연합(EU)과 대한민국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 활동 및 비즈니스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왔습니다. 현재 유락세스 한국 지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유락세스는 유럽과 전 세계의 학자들이 학문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외 진출과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유락세스 팀에 합류하기 전에는 EU FP7/Horizon 2020 프로젝트의 EU 후원 프로그램의 매니저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토마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동북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적으로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토마스는 북한의 발전상을 기민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omasz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various academic as well as business activities regarding the European Union and the Korean Peninsula. He is currently a EURAXESS Korea Representative – EURAXESS is a European Commission initiative supporting researcher mobility and career development while enhancing scientific collaboration between Europe and the world. Before joining the EURAXESS team, he was a project manager for the EU funded programs under FP7/Horizon 2020 schemes.

Tomasz holds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he is focused on the Northeast Asia region. His academic interest lies also in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Having visited the DPR Korea multiple times per year over the last decade, Tomasz is an astute observer of developments in the DPRK and is regularly involved in policy discussions.

The situation in agriculture in DPRK is especially challenging as many parts of the country remains highly underdeveloped and farming is done manually with only simple tools. The lack of basic infrastructure together with difficult climatic conditions such as dry spells, typhoons and floods makes farming unpredictable and harvest difficult to estimate. Furthermore, as mentioned by Mr. Zachernuk the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namely the socialist organization of farming in collective farms makes farm sector very often more inefficient within its own limitations.

Changes in policies also diversified the agricultural situation. According to Daily NK<sup>1</sup> "the field management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2, in the wake of Kim Jong Un's policy speech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changing the basic farming unit from a collective farm (*bunjo*) to a small-scale family-run field (*pojon*), the system has required farmers to send only part of their harvest to the state while allowing them to keep the rest. Trial runs of the system in some areas of the country have reportedly been moderately successful.

North Korean agriculture also faces problems with irrigation. The most popular grain farming - rice-farming requires extraordinary amount of water. water resources in North Korea are generally not necessarily scarce but outdated agriculture with decade-old mismanagement of forests leads often to local or provincial flooding, in times of heavy rain, as well as water scarcity, in particular in the rice-growing season. This situation requires a significant improvement. The poor irrigation management together with lack of pumps, reliable water pipes and electricity to use the pumps limits agricultural efficiency even more.

The overall agricultural situation is also hampered by macroeconomic challenge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due to political reasons. the area where sanctions are most harmful for agriculture is the problem to import machinery and intermediate products for fertilizer production. Furthermore, North Korea is not able to import fertilizers as sanctions make earning from export revenue impossible.

To overcome these issues and ultimately raise agricultural output more space for agriculture has been added. This has been done since decades through land reclamation, sloping land agriculture (partly illegal, but tolerated) and the use of every small patch of land available. Such solutions are widely promot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through media and propaganda channels. Domestic newspapers and broadcasters have praised successful cases of land reclamation for cultivation and obtaining arable land like highlands, tablelands, surroundings of rivers, streets and waterways. However, these new patches of arable land are often flooded, or become insufficient for farming in another way.

In the first half of 2020,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eemed to emphasize also farming in low-yield areas and the attempts to increase yields in these areas by applying "scientific farming" methods. These methods include ridge cultivation, new high-yielding breeds of rice and the cultivation of big rice seedlings, as well as unspecified improvements of land to raise soil fertility. Farming in low-yield areas was widely described in North Korean media which covered stories about many farms in six cities and counties of North Hamgyong Province, which had suffered great damage from cold weather, and in Ryanggang, Kangwon and South and North Phyongan provinces reaped good harvest in low-yielding fields by introducing scientific farming methods. It was also reported that Ministry of Agriculture makes the list of acreage of low-yield areas, classifies them and establishes soil management method and cultivating technology.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focus on low-yielding areas will have any impact on the total agricultural output.

1 <https://www.dailynk.com/english/north-korea-presses-unrealistic-increases-farm-production/> (accessed: August 12, 2020).



# Session 9-1

## 한반도 농업의 미래와 북한 농업의 발전 경로 모색 Future of Korean Peninsula Agriculture and Development Path of North Korean Agriculture

주관기관  
Organized By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좌장  
Moderator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Hong Sang KIM Presiden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발표자  
Presenters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Yongho CHOI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부이 광 투안 베트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Tuan BUI Director General, Institute of Economics, Vietnam

토론자  
Discussants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oung-Hoon KIM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교학부총장  
Moon-Soo YANG Professor &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Jangho CHOI Head of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  
Hyoungh-Joon LIM Director, WFP Global Office in Korea, UN World Food Programme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9-1)

## 한반도 농업의 미래와 북한 농업의 발전 경로 모색

현재 북한경제에 시장화, 사유화 등이 부분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도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기초하여 본 세션에서는 북한농업의 변화상을 고찰하고 체제이행국가의 경험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농업의 발전 경로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개혁·개방모델의 농업개혁 사례는 북한농업의 발전 경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어 베트남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Future of Korean Peninsula Agriculture and Development Path of North Korean Agricultur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trends are being captured. Similarly, the market economy is being introduc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Based on these changes, we will examine the changes in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analyze the experiences of transition countries to discuss the future development path of North Korean agriculture in this session. In particular, the case of agricultural reform in Vietnam's reform and openness model, which North Korea is known to prefer, can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path of North Korean agriculture. Therefore, this session will invite Vietnamese experts to discuss the matter.

# 좌장 Moderator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Hong Sang KIM** Presiden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김홍상 원장은 1994년 대통령 자문 농어촌발전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농정체계 기틀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으며, 같은 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평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농지와 농업용수를 비롯한 농업·농촌분야의 다양한 농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농지은행 제도 및 관련 정책 도입 연구를 수행하고 제도화에 기여하였으며, 농림부 감사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 위원 등 다양한 활동과 농업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하였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Dr. Kim conducted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the farmland banking system and related policies, and contributed to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He also served as an Auditor a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a taskforce member of the agricultural policy reform at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Policy Planning, and worked for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is substantial contributions toward the nation's development, he was awarded the Order of Civil Merit, Magnolia Medal in 2018.

He worked as an expert member on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Rural Development in 1994. After joining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at same year, Dr. Kim carried out various policy studies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the following positions: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Policy Research, Director of Office Planning and Coordination,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on Research Evaluation, etc.

He holds a B.A., a M.A., and a Ph.D.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표자 Presenter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Yongho CHOI**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최용호 박사는 2014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북한 및 통일 농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로는 2016~2017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 등이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볼더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Dr. Yongho Choi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agriculture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ince 2014. The main researches include 'A Study on Cooperation Policies to Attract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in the Future Reform and Opening Period of North Korea', conducted during 2016 and 2017. In 2014, he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USA).



# 1 논의 배경 및 목적

## 1 논의 배경

- 북한농업의 발전은 북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치, 경제, 사회 안정성 등에 중요한 요소
- 최근 북한농업의 위기 우려 다시 대두
  - 2019년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주목
    - 2월 유엔 주재 북한대사 국제기구에 식량지원 호소
    - 4월 북한의무성 문건 식량수입 긴급조치, 노동신문 농업생산 강조
    - FAO/WFP의 공동조사(5월) 결과 식량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 약 136만 톤의 식량 부족 전망
  - 2020년 대북제재 지속, 코로나 사태, 홍수 피해로 인해 식량난 가중 전망
    -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농업 전선을 정면돌피전의 주 티격 전방 ” 이라고 선언
    - 모내기철 경제관료의 농업현장 시찰 급증
    - 코로나 사태로 북중무역에서 식량 및 비료 수입 급감
    -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해 황해남북도, 개성시, 강원도 등 홍수 피해
- 만성적 식량부족문제 극복을 포함한 북한 농업에 대한 근본적 발전방안 모색 필요

# 1 논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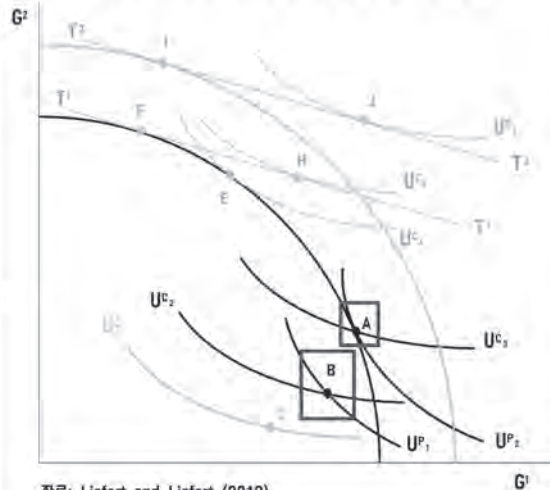
## 2 논의 목적

- 향후 북한농업의 근본적 발전을 위한 북한과 한국의 정책적 과제 논의
  - 구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 농업발전 경로에서의 핵심 정책과 효과 검토
    - Liefert and Liefert (2012) 모델 활용
    - N개로 확장 가능한 2제화 모델
    - 생산, 소비, 무역, 후생 등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는데 유용
    - 농업 전반의 시스템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효과 설명에 유용
  -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북한 농정의 현수준을 평가하고 정책 우선순위 논의
    - 세계은행의 구사회주의 체제전환국 대상 5개 농정분야 평가기준 활용하여 북한에 적용
- 경제부분의 개혁·개방, 즉 시장경제시스템 도입은 농업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
- 거시적, 장기적 관점 논의

## 2 북한농업 발전 경로 분석

### 시장경제시스템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

[생산, 소비, 무역, 소비자 후생에 대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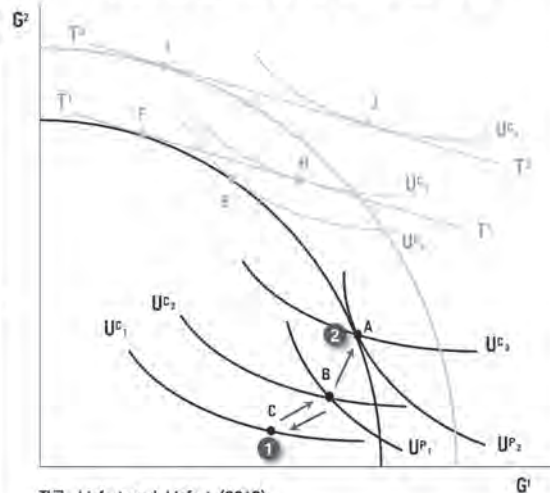
자료: Liefert and Liefert (2012).

- ✦ 경제주체: 생산자, 소비자, 정부(계획자)
- ✦ 재화:  $G^1, G^2$
- ✦ 소비자와 정부의 무차별 곡선:  $U_i^C, U_j^P$   
(가정: 계획경제 하에서 정부와 소비자는 다른 선호체계를 가짐)
- ✦ 생산가능곡선
- ✦ 점 A: '가상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전환 이전) 계획경제 체제에서 효율적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
- ✦ 점 B: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생산요소 할당 및 투입재 배분의 비효율성은 생산량을 생산가능곡선 내부로 제한
  -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경제와 투자 여력을 약화
- ✦ 체제전환 이전에는 완전한 자급자족 경제로 대외무역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

## 2 북한농업 발전 경로 분석

### 시장경제시스템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

[생산, 소비, 무역, 소비자 후생에 대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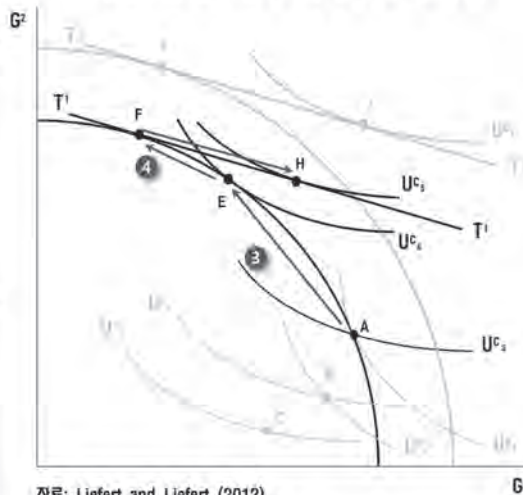
자료: Liefert and Liefert (2012).

- ✦ 첫째, 재정지출 축소, 연성예산제약의 경성화, 경쟁 도입 등 정책 및 경제적 변화(국가통제 축소 및 시장기능 강화)의 부정적 효과
  - 투입재 공급-생산-가공 유통의 기존 관계 붕괴에 따라 생산 축소(점 B → C)
  - 소비자 후생도  $U_2^C \rightarrow U_3^C$
  - 일정 시간 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생산량은 다시 증가(점 C → B, 농업생산 구성 불변을 가정)
  - ※ 시장경제시스템 도입 속도 관리 중요, 시스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의 적절한 자원 중요
- ✦ 둘째, 생산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효과
  - 사회주의 농업체제의 비효율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생산은 점 B → A로 증가(이때까지만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서 생산이 결정된다고 가정)
  - 소비자 후생도  $U_2^C \rightarrow U_5^C$
  - ※ 시장에 의한 투입재 배분, 비효율적 농장 퇴출과 같은 시장경제적 요소 활성화

## 2 북한농업 발전 경로 분석

### 시장경제시스템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

[생산, 소비, 무역, 소비자 후생에 대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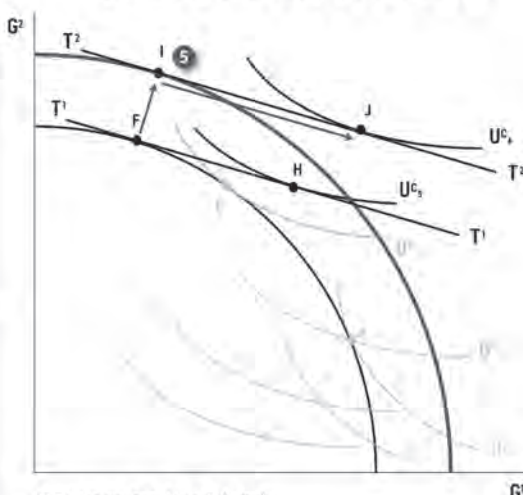
자료: Liefert and Liefert (2012).

- ❖ 셋째, 분배 효율성 향상 효과
  - 생산과 소비에 국가보조를 축소하면서 소비자 선호에 따라 생산의 구성과 생산량 결정 (점 A → E)
  - 소비자 후생도  $U_3^C \rightarrow U_4^C$
  - ※ 가격자유화 실현, 영농자율성 확대
- ❖ 넷째, 비교우위에 기반한 자유무역의 효과
  - T1-T1 기울기: G1/G2의 세계가격 비율
  -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에서 오는 이득을 극대화한다면, 생산은 점 E → F(이 경제는 G2를 수출하고 G1을 수입한다고 가정)
  - 자유무역이 허용된다면, 소비가능곡선이 기존 생산가능곡선이 아닌 T1-T1'으로 변화, 따라서 소비는 점 F → H로, 소비자 후생은  $U_4^C \rightarrow U_5^C$
  - ※ 무역자유화

## 2 북한농업 발전 경로 분석

### 시장경제시스템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

[생산, 소비, 무역, 소비자 후생에 대한 효과]



자료: Liefert and Liefert (2012).

- ❖ 다섯째, 영농기술 진보의 효과
  - 국내 농업생산자에게 해외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이 노출되고 경쟁 강화 등 영농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기술 제고에 대한 유인 발생
  - 영농기술 진보함은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경영기법 등 영농활동에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시스템 변화를 의미
  - 영농기술 진보는 생산가능곡선을 밖으로 팽창 (점 F → I)
  - 자유무역으로 인해 소비는 점 I → J로, 소비자 후생도  $U_5^C \rightarrow U_6^C$
  - ※ 영농자율성 확대, 경쟁 강화, 대외개방 및 투자 유지 확대, 재정 지원

## 2 북한농업 발전 경로 분석

### 시장경제시스템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

[농업부문 주요 정책, 효과, 소비자 후생 변화]

정책	주요 효과	소비자 후생 변화
가격 자유화	분배효율성 향상	$U_3^C \rightarrow U_4^C$
무역 자유화	비교우위 기반 자유무역	$U_4^C \rightarrow U_5^C$
농지 사유화 및 협동농장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 - 제제효율성 향상 - 영농기술 진보	$U_2^C \rightarrow U_3^C$ $U_5^C \rightarrow U_6^C$
농업금융시스템 포함 농업 전후방산업의 민영화	분배효율성 향상	$U_3^C \rightarrow U_4^C$
제도·인프라 정비	생산성 향상	$U_1^C \rightarrow U_2^C$

자료: Liefert and Liefert (2012).

- ❖ 하나의 정책은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지표로 측정된 경제적 효과 또한 단 하나의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
- ❖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심지어는 비정책적 요소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3 북한농업의 현실과 농정 수준 평가

###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 사정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단위: 천 톤

연도	생산량 (A)	수입량 (B)	총공급량 (C=A+B)	중소요량 (D)	필요량 (E=D-C)
'12	4,676	646	5,322	5,429	107
'13	4,806	365	5,171	5,370	199
'14	4,802	255	5,057	5,489	432
'15	4,512	105	4,617	5,495	878
'16	4,823	99	4,922	5,608	686
'17	4,701	170	4,871	5,524	653
'18	4,558	257	4,815	5,755	940

자료: FAO/WFP의 CFSAM 및 FAO의 GIEWS(생산량 및 중 소요량), UN Comtrade(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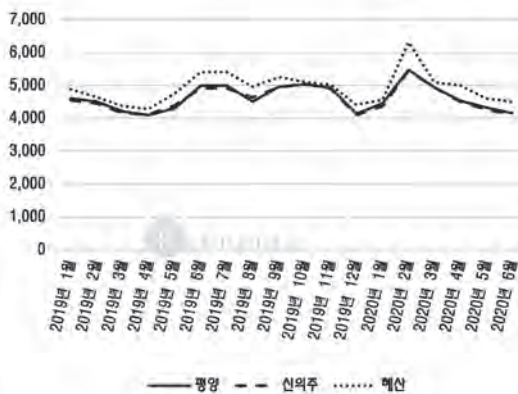
- ❖ 북한의 식량사정 판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4년까지 심각한 식량난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
- ❖ 2015년과 2017년에는 봄철 가뭄으로, 2018년에는 여름철 가뭄과 이상고온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2019년 가용 식량부족에 대하여 북한 당국과 FAO/WFP 공동조사단은 좋지 않은 기후여건과 대북제재로 인한 농기계부품, 비료, 농약, 비닐 등 농기자재, 연료, 전력 등 투입재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설명
- ❖ 올해부터 지속되는 대북제재에 더해, 코로나 사태와 홍수 피해로 인하여 식량사정은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

### 3 북한농업의 현실과 농정 수준 평가

####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 사정

[최근 북한 쌀 시장가격]

단위: 1kg 당 북한 원



자료: 데일리NK

- ✦ 2020년 2월 쌀을 비롯한 시장가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급등
- ✦ 전반적으로 식량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시장 쌀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 적극적 식량 도입, 군량미 공급, 가격 통제 등 정부의 노력과 주민들의 소비 축소 및 저렴한 품목으로 소비대체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음
- ✦ 또한 최근 소비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식량만으로 식품소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3 북한농업의 현실과 농정 수준 평가

#### 2 북한농업의 취약성에 대한 근본 원인

- 국토의 15~17%만이 경작에 적합하여 절대적으로 농지가 부족하며, 전체 농지 중에서 논 비중이 약 30%에 불과
- 김정은 정권 이전에는 비농업부문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기술적 변화(기계화)가 거의 없었음
- 비료, 고품질 종자, 장비·설비, 농자재, 연료, 전력 등 농업투입재 역시 매우 부족함
-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지만 마땅한 복구대책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여러 정책적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물 분배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족, 정책의 낮은 신뢰도 등 제도와 정책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남

### 3 북한농업의 현실과 농정 수준 평가

#### 3 김정은 정권의 농업부문 개혁정책

→ 2012년 6·23 새경제관리체계

- ① 협동농장 및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적 비용의 국가보장
  - 생산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조달분배책에 해당되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 ② 초기비용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계상
  -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농자재를 충분히 조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③ 국가와 협동농장(공장)은 생산물을 70:30으로 분배
  - 농자재 공급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국가 몫이 70%라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수탈로 보임
- ④ 개인 소유몫 처분의 자유화
  - 시장거래 허용을 의미함
- ⑤ 협동농장 내 작업 분조의 규모를 4~6명으로 축소
  - 농업생산에 있어 자율경영권이 부여되고 인센티브가 강화된 가장 개혁적인 내용으로 평가됨

### 3 북한농업의 현실과 농정 수준 평가

#### 3 김정은 정권의 농업부문 개혁정책

→ 2014년 5·30조치

- ① 농장 및 기업에 대한 자율 경영권 부여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명문화에 따라 국가 계획과 통제가 축소되고 시장 활성화(B2B 거래 허용)가 진전되는 등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방향으로 진일보함
- ② 농가에 책임경영농지 배분
  - 농지 사유화로 향하는 가장 초기단계로 평가될 수 있음
- ③ 농가몫의 분배 확대
  - 기존 유명무실한 농업생산 인센티브가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진일보함



### 3 북한농업의 현실과 농정 수준 평가

#### 4 북한 농정의 현재 수준 평가

[세계은행의 농업부문 제제전환정책 평가 지표와 기준]

지표	평가 기준
농산물 시장 및 무역 자유화	1- 2점: 국가에 의해 가격과 시장이 직접 통제됨. 3- 4점: 참고가격 및 가격통제가 철폐됨. 상당한 비관세장벽이 있음. 5- 6점: 시장자유화에 있어서 경쟁환경 조성이 부족하고 무역통제정책이 아직 남아있음. 7- 8점: 완전히 하지 않지만 상당한 시장자유화와 경쟁자유무역정책이 시행됨. 9-10점: 최소한의 정부개입만이 있는 경쟁적 시장이 조성됨.
농지 사유화 및 협동농장 구조개혁	1- 2점: 대규모 집단농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3- 4점: 농지사유화 및 농장 구조조정 법이 시행되기 시작함. 5- 6점: 농지 사유화와 대규모 집단농장의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 7- 8점: 대부분 농지가 사유화됨. 그러나 토지등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부동산시장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음. 9-10점: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한 농업구조가 구축되고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됨.
농업금융시스템 정비	1- 2점: 소련식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음. 3- 4점: 새로운 금융 규제가 도입됨. 상업은행은 소수이거나 없음. 5- 6점: 기존 금융시스템이 개편되고 상업은행이 설립됨. 7- 8점: 농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출현함. 9-10점: 농업분야 전반에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이 존재함.

### 3 북한농업의 현실과 농정 수준 평가

#### 4 북한 농정의 현재 수준 평가

[세계은행의 농업부문 제제전환정책 평가 지표와 기준]

지표	평가 기준
농업 전후방산업의 민영화	1- 2점: 국가독점의 산업구조가 유지됨. 3- 4점: 자발적 민영화와 대규모 민영화를 위한 계획수립단계 또는 초기시행단계에 해당함. 5- 6점: 민영화 프로그램이 추진 중임. 7- 8점: 주요 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짐. 9-10점: 농업 전후방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짐.
농업 공공부문 정비	1- 2점: 기존 계획경제 담당기관이 존재함. 3- 4점: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수가 구조조정 중임. 5- 6점: 부분적으로 지방의 정부 및 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완성됨. 7- 8점: 정부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연구, 지도, 교육 사업 등 기능을 수행함. 9-10점: 민간 농업의 요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공공기관이 존재함.

자료: Csaki and Nash(1998)

### 3 북한농업의 현실과 농정 수준 평가

#### 4 북한 농정의 현재 수준 평가

[세계은행의 농업부문 체제전환정책 평가지표 적용 북한 평가 결과]

지표	1997년 체제전환국 평가 평균	현재 북한 평가	평가 기준
농산물 시장 및 무역 자유화	6.3	2	· 국가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과 대외무역이 철저히 통제 · 최근 시장화가 급속도로 확산
농지 사유화 및 협동농장 구조개혁	5.4	2	· 제도화되지 않았으나 사적 소유화가 극히 부분적 발생 · 농장에 자율 경영권 부여, 농가에 책임경영농지 배분
농업금융시스템 정비	4.7	5~6	· 중앙은행 유일의 단일은행제도 폐지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업은행 다수 운영 중
농업 전후방산업의 민영화	5.8	5~6	· 기업소 자체 계획, 생산조직, 제정, 판매 등 허용 · 돈주의 활동영역 확대
농업 공공부문 정비	4.7	1	· 조직체계 및 본질적인 기능에 변화 없음

자료: 필자 작성

### 4 북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 북한의 정책적 과제

- 북한 농정의 현재 수준을 평가해본 결과, 기존 전통적인 사회주의 농업의 노선 고수에서 점차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체제전환국 농업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가격 및 무역 자유화, 농지 사유화 및 협동농장 구조개혁, 농업금융시스템 정비, 농업 전후방산업의 민영화, 농업 공공부문 정비 등이며, 이들 정책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정책들 중 어느 하나가 정책목표인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에 주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정책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함
- 정책 추진의 속도 또한 나타나는 성과와 부작용을 감안하여 조절될 필요가 있음

#### 4 북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 ▶ 한국의 정책적 과제

- 북한 스스로의 정책적 변화(시장경제시스템화)를 추구하더라도 외부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농업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현재의 식량난과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시스템화 이행 초기 혼란 상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절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
- 북한농업의 본격적인 시장경제시스템화에 있어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남북농업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의 공공부문의 개발협력과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이 질서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 남북농업협력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남남갈등문제, 우리 농업인 소외문제, 다른 국가와의 이해 충돌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함



# 발표자 Presenter



**부이 광 투안** 베트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Tuan BUI** Director General, Institute of Economics, Vietnam

Tuan Quang Bui 박사는 과거 Institute of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IRSD) 소장,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편집장을 거쳐 베트남 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베트남 정부의 경제분야 싱크탱크 연구소인 베트남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임 중이며 'Journal of Economic Studies'의 편집장도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 로모소노프(Lomonosov) 모스크바 주립대학에서 정치경제학 학사학위를,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여러 분야의 연구과제에 참여해 왔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투자, 무역, 경제통합, 지역경제학, 환경경제학,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며, 특히 양적·질적 연구 방법론과 경제 모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Dr. Tuan Quang Bui currently is Director General of Vietnam Institute of Economics (VIE), a think-tank institute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on economics issues. He at the same time is Editor-in-Chief of Journal of Economic Studies.

Before holding the above positions, he held position of Director General of Institute of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IRSD); Editor-in-Chief of Review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Editor-in-Chief of Review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Deputy Director of Vietnam Institute of Economics.

Dr. Tuan Bui obtained his Bachelor degree in political economics from the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Russia. He acquired Master and PhD degrees in economics from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ustralia.

His main interests and research fields include macroeconomics, microeconomics, investment, trade, economic integration, regional economics, environmental economic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e has involved in a number of research projects at different level, including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He is interested in us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pproach and economic modeling research.

He has a wide range of publications (books, journals, reviews) on various issues inside and outside Vietnam.

## **AGRICULTURAL REFORMS IN VIETNAM AND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OME IMPLICATIONS**

BUI Quang Tuan, PhD,  
DAO Thi Hoang Mai, PhD,  
Vietnam Institute of Economics

### **Outline**

- Introduction
- Agricultural reform in Vietnam and results
- Agricultural reform in North Korea
- Some implications

## Introduction

- For liberalizing agricultural sector, bo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and Vietnam have experienced the reforms of collective farm system.
- As North Korea's agriculture continues to be centrally planned by the state, Vietnamese agriculture has over 30 years of experience of market economy development.
- Vietnam has some successes in implementing economic reforms including reforms in agriculture.
- A look back at the Vietnamese experience and results may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case of North Korea.

## Agricultural sector before the reform in Vietnam

- The economy before reform in Vietnam:
  - Centrally planned economy
  - Self-sufficient
  - Over 70% of the labor force work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 Maintaining the socialis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 About 80% of total landmass is cropland
  - About 80% of population in rural areas
- Food shortage in the period after reunification
- Heavy floods in Mekong Delta (the major rice production area) in 1978 and 1979
- End of China's aid since 1977, war with Red Khmer in 1978, then with China in 1979.
- Food production of Mekong Delta reduced from 1,133 to 613 thousand tons between 1976 and 1979. As a result, in 1980, Vietnam has to import 1,570 thousand tons of food crop, the highest level in history.
- Food security was a serious problem

## Agricultural reform in Vietnam

- In 1981, the Directive 100 was issued, allowing collectives for the first time to contract with individual households and groups of labours to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and sell the surplus in the private market or sell to state trading agencies
- The idea was: Labor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must be based on the final result of production; economic functions of collectives and households were redefined in terms of ownership, management and distribution relations;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n the economy started to open; more linkage of labor and land

## Agricultural reform in Vietnam (cont.)

- At first, this move of reform was successful, as agricultural growth reached 10.6% in 1982. But it started to slow in 1983 and became negative by 1987.
  - This was because of inflation, big gap between free market and procurement prices (some time up to 10 times).
  - The initial reforms was designed mainly to make collectives agriculture more efficient, however, the mechanism of agricultural collectives was still not efficient
  - The initial reforms was not enough to give farmers real incentives to produce more products.
- Further reforms were needed.

## Agricultural reform in Vietnam (cont.)

- Economic reform officially started in 1986 by 6<sup>th</sup> Party Congress: the multi-sectoral ownership and good economy officially accepted, including the state economy, the collective economy, individual owners, private capitalism, state capitalism and investment capital economy, in which the state economy plays a key role;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was eliminated and subsidized mechanism was also eliminated, switching to the market mechanism with the socialist-orientation. The economy moved from closed to open, integrated with the world.
- In 1988, the “Resolution 10” (referred as “Contract 10”) was promulgated, and latter, the 1993 Land Law (and its revisions in 1998) formalized the farm household as the main unit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llocated land use rights to households.
- Land use rights gave farmer households decision-making rights related to the purchase and use of inputs, the sale of outputs, and to some extent the use of land.
- “Contract 10” was the renovation of the whole agricultural economic management mechanism; the economic functions of farmers have been re-established.
- In 1989 it was affirmed that the peasant household is an economic unit autonomous in producing goods.

## Agricultural reform in Vietnam (cont.)

- In terms of liberalising the economy, the “Contract 10”) has taken further steps than the Directive 100 previously. If Directive 100 only allocates the land area to the employee to be stable for a short time, the “contract 10” has extended the terms of land ownership up to 15 years.
- This was a positive policy because it recognized the farmer's ownership in the field of land.
- The increase in land use time made farmers feel more secure with their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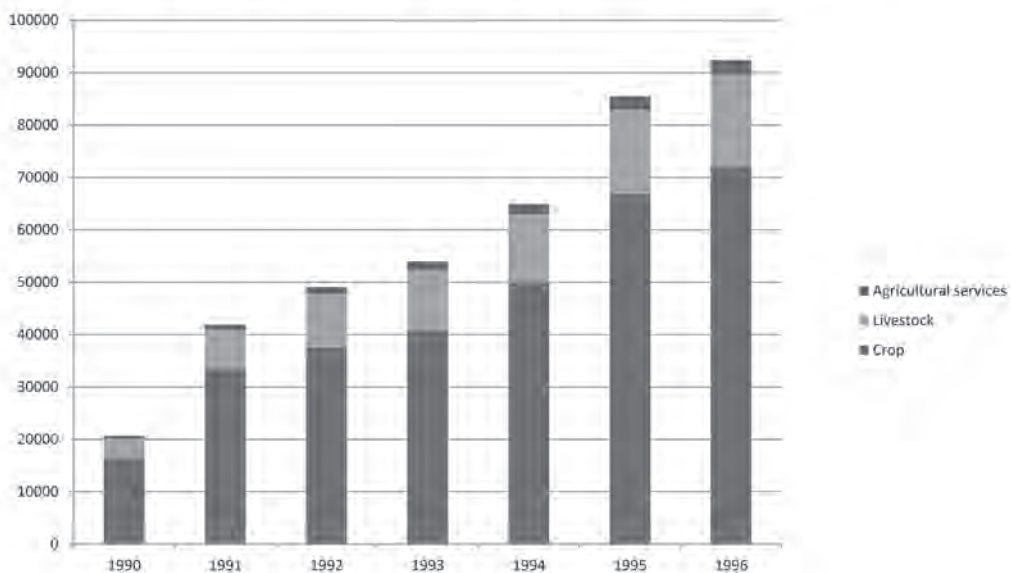
## Agricultural reform in Vietnam (cont.)

- In 1989, the State abolished the regime of buying and supplying food and foodstuff, completely abolishing the supply price system for quantitative retail goods, liberalizing prices, liberalizing business.
- In 1989: The Vietnamese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allowed enterprises of all economic sectors to directly export their own products and import raw materials for their own production.
- The reforms in price and trade has opened up different ways for farmers to decide how to use agricultural products (unlike in the past, farmers had to sell following the state plans). The price reform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rade of goods. Farmers can buy what they need and sell what they h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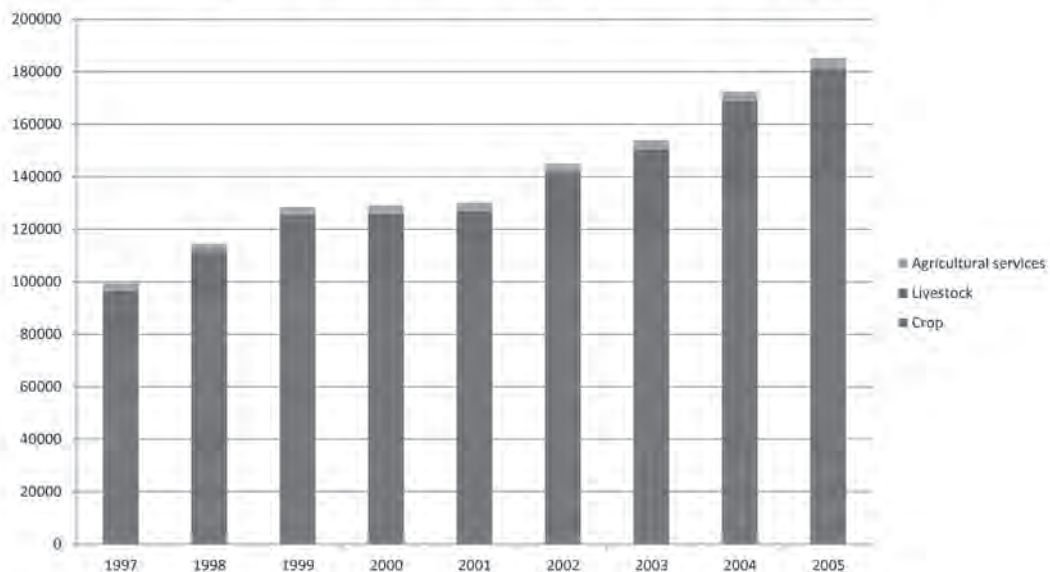
## Agricultural reform in Vietnam (cont.)

- The Land Law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1993 was an important progress in which the State recognized farmers' long-term stable land use rights.
- Article 1 of the Law states: "Land belongs to the entire people and is uniformly managed by the State ... The State allocates land to organizations, households and individuals for stable and long-term use .."
- In this Code , the land use rights for each farmer household have been expanded than before. Households and individuals were given 5 rights by the State in terms of land use rights: to convert, to transfer, to lease, to inherit and to mortgage land use rights.
- Article 3 recognized: "households and individuals assigned land by the State have the right to convert, transfer, lease, inherit or mortgage land use rights".
- To concretize the Land Law, the Government issued Decree No. 64 / CP dated September 27, 1993 on the allocation of agricultural land to households and individuals for stable and long-term use for production purposes.
- In addition, there were other measures to support agricultural re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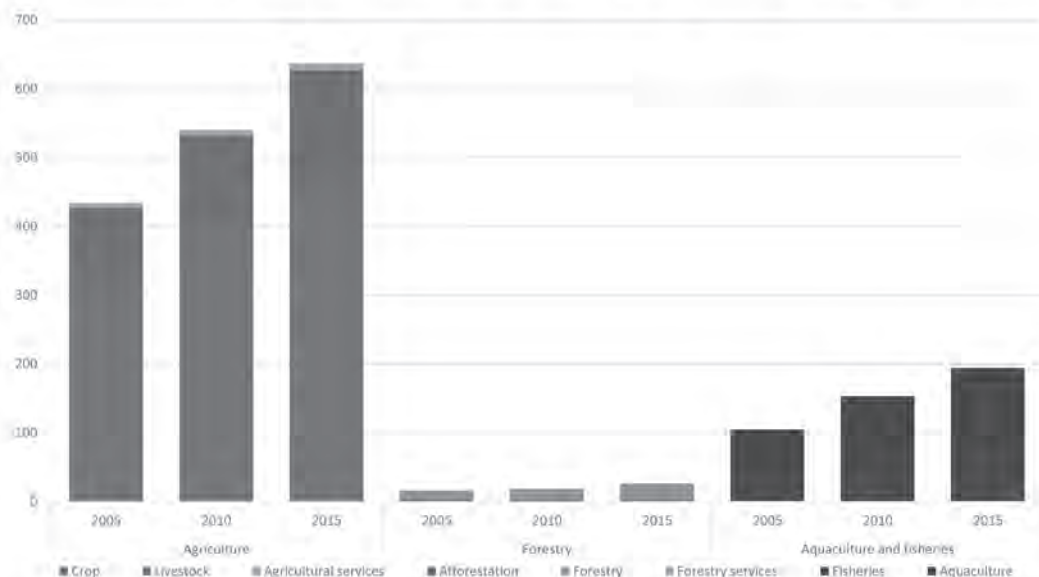
**Some results after the agricultural reform: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at real prices in the  
period 1990-1996 (bill. VN Dong)**



**Some results after the agricultural reform: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at real prices in the  
period 1997-2005 (bill. VN Dong)**



### Some results after the agricultural reform: Agricultural production value at real prices in the period 2005 – 2015 (bill. VN Dong)



### Agricultural reform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 North Korea has limited resources for agricultural growth:
  - Climate: low temperatures
  - Terrain, and soil conditions: About 90% of land is mountainous, average height of the country is 400m above sea level, Only about 18% of the total landmass (2,2 million hectares) is arable,
  - Crop yields have been low

## Origins of the reform

North Korea: famine in the middle 1990s

- Weather: heavy floods in 1995 and 1996, severe drought in 1997, other problems of climate change
- Decrease in economic aid from allies (the former Soviet Union, China, and East European countries) since these countries adopted a market economy in early 1990s => lack of fertilizer, agricultural chemicals and farm machinery
- Around 22 million people have been affected (deaths of perhaps thousands people was estimated)

## Agricultural reform in North Korea

- July 2002,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nnounced the economic reform with four components:
  - Microeconomic policy changes
  - Macroeconomic policy changes
  - Special economic zones
  - Aid seeking
- Agricultural sector:
  - Policy to improve incentives to farmers by increasing grain prices
  - Reform of collective farm system: in lines with the 1978 agricultural reforms in China

## Agricultural reform in North Korea (cont.)

North Korean food prices:

Product	Before January 2002	Price (won/kg)		After July 2002	
		January - June 2002	(0.88)	44	(40)
Rice	0.08	0.98	(0.88)	44	(40)
Wheat	0.06	0.71		28	
Barley	0.06	0.71		26	
Corn	0.04	0.60	(0.49)	24	(20)

Source: Noland Marcus (2003), (Procurement prices in parenthesis)

## Agricultural reform in North Korea (cont.)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 by North Korea, South Korea and FAO estimates (million metric tons)

Year	North Korea	South Korea	FAO
1997	2,680	3,670	2,660
1998	2,830	3,930	3,470
1999	4,280	4,220	3,480
2000	-	3,580	2,920
2001	-	3,950	3,540
2002	-	4,130	3,870
2003	-	4,025	4,156
2004	-	4,325	4,235
2005	-	4,450	4,350

Sources: Nam (2007)

## Agricultural reform in North Korea (cont.)

- Collective farm system reform started in 2005, continue on move to liberalize agriculture under new leader Kim Jong-un since end 2011: farmers can keep and sell in the market about 30-50% of their harvest depending on region
- In 2012, the field responsibility system (FRS)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selected areas: design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farming by reducing collective farming units to individual family level.
- More recently, North Korea implemented “Individual field responsibility system”, which is considered an “upgrade” to the FRS: places the full responsibility for farming on the heads of farmers (reduced government-set quotas and held local agricultural managers responsible for farming losses and profits).
- Individual field responsibility system has also been implemented in select areas of the country.
- FRS was implemented widely among farmers

## Some implications

- Reforms are often originated from a critically difficult situation
- Agricultural reform must be in line with the whole economic reform package.
- The moves from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to the government-regulated market economy is the key to liberalize the capacity of the farmers and other resources in agricultural sector.
- Opening the economy and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re also very important for all economic sectors.
- In terms of ownership, land reform very important: guaranteeing the close linkage of land use right and individual households is very important for the farmers to invest in land for the long term and for them to have greater efforts in their production.
- Other economic reform measures in the direction of applying market mechanism are also important (liberalizing trades, introducing price reform, renovating collectives in agriculture, supporting farmers by credits, information, technology...)
- North Korea is in the mid-way of the reform process, and the origin of the reform has had the same causes.
- The above lessons of Vietnam can be an useful case for studying and applying in North Korea.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oung-Hoon KIM**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김영훈 박사는 198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지금까지 북한농업분야 최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로는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2019),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2018) 등이 있습니다.

Dr. Young-Hoon Kim joined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1987 and has been the best expert in the field of agriculture in North Korea. Currently, he is a chairman of the North-South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Cooperation Committee in the 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al, Fishery, and Rural Affairs. Recent studies include Agricultural Cooper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Resumption of their Economic Cooperations (2019), Trade Trends and Prospect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 Korea (2018).

# 토론자 Discussant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교학부총장

**Moon-Soo YANG** Professor &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겸 교학부총장으로서 매일경제신문 기자,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북한경제, 남북경협, 남북경제공동체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Moon-Soo Yang is the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and Professor a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interests include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 published some books and articles: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Reformulat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 토론자 Discussant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Jangho CHOI** Head of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4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는 북한의 무역과 대외관계, 남북협력이며, 최근 연구로는 '북한의 식문화를 고려한 식품 수급량 추정',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등이 있습니다.

Jangho CHOI is a Hea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He joined KIEP in 2014. Dr. CHOI has a Ph.D. degree in Economics from Oregon State University (U.S.A) in 2014.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North Korea's trade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His recent working papers are: "Evading Sanctions by Detour Trade: a Case Study of North Korea", and "Food Balance Sheet analysis considering food culture in North Korea"

# 토론자 Discussant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

**Hyung-Joon LIM** Director, WFP Global Office in Korea, UN World Food Programme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 한국사무소장은 외교부 JPO로 2002년 UN WFP에 입사하여 온두라스 영·유아 영양사업 담당관, 기니비사우 부대표, 라오스 긴급구호 및 복구 총 담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2009년 부터는 UN WFP 로마 본부에서 아시아 지역 파트너십 총괄 공여관으로 주요 아시아 공여국과 협력을 주도하였고, 2011년말 UN WFP 한국사무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정부와 민간과의 각종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제개발협동 박사과정 교수로 초빙되어 강의하는 등 학교와 기관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소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행정학 석사(MPA)를 취득하였습니다.

Hyung-Joon Lim has been the Director of UN WFP Korea Office since 2011. He joined UN WFP in 2002 as JPO and served in Honduras, Guinea Bissau, and Lao PDR, managing emergency operations and development projects. After his missions, he moved to UN WFP HQ in Rome, Italy to serve as a donor relations officer for the Asia region until he was reassigned to ROK. In his 20s, Hyung-Joon backpacked over 80 countries and was engaged in several publications including "I swallowed Earth" (1999), "Global Young Korean" (2008), and "Let's smile together" (2012). In 2015,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teach "International Development Practice." Hyung-Joon received a B.A in language and diplomatic science, M.A in political science from H.U.F.S and MPA from Harvard University.





## Session 9-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과 대북 개발협력 과제 – SDG 3, 5번을 기반으로

### Implementing SDGs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Based on SDG Three and Five

주관기관  
Organized By

송실평화통일연구원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좌장  
Moderator

김성배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  
Sung Bae KIM Director,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발표자  
Presenters

권진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  
Jinah KWON Lecture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김지은 대성한방병원 부원장  
Ji Eun KIM Deputy Director, Daeseong Oriental Medicine Hospital

이메시 포카렐 유엔인권사무소(서울) 부소장  
Imesh POKHAREL Officer in Charg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토론자  
Discussants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Sin Gon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패트리샤 게디 성균관대학교 교수  
Patricia GOEDD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9-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과 대북 개발협력 과제 – SDG 3, 5번을 기반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6년에는 유엔전략계획을 통해 5년간 북한에서 진행될 유엔 활동들을 세웠고, 2020년에는 자발적 국가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고위급 포럼이나 여러 소통의 창구를 통해 보았듯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대북 개발 협력과 연계해 이루어지기엔 많은 난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 SDG 목표 가운데 특정 목표들에 대한 집중을 요한다. 제안하는 세션에서는 SDG 3번과 5번에 해당되는 여성건강에 관련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 현실적 어려움들을 짚어보고 진단된 실질적 도전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의 과제들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각각의 선행 과제들과 함께 생각해보려 한다.

## Implementing SDGs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Based on SDG Three and Five

North Korea has actively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new development process. It presented its efforts and plans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October 2019. Also, it is preparing for the voluntary national report (VNR) on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2020. However, nevertheless of noteworthy attempts of North Korea, the experienc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North Korea for the past two years brought both hopes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SDGs in the country. Based on such convoluted conditions, the proposed session plans to go through realistic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SDGs in North Korea and consider the feasible goals to achieve according to different timeframes and preconditions. While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requires a concentration of specific goals, the focus of the discussed topic will be women's health, which relates to Goal Three and Five.

# 좌장 Moderator



김성배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

Sung Bae KIM Director,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김성배 교수는 송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부 교수이자,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송실대학교 베어드학부 초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국방부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자문위원장,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조직 운영에 참여해왔습니다. 도시행정, 지방행정, 통일국가제도, 통일국가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북한의 정상적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도 주도하였습니다.

Professor Kim Seong bae is a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oongsil University's College of Social Sciences and a director of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degree in landscape architecture and earned a Ph.D. in urban planning from Harvard University. He served as the dean of the Baird department of Soongsil University and the dean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and has participated in the organization operation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the chairma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olicy Evaluation Committee,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lanning, and the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Administration. He has continued to study urban administration, local administration, unified national system, cities and regions of unified countries, and also led [the study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establishing a normal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 발표자 Presenter



권진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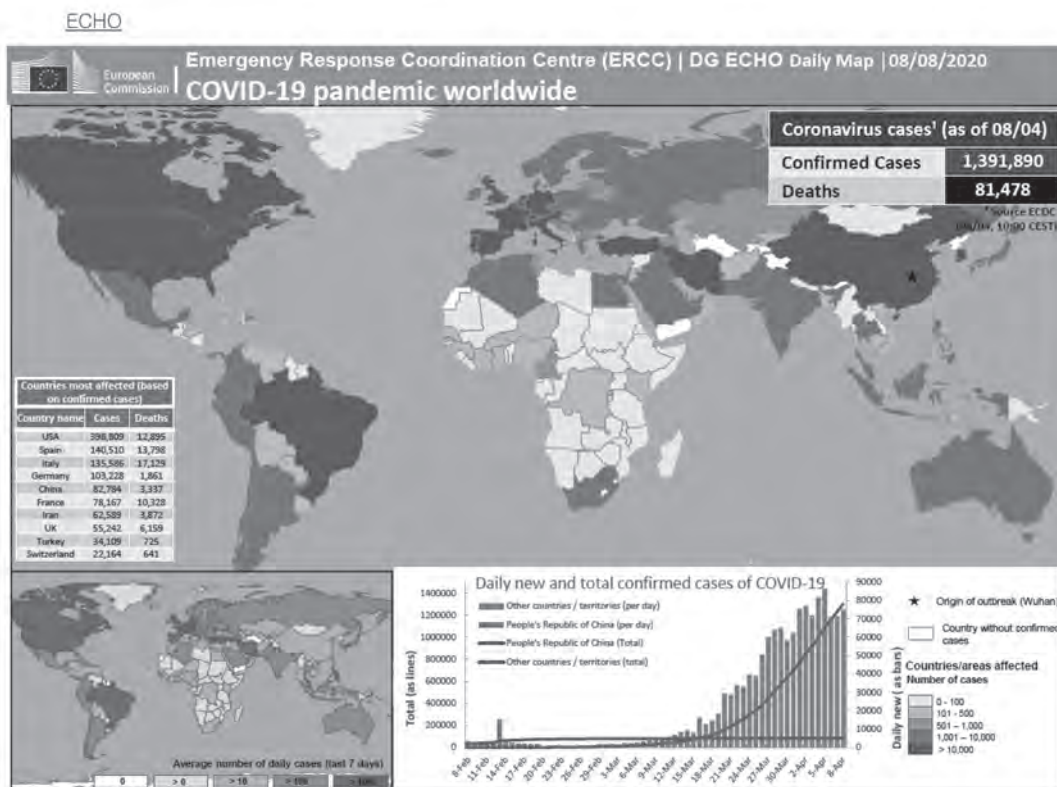
Jinah KWON Lecture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권진아 박사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젠더와 개발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 한국외대/유엔 평화대학원에서 사회학, 인권법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 국제 대학원에서는 탈북 여성의 이주 선택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엔지오, 통일 연구원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의 북한담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북한 개발과 SDG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던 중 본 세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Dr. Jinah Kwon is a lecturer at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and teaching a course on gender, migration, and development with her interests in SDGs. She majored in sociolog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rom the University of Toronto and UN-mandated University for Peace/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he gained her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with her dissertation on North Korean women's migration choice. She worked with various NGOs and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with her pass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Currently, she is also an in-country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at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 Gender, Health, Well-being, and Development in North Korea

Jinah Kwon, Korea University



Source: ECHO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과 대북 개발협력 과제 - SDG 3, 5번을 기반으로  
 Implementing SDGs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Based on SDG Three and Five



## Ratified Treaties by DPRK

OHCHR.org English | Français | Español | العربية | 中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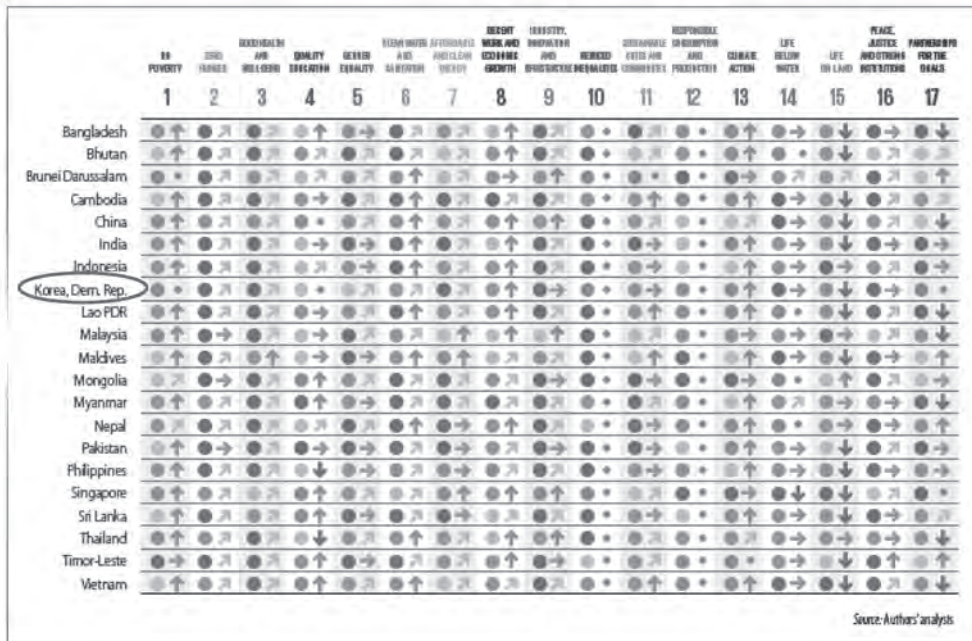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UN Treaty Body Database

English > Human Rights Bodies

Treaty	Signature Date	Ratification Date, Accession(a), Succession(d) Date
CAT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OP - Optional Protocol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I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4 Sep 1981 (a)
ICCPR-OP1-DP -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EED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7 Feb 2001 (a)
CERD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SCR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4 Sep 1981 (a)
CMW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3 Aug 1990	21 Sep 1990
CRC-OP-AC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OP-SC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09 Sep 2014	10 Nov 2014
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3 Jul 2013	06 Dec 2016

Source: OHCHR

#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Source: Author's analysis

Source: SDSN

## Progress of DPRK in the SDGs



● SDG achievement    ● Challenges remain    ● Significant challenges remain    ● Major challenges remain  
 ↑ On track    ↗ Moderately Increasing    → Stagnating    ↓ Decreasing    \* Data not available

Note: Excluding OECD specific indicators. Population-weighted averages. Source: Author's analysis

## North Korean Laws on Women's Rights

- The Decree on Gender Equality (1946)
- The Socialist Constitution (1972)
- The Family Law (1990)
- The Socialist Labour Law (1978)
- The Law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Women (2010)
- The Law on Labour Protection (2010)



# SDG Targets and Indicators

**GOAL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 TARGET 1.1** By 2030, eradicate extreme poverty for all people everywhere, currently measured as people living on less than \$1.25 a day
- INDICATOR 1.1** Proportion of unemployed persons (excluding persons receiving unemployment cash benefits, by sex) *SL\_EDV\_UEMP*
- INDICATOR 1.2** Direct economic loss attributed to disasters in relation to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 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 TARGET 2.1** By 2030, double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ncomes of small-scale food producers, in particular women, indigenous peoples, family farmers, pastoralists and fishers, including those in less developed regions; secure the means and improve the resilience of livelihoods to cope with shocks, and increase their access to markets, financial services, technologies and knowledge, and lan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 INDICATOR 2.3.1** Volume of production per labour unit by classes of farming/pastoral/forestry enterprise size
- INDICATOR 2.3.2**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millions of current United States dollars) *AG\_PSD\_XSUBDY*
- TARGET 2.c** Adopt measures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food commodity markets and their derivatives and facilitate timely access to market information, including on food reserves, to enhance food security
- TARGET 3.3** By 2030, end the epidemics of 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nd combat hepatiti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 INDICATOR 3.3.1** Number of new HIV infections per 1,000 uninfected population, by sex, age and key populations
- TARGET 3.5** Strengthe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bstance abuse, including narcotic drug abuse and harmful use of alcohol
- INDICATOR 3.5.1** Coverage of treatment interventions (pharmacological, psychosocial and rehabilitation and aftercare services) for substance use disorders (%) *SH\_SVLT*
- TARGET 3.9** By 2030,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illnesses from hazardous chemicals and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contamination
- INDICATOR 3.9.1**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household and ambient air pollution
- INDICATOR 3.9.2** Propor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with access to measles-containing vaccine second-dose (MCV2) (%) *SH\_ACS\_MCV2*
- TARGET 4.2**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hav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so that they are ready for primary school
- INDICATOR 4.2.1** Proportion of children aged 24-59 months who are developmentally on track in health, learning and psychosocial well-being, by sex, age and key populations
- INDICATOR 4.2.2** Language test parity index for achievement (ratio) *SE\_LGP\_ACHI*
- INDICATOR 4.2.3** Low-fertility-to-development status index for children aged 0-59 months *SR\_FVT\_SCBP*
- TARGET 5.3** Eliminate all harmful practices, such as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female genital mutilation
- INDICATOR 5.3.1** Proportion of women aged 20-24 years who were married or in a union before age 18 and before age 15
- INDICATOR 5.3.2** Proportion of women in managerial positions
- INDICATOR 5.3.3** Proportion of women in senior and middle management positions (%) *IC\_GEN\_MGTL*
- INDICATOR 5.3.4** Proportion of women in senior and middle management positions (%) *IC\_GEN\_MGTM*
- INDICATOR 5.3.5**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as agr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Summit on the Women, the outcome document of the 2012 Rio+20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NDICATOR 5.3.5.1** Proportion of women aged 15-49 years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sexual relations, contraceptive use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 *SH\_FPL\_INFMCU*
- INDICATOR 5.3.5.2** Proportion of women aged 15-49 years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reproductive health care (%) *SH\_FPL\_INFMCU*
- INDICATOR 5.3.5.3** Proportion of women aged 15-49 years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sexual relations (%) *SH\_FPL\_INFMSR*
- INDICATOR 5.3.5.4** Proportion of women aged 15-49 years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sexual relations, contraceptive use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 *SH\_FPL\_INFMSR*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과 대북 개발협력 과제 - SDG 3, 5번을 기반으로  
Implementing SDGs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Based on SDG Three and Five



# 발표자 Presenter



김지은 대성한방병원 부원장

Ji Eun KIM Deputy Director, Daeseong Oriental Medicine Hospital

김지은 한의사는 북한에서 청진의학대학 고려의학부를 졸업하고 청진시 포항구역병원에서 10년간 내과, 소아과 의사로 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입국 후에는 세명대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대성한방병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인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이후 국민대학교 법학과에서 의료법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의료법 박사과정 수료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의학대학과 한국의 한의과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험자로서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운영위원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남북의료용어사전을 발간하는 일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의과대학과 과정과 남북한 의료현장을 모두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료실태개선과 남북한 의료통합을 위한 대안들을 연구하면서 북한인민들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을 높은 수준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Ms. Kim Ji-Eun graduated in Korean Medicine from Chongjin Medical University, DPRK, and then worked as a doctor in internal medicine and pediatrics at Pohang District Hospital, Chongjin, for ten years before she came to South Korea.

After coming to the South, she graduated in Oriental Medicine from Semyung University and is currently the Deputy Director of Daeseong Oriental Medicine Hospital.

After completing a Masters degree in Humanities Medicin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he also received a Masters in Medical Law from Kookmin University and is currently completing a PhD in Medical Law at the same institution.

Having graduated from medical universitie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she has an interest in working to improve the North's medical facilities.

Currently she is a member of the Inter-Korea Foundation for Health and Medical Education's management board and is participating in the consultative committee for publication of the much-needed Dictionary of North-South Medical Terminology.

On the basis of her experience of medical studies and medical practice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she hopes to study the ways to improve the DPRK's medical situation and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s medical practice, which will enable the North Korean people to experience a high level of medical care, which is the fundamental human right.





## Application of and Practical Possibil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DPRK

○ Kim Ji-Eun  
Former Pediatric Doctor in DPRK

### Contents

#### **1. Current Medical Situation in DPRK**

- 1) History of Healthcare
- 2)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Healthcare
- 3) Direction of Healthcare in Kim Jong-Un Era

#### **2. Maternal and Infant Healthcare**

- 1) Structural Basis (Law on Women's and Children's Health)
- 2) Maternal Health (maternal mortality)
- 3) Infant Health (infant mortality and vaccination rates)

#### **3. Application of and Practical Possibil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1. History of DPRK Medical Care

## 1. Free Medical Care

Nov 1945 Health Authority established

1946 "20 Article Program" presented – basis of the constitution

Jan 1947 Limited implementation of free healthcare (laborers and office workers)

Nov 1952 Resolution to implement free healthcare to all citizens (effective Jan 1953)

27 Feb 1960 Legal declaration of free comprehensive healthcare for all citizens

1. State responsibility for healthcare
2. Ensure doctors in all regions
3. Eradicate endemic & infectious diseases
4. Emphasise mother and infant care
5. Foster medical workforce
6. Emphasise drugs & medical productivity

## 2. Medical Districts System – additional explanations

Clinics for areas without doctors – doctors on rotation – later development of family doctor system

Jan 1989 Medical Districts System – conversion to neighborhood family doctor system

## 3. Preventative Medicine

1966 Kim Il-Sung "Socialist medicine is preventative medicine"

Apr 1980 "People's Healthcare Law" enacted (Article 2 – Free comprehensive health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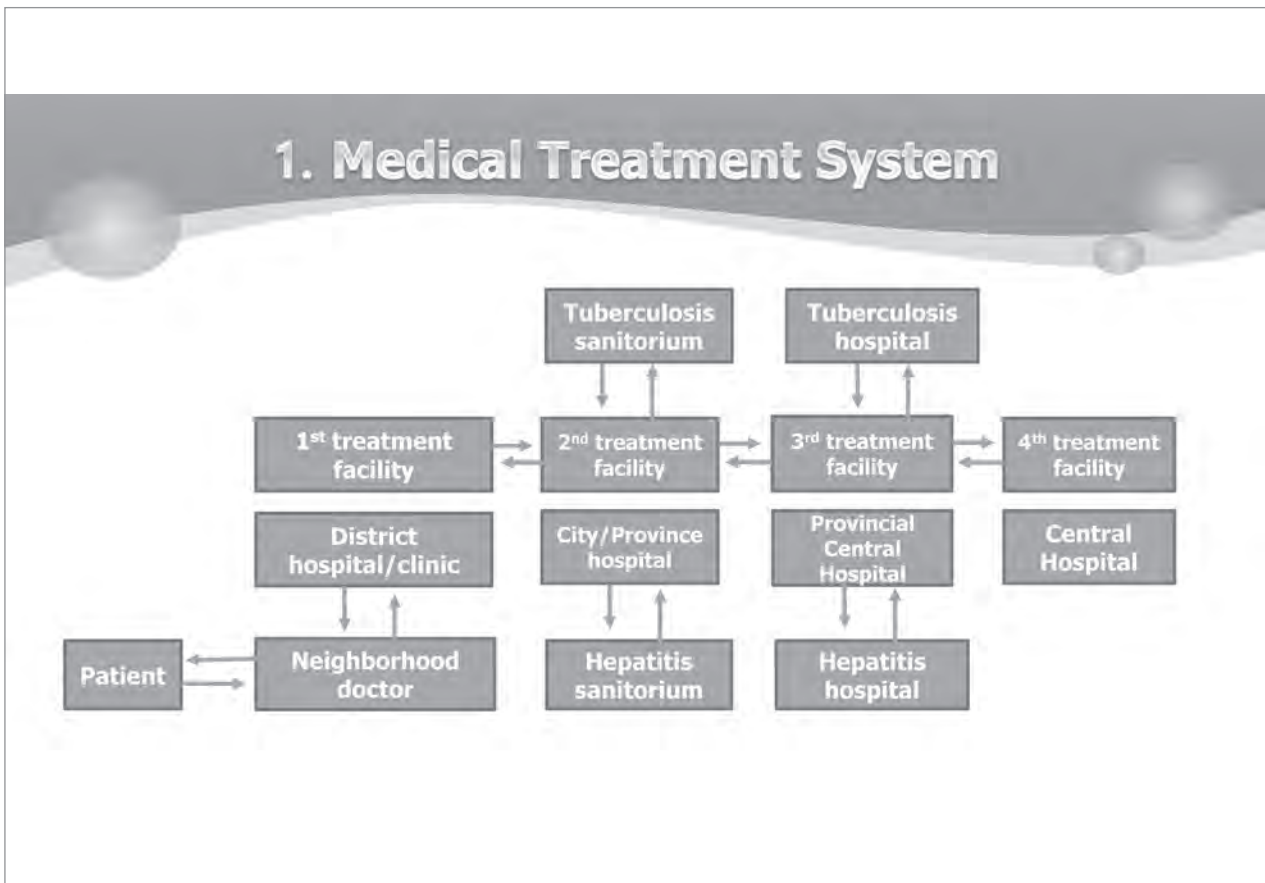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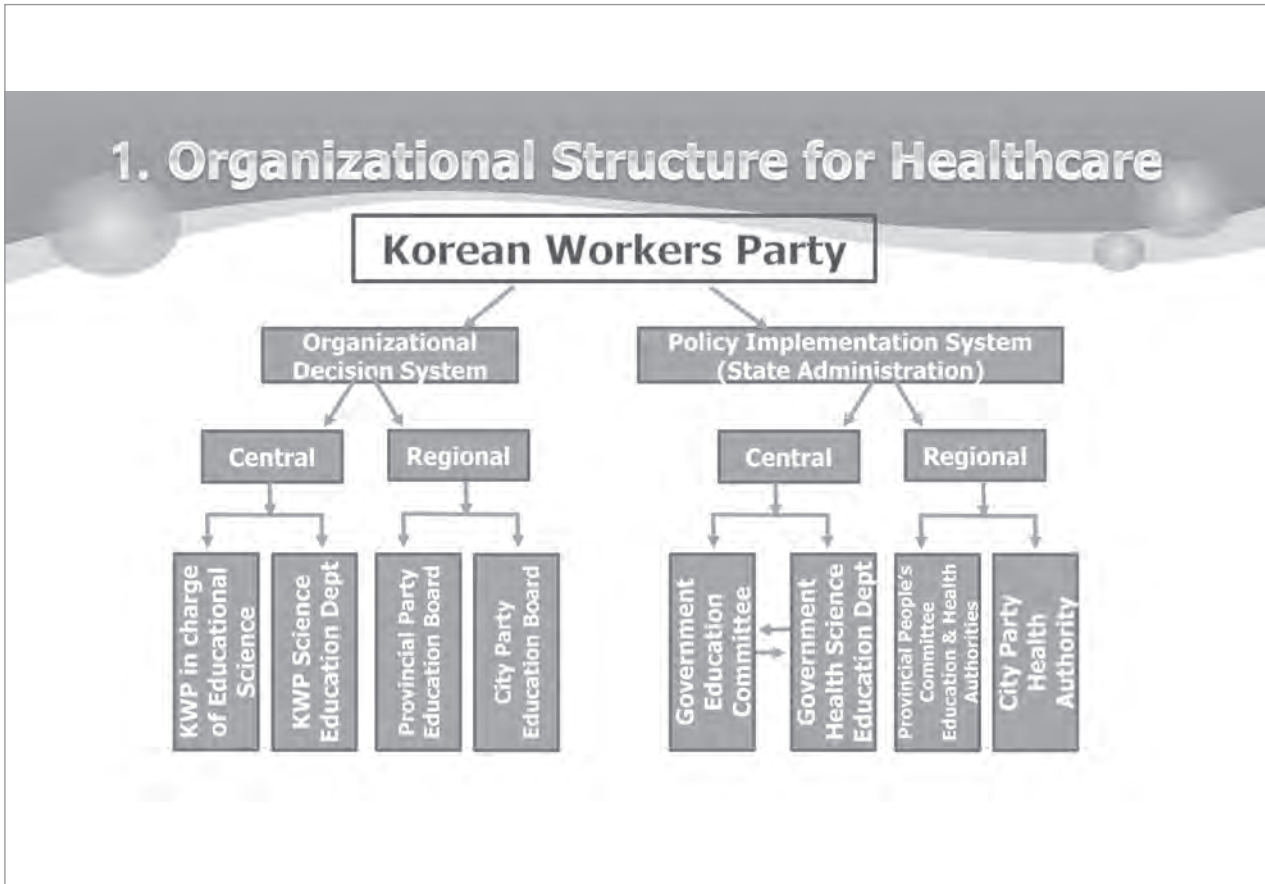
Article 3 – Legislates protection of health by preventative medicine)

# 1. Neighborhood Family Doctor System

## 1. Residence system

## 2. Workplace system

- \* Patient checkups
- \* Prevention (survey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
- \* Preventing disease and promoting hygiene
- \* Village environmental hygiene management
- \* Policy directives from the Center



# 1. Direction of Healthcare in Kim Jong-Un Era

## Reform of Medical Law

- 1948 First constitution. Art 17: Medical Treatment (Right to Medical Assistance)
- 1972 Constitution Art 48 Sec 3: Protection of Life and Improvement of Health
- 1980 "People's Health Law" (Strengthen and develop performance, guarantee of healthy life)
- 1997 "Medical Law" (Material guarantee of medical industry, international cooperation.
  - Korean medicine (natural treatments). Regulation of narcotic analgesics.
  - Leadership system for medicine and legal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medical law.
- 2012 Revision of Medical Law Art 27 -
  - Scientifically-verified patient care
  - (close examination of laser surgery, organ transplants, gene therapy.
  - Relatives' permission for organ donation (emphasis on human rights / ethical concerns)

# 1. Direction of Healthcare in Kim Jong-Un Era

## Key : Modernization of medical care, emphasis on science

### o Modernization of healthcare system

Rodong Sinmun, 26 May 2016 (p4) editorial: "Development of another effective medicin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at will contribute to preventative medicine" – central, city, district combined management. Confirmation of medicine dosage, collection, storage, analysis, use of information on medicine management. Understanding surplus and deficiency of supply, improving quality of medical services.

Rodong Sinmun, 30 Jan 2018: Development of "Ryugyong 2.0" – Introducing Ryugyong Oral Health Hospital "Hospital Information System" – introducing results of information system that manages patient care from admission to treatment.

### o Modernization of hospitals

2013 – Ryugyong Oral Health Hospital, Okryu Children's Hospital

2015 – On-site inspection by Kim Jong-Un of Jongsung General Pharmaceutical Factory

2016 – Ryugyong General Eye Hospital opened, Construction of medical products factory. Munsu "Hospital Town"

## 1. Direction of Healthcare in Kim Jong-Un Era

### Key : Modernization of medical care, emphasis on science

#### Modernization of Medical Equipment – Rodong Sinmun 27 Apr 2016 (p5)

Development of toxic ion removal machine, children's electrocardiograph, electric gastroscope, microabsorbent shredder, portable nasal endoscope, eardrum micro-surgery tool, etc

Toxic ion removal machine – Penetrate inside of ion – discharge toxic and waste products

Children's electrocardiograph – check for circulatory diseases such as arrhythmic heart using portable computer / smartphone

Development of teaching staff and research at **Chongjin Medical University**

## 1. Direction of Healthcare in Kim Jong-Un Era

### Key : Modernization of medical care, emphasis on science

#### Modernization of Medicines

Development of anti-cancer drugs, radiation protection medicine, medicines for brain diseases, ginkgo leaf arterial hardening medicine, medicine for breast tumors, etc

**Anti-cancer drugs "Golden Aralia Anti-Cancer Medicine"** - "Highly evaluated at International Science Forum in Europe" and found to be effective at "controlling enzymes that cause cancer". Rodong Sinmun 15 Mar 2016 (p3). Radiation protection medicine. Rodong Sinmun 24 May 2016 (p5)

**Stroke Medicine "cerebroxine capsule medicine"** – produced along with Korean medicine – prevents formation of the brain's interstitial cells, improves headaches, dizziness, disturbed sleep, disability in language. Rodong Sinmun 14 Aug 2016 (p5).

**Ginkgo leaf arterial hardening medicine** – Produced at Ganggye Korean Medicine Factory. 1 Oct 2018 (p5)

**Medicine for breast tumors** – does not affect hair loss, cardiovascular system, digestive system and urinary system and shows high medical effectiveness. Clinical trials prove effectiveness in treating women's diseases such as breast cancer, ovarian cancer, mastopathy etc. Rodong Sinmun 30 May 2018 (p5)

## 2. Maternal and Infant Healthcare – Structural Basis

### 1) Due to State Medical System

**Women** : general – family doctor = ob/gyn doctor  
 pregnancy – ob/gyn doctor = family doctor

**Infant**: One week after birth – ob/gyn doctor  
 One week later – family doctor = ob/gyn doctor = pediatric doctor

### 2) Law on Maternal and Child Healthcare

**Constitution** : Pre- and post-maternity leave. Shortened working hours, expansion of childcare facilities.

**People's Healthcare Law** : Maternity hospital and infant hospital, childcare institutions provide nutritional supplements

**Aim of promoting births** : Jul 2015 Labour Law (Art 66) and Law on Women's Rights (Art 33) revised

**Lengthening of maternity leave** –  
 77 days (7 before birth / 70 after) – 150 days (60/90) – 240 days (60/180)

## 2. Maternal Health

### Nutrition in Women of Childbearing Age

Research on anemia in pregnant women	Research on mothers' body weight
Use herbs and iron to treat pregnant women with anemia caused by iron-deficiency – clinical research (2011, 2 <sup>nd</sup> quarter)	Clinical research on connection between mother's weight in pregnancy and birth method and the baby's weight (2014, 1 <sup>st</sup> quarter)
Research into anemia caused by pregnancy – change in red blood cell number, impact of childbirth (2012, 3 <sup>rd</sup> quarter)	Clinical research on connection between mother's weight in pregnancy and birth method and the baby's weight (2015, 1 <sup>st</sup> quarter)
Research into impact of pregnancy on anemia (2014, 2 <sup>nd</sup> quarter)	Clin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a pregnant woman's weight-gain on the pregnancy and birth (2015, 3 <sup>rd</sup> quarter)
Clin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herbal tea extracts on pregnancy-related anemia (2016, 4 <sup>th</sup> quarter)	Clinical research into the connection between pre-pregnancy weight and weight gain in pregnancy, complications, birth method, and child's birth weight (2016, 4 <sup>th</sup> quarter)



## 2. Infant Health

### ○ Research on new mothers' expression of milk

Year	Contents
2010	Effect of juyeom tea on milk expression in new mothers
	Effect of Korean medicine on milk expression in new mothers
	Research on acupuncture treatment when milk expression is difficult
2011	Effect of various medicines on the PGE2 content of mothers' milk
2013	Clin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early breastfeeding and back therapy on new mothers and babies
2015	Research on knowledge about breastfeeding among nursing mothers
	Clinical research on early breastfeeding in babies born by caesarian section
	Clinical research on curing hardened breast with yam steam
2016	Clinical research on using milk capsules when lactation is insufficient immediately after birth

## 2. Infant Health

### 1. Nutrition

indigestion and diarrhea > respiratory disease . (also colds, cystitis, arthritis)

### 2. Vaccinations

**Vaccination system:** Vaccine procurement: delivered by helicopter from Center to regions

– fridges in towns

stored (in warehouse) – delivered straight from the fridge and used within 3-4 hours

(given in groups, in cities, home-visit to those missing, omission rate less than 3%)

**Vaccination policy :** BCG after birth. Hep B compulsory. Jap Enc, Polio, chickenpox, mumps virus, scarlet fever, diphtheria. pertussis, measles, tetanus, malaria.

▪ **Doctor indiv vacc box / patient indiv vacc record card / must take card if moving**



## Under-5s Death Rate

	2000	2001	2004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DPRK	59.9	52	34.9	29.5	23.9	22.4	21	20	19
KOR	7.5	7.6	5.9	4.4	3.7	3.6	3.5	3.4	3.3
USA	8.4	8.3	8.1	7.3	7	6.9	6.9	6.7	6.6
VNM	29.7	28.4	25.5	22.9	22.2	21.9	21.6	21.3	20.9
WOR	77.1	74.5	66.5	37.2	33.2	32.2	31.2	30.3	29.4

## 3. Possibilities for applying SDGs

### ○ Aim

- 3.1 \_ By 2030, reduce infant mortality rate to less than 70 per 100,000.
- 3.2 \_ By 2030, eliminate preventable deaths in children under 5. (All nations are to reduce newborn mortality to below 12 per 1000 and mortality of under 5s to below 25 per 1000)
- 3.3 \_ By 2030 end AIDS, TB, malaria, and foreign tropical disease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 3.4 \_ By 2030 cut early death by non-communicable diseases by 1/3 through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improve mental health and welfare.
- 3.5 \_ Incr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bstance abuse, including narcotics and alcohol
- 3.6 \_ By 2020, halv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from traffic accidents
- 3.7 \_ By 2030 guarante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including family plann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guarantee state strategies and programs.
- 3.8 \_ Universal health insurance, ensuring protection from financial danger, good-quality compulsory health services, safe, effective and cheap compulsory medicine and vaccines.
- 3.9 \_ By 2030, reduce death and illness from toxic chemicals,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 3. Possibilities for applying SDGs

- Systematic and detailed system in place, albeit with shortcomings
- Dedicated and well-educated healthcare workers
- Interest in and hopes for DPRK "human rights" improvement,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 New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preparations for pharmaceutical factories
- Showing active participation in implementing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Citizens tend to avoid visiting medical facilities
- Non-transparency un normal operation of medical system
- Insufficien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non-transparent monitoring

### 3.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SDGs

- "Life-saving" focus – humanitarian assistance
- Basic support
- Support for the most vulnerable people
- Support for practical things that will help them help themselves (for hospitals, operating pharmaceutical factories)
- Need for sincere support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 Need for active interest from ROK – N/S medical cooperation
- Determination from DPRK leaders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과 대북 개발협력 과제 - SDG 3, 5번을 기반으로  
Implementing SDGs and Direc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Based on SDG Three and Five



# 발표자 Presenter



**이메시 포카렐** 유엔인권사무소(서울) 부소장

**Imesh POKHAREL** Officer in Charg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이메시 포카렐은 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총괄 담당자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2006년 합류하여, 태국,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제네바, 네팔 등지에서 아시아 역내 긴급상황 조정관, 태국 프로그램 팀 총괄, 인권관으로 활동했다. 국제노동기구 미얀마 사무소와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책임규명, 인도적 활동 및 평화 유지와 관련하여 경험을 쌓았고, 사법 및 경영 분야 학위를 취득했다.

Imesh Pokharel is Officer-in-Charge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ield-based structure in Seoul. He has worked with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ince 2006 as a Regional Emergency Coordinator for Asia, Team Coordinator for Thailand Program and as a human rights officer in Thailand, Myanmar, Afghanistan, Malaysia, Geneva and Nepal. He has also worked with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n Myanmar and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Nepal.

He has experience in Rule of Law, Democratic Governance, Accountability, humanitarian action and Peacebuilding. He holds a degree in Law and Management.

##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Women's Right to Health in the DPRK

*Imesh Pokharel,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Korean Global Peace Forum, Seoul, 9 September 2020*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DPRK engagement with UN Human Rights Mechanisms

- Treaty Bodies
- Special Procedures including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HRC resolutions)
- OHCHR Office
- General Assembly and Third Committee (UN Secretary General'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Human Rights Resolutions, Security Council briefings et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Recommendations from UN Human Rights Mechanisms on Women Health (SDG 3)

- Reduce inequalities in access to health care.
- Reduce infant,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rates, particularly in the provinces and rural areas.
- Improve public health services and achieve universal health care.
- End malnutrition and provid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among women and girls, in particular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 Provide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includ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Recommendations from UN Human Rights Mechanisms on Gender Equality (SDG 5)

- Ensure gender equality (Develop Plan of Action, Women empowerment programs etc.).
- Increase the minimum age of marriage to 18 years.
-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 Addressing Domestic Violence (Criminalization, access to justice, support to victims/survivors).
-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DPRK human rights cooperation at the country level

- Through the United Nations Country Team and the UN agencies.
- UN Strategic Partnership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PRK (2017-21).
- DPRK Needs and Priorities Plan 2020. (SDG 1, 3 and 6)
- SDG Implementation and Voluntary National Review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UN Strategic Partnership Framework for Cooperation

Core programming principl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nd Gender Equality

### Women Health Related Outcomes

- Sustained and equit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 with emphasis on primary health care especially for the most vulnerable and in remote areas.
- Enhanced services to address maternal and childhood diseases especially those experienced by the most vulnerable women and children.
- Increased access to and use of reliable disaggregated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dat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Case Studies

**Case Study 1: Women Health in  
Detention**

**Case Study 2: Domestic Violenc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Thank You**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토론자 Discussant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Sin Gon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김신곤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이자, 고려대학교대학원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 주임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 학술이사이자 서울국제내분비 학술대회 학술위원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무료검진을 진행하면서 탈북민 코호트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질병부담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 중재 모델 개발 연구]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는 Lancet, BMJ 같은 저명한 국제저널에 출간되었으며, 현재 네이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in Gon Kim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of the Korea University Medicine and also Head of Department of Healthcare and Medicine for Unified Korea at the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He graduated with his medical degree in 1993 and also received his PhD degree in 2005 from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e served as the Director, Committee of Scientific Affairs in the Korean Endocrine Society and the Chair, Scientific Program Committee of the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ICEM, 2017-2018). Currently he is the President, Association of Healthcare for Korean Unification. He is a principal investigator of a unique immigrant study named North Korea Refugees in South Korea (NORNS) Study. His work has been published widely in noted International journals including Lancet, BMJ. He is Editorial Board Member of Scientific Reports.

# 토론자 Discussant



패트리샤 게디 성균관대학교 교수

Patricia GOEDD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패트리샤 게디교수는 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교무 처장이십니다. 게디 교수님은 워싱턴 대학교에서 아시아법학 그리고 비교법학으로 박사학위와 법학박사를 수료하였으며, 워싱턴 주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수료했습니다. 연구 및 강의 분야는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인권법, 법의 초국가적 적용, 공공이익 변호, 난민 변호 그리고 임상법학교육입니다. 한국 사회 과학 인권 포럼의 핵심 교수이며, 한국 인권 재단 등 많은 국내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전미북한 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며, 북한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 쟁점 사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Patricia Goedde is a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Law, where she was also Associate Dean of Academic Affairs. Dr. Goedde received a JD and PhD in Asian and Comparative Law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and is a licensed attorney of the Washington State Bar Association. Her teaching and research subjects are in the areas of East Asian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ransnational legal mobilization, public interest lawyering, refugee advocacy, and clinical legal education. She is a core faculty member of the Social Sciences Korea (SSK) Human Rights Forum, and has served on various Korean committees, including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She is also a member of the U.S.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and has published on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 Session 9-3

## 숲속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 Direction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for United Forest in Korea

주관기관  
Organized By

국립산림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좌장  
Moderator

손요환 고려대학교 교수  
Yowhan S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발표자  
Presenters

김명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과장  
Myungkil KIM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Sang Young HONG Secretary General, Korean Sharing Movement

강호상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Ho Sang KANG Collaboration Professor, Institutes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자  
Discussants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Yul KWON Deputy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김명관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장  
Myeong-gwan KIM Director, Korea Forest Service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ang Min CHU Chief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9-3)

## 숲속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

'남북산림협력' 사업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된 사업이다. 2018년 남북산림협력은 2차례의 분과회담(18.7월, 10월)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 냈다. 산림협은 상호 호혜적이고 인도주의적 협력 분야로 남과 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앞으로 남북산림협력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학계,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본다.

## Direction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for United Forest in Korea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project" was considered a priority in order to fulfill the agreements made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Following the Summit, two sub-committee meetings (held on July 2018 and October 2018) produced tangible results for realizing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Forestry cooperation is a mutually reciprocal, humanitarian cooperation field that could provide a platform for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forum will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in diverse perspectives, including those of the academia,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좌장 Moderator



손요환 고려대학교 교수

Yowhan S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1993년부터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한국임학회(한국산림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며, 산림생태계의 탄소 및 양분 순환과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Soil Science Society of America Journal 등 다수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및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He is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and has served as Editor and Editor-in-Chief of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and Soil Science Society of America Journal and as President of the Korean Forest Society. Currently he is Fellow of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His main research interest is carbon and nutrient cycling in terrestrial ecosystems and climate change.



# 발표자 Presenter



김명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과장

Myungkil KIM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02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에 입사해 목재이용 연구 및 연구기획 업무를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국제산림연구과장을 맡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공적개발원조(ODA) 파급효과 분석 연구, 목재류 비관세장벽 및 단기 임산소득물의 해외통상업무, 농림위성 융합 산림공간정보 연구, 남한산림협력 전략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 joined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in 2002 and worked on wood use research and research planning.

Since 2017, I have been the director of global forestry divi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search on the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 of ODA, technical barrier on trades for timber, trade effectiveness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research on forest information combined with forest satellite, and conducting research on forest cooper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 남북산림협력, 천천히 서두르기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 산림현장 -

아이티의 황폐화된 산림

도미니카 공화국의 잘 보전된 산림

엘 고어 <불편한 진실, 2006> 중



## 북한, 접경지역에서 단절된 녹색

- ▶ 북중접경지역  
청조의 봉금정책에 의한 압록, 두만강 지역 산림 보호
- ▶ 남북접경지역  
개성 판문점 일대의 남북한 산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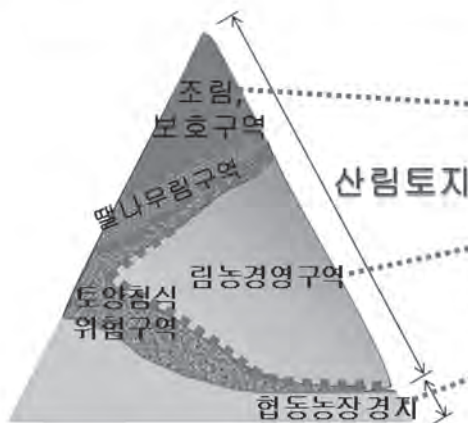
북중접경지역



개성 공단 인근



## 경사도 고려한 모니터링



<촬영: 김경민(2018.6., 평북 삭주군)>

경사도	토지이용
15° 이하	농작물 재배
15°~30°	임농경영
30° 이상	산림관리

※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발표자료 '림농복합경영에 대하여(2015)

• 우리나라 : 영농여건 불리농지 기준은 평균 경사율 15%(약 8°) \*농지법 제2조

➔ 8° 이상 산림황폐지 모니터링(1999~)

• 북한 : 15° 이하 농경지로, 15° 이상 산림복구 대상지(임농복합경영 포함)로 고려

➔ 15° 이상 우선복구대상지 집계시작(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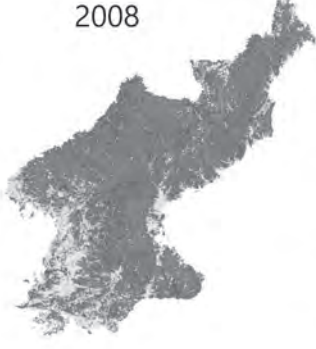


## 북한산림실태(1999 & 2008)

1999



2008



### ◆입목지

('99)753만ha → ('08)615만ha

### ◆산림황폐지

('99)163만ha → ('08)284만ha

### ◆산림황폐율 변화

('99)18% → ('08)32%



◆ 함경북도 온성군(촬영 : 김경민, 2019)



◆ 함경북도 무성군(촬영 : 거례와 숲,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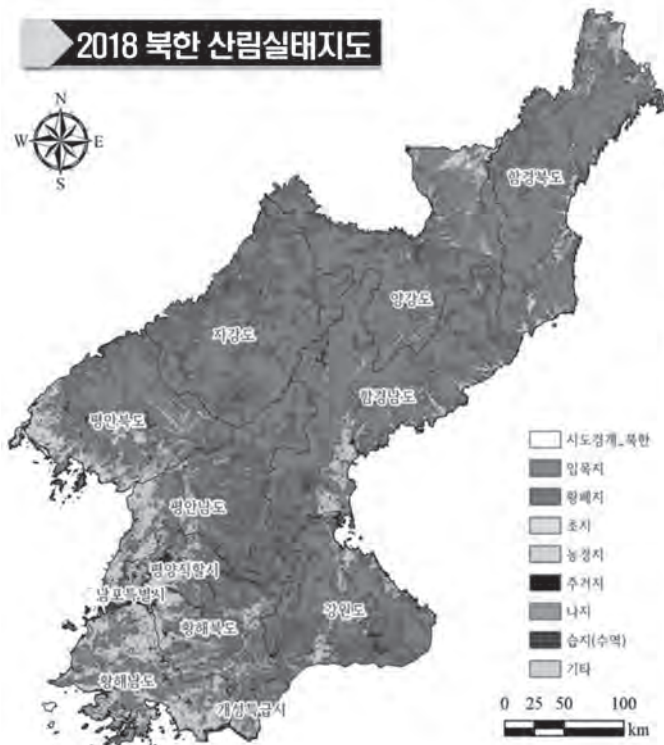


◆ 함경남도 부전군(Xu 박사 제공, 2010)



## 북한산림실태(2018)

### 2018 북한 산림실태지도



### 2018 북한 산림황폐현황

- 황폐지 면적 : 262만ha
- 황폐율 : 전체 산림의 28%
- 우선복구대상 : 147만ha(15° ≤)

<15도 이상 황폐지 유형별 면적> (단위:만ha)

스계	개간산지	무림곡지	선간나치
147	59	83	5

※ 최근에 발표한 북한의 통계와 유사한 경향보임.  
무림곡지 84.2만ha('18, IUFRO), 경사지밭 55만ha('16, FAO)





## 북한산림복구 노력

- '14년 2월 IUFRO 학술회의 북한 발표자료 -

### 산림 녹화

■ 산림녹화 ('13~'22) 조성목표 : 168만2천ha

- 연간 14~17만ha 조성 : 인공조림면적 (149만3천ha), 자연갱신면적 (18만9천ha)
- 인공조림 : 팻나무림(41⇒80만ha), 경제림(66⇒147만ha), 임농복합경영(15⇒45만ha)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면적 (만ha)	14.0	16.0	16.9	17.1	17.3	17.5	17.5	17.3	17.3	17.3

### 종묘 생산

- 재종림 확대 : 2만6천ha → 3만5천ha (종자 연간채취목표 : 6백톤 → 8백톤)
- 양묘장 조성 : 6,000ha (국가 3,000ha, 지자체 3,000ha)
- 205개 시 군에 20~60ha 규모의 양묘장 조성 (연간 생산목표 : 6억그루 → 10억그루)



## 수림화와 원림화 확인

### [수림화-조림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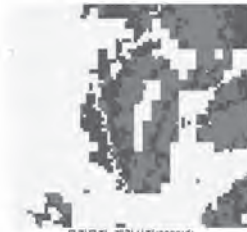
- 도로, 철길, 공장, 양묘장 주변에 조성했다는 기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
- 특히, 수안군, 해주시, 신천군, 원산시 등이 실적 수치가 높음.

### [원림화-공원조성]

- 201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원림화를 강조하기 시작, 2019 신년사에서 강조



Google 영상(2002, 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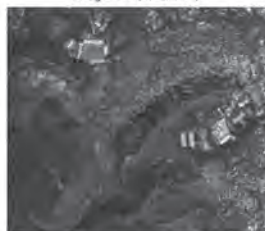
무림목지, 개간산지(2008년)



침, 활엽수림(2018년)



Google 영상(2000)



Google 영상(2016, 원산)  
<원산 주변 수림화>



Google 영상 (2007년)  
<도심내 민둥산(무림목지, 개간산지)의 입목지로 회복(개성시)>



Google 영상 (2017년)



Google 영상(2017)  
<평양시 3대혁명전시관>

# 국립산림과학원 북한연구! 협력에 힘 보태!



남과 북은 2018년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 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며 남측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한이 생각하는 산림복구기술

※ 출처 : 장용철 외, 산림과학, 2015, 산림연구원

구분	요구 기술	구분	요구 기술
산림복구 전투계획	- 산림과 농지 경계구분 - 경사도 20°이상 산림구분 - 임농복합경영, 산림조성 대상지 선정	산불	- 산불감시 및 막이방법 - 산불통보체계 - 입산규율 및 감독 통제
종자생산	- 주요수종 채종림 조성(형성이깎나무, 잣나무) - 우수 수종 채종림 조성	병해충	- 산림병해충 종합관리 체계 - 유익곤충의 인공사육
나무모 생산	- 양묘장의 생산능력 향상 - 토양지력 향상 및 관수대책 - 시설 및 숲사이 나무모 생산	산사태	- 사방기술을 통한 종합 유역관리 - 토지침식과 퇴화방지
식수조림	- 조림(직파, 삽목, 자연갱신 등) - 사름률(활착율) 향상	산림자원조사 및 관리	- 3S(RS, GIS, GPS)를 통해 산불, 자원조사, 병해충방제 - 산림토지면적 산출 - 수종구분 및 임목축적 - 산림경영관리체계(정보망 구축)
임농복합경영	- 경사지 관리(20°이상 지역의 조림) - 혼성림 및 경관림(고속도로, 철도 등) 조성 - 비배관리		
딸나무림 조성	- 적지적수 선정		



## 북한 조림 가능수종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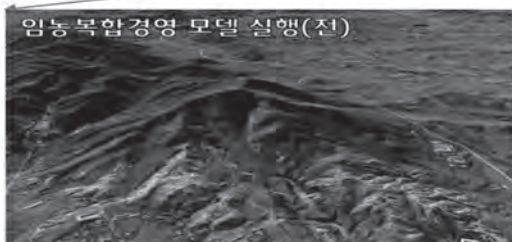
지역	용도	주요 식재가능 수종(북한명)	지역	용도	주요 식재가능 수종(북한명)
함경북도	용재	가문비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이깔나무	평양시	용재	소나무, 참나무류, 신갈나무, 박달나무, 아카시아나무
	특수용재	박달나무		특수용재	다릅나무, 울푸레나무
	섬유종이원료	가문비나무, 사시나무		섬유종이원료	사시나무, 평양뽕뿌라나무, 수삼나무
	기타	느릅나무, 사스래나무		기름원료	개암나무
함경남도	용재	소나무, 이깔나무, 분비나무, 자작나무, 떡갈나무	남포시	기타	싸리나무
	특수용재	박달나무, 옹나무		용재	소나무, 이깔나무, 참나무류, 아카시아나무
	섬유종이원료	분비나무, 전나무		특수용재	피나무, 울푸레나무
	원림식물	단풍나무		원림식물	단풍나무
자강도	기타	굴피나무, 느릅나무	황해북도	기름원료	잣나무, 떡죽나무, 초피나무
	용재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 참나무류, 자작나무		사방수종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특수용재	피나무, 옹나무, 박달나무, 울푸레나무		기타	소사나무, 병아리나무
	섬유종이원료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황철나무		황해남도	용재
원림식물	단풍나무	특수용재	울푸레나무, 피나무		
기타	눈잣나무, 고로쇠나무, 사스래나무	섬유종이원료	수삼나무, 전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포플러나무		
용재	참나무, 이깔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원림식물	단풍나무		
양강도	특수용재	피나무	함해남도	산열매	밤나무
	섬유종이원료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황철나무		기름원료	잣나무, 가래나무
	기름원료	잣나무		사방수종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기타	사스래나무		기타	노간주나무, 눈잣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돌베나무
평안북도	용재	이깔나무, 자작나무, 가문비나무	개성시	용재	소나무, 참나무류
	특수용재	박달나무, 피나무, 울푸레나무		원림식물	목란, 단풍나무
	섬유종이원료	가문비나무, 전나무, 황철나무		기타	팥배나무, 흑느릅나무, 개박달나무, 물앵두나무, 고로쇠나무
	기타	노간주나무, 사스래나무, 두릅나무, 고로쇠나무, 오갈피나무		강원도	용재
평안남도	용재	소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떡갈나무, 참성이깔나무, 만주이깔나무, 아카시아나무	기타		서어나무, 검쟁나무, 탱자나무, 보리수나무, 조릿대, 누리참나무
	섬유종이원료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뽕뿌라나무	용재		소나무, 참나무류
	사방수종	아카시아나무	기름원료		떡죽나무
	기타	찔뚱나무, 눈잣나무	산열매	신열매	
			기타	매저지나무, 두메자른, 큰만병초, 참대류, 모시풀, 사철나무, 탱자나무, 자귀나무, 감나무	



## 임농복합경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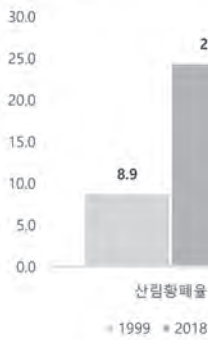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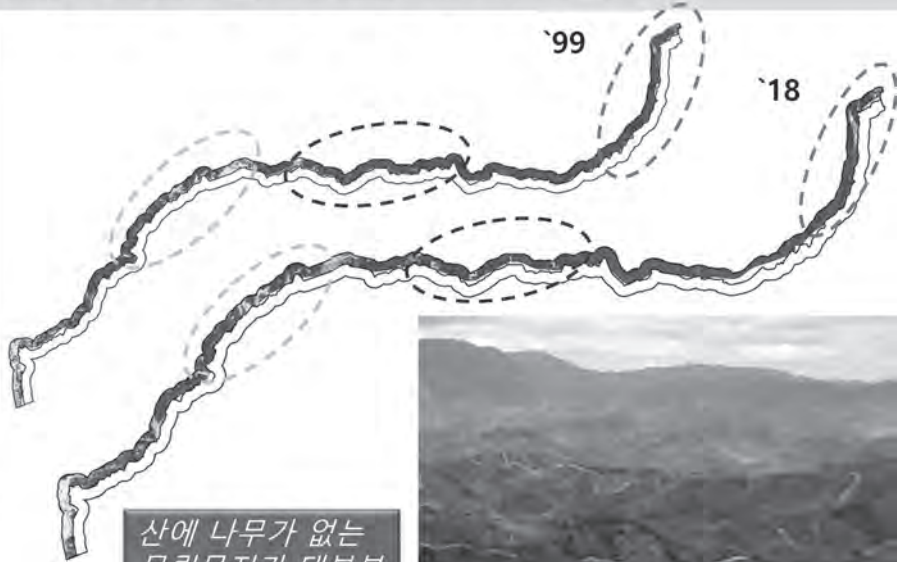


지대	지역
북부고원	백두고원
	삼수-갑산
내륙산간	자강산지
	평강-세포
서해안	북부연안
	남부연안
동해안	동북부
	원산-고성



< 개성 공단 배후 산림황폐지 임농복합경영 시범설계 >

## DMZ 산림복원지역 탐색



<최근 10년간 DMZ에서 발생한 산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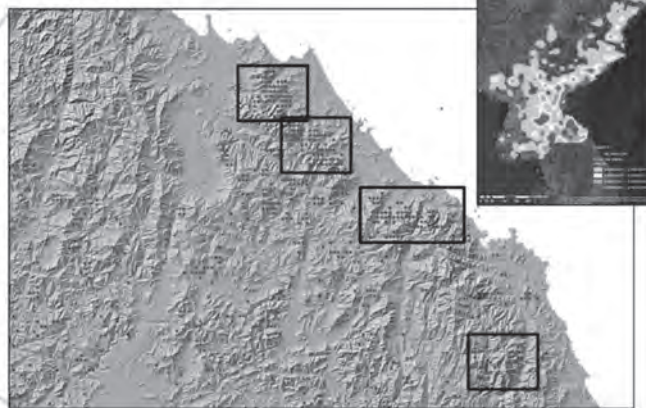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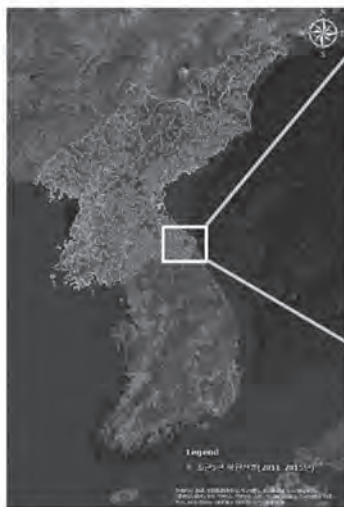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건수	5	6	11	19	4	3	4	9	7	7	75

(원명수 등, 2016)

## 산불예측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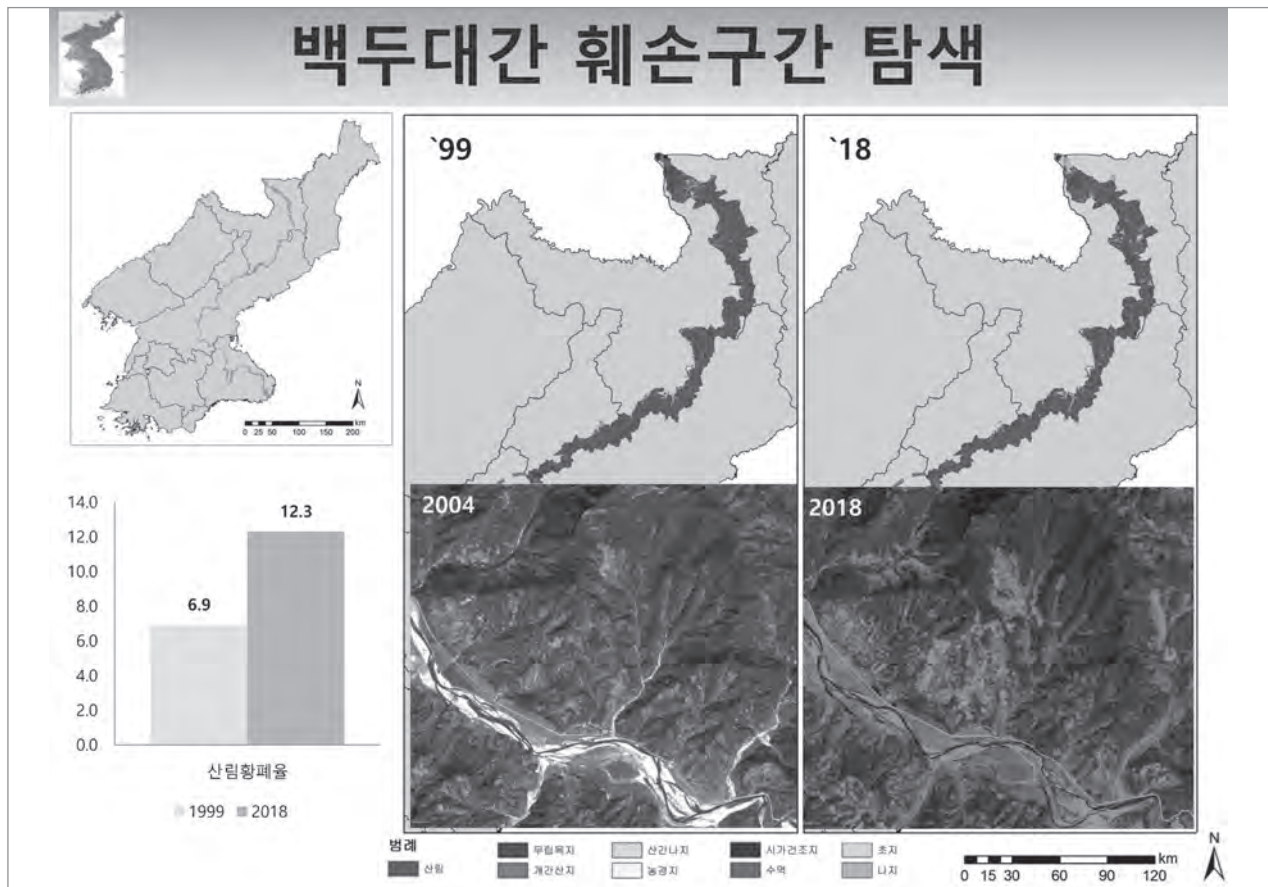


### 접근불능지역 산불발생위치 DB 구축



❖ 총 1,469개 fire spot points  
- 기간 : 2011~2015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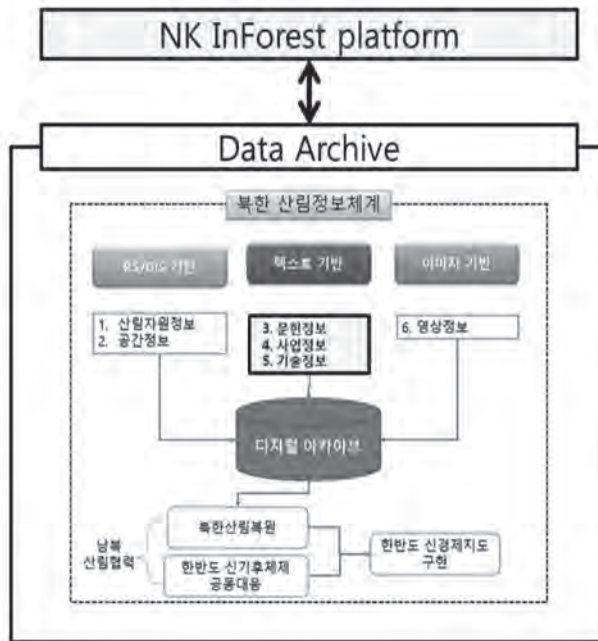






# 북한정보 플랫폼 구축

- 이용자
- 내부 사용자
  - 대국민
  - 단체
  - 기관
  - 사업자



2019년 수행 범위

자료 범주	종류
1. 자원정보	북한 임상도 북한 임목축적지도
2. 문헌정보	북한 산림정책, 임업동향, 보고서 등 문헌, 통계, 산림기술 용어사전
3. 영상정보	출장 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및 전문작가 작품, 다큐, 위성영상
4. 사업정보	북한 산림복구계획, 민간단체 대북사업 및 대북제재 관련 정보
5. 기술정보	북한 산림과학논문,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SCI 게재논문, 관련 특허
6. 공간정보	북한 산림황폐지도, 북한산림 입지도, 적지적수도, 임능북한 경명지도, 양묘장 위치도, 산지사방대상지도, 한반도 Forest Atlas



# 남북한 산림용어 비교

## 산림협력사업을 위한 남북 산림용어 비교조사 추진

수행 : 겨례의 숲(중국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과 한스자이델

1단계 : 용어 비교('15~'20)

2단계 : 남북협력 산림용어 대사전 편찬('21~)

\*남북협력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1991~1999, 112억원, 국립국어연구원 추진)

## 비교조사 결과

8대분야 : 양묘, 조림, 사방, 산림병해충, 임산물 등

비교용어수 : 총 3,890개

양묘(1356), 조림(817), 사방(912), 산림병해충(474)

남한 용어	북한 용어
활적목	사용목
요목	나무모
용기묘	용기묘
근원경	뿌리직경
밭아풀	밭아풀



## 남북산림협력 효과성 분석

남측효과

- ▶ 접경지역 재해방지
- ▶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 ▶ 탄소배출권 확보
- ▶ 미세먼지 저감

**160조원 공익가치 창출**  
**1,001억원 탄소배출권 확보**

북측효과

- ▶ 산림재해 방지
- ▶ 산림 공익기능 증진
- ▶ 식량난 개선



## 천천히 서두르기

### 文대통령, '평화경제'로 '신한반도 구상' 재천명

“평화경제에 모든 역량 쏟아부어 새한반도 열겠다”  
 “분단 극복해야 광복 완성..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될 것”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2045년 One Korea”

주도적인 남북산림협력

남북경협·신한반도 구상  
본격 추진 시  
“산림협력”도 힘을 받도록

☞ (신속대응)  
“남북산림협력지원 T/F” 운영  
으로 현안 추진

☞ (긴호흡)  
“숲속한반도 연구협의회” 로  
기술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남북산림협력 전략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전남 독립기념관 거례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발표자 Presenter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Sang Young HONG** Secretary General, Korean Sharing Movement

1997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실무자로 참여하여 대북인도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북 농업, 보건의료, 산림분야에서 협력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과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8월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Since 1997 as a working-level officer at the Korean Sharing Movement, he has worked in the field for humanitarian aid projects to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He has experiences in carrying out the cooperation in North Korea on agriculture, health care and forestry sector, and is making an effort to build trust with North Korea. He has been working as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n Sharing Movement since August 2019.



## 민간단체 남북삼림협력 추진현황과 과제

2020. 9. 9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교류의 현황1

1. 그 어떠한 남북간 직접교류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2.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정상회담의 합의 이행 난망
3. 우리의 전진을 막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 자체의 힘으로 과학기술을 접목한 생산력 증대,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
  - 2019년 12월 노동당 7기5차 전원회의
4. 코로나19발생과 북중국경 봉쇄(1월20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1월22일)

##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교류의 현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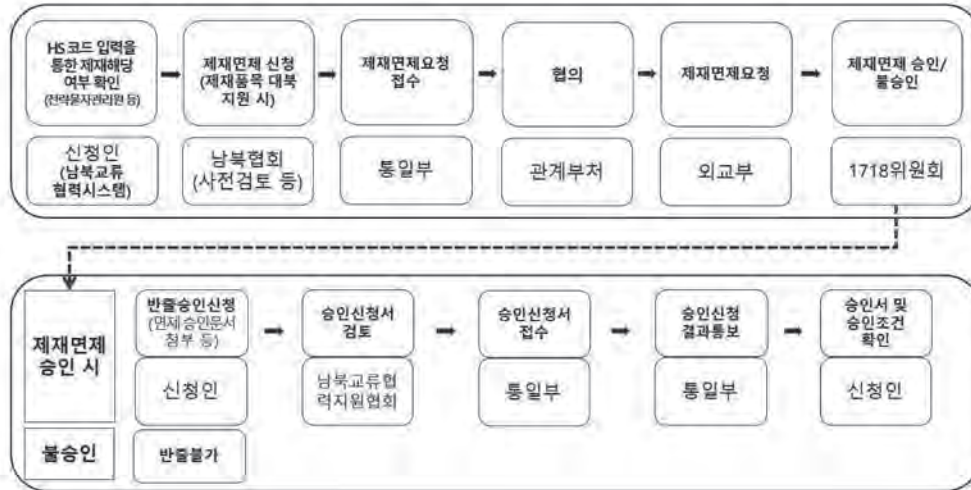
5. 이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나갈 것임  
- 2020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3주년 기자회견 중에서
6. 도대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남조선당국이 리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 것이 한 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  
- 2020년 6월17일 김여정 담화
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2020년 6월16일 오후2시49분경

## 남북관계의 위기 원인

1. 북미 협상 교착과 대북제재
2. 한국의 전력 증강
3. 남북간 합의 이행 속도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
4. 북한의 반발

### 3 제재면제 요청 절차 및 방식

#### o 제재면제 요청 절차



- ◆ 2018년 8월6일 유엔제재위원회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 ◆ 의도하지 않은 대북제재의 영향 최소화
- ◆ 국제기구와 NGO 대북제재면제 신청
-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개풍양묘장 협력사업 신청



## 대북 반출물품 제재면제 요청 신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은 2018년 11월28일 7년만에 평양을 방문하여 그 동안 중단된 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먼저 개풍양묘장 사업을 재개하기로 함.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2010년 한국정부의 5.24조치로 지원이 중단됨

양묘장 시설 개보수물자, 양묘기자재, 농기계, 작업공구는 유엔의 대북제재 물품에 해당되어 유엔제재위원회에 제재면제 요청서 신청함

## 개풍양묘장 추진개요

1. 사업명 : 개풍양묘장 개보수와 운영지원사업
2. 대상지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측)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3. 남측 지원주체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KSM), 경기도(지방자치단체)
4. 북측 지원대상 : 국토환경보호성 개성시산림경영소 산하 개풍양묘장
5. 지원방식 :
  - 양묘장 개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자, 운영관리 기술 지원
6.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로 지원중단
  - 2018년 11월말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개풍양묘장 전체 전경 2009년 9월



## 대북 반출물품 제재면제 요청 신청

### 1. 물자종류

- 시설양묘용 온실설치 자재, 양묘기자재, 농기계 및 작업공구 등
- 총 152개 품목

### 2. 주요 물품 내역

- 연동용 양묘온실 : 7m × 50m × 2연동(700m<sup>2</sup>)
- 단동용 양묘온실 : 7.5m × 50m × 3동(1,125m<sup>2</sup>)
- 양묘용기(24구 상수리나무, 활엽수 육묘 용도), 상토, 복합비료 등
- 트랙터 2대(55HP), 트랙터 결합부분(로타리, 쟁기, 트레일러, 로더 등)
- 태양광발전기 : 40Kw
- 양묘용 작업공구

## 유엔 대북제재 면제승인 서한



REFERENCE: S/AC.49/2019/OC.286

2 December 2019

Excellency,

On behalf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your letter dated 20 November 2019, conveying to the Committee an exemption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25 of resolution 2397 (2017) from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Korean Sharing Movement (KSM), to engage in humanitarian activities in the DPRK aimed at refurbishing and improving the facilities at the Gaepung Tree Nursery, located in North Hwanghae province,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devastated forests in the South and North Hwanghae provinces and improve food security for residents in nearby areas, in accordance with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 7.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inform you that, following due consideration, the Committee has decided to approve the requested exemption in the abovementioned lett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5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2017), to transfer the items and services outlined in your letter within the next six months, which is enclosed in this letter as an attachment. The items are requested to be shipped once together or in a consolidated manner, with a view to increasing efficiency of shipping and custom clearance.

## 대북 제재 면제 승인 현황

1. 평양 만경대병원 의료자재및 약품지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19년 11월26일
2. 개풍양묘장 개보수 지원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9년 12월2일
3. 8개 사업 제재 면제 승인 받음(코로나19 방역물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물자, 농업협력물자 등)  
- 2020년 8월 현재

## 대북제재와 인도적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향

대북제재 협력방식	UN 제재 해당	UN 제재 비해당	복측 대상
직접협력 (복측 호응)	제재면제 신청 -직접신청	즉시 추진가능 -인도적지원 -지식공유사업 -사회문화교류 (체육, 방문, 문화예술)	민화협, 민경련, 종교 남북 직접 전달 제3국을 통한 전달
간접협력 (복측 비 호응)	제재면제 신청 -해외동포단체 -해외단체 -직접신청	협력 인프라구축(국제협력방식) -인도적 지원 -지식공유사업 -개별관광	해외동포+복측 단체 해외단체(기업)+복측 단 체(기업) 제3국을 통한 전달

## 남과 북의 교류협력 대상

### ◆ 국제기구와 남한 그리고 북한기구



## 북측의 산림복구 노력

1. 2016년 인민군 122호 양묘장 건설
2. 2018년 강원도 양묘장 건설로 시작하여 각 도별 양묘장 건설
3. 양묘장 규모 : 연간 2,000만본 생산



인민군 122호 양묘장(2016년)



강원도 양묘장(2018년)



평안남도 양묘장(2020년)



평양시 양묘장(2020년)



황해북도 양묘장(2020년)



함경북도 중평지구 양묘장(2020년)



나선시 양묘장(2020년)



남포시 양묘장(2020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등 각 도별로 양묘장 건설 중

##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

1. 북측의 산림 복구 노력
  - 각 도별 양묘장 건립
2. 인프라 구축에서 산림분야 지식공유 협력으로
3. 양묘, 산림관리, 병충해 예방 분야의 자재와 소모품 지원
4. 종자교류 협력

# 발표자 Presenter



**강호상**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Ho Sang KANG** Collaboration Professor, Institutes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호상 교수는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의 연구교수 (2006-2019)로 근무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산학협력교수 (2019-현재)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아세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 사업들을 개발, 관리 및 수행해 왔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의 사무처장 (2009-2018)으로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 사업을 관리하였고, 현재는 아시아산림연구소 소장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의 국제협력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 NGO인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의 세계산림정보서비스 사업의 아시아, 러시아 지역 책임자 (2007-2012), 산림생태계 관리 장기 연구 연구그룹 책임자 (2013-현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차례 워크숍 및 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 산림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Prof. Hosang Kang was a Research Professor (2006-2019) in 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Professor of Institutes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December 2019. He had a lot of experiences in development,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projects in various types in Northeast Asia, ASEAN, Central Asian countries and Africa including DPR Korea. He was also a secretary general of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AKECOP, 2009 - 2018) and now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Asia Forest Institute, has implemented various international projects including KOICA, AFoCO etc. He has involved with the international NGOs e.g.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 (IUFRO) as Global Forest Information Service (GFIS) Regional Coordinator for Asia and Russia (2007 to 2012) and Coordinator of Research Group 1.10. (Long-term Research on Forest Ecosystem Management) since 2013. He has organized around 20 IUFRO workshops or meetings on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forest related officers and researchers for DPRK from 2005 to 2019.



# 국제기구를 활용한 남북산림협력 활성화 방안

## 강 호 상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산학협력교수  
IUFRO Research Group 1.10 (장기산림연구 네트워크) 위원장  
(사)동북아산림포럼 북한사업단장

## IUFRO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

www.iufro.org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Register now](#)  
[Forgot Password](#)

DISCOVER IUFRO
SCIENCE IN IUFRO
WHO IS WHO
EVENTS
PUBLICATIONS
MEMBERSHIP
MEDIA

DIVISIONS

TASK FORCES

PROGRAMMES

PROJECTS

INITIATIVES

JOIN IUFRO



IUFRO is leading two initiatives of the Collaborative Partnership on Forests (CPF): GFEP, the Global Forest Expert Panels and GFIS, the Global Forest Information Service. [Read More](#)

### LATEST NEWS

2020-06-29

< [IUFRO News Vol. 49, Issue 6, June 2020](#) >

This issue of IUFRO news focuses on three main areas: forest education and job perspectives; tree health and invasive species; urban forests and green space. Find news from Member Organizations and...

[Read all News >>>](#)

전 세계 120개국 산림관련 650여 회원 기관으로 이루어진 산림연구자네트워크



Special Programme for Developing Countries  
 Special Programme for Development of Capacity  
**(IUFRO-SPDC)**

*“To foster and expand research capacity  
 in developing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countries”*

- Responds to capacity development needs in regions
- Provides the training in close cooperation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institutions
- Cooperates with IUFRO Regional Chapters and partner networks (e.g. **APAFRI (SE Asia, 말레이시아)**, **NEAFF (동북아산림포럼, NE Asia, 대한민국)**, **CATIE (Latin America, 코스타리카)**, **FORNESSA (Africa, 가나)**)

**IUFRO를 통한 북한 산림 역량강화 지원 (2005~2019)**



백남처장 (산림연구원)

김광필사장 (국토환경보호)

허만석소장 (중앙산림설계기술연구소)

2014년 2월 중국 심양 IUFRO 국제 학술회의 (재미교포와 공동 개최)

### IUFRO를 통한 북한 산림 역량강화 지원 (2005~2019)



2014년 7월 중국 연길 IUFRO 국제 학술회의 (재미교포 단체와 공동 개최)

### IUFRO를 통한 북한 산림 역량강화 지원 (2005~2019)



**Kwang Chun Ryu**  
(Director, External Cooperation Department,  
General Bureau of Forestry)

(14<sup>th</sup> FAO World Forestry Congress, September 2015, Durban, South Africa)

IUFRO를 통한 북한 산림 역량강화 지원 (2005~2019)



류광춘 산림총국  
대외협조처장

(FAO Asia Pacific Forestry Week (Philippines, Feb 2016))

IUFRO를 통한 북한 산림 역량강화 지원 (2005~2019)



IUFRO 사무총장

리호철 (북한 산림연구원장)

류광춘 산림총국  
대외협조처장

IUFRO 아시아-오세아니아 총회 (중국 북경 2016. 10)  
- IUFRO 사무총장과 북한 산림총국과 협력 방안 논의

### IUFRO를 통한 북한 산림 역량강화 지원 (2005~2019)



류광춘 산림총국  
대외협조처장

IUFRO-FAO 국제워크숍 (중국, 2018년 4월 9-13일)

### IUFRO를 통한 북한 산림 역량강화 지원 (2005~2018)



장용철 산림총국  
부국장

제4차 세계인공림총회 (중국 북경, 2018.10.25)

IUFRO를 통한 북한 산림 역량강화 지원 (2005~2019)



Meet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Experts on **Forest Insect Pests and Diseases** in the APFISN Workshop at Beijing, China on Oct 2018

Capacity Building for DPRK by IUFRO (2005~2019)



**25<sup>th</sup> IUFRO World Congress**  
**Side Event "Forest Research Network under Global Change in Northeast Asia" (Curitiba Brazil, October 2019)**



숲속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  
Direction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for United Forest in Korea



During the congress, our delegation have learned science and technology, successes on worldwide forest silviculture and protection under concern of good colleagues, affirmed more active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IUFRO including your working group and us in forest science research in the future.

**Firstly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our General Bureau of Forestry appointed me as vice coordinator of 1.10 working group under the silviculture division.**

Dear Hosa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message this morning that Kim Yong Il of DPR Korea got permission to join IUFRO 1.10 as deputy coordinator, and thank you very much for all of your work in this regard. This is really great news!

Best wishes,  
JP (Coordinator, IUFRO Divis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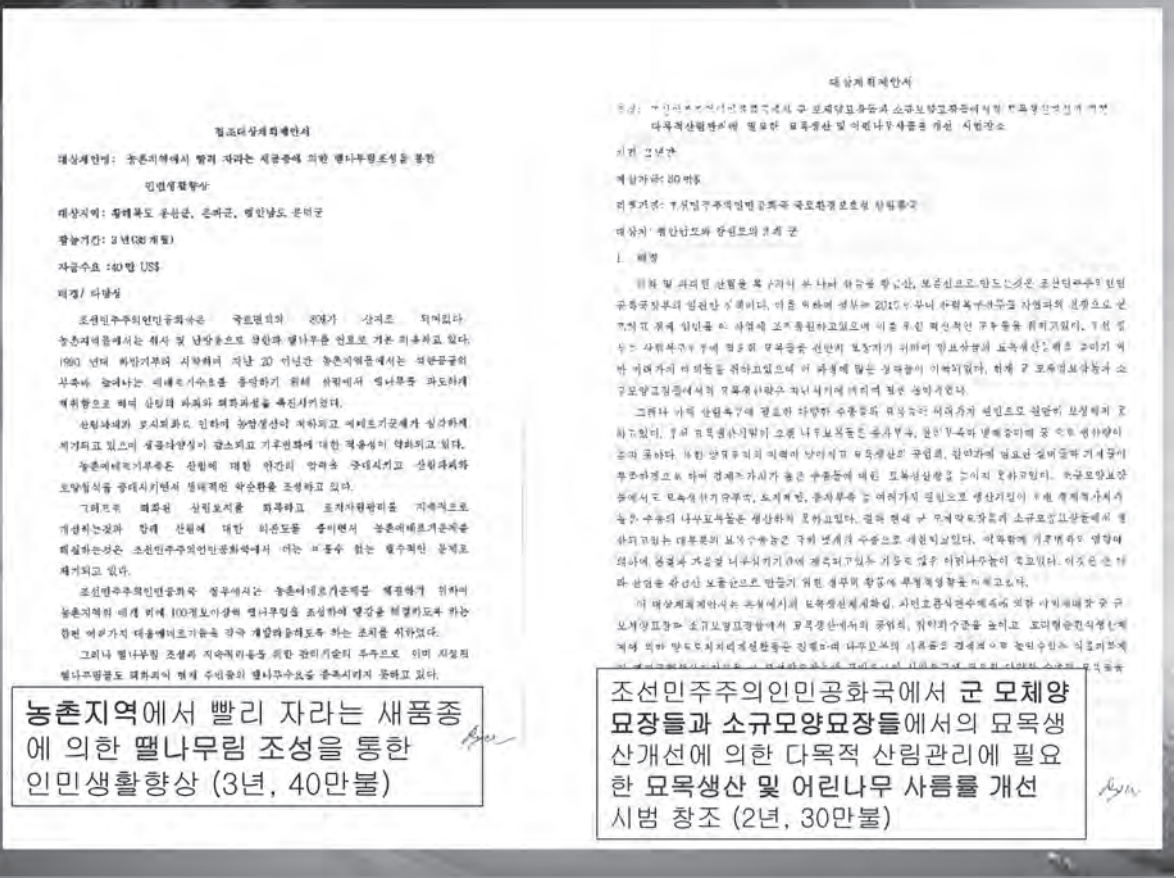
At that time of congress you said me your 1.10 working group could organize and host international forest insect forum or forest protection forum in Moscow, Russian in April-May next year.

In this regard, I would be appreciated if **you send to me e-mail about the possibility to organize this forum and for our 6 persons to attend this forum by expense of 1.10 working group**, if possible, Thanks and kind regards.

Kim Yong Il.  
External Cooperation Department.  
General Bureau of Forestry, MoLEP  
2019.11.25



IUFRO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과 협력 논의



농촌지역에서 빨리 자라는 새 품종에 의한 뿔나무림 조성을 통한 인민생활향상 (3년, 40만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군 모체양묘장들과 소규모양묘장들에서의 묘목생산개선에 의한 다목적 산림관리에 필요한 묘목생산 및 어린나무 사름을 개선 시범 창조 (2년, 30만불)

- FAO에 제출한 북한 산림사업 계획서 (2017년 10월)
- 북한 산림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 평가와 활용 방안 및 국가 전략
- 북한 산림 종자 관리와 묘목 생산 역량 강화
- 농촌 지역의 효율적인 연료림 조성 및 재생 에너지 기술 도입을 통한 주민 생활 개선 및 산림 환경서비스 복구
- 산림에서의 유기농 식품 재배 개선을 통한 농촌 소득 증가
- 산림과 경작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증진 및 지역 주민들의 수입 창출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식량 생산 사업 (유역 관리와 결합한 경사지 임농복합경영, 산지와 경사지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생계 증진을 위한 자연자원 관리와 보호, 산림 관리와 비목재임산물)



### PROJECT CONCEPT PAPER- DPR Korea

Project Name: **Capacity building of forest seed management and seedling production in DPR Korea**

Country: DPR Korea

Project Budget: **400,000 US\$**

Project Duration: **2 years**

Background and Justification:

In DPR Korea, nearly 80% of territorial land area is occupied with mountains which are covered with temperate forests. Therefore, country's food security and people's livelihood of mountainous areas significantly depend on forest resources.

(중략)

Forests of the country were significantly devastated due to temporal economic difficulties and repeated serious natural disasters such as heavy floods and severe droughts, which caused **degradation of 1.93 Mil ha of forests.**

Main objectives are:

1. Assessment of **forest gene resources** and selection of framework species and **economic valuable species** which are possible of domestication.
2.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mother tree forest, seed orchard**

### 국제기구 및 단체를 통한 북한 산림 복구 및 협력 방안

- 북한이 요청한 사업제안서 분석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 우선 추진)
-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국제전문가 파견 혹은 북한 전문가 국제회의 초청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 FAO, 독일 NGO 등 북한내 사무실이 있는 국제기구 및 국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실시간 현황 파악
- 러시아 (병해충), 중국(양묘, 조림), 몽골(비타민나무), 아세안 (베트남),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북한 산림 역량 강화 지원
-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한 신뢰구축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협의
- 국제 장기사업을 통한 북한의 실질적인 산림연구 및 관리 역량 증진

# 토론자 Discussant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Yul KWON Deputy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권율 선임연구위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연구와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공분야는 개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이고,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연구, 남북협력과 대외원조정책(ODA)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ASEAN FTA, 한-싱가폴 FTA,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위원(2012-16), 외교부 정책자문위원(2019-20), 대통령 자문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2006-08)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Kwon Yul is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He is a senior research fellow in charge of development studies and foreign aid policy. Dr. Kwon graduated from Sogang University majoring in economics and received a Ph.D. in development economics from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His major is development econom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and He have focused on Southeast Asian studies including Vietnamese economy in transition, inter-Korean cooperation and foreign aid policy (ODA). He has participated in the negotiation for Korea-ASEAN FTA, the Korea-Singapore FTA, and the RCEP, and served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Committee (2012-16), a member of Foreign Affairs Advisory Committee (2019-20), and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6-08).

# 토론자 Discussant



김명관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장

Myeong-gwan KIM Director, Korea Forest Service

김명관(Myeong-gwan, Kim)은 2001년에 산림청에 임용되어 산림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왔습니다. 2020년 남북산림협력 단장으로 부임하여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 정책 전반과 남북간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당국간 협력 뿐 아니라 남북산림협력과 관련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제 사회 지지 등 숲으로 하나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Myeong-gwan Kim joined the Korea Forest Service(KFS) in 2001 and has worked in major departments. He became the Director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of KFS in 2020. He is leading the overall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rest cooperation policies of the KFS. In addition, he is striving not only to cooperate between the authorit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ut also to create consensus among the people and gain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토론자 Discussant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ang Min CHU** Chief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추장민 박사는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의 북한환경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부원장을 역임했다. 2019년 2월부터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과학·국제협력분과위원회 위원, 2019년 12월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북경대학에서 환경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구실적으로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문제 진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방안 연구"(2016), "북한지역 하천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2014~2015), "한반도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2013) 등 다수의 북한 환경상태 및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있다.

Dr. CHU, Jang Min is the Chief Research Fellow of the Korean Peninsul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under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and served as a Vice President of the institute from December 2017 to February 2019. Since February 2019, he has been on the Subcommittee on Scientif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air pollution which i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and since December, he has been working a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He was also a member of the Central Committee on Environmental Policy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rom September 2015 to August 2017, and has been working as a member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ommitte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ince June 2019 to this day. Dr. Chu received his Ph.D. in Environmental Science from Peking University in 2002. He had published a great number of research reports on the environmental statu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uch as Diagnosis on Environmental Problems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Measures to Improve Environment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2016),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Rivers in North Korea and Measures for Sustainable Use I, II (2014~2015), and A Study on Promoting Green Detente for the Korean Peninsula (2013).





# Session 9-4

## 남북철도협력과 동북아 평화 정착

##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and Peace Settlement in Northeast Asia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좌장  
Moderator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Se Ho KIM Senior Advisor, BAE, KIM & LEE LLC.

발표자  
Presenters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Hee-Seun NA Presiden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ae-Hoon LEE Senior Research Fellow,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토론자  
Discussants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장  
Jongwon SEO Research Fellow,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Yong-Seok PARK Director, Department of Economic and Financial Research,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CERIK)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북방연구센터장  
Jung Joon PARK Head of Northern Railroad Research Center,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9-4)

## 남북철도협력과 동북아 평화 정착

남북 철도협력사업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하여 남북 주민의 왕래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공공성이 강한 인프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철도협력은 2018년 공동조사와 2019.2월 자료 교환 이후 현재 답보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남북철도, 평화를 열다", "남북철도협력, 과연 퍼주기인가"를 주제로 남북 협력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동력과 연결로서의 철도협력을, 철도사업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등 대한 발전적 논의를 통하여 남북철도협력사업의 해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and Peace Settlement in Northeast Asia

The inter-Korean railway project can be described as 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mainly for the public interest, contributing to higher quality of life and easier travel of the people living in the two Koreas by enabling them to meet who ever they want to meet and go wherever they want to go. However, the inter-Korean railway project has been in a stalemate after joint survey in 2018 and data exchange in February 2019. By recognizing this problem, under the theme of "inter-Korean railway that opens the era of peace", and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is this really a handout to North Korea?", insights and direction of the inter-Korean railway project will be suggested through a constructive discussion on railway as a driver and connector expanding the spac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o the greater continent and on the negative bias about the railway project.

# 좌장 Moderator



김세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Se Ho KIM Senior Advisor, BAE, KIM & LEE LLC.

김세호 고문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으로 있으며 건설, 부동산, 교통, 운수, 물류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고문은 25년여간 건설·교통분야의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철도청장과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일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건설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참여한 경험을 통해 국내외의 대형 프로젝트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에서 물류, 교통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Seho KIM is a senior advisor of Bae, Kim & Lee LLC. His advisory work focuses on construction, real estat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He has been in public office for 25 years, in areas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Especially, through experiences of national projects such 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high-speed railroad as Administrator of Korea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and vice-minister of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He lectures at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on logistics, transportation

# 발표자 Presenter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Hee-Seun NA** Presiden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나희승은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분과위원장),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철도산업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다. 그는 한양대학교에서 공학사와 KAIST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 사무국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동아시아와 통일한국 경제』(2019년), 『The Political Economy of Pacific Russia』(2017년), 『이제는 통일이다』(2014년) 등이 있다. UIC(세계철도연맹)에서 BEST AWARD(2018)를 수상하였다.

Dr. Hee-Seung Na is president of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KRRRI), member of Infrastructure Management Committee (Subcommittee Chair), member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Committee and National Railway Industry Committee, and standing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e obtained a Ph.D. in mechanical engineering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Some of his notable careers are: Director general of the Secretariat of ASEM Rail Silk Road Symposium (2004), adviso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2004–2006) and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urasia (2016–2017). His publication includes 『Economy of The East Asia and Unified Korea』 (2019), 『The Political Economy of Pacific Russia』 (2017), and 『Now, Unification』 (2014). In 2018, He received the BEST AWARD from UIC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 남북철도, 평화의 문을 열다! ]

2020. 9. 9

나 희 승 원장

**KRI**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 남북철도, 위기를 넘어 평화로

- ☑ 6·15 공동선언 20주년, 한반도에 직면한 위기관리, 이를 기회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
- ☑ 하루빨리 연결(connectivity)의 공간을 '남북 접경지역'에서 '한반도 국토공간'으로 확장
- ☑ 이를 위하여 우선 최단기간 이내 북한철도 기존선 보수유지를 완료하고, 국제열차를 운행 (OSJD회원국)
- ☑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는 상호인식하에 빠른 실행 필요
- ☑ 최근 코로나 19이후, 급변하는 국제 지역(통상) 환경에도 공동대응

## 과거 : 6·15 공동선언 20주년 (3대 경협사업)

### 남북접경지역, 작은 평화·작은 남북경제공동체



## 현재 : 4.27 판문점 선언 2주년 (한반도 신경제구상)

### 한반도 국토공간, 큰 평화·진정한 남북경제공동체



## 미래 : 평화가 경제다

'기회의 창'에 미리 대비

'협력의 미래상'을 통해 비핵화 촉진·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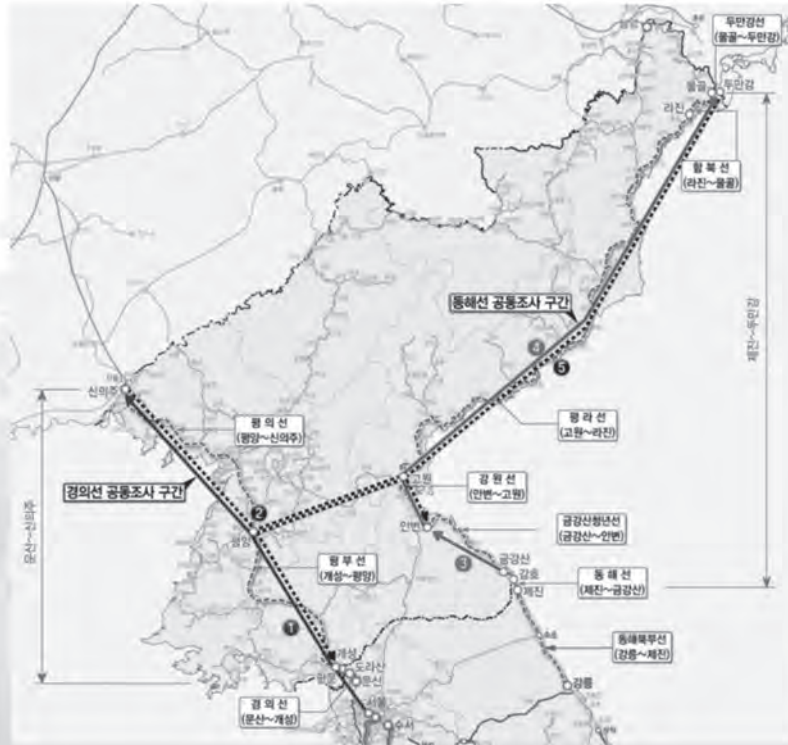


4

## 2018년, 남북철도 연결 협력



## 경의선 ·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



6

## 경의선 ·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



7

## 두만강역, 평양-모스크바행 국제열차



8

## 북한철도 공동조사 및 분석

- (속도) 경의선은 40km/h~60km/h, 동해선은 30km/h~50km/h로 운영 중
  - (국제열차) 중국 북경-단둥-신의주-평양을 연결하는 국제열차와 러시아 모스크바-우스리스크-하산-두만강-평양을 연결하는 세계최장노선 국제열차 운행 중
  - (노선)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태가 예상보다 양호(선형·구배·노반 포함)했으나, 철도구성품 부족으로 지원필요
  - (교량/터널) 개보수 운영을 위한 교량과 터널의 최소 안전 진단 필요
  - (차량) 공동조사시 전기공급 상태와 산악지형 구배를 고려하여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를 교대로 운행
- ☑ 우선 최단기간 이내 북한철도 기존선 보수유지를 완료하고, 국제열차를 운행 가능 (OSJD회원국)
- ☑ 남북정상선언의 많은 사업이 철도의 빠른 개통으로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상호인식과 신뢰를 바탕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따른 국제열차 운행



- ☑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OSJD회원국 지위 하에 러시아는 평양-모스크바, 중국은 평양-북경 국제열차운행
- ☑ 한국은 북한의 찬성으로 29번째 OSJD회원국, 국제열차 운행 필요<sup>0</sup>

## 남북철도 추진 과제



1단계 : 북한철도 보수유지

북한철도 기존선 보수유지

시범사업 추진 및 국제열차 운행 / 인도적지원, 이산가족상봉, 스포츠문화교류, 정상회담



2단계 : 북한철도 개보수

개량개념의 북한철도 현대화

남북경협을 중추적 핵심역할, 유라시아 국제 물류사업확대



3단계 : 북한철도 현대화

신선개념의 북한철도 현대화

동북아 1일 생활권 및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완성,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 위기관리, 남북경협 기회요인에 따라 1단계 ~ 3단계 병행 추진 가능

## 2022 북경 동계올림픽 Aga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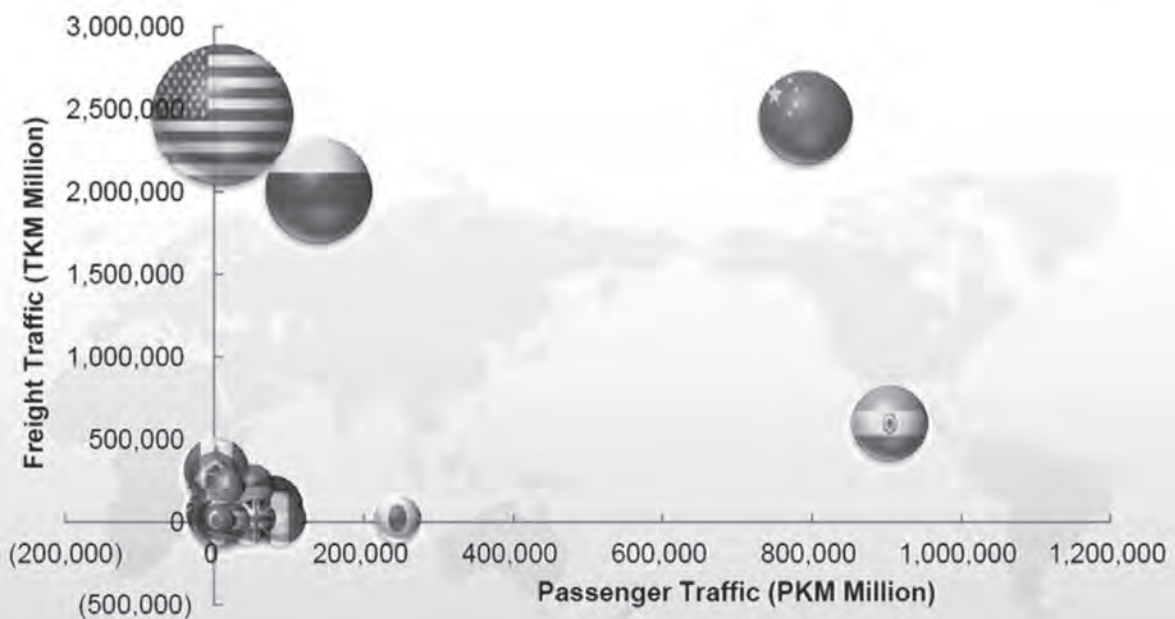
평창 올림픽에서 베이징 올림픽까지,  
남북 평화열차를 타고  
남북이 함께 가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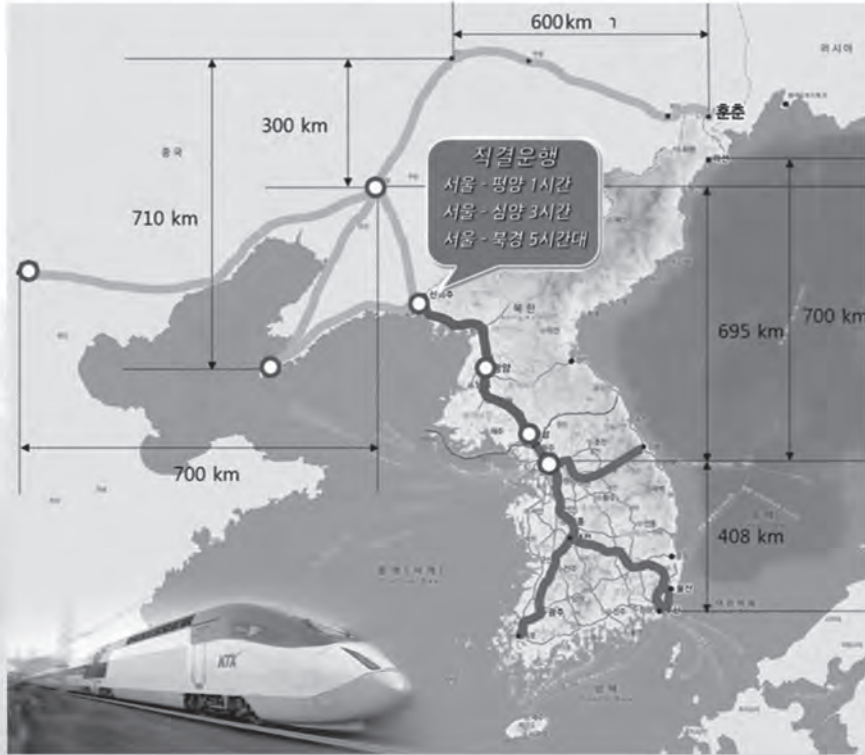
※ 사진출처 : 코레일관광개발(www.railcruise.co.kr)

12

## 전 세계 철도의 화물 및 여객 수요 (UIC)



## 한반도·동북아 고속철과 동북아 1일 생활권



## 러시아 TSR 화물 고속화와 유라시아 물류허브

러시아의 TSR 7일 프로젝트 + 동해선 TKR 1일 프로젝트

TKR-TSR 8일 프로젝트 제안 (남북러 철도협력 재개)



## 미래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철도공동



## 코로나 19 이후 철도 분야 대응과 남북협력

<b>환경 변화</b>	제2의 전염병 유행 우려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증가 비대면, 원격사회로 전환	운집도가 높은 승객 수송 산업 스마트화 가속 베이비부머 퇴진으로 기술 단결	개인교통 선호, 철도이용객 감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b>요구 사항</b>	감염병 등 위험대응체계 구축 철도시설-차량내 감염 확산 방지 철도 이용시설 Untact 서비스구현	신호시스템 혁신으로 시격 단축 스마트 유지보수로 비용 절감 VR, AR 기반 비대면 교육 강화	여행시간 단축, 저상교통 활성화 국제협력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보급
	<b>대응 방향</b>	Human 뉴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철도	Digital 뉴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철도	Green 뉴딜 산업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 철도

##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출처 : 청와대

## 남북철도 협력을 위한 세 가지 추진방향

### 현재 남북철도협력은 답보상태

-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측은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 전환하면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이후 철도협력은 답보상태

### 세 가지 추진 방향

- 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1) 남북철도 속도향상 사업 조기 추진, 2) 중국, 러시아와 협력강화, 3) 미국에 대한 설득노력 지속이며, 이 모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맺음말

- ☑ 남북 및 대륙철도는 '닫힌 영토, 폐쇄적 영토'에서 '열린 영토' 개념으로 한반도 국토 공간 발전
- ☑ 남북 및 대륙철도는 기존의 남북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고 대륙과 해양의 시대를 여는 개혁적 의미를 담고 있음
- ☑ 평화번영의 정신으로 남북간 불신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남북이 함께 한반도 대전환 (다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함

# 발표자 Presenter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ae-Hoon LEE** Senior Research Fellow,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현재: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18 - 2020. 6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

2015 - 2017 한국교통연구원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

2011 - 2014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

Present: Senior Research Fellow

2018 - 2020. 6 Director of Strategic Innovative Division

2015 - 2017 Director of Future Transport Strategy Center

2011 - 2014 Director of Department of Rail Transport

# 남북철도협력, 과연 퍼주기인가?

2020. 9. 9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CONTENTS

- I. 최근 북한의 철도투자 국제협력 동향
- II. 남북철도협력 관련 비판과 영향
- III. 남북합의 북한철도 현대화 추진과제





## I. 최근 북한의 철도투자 국제협력 동향



## I. 최근 북한의 철도투자 국제협력 동향

### 1. 주요 협력사업

## 김정은 집권 이전

### 1998년 중국-북한 철도 공동조사

나진~남양구간(158.7km)

\* 침목·레일·통신·신호장비 교체, 교량·터널 보수 등을 추진

### 2001~2002년 러시아-북한 철도 공동조사

강원선, 평라선, 함북선, 금강산청년선, 나진~하산 구간 등

중국과 러시아 이익을 위해 추진

\* 중국 : 동해로 출해통로 확보  
\* 러시아 : TSR과 부산항 연결



## 김정은 집권 이후

### 2014년 러시아의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 개시

재동~평양~남포 구간 철도 개건 착공

### 2014년 중국과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합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함께 추진

### 2015년 금강산철도 현대화 투자 유치 제안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활성화가 목적

\* 사업성 분석에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 내부수익률 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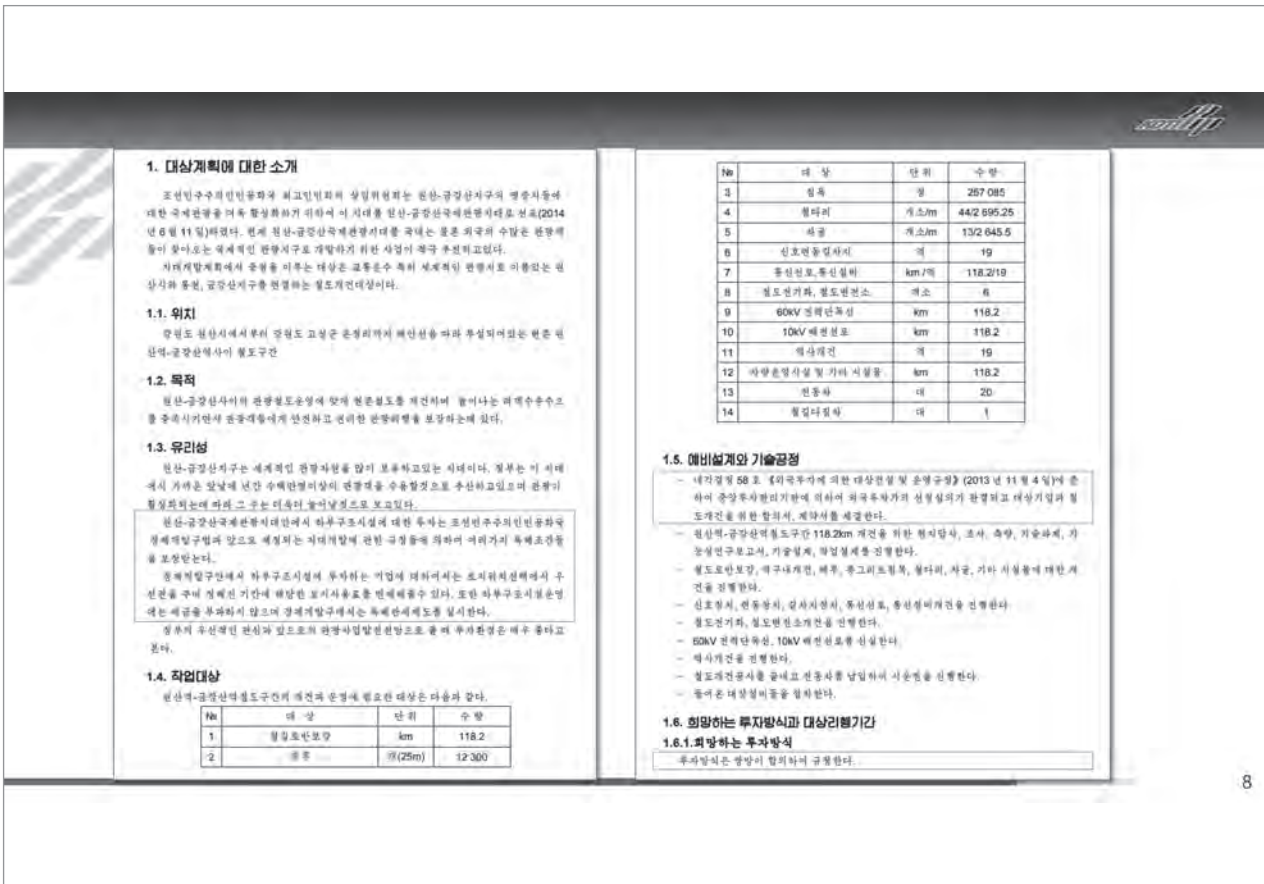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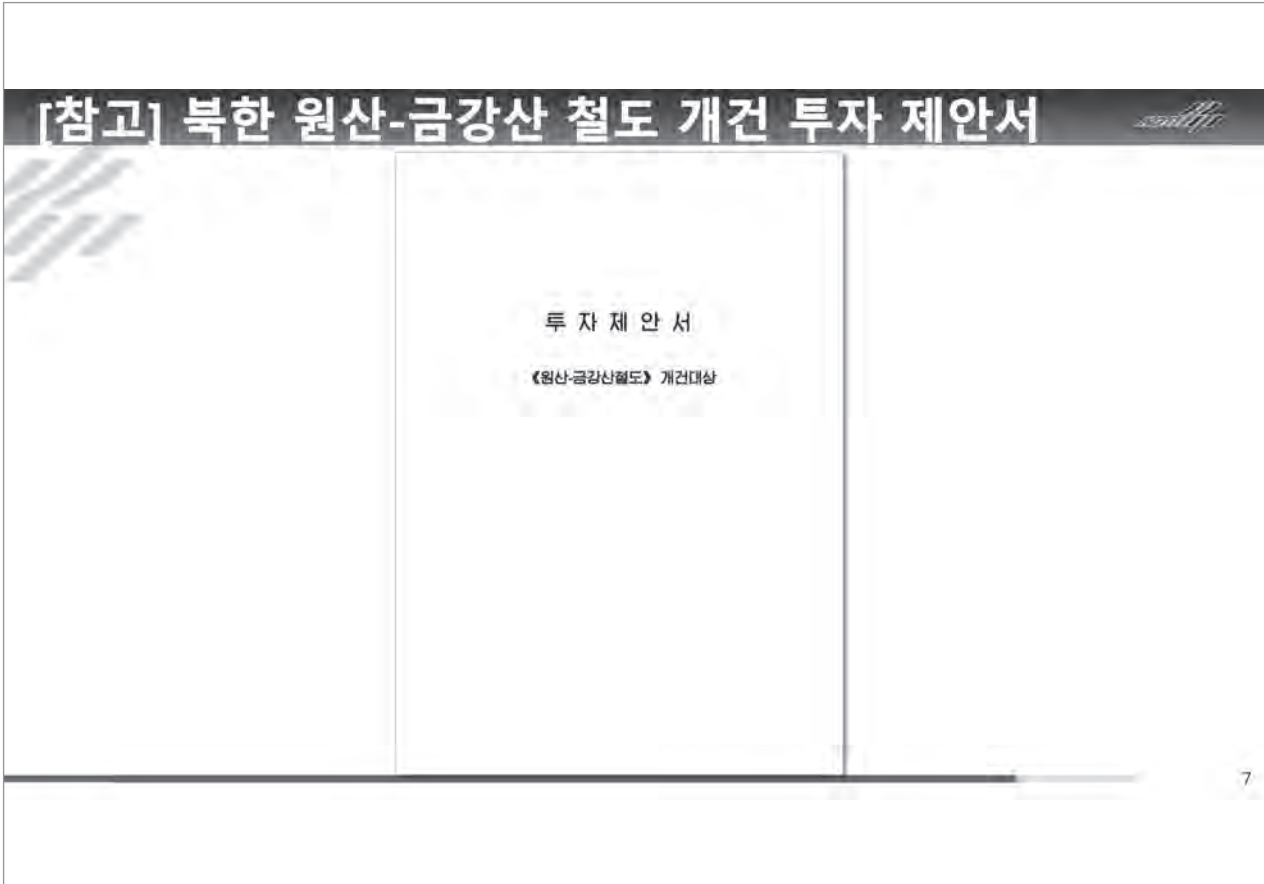
\* 사업 인센티브 제시 : 30년 운영권 보장, 토지 위치선택 우선권, 토지사용료 면제

### 2019년 일본에 평양~원산 간 신칸센 건설을 제안

JTBC가 보도(2019.9.24)



북한이 철도 현대화 위해 추진





### 1.6.2.대상리행기간

건설기간: 24개월  
운영기간: 30년

### 1.7.공정계획(일정표)

No	공정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입지 및																									
2	현장시,배경																									
3	현장조사 및																									
4	토지이용계획																									
5	지형조사 및																									
6	토지이용계획																									
7	지형조사 및																									
8	토지이용계획																									
9	지형조사 및																									
10	토지이용계획																									
11	지형조사 및																									
12	토지이용계획																									
13	지형조사 및																									
14	토지이용계획																									
15	지형조사 및																									
16	토지이용계획																									
17	지형조사 및																									
18	토지이용계획																									
19	지형조사 및																									
20	토지이용계획																									
21	지형조사 및																									
22	토지이용계획																									
23	지형조사 및																									
24	토지이용계획																									

### 1.8.비용 및 경제분석

#### 1.8.1.비용

##### △ 총건설비용

No	비용항목	단위	단가(US\$)	길이	비용(US\$)
1	철거 및 토지정리비용	km	14 949.5	118.2	1 767 031

No	비용항목	단위	단가(US\$)	길이	비용(US\$)
2	유원보장	km	239 508.0	118.2	28 309 846
3	철대리	m	9 033.6	1 643.7	14 849 928
	방문대리	m	2 381.0	1 051.6	2 503 900
4	소구조물	km	134 751.9	118.2	15 927 675
5	차량	m	1 269.8	2 645.5	3 359 256
6	중도부설(구경)	km	344 850.3	118.2	40 756 941
7	계도부설(구경)	km	516 200.4	35.5	18 325 114
8	외도유원포장	km	10 955.5	118.2	1 294 940
9	신호 등진	km	239 149.6	118.2	28 267 483
10	전력 전선공역	km	49 153.5	118.2	5 809 944
11	건축	km	45 712.8	118.2	5 403 253
12	기타 근접시설비 및 건축물	km	100 866.8	118.2	11 922 338
13	미행함시차량 및 보도부설	km	32 679.3	118.2	3 862 899
14	기타비	km	203 024.2	118.2	23 997 460
15	기초비비	km	374 540.7	118.2	44 270 711
16	건설기간대부리금	km	95 676.4	118.2	11 308 950
	계				281 636 023

##### △ 운영설비구입비용

No	설비명	단위	단가(US\$)	수량	비용(US\$)
1	반동차	대	3 000 000	20	60 000 000
2	차량대리차	대	1 500 000	1	1 500 000
	계				61 500 000

### 1.8.2.경제분석

#### △ 비용

- 총공사

No	구분	단위액(US\$)
1	철거제거비용	261 936 023
2	운영설비구입비용	61 500 000
	계	323 436 023

- 민간투자비용

공해비용의 수송을 기본으로 하여 영업개시후 3년동안 일간 3 000명규모에서의 최대 수송량으로 산정하였다.  
2 859 582US\$/년



관공객들의 수송을 기본으로 하여 영업개시후 4년째부터는 일간 7 000명규모에서의 최대수송량으로 산정하였다.  
6 670 026US\$/년

#### △ 연간수송수입

관공객들의 수송을 기본으로 하여 영업개시후 3년간은 일간 3 000명 규모에서의 최대수송량으로 산정하였다.  
15 045 171US\$/년

관공객들의 수송을 기본으로 하여 영업개시후 7 000명규모에서의 최대수송량으로 산정하였다.  
35 105 400US\$/년

#### △ 연간수송효과

영업개시후 첫 3년동안의 연간수송효과는 12 186 589US\$/년이고

4년째되는 해부터의 연간수송효과는 28 435 374US\$/년이다.

#### △ 경제분석에서의 보수연한

내부수익률(IRR): 7.3%

순현재가치(NPV): 88 705 012US\$ (할인율 5%, 운영기간 30년)

보상기간: 12.1년

## 2. 대상리행기관

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동해철도원운회사

소재: 대외경제협력조를 통하여 나라의 전민적인 철도개건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법정주소

법정주소: 평양시 광구역 동안동

등록번호: No 659(2008년 1월 30일)

국적전화: 850-2-18111(8255)

팩스번호: 850-2-381-4666

전자우편: longhae@star-co.net.kp



## I. 최근 북한의 철도투자 국제협력 동향

### 2. 시사점

**김정은 집권 이후 국제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

관광지대(원산·금강산)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일환  
중국 등에서 공개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투자설명회 개최)

**간선철도도 투자 유치 대상에 포함**

기존철도의 개량이 아닌 고속철도 신설을 추진

**투자 유치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고 투자안전성을 강조**

예상 수요와 수입, 수익률, 30년 운영권 보장, 토지사용료 면제 등 제시

**북한은 철도 현대화에 이원화 전략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간선철도는 고속철도 신설, 지선은 기존선 개량을 추진

## [참고] 고속철도 국제투자유치의 의미 해석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증시 정책을 추진

산업 현대화(단번 도약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추진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산~갈마지구 등 건설

### 현재 북한의 교통 여건은 해외관광객 유치에 걸림돌

도로와 철도는 시설이 낙후하고 국제항공편도 부족

\* 고속도로 : 훼손과 부분적 비포장, 철도 : 대부분 시속 30km 운행

\* 국제항공 : 주로 중국·러시아 노선을 운항

### 고속철도 신설은 해외관광객 유치의 제약요인을 해결하려는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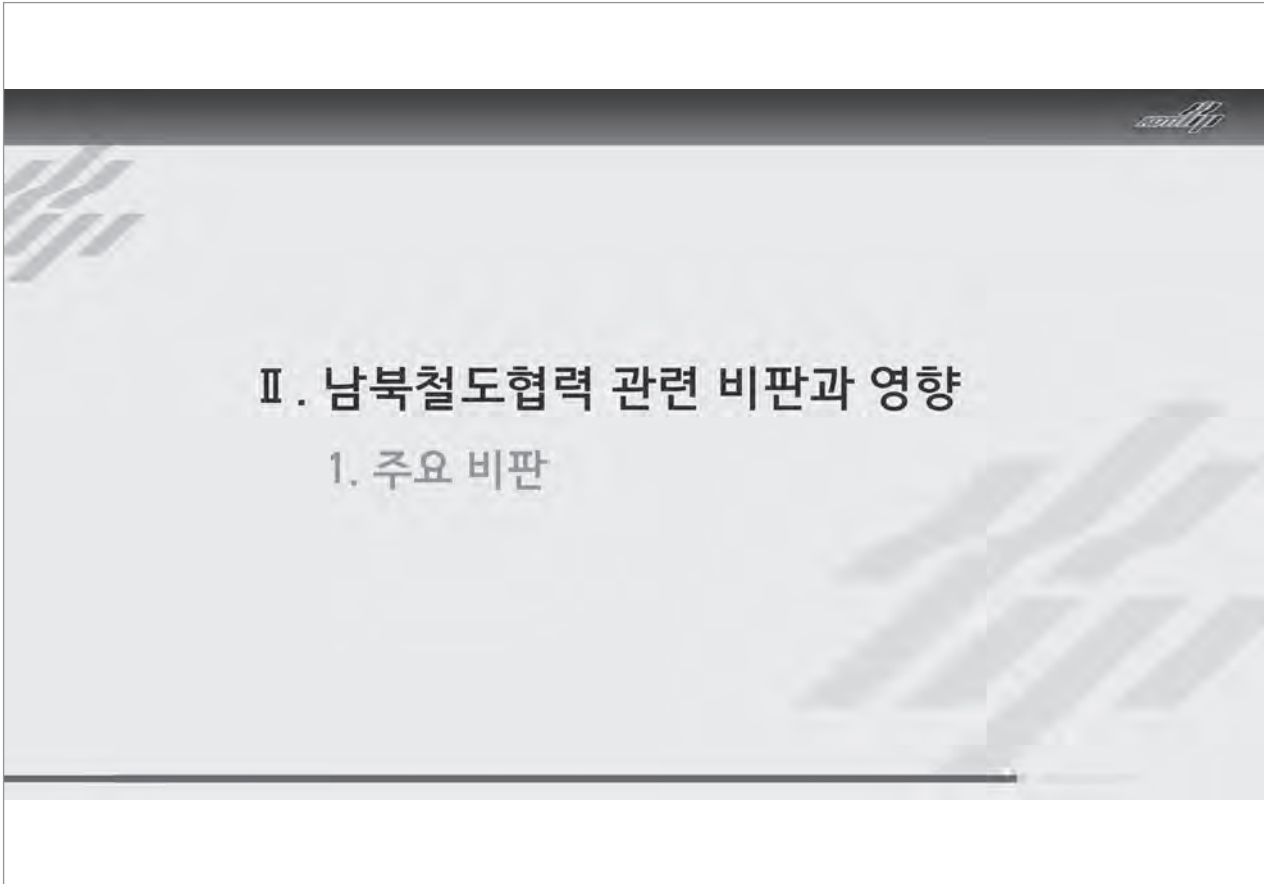
낙후된 철도를 단번 도약하고,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국제 항공교통을 보완

\* 중국 고속철도와 연결되고, 중국 주요 도시에서 직접 평양·원산 등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

13






## Ⅱ. 남북철도협력 관련 비판과 영향



## II. 남북철도협력 관련 비판과 영향

### 1. 주요 비판

**남북철도 협력사업 주요 비판**

- 
 I.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 
 II.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투자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수요 수송할 여객 화물이 없고, 있다해도 미미하다
- 
 경제성 중국·러시아 등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철도물류의 경제성이 거의 없다
- 
 운영안정성 북한의 철도 단절, 국유화 등에 통제방법이 있는가?  
안보위협 북한의 군사적인 이용 등 안전에 위협 요소의 제거장치는 있는가?

16

## Ⅱ. 남북철도협력 관련 비판과 영향

### 2. 비판의 영향

#### 국민

-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됨을 우려
- 퍼주기 또는 일방적 지원이라고 인식
- 남북철도 협력 사업에 관한 반대 기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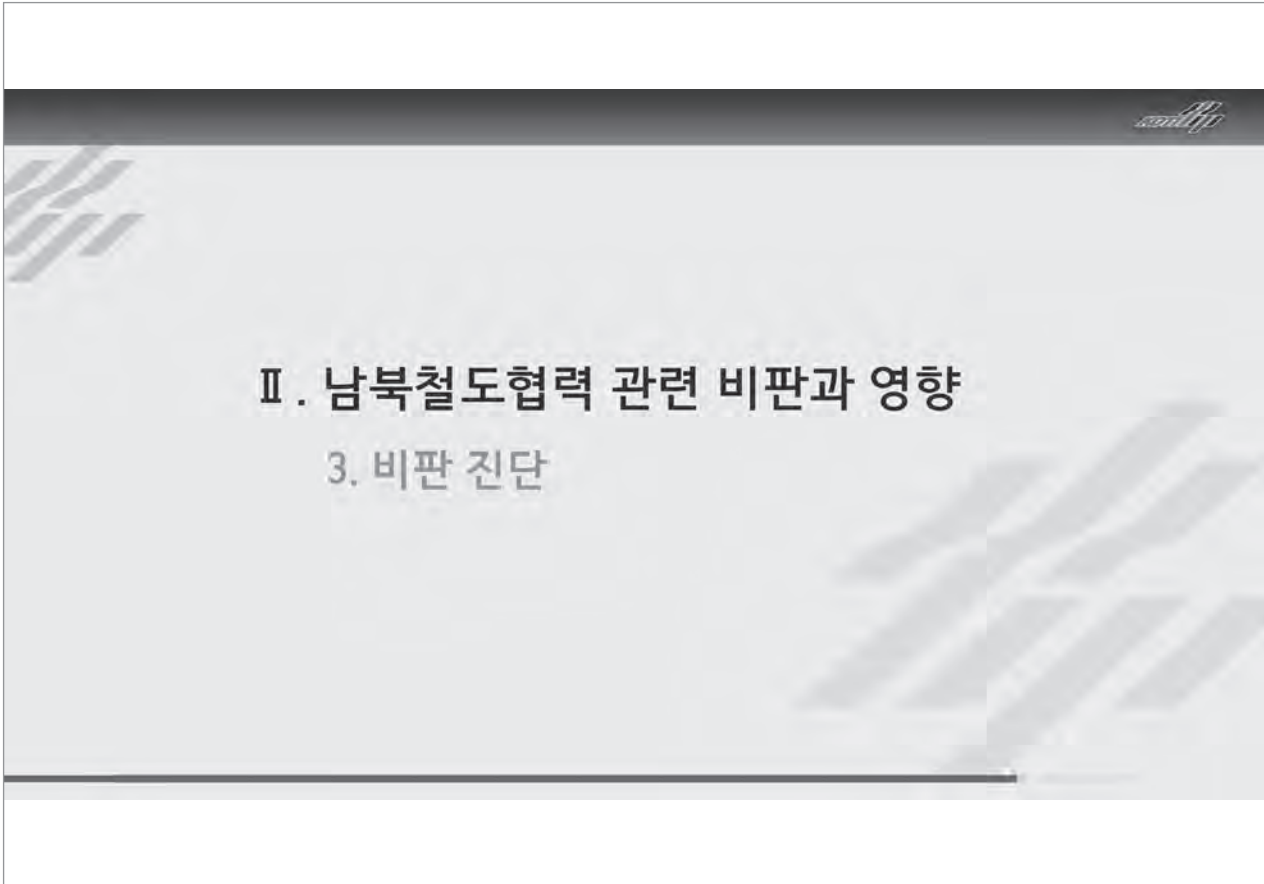
#### 정부

- 남북철도협력사업 추진이 위축
- 퍼주기 논란을 의식하여 소극적 대응
- 공론화하지 못하고 수세적인 입장
-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방안 검토  
\* 북한이 선호하는 방안과 배치

#### 북한

- 한국의 북한철도 현대화 정책을 비난
- 한국의 실행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
- 남북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





## Ⅱ. 남북철도협력 관련 비판과 영향

### 3. 비판 진단

#### 비용 부문

우리가 북한 지역에 철도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오해  
북한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

남북철도 협력사업 대상은 북한철도 전체 노선이 아님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현대화에 합의

그럼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전체 노선의 현대화 사업비를 제시

\*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 공포를 조장

• 남북철도 연결사업에는 총 114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

\* 한반도 총단철도 건설 1,003km, 간선 고속화 사업 1,957km, 보수사업 1,101km에 소요되는 비용

## 퍼주기와 투자 안정성 부문

과거처럼 차관 형식의 추진을 전제하여 회수 불가능을 예상

최근 북한의 철도투자 유치 동향은 반영하지 못함

최근 북한의 변화로 차관 외 방식을 추진가능한 여건이 조성

북한이 공개적 설명한 투자유치 방식으로 추진

\* 원산-금강산 철도개건 사업 투자유치에 30년 운영을 보장

한국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운영권 확보, 수익 창출이 가능

- 과거 북한에 막대한 예산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는데, 현재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북철도 협력사업은 사실상 퍼주기다.
- 한국 투자 시 철도의 소유와 운영에서 한국이 지분을 가져야 한다.

21

투자비가 한국기업으로 이전 되는 가능성은 완전 배제

고속철도로 건설한다며, 그 가능성은 현실화가 가능

고속철도는 첨단기술의 복합시스템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

\* 한국은 북한이 할 수 없는 건설 기술, 레일, 통신·신호시스템 생산, 차량생산 능력을 보유

관련 기술이 없는 북한이 고속철도 건설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문은 제한적

\* 건설 부문에 일반 기능공으로 참여 가능

한국기업이 건설을 주도하고 레일, 통신·신호장비, 차량 등 공급이 불가피

\* 투자비 대부분이 한국기업에 지출될 것임

22

## 수요 부문

###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기인

대부분이 서울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만 생각

\* TSR 이용해 유럽 여행이나 러시아·중앙아시아·유럽으로 화물을 수송

동아시아 국가 간에 열차 운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

- 3주 이상 걸려 시베리아 횡단해 유럽까지 가는 여행객은 연간 몇 백명 수준일 것이다.
- 한국의 국제화물 중 TSR을 통해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갈 물량이 없다.
- 현대화해봤자, 당장 여행이나 화물수송에 쓰이지 않는다.

23

### 동아시아 국가 간에 잠재적인 철도 이용수요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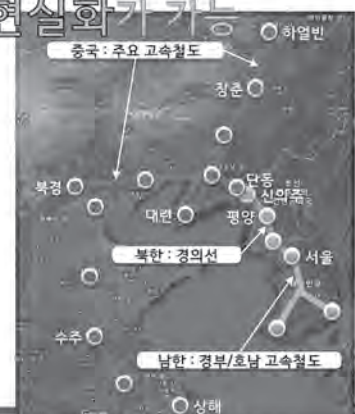
동아시아 국가 간 해상·항공·여객 및 물동량이 그 대상

\* 현재는 철도 수송이 불가능해 해상과 항공으로 수송

북한 경의선만 현대화되어도 철도 이용수요의 현실화가 가능

한국과 중국 북경·대련·장춘 등이 3~5시간대에 이동

한국과 중국간 화물 운송이 1~5일에 가능



## 경의선 경유 한국-중국 간 철도이용객 추정(2025년 기준)

### 1일 49,000명 규모 예상

- \* 2025년 예상 한중 간 항공 이용객에 철도 전환비율을 적용
  - \*\* 동북3성 지역은 60%, 북경과 인근지역은 40% 전환 가정
- \* 경의선은 고속철도로 건설, 국경통과 간소화 실현 전제

2025년 한국-중국 항공이용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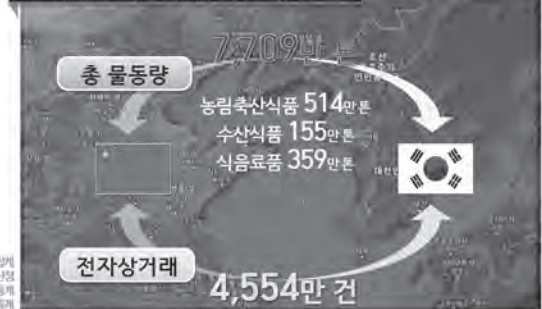


## 경의선 경유 한국-중국 간 철도 화물수송량 추정(2025년 기준)

### 총 수송량 2,312만 톤, Cold chain 308만 톤, 특송 1,366만 건

- \* 2025년 예상 한중 무역량에 철도전환 30% 가정
  - \*\* 농림축산식품·수산식품·식음료품은 Cold chain,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특송으로 수송
- \* 경의선은 고속철도로 건설, 국경통과 간소화 실현 전제

2025년 한국-중국 무역량 규모 예상



## 경제성 부문

### 남북철도 연결의 의미 및 활용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판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송되는 경우만을 생각

### 남북철도 연결 시 열차 운행의 중심은 동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국가 간 열차 운행에 관한 논의가 중요

- 한국과 동북3성 및 시베리아 철도를 이어주는 철도물류의 경제성이 거의 없다.
- 해상물류는 철도보다 많이 수송할 수 있어 철도보다 저렴하다.
- 대륙으로 가는 컨테이너들의 한국 회송물량이 없어 실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27

### 동아시아 국가 간 열차운행은 경쟁력을 확보 가능

항만에서 환적 등 절차 없이 바로 철도만으로 수송 가능

\* 선박하역 비용 등 절감

화물 운송 기간은 철도운송이 해상운송보다 많이 단축

\* 서울~중국 동북3성(단둥·창춘 등) : 해상수송 11~14일 VS 철도수송 1~5일(국경통과 절차 간소화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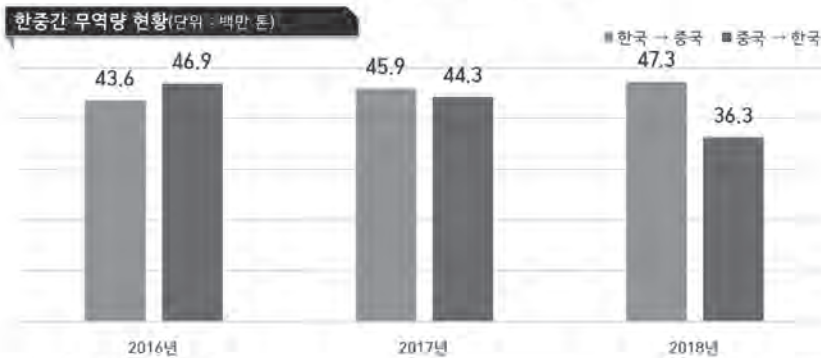
28

## 동아시아 지역 철도수송에는 화송물량 부족이 없을 것으로 예상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상호 교역량이 많기 때문

예 : 한중간 무역량은 방향별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

\* 2018년 한국 → 중국 : 47.3백만 톤, 중국 → 한국 : 36.3백만 톤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29

## 운영 안정성과 안보 위협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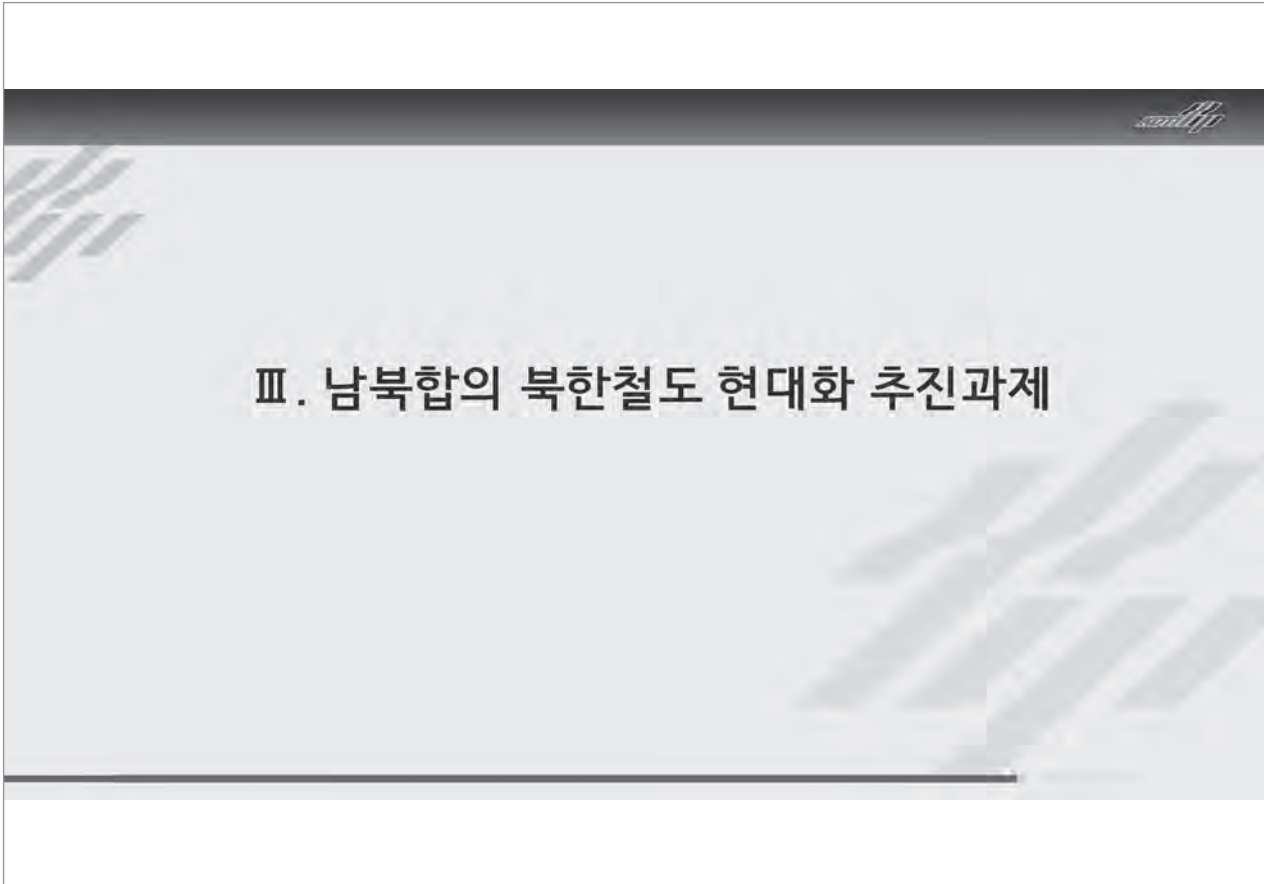
철도 운영의 핵심시설을 남측에 설치하여 북한 리스크를 해소

전력 공급시설, 열차관제시설, 신호·통신관리시설, 차량정비시설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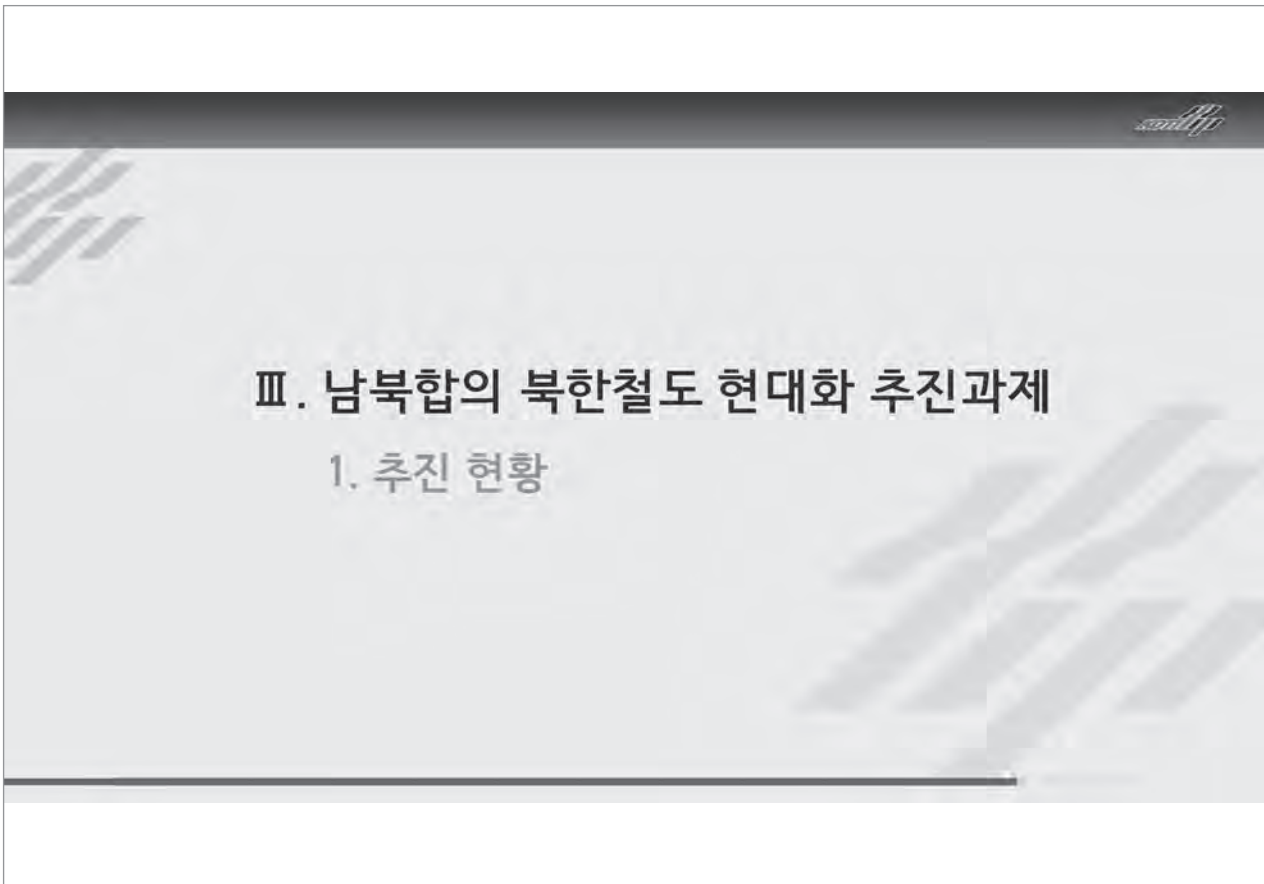


- 북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철도를 끊어버릴 수 있다.
- 북한이 국유화하고 한국 지분을 빼앗을 수 있다.
- 북한 통과 운임을 높게 부과하고 수익을 독차지 할 수 있다.
- 전쟁이 발발 시, 열차로 병사와 무기를 실어보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

30



### Ⅲ. 남북합의 북한철도 현대화 추진과제



### Ⅲ. 남북합의 북한철도 현대화 추진과제

#### 1. 추진 현황

## 대북제재의 현실적 장벽으로 진행이 부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만 실현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기대하는 상황

⇒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작업의 우선 추진에 대한 검토가 부족

\* 예 : 철도 건설만 보아도 공사착수 전에 완료해야 할 과제가 많고 오랜 기간이 소요

### 일반적인 철도건설 절차

타당성 조사 1년 → 기본계획 수립 1년 → 설계 1년

→ 측량 및 용지 매입 → 공사 착수

\*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은 제재와 무관

33

## 실천적 추진전략 및 방안이 부재

현대화 방침과 실행방안이 공론화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음

\* 사업 규모, 소요 예산 등에 관한 오해와 불필요한 비판을 초래

⇒ 대북제재 뿐 아니라 퍼주기 논란 등 비판적 의견을 의식

34



## 현대화 수준을 한국의 시각에서 판단

### 북한경제 발전 단계의 적정시설론을 적용

- \* 북한은 경제 수준이 낮으므로 우리의 70년대 수준의 일반철도면 충분하다고 판단
- \* 현대화 방안으로 기존선 개량을 중점 검토

⇒ 북한의 선호와 차이가 있고 이해 충족에 미흡

### 현대화 수준 관련 북한의 관심과 이해 충족 조건

시설적 수용 여부 : 기존선 개량보다는 고속화를 선호

경제적 도움 여부 : 해외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교통 여건을 조성

- \* 고속철도는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 및 국제 항공교통 여건을 보완 가능

정치적 수용 여부 : 북한 주민에게 남북 협력의 당위성 설명에 활용

- \* 고속철도는 북한이 경험하지 못했고 전리마를 뛰어넘는 도약이 가능

35

## 현대화의 전략적 의미에 대한 고려가 부족 단순히 북한 내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인식

동아시아철도망 구축(안)



⇒ 남북철도 연결의 지경학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

### 남북철도 연결의 지경학적 가치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국가로 역할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교통·물류 및 경제 중심국가로 도약이 가능

- \* 철도로 동아시아 국가 주요 도시가 연결 → 한중, 한러, 한몽 철도 경제회랑 구축 → 국제 철도여객·물류 중심지 기능, 인천공항·부산항 이용도 증가 → 국제 교통·물류와 경제적 영향력 확대

36

## 중국·일본 등 외국이 추진 시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 당연히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

⇒ 북한의 고속철도 등에 대한 국제투자 유치 노력을 경시

### 외국의 북한철도 투자 시 영향

#### 대륙 진출의 新장벽 형성

- \* 북한에 한국과 다른 철도시스템이 구축, 남북철도 통합 및 표준화가 곤란

#### 남북협력 유인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 상실

- \* 외국이 고속철도 만이 아니라 기존선 현대화 사업도 추진 가능

#### 경제특수 기회 상실

- \*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고속철도 시장에 참여가 불가능
- \* 철도역세권 개발, 철도복합물류단지 조성 등 사업도 참여가 불가능

37

## Ⅲ. 남북합의 북한철도 현대화 추진과제

### 2. 실행을 위한 인식 전환

### 북한철도 현대화의 전략적 의미를 이해

단지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이 아닌 동아시아 중심국가 도약의 필수 조건

### 북한의 관심과 정치적·경제적 이해 충족 여부를 고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북한이 선호하는 현대화 수준을 고려

### 정부의 명확하고 실천적인 추진방침을 결정

현대화 수준, 제재 전후 추진과제 구분, 실행계획 수립 등

북한과 실행에 관해 협의(비공식적으로도 전달)

- \* 현대화 추진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계획을 제시

### 퍼주기 논란 등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탈피

당당히 공론화하고 사업규모, 사업방식, 사업비 조달, 효과 등을 적극 설명

### 남북철도 협력사업에 대한 과거의 시각을 변화

차관만이 아니라 북한과 협력적 투자도 가능

- \* 최근 북한은 국제투자 유치에 적극적이고 운영권 보장 등 제시

고속철도로 건설하면, 투자비 대부분이 한국기업에 이전

- \* '손안에 쥐고 있는 유망한 투자처'

### 남북철도 연결과 활용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

동아시아 국가 간 열차 운행이 중심

- \* 멀리 있는 유럽 수송만 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 지역 수송을 주목

### Ⅲ. 남북합의 북한철도 현대화 추진과제

#### 3. 대북 제재 해제 전·후 추진과제

#### 대북 제재 해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실행

해제 이전에는 해제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제재와 관계없는 사안을 준비

➢ 현대화 철도 사업방식 협력

➢ 현대화 철도 건설 준비 협력

➢ 현대화 철도 운영 준비 협력

➢ 현대화 철도 관련 복합시설 개발 준비 협력

➢ 동아시아 국제열차 운행 협력

남북한 신뢰 회복, 공사 착수 전 필요과제 준비

**대북 제재 해제 이전**

➢ 현대화 철도 공사 착수

➢ 현대화 철도 관련 복합시설 개발 착수

➢ 북한 기존선 열차 운행 정상화 협력

※ 다철기관차입대 등

➢ 남북간 열차운행 협력

※ 문명노선, 열차종류, 국경통과절차 등

➢ 철도이용 북한 관광 협력

※ 대상지역, 안전보장 등

➢ 북한 거점도시 혁신개발 협력

※ 북한 거점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공사 착수, 관련사업 시행

**대북 제재 해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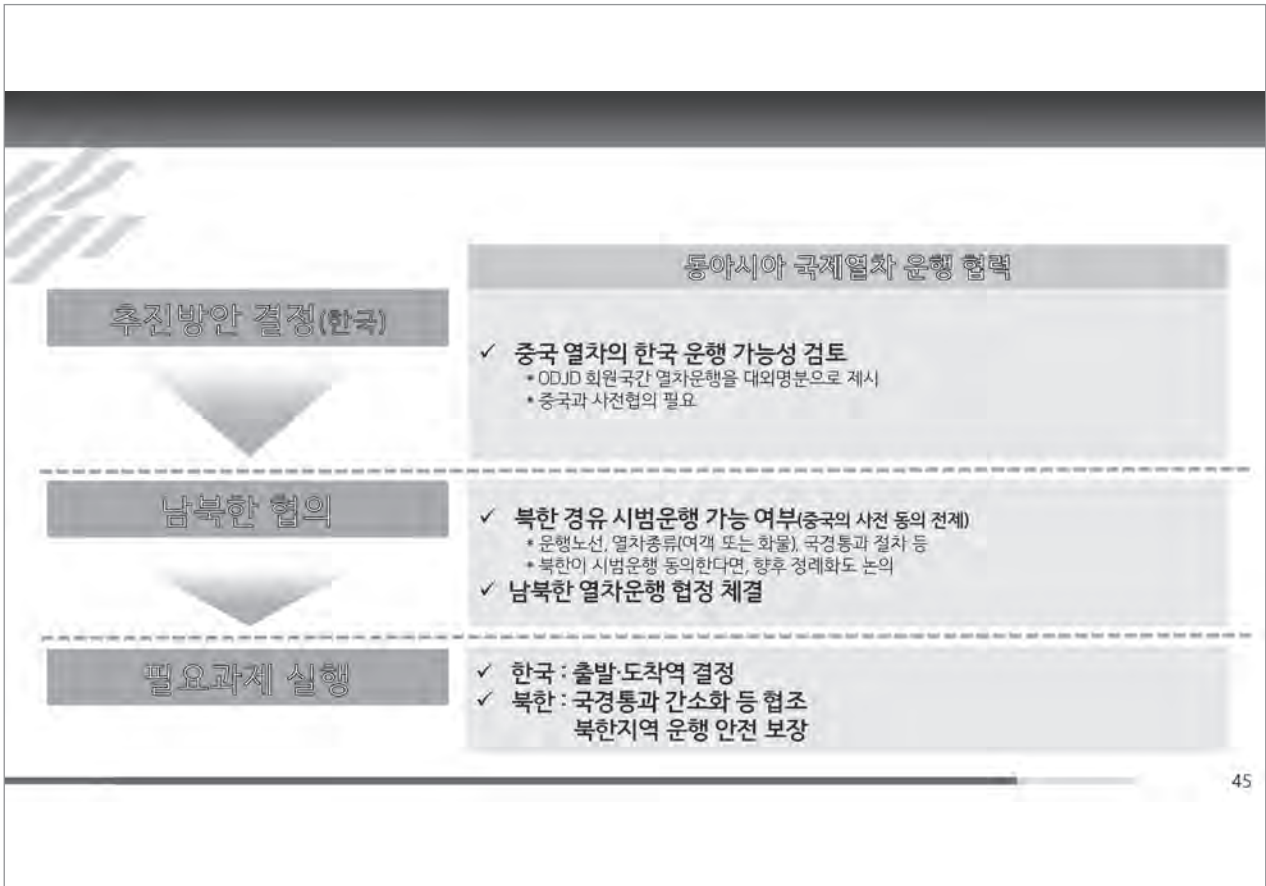
## 대북 제재 해제 이전 추진과제

	현대화 철도 사업방식 협력	현대화 철도 건설준비 협력
<b>추진방안 결정(한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화 시설 수준 * 고속철도 신설 vs 기존선 개량</li> <li>✓ 현대화 실행순서 * 경의-동해선 동시 vs 단계별 건설</li> <li>✓ 현대화 투자방식 * 재정 vs 차관 vs 북한 투자유치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인력 필요 부문·규모</li> <li>✓ 한국 인력·장비·자재 반입 및 반출 절차</li> <li>✓ 비상시 안전대책 * 사고, 자연재해 등</li> </ul>
<b>남북한 협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공동추진기구 설치 제안</li> <li>✓ 투자방식 협의 * 북한 투자유치 방식 적용, 운영보장 등</li> <li>✓ 사업내용 협의 * 시설수준, 노선, 역사위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인력 투입 규모</li> <li>✓ 북한 인력 교육 방법</li> <li>✓ 반입 및 반출 절차</li> <li>✓ 안전보장대책</li> </ul>
<b>필요과제 실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현대화 사업 설계</li> <li>✓ 북한 : 노선 현지조사, 측량 등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북한 인력 건설기술 교육 * 한국 또는 3국</li> </ul>

43

	현대화 철도 운영준비 협력	현대화 철도 관련 복합시설 개발준비 협력
<b>추진방안 결정(한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인력 채용 여부 * 기관사, 열차승무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 유형 * 거점역 역사권 개발, 복합물류단지 등</li> <li>✓ 개발사업 대상지역 * 한국 : 수색, 파주, 도라산 등 * 북한 : 개성, 평양, 신의주 등</li> </ul>
<b>남북한 협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인력 채용 부문·규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 유형과 대상지역</li> <li>✓ 투자 안정성 확보 * 운영 보장 등</li> </ul>
<b>필요과제 실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북한 인력 운영기술 교육 * 한국 또는 3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개발사업계획수립·설계 북한 인력 교육 * 한국 또는 3국</li> <li>✓ 북한 : 사업대상지역 현장조사 협조</li> </ul>

44



### 현대화 시설 수준 : 고속철도로 건설

투자비용 대비 속도 향상, 선로용량 증대 등 현대화 효과를 고려  
북한의 선호와 이해를 반영하고 충족  
중국 고속철도 등과 연결, 실효성 있는 동아시아 철도망 구축을 고려

**현대화 방안 비교(경의선 기준)**

기존선 개량에는 고속철도 신설 사업비의 79% 소요  
\* 속도 향상 등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음

구분	기존선 성능 복원	기존선 개량	고속철도 건설
운행속도	40~50km/h	100~150km/h	350km/h
사업비	1조 원	11조 원	14조 원

\* 사업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정 인용.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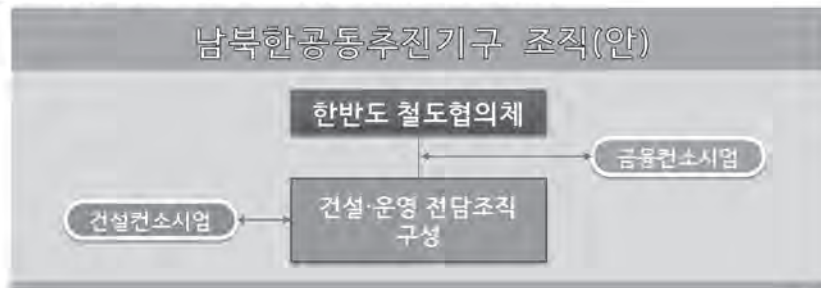
### 현대화 투자 방식 : 북한의 투자유치 적용하되, 남북한 협력적 투자

#### 한국의 주도로 북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추진

- \* 한국 : 재원조달, 건설 및 설비(전기·신호·통신·차량) 등 핵심분야 담당
- \* 북한 : 용지, 건설인력 등 담당

#### 북한의 참여 및 협력 유인을 위한 기타 방안도 제시

- \* 현대철도 기술 이전, 해외 철도사업에 남북 공동진출 등



### 현대화 실행 순서 :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 사업효과가 큰 경의선부터 우선 추진(도라산~평양~신의주)

- \* 남북한 주요 도시를 연결 → 남북경제공동체의 중심축 형성
- \* 중국 고속철도와 연결 가능 → 동아시아 1일 생활권 형성,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실현



## 경의고속철도 건설 : 4년 이내 건설을 계획

건설 구간 : 도라산~평양~신의주, 361km

건설 및 운영기준 : 현 한국의 고속철도와 동일 기준 적용

총사업비 : 14조 원(국비 7조 원, 철도시설공단 채권 7조 원)

\* 국고 연간 평균 투자는 1조 7,500억 원 규모

\* WB, AIB, ADB 등 국제금융 활용할 경우 한국 기업 참여 불투명

\*\* 국제기구가 선호하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가 타당성조사, 사업방식, 철도시스템, 시공업체 선정 방식의 등 결정하기 때문

사업 기간 : Fast Track 적용(설계 0.5년, 시공 3.5년)

시공 : 한국 기업이 주도적 참여(건설·전기·신호·통신·차량 업체 등)

시설·운영 안정성 확보: 전력공급·관제센터 등 주요 시설을 남측에 설치

49

사람·환경·교통의 조화 속에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한국교통연구원

감사합니다  
Thank you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장

**Jongwon SEO** Research Fellow,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서종원 박사는 1996년 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국내외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및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2010년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이후 북한 및 동북아시아 지역 교통 발전 및 협력 분야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남북교통협력,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상 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r. Jongwon SEO has been working at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KOTI) since 1996 and has built various research and experience i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ince acquiring a doctorate in engineering from Tsinghua University in China in 2010, he has focused on research in transporta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Recently, while serving as the head of the Northeast Asia North Korea Transportation Research Center at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he has conducted various studies on inter-Korean transportation cooperation in preparation for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Eurasia.

- 2년전 2018년 4.27 판문점과 9.19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남북경제협력,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됨
  - 그러나 2018년 6·12 싱가포르와 2019년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귀결되고 이후 북미관계를 포함하여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답보 또는 교착상태에 빠졌음
  - 급기야, 2020년 들어 COVID-19,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 역시 경색국면에 처해짐
  - 남북관계 및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최근 경색국면을 평화와 협력국면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편 그동안 남북간 주요 정상급 회담 등에서 교통분야 협력은 항상 주요 의제 및 합의 성과로 다루어짐
  - 20세기 우리를 포함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룬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듯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현대화 및 확장, 운영은 국가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경제발전으로 가는 지름길 중 하나임
  -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남과 북 모두를 위한 협력사업이 될 것임
  - 무엇보다 철도는 다른 교통인프라에 비해 남북을 연결한다는 상징성이 크고, 특히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대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더 중요하며, 따라서 각종 남북간 회담에서 남북철도협력은 가장 중요한 의제이자 합의 성과중 하나였음
  -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이유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음
- 앞서 나희승 원장님의 "남북철도, 평화를 열다"와 이재훈 박사님의 "남북철도협력, 과연 퍼주기인가?"라는 발제는 오늘의 세션 주제인 [남북철도협력과 동북아 평화정책]에 맞게 한반도와 동북아의 철도-평화-경제(상생, 협력) 선순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됨
- 나희승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남북철도 협력을 위한 3가지 추진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그렇다면 남북철도 속도 향상사업 추진,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강화, 미국에 대한 설득 노력 지속 등 3가지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가 핵심이 될 것임
  - 남북철도 속도향상 등 철도협력사업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하에서 쉽지 않을 것이나 북한의 선대지도자 시기부터 관심 및 합의되었던 사업이고 현재의 북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중 하나라는 측면,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분야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협력추진이 가능할 것임
  -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부분은 각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전략(일대일로, 신동방정책 등)과의 접점을 모색하고, 남북철도연결이 동북아 주요 국가의 국가전략 실현에 기여하고 동반성장과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협력추진이 가능할 것임
  - 미국에 대한 설득 부분은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정치·외교·안보 측면 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둔 사업임을 강조하고, 특히 미국 기업,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추진이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해 경의선을 경유하는 남북중 국제철도 시범사업과 동해선을 이용한 남북러 국제철도 시범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철도 시범사업을 통해 동북아 국가,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화물을 싸고 빠르게 운송하여 그 효과를 보여주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 및 기업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남북철도연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국제 여객 철도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 관광지 개발 및 활성화와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에 일조하는 효과도 보여줄 것임
  - 물론 대북제재 위반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나, COVID-19 이전까지 북중, 북러 국제열차가 운행되었다는 측면에서 OSJD 정식가입국으로서 시범사업 추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남북철도 퍼주기'와 관련하여서는 남북철도협력사업이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상생, 동반성장)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사업의 퍼주기' 여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협력사업의 오랜 논란거리 중 하나였음
  - 과거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남북철도사업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남북철도연결은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언론기사가 있음

-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의 접근성, 우리나라의 동북아 지역 물류거점 실현 가능성과 이를 통한 산업, 문화, 관광 활성화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 등을 말씀하셨음
  - 남북협력사업의 퍼주기 논란은 대북지원이 우리에게는 이익이 많이 없이 또한 북한 인민보다는 북한 정권 유지에 활용되고, 나아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됨
  - 남북협력사업의 '퍼주기' 또는 '피오기' 논란은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임
  - 남북철도협력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기술과 자재, 부품을 지원하여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어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남북협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철도 철도이용권 일부를 획득할 수 있다면 북한 및 동북아 지역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과 함께 중국 동북지역 및 극동러시아 지역 등 막대한 경제영토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게다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된 북한 철도 일부를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향후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실제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여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고 지원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효과 외에도 한반도 육상교통망의 효율적 배치 측면에서도 남북철도협력이 필요함
- 현재의 북한의 철도망은 과거 일제침탈 시대 일제의 자원수탈과 대륙진출 차원에서 부설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만약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또는 다른 국가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철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들의 이익 중심의 자국에 유리한 노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남북 통합을 고려한 한반도의 균형발전 차원의 네트워크와 상이하게 구축될 수 있음
  - 특히 철도는 전력, 신호, 통신 등 기술적 표준이 달라지면 추후에 효과적으로 남북간 철도 통합운영하는데 제약요인이 될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인프라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북한 철도 현대화 및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남북간의 정치·안보 등 특수관계를 제외한다면 기존의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국과의 지원사업과 같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시도할 만한 사업임
  - 이를 통해 향후 남북 통합 또는 통일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효과도 있을 것임
- 아무쪼록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남북철도가 연결 운행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끝.

# 토론자 Discussant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Yong-Seok PARK** Director, Department of Economic and Financial Research,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CERIK)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으로 재직중이다. 건설 인프라 투자정책, 민간투자정책, 건설신수요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인프라에 관한 연구로는 "북한 건설산업의 주요법제에 관한 연구", "북한의 주요 건설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방안 연구",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과제", "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 연구" 등이 있다.

Currently he serves as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Construction Economic & Finance Research at the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He carries out research on infrastructure investment policy, private investment policy and new construction demand, etc. With regard to the research on North Korean infrastructure, there are: "Study on Major Laws for Construction Industry in North Korea," "Study on Major Demand for Construction in North Korea and Ways to Raise the Korean Peninsula Development Fund,"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Future Challenges in the Construction Sector," and "Basic Study on North Korean Economy and Construction Market."

- 북한의 철도는 중국, 러시아 등 대륙과 연결되어 있음.
  - 북한의 국제철도 노선은 중국노선과 러시아 노선으로 구분
    - 중국노선(TCR)은 평양~북경 간 국제열차가 운행되고, 청진~남양~도문 연결 노선은 주로 화물수송 노선
    - 러시아노선(TSR)은 나진~하산 구간
- 중국, 러시아는 북한철도 현대화에 관심이 크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중국은 남한~북한~중국(TCR)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모색
    -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회와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자유한공사를 대표로 하는 국제투자집단 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의주~평양~개성 사이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건설에 관한 합의를 체결(2013.12.8.)
  - 러시아는 대륙철도(TSR)을 연결하는 물류사업과 북한 철도 현대화에 관심
    - 나진-하산 프로젝트 :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54km 철도 개보수 완료(2013.9), 나진항 부두 정비 및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 추진
    -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총 3,500km 구간의 북한 철도 현대화(개보수) 사업을 추진, 평양역에서 착공식 개최(2014.10.21)
- 남북연결 철도사업, 서울~평양~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 필요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의 남북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임.
    -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개최시 서울~평양간 연계 교통망 필요
    -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018.11.30.~12.17)
    - 남북철도 및 도로 착공식 개최(2018.12.26.)
    - \* 철도사업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분류, UN 대북재제위원회 절차 필요
  - 남북 고속철도가 건설된다면 북한의 핵심 경제축인 평양~신의주를 연계하고 남한과 중국을 최단으로 연결하는 서울~신의주 구간이 먼저 착공되어야 함
    -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상징성은 매우 큼, 남북경협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임.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420km) 연결시 중국과 러시아가 일일 생활권이 됨.
    - \* 고속철도는 항공기에 비해 800km 이내에서 경쟁력이 있음.
    - \* 서울 기준으로 중국 단둥, 심양, 장춘, 대련 / 신의주 기준으로 베이징, 하얼빈 / 나진을 기준으로 블라디보스톡이 800km 영향권내
-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제약사항과 추진과제
  - 미국과 UN의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남북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지금 시점에 남북한이 함께 남북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향후 사업추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 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공사'의 단계를 거치게 됨.
    - 사업의 구상부터 실시설계까지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형 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북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추진되더라도 타당성 분석(사업구상~실시설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바, 이를 미리 추진하는 것임.
  - 개발계획 수립은 일종의 연구활동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실제로 위반하지 않고,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외 자본 유치, 국제 금융기관의 용자, ODA(공적개발 원조) 유치 등을 위해서는 타당성분석 자료는 반드시 필요함.
  - 이에 따라 남북한의 철도 및 관련 전문가들로 「남북 고속철도 건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및 타당성 분석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토론자 Discussant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북방연구센터장

**Jung Joon PARK** Head of Northern Railroad Research Center,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박정준은 2019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북방철도연구센터장을 역임해 왔으며, 2007년 입사 이래로 남북철도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수료를 하였고, 통일부 전문가 자문위원, 과기부 기술수준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박 센터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북방철도 연구를 이끌고 있으며, 남북철도 연결을 대비하여, 대륙철도 상호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Park Jung Joon has served as the head of the Northern Railway Research Center of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since 2019, and has been carrying out research on inter-Korean railways since he joined KRRI in 2007. 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and Ph.D. candidate in the industrial engineering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working as an expert advisor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 member of the technical level evalu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 leads the northern railway research of KRRI and develops policies and core technologies for the inter-Korean railway 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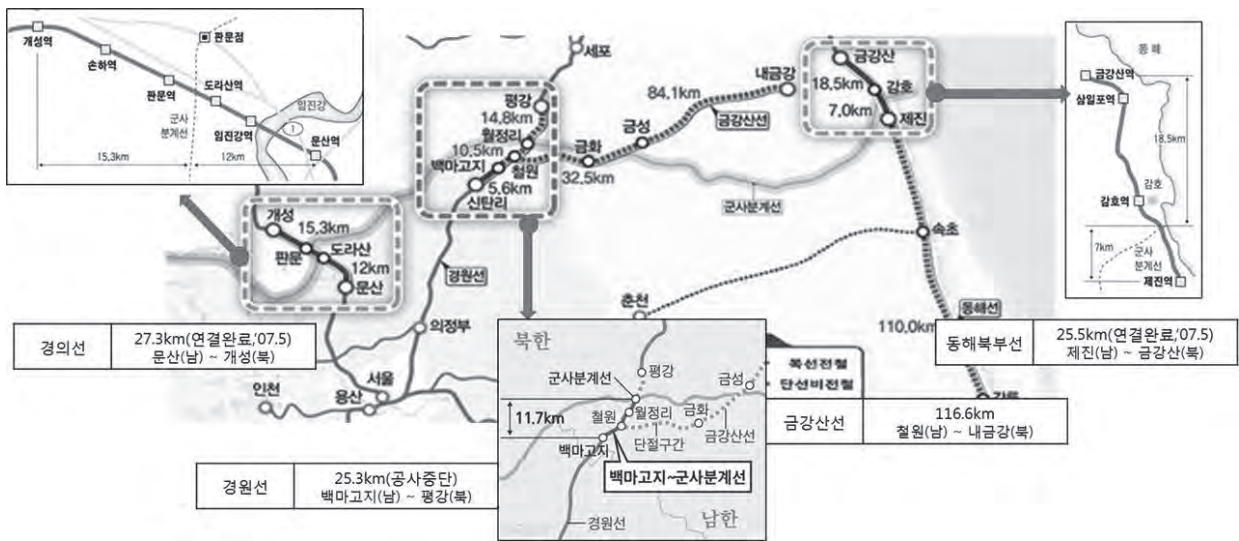
## 남북철도 연결을 대비한 고려사항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북방철도연구센터

### □ 초기단계 철도운행 시나리오

- 현재 동·서해측 접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경원선의 경우 백마고지~평강(26.5km) 구간, 동해선의 경우 삼척~제진(110.9km)가 미연결 구간이기 때문에 남북철도 연결 초기에는 경의선 루트만 활용 가능함



- 중국과 연계는 경의선(서울~평양~신의주)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하며, 러시아와 연계는 경원선과 동해북부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1) 평부선-평라선(서울~평양~고원~나진)이나 2) 청년이천선-평라선(서울~평산~세포~나진)을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남북 간 상호 신호/통신/전력 등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디젤기관차(북한 또는 남한의 유휴기관차 활용)에 북한 기관사와 남한 기관사가 동승하고, 객차 및 화차를 교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신호/통신시스템은 기존의 북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함
- ※ OSJD 국제운송협정은 자국에서 자국기관차로 자국기관사가 운행하도록 규정됨

### □ 남북철도 연결 시 기술적 고려사항

- 남북간 연결사업은 실행가능성과 복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계별(최소안전확보→수송력증대)로 추진하고 열차운행을 위한 기술적, 실무적 문제 협의
- 경의선 복원사업에서 추진된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합의서(2003.12)에 따르면 1) 남북철도 연결공사를 위한 신호통신, 전력계통 설계협정과 2) 자재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협력방안(6개항의 합의서)과 3) 제공 자재 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일정 합의한 바 있음

구분	기술지원사항
설 계	남북간 철도시설을 표준화하여 설계시행 추진(국내설계기준)
감 리	감리 시행 및 사업관리
장비 및 자재	충분한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 후 복측에 양도
열차운영	복측에 장비운영 및 기술이전으로 독자적 운영능력 배양 후 이관

○ 철도운영 기술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지원 강화 필요

- 남북 철도전문가 학술교류 및 교환 연수 추진 등 기술인력 교류와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기술 표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상호연계에 대한 동기부여

○ 철도협력 관련 기술교류 및 인력확보 필요

- 남측에 북한철도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북한에도 남한기술에 이해도가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남북간 기술격차를 해소해야 함
- 이를 위해 남북한 간 기술용어의 비교 및 사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남북한 전문인력 간 기술교류가 필수적임

○ 남북간 합의된 인프라 개발 마스터플랜 필요(장기)

- 과거의 남북철도협력은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별사업 형태로 추진
- 또한, 남북철도협력의 미래방향이냐 우선순위설정 등 전체적인 협력전략에 있어서도 남북간 합의를 통해서보다는 남한 중심의 연구로 진행되어 왔음 (북한과 협력의 현실적 어려움)
- 특히, 철도의 경우 종합시스템 기술로 전력망, 통신망과의 연계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한반도(북한) 인프라 개발 마스터플랜 하에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남북철도협력과 관련한 지원기준 및 관련 재원의 확보 필요

○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 등







# Session 10-1

## 통일공공외교의 평가와 과제

### Assessment and Tasks of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주관기관  
Organized By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Peac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좌장  
Moderator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Kitae LEE Director, Peac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발표자  
Presenters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Jong-Chul PARK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Hyun-Wook KIM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KNDA)

토론자  
Discussants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  
John DELUR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SIS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Dong Ryul LEE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최은봉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unbong CHOI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10-1)

## 통일공공외교의 평가와 과제

한국의 통일정책은 정부의 정책은 물론 남북관계, 국내여론, 국제정세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럼에도 남북 간에는 통일 원칙 및 협력에 관한 기존의 합의사항이 있고, 국내에서는 일관된 정책, 평화적 접근, 인도주의 우선 등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에 비해 통일정책에 관한 국제적 지지 획득과 공감대 형성은 북핵의 장기화, 동아시아 국제정치, 통일 미래상에 관한 관심, 글로벌 이슈의 영향력 증대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그에 비례해 통일(공공)외교가 따라가지 못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통일(공공)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하고자 한다.

## Assessment and Tasks of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s changeable depending on various factors: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inter-Korean relations, domestic public opinion,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Nevertheless, South and North Korea have existing agreements on the principles of unification and cooperation. On the domestic side, a certain degree of consensus has been built on the need for coherent policy, peaceful approach, and priority on humanitarianism. The importance for securing international support of and build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policy has increasingly grown due to unresolved, prolonged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s in East Asia, attention surrounding the blueprint of a unified Korea, and rising influence of global issue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has fallen short of reflecting those recent trends. Against this backdrop, the session aims to identify direction and tasks of effective and integrated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with the presence of experts at home and abroad.

## 좌장 Moderator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Kitae LEE** Director, Peac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이기태 박사는 현재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사학위는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학연구과에서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영역은 일본 안보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사업단의 박사후연구원이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덕성여대, 육군사관학교의 강사로서 활동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의 전문연구원직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전임연구원직을 맡았다. 그리고 2016년 현대일본학회의 연구이사를 역임하였다.

Dr. Lee is serving as the Director of Peace Research Division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He obtained his Ph.D degree from Keio University,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His main research area is Japanese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He was a Post-doc fellow at BK21 Research Project f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Studies of Yonsei University from 2012 to 2013; a lectur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Duksung Womens University, and Korea Military Academy from 2012 to 2015; a research fellow at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from 2013 to 2014; research fellow at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of Kookmin University from 2014 to 2015; a research director at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in 2016.

# 발표자 Presenter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Jong-Chul PARK**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환교수와 일본 도쿄대학교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통일연구원에서 재직하면서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2019, 공저),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2018, 공저),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2018, 공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2018, 공저),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분석과 추진방향』(2017, 공저)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2016, 공저),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2015, 공저), 『통일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2015, 공저) 등의 저서를 집필한 통일·북한문제의 전문가이다.

Dr. Park Jong-Chul is a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Korea University. Dr. Park served as a visiting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in the US and at University of Tokyo in Japan.

Dr. Park is an expert in unification · North Korean issues. His major research at KINU include Change of US-China Relations and Korea's Strategy on North Korea · Unification in a New Normal Era (2019, Co-author), Beyond Nationalism and Economic Benefits: Searching for New Discourse for Unification (2018, Co-author), Comprehensive Evaluation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Strategy for Facilitating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2018, Co-auth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2018, Co-author), Sustainable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Policy: Analysis of Environment and Direction for Implementation (2017, Co-author), Survey on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the Identity of a Unified State (2016, Co-author), A Survey of People's Opinions on South-North Integration: Perception, Factor, Category and Types (2015, Co-author), and Post-Unification National Identity Formation: Focusing on Theories and Case Studies (2015, Co-author).

---

# Directions and Tasks Ahead in Korean Peace Public Diplomacy: Promoting Tailored-contents and Establishing Networks

Jong-Chul Park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KINU)

---

## 1. Concept and Goals of Peace Public Diplomacy

Diplomacy is a type of action in external affairs executed by the state with an aim to fulfill national interests via non-military measures, such as dialogue, negotiation, etc. The type of diplomacy can be conceptualized based on a few criteria.

First, diplomacy has long been handled exclusively by the state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diplomatic actor. However, the actor of diplomacy has been diversified from the government to public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 business, and the media via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Second, when 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targets of diplomacy, diplomacy can be categorized into traditional diplomacy that targets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ublic diplomacy designed for private organizations, scholars and experts, thinktanks, business,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Third, when viewed from the areas of diplomacy, diplomacy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diplomacy, technological diplomacy (TechPlomacy), cultural diplomacy, and resource diplomacy. For example, economic diplomacy or cultural diplomacy are sometimes understood as the tools for achieving a state's higher goal or diplomatic goal using economic or cultural means and other times understood as a mere diplomatic act within each area.

Fourth, when viewed from the viewpoint of diplomatic tools, traditional diplomacy is mostly comprised of diplomatic acts. However, in the 21<sup>st</sup> century, IT -based communication and discourse have gained significance through platforms such as the internet and SNS.

Fifth, from the standpoint of diplomatic resources, hard power used to be an essential diplomatic resource in the past, such as military power and economic power. In the 21<sup>st</sup> century, however, soft power or smart power such as culture, networks, and the ability to set agendas and present norms have emerged as significant resources as well. Public diplomacy has gained importance as one of the smart powers.<sup>1</sup>

Sixth,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s between domestic politics and diplomacy, diplomacy had an autonomy in the past that distinguished it from domestic politics. However, intermestic phenomenon has become widespread in the 21<sup>st</sup> century, a phenomenon that closely links domestic issues with international ones.<sup>2</sup>

Public diplomacy has gained its prominence in the 21<sup>st</sup> century due to a change in diplomatic actor, subject, tools, resources, and its linkage with domestic politics. To sum up the aforementioned criteria of diplomacy, public diplomacy can be defined as an "act through which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ctor attempts to achieve policy goals with the use of various diplomatic assets and tools targeting a variety of the public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diplomacy is a special area of diplomacy arising out of the peculiar context of a divided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diplomacy is a diplomatic act that mobilizes diplomatic tools to achieve a national goal, unification. Unification diplomacy can be defined as 'crea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conducive to unif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xecuting diplomatic tasks accompanied by unification.'

---

1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7)

2 The intermestic phenomenon that closely links domestic issues with international ones has expanded in the post-Cold War era. James M. Scott, ed., *After the End: Making U.S.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Worl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The goal of unification diplomacy is, on the one hand, to create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favorable to unification, and on the other hand, to induce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and after unification. The first goal of unification diplomacy is to formulate the international perception supportive and favorable to unification. It is to alleviate a sense of resistance or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develop a positive perception toward unification. Second, the goal of unification diplomacy is to secure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unification progresses. Third, unification diplomacy aims to obtain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international issues accompanied by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formulate an external policy after unification.<sup>3</sup>

Peace diplomacy is also crucial along with unification diplomacy.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persisted for more than seven decades and peace on the peninsula is more desperately needed than unification due to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Moreover, the prolonged division not only restricts economic activities of residents in border regions but also fails to guarantee peace in their daily life. Social-psychological anxiety and inconvenience in everyday life have been so pervasive due to a prolonged division that it can be felt in every aspect of lif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armed conflicts be prevented and peace in daily life be engendered by establishing the environme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ttling peace. In addition,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ilitary tensions are the biggest impediment that aggravates security anxiety and hinders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With that in mind, peace diplomacy is important to settle peace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ore broadly in East Asia.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on peace requires utilizing diplomatic channels between governments and expanding public diplomacy targeting civil socie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and the internet, domestic public opinion exerts a crucial influence over international affairs, and global solidarity also plays a part in swaying public opinion for international issues. Considering this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nduct public diplomacy that enable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web that targets media, academic community, and civil group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eace public diplomacy aims to exp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and thus create the environment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Peace public diplomacy should be able to create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favorable to the peace process in phases and in every sector and to effectively combine various policy tools to secure support and cooper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eace public diplomacy also aims to build the consensus on the meaning and the effec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on the vision for peace in East Asia in the public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basis of a consensus on peace, peace public diplomacy is required to build public opinion that will induce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to implement policy that supports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 2. Current Status of Peace Public Diplomacy

When analyzed by government depart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public diplomacy is being independently executed in various areas involving diplomacy, economy, culture, and unificati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Korea Foundation allocate relatively large amounts of their budgets to carrying out public diplomacy projects. Given the area of their specialty, public diplomacy in those organizations focuses more on the economy, culture and education, rather than unification.

3 Jong Chul Park, "Tasks and Strategy of Korean Unification Diplomacy," Sung Jang, Jung, at al., [Korea's National Strategy 2030] (Seongnam: Sejong Institute, 2016), pp.132-133. (in Korean)

〈The Number and the Budget of Public Diplomacy Projects in Major Government Departments in 2020〉<sup>4</sup>

Name	The No. of Projects	Budget (One Million W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5	95,691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69	32,971
The Korea Foundation	46	47,316
The Ministry of Unification	5	1,611

Among those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hich mainly focuses on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has invested 1,611(million won) on five projects in 2020, such as securing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vision for unification, developing contents for policy public diplomacy, and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press corps in Korea and the Diplomatic Corps.

'Peaceful Unification Strategic Dialogue' is a project to visit major countries, including four neighboring countries, and conduct a strategic dialogue with government officials, people from the Congress, and experts.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to which the largest amount of their budget was allocated, emphasizes facilitating Korean Peninsula issues to enter the arena of public discourse by engaging in a 1.5 track dialogue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The forum will take the form of a webinar this year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Global unification education' aims to provide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of various forms to rising scholars and foreign students as a target audience. Moreover, an English version of the policy introduction paper is currently published and circulated. Seminar on elaborating policy are also being held that is designed for foreign ambassadors residing in the ROK.

### 3. Direction of Executing Peace Public Diplomacy

Build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following strategic considerations.

#### A. Implementation of Tailored Public Diplomacy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peace public diplomacy should be conducted in a tailored way to each individual country.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all differ in their position and the benefits they expect on Korean Peninsular issues on the basis of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Sometimes, national interests, priority,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on Korean Peninsular issues in neighboring countries ar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The nature and size of the cooperation and network varies by country. For example, the ROK-U.S. have a relatively wide-ranging and various working cooperative network. That epitomizes the history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rock-solid nature of their bilateral relations. In contrast, the ROK-China and the ROK-Russia, albeit being in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have a weak network established. In particular, China and Russia have a sentiment of embracing North Korea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new network with rising scholars and experts in addition to conveying the meaning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o experts in China and Russia.

In addition, each country has various interests and benefits attached to Korean Peninsula matters and differing expectation for the roles of civil society and the media. For example, both in China and Russia, foreign policy is led by the government. Public opinion is rarely reflected in the foreign policy, and the activities of civil organizations are dormant. Besides, China and Russia strictly regulate foreign countries' public activities targeting the civil society on their territory.

<sup>4</sup> Tae-whan, Lee, "Ways of Activating Peace ·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by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ub-committee, Second Quarter, 2020 (2020.6.4.) (in Kore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on the basis of indirect methods in approaching public diplomacy when it comes to China and Russia.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Russia has a low level of understanding and interest on Korean Peninsula issues. Hence, public diplomacy should have a tailored-made approach considering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target country.<sup>5</sup>

Given that neighboring countries differ in their understanding on the Korean Peninsular issues and have different cooperative networks with Korea, peace public diplomacy should be promoted in two direc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an overlapping area betwee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countries' interests and seek a policy designed to expand that overlapping area. Secondly, it is required to promote a strategy of identifying and expanding areas that would be appealing to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economic and cultural sector rather than focusing on a security area of a sensitive nature.

#### B. Diversification of Targets

The targets for peace public diplomacy should be expanded to intellectuals, journalists, and people in culture and art. Peace public diplomacy's network should also be expanded to experts on the Korean issues who are from the new generation. In particular, hol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developing exchange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that target leaders of the next generation from abroad and teenagers.

In the meantime, it is desirable to actively utilize the network of compatriots abroad in promoting peace public diplomacy. The network of solidarity among compatriots resid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should be created so that they can play an active role in promoting peace public diplomac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ole in peace public diplomacy played by compatriots abroad can be called 'Diaspora Public Diplomacy' as follows: a campaign by a compatriot society in the U.S. that sends COVID-19-related medical supplies,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s Association's hosting a seminar which invites members of U.S. Congress, and the hosting of a North Korean forum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sup>6</sup>

#### C. Utilizing Soft Power and K-Peace Model as Assets

Peace public diplomacy should utilize a variety of diplomatic resources and assets. Diplomatic resources include hard power such as economic power and military power and soft power including information, culture, image, the national brand, and the information network. Soft power and smart power are emphasized in the 21<sup>st</sup> century in an era of information and culture. In addition, the national brand and national image are also important diplomatic resources.

Peace public diplomacy should combine hard power with soft power in the cultural sector, such as Korean Wave (Hallyu). The ROK should utilize positive images to appeal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a peace image and culture-rich national imag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further develop the 'K-prevention model,' which has come to the fore amidst the COVID-19 response, into K-human security and the K-peace model and utilize them as assets for peace public diplomacy.

The COVID-19 reflects a dark aspect of globalization, such as wealth inequality, unequal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nd differentiated medical systems. The COVID-19 is a litmus test that puts national response capabilities of the 21<sup>st</sup> century to a test. First, the liberal model (the U.S., etc.) left everything in the hands of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A government without an adjustment and management ability was helpless in the face of crisis. Second, the welfare state model (France,

5 In-taek, Han, "Seeking South Korea-tailored Public Diplomacy Model: Science-based and Tailored Public Diplomacy with the Use of Policy Network," JPI Research Forum, No. 1. (2015) (in Korean)

6 Kwang-chul, Choi, "Diaspora Peace Public Diplomacy: Understanding and Suggestions,"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ub-committee, Second Quarter, 2020 (2020.6.4.)

Spain, and Italy) is facing chaos and disorder due to an inefficient medical welfare system and irresponsible individualism. Third, the authoritarian model (China, Vietnam, and Taiwan) ostensibly seems to have succeeded in the COVID response, but their success was at the cost of a blockade, incorrect information, and a lack of social trust. Besides, this type is not appealing due to a concern about "big brother" becoming a reality.

Korea's K-prevention model is evaluated as a successful model that enables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e foundation of that success has been open information, transparent decision-making, public medical infrastructure, social communication, online network, and civic consciousness. A new model has been created in harmony with the national management system, informatization, social trust, and a mature civil society.

It is imperative to develop the K-human security model and K-peace model building on a K-prevention model and utilize it as assets of peace public diplomacy. With that, the ROK should lead in setting the new agenda of the 21<sup>st</sup> century on the international arena and establish a multi-layered network that implements such an agenda, thereby expanding the horizon of peace public diplomacy.

#### D. Phased Implementation

It is desirable to proceed with peace public diplomacy on the basis of building a consensus. This process consists of a few phases: 1)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2) sharing interest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3) expanding common areas. The first phase of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is a process of elevating mutual understanding on history, culture, and interests. The second phase of sharing interests is a process of identifying a common ground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relevant country and the Korean Peace Process. The phase of expanding common areas is a process of sharing a common perception and common tasks about the Korean Peace Process and East Asia Peace Process.

Peace public diplomacy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and may not likely, go through such phases. However, a macroscopic perspective is required to consecutively build the consensus with such phases in mind.<sup>7</sup>

#### 〈Implementation Phases of Korean Peace Public Diplomacy〉

Phases	Focused Direction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history, culture, interests, etc.)
Sharing interests of the Korean Peace Process	Identifying a common ground between relevant country's interests and the Korean Peace Process
Expanding common areas	Expanding common interest areas (shared perception on the Korean · East Asia Peace Process and tasks ahead)

#### 4. Contents of Peace Public Diplomacy

What kind of issue areas should the Korean peace public diplomacy consist of?

The first content of the Korean peace public diplomacy is to build international consensus on a virtuous cycle of peaceful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nd the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ly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s is closely linked to a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most desirable way is to put into practice the specifics of the Joint Statement of the U.S. and the DPRK at the Singapore Summit (2018.6.12.), such as North Korea-U.S. relations improvement,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denuclearization, and repatriation of remains of US service members who died in the Korean

<sup>7</sup> Jong Chul, Park, et al.,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n Unified Korea and Unification Benefits: At the Level of Region and Neighboring Countries]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2), pp. 293-294. (in Korean)

War. That will mark the beginning of leaving behind the breakdown of the Hanoi summit and building a stepping stone. Once the DPRK-U.S. dialogue makes progress, sanctions may be alleviated and inter-Korean relations could develop in tandem. However, U.S.-North Korea dialogue has been at an impasse ever since the breakdown of the Hanoi summit while inter-Korean relations are bound by sanctions and the COVID-19 crisis. The alternative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 would be to secure maneuvering room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reby managing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urning the current situation around.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resume the U.S.-North Korea dialogue and garner international support on inter-Korean relations in areas such as humanitarian issues, environmental issues, and issues of turning the DMZ into an international peace zone.

The second content of peace public diplomacy is to espouse international support on formulating a virtuous cycle between non-traditional security and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share a plethora of issues ranging from North Korea's nuclear issues to construction of a transport network, energy and resource development, climate change, and human security. Denuclearization and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is the most crucial security issue, but what is equally important is new security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climate, environmental issues, and terrorism. In addition,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logistics · energy network is also a significant issue. New security cooperation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a logistics · energy network could relax military confrontation and generate common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It is necessary to have this perspective in mind in build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for a New Southern Policy and New Northern Policy pursued by the ROK government.

Third, the implementation of the K-human security model and K-peace model could serve as assets for peace public diplomacy. It is required, on one hand, to call for international support on a K-peace model, and on the other hand to expand the consensus on what has been accomplished in South Korea.

A K-peace model can come as an opportunity for new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unctionalism has already reached its limits in that it failed to induce cooperation in the military and political sectors by building on common interests generated by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peace and economy theory, which seeks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reverberations in overlapping areas between peace and economy, has not even gotten off the ground due to North Korea's indifference.

A K-peace model can become a starting point of opening a new horizon in inter-Korean relations. A K-peace model can become a new path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at its focus is on humanitarian cooperation, railway · road connections, public health cooperation, turning the DMZ into an international peace zone, and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nstance, public health facilities, tourism leisure facilities, and an underpinning economic complex can be constructed in Kaesong, a base for the Gyeongui Line, Wonsan, a base for the Gyeongwon Line, and Nampo, a base for West Sea and further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inter-Korean cooperative complex.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K-human security model as a new East Asia cooperation model, thereby expanding the contours of peace public diplomacy. This will create a foothold for new cooperation through a human security cooperation platform in East Asia where security anxiety and economic competition are intertwined. This will also allow parties to share information, seek common response measures, and establish a governance platform that involves the government, business, and the civil sector in preparation for new security threats, such as public health · medical sector, environment, and disaster · catastrophe.

Fifth, the horizon of peace public diplomacy could be expanded into the global level by the ROK's leading role in setting the standard of global cooperation in resetting the world order after COVID-19. With the U.S. and China embroiled in strateg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WHO not stepping forward, the ROK should come forward in crafting new international cooperation norms along with other middle-sized countries. That means that South Korea, going beyond its past role of catching up with advanced countries' models, takes a lead in setting a norm and standard of new order.

---

## 5. Policy Tasks

Implementing Korean peace public diplomacy will require a system, communication tools, governance, and human resources that will enhance the implementation capability.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twork among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and civil groups that are practicing peace public diplomacy. It is important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s that multiple players are involved in a non-systemic manner without cooperation. It is crucial for the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Foundatio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research institutions, and NGOs, to create a network. A systematic consultation is required on sharing information and data, dividing the roles, selecting specialized areas, and cooperatively working on common issues between each organization.<sup>8</sup>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discourse on peace public diplomacy and circulate i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module on regionally-tailored contents should be formulated, including the meaning of peace public diplomacy, its concept, and targets' issues. Such a discourse should be translated into major languages and disseminated to neighboring countries, the U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rd, various communication tools should be utilized. A discourse should be promoted and spread not only through booklets, and pamphlets, but also through videos, YouTube and video conference. Contact tools should be diversified, such as emailing opinion leaders and new gener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osting peace events.

Fourth, a glob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for peace public diplomacy. There should be a central tower that will collect information on major international exper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ystematically manage them. Especially, it is advisable to look for experts with various backgrounds, such as rising scholars, younger generations, and artists, and build a network with them.

Fifth, the ROK should nurture and support experts both at home and abroad who could practice Korean peace public diplomacy. That will require the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experts on peace public diplomacy. A seminar, workshop, and academic conference should be held both at home and abroad with the presence of experts on the Korean Peninsular issues and a short-term education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them. Moreover, a domestic education program should be operated to induce people to become interested in peace public diplomacy.

# 발표자 Presenter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Hyun-Wook KIM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KNDA)

김현욱 박사는 현재 국립외교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한미동맹, 북미관계, 동북아 안보 등이다. 그는 과거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합참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브라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남가주대학교에서 포스닥으로 근무했다.

Hyun-Wook Kim is currently Professor and Director-General at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His research areas include US-ROK alliance, US-DPRK relations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He was an advisory member fo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is now a standing member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e is also a senior advisor for the Joint Chiefs of Staff. He was a visiting scholar at UC San Diego in 2014. He has finished his Ph.D. and M.A. in political science from Brown University, and worked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s a postdoctoral fellow. He received his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He can be reached at [hwkim08@mofa.go.kr](mailto:hwkim08@mofa.go.kr).

---

# The Assessment and Tasks of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Focused on Diplomacy in the United States

Kim, Hyun-Wook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NDA)

---

## 1.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 o Historically, South Korea has supported Korean unification based on a confederal system.
  - In 1972, North and South Korea announced the July 4 North-South Joint Communiqué presenting the guiding principles of unification—independence, peace, and grand national unity (this was later changed to democracy).
  - In 1982,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nnounced a Korean national reconciliation and democratic unification plan which stated, "Unification shall be achieved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shall be enact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nd peaceful means that reflect the opinions of the entire Korean nation."
  - The plan was followed in September 1989 by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with principles of independence, peace, and democracy. According to this formula, the two Koreas would establish a national community charter and an interim, confederal system at an inter-Korean summit meeting. Thereafter, the confederal system would enact a unification constitution and set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s for unification, before eventually achieving national unification through a general election.
  - The formula was succeeded by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under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hich consisted of three phase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 North-South confederation (i.e. "Korean Commonwealth"); and a unified state.
  - Afterward, President Kim Dae-jung presented his own vision of Korean unification called the federal republic system, or "three-stage unification plan." According to the plan, unification would be achieved by a first stage of forming a North-South confederation that evolves into a second stage of a federal republic, before finally reaching a third stage of a unified state based upon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After being inaugurated as president, Kim accepted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 o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has two characteristics. The first is that it assumes the current South Korean system, based on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will be the ultimate outcome of unification.
  - In essence, the confederal approach is premised on achieving unification after having maintained the "two-states-two-systems" as a transitional institution. This proposition intends to achieve economic integration first based upon two different political systems.
  -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functionalism. A functionalist approach argues for achieving economic integration by means of non-political interests shared by two states. This approach assumes a spill-over effect from economic integration into political integration.
  
- o North Korea's position toward the federal approach has argued that there should be measures dealing with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first.
  - In the North's view, the unification process can be initiated only after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are settled. This suggests that the two Koreas should first reach the one-state-two-systems status before achieving political integration.
  - Based upon this approach, North Korea presented its unification plan, which was called the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at the 6<sup>th</sup>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1980. This plan stated that "The North and the



South will admit and accept each other's ideologies and systems as they are. This attitude would pave the way for the North and the South to form a unified national government in which they would equally participate. The North and the South would build a federal republic where they have the same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and exercise self-governance in their respective regions, while working toward a process to ultimately achieve unification."

- o The unification policy of North Korea has two characteristics.
  - First, it is a federal approach that prioritizes the resolution of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North Korea has thus presented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South Korea,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s preconditions for unification. In other words, North Korea argues that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be resolved first, followed by expande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 Second, North Korea's approach does not presume unification as a monistic one-system state, and instead acknowledges a federal system as the final outcome of unification, while leaving issues of systemic integration for future generations.
  
- o In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in 2000, President Kim Dae-jung and Chairman Kim Jong-Il agreed that there are common elements in the South's confederal system and the North's formula for a looser form of federation.
  - The two approaches share commonalities in that they all pursue gradual and phased unification.
  - However, both approaches have problems in how to achieve political integration. North Korea's federal approach does not state specific ways to achieve political integration after the two Koreas are unified through a "one-state-two-systems" approach. The formula leaves unanswered questions: how can a federal state with two different systems manage the state?
  - The South's confederal formula on the other hand presumes a one-state-one-system status as the eventual outcome of unification. Still, political integration will not be easy to achieve with this functional approach to unification.
  
- o Problems of the functional approach
  - Recently, South Korea's functional approach has shown its limitations. The effects of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do not automatically spill over into political integration. Economy and politics belong to different domains, work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and pursuing different interests.
  - The "New Eastern Policy," which paved the way for German unification, aimed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mindset of the East German people through contacts, rather than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 Recently, the U.S. has implemented its policy toward China under the expectation that a freer economic system would bring about changes in the political system of China. However, the policy ended in failure since it fell short of bringing about change in the mindset of the Chinese people. This shows that changing the mindset is more important, and that economic cooperation is nothing but a means to an end.
  
- o Differences in conditions and environments for unific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 First, unlike Korea, Germany did not suffer internal warfare and thus could maintain strong national homogeneity. Even when the Cold War began and the Berlin Wall was being built in 1961, the East and West German people consistently raised questions as to why their country should be divided. The German people were disturbed by their national homogeneity being undermined by the Cold War regime.
  -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national homogeneity was seriously damaged by the Korean War. Even in this post-Cold War era, North'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has continuously reinforced the history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 Second, the East German people were exposed to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to a significant degree, and in

---

particular, civilians could even travel via a third country to visit relatives in West Germany—a striking difference with North Korea today. North Korea, in contrast, completely blocks and controls the inflow of information. This makes it difficult for any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North, similar to West Germany's New Eastern Policy, to succeed.

- Lastly, before being divided into two states, Germany experienced democracy.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after World War I, Germany built the Weimar Republic and promulgated the Weimar Constitution, which stipulated popular sovereignty and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is experience of democracy provided a basis for the East German people to oppose the socialist regime later.
-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devise a more practical unification policy tailored to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needs to exercise the flexibility to combine different policies, rather than taking an "all or nothing" approach.

## 2. The U.S. and German Unification

o The U.S. supported German unification, as it believed a unified Germany would be beneficial to its own interests.

- In a speech to a European summit meeting, President Bush reaffirmed his support for German unification and announced four principles for unification.
- First, the U.S. should respect Germany'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out endorsing/excluding any particular vision of unification. Second, unification should occur within the context of Germany's continued membership in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nd an increasingly integrated European Community, and with due regard for the leg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ts allies. Third, in the interests of general European stability, moves toward unification must be peaceful, gradual, and part of a step-by-step process. Lastly, on the question of borders, the principles of the Helsinki Final Act should be followed and the inviolability of European frontiers, recognized. What was most important to the U.S. was the continued membership of a unified Germany in NATO.

o In 1990, German Chancellor Helmut Kohl and Soviet leader Mikhail Gorbachev reached a compromise on six issues.

- 1) A unified Germany would maintain its military forces to no more than 370,000.
- 2) A unified Germany would not produce nor possess nuclear, biological, or chemical weapons.
- 3) Soviet forces would be stationed o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East Germany until the end of 1994.
- 4) Until the completion of the withdrawal of Soviet forces from the territory of former East Germany, NATO forces would not be stationed in that territory.
- 5) A unified Germany should bear the cost of the withdrawal of Soviet troops.
- 6) A unified Germany should conclude an economic cooperation treaty with the Soviet Union.

o The U.S. believed that it would have interests in a unified Germany.

- First, economic development of the eastern part of a unified Germany would boost U.S. exports to Germany as well as its investments there.
- Second, the "Two Plus Four Treaty" stipulated that only German forces, not NATO troops, shall be stationed in the former territory of East Germany. NATO troops would be allowed in East Germany only after the withdrawal of Soviet troops. Also, a unified Germany could not manufacture, possess, or control nuclear, biological, or chemical weapons. This would clear the way for the U.S. to increase its influence in NATO.
- Lastly, Germany wanted to develop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into a regional body and expand its role in regional security, a position that would collide with the U.S. position. The U.S. wanted to expand the role of NATO rather than CSCE.

### 3. U.S. Interests in the Korean Peninsula

- o Historically, the U.S. has been supportive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Clinton supported 'a peaceful unification on the basis of terms acceptable to the Korean people.'
  - In a summit meeting in 2009,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esident Barack Obama made it clear their support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a market economy and liberal democracy.
  - In 2012, President Park Geun-hye and President Barack Obama reiterated their support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 free market economy, and denuclearization.
  
- o China supports 'peaceful, independent, gradual, and denucleariz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China supports peaceful unification because it does not want a unified Korea to hinde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 By supporting "independent unification," China is wary of the possibility of a unified Korea tilting toward the U.S.
  - By supporting gradual unification, China wants to prevent Korean unification from undermining regional stability.
  - By supporting denuclearized unification, China intends to remove the U.S. nuclear umbrella over a unified Korea.
  
- o Even if the four conditions are met, however, it is still unclear whether China will support Korean unification.
  - From China's perspective, Korean unification means a new unified state being created near its border. This will disturb China even if there would be no more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Chinese requirement of 'a gradual Korean unification that does not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could work against the unification process. From China's perspective, the creation of a unified Korean state based on liberal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constitutes an enormous change to the reg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presents risks for regional stability.
  
- o According to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U.S. has several priorities in it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1) Prevent horizontal nuclear proliferation, 2) Prevent vertical nuclear proliferation, 3) Denuclearize, 4) Prepare contingency plans, 5) Promote engagement in North Korea, and 6) Improve the situation for the North Korean people.
  
- o According to multiple sources, U.S. interests in a unified Korea are as follows:
  - 1) The major interest the U.S. has in the Korean Peninsula is to remove or prevent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n a contingency situation, the major U.S. concern is to prevent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om spreading to the rest of the peninsula. Thus, unification can block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n other words, unification can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2) A market economy-oriented unified Korea will contribute to U.S. interests. There will be a demand for U.S.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former North Korea, a development that could further U.S. economic interests.
  - 3) A unified Korea built on a market economy and liberal democracy will provide the U.S. with momentum to spread its values globally.
  - 4) Following Korean unification, the ROK-U.S. alliance will take on new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maintaining regional order and stability. The alliance will serve as a critical asset for the U.S. in its policy toward Asia and will help it maintain its global superpower status.
  - 5) As the possibility of all-out warfare will disappear, the U.S. will be relieved of the burden to put contingency plans in place.

- 
- o Nevertheless, the U.S. has several concerns with regard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First, the U.S. is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weakening of the ROK-U.S. alliance. As there will be no more threats from North Korea, a unified Korea should consider new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is case, considering its relations with China, a unified Korea may want to adjust the size of U.S. force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wants the ROK-U.S. alliance after unification to serve as a mechanism to respond to the common threat: China. The possible weak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a possible reduction in the contributions of an ally in the region constitutes a serious concern for the U.S.
    - Second, the U.S. is wary of a unified Korea pursuing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its territory and taking a neutral pos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U.S.-China competition after Korean unification may prompt a unified Korea to pursue neutrality, possibly resulting in the collapse of the ROK-U.S. alliance. This would invalidate the U.S. security provision and, amid a military buildup in both China and Japan, give rise to security anxiety in a unified Korea. As has been the case for U.S. concerns with respect to a unified Germany that pursued neutrality, a unified Korea could also pursue a military build up,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 4. Tasks for Korea's Unification Policy

##### 1) Need for a More Active Unification Policy

- o South Korea should move away from a policy framework of choosing between unification and "peacefully managed" division, and instead adopt a more active unification policy.
  - Even though a peace agreement is needed to terminate the armistice status of the Korean War, this will not be an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unification.
  - A more active unification policy should be chosen over "peaceful management" of a divided nation. To maintain peace in a divided nation is to avoid genuine pursuit of unification, and only replaces an armistice with a state of peace, which in turn also incurs too much costs.
  - North Korea may demand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South Korea as a condition to conclude a peace agreement. This is difficult to accept given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 Although peaceful management of a divided nation is important, the time has now come to pursue a more active policy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 2) Need to Prepare for Unexpected Unification Opportunities

- o With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underway, unification will not be easy to achieve. As was demonstrated in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will be possible only when the influence of either the U.S. or China shrinks sharply.
  - As the U.S. and China are increasingly engaged in competition due to China's rise, they prefer to maintain the status quo. In addition, their national power seems more or less equal. The kind of diplomatic efforts Germany pursued for unification at that time do not seem feasible in the current context of U.S.-China rivalry.
  - Therefore, the unification policy and unification diploma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of a nature to prepare itself to seize opportunities for unification in the near future rather than to directly influence the process of unification.

3) Need to Strengthen Public Diplomacy for Unification in the U.S.

o The atmosphere in Washington is indifferent.

- With concerns over South Korea allegedly tilting toward China, Korea's ally status has gradually declined. What is particularly worrisome are the moves to disregard South Korea's strategic importance within the U.S., which will be unfavorable to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toward the U.S. later on.
-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in East Asia, the U.S. cannot be assured that Korean unification, along with China's rise, will be helpful to its hegemonic power in the region. There is also emerging concern in Washington that a unified Korea could be pro-Chinese rather than pro-American. This is a situation that some say could make the U.S. favor the status quo over unification.
- To deal with this situation, diplomatic efforts toward U.S. lawmakers need to be strengthened. A plausible channel would be the Korea Caucus, a group of pro-Korean lawmakers in Washington.
-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prepared for a shift in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next U.S. administr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work with the next U.S. administration to maximize commonalities in national interests shared by both South Korea and the U.S. By doing so, South Korea can assure the U.S. that a unified Korea will continue to maintain a solid alliance with the U.S.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

John DELUR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SIS

존 델러리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 교수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제협력학과장, 동 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교(UIC) 학부 과정 학과장, 오세아니아 연구센터 초대 국장을 맡고 있다. 오르빌 쉘(Orville Schell)과 공저로 *Wealth and Power: China's Long March to the Twenty-first Century*를 집필했으며 현재는 냉전 초기 미중 관계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델러리 박사는 2010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의 한반도 문제 관련 글은 *Foreign Affairs*, *38 North*, *The New York Times* 등에 게재되었다. 델러리 박사는 계간지 *Global Asia*의 부 편집장을 역임하고 있다.

델러리 박사는 미국외교협회(CFR), 미중 관계 국가위원회, 북한 국가위원회의 회원이며 태평양 센추리 연구소 이사, 아시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미국 외교 정책 국가위원회 리더십 위원회 회원, 전략 및 국제학 센터의 부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델러리 박사는 아일랜드 외교 고문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며 동아시아의 정부, 군사, 기업, 시민사회단체 문제에 관한 분석을 전세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John Delury is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chair of the Master's Program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GSIS, chair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in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s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UIC), and founding Director of the Center on Oceania Studies. He is the author, with Orville Schell, of *Wealth and Power: China's Long March to the Twenty-first Century*, and is working on a book about US-China relations in the early Cold War. Based in Seoul since 2010, his writing on Korean Peninsula affairs appears in scholarly journals as well as *Foreign Affairs*, *38 North* and *The New York Times*. He is associate managing editor of the quarterly journal *Global Asia*.

John is a member of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Pacific Century Institute board member, Asia Society senior fellow,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leadership council, and Center on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djunct fellow. He is a member of the Republic of Ireland's foreign affairs advisory network and is invited to offer his analysis on East Asian affairs with government, military, corporate,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globally.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Dong Ryul LEE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이동률은 1997년부터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대중국학회장을 역임하였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1996년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5년에는 컬럼비아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외교정책, 대외관계, 중국의 민족주의와 소수민족문제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1990년대 이후 중국외교 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현대중국연구> (2019),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2019),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한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2017) 등이 있다.

Dong Ryul Lee has been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since 1997. He was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in 2018 and now serves as a policy advisor to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hi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and Chinese nationalism and minorities. He was a visiting scholar at the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from 2005 to 2006. He received his Ph.D. i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Peking University.

# 토론자 Discussant



**최은봉**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unbong CHOI**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최은봉(Eunbong Choi, 崔恩鳳)은 2000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 학사(1981년)와 석사(1983년)를 마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1991년).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거쳤고(1991년-2000년)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지원으로 일본 츠크바대학 정치경제학부 방문 연구교수를 지냈습니다. 현대일본학회 회장, 한국사회역사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국무총리실 국정평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분과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재무처장, 사회과학대학장, 이화사회과학원장, 정책과학대학원장을 지냈습니다.

Eunbong Choi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Korea. She received a Bachelor(1981) and a Master(1983) in Politic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In 1991, she got a Ph.D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majoring in Comparative Politics and East Asian Regional Studies. She taught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the Kang Won National University in Chun Chen, Korea from 1991 to 2001 and was a visiting scholar as a fellow of the Japan Foundation in the Tsukuba National University in Tsukuba, Japan. She became president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o-Historical Studies. She was vice-presidents of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International Studies. She served as a evaluator for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and a member of Divisional Commission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or the Inter-Korea under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She worked for the Ewha Woman's University as the Dean of Financial Affairs, the President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the Presid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s, and the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for the Social Sciences.







# Session 10-2

## 변화하는 한반도 국제관계

##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on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Organized By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좌장  
Moderator

하네스 모슬러 뉘스브룩 에센대학교 교수, 독일  
Hannes MOSLER Professor,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발표자  
Presenters

버지니 그레즐직 아스톤대학교 교수, 영국  
Virginie GRZELCZYK Head of 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ston University, UK

에릭 발바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독일  
Eric J. BALLBACH Post-Doctoral Researche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토론자  
Discussants

에드 그리피스 센트럴랑카셔대학교 교수, 영국  
Ed GRIFFITH Deputy Head of School,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장희경 뉘스브룩 에센대학교 교수, 독일  
Hee Kyoung CHANG Lecturer,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론니 엣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Lonnie EDGE Assistan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라 손 셰필드대학교 교수, 영국  
Sarah SON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Sheffield, UK

마르코 밀라니 볼로냐대학교 교수, 이탈리아  
Marco MILANI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Bologna, Italy

니콜라스 레비 폴란드사회과학원 교수, 폴란드  
Nicolas LEVI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Mediterranean and Oriental Cultures, Poland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10-2)

## 변화하는 한반도 국제관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진전되었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중패권 경쟁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한반도 정세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하는 한반도 국제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on Korean Peninsula

Since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ter-Korean relations have progressed, and lunched for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between US and DPRK. However, it is difficult for predicting the Korean peninsular's situation due to strategic competition both US-SINO and spread of Covid-19 virus. Therefore, it is time to discuss new direct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 좌장 Moderator



하네스 모슬러 뒤스부르크 에센대학교 교수, 독일

Hannes MOSLER Professor,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하네스 모슬러 교수는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 연구소(IFP)와 동아시아학 연구소(IN-EAST)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정치 사회에 중점을 둔 동아시아 사회과학 석좌 교수를 맡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9년부터 베를린 자유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에서 강사와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를린 자유 대학교 동아시아 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2019년 동 대학 한국학 연구소의 한국 정치학 교수로 부임해 2020년까지 재직했다. 그의 주요 연구 관심사는 한국의 정당, 정치 제도, 정치적 기억, 헌법, 시민교육 및 이들에 관한 비교 연구이다. 최근 발간된 (공동) 저서로는 <한국의 민주주의 도전(South Korea's Democracy Challenge)>(Peter Lang 2020), <한국 민주주의의 질>(Palgrave Macmillan, 2018)이 있으며 저널에 발표된 기고문으로는 <남남갈등-남한 정치 양극화의 당파적 언론 프레임>(Korea Observer, 2019)과 <광주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기억을 둘러싼 투쟁과 대통령 연설>(S/N Korean Humanities, 2020) 등이 있다.

Professor Hannes B. Mosler holds the chair for Social Sciences of East Asia with focus on Politics and Society of Korea at th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where he is affiliated with the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IfP) and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IN-EAST). He received his PhD from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eld positions of a lecturer and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KS), Freie Universität Berlin since 2009. From 2013 to 2019 he was Assistant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of FU Berlin, before he assumed the post of Professor for Korean Politics at IKS in 2019 of the same university until 2020. His major research interests are political parties, political systems, political remembrance, constitutional law, and civic education in Korea and comparatively. Recent publications include (co-)edited volumes such as South Korea's Democracy Challenge (Peter Lang 2020)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Korea (Palgrave Macmillan, 2018) as well as journal articles such as "Namnamgaldüng – Partisan Media Framing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2019) and "The Contested Political Remembrance of the Kwangju Uprising and Presidential Speeches in South Korea" (S/N Korean Humanities, 2020).

# 발표자 Presenter



버지니 그레즐직 아스톤대학교 교수, 영국

Virginie GRZELCZYK Head of 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Aston University,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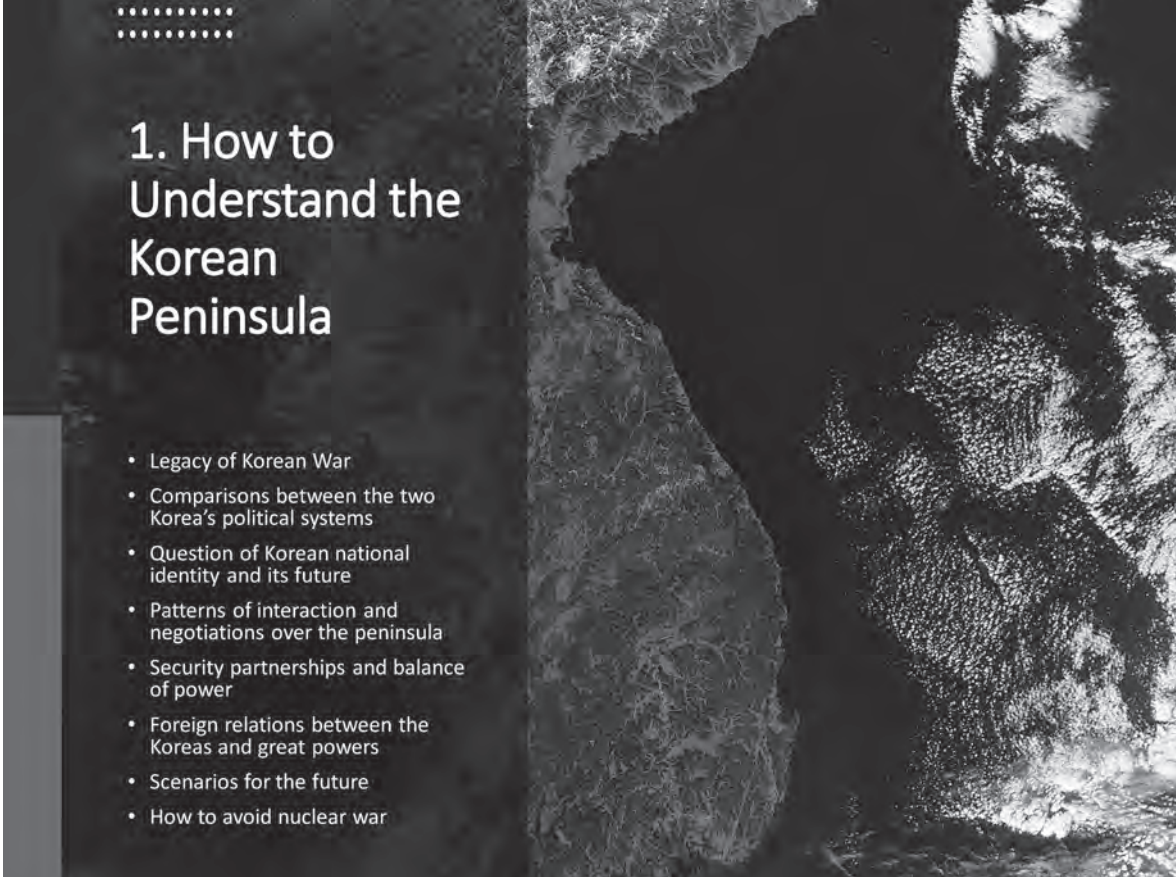
버지니 그레즐직 박사는 애스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 및 인문학부의 학장이다.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이화 대학교에서 외교 안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레즐직 박사의 연구는 한반도 전체의 안보관계(특히 북한)에 중점을 두고 있다. 6자회담, 북한의 에너지 안보 딜레마, 통일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정체성, 동북아 위기, 특히 북한의 대외관계 등에 관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Palgrave 출판사가 출판한 <북한의 신외교: 21세기 정치적 고립>를 꼽을 수 있다. 그녀의 최근 연구과제는 갈등 및 갈등 이후 국면에서의 장난감의 정치에 관한 내용으로 레버홀름 연구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Dr Virginie Grzelczyk is a Reader (Profess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Aston University, and the Head of the 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She holds a MA and PhD in Government and Politics from the University of Maryland, and a MA in Diplomacy and Security from Ewha University. Virginie's research focuses on security relationships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especially about North Korea, with publications spanning the Six-Party Talks process, North Korea's energy Security Dilemma, Korean identity in the context of reunification, the concept of crisis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especially explored in her book North Korea's New Diplomacy: Challenging Political Isolation in the 21st Century published by Palgrave. Her latest project focuses on the Politics of Toys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pheres and has been supported by a Leverhulme Research Fellowship.



## Changing dynamics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Security

Dr Virginie Grzelczyk  
Aston University, Birmingham, United Kingdom



.....  
.....

## 1. How to Understand the Korean Peninsula

- Legacy of Korean War
- Comparisons between the two Korea's political systems
- Question of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its future
- Patterns of interaction and negotiations over the peninsula
- Security partnerships and balance of power
- Foreign relations between the Koreas and great powers
- Scenarios for the future
- How to avoid nuclear war






## 2. The concept of 'Frozen Conflict'

“protracted and post-war conflict process that has failed to reach a peaceful and stable stage between contending actors”(Ludwik and Smetana 2018)

- 3 ways frozen conflicts can evolve:
  - Peaceful Thawing: diplomacy and negotiations are favored
  - Violent Thawing: return to a state of violent and major warfare
  - Conflict withering: changing circumstances make conflict disappear



## 3. What does this mean for the two Koreas?

Peaceful Thaw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rmistice as root cause</li><li>• Need for security governance</li></ul>
Violent Thaw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Role of nuclear weapons</li><li>• Shifting alliances and defence commitments</li></ul>
Conflict Withe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Interdependence</li><li>• Acceptance of a level of change within DPRK society</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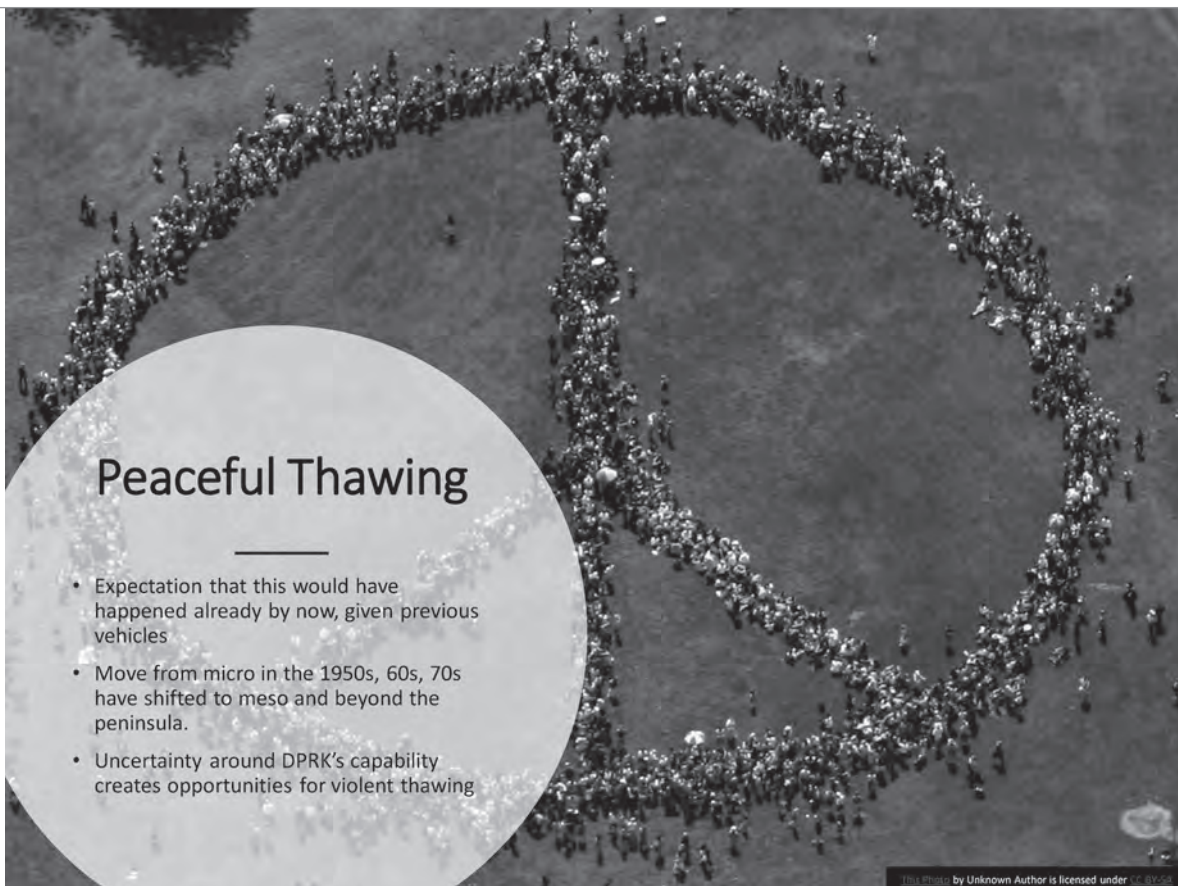


#### 4. Major Events over the Korean Peninsula (1950-2018)

Micro: actors' behaviour: clash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relations with the significant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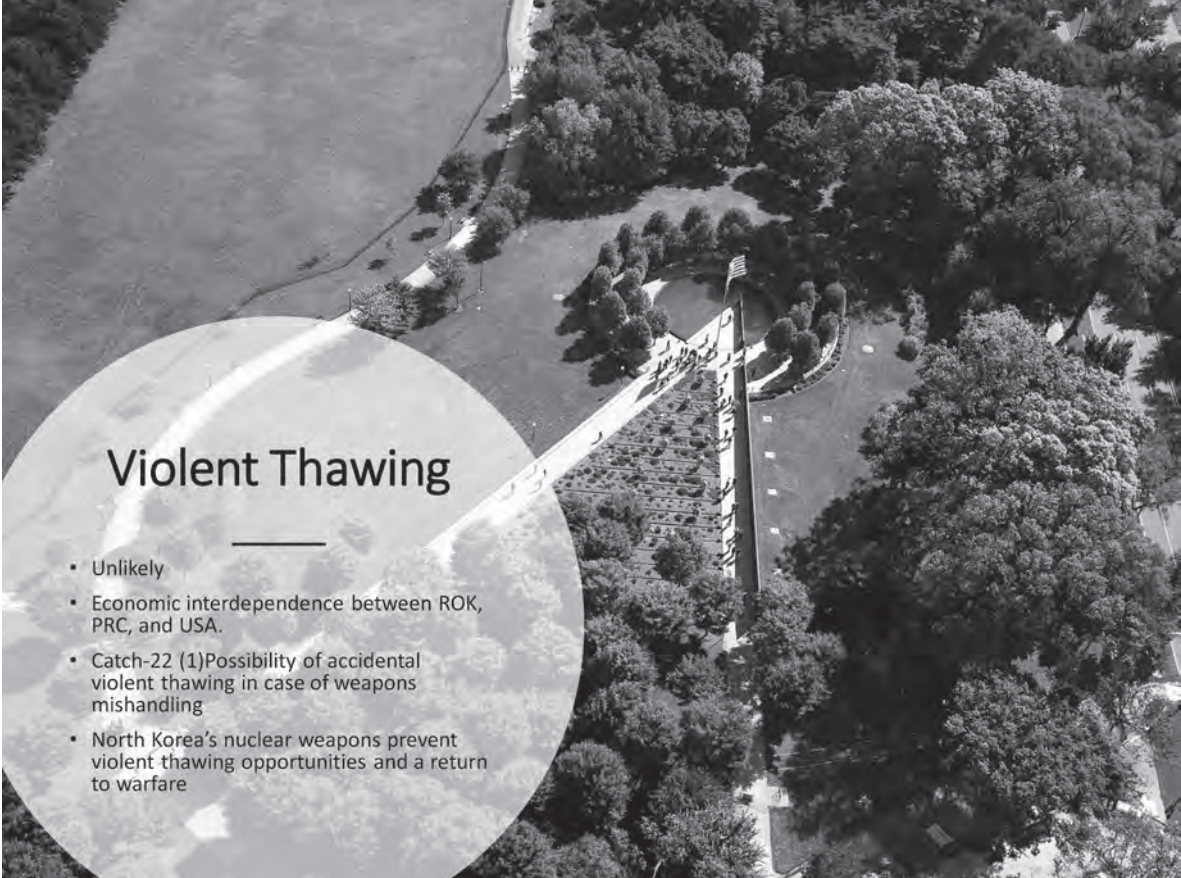
Meso: sectorial policy regimes, bilateral capability

Macro: global security governance, non-proliferation and UN-sanctioned



### Peaceful Thawing

- Expectation that this would have happened already by now, given previous vehicles
- Move from micro in the 1950s, 60s, 70s have shifted to meso and beyond the peninsula.
- Uncertainty around DPRK's capability creates opportunities for violent thawing



## Violent Thawing

- Unlikely
-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ROK, PRC, and USA.
- Catch-22 (1) Possibility of accidental violent thawing in case of weapons mishandling
-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event violent thawing opportunities and a return to warfare



## Conflict Withering

- Catch 22 (2): idea of violent thawing possibility prevents conflict withering
- Macro sanction-level curtail DPRK's opportunities for in-depth change
- Little hope for change if withering not possible

# 발표자 Presenter



**에릭 발바**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독일

**Eric J. BALLBACH** Post-Doctoral Researche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에릭 발바 박사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의 "북한 및 국제안보" 연구 부서의 책임자로 있다. 베를린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의 한국 재단 방문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발바흐 박사의 연구는 남북한의 외교안보정책,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한국-유럽 관계 및 한반도에서의 정체성 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저술로는 통일연구원 영문저널(Vol. 29, No. 1, 2020, pp. 77-10)에 게재된 "2 트랙을 통한 사회화? 북한에 대한 유럽의 1.5 트랙"과 美 외교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된 "끝나지 않은 전쟁: 북한에게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발바흐 박사는 독일 의회와 각부 장관 및 EU에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몇몇 비공식 트랙 1.5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Dr. Eric J. Ballbach is Director of the Research Unit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Security" at Freie Universität Berlin's Institute of Korean Studies. He also serves as Korea Foundation Visiting Fellow at the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in Berlin. Dr. Ballbach's research focuses on North and South Korean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North Korea's engagement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Korea-Europe relations and identity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Among his latest publications are "Socialization on a Second Track? European Track-1.5 Initiatives with North Korea",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9, No. 1, 2020, pp. 77-10) and "A Perpetual Struggle: Why the Korean War did not end for North Korea", published by The National Interest. Dr. Ballbach advises the German Parliament and various Ministries as well as the EU on Korea-related issues and he participates in several informal Track 1.5 initiatives in Europe and Asia involving high-ranking representatives from the DPR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 North Korea's Emerging Nuclear State Identity

Discursive Construction & Performative Enactment

Dr. Eric J. Ballbach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Korea Foundation Visiting Fellow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 Structure of the presentation

- (1) Theoretical Considerations: Performativity, the State & the Foreign Policy/Identity Nexus
- (2)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a Nuclear State Identity in North Korea
  -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Construction
  -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Construction
- (3) Performing the Nuclear State Identity
  - Performing a Spectacle: North Korea's Nuclear Tests as Performative Enactments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 Institutionalizing Identity: Enacting the Nuclear State Identity through Foreign and Security Policy Doctrines

# Introduction

## Introduction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WP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 Main Objective

- Analysis of North Korea's emerging nuclear state identity on two levels: discursive constructions and performative enactments

### Main arguments

- To P'yongyang, the nuclear weapons program has significance well beyond its military, economic, and political-diplomatic aspects; it has become the most crucial identity project of and for the North Korean state in the post-Cold War era,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an authoritative nuclear state identity that is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explored
- The ongoing nuclear conflic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vides a performative space in which the DPRK stages its identity politics and explores its identity as a nuclear weapons state

# Theoretical Considerations: Performativity and the Foreign Policy/Identity Nexus

##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 On the Concept of Performativity

- Roots in humanities, esp. linguistics and linguistic philosophy
- Austin's concept of "performative utterances" describes situations "in which saying something is doing something, rather than simply reporting on or describing reality"
- Butler (1990) locates the performative in the repeated, public and "active performance (*Aufführung*) and staging (*Inszenierung*) of gender" (Volbers 2011, 145) → Identity is *performed*, not merely *possessed*

### The State and the Foreign Policy/ Identity Nexus


- The state has no pre-discursive identity prior to or apart from the ensemble of spatial and temporal enframing practices which bring the state into being (Campbell 1998, 3)
- Foreign policy constitutes a “boundary-producing political performance” central to the (re-)production of the state and identity in whose name it operates (Ashley 1987)
- Identity both makes possible certain articulations of foreign policies, which simultaneously reassure the identity at stake

##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 Discursive Construction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Construction

- Iraq War as a turning point in North Korea’s security discourse
- In February 2005,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publically declared to have successfully developed nuclear weapons
- First nuclear test in Oct. 2006 as the DPRK’s ‘nuclear breakout’
  - Identity construction based on a narrative of defense and a logic of deterrence
- In the critical few years since 2008, the identity of North Korea’s leadership was fused with the image of a nuclear state

## Discursive Construction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Construction

- Dual representation of the DPRK as a responsible and exceptional nuclear power (e.g. “Nuclear Posture,” April 2010)
- Following Kim Jong Il’s death in 2011, his legacy was immediately inked to the state’s nuclear weapons status
- In 2012, North Korea amended its constitution, thereby constitutionally codifying its self-proclaimed status as a nuclear weapons state [*haekpoyuguk*]

## Discursive Construction

### Main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Construction: The Writing of Self and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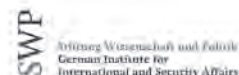
-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the NSI is permeated with constructions of Self and Other(s), with the boundary produced between the DPRK and the U.S. being particularly significant
- NSI construction simultaneously essentializes 'North Korean-ness' as the binary opposite of 'U.S.-ness' & enumerates the character of each realm by inscribing a hierarchical order
- Diplomatic encounters with the U.S. are thus explained in term of a "diplomatic war" → how to narrate latest summit meetings?

## Discursive Construction

### Main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Construction: The Writing of Danger and (In-)Security

- Parallel to the 'logic of deterrence,' North Korea's nuclear strive is also based upon a 'logic of escalation' inherent in the NSI
  - Discourses of danger establish inside/outside boundaries by providing the North Korean state and people with a sense of who and what 'they' are by contrasting who or what 'they' are not and what 'they' have to fear
- North Korea's NSI discourse does not just identify a pre-existing threat to the Self against which the state protects it; by naming dangers as such, the discourse co-constitutes and re-creates the threat in itself, and it informs governmental practices accordingly

## Discursive Construction



### Main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Construction: The Writing of Danger and (In-)Security

- Constructions of threat thus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as they are a necessity of the North Korean state for the constant (re-) production of danger rather than the state's mere response to danger
- Jean Delumeau: while danger can be and indeed often is experienced negatively, it may also be a creative force, "a call into being" that provides access to the world

# Performing the Nuclear State Identity

## Performative Enactment

### Performing a Spectacle: North Korea's Nuclear Tests as Performative Enactments of the Nuclear State Identity

- 'Performative significance' of the tests is located in the very act of materializing its (discursively constructed) nuclear state identity through the theatrical staging of foreign policy
  - As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a nuclear weapons state identity necessitates performative enactment in order to become meaningful, the nuclear tests serve as materialization of an identity trait that, until October 2006, was explored only on the discursive level

## Performative Enactment

### Institutionalizing Identity: Enacting the Nuclear State Identity through Specific Foreign and Security Policy Doctrines

- Foreign and security policy doctrines are influential articulations of North Korean intent and practice in the nuclear issue
  - these documents furnish identity and security narratives and they are, therefore, "performative, constituting a particular order and its corresponding subjects" (Wibben 2011, 39)
  - these doctrines maintain a mutually constitutive relation with identity, for they articulate statecraft and thereby reify identity
  - KJU undertook several key steps to institutionalize the DPRK's nuclear status by revising the constitution, passing new laws, and establishing new government organizations with the mandate to advance the nuclear weapons program

# 토론자 Discussant



에드 그리피스 센트럴란카셔대학교 교수, 영국

Ed GRIFFITH Deputy Head of School,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에드 그리피스 박사는 센트럴 란카셔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아시아태평양학 프로그램들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끈 후 동 대학의 인문·언어·지역학부의 부학장을 맡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 특히 중일 관계와 역내 역할 변화에 대한 중국의 접근방식을 주로 연구했다. 박사는 기존 국제관계 이론들을 변용하여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발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글을 기고했으며, 2020년 센트럴 란카셔 대학교에 개설될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개발했다.

Dr Ed Griffith is the Deputy Head for Students and Teaching of the School of Humanities, Language and Glob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a position he took after a number of years leading the highly successful Asia Pacific Studies programme at the university. Ed's research interests are mainly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in particular the Sino-Japanese relationship and China's approach to its own changing role in the region. He is interested in exploring how established IR theories can be adapted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China's behaviour in developing its relationships with neighbouring countries. He has also written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South Korea as well as inter-Korean relations. In 2020 he devised a soon-to-be-launched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 토론자 Discussant



**장희경** 뒤스부르크 에센대학교 교수, 독일

**Hee Kyoung CHANG** Lecturer,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장희경은 독일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강사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베를린 자유 대학교에서 한국학 연구 관리자 겸 강사로 일했다. 2014년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체제의 변화와 규범의 동학: 공중보건 관련 TRIPS협정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석사 논문을 위해,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을 연구하였다. 그녀의 연구는 국제관계의 틀에서 본 북한 정치 분석, 북한 이슈에 관한 남한 내 갈등 및 한반도 평화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사회주의 이행에 기초한 북한 정치, 동북아와 전세계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냉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

Hee Kyoung Chang is a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Germany. From 2011-2019, she had worked as a research manager and lecturer in the Korean studies at the Freie Universität Berlin. She completed her Ph.D. in the political science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2014 with the thesis of international regime change and the norm dynamics in the TRIPS agreement. As a master thesis, she researched on the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gainst the USA. Her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North Korean politics from the international relations perspective, inter-South Korean conflicts on the North Korean issue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cently she is interested in North Korean Politics based on transition of socialism,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st-Asian and global context.

# 토론자 Discussant



론니 엣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Lonnie EDGE Assistan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론니 엣지 박사는 한국외국어대학 통번역대학원 조교수이다. <North Korean Review>와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의 편집간사를 맡고 있으며, 남북문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국제관계이론 및 정체성 정치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Dr. Lonnie Edg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e is also the Managing Editor at North Korean Review and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Korean Relations,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eory, and Politics of Identity.

# 토론자 Discussant



사라 손 셰필드대학교 교수, 영국

Sarah SON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Sheffield, UK

사라 손 박사는 셰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 강의(부교수)를 맡고 있다. 2014년 동양아프리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고려대 아시아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비영리 부문에서 비정부기구의 연구 이사로 활동하는 등 한국에서 5년간 근무했다. 그녀의 연구는 주로 국제관계와 정치에 관한 것이며, 현대 남북한 사회, 정체성, 민족주의, 이주 및 디아스포라, 인권, 안보, 평화구축,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의 주제에 천착하고 있다.

Dr. Sarah A. Son is a Lecturer (Assistant Professor) in Korean Studies in th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She earned her PhD at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in 2014, before spending five years working in South Korea, first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at Korea University's Asiatic Research Institute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n in the non-profit sector where she served as Research Director of an NGO. Her research is primaril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s, and focuses on themes including contemporary North and South Korean society, identity, nationalism, migration and diaspora, human rights, security, peacebuilding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마르코 밀라니** 볼로냐대학교 교수, 이탈리아

**Marco MILANI**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Bologna, Italy

마르코 밀라니 박사는 볼로냐 대학교 예술학과 조교수로 있다. 전에는 셰필드 대학 동아시아학과 강사,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 및 동 대학 국제관계학과의 강사로 근무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통일평화연구원(한국)과 라이든 대학교 지역학연구소(네덜란드)에 방문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남북한 외교정책, 현대사 및 남북관계에 관한 다수의 기사와 저술에 참여하였다. 밀라니 박사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한국의 역설: 한국의 정치 분열과 외교정책>(Routledge, 2019)의 공동 저자이다. 현재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의 진화: 역사, 이론, 실천>의 초안을 저술 중이다. 현대 한국사,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관계, 남북한 외교정책, 남북관계, 국제관계 이론이 그의 연구적 관심사에 포함된다.

Dr. Marco Milani is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rts – University of Bologna. Previously, he has been Lecturer at th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 University of Sheffield, and Postdoctoral Fellow at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Lecturer at th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e also held teaching positions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had been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outh Korea) and at the Leiden Institute for Area Studies (Netherlands). 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book chapters on North and South Korea's foreign policy,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inter-Korean relations. He is co-editor of the book o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itled *The Korean Paradox: domestic political divide and foreign policy in South Korea* (Routledge, 2019).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book manuscript based on his research titled, 'The Evolu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History, Theory and Practice.'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North and South Korea Foreign Policy, Inter-Korean relations, and IR Theory.

# 토론자 Discussant



**니콜라스 레비** 폴란드사회과학원 교수, 폴란드

**Nicolas LEVI**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Mediterranean and Oriental Cultures, Poland

니콜라스 레비는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 지중해 및 동양 문화 연구소의 조교수이며 한반도, 폴란드 및 관련 이슈들에 관해 7권의 서적, 40여 편의 학술 기고문, 30여 편이 넘는 분석 보고서를 저술했다. 폴란드와 기타 국가의 일류 대학들에서 강의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부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사회학 박사 학위(폴란드 과학 아카데미 정치학 연구소)와 MBA(ESSEC-바르샤바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다수의 학사 및 석사 학위 논문들을 감독하고 있다.

Assistant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Mediterranean and Oriental Cultures of the Polish Academy of Sciences. Author of 7 books, more than 40 academic articles, and over 30 analytical reports on the Korean Peninsula, Poland, and related issues. He conducts lectures at top universities in Poland and abroad. External consultant fo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hD in social sciences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of the Polish Academy of Science), MBA (ESSEC-Warsaw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Scientific supervisor of numerou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dissertations.





# Session 10-3

## 해외 북한연구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North Korea Research in Overseas

주관기관  
Organized By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좌장  
Moderator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yeong Jung PARK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발표자  
Presenters

제니 타운 스티imson 센터 연구원  
Jenny TOWN Fellow, Stimson Center

존 닐슨-와이트 캠브릿지대학교 교수, 영국  
John NILSSON-WRIGHT Senior Lecturer, University of Cambridge & Chatham House, UK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학교 교수, 일본  
Shunji HIRAIWA Professor, Nanzan University, Japan

토론자  
Discussants

정지용 푸단대학교 교수, 중국  
ZHENG Ji Yong Professor, Fudan University

아르툼 루킨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러시아  
Artyom LUKIN Deputy Director for Research at the School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Russia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Sukhoon H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10-3)

## 해외 북한연구의 현황과 과제

현재 북한은 과거와 달리 북한 내부의 시장화, 사유화 등이 부분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북한사회와 체제의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변화와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해외학자들의 연구 진행과 방향성, 방법론 등을 토의하고자 한다. 본 세미나는 해외 북한연구자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토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North Korea Research in Overseas

North Korea's internal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are partially progressing, and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re also taking place.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basic research situation to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system. Therefore, this seminar would like to discuss about the progress, direction, and methodology of foreign scholars on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change and system change. This seminar is intend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international North Korean Studies and researchers.

# 좌장 Moderator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yeong Jung PARK**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박형중(Park, Hyeong Jung)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의 정치와 경제,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이다. 그는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Park, Hyeong Jung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where he has worked since 1993. His major research area includes politics and economy of North Korea, and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He has also served as advisor to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발표자 Presenter



제니 타운 스티imson 센터 연구원  
Jenny TOWN Fellow, Stimson Center

제니 타운은 스티imson 센터 펠로우이자 북한 관련 정책과 기술분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스티imson 센터의 웹사이트 "38노스"의 부소장이다. 38노스 공동 설립과 운영으로 Worth Magazine 의 "그라운드브레이커스 2020: 세상을 바꾸는 50인의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Fast Company가 선정한 가장 창의적인 기업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연구 분야로는 북한, 북미 관계, 한미동맹, 동북아 지역안보 등이 있다.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 한미연구소 부소장을 지냈고, 북한 프로젝트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바 있는 프리덤하우스의 "Freedom in the World Index"에서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SAIS 외교정책연구소의 어소시에이트 펠로우, 전미북한위원회 위원, 미주한인위원회 부위원이기도 하다. 신진 학자들을 위한 온라인 외교정책 저널인 "잉크스틱"의 편집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웨스트마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및 국제관계학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Jenny Town is a Fellow at the Stimson Center and the Deputy Director of Stimson's 38 North, a website devoted to providing policy and technical analysis on North Korea. She was named one of Worth Magazine's "Groundbreakers 2020: 50 Women Changing the World" and one of Fast Company's Most Creative People in Business in 2019 for her role in co-founding and managing 38 North.

Ms. Town's areas of research include North Korea, US-DPRK relations, US-ROK alliance, and Northeast Asia regional security. She is the former Assistant Director of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nd an expert reviewer for Freedom House's Freedom in the World Index, where she previously worked on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roject. She is an Associate Fellow at the Foreign Policy Institute at SAIS, a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and an Associate Member of the Council of Korean Americans. She serves on the Editorial Board for Inkstick, an online foreign policy journal for emerging scholars.

Ms. Town holds a BA in East Asian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Westmar University and a Master of International Affairs from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38 NORTH STIMSON

# RESEARCHING NORTH KOREA

JENNY TOWN  
FELLOW, STIMSON CENTER | DEPUTY DIRECTOR, 38 NORTH  
SEPTEMBER 9, 2020

# RESEARCHING NORTH KOREA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 THE GOOD

Positive Trends in North Korea Studies

3

## THE GOOD

- Growing interest and expansion in the field
- More people studying North Korea by choice, not by assignment (starting young)
- Broader scope of information coming out of North Korea
- Better networking/information sharing among North Korea scholars/experts



4

# THE BAD

Negative Trends in North Korea Studies

5

## THE BAD

- More demand, fewer points of access
- Language barriers to primary sources
- Funding-driven research focus
- Greater media interest/attention, but rapid proliferation of distortions, rumors or bad takes



N. Korea Dictator Kim Jong-un  
Reportedly Dead After Botched Heart  
Surgery



N. Korea Dictator Kim Jong-un Reportedly Dead  
After Botched Heart Surgery  
tmz.com

25 Apr 20 · dlvr.it

6

# THE UGLY

Major Challenges in North Korea Studies



7

## THE UGLY

- Fixation on details rather than context
- Discounting of North Korea's ability to adapt and evolve



8

---

## MORAL OF THE STORY

- Growing interest in the field and demand to start younger, gain deeper knowledge
- Numerous challenges to overcome to improve understanding
- Greater networking/info sharing and funding/support needed



# THE END



[JTOWN@STIMSON.ORG](mailto:JTOWN@STIMSON.ORG)



[WWW.38NORTH.ORG](http://WWW.38NORTH.ORG) | [WWW.STIMSON.ORG](http://WWW.STIMSON.ORG)

# 발표자 Presenter



존 닐슨-와이트 캠브릿지대학교, 영국

John NILSSON-WRIGHT Senior Lecturer,  
University of Cambridge & Chatham House, UK

존 닐슨-와이트 (前 스웬슨 라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전임강사 및 다윈 칼리지 공식 펠로우다. 현재 영국 채텀하우스의 동북아 담당 선임 연구원이자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채텀하우스 아시아 프로젝트 책임자였으며, Christ Church and St. Antony's College, 옥스퍼드 대학교, SAIS,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졸업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냉전 역사 및 일본과 남북한 관련 동북아 국제관계다. <불평등한 연맹?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의 대 일본 안보 및 동맹 정책>(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한국의 평화 위기와 새로운 리더십: 김대중 레거시의 교훈>(연세대학교출판부, 2014), <근대 한국의 정치와 국제관계>(Routledge, 2016), <글로벌 영국과 강한 일본: 21세기 동반자 관계 개발>(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20) 등의 저서가 있다. 현재는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현대의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포퓰리즘과 정체성정치에 관한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John Nilsson-Wright (formerly Swenson-Wright) is senior university lecturer at Cambridge University and an official fellow at Darwin College; he also is concurrently senior research fellow for Northeast Asia and Korea Foundation Korea Fellow with the Asia-Pacific Programme at Chatham House. He was head of the Chatham House Asia Programme from March 2014 to October 2016 and is a graduate of Christ Church and St. Antony's College, Oxford and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His research focuses on Cold War history and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with reference to Japan and the Koreas. He is the author and editor of a number of books including *Unequal Allies? United States Security and Alliance Policy Toward Japan 1945-1960*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Crisis of Peace and New Leadership in Korea: Lessons of Kim Dae-jung's Legaci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14), *The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Modern Korea* (Routledge, 2016) and *Global Britain and Proactive Japan: Developing a 21st Century Partnership*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20). His current research focuses on populism and identity politics as a contemporary and historical phenomenon in both Europe and Northeast Asia.

# UNDERSTANDING NORTH KOREA AND MAKING PEACE ON THE PENINSULA

A European Perspective

John Nilsson-Wright, University of Cambridge & Chatham House

## DENUCLEARIZATION AT AN IMPASSE



US

- + Trump no compromise on CVID; Pompeo
- + Sanctions firm
- + Politics & Nov = hold firm; Congress
- + Hanoi 'shock' – misalignment of goals; Yongbyon dismantling not enough; relaxing 5 sanctions is disingenuous = 80%
- + Trump focus is domestic




NK


- + Reprocessing continues – CSIS
- + Dec 2019 Report (not NY address) – "new route" strategic readiness & econ reform
- + Kim Tok-hyun as PM; Ri Pyong-chol, munitions bureau chief
- + Ltd provocations; short-range missiles, but deterrence important
- + Picking fight with "enemy" south; dismantling of Kaesong liaison mission




## PROGRESS FROM SOUTH

- Moon – breathing space after Nat'l Assembly elections in April
- ROK public v. skeptical about N; Oct 2019
- New Security Team in July; back to 2000; reassuring to NK
  - ◇ Park Jie-won, NIS director
  - ◇ Sun Hoon, Nat'l Security adviser
  - ◇ Lee In-young, Unification minister; flexibility is smart approach
    - ✓ Tourism
    - ✓ Cross-border barter trade (rice for soup)
    - ✓ Reworking of US-ROK working group
    - ✓ \$10 billion to WFP for nutritional aid to young and women
    - ✓ Broad health cooperation - Swine Flu; reciprocity and status






- Moon = sanctions relief; Malaysia & Mahathir in March 2019; NSP & ASEAN



- Kim = no foreign assistance; self-reliance is focus

- Kim Yo-jong & Kim Jong-un = mixed messages



## COVID19 –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NORTH

- **Real pain**
  - Jan 2020 border with China closed = 90% drop in trade
    - ❖ Foreign currency shortage
    - ❖ Inflation
    - ❖ Panic buying
    - ❖ State corps w/ ltd access to raw materials
- **Sanctions are hurting**
  - Repatriated overseas workers
    - ✓ 100,000 = \$50 million; 23,000 returned
  - Rising popular expectations
    - ✓ 6 million mobile phone users
    - ✓ YouTube generation
    - ✓ Market activity in North



## HEALTH & FOOD CRISIS

- Tighter COVID prevention measures after defector returns from South in July = rationalization
- + Pyongyang Hospital by October, health a priority for 2020 agenda
- New 5 Year Plan by 2021
- Johns Hopkins, 2019 – 193 out of 195 countries in terms of health security
- **Floods**
  - ✓ 60% of NKs in poverty, US Dept of Agriculture, 15.3 million Koreans are food insecure
  - ✓ Lack of fertilizer
- February NK appeals for support from UNICEF, Int'l Red Cross & Red Crescent, Doctors without Borders & WEF



## OPTIONS FOR EUROPEANS?

- **Preventive Measures to limit escalation risk**
  - ❖ Maintain sanctions & deterrence; get Kim back to table and signal that further limits on Chinese oil exports if more provocations from NK
  - ❖ Stress security readiness to deal with NK
  - ❖ Back Moon's security measures
  - ❖ Highlight risk of alliance erosion – Trump's burden-sharing & SMA; 10,000 of 28,000 troops w/d; poor signalling – cf. Korean War
  - ❖ US w/d from INF Treaty in Feb. 2019; arms race with Russia?
  - ❖ Escalation risk – Japan & preemptive defense; Ishiba et al. & nuclearization?
  - ❖ Boost European presence – UK navy, 2&2; evacuation preparation
  - ❖ Cyber cooperation with ROK to offset NK risk – pandemic boosts rationale for more efforts by NK



## AMELIORATIVE MEASURES TO INCENTIVIZE NK TO COOPERATE

- **Humanitarian, Food & Medical Assistance**
  - ❖ Relax some sanctions, Tomas Quintana, UN Human Rights Rapporteur
  - ❖ Train and send doctors to NK



## SUSTAINABLE DEVELOPMENT TRAINING

NK very active in embrac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ince 2017 active in backing SDGs as part of 5 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ctober 2019 – NK lays out views in UN meeting in Vladivostok

Key areas for Cooperation and potential European focus

*zero hunger (Goal 2),*

*clean water and sanitation (Goal 6),*

*affordable and clean energy (Goal 7),*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Goal 11),*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Goal 12), life on land (Goal 15), and partnership for the goals (Goal 17).*



## LIMITS & OPPORTUNITIES?

- NK insincere?
  - ✗ Goals are nonenforceable and nonbinding
  - ✓ Demonstrate that NK international compliant & justify belt-tightening?
- European universities can provide training
  - ✗ Cambridge University and past training activities – funding constraints; Int'l bodies, NED; consortium with Koreans
  - ✓ Sussex University (Kevin Gray)
- DMZ development
  - ✗ Culture and ecological initiatives; archaeology – Kaesong
  - ✓ Capitalise on Kim's focus on science and technology
- Embassy closure
- US-China tensions limit Chinese mediation



## HUMAN RIGHTS?

- US backed off despite Otto Warmbier & State of the Union address
- Trump is inconsistent and opportunistic; Uigurs and Xi's repression (Bolton memoir) = no credibility for US
- Kelly Craft, UN ambassador to UN backs of GA in December 2019
- Bilateral efforts can help – Sir David Alton & Chae Tae-bok; Good Friday agreement and Irish model
- Monitoring and enforcement – IAEA supplemental; as part of parallel and sequenced agreements



## PUBLIC AWARENESS & FOCUS

- Populism and rising nationalism
- Brexit effect
- Discrediting of experts and experienced approach
- Restoring trust in government and in agreements
- ROK and Moon and lessons for Europeans
- Need sustained and focus attention
- Greater role for Parliamentarians
- Bilateral dialogue – UK All Party Group on Korea – COVID 19 & Yeosijae
- Broaden to include dialogue with other European parliamentarians
- Acknowledge NK preoccupation with STATUS & LEGITIMACY
- Partner with other Asian Countries – Japan and Normalization; Suga and reduced Abe effect; rachi mondai



# 발표자 Presenter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학교 교수, 일본  
Hiraiwa Shunji Professor, Nanzan University, Japan

히라이와 박사는 도쿄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졸업하고 게이오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정치학 학점을 취득하였다. 이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게이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쓰사카대학교와 시즈오카대학교 국제관계 대학원에서 부교수로 동시에 재직하였고, 부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의 특별연구원으로서 중국-한반도 관계를 연구했다. 2017년부터 난잔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의 전문 분야는 한반도 및 북한 정치외교와 중국-한반도 관계에 관련된 국제관계이다.

Dr. Hiraiwa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the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earned credits in the Graduate School of Law, Keio University,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Studied at the doctoral course of th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Seoul and received his Ph.D. in Law from Keio University. Serv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then-Matsusaka University and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Shizuoka. Over that time, Dr. Hiraiwa also studied China-Korean Peninsula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as a special researcher for the Embassy of Japan in Beijing. Took up his current position in April 2017.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rel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politics and diplomacy, and China-Korean Peninsula relations.

# Japan's policy on North Korea: Four motives and Three factors

Shunji Hiraiwa(Nanzan University)

## Introduction

– North Korean Studies in Japan: Highlights of the Postwar Period

### ◎Generational Changes

#### First Generation (1945-60s)

Corollary of Communist studies; Political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the two Koreas

#### Second Generation (1965-80s)

Freedom from ideological conflicts, as objective as possible . information and analysis from US

#### Third Generation (1987-90s)

Use of information and analysis from China and South Korea

#### Fourth Generation

Division of South Korean studies and North Korean studies

→ Need for a more holistic Korean Peninsula Studies

---

◎Methodology

Analyses based on official documents

Information from *Chosoren*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ngryon) - has decreased in quantitatively

Visits to North Korea are restricted, except for a few researchers.

Interviews of North Korea escapees\*\*\* Need for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North Korean Studies as Policy Studies

North Korean studies as Area Studies → Policy Studies

Nodong Missile(1993), Taepodong incident(1998)

→North Korea as a threat

Abduction issue

Japan's North Korea policy:

Comprehensive resolution of *Rachi, Kaku, Misa-i-ru* (Abductees, Nuclear Weapons, Missiles) as a goal



## 1. Japan's North Korea policy: Four motivations

\*“Japan seeks to normalize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Japan- DPRK Pyongyang Declaration, through comprehensively resolving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such as the abductions, nuclear and missile issues as well as settlement of the unfortunate past.”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Four motivations

### First motivation: As a remaining postwar process

Japan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1965

Prime Minister Eisaku Satō ,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s a blank slate.”

→the possibility of normaliz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Japanese politicians' ambitions: putting a complete end to World War II

→Japan with a more active role in international society

\* “Final settlement of post-war politics” ( former Prime Minister Yasuhiro Nakasone)

\* “Escape from the postwar regime,” ( Prime Minister Shinzo Abe )

---

## Second motivation: Security issues

North Korea as a threat→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CBM (entire United States was in range ), and it succeeded in miniaturizing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with the entire Japanese archipelago in range

Japan needs to remove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short- and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 Third motivation : the Safety of Japanese lives

Abduction issue→the most important for Japan

Comprehensive resolution of Abductees, Nuclear Weapons, Missiles as a goal

The formation of an inter- national support system

Ultimately needs to be discussed between JPN-North Korea

## Fourth motivation: Economic opportunities in North Korea

If North Korea pushes ahead with opening up  
→ major business opportunities for Japan.

Underground resources such as rare earth elements  
→ resources of high international interest.

Great significance for the Japanese economy

## 2. Three factors of Japan's policy

Four motivations for Japan's policy on North Korea

- (1) remaining postwar processing
- (2) security
- (3) the safety of Japanese lives
- (4) economic opportunities

→Japan's policy is bound by the following three factors.

## First facto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Cold War era ...it was impossible for Japan to normalize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Japan- China relations... the Sino-American rapprochement (1970 s)

→normalization of Japan-China diplomatic relations (1972)

North Korea→Detente between East and West camp

U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 Second factor :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important friendly country for Japan

North Korea for Japan...Range without sacrificing Japan-Korea relations

“Special Declaration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lf-Respect, Unification and Prosperity” (1988, President Roh Tae-woo)

→ to cooperate i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Japan-North Korea relations→ROK must control

## Third factor : Japan's domestic affairs

Kanemaru's (former Vice President Kanemaru of the LDP) visit to Pyongyang...  
Japan North Korea normalization talks

the Socialist Party played a major role

the Murayama government... ninth round of talks on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April 2000)

Prime Minister Koizumi's visit to North Korea: Japanese people's interests  
abducted → Public opinion influences North Korean policy

in the abduction issue, leading to a large influence from public opinion in  
addition to simple internal politic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Attitude of South Korea	Japan's domestic affairs	Jap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1990-2000	- → + → -	- → +	- → +	- → +
2001-2008	-	+	-	+ → -
2009-2016	-	-	-	-
2017-present	- → +	+	- → +	- → +

---

Conclusion :

Attitude of North Korea as the 4th factor

Prime Minister Abe's resignation

Japan's next Prime Minister 's North Korean policy

Second factor: ROK will give positive evaluation

Third factor: Japanese public opinion favor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S Presidential election →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first factor

North Korea's attitude is the most important → 4th factor



정지용 푸단대학교 교수, 중국

Ji Yong ZHENG Professor, Fudan University, China

정지용은 현재 푸단대학교 한국학센터 교수 겸 소장이며 상하이 한국학연구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정지용은 군에 입대하여 중국 인민해방군 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했다. 1991년 한반도 군사외교 연구를 담당했으며 2009년 전역하여 푸단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쳤으며(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김일성종합대학교,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미국 스티븐 센터에서 방문 학자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한 정치, 한반도 관련 양자 및 다자 관계 등이다. 100여 건의 학술 기고문을 저술 또는 공동 저술했고, 〈한국 정당제도〉(2008), 〈한국 국회정치〉(2017), 〈한반도 갈등-화해 순환구조: 중국의 관점〉(2012),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중국의 관점〉(2015), 〈중국의 대북 정책〉(2020) 등 10여권의 서적을 저술, 공동 저술 또는 편집했다.

Zheng Jiyong currently serves as Professor and Director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Fudan University, and Secretary-General of Shanghai Institute of Korean Studies. Zheng Jiyong joined the army and studied at the School of Foreign Languages,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In 1991, he was assigned to research the military and diplomacy of the Korean Peninsula. In 2009, he retired from the army and joined Fudan University. He received his Doctoral Degree at Fudan University, and had post-doctoral experiences at IFES, Kyungnam University, ROK(2009/09-2010/12), and in Kim Il Sung University, DPRK(2014/07-11), and a Visiting schola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ROK(2016/09-2017/09), and The Henry. L. Stimson Center, USA (2019/07-2020/07). His research focuses on domestic politics in the two Koreas, and on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He is the author and coauthor of more than 100 scholarly articles and author or editor of more than 10 books, including ROK's Political Party Systems (2008), ROK's Parliamentary Politics (2017), The "Conflict-Reconciliation" Cycle on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Perspective (2012), and Road Map to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 Chinese Perspective (2015), and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2020). He can be reached at zhengjiyong@fudan.edu.cn.



**아르툼 루킨**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러시아

**Artyom LUKIN** Deputy Director for Research at the School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Russia

아르툼 루킨은 극동연방대학교(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역학 및 국제학과의 연구담당 디렉터(deputy director)이자 국제관계학 부교수이다. 2002년 동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관심사는 아태지역과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안보,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한반도 정치와 러시아의 대 남북한 관계,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와 경제 등이다. 루킨은 아태지역 국제정치와 러시아의 대 아시아 관계에 관해 러시아어와 영어로 여러 챗터, 논문, 논평 등을 저술했으며 다수의 연구와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러시아 국제사무국(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과 발다이 클럽(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의 전문 자문인이며, 러시아와 국제 뉴스 미디어에 정기적으로 논평, 기고하고 있다.

Artyom Lukin is deputy director for research at the School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Vladivostok, Russia). He is also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 Lukin earn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Far Eastern State University in 2002. Artyom Lukin's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and Northeast Asia; Russia's policies toward the Asia-Pacific; the Korean Peninsula politics and Russia's engagement with the two Koreas; the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Russian Far East. Lukin has authored multiple chapters, papers and commentaries, in Russian and English, on Asia-Pacific international politics and Russia's engagement with Asia. He has been involved in numerous research and publication projects. Artyom Lukin is an expert with the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and 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 He is a regular commentator and contributor for Russian and international news media.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Sukhoon H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홍석훈 박사는 2014년부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북미관계, 북한외교정책 및 동아시아 평화체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는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조지아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국제정치학, 동아시아정치체제, 글로벌정치학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통일연구원 정책보고서 및 각종 저널을 통해 국제정치, 북한정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의 연구결과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Dr. Sukhoon Hong is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ince 2014. In terms of his research interests, he is keenly interested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North Korean foreign policy as well as the Asian "peace regime."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USA).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he taught cours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Asian Political System, and Global Politics. He was in charge of an adjunct professor for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at Sungkyunkwan University. Hong's existing work in this area has been published in KINU's policy report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and in various book chapters. Recently, he authored "North Korea's Transition of It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ts Significance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December of 2018.



# Session 10-4

## 북한관광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How to Resume the Tour to North Korea?

주관기관  
Organized By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 좌장**  
Moderator
-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Yongsik KANG** Chairman,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 발표자**  
Presenters
- 심상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Sang Jin SHIM**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Yongseok SHIN** Senior Researcher,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토론자**  
Discussants
- 민경석**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 본부장  
**Gyeongsuk MIN** Executive Vice President for National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Youngdong LEE** Execution Committee Chairperson,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센터장  
**Hae Jung LEE** Manager of Center for Unification and Economics, Hyundai Research Institute
- 제임스 반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James BANFILL** Visiting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10-4)

## 북한관광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공간'이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 해법'의 하나이다. 분단된 남과 북에 '사람과 사람'이 오간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되고, 평화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세션은 북한의 관광정책 및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지역 개별관광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기획되었다.

## How to Resume the Tour to North Korea?

Individual tourism to North Korea is a new "cooperation area" to break the deadloc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one of the "creative antidotes" to the long-stalled Mount Geumgang tours. Suppose people's crossing-border activities are allowed in divided Korea. In that case, it will become a symbolic peace message and a way that leads to a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ession aims to look at North Korea's tourism policy and current infrastructure and discuss the goals and challenges of the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 좌장 Moderator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Youngsik KANG** Chairman,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강영식 회장은 2019년 9월 24일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때부터 함께하여 2008년부터 11년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년 7월 이임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13년까지 56개 대북지원 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운영위원장을,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150여회 북한(개성, 금강산 제외)을 방문한 그는 2017년 11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다.

Kang Young-sik was appointed as Chairman of the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n September 24, 2019.

He served as Secretary-General for 11 years from 2008 in Korea Sharing Movement(KSM). He had been working for KSM since its founding in 1996. Kang also has served as Chairman of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 coalition of 56 North Korean support organizations from 2016 to 2017. He visited North Korea(except for Gaesong and Geumgang mountain) more than 150 times from 1998 to present. In recognition of his achievem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warded him an order of civil merit: Dongbaek Medal on November, 2017.

# 발표자 Presenter



심상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Sang Jin SHIM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심상진박사는 현대그룹에서 26년간 근무하였으며, 현대그룹에서 남북경협사업을 담당하는 (주) 현대아산북한관광분야 담당 중역 및 현대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 최초로 진행된 크루즈 도입 단계부터 크루즈부두건설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실무 현장에 있었으며, 현대의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프로젝트를 총괄하였다. 금강산관광특구개발 초기에 2년간, 관광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2년간 등 총 4년간 금강산지역에 거주하였으며 북한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20여 회 이상 북한의 많은 지역을 방문하여 북측관계기관과 관광 개발계획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실현하였다.

2012년 3월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광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Previously, Dr. Shim served for many years as Senior Vice President for Hyundai Asan Corporation. Hyundai Asan is the founder of Mt. Kumgang Project and the primary investor in North Korea's Tourism Development. Dr. Shim had been highly active in the company and directed for many multi-year projects; is the Founder of 3 Cruise Ships Tour from South Korea to N. Korea. Also, some plans he had initiated include the resort at Mount Kumgang, the Kaesong Tour project, as well as Mt. Baekdu development project.

Moreover, his dedication towards the various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in N.K. led him to live in the Mt. Kumgang Tourist Region for about four years and worked with the N. Korean Tourism Authorities for 14 years.

While working on these projects, he had visited N. Korea more than 120 times to discuss tourism planning and development with N.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nd to make that happen positively. Given his many achievements throughout 14 years, he is one of the internationally distinguished figures who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ourism development on cruise ship oper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uch as Cruise Terminal, Hot Spas, and Accommodations and so on.

---

# The Tourism Policy and Infrastructure Status of the DPRK

Sang Jin SHIM

Professor at Kyonggi University

---

## I. Tourism Policy of the DPRK

### A. Tourism policy under Kim Il Sung's regime (1948-1994)

-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regime in 1948, the DPRK had regarded tourism as unproductive activities that promote an extravagant and reckless lifestyle, especially between the 1960s and early 1980s.
- The country used tourism as part of its reward program in idolizing the leadership to give the people the impression that special benefits are granted from their leader. Tourism was also used as a means of promoting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to foreigners in the third country.
- Although almost everything in the North was destroyed due to the Korean war, the regime founded the Korea International Travel Company in August 1953, and built Taedonggang, Pyongyang, and Haebangsan Hotels.
- In the 1970s and 1980s, Changgwangsan, Potonggang, Koryo, Hyangsan and Yanggakdo International Hotels were newly opened. Pyongyang-Wonsan-Mt. Kumgang, Pyongyang-Kaesong, Pyongyang-Hyangsan highways were also built during the same period of time. As the economy was worsening and other socialist countries were seeking to open their economies in 1980s, the DPRK opened its door for tourism, adopting a different approach to tourism.
- In 1984, the DPRK enacted and announced 「Law on Equity joint venture」 and 「Law on Contractual Joint Venture」. These laws stipulate that the tourism industry shall be among the five fields of equity joint ventures, and a contractual joint-venture enterprise with a foreign partner is allowed to do business in tourism. In 1986, the country established the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equivalent to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n South Korea.
- In September 1987, North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and began to attract foreign tourists to Kaesong and Mt. Kumgang. It incorporated tourism development ideas into the third seven-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87-1993). In 1996, tourism business was finally defined as a viable economic business in the "regulation on tourism in th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which was approved as a law during the fourth Supreme People's Assembly.
- However, prolonged economic challenges had made it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continue to develop tourism resources and maintain existing facilities. In addition, as the DPRK remained closed to the rest of the world, restricted its residents' freedom of movement, and had almost zero inter-city transportation, tourism has become far from daily lives of its residents.

### B. Tourism policy under Kim Jong Il's regime (1995-2011)

- The DPRK began appearing on the Asia-Pacific tourism industry, joining the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in April 1996. It established the "Regulations on Tourism in the Rajin-S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which showed that the country started to regard tourism and selective open-door policy for certain regions as part of its nation-led industry plans.
- In June 1998, the Hyundai Group and the DPRK signed the agree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 Mt. Kumgang special tourist zone. This agreement influenced the North to see tourism as an important source that brings foreign



currency into its economy, beyond a motivational tool for workers or a medium of propaganda.

- Mt. Kumgang started to open to South Korean and foreign tourists. In November 2002,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ratified the decision to grant the Hyundai Group the exclusiv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Mt. Kumgang special tourist zone for 50 years.
- The year 2003 saw a multiple number of travels to Pyongyang through direct flights to North Korea. As for Mt. Kumgang tours, travel routes became various from the existing sea route to a newly added land route in September 2003.
- The direct air or sea routes were used for many occasions such as negotiations between inter-Korean governments, civic groups' humanitarian visits to the North, or participations in events. Meanwhile, the DPRK got confident thanks to a smooth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came into operation in 2005. In December 2007, the country decided to open Kaesong, one of its southernmost military bases, to South Korean tourists. In March 2008, tourists were even allowed to drive to Mt. Kumgang.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he tourism industry, North Korea began to take steps toward opening its doors.
- A Korean tourist at Mt. Kumgang was shot to death by a North Korean soldier on July 11, 2008,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spended the tour program the next day, on July 12, 2008. The DPRK also decided to suspend the tour program to Kaesong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Since the suspension of the tour program to Mt. Kumgang, the North continued to push the South and the Hyundai Group to resume the program. Due to political turmoil at home and abroad, the tour program to Mt. Kumgang has not been resumed as of September 2020.
- The tourism policy during the Kim Jong Il regime focused on charging the zone entrance fee from the Hyundai Group on the condition that the country lends the tourist site and entrusted al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development, operation and promotion of the program to the company. Until the tourism program came to a halt in 2008, 1.95 million tourists had visited Mt. Kumgang and 110,000 people had visited Kaesong.
- To regain the number of tourists lost in these suspensions, the DPRK did its utmost to draw foreign tourists including Chinese and attract investments, but it failed to achieve these goals. In 2009, the country built the Hamhung Majon Hotel and declared the development of Mt. Chilbo to earn foreign currency. Also, it set up foreigner-only facilities and revise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refurbishing facilities and expanding public transportation in many areas such as Wau Island in Nampo, the Songdowon area in Wonsan, the Sijoongho zone in Tongcheon, the Rajin-Sonbong zone, Haeju and Hamhung.
- The Rajin-Sonbong zone had accommodations, golf clubs, entertainment venues (bars, nightclubs, circus festivals and Taekwondo studios), restaurants, travel agencies, foreign currency shops and local specialty shops. The zone began to grant investment advantages, implement the visa-free system, and carried out investment presentations in Hong Kong, Japan, and China. Also,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tourism trade fairs held in Berlin, Switzerland and Singapore, the DPRK promoted its tourism programs and showed its commitment to tourism development.
- Having confidence in controlling its residents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Mt. Kumgang tourism program and learning from the economic value and ripple effect of tourism, North Korea chose tourism as nation-led industrial policy, and shifted a policy direction toward comprehensive economic objectives and widen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ountry restored the Gyeongui Line and designated Kaesong as a special zone to attract more South Korean tourists.

### C. Tourism policy under Kim Jong Un's regime (2012-2020)

-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Kim Jong Un was elected as the first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

on April 13, 2012, during the fifth session of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In his inaugural speech, Chairman Kim promised that his residents wouldn't have to tighten their belts any more. The core of hi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s to earn foreign currency through tourism, thereby boosting the economy.

- In January 2013, the DPRK modernized the passenger terminal of the Pyongyang Sunan International Airport as a preemptive measure to implement a large-scale tourism program, and repaired the Samjiyon Airport and the Chongjin Airport near Mt. Chilbo, a military airport. The country built a new runway and passenger terminal in the Wonsan airport as well as opening regular domestic flights for foreign tourists' convenience. As for tourism in the East Sea region, three cruises were introduced to connect between the Rason region and Mt. Kumgang. As for tourism in the Yellow Sea region,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cruise route was once under discussion to connect between Nampo, North Korea and Weihai, China.
- Showing his leadership by visiting local facilities, Chairman Kim drew the global attention to the country's competitive edge and national brand image. As part of this effort, North Korea renewed the uniforms of flight attendants and in-flight meals of Air Koryo, known as one of the outdated airlines.
- The ple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adopted the "Line of Simultaneous Economic and Nuclear Construction" in March 2013, and announced its plan of the completion of nuclear armament. In April 2018, the third plenary meeting of the seventh central committee determined that the country would stop additional launches of nuclear missiles and aim to pursue economic growth.
- The plenary meeting reaffirmed that the Mt. Baekdu, Mt. Chilbo, and Wonsan areas would be turned into competitive special tourism zones, which was initially planned during the Kim Jong Il regime but was not implemented due to the economic challenges.
- Chairman Kim Jong Un has sought to hold tourism investment presentations in Beijing and Vladivostok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for tourism development. He is eliminating the leadership's negative perceptions of tourism, and has highlighted that tourism would be the driving engine for the economy and the industry to draw foreign currency.
- Kim Jong Un has asked his armed forces, party, and residents to do their utmost in constructing the Masikryong ski resort,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the Mt. Baekdu Samjiyeon Eup zone, and the Yangdeok Oncheon culture resort.
- The DPRK has taken measures to nurture talent for tourism. Apart from the Pyongy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yeongyang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yongyang University of Commerce and the Chongjin College of Light Industry, North Korea established the Pyongyang Tourism College in East Pyongyang in April 2014, originated from the faculty of tourism and service in the Jangcheolgu Pyongyang University of Commerce. This college nurtures foreign language experts in English, Chinese and Russian, and has established the faculty of tourist guide as well as the faculty of tourism management for tourism business and development.
- Colleges of education located in each province, including Wonsan and Sinuiju Colleges of Education, has established the faculty of tourism to nurture relevant experts and boost the tourism industry. These colleges send their students to hotels in East Asia for their field and language training. In addition, the DPRK is receiving support of tourism development from the UNWTO, the UNDP, and the PATA.
- After President Moon's speech at Pyongyang in September 2018, North Korea has expected that the Mt. Kumgang tourism program might be resumed. In his new year's message in January 2019, Chairman Kim mentioned that his country was willing to open tours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with no condition or return.
- On September 22, 2019, North Korea sent the statement sincerely urging South Korea to resume the tour program

to Mt. Kumgang through the consul on economic affairs in Vladivostok.

- As there has been no response from the South for 30 days after the Vladivostok statement, Kim Jong Un thought that he had nothing to expect. During his on-site instructions at Mt. Kumgang in October, Chairman Kim declared that the North would independently develop and operate the Mt. Kumgang tourism program without engagement of the South.
- While he expressed uncomfortable feeling, saying "have discussions with the South counterpart and eliminate all sloppy South Korean facilities that make us feel upset as soon as looking at them", Chairman Kim left the doors open by including "discussions".
- To attract more tourists and achieve significant objectives, Kim Jong Un is placing a heavy burden on the shoulders not only of high-level officials in charge of tourism, but also of the party leadership and staff from diplomatic overseas offices. Currently, the tourism industry in North Korea has been at standstill due to the UN sanctions against the DPRK and the COVID-19 pandemic.

## I. Tourism Infrastructure of the DPRK

### A. Tourism Infrastructure Competitiveness Index of World Economic Forum

- The World Economic Forum or WEF sub-classifies tourism infrastructure into three parts: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Ground and Port Infrastructure, and Tourist Service Infrastructure.
- Except for the index–Infrastructure, the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of the WEF has the following index or sub-index; (i) Enabling Environment (business environment, safety and security, health and hygiene), (ii) Human resources and labor market, (iii) ICT Readiness, (iv) T&T policy and enabling conditions (prioritization of travel and tourism, international openness, price competitiveness, environment sustainability), and (v)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natural resources, and cultural resources and business travel).

### B. Tourism Infrastructure Status of the DPRK

#### (1) Information infrastructure such as websites

- The website called DPRKorea Tour ([tourismdprk.gov.kp](http://tourismdprk.gov.kp)), was fully updated in 2017, and explains how to obtain the visa and the tourist certificate for a tour to the DPRK. In addition, the website presents various information as follows: travel agencies, tourist attractions, theme tours, festivals & events, service facilities as well as photos, video clips and folk tales. the DPRKorea Tour website is translated into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Russian, and provides the English version of a Pyongyang map application for tourists.
- Under its organization, the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has the network with 11 central class travel agencies, six local class travel agencies, six overseas offices, and 33 travel agency partners.

#### (2) Power Supply Infrastructure

- Electrical grid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infrastructures that underpins a seamless operation of tourist facilities. The DPRK has highlighted that securing a stable power supply is one of the top priority tasks among the five-year economic strategy. The detailed action plans required to implement are as follow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facilities through maintenance and relevant technology improvement, to decrease the cost of power generation, to promote the effective use of electricity, to operation the integrated electrical management system, to repai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grids, to construct and normalize the small- and medium-scale power plant, and to generate electricity by using renewable energy.
- Electricity needed to operate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appears to be generated at the Kumgang

---

Mountain power station, the Jangjin River power station or the Tongcheon power station, which are all near Wonsan.

- Hydroelectric generation amounts for 50-60% of the DPRK's energy mix. Yet, hydro power generation dramatically decrease, when precipitation declines. More than half of hydro power generation facilities should be replaced, and outdated transmission grids with no sheath cause a loss in transmission.
- The entire amount of power generation appears to meet only 40-50% of the gross demand. The DPRK is taking measures to build additional power plants, but it would not be easy to overcome the electricity shortage in the short period of time.
- In theory, tourist facilities must be equipped with an emergency power generator to respond to a blackout. However, in reality, it would be challenging for the DPRK to install an emergency power generator in all tourist facilities including accommodations, considering its economic conditions.

### (3) Railway Infrastructure

- The railway transport is the most typical transport system in the DPRK, accounting for 90% of cargo transport. As for passenger transport, railway, road and maritime transport account for 62%, 37%, and 1%, respectively. This demonstrates that railway transport is dominant in North Korea.
- The railway network of the DPRK has approximately 60 lines and its total length reaches 5,112 km. Single-track railways amount to 96%, and 75% of the total length is powered by electricity.
- Relevant facilities including road-beds, vehicles, and traffic system are outdated, which is attributed to a slow train running speed—40km/h on average. Furthermore, the facilities often experience blackouts or low electric pressure. These challenges make it difficult for the DPRK to transport foreign tourists domestically, except for the international line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 To make a tour to Mt. Baekdu more convenient, North Korea recently opened a new 70-kilometer-long railway line between Hyesan City and Samjiyon County, and built an up-to-date passenger station building at the Wiyon Chongnyon Station.
- China promised to provide funds and technology for the DPRK's railway modernization, and has signed a couple of the MOUs with the DPRK. The South is seeking to reconnect railway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plan is at a standstill du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against the DPRK and different understanding of railway specifications.

### (4) Road Infrastructure

-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at Panmunjom in April 2018, Chairman Kim Jong Un said to President Moon that our road conditions are insufficient. This represents everything related to the DPRK's road infrastructure. It is difficult to expect an efficient land transport and transfer of passengers and cargo by bus or truck, due to lack of North-South or East-West roads. Cars equipped with wood gasifier engine can be even found in North Korea.
- The DPRK has five highways: Pyongyang-Kaesong, Pyongyang-Wonsan, Pyongyang-Nampo, Pyongyang-Hyongsan, Wonsan-Mt. Kungang. But, the pavement condition of roads is poor, so that drivers have to avoid potholes and have some trouble in driving a car straight. Drivers are highly likely to find their tires severely worn or damaged.
- Chairman Kim is focusing on maintaining and paving roads connecting Hyesan-Bocheon-Samjiyeon-Daehongdan for a tour to Mt. Baekdu or field investigations. He is also maintaining roads to encourage his residents to visit Kim Il Sung's battle sites or revolutionary sites.
- The DPRK's total length of roads is approximately 34,000 km, among which over-2.4-meter-wide roads reach

around 23,000 km (approx. 68%), highways reach 524 km, and the road-paving rate is merely 8%. Maintenance for highways was not regularly conducted, which makes drivers drive safe.

#### (5) Flight and Airport Infrastructure

- The air transport system of the DPRK is extremely outdated, there are only two international airports: the Pyongyang Sunan International Airport and Wonsan-Kalma International Airport. The domestic airports are located in Samjiyeon, Sondok, Suncheon, Cheongjin, Hyesan, Orang, Gaecheon, Hwangju and Kalma, and these airports are also used as a military airport. (There are 33 airports including military airports.)
- The Wonsan-Kalma International Airport was initially the Wonsan military airport with only runways. But the airport was renovated to have a 3,139-meter-long runway and the terminal building for foreign tourists. Thanks to the long runway, the airport can accommodate wide-body aircrafts such as B747 or A380, and store up to 20 airplanes. In addition, this airport is near to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and 1000 km or two hours away from Mt. Beakdu.
- Runways are not the only conditions that airports should have in order for commercial airplanes to take off and land. The Wonsan-Kalma International Airport has not yet been received safety grades, and the ICAO has not granted an additional international air route.
- If the DPRK fails to acquire an additional international air route from the ICAO, which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the Wonsan airport will not be used for an international one, but for a domestic one like Sunan or Samjiyeon airports. To attract 1.2 million tourists to the Masikryong ski resort and 1 million to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there is much room for progress such as safety facilities and flight guidance system.
- As of today, the Pyongyang Sunan International Airport provides flights services between Beijing-Pyongyang, Simyang-Pyongyang and Vladivostok-Pyongyang.

#### (6) Accommodation Infrastructure

- The DPRK has only a handful number of foreigner-only accommodations. Pyongyang has three foreigner-only hotels: the Koryo Hotel (500 rooms, 45-story tall, twin buildings), the Yanggakdo Hotel (1,001 rooms, 47-story tall), and the Pothonggang Hotel (162 rooms, 9-story tall). The 105-story Ryugyong Hotel is not being used for safety reason, and has been outfitted with enormous LED lighting walls for propaganda, instead.
-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reportedly has 150 hotels, entertainment facilities, event halls, and water parks. However, the detailed accommodation and room numbers has not been reported on the completion date or even as of today.
- The DPRK presented investment return rates such as ROI or NPV for each project of hotels, restaurants, railways, but it fail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Due to a lack of fun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conomic sanctions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project completion date has been delayed three times, the first on April 15, 2019, the second on October 10, 2019, and the third on April 15, 2020. And when the project is completed has not been disclosed.

### I. Closing

- The DPRK has a bountiful number of historic, cultural and natural tourist destinations including well-preserved historic sites, Buddhist sites, and museums. If the country ensures a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North Korea would not have difficulty in attracting small foreign tourist groups.
- Despite its effort, the DPRK has failed to attract as many foreign tourists as it planned. This is not because of a lack of infrastructure, but because of an atmosphere of insecurity from the foreign tourists' point of view. A few

---

number of tourists with curiosity may visit North Korea, but not many. If it wants to continuously attract many foreign tourists so that tourism can boost its economy, the DPRK should prioritize improving its nation brand.

- The investment in the DPRK's tourism infrastructure can enhance its economic strength, and contribute to narrowing the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by lowering the unification cost. Also, the infrastructure will connect South Korea to 1.4 billion Chinese market and the Eurasian. In this regard, this investment plan should be executed with the long-term perspective.
- To ensure a safe trip to North Korea, the country should facilitate not only infrastructures described above but also travelers' insurance, and university hospital services.
- Furthermore, what the DPRK should keep in mind is that more foreign tourists will visit North Korea when it provides transparent information and more relaxing atmosphere like any other countries, not when it has large-scale tourist facilities such as the Masikryong ski resort or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 North Korea should not repeat the same mistakes such as no explanation for its leader's disappearance for 20-40 days, discriminatory detention of tourists on the grounds of acting disrespecting its leaders, groundless claims that it has no COVID-19 confirmed cases and an explosion of a facility built by South Korea. Efforts to improve its responses should be prioritized, rather than expansion of tourism infrastructure.
- These changes can be made immediately by the decision of the leader without financial investment, and only such changes will enable the young leader's plans to restore the economy through tourism business.

– End –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Yongseok SHIN** Senior Researcher,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신용석 박사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2004년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 입사한 이후로 관광정책과 계획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UNESCO, UNWTO(세계관광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과 함께 협력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용석 박사의 주된 연구 관심사는 문화관광을 비롯하여 관광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동북아(북한 및 중국)에서의 관광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Yongseok Shin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Korea where he was awarded his B.A and M.A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joined the Korea Culture Tourism Institute (KCTI) in 2004 after he receiv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At KCTI, an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epublic of Korea, Dr. Shin has conducted various projects about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and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He also worked wit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UNWTO. Dr. Shin'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cultural tourism, tourism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ourism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

# Strategies and Challenges of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Yongseok Shin

Senior Researcher of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I. Moon Jae-in Administration's Progress on South and North Korea's Cooperation in Tourism

### A.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agreed to resume tours to Mount Geumgang at one of the inter-Korean summits in 2018.

-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in principle on the resuming of the tours to Mt. Geumgang at the September 2018 inter-Korea summit in Pyongyang.
  - "The two sides agreed, as conditions mature, to first normaliz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Mt. Geumgang Tourism Project."
- Kim Jong Un,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North Korea, mentioned the resuming of Mt. Geumgang tourism again in his 2019 new year speech, indicating his strong willingness to recommence the tourism project.
  - "We are willing to resume Mount Kumgang tourism without any precondition and in return for nothing."

### B. North Korea-United States Hanoi Summit failed and the continued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elayed the resuming of Mt. Geumgang tourism in 2019.

- The highly anticipated second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February 2019 in Hanoi, Vietnam) ended without any deal or agreement; and as a result, th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were continued without relief.
- The U.N. sanctions includes Mt. Geumgang tourism project, delaying the desired resuming of the project.
  - Blocking the North Korea regime from bulk cash transfers (Resolution 2321): All member states are called upon to be aware that bulk cash transfers could help North Korea avoid observing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 Prohibition of economic cooperation (Resolution 2375): All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prohibit the opening,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all joint ventures or cooperative entities, new or existing, with DPRK entities or individuals.

### C. Chairman Kim Jong Un made on-the-spot guidance to Mt. Geumgang tourist zone and Yangdeok county and ordered the destruction of the Mt. Geumgang facilities in October 2019.

- Chairman Kim directed the destruction of all facilities in the Mt. Geumgang tourist area during his field guidance.
  - He criticized all structures around the mountain erected by Hyundai Asan and ordered them to be destroyed and rebuilt so they meet North Korean sentiment and aesthetic taste (October 23, 2019).
- In the following visit to Yangdeok County, Chairman Kim reiterated the North Korean-style development.
  - Comparing to Mt. Geumgang tourist zone, he praised Yangdeok district built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reemphasizing North Korea's autonomy in development.



- He indicated that North Korea will take the lead in the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which operation has been led by and trusted to Hyundai Asan.

#### D. President Moon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at the new year's press conference in January 2020.

- President Moon, at the new year's press conference of the year 2020, said he will push forward to some inter-Korean projects that do not violate the UN securit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order to break the inter-Korean deadlock.
  - He mentioned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is not against international sanctions, and we are able to seek the possibility" among others.\*
  - After the press conference, the Unification Ministry held a roundtable session for the policy brief on individual trip to North Korea for journalists, indicating that the individual tourism is the ministry's one of five policy plans for 2020.\*\* Such a plan was also provid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2020> of "The 3rd Master Plan for Better Inter-Korean Relations."\*\*\*

#### E. The inter-Korean relations have come to a standstill after the North blew up the joint liaison office with the South in June 2020.

- South Korean government hinted on individual tourism, but it has not officially put the idea into action at the governmental level or suggested a discussion with North Korea.
- Accordingly, North Korea has not brought up an official comment or response to our government's idea on individual tours to the country, and COVID-19 has aggravated the environment.
- Afterward, North Korea's destruction of the joint liaison office rapidly escalated the tens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n June 16, 2020; thus, now the plan for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is more unlikely to be implemented.

## II. Overview on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 The concept and type of the individual tourism being discussed are as follows:

### 1. Concept

- The idea of individual tourism that the Unification Ministry has suggested can be summarized in four key phrases:
  - 1) Not in the way of group tourism through the existing cooperative entities
  - 2) Through a non-profit organization or a travel agency in a third country
  - 3) After North Korea confirms to invite individuals as tourists
  - 4) A tour to North Korea after receiving the country's permission

\* President Moon Jae-in, the Q&A session of the new year's press conference, January 14, 2020

\*\* The Unification Ministry's Five Objectives for 2020: ① Creation of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②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③ Diversific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④ Realistic settlement of humanitarian issues ⑤ Laying a foundation for promoting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n policies

\*\*\* <Implementation Plan 2020>, 『The 3rd Master Plan for Better Inter-Korean Relation』, April 24, 2020

---

## 2. Type

### A. Visits to Mt. Geumgang and Gaeseong areas by dispersed famil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Visits to Mt. Geumgang and Gaeseong for a humanitarian reunion of divided families and tourism by non-profi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Direct travel from the South to the North, not via a third country
  - It is interpreted that only separated families and NGOs are permitted to travel Mt. Geumgang and Gaeseong not to infringe the Hyundai Asan's business license since those places used to be the locations of the company's business projects.
  - Gaeseong is a destination for a one-day trip only while Mt. Geumgang is equipped with travel accommodations as existing tourism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remain in the mountain.

### B. Individual tours through a third country

- South Korean nationals travel through a third country to North Korean cities and regions, such as Pyongyang, Yangdeok, Wonsan·Galma·Samjiyon for tourism.
  - It is an individual trip to North Korea via a third country, but North Korea does not allow individual tourism. Therefore, it is likely to be a small package tour with a third country's tour agency.
  - Now Chinese tourists take up 90% of foreign visitors in North Korea; thus,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is highly likely to be carried out by a Chinese tour agency, considering travel distance and cost.
  - In terms of care for tourists and their travel procedures, a Chinese travel agency might come up with a tour package only for South Koreans, rather than mixing them with Chinese travelers.
  - North Korean tourist visa will be handled solely by a Chinese travel agency.
  - The bottom line is that no one can make sure if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through such a route will be realized as North Korea now excludes South Korean passport holders from the list of foreign tourists to North Korea using a third country's tour agency.

### C. A South-North Korea tour package for foreign nationals

- A tour agency of a third country is permitted to operate a South-North Korea tour package for foreigners.
  - South and North Korea and a third country's tour agency can develop a tour package so that foreigners may travel the Korean peninsula.
  - The matter of foreigners passing through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needs to be solv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author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 3. Major issues

### A. Possible violation of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Low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Pure "tourism" is not an act of breaching the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 However, in the course of tours, 1) a trip is managed through a joint venture with North Korea, or 2) transferring bulk cash to North Korea falls on the violation of the UN sanctions.
  - The UN sanctions prohibit the previous type of tours to Mt. Geumgang operated by Hyundai Asan as the South

Korean company is a joint venture with North Korea; but, the three types of individual tourism above are not against the sanctions.

- If individual tourism becomes a long-term and large-scale project in the future, it could bring up an issue of bulk cash transfers. But it seems very unlikely to happen.

## B. Personal Security Guarantees

- When individual tourism is implement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atters is personal security guarantees for individual travelers.
- Concrete guidelines have not yet been suggested about how an individual's security will be guaranteed.
  - The previous tours to Mt. Geumgang were operated based on the agreement entered into and between Hyundai, Korea Asia-Pacific Peace Committee, and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Hyundai Asan received visas for all North Korean tourists in a lump to arrange each tour. It was a type of tourist group visa.
- The Unification Ministry said that a comprehensive security guarantee needs to be agreed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uthorities.
  - However, a separate agreement for personal security guarantees is unlikely to be m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a working-level talk when individual tours begin.
  -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o guarantee personal security with North Korea's invitation (in the form of South Korean nationals' individual tourism through a social and cultural organization) or North Korean tourist visa (in the form of South Korean Nationals' or foreign nationals' individual tourism through a travel agency in a third country).
  - North Korea's invitation or North Korean tourist visa is 'entry permit' issu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y. It can be interpreted as 'a document that indicates North Korea's intent for invitation' based on the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able> Previous agreements on personal security guarantees for Mt. Geumgang Tourism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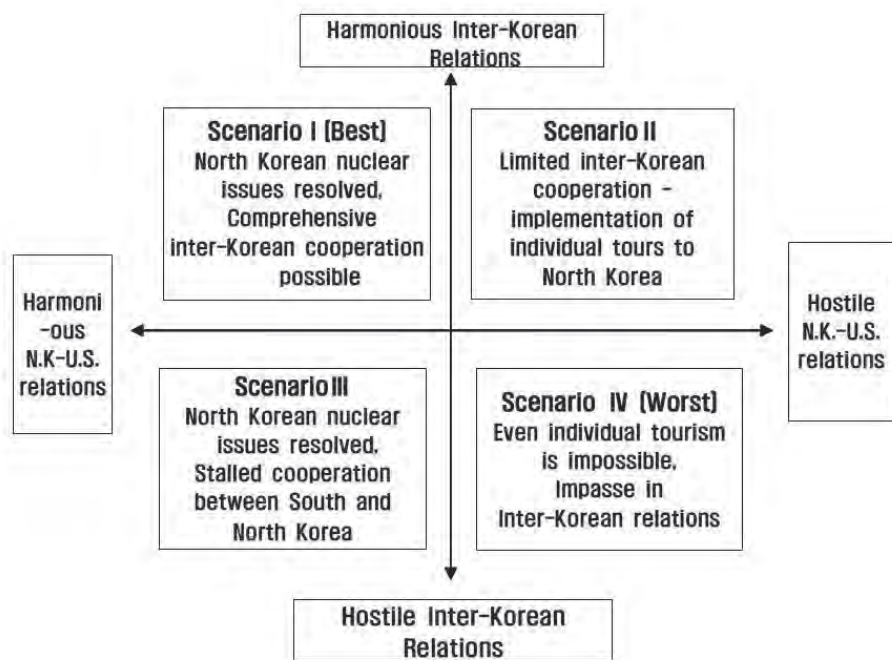
Date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Agreement on personal security guarantees (July 30,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 the importance of personal security, when an issue occurs, the "Mt. Geumgang Tourism Project Coordination Committee" comprising three to four committee members, discusses and resolves it.</li> <li>- For a serious issue, such as a severe criminal case, the "Mt. Geumgang Tourism Project Coordination Committee" comprising three to four committee members, discusses and resolves it.</li> <li>- When an issue is not resolved smoothly, the "Mt. Geumgang Tourism Project Coordination Committee" and relevant department/agency discuss and resolve it.</li> <li>- <b>Agreed between Hyundai, the project operator, and North Korea's Korea Asia-Pacific Peace Committee</b></li> </ul>
Agreement on entry to and staying in Mt. Geumgang Tourism Zone (January 29,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first systemic documentation of the overall matters on South Korean nationals' entry and staying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Geumgang tourist zone.</li> <li>- It guarantees South Korean nationals' security and convenience for entry to and staying at the tourist sites.</li> <li>- It comprises 16 clauses, and matters on security guarantee is stipulated in Clause 10.</li> <li>- <b>Agreed betwee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cabinet of North Korea</b></li> </ul>

### III. Prospects & Challenges of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 As of now, there are two different parameters in realizing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 political and diplomatic environment and COVID-19.
- Th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each parameter are as follows:

#### A. Political and diplomatic environment: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affected by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thus,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will not be excepted from these dynamics.
-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normalized again to accomplish the individual tourism plan.
  - When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are all harmonious, it would be optimistic for individual tourism. However, both sides' relations are antagonistic because of the continued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the country's recent explosion of the joint liaison office with South Korea.
  - At least the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restored to put the tourism plan into practice, let alone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Our government's preemptive approach is required to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the North.
  - When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is private-led, it would not be a solution to the impasse of the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Social and cultural channels are not optimistic since the 'May 24 measures' have blocked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past ten years.
  - Therefore, official moves at the governmental level are required to make individual tourism a driving force for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such as a suggestion for official discus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gure> Four scenarios on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epending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N.K.-U.S. relations

**B. Health and disease: COVID-19**

- In February 2020, North Korea suspended foreigners' entry into the country for tourism.
  - 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COVID-19 caused North Korea to block all foreign tourists' access as the state did when SARS broke out.
  - Yangdeok spa resort was opened on January 10, 2020, but closed in a month and a half on February 25 due to the infectious virus.
- Quarantine efforts are being made in North Korea by blocking foreigners' entry into the country and controlling nationals within the nation.
  - As North Korea has insufficient quarantine capacity, it controls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by restricting domestic travels as it did for the cases of SARS and MERS.
  - North Korea's control over tourism is likely to be a long-term measure due to the prolonged spread of the virus.
- Foreign travel agencies that sell North Korean tour packages are not able to predict the time of the reopening of North Korean tours.
 

The resuming of North Korean trips is likely to be postponed to the next year since it is not a favorable environment to travel the country in the winter season due to inadequate heating and road conditions.

  - The Wonsan-Galma coastal tourist zone's opening was postponed once again from April 15, 2020 to October 10, 2020.
- Regardless of the prolonged spread of COVID-19, individual tourism is unlikely to be implemented irrespective of the rest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 WHO is concerned over the second wave of the pandemic in the coming fall and winter, and most of the countries worldwide are restricting interstate travels.
  - South Korea is now facing the second wave and practicing the second-grade social distancing, which is likely to be upgraded to the third one.
  - Against this backdrop, individual tours to North Korea seems to be far from reality.

**C. Others**

-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Unification Ministry and relevant ministries/government agencies per matter is required.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U.S. working group),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ur guide and care for touris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quarantine of tourists for COVID-19), the Ministry of Defense (Ordinary citizens' passes through MDL)
- Individual trips to North Korea are never a more accessible matter than the previous tours to Mt. Geumgang.
  - From a working-level perspective, the previous tours to Mt. Geumgang look more approachable than now as Hyundai Asan's representative, who was highly experienced in North Korean projects, arranged and operated the tourism project, and North Korea was not under the UN sanctions at the time.
  - Care for individual tourists might be more difficult now since there is no simple mechanism of bilateral entities like Hyundai Asan and the Korea Asia-Pacific Peace Committee.
  - If the tourism plan is implemented, each matter is required to be thoroughly prepared.

# 토론자 Discussant



**민경석**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 본부장

**Gyeongsuk MIN** Executive Vice President for National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민경석(Min Gyeongsuk)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관광공사,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장을 통해 관광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주로 국내외 관광마케팅, 콘텐츠 개발, 관광지 개발 및 운영, 마케팅 웹 앱 개발 및 운영, 관광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분석 및 지자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에 산하 조직으로 한반도관광센터를 설립하여 남북관광, 접경지 및 DMZ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관광본부에서는 2000년초 금강산관광 진행과 금강산면세점 운영, 개성관광 및 백두산관광 추진의 경험을 살려 한반도관광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가톨릭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관광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Gyeongsuk Min has been working as an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Domestic Tourism Division at Korea Tourism Organization since 2017. He has experienced in the tourism field from 2010 to 2014 as an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Tourism Industry Division at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Development. Mainly, He is in charge of domestic and overseas tourism marketing, tourist attraction development, by operating online application, marketing analysis using tourism big data, and local government consultation.

Moreover, by establishing the Korean Peninsula Tourism Center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Korea Tourism Organization in 2018, he has been striving to revitalize South-North Korean tourism which mean border areas and demilitarized zone (DMZ) tourism. The Domestic Tourism Division Of Korea Tourism Organization where he has been working now has been making an effort to restart personal exchanges of two Koreas and to rebuild peaceful mood through Korean peninsula tourism by making use of the experience of conducting Geumgangsan Mountain Tour, operating Geumgangsan Mountain Duty Free Shop, and promoting Gaeseong Tour and Baekdusan Mountain.

Mr. Min majored in history at Korea University and was granted a master'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at Catholic University. He is currently doing a doctorate in tourism management.

# 토론자 Discussant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Youngdong LEE** Execution Committee Chairperson,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석사)을 전공했으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KCRC)에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인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북측 민화협)와 서울, 평양, 금강산 등에서 만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민족화해협력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적 식량지원, 산림협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까지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과 2017년까지 민화협 통일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대상은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두루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주민이 통일후 함께 살아갈 동포임을 확인하였으며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남남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남남대화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Young Dong Lee is Executive Committee Chair of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CRC) and has been part of the organization since 1988. He has continuously worked for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eeting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s in Seoul, Pyongyang, and Mount Geumgang, and contributed to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e also continually carried out humanitarian food aid and forestation projects. Young Dong was involved in education for reunification as Secretary-General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until 2008 and a member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of KCRC until 2017. He developed training curriculum and invigorated the training on reunification for students and adults so that they may be aware that North Korean people are our compatriots who will live together with us once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come reunited. As part of his effort to pave the way for reunification, Young Dong focuses on addressing the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n people stemming from different perspectives on reunification. It is one of his activities to hold forums to open an opportunity of conversation for South Koreans to form a social consensus on reunification. He is a Master in North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센터장

**Hae Jung LEE** Manager of Center for Unification and Economics,  
Hyundai Research Institute

이해정은 2018년부터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06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하여 남북경협과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 및 북한학 학사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에서 북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기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연구주제는 북한의 관광 정책 동향과 경제개발구 정책, 평화경제 등입니다.

Hae jung Lee has been the manager of the Center for Unification and Economics at Hyundai Research Institute since 2018. She joined Hyundai Research Institute in 2006 and is engaged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economy. S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law and North Korean studi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North Korean studies and doctorate from the university. Working as a member of the first term of the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Commissio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she is currently working as a policy adviso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 standing member of the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Committee. Recent major research topics include trends in North Korea's tourism policy,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ies, and peaceful economy.



# 토론자 Discussant



**제임스 반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James BANFILL** Visiting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제임스 밴필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다. 지난 10년 간 30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하며 관광, 문화사업, 과학교류, 인도적 지원 모니터링 등 북한 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였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토양학 (Soil Science)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James Banfill is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He has previously worked in North Korea in various capacities, including tourism, cultural projects, scientific exchange, and aid monitoring, visiting the country more than 30 times in the past decade. James holds a MS in Soil Science from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 KGFP2020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국립산림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Republic of Korea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숭실 평화통일연구원  
Gyeongju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UNITED NATIO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Seoul



KINU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평화공공외교협의회  
Council for Peace and Public Diplomacy



PEACE  
MOMO



hananuri\*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FS Clean & Green 한국농어촌공사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